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본회의 정책발언집

2016. 10

강원도의회

목 차

제1장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14년]

○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① 제2차 본회의 (2014. 10. 20)

- 이문희 의원 ····· 17
- 원강수 의원 ····· 33
- 최성현 의원 ····· 49
- 이기찬 의원 ····· 63

② 제3차 본회의 (2014. 10. 21)

- 정재웅 의원 ····· 77
- 김연동 의원 ····· 91
- 김용복 의원 ····· 103
- 신영재 의원 ····· 116

③ 제4차 본회의 (2014. 10. 22)

- 김성근 의원 ····· 129
- 강청룡 의원 ····· 145

[2015년]

○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3차 본회의 (2015. 3. 18)

- 구자열 의원 ····· 147
- 신도현 의원 ····· 175
- 김성근 의원 ····· 185
- 안상훈 의원 ····· 203

② 제4차 본회의 (2015. 3. 19)
– 김기홍 의원 ····· 211
– 곽영승 의원 ····· 228
– 이종주 의원 ····· 243
– 홍성욱 의원 ····· 252

③ 제5차 본회의 (2015. 3. 20)
– 김용래 의원 ····· 261

○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2차 본회의 (2015. 6. 17)
– 이정동 의원 ····· 273
– 김용래 의원 ····· 288
– 임남규 의원 ····· 293
– 한금석 의원 ····· 310

② 제3차 본회의 (2015. 6. 18)
– 심영섭 의원 ····· 324
– 장석삼 의원 ····· 336
– 최명서 의원 ····· 352
– 최성재 의원 ····· 370

③ 제4차 본회의 (2015. 6. 19)
– 곽영승 의원 ····· 391
– 조영기 의원 ····· 405

○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2차 본회의 (2015. 10. 14)
– 박윤미 의원 ····· 415
– 김기홍 의원 ····· 429

○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① 제1차 본회의 (2015. 11. 9)
- 진기엽 의원 ····· 445
- 남경문 의원 ····· 459
- 정재웅 의원 ····· 474
- 최성현 의원 ····· 488
- 김기철 의원 ····· 506
- 김규태 의원 ····· 520

[2016년]

○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2차 본회의 (2016. 3. 15)
- 김금분 의원 ····· 529
- 김성근 의원 ····· 544
- 박현창 의원 ····· 562

② 제3차 본회의 (2016. 3. 16)
- 구자열 의원 ····· 577
- 김용래 의원 ····· 591
- 유정선 의원 ····· 602
- 곽영승 의원 ····· 615

③ 제4차 본회의 (2015. 3. 17)
- 권혁열 의원 ····· 629

○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2차 본회의 (2016. 6. 15)
- 김기철 의원 ····· 650
- 심영곤 의원 ····· 661
- 최성재 의원 ····· 674
- 남평우 의원 ····· 691

② 제3차 본회의 (2016. 6. 16)

– 이문희 의원 ····· 702
– 함종국 의원 ····· 716
– 신영재 의원 ····· 728
– 박윤미 의원 ····· 741

③ 제4차 본회의 (2016. 6. 17)
– 박길선 의원 ····· 753
– 김성근 의원 ····· 762

제2장 5분 자유발언

[2014년]

○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3차 본회의 (2014. 7. 15)
– 이기찬 의원 ····· 781
– 권혁열 의원 ····· 784
– 곽영승 의원 ····· 787
– 김기홍 의원 ····· 789
– 김성근 의원 ····· 792

○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4. 9. 16)
– 진기엽 의원 ····· 795
– 심영섭 의원 ····· 798
– 장세국 의원 ····· 801
– 원강수 의원 ····· 803
– 유정선 의원 ····· 806

② 제2차 본회의 (2014. 9. 25)
– 이종주 의원 ····· 808
– 임남규 의원 ····· 810
– 이기찬 의원 ····· 812

– 신도현 의원 ····· 815
– 박윤미 의원 ····· 818

○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① 제1차 본회의 (2014. 10. 10)

– 김성근 의원 ····· 820
– 장석삼 의원 ····· 822
– 심영곤 의원 ····· 825
– 최성재 의원 ····· 827
– 김용래 의원 ····· 830

② 제4차 본회의 (2014. 10. 22)

– 이기찬 의원 ····· 832
– 김기철 의원 ····· 836

○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① 제1차 본회의 (2014. 11. 7)

– 김성근 의원 ····· 838
– 안상훈 의원 ····· 841
– 권혁열 의원 ····· 844
– 신영재 의원 ····· 848
– 함종국 의원 ····· 850

② 제2차 본회의 (2014. 11. 25)

– 김규태 의원 ····· 853
– 홍성욱 의원 ····· 856
– 김기홍 의원 ····· 859
– 진기엽 의원 ····· 862
– 강청룡 의원 ····· 865

③ 제3차 본회의 (2014. 12. 16)

– 김성근 의원 ····· 868
– 박윤미 의원 ····· 871
– 김용래 의원 ····· 874

- 장세국 의원 ····· 877
- 구자열 의원 ····· 880

[2015년]

○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5. 2. 5)

- 심영섭 의원 ····· 883
- 김성근 의원 ····· 886
- 남평우 의원 ····· 889
- 최성현 의원 ····· 891
- 구자열 의원 ····· 894

② 제2차 본회의 (2015. 2. 13)

- 권혁열 의원 ····· 897
- 김기홍 의원 ····· 900
- 박윤미 의원 ····· 903
- 박현창 의원 ····· 906
- 김금분 의원 ····· 909

○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5. 3. 11)

- 최성재 의원 ····· 912
- 이문희 의원 ····· 915
- 원강수 의원 ····· 918
- 남경문 의원 ····· 922
- 심영섭 의원 ····· 925

② 제5차 본회의 (2015. 3. 20)

- 최성재 의원 ····· 928
- 정재웅 의원 ····· 931
- 임남규 의원 ····· 934
- 김기홍 의원 ····· 937

○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5. 4. 9)

– 이문희 의원 ····· 940
– 김용래 의원 ····· 943
– 강청룡 의원 ····· 945
– 최명서 의원 ····· 948
– 정재웅 의원 ····· 951

② 제2차 본회의 (2015. 4. 16)

– 박현창 의원 ····· 954
– 원강수 의원 ····· 957
– 김규태 의원 ····· 960
– 구자열 의원 ····· 962

○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5. 5. 7)

– 김기홍 의원 ····· 964
– 권혁열 의원 ····· 967

② 제2차 본회의 (2015. 5. 21)

– 최성현 의원 ····· 971
– 김용래 의원 ····· 974
– 정재웅 의원 ····· 977
– 곽영승 의원 ····· 980
– 조영기 의원 ····· 983
– 김성근 의원 ····· 985
– 박윤미 의원 ····· 988

○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5. 6. 10)

– 이문희 의원 ····· 990

- 김규태 의원 ····· 993
- 진기엽 의원 ····· 995

② 제4차 본회의 (2015. 6. 19)
- 김기홍 의원 ····· 998
- 정재웅 의원 ····· 1002
- 홍성욱 의원 ····· 1004
- 김성근 의원 ····· 1007

○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① 제1차 본회의 (2015. 7. 7)
- 오세봉 의원 ····· 1009
- 신도현 의원 ····· 1012
- 함종국 의원 ····· 1014
- 조영기 의원 ····· 1017
- 이문희 의원 ····· 1020

② 제2차 본회의 (2015. 7. 21)
- 김규태 의원 ····· 1022
- 심영섭 의원 ····· 1025
- 구자열 의원 ····· 1027
- 강청룡 의원 ····· 1029
- 김기홍 의원 ····· 1033

○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5. 9. 9)
- 구자열 의원 ····· 1036
- 최성재 의원 ····· 1039
- 최성현 의원 ····· 1042
- 김기홍 의원 ····· 1045
- 유정선 의원 ····· 1048
- 김용복 의원 ····· 1050

② 제2차 본회의 (2015. 9. 18)
- 이문희 의원 ····· 1053
- 권혁열 의원 ····· 1056
- 이종주 의원 ····· 1060
- 김성근 의원 ····· 1063

○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5. 10. 6)
- 이문희 의원 ····· 1066
- 최성재 의원 ····· 1069
- 강청룡 의원 ····· 1072
- 곽영승 의원 ····· 1076

② 제3차 본회의 (2015. 10. 16)
- 김용래 의원 ····· 1079
- 곽영승 의원 ····· 1082
- 김기홍 의원 ····· 1085
- 장석삼 의원 ····· 1088
- 정재웅 의원 ····· 1091

○ 제2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5. 11. 2)
- 심영섭 의원 ····· 1093
- 김기홍 의원 ····· 1096

○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① 제2차 본회의 (2015. 11. 24)
- 남평우 의원 ····· 1099

② 제3차 본회의 (2015. 12. 16)
- 진기엽 의원 ····· 1102
- 구자열 의원 ····· 1105
- 김용래 의원 ····· 1108

– 김기홍 의원 ····· 1110
– 장석삼 의원 ····· 1113

[2016년]

○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6. 1. 27)

– 심영섭 의원 ····· 1116
– 김성근 의원 ····· 1119
– 박윤미 의원 ····· 1122
– 박현창 의원 ····· 1125
– 이종주 의원 ····· 1128
– 유정선 의원 ····· 1131
– 최명서 의원 ····· 1134

② 제2차 본회의 (2016. 2. 4)

– 김금분 의원 ····· 1137
– 구자열 의원 ····· 1139
– 원강수 의원 ····· 1142
– 김성근 의원 ····· 1145
– 최성현 의원 ····· 1148

○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6. 3. 8)

– 강청룡 의원 ····· 1151
– 김기철 의원 ····· 1153
– 정재웅 의원 ····· 1156
– 최성재 의원 ····· 1159

② 제4차 본회의 (2016. 3. 17)

– 최성재 의원 ····· 1159
– 박윤미 의원 ····· 1165
– 정재웅 의원 ····· 1168

– 김성근 의원 ····· 1170

○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6. 4. 20.)

– 김성근 의원 ····· 1173
– 이문희 의원 ····· 1176
– 최성재 의원 ····· 1179
– 심영곤 의원 ····· 1182
– 김기홍 의원 ····· 1184

② 제2차 본회의 (2016. 4. 27)

– 심영섭 의원 ····· 1187
– 함종국 의원 ····· 1190
– 김성근 의원 ····· 1193

○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6. 5. 11)

– 박윤미 의원 ····· 1196

○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① 제1차 본회의 (2016. 6. 8)

– 유정선 의원 ····· 1199

② 제4차 본회의 (2016. 6. 17)

– 구자열 의원 ····· 1202

제3장 본회의 초청연설

○ 인순이 홍천 해밀학교 이사장 ····· 1207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2014. 9. 25)

○ 강명도 경민대학교 북한학 교수 ····· 1226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2015. 9. 18)

제 1 장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10.20)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이문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3선거구 출신]

원주 출신 새누리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 하나된 강원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부지사님, 각 실·국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각 국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침기사를 보았습니다. 333㎞를 뛰신다고요. 정말 건강하십시오.

요사이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열정으로 꼭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리라고 믿습니다.

질문에 앞서 최문순 지사님께 저의 간절한 소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강원도가 무상급식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어온 것 지사님도 잘 아시죠?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든지, 지난번에 춘천시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당 간의 갈등, 또 의회와의 갈등, 또 지역사회와의 갈등, 학부모·학생·교사 그 갈등의 골이 엄청 깊어왔고 그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 갈등이 깨끗이 해소될 것 같아요. 저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지사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다음 어느 선거를 나가시든 꼭 당선되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낙선되실 겁니다.

웃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우선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담비율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은 2012년도 시도별 전면 무상급식 예산 분담현황인데 제가 2013년도에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맨 밑에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주도 한번 보십시오.

75%를 교육청에서 분담했어요.

평균은 51%이고 강원도는 60%입니다.

그래서 6 대 4의 분담률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강원도교육청을 위해서 좀 낮추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영상 한번 주시겠습니까?

옛날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보아주십시오. 됐습니다.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잘 상의해서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의해서 하면 60%보다 하향조정이 될 줄 알았어요.

도표 두 번째 것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강원도 것을 보여주시고요, 제주도 것을 역시 보여주세요.

강원도는-이것은 2014년도입니다. -62%를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것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주도는 50%가 됐어요.

평균 52.8입니다, 무상급식 전체 실시 지역을 보았을 때.

예, 됐습니다.

지사님, 제주도는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75%에서 50%로.

그래서 제주도 실무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 보고 각 시도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아주 협의를 잘 하셔서, 퍼센티지가 높다는 얘기는 도교육청에서 써야 할 어떤 경비가 위축된다는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강원도는 2012년도에 시작하면서 60%에서 지금 62%로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아서 좀 낮추어 주실 줄 알았는데 도지사님, 협상과정

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은 도 재정을 말씀하시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대로의 재정이 있겠죠.

국가는 국가대로 어려움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소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아까 제가 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또 정당 간에, 지역사회 간에 갈등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자체는 이렇게 보면 50을 가지고 25 대 25로 시·군과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소원은 많이는 못 한다 하더라도 전국 분담비율의 평균만 유지해 주면 단체 간의 갈등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꼭,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도에서 하지 않는 조리종사원, 우리가 급식비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가죠, 식재료비도 들어가죠, 운영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만 인건비를 2013년부터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해요.

396억입니다. 400억이 돼요.

지사님,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급식하는 데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기억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강원도 학생들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지. 1,11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꼭, 그리고 또 매년 하지 마시고, 그저 매년 전국 평균만 가자 그것만 약속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 정당 간에, 단체 간에, 의회하고 갈등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만 허락해 주시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꼭 평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평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가 뭡니까?

하나된 강원도는 갈등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의 골을 없애는 방법은 제 소원을 꼭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어 왔던, 매 의회 때마다 골치 아팠던 그 고리를 꼭 끊어 주십시오.

약속 좀 해 주십시오,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제 소원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먼저와 마찬가지로 낮추어 달라는 데에, 62%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전국 평균만 지켜 주시고 인건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강원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을 같이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기 실·국장님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꼭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강원도청도, 강원도도, 강원도 교육도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꼭 기원합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부제 :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급식 분담비율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충실한 협상을 통한 분담비율 조정

도의 재정이 어려우나, 의원님 의견을 충실히 담아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음

민병희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민선 2기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 시간에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또는 생각과 소신이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민의 목소리, 또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최선의 변화의 조짐이 있기를, 저의 쓴소리는 강원교육을 올곧게 갈 수 있는 강원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하고도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우선 한두 가지만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 1년 무상급식 저거가 1,111억입니다.

거기에 396억이라고 하는 인건비까지 안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강원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하실 때 왜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안고서 협의를 했다고 할까요, 진행을 하셨습니까?

시간 때문에 조금 짧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직도 타도에서는 초등학교도 다 못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아시죠, 교육감님?

그래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공약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빨리 좀 저거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재정압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좀, 우리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하여간 전국 평균입니다.

인건비 포함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감님?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으셨지만 앞으로 교육감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국의 평균치, 인건비를 포함해서 평균치로 분담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도민 앞에 알려주십시오.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이너스 재정으로 계속, 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더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50 대 50으로 하도록 잘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하고만 약속을 하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사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또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실무진끼리도 저거를 할 때 이번에는 평균치의 인건비 포함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최소한 이것을 이루지 않고 무상급식 확대는 우리는 없다고 못을 박아놓으시고 어떻게든 이것을 실현해서 갈등을 앉히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감님 꼭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첫 번째 간곡한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무상급식 확대보다 무상급식 분담률을-인건비를 포함해서-평균치로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강원도교육청의 선결요건이고 해마다 분담률로 인해서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본 의원은 한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한 30초에서 1분만……. 그렇죠. 강원고등학교는 선진형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보완해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어느 나라든 교과교실제를 전부 택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각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식으로만 수업하던 것을 교과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과교실에 가서 그 많은 기자재를 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되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육감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제식 강의보다는 토론수업을 한다든지 실험·실습을 한다든지 조사발표를 한다든지 조별학습을 한다든지 분단학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50분도 부족해서 2시간을 합쳐서 블록타임제를 만들어서 5분은 도입을 하고 5분은 정리를 하면서 90분 동안 토론하고 조사발표하고 실험·실습을 받도록 하는 이게 교과교실제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교과교실제의 핵심은 수준별 이동수업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감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력으로 수준별이나 우열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올림픽 경기도 그렇잖아요.

축구경기를 하려면 많은 운동경기가 있지만 축구에서 우수한 선수를 아주 집중적으로 지도해야 우수선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재학급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의 영재나 수학의 영재나 평범한 학생을 데려다가, 우리 강원도 영재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 누구에게나 학력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의 차가 있는데 다같이 30점부터 100점 사이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수준에 맞게, 뒤처진 학생에게는 그 뒤처진 학생에게 맞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더 발전하는 학습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수준별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역점 권장사항으로 했고 타 시도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교육감님, 잠깐만요.

저는 학생 수로 해서 60명이라고 60개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도도 저희 강원도와 똑같은 그런, 선생님 수도 적고 똑같은 조건에서,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음 속에서 교육부의 권장사업을 받아들여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저거인데 제가 교육감님께,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저도 존중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편을 두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수를 인정해 주어서 그 아이들을, 우리 영재아이들을 지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이게 참다운 교육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감님, 잠깐만요.

정말 이것은 저의 목소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가 과목중점, 선진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교실제가 다 그렇잖아요?

외국어 중심, 과학 중점, 국어 중점, 예술, 체육, 이따가 배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학생희망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 학교를 가서 내가 좋아하는 교과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왜 나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부탁을 드려볼게요.

제가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이것은, 수업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자율경영으로 학교장에게 맡기면 어떨까?

지금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학교장에게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교실은 어차피 재정상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갑니다.

우리 강원도도 부족한, 강원고등학교가 선진형이잖아요?

8개 교실을 갖고 있는 교과도 있고 6개 교실을 갖고 있는 교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은 합니다만 교과교실은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것을 정말 블록타임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토론이나, 50분 한다고 토론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

으로 수업 모형의 틀을 교육감님이 물꼬만 터주면, 현장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만 꼭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 희망 후 추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늘 의회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의 이야기가 선희망후추첨제입니다.

학생 학교 선택제라는 표현을 저는 했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평준화시대든 비평준화시대든 비평준화를 하면 평준화시대가 불만이 많고 평준화를 하면 비평준화가 불만이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실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킬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과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도 지금은 과목 중점 학교이고 선진형 학교이고 교과목별로, 예체능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가는 학교가 가장 이상적이고 내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학생을 배정하는 방법은 무작위 배정이란 말이에요, 거리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거리 배정을 신경을 쓴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다행히 저의 이런 주장을 교육감님께서 받아주셔 가지고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2016년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도입 예정 의지를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잠깐만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여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제 소신은 아주 분명한데 중요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론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론이나 토론회 같은 것이 나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평준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교육정책을 놓고 여론으로 가다 보니까 그저 분열만 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희망후추첨제를 결정하실 때 여론보다는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모셔서 거기의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여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론도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번에 여론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꼭 들어주시되, 그런데 여론에서 만약에 반대가 많을 경우에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론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은, 의사가 환자한테 "주사 맞을래?" 이러고 주사를 놓습니까? 지휘관도 그렇잖아요.

"돌격! 앞으로!" 해서 무조건 가야지 "돌격할래? 안 할래?" 물어보고 합니까?

교육감님이 꼭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선희망후추첨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라면서 세 번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자 운명의 결정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강원도 중학생들이 좋은 진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히 선 희망 후 추첨제를 받아주시기를 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2. 질문부제 : 선 희망 후 추첨제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선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추진

전문가들의 의견도 아무래도 수능이 끝나고 대입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보고 난 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2017년부터 가능하다고 보며,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추진하겠음.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도에-제 생각을 더듬어 보면-67종에 7,000여 명의 교육공무직을 임용해서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고 학생지도에 빈틈이 없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7,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는 강원도 교육의 발전과 교직원의 복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12년 7,000여 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임명할 당시부터 엄청난 재정이 투여될 것을 예측하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두고 단기적으로 조금씩조금씩 교육공무직을 정규직화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의견은 묵시되고 7,000여 명이 전부 정규직화되었거든요.

제 의견과 그 시행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용어상이고요, 시간상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 의견은 무시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부 정규직화해 드렸잖아요.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처음 시작할 때 2012년도에 정규직화하기 전에 봉급 총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은 잘 기억 못 하시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2년도에 전체 657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년 후가 된 2014년도는 약 1,360억입니다. 두 배로 되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인 2025년도를 가정해서 보니까 2,05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7,000명이면, 우리 강원도 교직원이 1만 5,000명 정도입니다.

1만 5,4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교직의 약 45%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수로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감님……. 물론이죠.

지금 부족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너무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2014년 4월 21일입니다. 2014년 4월 1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하고 2014년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는데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 드린 것도 하늘의 별을 땄다고 그분들은 생각을 해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번 4월 21일에는 2013년도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으로 21만 원 주던 것을 확대해서 31만 원을 주어라, 맞춤형복지비 지급으로 4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 주어라, 위험수당 대상자는 조리종사원을 포함시켜서 월 5만 원씩 지급해라, 그다음에 기타로 방학 중 근무수당, 교통보조, 각종 수당을 신설해서 열 가지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도 교육공무직 봉급을 주는 게 굉장히 힘든데 별안간 4월 21일자로 이렇게 수당을 주라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학교운영비도 부족하죠, 재정도 부족한데 이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교육부에서 더 따오시나요?

그러면 비축해 놓은 예산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6월 4일 선거를 했잖아요?

4월 21일이면 40일밖에 안 남았을 때 처우개선을 해 준 거예요.

안정적으로 해 준 것도 고마운데 거기에 보너스까지 더 해 줘, 일선에서 약 7,000여 명의 많은 분들은-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아주 정말 호평을 하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반면에 이것 포퓰리즘 아니냐…….

저도 교육감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은 말이 있는데,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졸업식 때 교육감님께서 강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졸업식 때 학부형님들이 다 왔어요.

학부형님들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직 그렇게 해, 또 졸업식 때 동영상 보내,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학생들 축하해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교육감님의 그 의중을 저는 좋게 봅니다, 입학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이 계신 두 해예요, 해마다가 아니고. 글쎄 해마다가 아니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는데, 축하해 주는 것도 축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축전 같은 것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보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축하전보 하나 읽어주면 되잖아요?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게 법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법 이전에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저는 교육감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일반 사석에서도 교육감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데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감님, 강원도 교육가족 중에 강원교육에 대한 비판을 교육감님께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강원도민 중에는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연수 횟수가 잦아서 생업에 지장이 많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식, 입학식 때 동영상 상영은 교육감후보 알리기라는 비판도 들렸습니다.

또 선거 40일을 앞두고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교육감의 직권남용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질문부제 :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학교현장에 갔을 때 꼭 급식소에 가서 조리종사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림.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지금도 부족하고 처우개선을 할 수 있으면 더 하겠다는 소신과 교육철학으로 추진한 사항임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특별채용된 중등교사를 강원도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한 그 일이 있으시잖아요, 인사를 내신.

이분을 특별채용을 해서 교육연수부장으로, 연수원의 연수부장이면 모든 연수를 책임지는 연구관인데 거기로 발령을 내신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으십니까?

임용은 임용권이 교육감님에게 있으니까 그렇다손 친다면 특별채용을 하면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 공문 시달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실·국장님 계시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엄연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실시를 안 했으면 특별채용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채용으로 교사를 연수원 연구관으로 이렇게 하실 때, 사실상 교사에서 연구관이 된 것은 두 단계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으로 있다가 나한테 맞는 심복역할을

하던,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혜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일선에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도 이해하고, 그러면 임용을 할 때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구사가 연구관이 될 때는.

그러면 검증한 사실은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말씀하신 게, 지금 담당 과장님이 와서 자료를 주셨는데 저도 법리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립이라고 해서 특별채용이고 공립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채용을 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있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이 발령을 받은 것은 교사입니다.

그리고 연구사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막중한 연수부장을 하려면 거기에 알맞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전문성 검증 없이 한 인사발령은 이것도 위법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연구관 경력이 있다는데 교사가 연구관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몇 년 정도 걸려야 교육연구관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법에는 그런데…….

교육감님,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임용을 하셨는데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교육연구관이 되려면 정교사, 교감, 교장, 연구사를 거치고 전문직을 거쳐서 현장에서 아무리 빨리해도 25년이 걸려야 연구관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승진임용제를 신뢰하면서 학교교육활동에 전념해 온 대다수 선생님들의 박탈감은 무엇으로 교육감님이 보상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법이 있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악용하거나 그것을 나의 저기에 맞게 인사를 단행하셔서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의 특별채용은 지나치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임용령을

변경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것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지도하려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자리에 좀…….

시간이 2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1분만 쓰겠습니다.

국장님, 원주의 학교 이전, 학성초등학교 이전관계하고 문막고등학교 이전관계는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잘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학성초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그 먼 거리를, 불안전지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잘하셔서 꼭 이전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를 LH에서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문막고등학교는 평준화를 하면서 약속한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50초 남았거든요, 그것을 답으로 알겠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각 시도의 분담율이 평균이 되도록 조정하여 운영하여 주십시오.

둘째, 단위학교의 진정한 자율경영을 위해 과감하게 학교장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셋째, 강원도 학생들이 좋은 진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16년에는 선희망 후추첨제가 반드시 실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강원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10.20)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원강수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5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강수 의원입니다.

본회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빠듯한 예산 살림살이를 가지고 도민의 이익과 또 도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강원도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신청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엄중한 상황 앞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강원도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강원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올해 자료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을 치렀던 인천광역시 61%, 그리고 울산시·부산시·대구시·대전시·경기도 모두 50%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50%에 육박하는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어떤가?

18.7%입니다. 거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서는 스스로 도저히 살림살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책임과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는 3년 후 동계올림픽을 치러낸 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번을 띄워 주십시오.

동계올림픽을 치른 역대 지역 중에서 몇 가지 몇 군데를 뽑았습니다.

지금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아테네, 런던 네 곳의 올림픽을 치른 후 부채 발생 평균액이 74억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7조 5,000억 원이고요, 저것은 '76년, '92년, 2004년, 2012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생한 부채를 단순히 우리 원화로 환산한 겁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1976년에 28억 달러의 부채가 발생했다면 지금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리고 지금 캐나다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76년에 대회를 치르고 난 후 3조 원의 빚을 졌는데 저것을 갚기 위해서 30년 동안 올림픽 채권을 갚아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2018년에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 그러니까 4년 후 2022년 대회 개최지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력한 유치 후보지였던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독일 뮌헨, 스위스의 다보스, 이런 쟁쟁한 지역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해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유치 경쟁지는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는 중국 베이징,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이 두 곳 정도입니다. 저희는 대회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쨌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우리 재정 상황은 어떤가?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강원도 지금 세입 현황인데요, 자주 재원이랄 수 있는 도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치면 2조 3,338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어들이는 건데 저 수치를 어떻게 뽑은 거냐 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증감 사유가 있는데 그 평균치를 낸 겁니다.

평균치가 한 매년 1,122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8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예상치를 뽑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포함한 자주재원 세입을 지금 다 포함시킨 겁니다.

자료 3번, 다음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세출 현황인데요, 세입 현황을 뽑듯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 그 사이에 우리 세출이 돈 쓰는 게 어느 정도씩 늘어나는가 해서 그 추이를 봤더니 우리 도비가 올림픽을 치르는 그해 약 2조 4,000억 원 정도 이렇게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수 도비 세출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세입과 세출 차이가 한 1,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 강원도가 한 1년에 3조 원 이상 쓰기 때문에 1,000억 원 정도 갭이 나는 것은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출을 계속 강원도가 늘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동계올림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투자할 여력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제가 강원도 지출이 늘고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게 지금 강원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저렇게 늘고 있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2012년보다 무려 12.8%가 증가했습니다.

어찌됐든 2011년부터 ’14년 평균치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2018년쯤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1조 5,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2013년에 갑자기 저렇게 복지 분야 예산이 늘었는데-사회복지분야요.-그 정도 증감 추세 12.8%로 만약에 2018년에 추정치를 대입한다고 하면 올해 9,557억 원의 거의 배, 곱절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7번을 보여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동계올림픽 투자계획을 지금 강원도에서 잡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 그러니까 올해 2014년부터 ’18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지금 채무 현황이 어떤가? 어느 정도 빚지고 있는가?

5번을 보여주십시오.

2018년에는 강원도 채무가 9,872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료 6번을 보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화면에 자료를 많이 보여 드려서 약간 헷갈리실 텐데 저희가 돈 씀씀이가 있고 쓰고 남은 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빚, 또 써야 될 돈 이런 것을 다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 강원도는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유동자산하고 투자자산 해봤더니 1조 6,0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강원도 총 자산이 11조가 넘는데 팔 수 있는 저런 매각 자산 외에 나머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그러니까 현금화가 거의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도 부채, 아까 보신 9,800억 원의 도 부채, 거기에다 동계올림픽 투자예상금액 1조 2,000억 원을 합치면 예상 부채가 지금 2조 1,872억 원입니다.

그런데 활용 가능한 자산 1조 6,000억 원에서 2조 1,872억 원-예상 부채요.- 그걸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팔 수 있는 재산을 거의 모두 팔아도 강원도 빚을 거의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역대 올림픽 개최 사례에서 보듯이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큰 스포츠이벤트를 치르다 보면 투자금액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채 규모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족 재원 보충 수단, 기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그런 단순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올림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우리 강원도 재정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것은 거의 자명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단순한 그런 추정치로 해서 계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보는데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가 보여드린 설명에 대해서 특별히 틀린 부분이 있는지요? 제가 아까 계산한 방식대로 하면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저희 강원도민 150만 명 그렇게 해서 계산에 대입하면 도민 1인당 145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4인 기준으로 해서 하면 한 가구당 580만 원이에요, 순수 도비 부채.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강원도의 예산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올림픽을 3년 앞두고요, 기채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빚도 내야 되고 돈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다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3년 앞두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입·세출이나 그런 추세를 보면 세입이나 세출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3, 4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사이에 강원도 복지예산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어떤 특별히 예산대책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복지예산을 지금 늘려왔기 때문에 한 번 일단 복지사업이 시작되면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 질문부제 :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예산대책은?

답변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 기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우리가 준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2,000억 가까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 동계올림픽 준비도 잘 하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뭐 필수경비에 대한 투자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봄.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기채를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기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른 부서보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요즘 무척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3조 2,903억 원을 투자 예상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림픽 수익 규모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수익 규모요.

특별히 흑자 운영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경기장 간 접근 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 도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하여튼 절약해서 선수 중심, 경기 중심의 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외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한 끝난 다음이라도 사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과 연계한 특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사실은…….

흑자를 내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저희 지역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인천시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과잉투자가 원인이고 더 큰 문제는 경기장 사후 수익방안 그런 게 없는 것도 문제고요, 인천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한 예산이 1조 2,500억 원 이것을 15년 동안 갚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아시안게임이 1만 3,000명이 참가하는 대회인데 저희가 치를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흑자 올림픽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는 강원도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흑자는 유형의 흑자도 있을 것이고 무형의 흑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채를 내거나 아니면 올림픽대회를 통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은 무형의 자산 가지고는 갚지 못하는 겁니다.

유형,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강원도 재정이 나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저희는 목표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시점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정 자립도 60%가 넘는 인천시가 지금 저 지경에 처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매일 언론 매스컴에 불려 나와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특단의 방안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하물며 재정 자립도 60%가 넘는 대도시 인천도 지금 그럴 지경인데 강원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강원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민 1인당 145만 원, 4인 기준 한 가구당 580만 원, 빚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연간 쓰는 순수 도비사업이 1억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일회성 혹은 행사성 혹은 사업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말하자면 뜬구름 잡기 식 사업, 혹은 사업 목적 달성이 희박하거나 바꿔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사실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순수 도비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전시성, 행사성 또 사업 목표가 불분명하고 목적 달성이 희박하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순수 도비 사업들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어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시점까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사님과 도청 집행부에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들을 먼저 찾아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말에 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런 예산,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이라는 것은 사실 회의하면 다 나오잖아요.

알면서 또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 의회에 보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회의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먼저 도에서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에너지를 비축하면 강원도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처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국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올림픽이 치러진 후에, 4년 후에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지사님도 선거를 치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선거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4년 후에 아마 도의원님들 그러실 거예요.

서류 뭉치를 흔들면서 '강원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매년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4년 전에 바로 방청석에서 취재기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주로 알펜시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때 도청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들 '외국자본 투자 유치하겠다.' 특히 중국 자본.

‘경영 정상화하겠다.’ 그 답변만 들어보면 거의 알펜시아에서 천지개벽할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알펜시아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알펜시아 관련한 빚이 제가 알기로는 1조 2,000억 원 사업을 하는데 1조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어진, 우리에게 남겨진 상황이 뭡니까?

지금 여기 본회의장 벽시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시 38분인데요, 저게 1분이 지나서 39분이 되면 1분 사이에 7만 원 이자가 붙어서 날아갑니다, 알펜시아 때문에 끌어다 쓴 돈 때문에.

1시간이면 얼마냐, 41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410만 원.

7만 원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거의 두 분, 세 분한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1시간에 410만 원이 이자로 그냥 날아가는데 그 돈이면 우리 도청에 계신 중견 간부 공무원님들 한 달 월급입니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런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1년이면 얼마냐, 1년이 아니라 하루죠, 하루.

1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억. 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루 이자가.

그게 축하할 일은 아니죠.

왜 그러면 알펜시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막지 못했는가?

적절한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회를 통해서 계속 강원도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성 도비사업, 보여주기식 사업, 또 뜬구름 잡기식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을 찾아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18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그 시점까지는.

알펜시아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대책과 실행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을 꼭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안을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2002년에 문을 열었는데 공항 이용객이 저조하니까 언론에서는 유령공항이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지만 우리 강원도가 공항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최근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양양공항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거군요.

얼마나 늘어났으면…….

제가 알기로는 올 7월에 10만 명 돌파해서 행사가 열렸고 그다음에 9월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0만 명 돌파했다는 그런 행사가 있었죠.

제가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사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 말하자면 강원인 관광산업 발전 혹은 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가, 귀결되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양양공항 활성화 사업 요체는 결국은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기를 띄우는 건데 우리 강원도 양양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사업자에게 운항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면 항공기 임차료 보태고 항공운임 인하하고 여행사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나 광고 등의 비용으로 강원도가 준 사업비를 쓰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 최근 2~3년 사이에 1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7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에 10억 원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쓰는 것만 해도 80억 원입니다.

전세기를 띄우기 위해서 운항장려금 주고 손실보전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99%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죠.

중국 관광객들이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강원도가 사업을 하면 미국에서도 각 비행기를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공항을 살리겠다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도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노선이 돼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수합니다.

그걸 유지하려면 저희가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명목만 바뀔 뿐이지…….

양양국제공항, 전국에 국제공항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항을 유지하다가는 엄청난 국고 부담이 되니까 민간에 매각을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양양공항이 그 많은 전국 공항중에서 꼴찌였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양양국제공항이 처한 입지적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리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의 명분이 뭐냐 하면 단순히 공항을 살리겠다는 건 아닐 겁니다.

도민들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에서 내려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양양 주변, 속초라든지 그런 곳에 다니면서 관광을 하면서 돈을 쓰니까 그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목표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제가 양양공항에 한번 가봤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요즘은 관광 상품이 3박 4일짜리가 있고 4박 5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분들 일정이 대동소이합니다.

일정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관광버스를 타고, 그 관광버스도 보면 인천 아니면 서울 소재의 버스회사들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고 상당수가 미시령 터널을 통과해서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3박 4일이건 4박 5일이건.

그러면 일정은 어떤가?

서울 올라가서 명동, 대형백화점, 강남, 면세점 이런 데 가서 화장품 사고 갖가지 의류들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바로 전날 밤 9시쯤에 속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형 호텔이나 콘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을 호텔에서 먹고 그러고 나서 속초에 있는 대포항을 1시간 동안 돕니다.

그러고 나서 공항 수속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은 좋고 추진은 좋지만 제가 낸 세금이, 도민 혈세로 마련된 사업비가 70~80억씩 이렇게 쓰여도 됩니까?

지사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투입할 때는 투입 비용하고 산출 나온 아웃풋 비용을 비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돈입니다, 70~80억이요.

앞으로 매년 10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단순히 목표만 세우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1~2억 아니고, 그런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쇼핑센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전형적인 역외유출 아닙니까?

면세점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역외유출 아닙니까?

역외유출로 피를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올 2월에, ‘도대체 중국인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주도 경기가 뜨지 않는가?’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GRDP라는 것, 지역내총생산을 했더니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1%나 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인용해 드릴게요.

제주도 GRDP 성장률 3.1%, 전국 평균이 4.4%입니다.

1%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제주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제약이 있다.

왜 제약이 있는가?

제주도 내 호텔, 렌터카, 면세점 등 관광사업체 상당수가 수입을 역외로 유출한다.

역외유출이라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고용을 하니까, 몇 백 명씩.

그런 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역상품을 거기서 파는 게 줄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대형마트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거 다 제하면 전체 매출액에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행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 이익을 키워주십시오.

여행사를 키우겠다는 게 목적인가요?

시간 더 주십시오.

제가 속초에 갔는데요, 지금도 속초에 상경기가, 말하자면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식당이나 이런 곳에.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가?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양양공항으로 들어오는 분들에 비해 100배가 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여행사를 키우겠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면세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온 분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전혀 관여치 않았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강원도 속초를 보겠다고, 설악산 보겠다고 내려오세요.

그분들이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보다 10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런 곳에 쓸 것이 아니고 속초에 가면 관광수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보낸대요.

그분들하고 가격 협상 흥정을 하다보면 우리 내국인 손님들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생각하는가, 관광산업의 기반을 다져주려면 그분들에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안내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제가 거기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가 거국적으로 관광인프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틈새시장인데요.

그건 당장 하셔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물밀듯이 돌아오고 있어요. 속초로, 동해안으로.

그분들을 저희 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홍보 방안들을 마련하신다든지 그게 틈새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강원도를 둘러싼 교통 환경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철도, 도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분들 점점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이왕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공항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매년 투입한다,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가 예산집행을 하려면 내가 투입하는 돈하고 나

오는 이익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은 도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도민들이 직접 대놓고 말씀하세요.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도움 안 된다.”, 그리고 실제 5박 6일짜리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 갔다가 마지막 날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중국자본 투자유치 받으신다는 것도 사업목표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가 마침 그리스에 해외 현지확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신 분 목소리를 담았는데 들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성함을 여기서는 공개 못 하겠지만 그리스에서 35년 동안 사신 교민입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말씀입니다.

잘 보셨죠?

중국 손님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가 끌어들이고 막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스나 이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중국 관광객들 유치하겠다고 해서 나선 자치단체들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강원도가 후발주자잖아요.

제주도 상황 잘 아시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

거기에 드림타워라는 사업,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인 투자 사업이에요.

왜, 제주의 경관, 교통, 도시 기능 등 미래 가치에 맞지 않는다.

엄청나게 부작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단시킨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은 애초에 목표했던 사업목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질문부제 :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이득 추구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보며,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똑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

다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우려가 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강원도의 상황이었다고 봄.

지금부터는 그것을 타개하지 않으면 강원도는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서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임.

지역경기에 도움도 안 되고 주변 상인들한테 도움도 안 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중국자본 유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세점도 마찬가지예요.

면세점 들어오면 그게 다 역외유출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은 진중하게 다시 한 번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들으시고 사업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사업추진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원도는 경제규모가 작고 정치적인 위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움츠려들지 말고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조직 운영도 공격적으로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정책 제안이 있으면 사업계획서 만들

어서 지사님과 집행부와 논의해서, 또 우리 의회와 의기투합해서 추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변수,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만들어도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게 우리 의회의 작용입니다.

의회가 그럴 때 문제점이 있다, 대책을 마련해라, 혹은 사업 방향을 수정해라, 더 나아가서 사업을 재검토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과감한 결단과 용기입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언젠가 사업 실적이 나오겠다, 그것은 저는 만용이자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담보로 한?

도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담보로 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과 도청 집행부 간부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절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지사님과 실·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10.20)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최성현 의원 [새누리당, 춘천시 제2선거구 출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와 행복한 동행 호반의 도시 춘천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 최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도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사님,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시는 부분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 지난 보궐선거로 시작된 최문순 도정 1기 몇 년 동안 강원도를 끌어오셨죠? 이번에 저희 도의원님들과 함께 제9대 100여 일을 넘고 계시죠?

그런데 본 의원도 이번에 지사님과 함께 9대 도의회에서 100여 일을 넘고 있는데 최문순 도정 1기에서 본인이 느끼시기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도 있고 지난 1기에서의 아쉬웠던 점들은 오히려 조직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도청 공직자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상실감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지사님을 통해서 지난 도정 1기에 대한 인사 부분과 다시 도정 2기를 이끄시는 지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청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 공직자 분들에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틀이 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인사에 대한 권한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조차도 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에 탈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도덕성과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낙마하는 경우도 많이 지사님께서도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강원도에서는 줄 세우기식이라든가 밀실인사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서조차도 인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직원들에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취지도 주고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 아시죠?
그만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상당히 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고 또한 조직이 잘 되어 나가는 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인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본 의원도 지사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보통 공직자 분들께서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까지 가는 기간이-물론 사람에 따라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보통 대략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도 100일밖에 안 되었지만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정 1기에서 특정인들이 2년도 채 안 걸리고 두 단계 직위승진과 직급승진으로 이어지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필 지난 도정 1기에서 지사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과연 그것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역지사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정 1기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사님한테 줄 잘 서시는 한 분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사무관 서열 73위에서 무려 진급대상 순위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채 2년도 걸리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본 의원도 지금 그분이 현직에 계시고 또한 그분께서 능력이 모자라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의 고유권한을 가지신 지사님께서 모든 공직자 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을 지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문책을 하려고 제가 지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앞으로 도정 2기에서는 여러 공직자 분들한테 상실감 내지는 박탈감을 주지 않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신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정에서 이런 인사가 비일비재하게, -저는 근무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아서 헷갈려서 모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까?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깜짝 발탁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것은, 순위는 본 의원이 들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로 들은 얘기이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도청공무원들께서 상실감을 가졌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본 의원이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사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하신다면 본 의원도 이런 부분은 2기의 또 다른 화합을 위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고 또 부정을 하시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지사님하고 혹시라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는 직위가 있죠?

실·국장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과 중요도, 또 예산, 조직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십니까?
보니까 항상 관례인지는 몰라도 그전에는 거의 3급 선임이신 분들이 앉았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도정 1기에서 그 자리에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니까 갑자기 4급 서기관을 임명하신 적이 있으시죠?
강원도 공직자 분들 중에 그렇게 재원이 없습니까?
인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당시에도 -제가 8대 도의원은 아니었지만- 많은 인재들이 있고, 우리 강원도에 인재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데 그분을 임명하셔서 마치 직급승진을 위한 수순으로 예정된 일처럼 앉으신 분이 초고속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한 능력과 인정이 되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깜짝 발탁과 또한 혁신적인 진급을 시키셨는지 몰라도 보편적인 공무원 분들의 생각은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러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능력이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 깜짝 발탁을 해서 그분이 조직을 잘 끌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의 의견을 잘 따라서 그분이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결국은 그분이 모든 공무원 분들의 선거중립을 관장하고 또한 그분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해야 될 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이것이 지사님이 시키신 것입니까?
아니시죠. 저도 지사님께서 시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성품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갖고 지시를 안 했을 것이라고 물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지사님께서 애초에 인사의 기준을 무너트리고 자기 사람을 심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과잉 충성자가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조직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옆에서 간신배들 달랑달랑한다고 그러죠.
결국 그 종을 너무 흔들다 보니까 자기 인생까지 종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튼 지사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찌되었든, 지금 해당 국장님도 괜히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국장님만 높게 보고 다른 국장님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1. 질문부제 : 공명정대한 인사 기준은?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능력위주의 인사시스템 구축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들을 떠나서 능력 위주의 인사시스템 구축계획임

깊은 뜻도 알겠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대해서 아시죠?
지사님께서 보면 기후변화센터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설립배경하고 목적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보면 기후라는 것이 경기도나 서울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사님이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이 국가사업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방산업으로 육성이, 그것도 강원도가 월등하게 앞서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면 2009년에 사실 조직 구성이 한 1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센터장, 녹색자원국장이 겸직을, 그때 당시에는 센터장을 녹색자원국장이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2013년 11월에 정원 4명을 증원시키고 2014년 1월 1일에는 상근직 센터장을 별도로 자리를 만드셨어요, 지사님께서.
또 센터 임명권자는 이사장이시죠?
이사장이신 지사님께서 또 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센터장 연봉이 약 9,000여 만 원, 거기에 또 사무처장이 한 8,000여 만 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담당 국장이 겸직하던 자리를 또 하나 만드셔서 굳이 센터장이라는 자리에 연봉 9,000만 원 이상의 도민 혈세를 뿌릴 만큼 국장을 만들어야 되었

는지, 그것에 대해 지사님께서 그 당시 기억이 나신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수탁사업을 시키고 있기는 한데 그 수탁사업에 들어오는 돈이 13억 6,000밖에 안 됩니다, 작년 한 해에.

그다음에 거기 지출예산액이 한 2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어림잡아 짐작을 해도 한 12억 정도가 저희가 손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자·출연을 2012년에 저희가 8억 원, 그리고 2013년에 7억 2,000여 만 원 정도를 강원도에서 출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출연을 시켜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국가사업 측면에 들어가지 굳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물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수익을 내서 독립기관으로 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센터장이라는 자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앞서가지 않으셨나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독립기관으로 만드신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부분 자료를 보면서 혹시라도 강원발전연구원이든지 이런 쪽에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들었고 센터장에 대한 부분, 도민 혈세 나가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선거를 앞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 10월경에 연구관을 11명에서 무려 17명으로 6명을 증원하셨습니다.

증원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면 강원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관이 17명, 연구사가 44명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연구관이 10명, 연구사가 38명,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연구관이 11명, 연구사가 46명, 전라북도에 연구관이 9명, 연구사가 41명, 전라남도에 연구관이 9명, 연구사가 43명, 우리 강원도와 도세가 비슷한 타 시도를 비교해 봐도 이 부분은 선거 전에 갑자기 6명을 연구관으로 승진을 시켜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직급승진에 관한 한 선심성 직급승진이 아니었나, 그 당시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세가 비슷한 다른 시도에서 마찬가지로 연구사에서 연구관을 이만큼 발탁했다면 지금 본 의원도 인정

하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본 의원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연구관을 승진시키는 조직의 활성화나 아니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시고 또는 서열을 정해서 한두 명씩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낫지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올라가면 급여 안 올라갑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구관 증원에 따른 업무 세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업무 때문에 사실 모든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대국·대과제, 업무가 대국·대과가 되어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에 효율성이 있다든지 또는 업무를 가지고 서로 미룬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대국·대과보다는 지금 많은 실·국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1본부 체제로 잘 운영되어 오던 강원신보 조직이 도정 1기 2012년 9월경에 2본부 4부 5지점 체제로 본부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잘 운영되던 본부 조직에 하나의 본부를 더 설립해서, 이것이 경영지원본부장 자리죠?
 자리를 하나 지사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본부장 취임을 시켰습니다.
 그 자리는 연봉이 거의 1억 원이 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사님, 어떤 뜻에서 본부 신설과 함께 본부장을 자리에다가 배정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위인설관이란 말 아시죠?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앉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의, 해당부서 제가 담당 직원들을 만나 봐도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그 본부장이 와 가지고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분담해서 그분이 관장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전에도 얘기했던 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시기는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사님이 자리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리를 만들어서 연봉 주면 결국은 다 도민의 혈

세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의 예산 부분, 동계올림픽 때문에 재정자립도 부분 모든 것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아무리 고유권한을 가지셨다고 해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자꾸 사람 보내고 하면 사기 떨어집니다.
아마 강원도민들도 오늘 본 의원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강원도의회는 도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마흔네 분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정책과 올바른, 또 인사를, 고유권한을 가지셨다고 하지만, 한다면 얼마든지 수긍도 하고 협조를 하고 박수를 치겠습니다, 또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사를 하신다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는 선택적 인사를 하시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한다, 제가 볼 때 인사는 보편적으로 가야 되고 복지는 선택적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더 받고 부유하거나 좀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도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인사규정에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없애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여운을 남기시지 말고 도민의 혈세로 나가는 1억여 원이 들어가면 1년, 2년, 3년, 4년에 걸치면 4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확답을,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시지 말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본부 체제로 가셔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지사님하고 그런 식으로 소통이 안 된다면 이거 문제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본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켜는 보겠지만 저도 4년의 임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후에 학연, 지연이나 또한 지난번에 임명하신 분은 경제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강원신보에 임명하는 직에는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해당 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 임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야 지사님께서 의심을 안 받습니다.

그 외에 지금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얘기가 나온 김에 강원FC의 대표이사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제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보니까-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 조례에 대한 것을 올리셔 가지고 부결된 적이 있으시죠?

그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을 대의하는 도의회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다, 경제부지사보다는 정무부지사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제가 조례 올리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임명했으면 제가 볼 때는 무난히 통과되었을 법한 얘기입니다, 지사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회 44명의 의원님들을 놔두고 지사님께서는 고유권한 다 쓰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도의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허락해 줘라, 그러면 저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민을 대의하는 도의원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초선이고 100일밖에 안 되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보다, 그러면 이것은 소통도 아니고 불통이고 지금 지사님이 1 대 44의 도의원으로 비춰지고 또 1 대 9의 국회의원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마치 모든 언론에서 지금 지사님은 불쌍하고 가엾고 나머지 9 대 1, 44 대 1이기 때문에 본 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마치 지사님을 옥죄고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모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지사님 한 분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절차와 순서를 따른다면 저희 도의회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9명이 지역을 위해서 일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버려둬도 자기 지역에 예산 더 가져오려고 하고 다리 하나 더 놓으려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1 대 9의 어떤 그런 양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 상당히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인정하셨죠?

부족합니다.

지사님,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랜 대화를 해 봤지 100여 일이 넘도록 지사님 만찬할 때하고 본회의장에서 한두 번 본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 내밀어서 차 한 잔 하시고 얘기 들으시고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나누었고 앞으로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우리 강원도정의 공직자 분들 4,000여 분이 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강원도에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됩니다.

인정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부제 : 강원신용보증재단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외부인사 임용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판단 필요

본부장의 외부인사 임용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한시적인 진통은 겪었으나, 지금은 잘 정비가 되어서 서로 투명한 관계가 되었다고 봄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불철주야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강원도의 교육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사님,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살림을 하시면서 벌어다 주는 예산에 대해서 만날 먹고 마시고 이런 데에다 써서 빚이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것을 빗대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교육감님, 강원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굳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일이 있습니다.

무상복지 확대와 안전한 학교,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IMF가 오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시중에서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 먹고 안 입고 그 부분이 전략이 되다 보니까 옷 가게, 식당이 가장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내년에 한 1,000억 원 대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우리 교육환경 개선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00억이 넘습니까?
그러면 그 기채라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빚입니까?
결국은 빚입니다.
도민의 혈세이고 군민의 혈세로 훗날 우리 군민들과 도민들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당시에는 신나서 쓸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교육에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상복지, 그것도 보편적 무상복지 때문에 지금 고소득층 자녀까지도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 혜택을 주면서 지금 정작 노후된 학교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타 시도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1,870억 가까이 작년에 요구를 했고 올해 반영된 환경개선자금이 476억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것이 교육환경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3년에는 요구액이 1,470억 원에서 2014년에는 1,87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단위학교별로 그만큼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점점 노후화된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 말이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말이면 괜찮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수긍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 2013년도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강원도 몇 등 했습니까?
하위가 아니라 제일 꼴등입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올바르다고 판단해서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예산 쓰고 있고 인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예산은 지금 제일 꼴등입니다, 16개 시도에서.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받은 교부금 금액이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어찌되었든 이 사안으로 인해서 평가를 못 받아서 결국은 전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렇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세가 비슷한 교육청에 비해서 한 100억 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다음 도정질문에서 더 오래 만나도록 하고, 이런 도교육청 결과라든지 지금 계속되는 무상복지,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 아시죠?

옛날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4년 했었고 그다음에 춘천에 초등부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을 해서 그때 춘천만 무상급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육감실 교육청 찾아가서 혼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단위학교 중에서 춘천에 제가 머물고 있는 학교만 부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운영위원장인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교원위원들도 있었습니다.

무기명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여기 계신 교사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의견이 지금 반반으로 가결과 부결이 오가는데 교원위원님들, 본인이 학부모라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표결에 응해 주십시오.” 하고서 무기명투표를 했는데 우리 학교에는 그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들 양심적으로 부결을 했습니다.

작은 단위학교에서 나온 부결의 이유는 교육감님도 그때 당시에 인정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 인지를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 혼자 가서 기자회견 하고 나오면서 많이 쓸쓸할 때, 나올 때 내가 어떤 광경을 목격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계약직에 있던 급식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임명해서 많은 월급을 주고 직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계약직 조리종사원들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라는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좋아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과일도 사다주고 고맙다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걸어 나올 때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 준 그분들께서 푯말을 들고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왜 그런 부분을 예측 못 하십니까?

지금 강원도의 교육은 본 의원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뒤에는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언론사에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교육감님은 재선, 삼선만 하면 됩니다.

지금 삼선을 위해서 선심성 공약 또는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된다는 소리이고 우리 강원도민들과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또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정말 예리한 관찰력과 그다음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복지 디폴트 현상까지 지금 온다는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측을 하시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쓰셔야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 확보가 안 되면 어떤 공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선거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공약사항을 함부로 내세울 경우에는 페이고(Pay-go)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공약을 못 세우게끔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혹시라도 다시 되돌아보시고 우리 교육가족과 우리 강원도민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시간이 없기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3분인데 1분 내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복지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육계에 계신 한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민병희 교육감님은 복지를 하는 사람이냐, 교육을 하는 사람이냐, 장학금도 복지인 것 아시죠? 혹시 복지부장관 출마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 아이들 능력이 보장되고 우리 아이들 직업이 보장된다면 돈 얼마든지 낼 수 있다, 돈 내고 교육하겠다, 왜 공짜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대한 평가 이 부분 아까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심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평가를 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그렇다면 하던 사업이나 하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과오가 인정되시면 다시 한 번 되짚어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전체가 대통령 공약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선심성 공약 때문에, 무상공약 때문에 지금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넓게 못 보십니까?

끝까지 복지하는데 존경하는 이문희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서 계시니까 잘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생각났는데 어제인가 모 학교에 갔더니 더워 죽겠답니다, 여름에.

복지예산을 늘려서 하시지 말고 아까 환경개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예산이 있으면 아이들을 그 무더위에 10시, 11시에 에어컨 켜게 만들고 수업하고 있는데 한 시간, 두 시간씩 미리 에어컨 꺼 가지고 그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요 며칠에 학교를 갔더니 화장실 수도 다 잠갔습니다, 고장이 나서요.

그런 부분도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질문부제 : 노후된 학교시설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 투자 계획

노후 시설사업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많이 앞서 있고 이미 완성도도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음
향후 소프트웨어 부분을 투자할 계획임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하지만 오늘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끝까지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10.20)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이기찬 의원 [새누리당, 양구군 선거구 출신]

말을 위한 기도, 이해인.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저와 함께 머뭅니다.
중략하고, 제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제가 어려서부터 말을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을 말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 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청춘 양구의 아들, 큰아들 이기찬 도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서두에 이해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를 읽었던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말을 잘 못 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제 말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으실 때 심상치 않게 생각하셔도 좀 이해를 하셔라, 또 한 가지는 도의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도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적정히 받아 들

이셔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넥타이를 오렌지색으로 맺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도민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오렌지색으로 했는데 잘 아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은 좀 더 집행부와 제가 맡고 있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서로 공감대를 의식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눈높이를 맞추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의원답게 해야 의원답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한 도지사나 교육감께서도 그 직에 맞는 일과 행동을 할 때 그런 것이 바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정명사상입니다.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父子子)입니다.

저는 오늘 도의원으로서의 제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서 도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과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 위원회는 부득이하지만 읍참마속에 아니면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채찍을 가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정질문 내용 중에 적절치 않아서, 건설공사 관련 제도 및 관행개선 관련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아서 다시 전언으로 드려서 질문을 요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수 경자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리 경자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와 있기도 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새로운 발전의 축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14일자 강릉·동해 일원에 4개 지구 약 250만 평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정말로 강원도민들의 많은 염원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서·남해권 중심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개발 후순위로 밀려났고 또 오랜 기간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산업의 낙후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실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대외적으로는 환동해권으로 경제영토를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그간 자연관광에 의존되어져 있던 관광산업이 콘

텐츠와 문화가 있는 관광산업으로, 또 무연탄·석탄·석회석 산업의 의존도에서 비철금속 첨단소재산업 등의 제조산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9일 경제구역청이 개청함으로써 강원도민과 지역주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 1년 9개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강원도 발표 자료에 의하면 동해안권경제구역 비전은 첨단녹색소재산업 육성으로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 건설이라는 야심찬 개발 비전을 제시, 환동해경제권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강원도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동수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강원도의 개발비전을 실현시키고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이고 오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비전은 무엇이냐니까 비전은 없으시고 자각만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2%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만들어놓은 자료에 보시면 강원도가 제출한 4개 구역별 추진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상지구 사계절 명품 해양복합관광도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평지구 국제복합지구에는 추진상황이 산업단지 구역이 미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2014년 12월까지 유치해서 상반기에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옥계지구의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구정지구 글로벌 정주 교육 문화도시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갖고 계신 거 맞죠, 청장님?

표에는 제가 쓴 것이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원이 한 거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망상지구는 던디 코퍼레이션과 협의 추진 중에 있고 옥계지구는 직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망상·옥계 이 지역은 나름대로 방향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북평·구정지구 협의는 하고 있다지만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느끼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망상지역은 도지사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전부터 의지를 갖고 직접 챙기셔서 구체적인 협의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동수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국내 기업이나 투자가 등 본인이 직접, 청장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강원도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무엇이 있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자료를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제가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지구와 북평지구는 산업용지개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북평지역 산단의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한 지역인데 지금까지 1개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입주한 실적이 없습니다.
 청장님, 이것 또한 어떤 노력을 경주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입주 신청한 실적이 없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잘하셨네요.
 두 번째, 특히 옥계 지역은 직영개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도가 수백억 원을 들여 직접 개발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분석한 자료 같은 게 있으신지요?
 그러면 그 자료는 향후에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0년 8월 준공한 동해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1995년 준공된 북평산단은 20년이 되었지만 가동률이 50%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옥계지구 직영개발 전에 이 지역에 투자 또는 입주할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옥계지구를 직영개발을 하자는 것이 어느 한쪽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직영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개발을 하고 나서 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식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의원님도 물론 공무원이십니다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자기 책임 하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계를 무작정 도 예산을 해놓고 팽개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도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투자유치를 해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옥계지구 직영개발의 성공가능성과 입주 기업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세밀한 추진전략, 비전을 수립하셔서 도의회와 지역주민들, 해당 부서가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청장님의 짧은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월 14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16년 2월이면 3년이 되는 해로 남은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망상 던디 외 투자개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정말 실정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큽니다.
청장님은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를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투자유치를 위해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내적으로나.
그런데 내부편의적 발상에서 하루아침에 담당자를 바꿔버리고 투자가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하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는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역일간신문 등 언론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내부 불협화음과 인적 쇄신에 대해서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아니오로만.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얘기를 되짚어서 질문을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건대 지금 하셨던 얘기를 다시 되짚어서 얘기한다면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내부적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고도 생각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망상이라는 해수욕장의 망상이 바랄 망(望)자에 상서로울 상(祥)자를 쓰더군요.

망상에서 물망초심(物望初心)의 마음으로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이 정말 잘되기를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질문부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실적은?

답변요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 개발사업자 확보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망상지구나 옥계지구는 제가 전부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구정지구하고 북평지구도 대략 내년 상반기를 시한으로 해서 개발사업자를 확보하도록 추진 계획임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청장님과 몇 가지에 대한 일문일답을 나눈 것과 함께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망상 던디 외 3개 지구는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직적으로도 추진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해당 위원장으로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도 조직과 같은 계선조직이라면 계장, 과장, 국장, 청장, 도지사 등 그런 조직을 말씀드리는데 기업이나 투자가와의 대화, 업무추진에는 맞지 않는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금번 12월이나 가까운 도 조직개편 시 경자청을 매트리스 조직, 즉 수평적 조적으로 개편해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조직 시스템을 개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트리스 조직으로 개편해서 새로운 부분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자청이 개청되던 그날 지사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말 그대로 아까와 비슷한 말씀으로 영혼을 묻어라, 돌아올 생각 말아라,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인사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많은 격려와 응원과 성원을 함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자치행정국장보다는 경제진흥국장이 더 소중

하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승진시킬 때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협상에 따른 강원농업에 대한 방향에 관해서 고윤식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는 FTA 협상에 따른 진행 상황을 나열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효 타결은 12건에 50개국, 협상 중인 것은 9건에 22개국, 협상 준비는 7건에 19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향후 최소 2,420억 원에서 최대 2조 3,585억 원대에 대한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축산물 중심으로 개방 확대, 한미 FTA보다는 보수적인 수준으로 진행하고 되었습니다.
미국은 향후에 2015년도에는 5,194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는 7만 1,203 농업인 가구에 약 17만 7,227명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GRDP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가 6.2%, 결코 낮지 않은 전국적으로 상위권인 4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농업의 현실에서 보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가 사실은 불 보듯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강원도의 대책이,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식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강원농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심하고 계시다는 면을 나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 수 있는 몇 가지 보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대단위 면적의 농업인과 100두 이상의 축산농가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3,000평 미만이나 소규모 축산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안정화 기금확보 방안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FTA 대책과 더불어 농가소득 향상대책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농가소득 향상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시에 시·군별로 특색 있게 지원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참고적으로 양구는 사과, 멜론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6차 산업에 부가가치는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지원을 받고 부실 운영되는 가공업체 및 작목반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농촌체험관광은 실적에 의한 수치보다는 아파트 단위 부녀회 중심, 알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농업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소득향상 대책 중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시설원예 농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의 이런 의견에 좀 더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해 줘 보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농업 분야에서 10여년 정도 근무하면서 고윤식 국장님한테 한 때는 쪼이기도 꽤 쪼이고 그랬지만 항상 다른 지역보다, 우리 강원농업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농가소득이 연 3,493만 원 정도로 전국 대비 4위 정도, 농가부채는 2,216만 원 정도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과 명품과채류 육성사업에 대한 우리 도와 타 도에 대한 보조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시면 제주도가 60%이고 나머지가 5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보다 따뜻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가온시설이 필수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300평을 1℃ 올리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00평에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올리는 비용이 하루에 약 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6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것은 우리 강원도의 현실에서 보면 한 달에 180만 원이고 6개월 정도 가온시설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 1,0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질적인 농업소득과 연계해서 한다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기본적인 생산 비용을 강원도와 지방 정부에서 좀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도작인 경우 보통 1평에 3,000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감자가 8,000원, 오이가 2만 원 정도, 배가 4만 원의 정도의 이익이 창출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대화 비닐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는 파프리카, 멜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 그래야만 더 우수한, 그래야만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 강원도가 도와 시·군 간 경비부담 기준지침 제3조에 의해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지만 지침은 법적인 규제개혁이 아니니까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당 국장님께서 농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우리 양구 권만귀 이장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들어 보시죠.

국장님, 잘 들으셨죠?

도지사님도 잘 들으셨을 것 같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축산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축산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우농가, 다시 말씀드려서 한우와 육우를 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 내 2만 3,401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전업화로 축산업이 농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축산업 생산액이 16조 3,000억 원, 우리 농업생산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발전기금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강원도민들이 가장 힘들어 했었던 구제역, AI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면 무려 지난 2011년도부터 2012년 구제역 발생 피해액이 전국에 4조 8,000억, 강원에는 2,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어려운 축산농가들에 대한 경영 부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산발전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기금은 현재 841억 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회에 걸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AI, 조류독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자금들이 상당히 낮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축산발전기금을 통해서, 또한 축산농가가 쓰러지면, 그 주변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현재 상점에서 팔고 있는 고깃집, 닭갈비집, 오리집 이런 데도 거의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경영자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축산발전기금이 별도의 자금으로서 약 500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축산발전기금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자금이 별도로 나가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금융권은, 은행은 돈이 항상 있다고 해요.

돈은 있는데 돈을 쓰려는 분들이 턱이 높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돈을 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애로사항 없이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축산농가들 경영체를 만나 보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전라남도에는 농어촌기금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금리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2018년까지 한시적인 운영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이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자리로 돌아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사님께 축산농가들은 또 어떤 바람이 있는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건이 또 있습니다.

지사님을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춘천시 닭갈비협회 사무국장님께서 하신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주영노 춘천·화천 축협장님께서 하신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영상은 본 의원이 다니면서 한 겁니다.
도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하시고 분명히 체감으로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는 올해 2015년도 복지예산을 1,300억 더 증액하신다고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하셨고 여러 요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주는 것보다는 탈무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번의 저녁거리에 대한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계신 보편적 복지보다 더 행복한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벌어서 내 부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면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먼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농업·농촌이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대한 보조율이 최소 70~80% 이상은 가야 한다는 것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축산발전기금이 만들어져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1%대 장기의 융자금을 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도미노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춘천 시내의 어떤 그리고 강원도 내의 닭갈비집, 오리농가들에 대해서 자금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정질문 내용에 약간의 오기가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건설협회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국장님은 도청 내에서든 강원도 내에서든 토목직 내에서 작은 거인 최기호로 통하는 최고의 기호, 최기호 국장님으로 통하시는데 본 의원이 하는 얘

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어려운 건설협회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658개의 건설업체가 2014년도에는 608개로 그리고 8월 말에는 594개로 줄어든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주액이 전년 대비 9.1%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 1월부터 8월까지 9,780억 원이라는 수주액이 있는 반면 2014년 8월 말까지는 1,311건에 8,900억 원, 다시 말해 9.1%가 저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강원도의 건설경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 낙찰, 단가의 비현실화 등에 따라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공사수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한 요점은 이렇게 PT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4년도에 비해 물가는 40% 상승한 반면 공사비 산정기구는 표준품셈 실적공사비는 오히려 16% 하락했습니다.
수치적으로 56%에 대한 갭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제를 통한 일률적 공사비 삭감으로 인해 심사대상 공사비가 많고 현장여건 등 적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그러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 부족으로 인위적인 공사비를 삭감해서 예산에 꿰어 맞추기식으로 설계해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나름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계약심사 대상을 대폭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따를 것 같고 정상적인 사업추진, 설계시공 등이 가능하도록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 후에 시행을 하셔야 된다, 그로 인해서 제값을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시공 문화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분야의 경영난 해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돌려주세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대행사업에 대한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도 및 시·군의 각종 대행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익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우리 강원도와 시·군에서는 위탁발주를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다섯 건에 들어가는 대행사업 수수료가 8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84억 원을 고스란히 강원도개발공사에 해 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공사비 삭감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강원도개발공사는 그런 것을 위탁할 것이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참여, 러시아산 PNG 개발 참여 또는 도유재산관리 임대사업 등을 통한 수익사업 창출 이런 쪽에 좀 더 경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오랜 관행적 채무공사의 점진적 축소방안 이런 것이 실제 큰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부제 : 관행적 채무공사 축소 방안은?

답변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 채무부담 공사의 연차적 감소 추진

채무부담 공사는 지방도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채무부담을 줄여나가면서 지방도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다만 채무부담 규모는 작년에 400억 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250억 원임. 내년도에도 소폭으로 줄여서 해 나가도록 하겠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해야 되는데 시

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우리 지사님께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외 다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에 새로운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서로 상승적인 발전과 삶의 질을 함께하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평창 개최지 외 다른 부분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난리납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10.2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5선거구 출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관광과 레저가 어우러지는 호반의 도시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도의회에 들어와 제1차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강원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고군분투하시는 최문순 지사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의 가계부채가 1,0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527조,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라고 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약 7~8%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에서 4%로 넓게 잡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2~3배 이상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가 9월 24일 펴낸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주요 53개 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개인 부채비율은 65.1%로 집계된 반면 우리나라는 93%로 아시아 최고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라 급기야 담배값 인상, 주민세 인상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정부가 돈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강원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 시설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직접개발 사업, 동계올림픽 특구사업, 알펜시아 부채, 미시령터널 운영적자 보전 등으로 여타의 모든 사업들이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정말 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국전력본사 부지 공개매각에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삼성과 현대가 입찰 경합을 벌였죠.

부지 감정가가 3조 3,000억 원인데 이에 3.2배인 10조 5,500억, 이걸 소나타 가격으로 환산하면 35만 대에 달한답니다.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1년 연봉이 56억인데 이것을 연도로 따지면 1,884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써낸 현대가 낙찰을 받았다는 소식은 완전히 남의 나라의 얘기인 듯 씁쓸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박탈감을 들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연금개혁안과 관련돼 가지고 공직사회가 뒤숭숭하죠?

지사님은 연금생활자가 아니라 직접 피부에 와 닿지는 않으실 텐데?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사님, 이제 어느 정도 도정 업무에 자리가 잡히셨죠?

보일 건 다 보이시리라고 봅니다.

지난 도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아, 양양공항 활성화?

어제 논란이 많았던…….

잘 알겠습니다.

지난 5일인가요, 여당 대표가 평창을 방문했죠?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작업이 심각한 위기라서 이대로라면 큰일 나겠다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사실 4만석 규모로 2017년 10월까지 준공해야 될 개·폐회식장의 경우 아직 설계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아직 발주가 안 됐고요, 활강경기장 건설 문제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사께서 보시기에도 우리 동계올림픽 조직위나 문광부 등 정부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치는 지방정부가 했지만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자치 2할 수준에서 이걸 가지고 지방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이미지를 강조하는데 국가 의지가 이렇게 박약해서 되겠습니까?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의 목소리를 콧등으로 듣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예요.
그렇죠?
한 번쯤 강원도가 정부의 미약한 의지라든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업 포기 등 좀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의식 안 가지고 갔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지사님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하신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동계시설 예산 전액삭감이라고 하는 강수라도 두어야지 답답한 도민들의 마음이 대리만족이라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개최도 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애가 닳고 허덕이는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과연 어떨까 참 갑갑합니다.
표를 잠깐 봐주세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강원도비, 순 도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비용이 2,757억입니다. 2,757억을 신규로 투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방채 발행 예정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000억, 나머지 757억은 어디서 나오죠?
나머지 신규사업들은 전혀 못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는데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못 드리는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런 동계올림픽 대비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에 대한 신경이, 배려가 부실해진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우리 각 실·국장님들을 통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해질 염려가 있거든요.
지사님께서는 각 실·국이나 의회와의 소통 지수가 몇 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청 내에 실·국장님들과의 소통 지수 몇 점? 예, 지사님이 판단할 때요.
우리 도의회와의 소통 지수는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안 좋은 점을 굳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지사님 개인은 정말 열심히 뛴다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열심히 뛰는 사이사이 과정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사께서 먼저 다가가는 격 없는 대화나 자리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저는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래도 항상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역지사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본 의원이 8대 제220회 3차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의 조직운영 방식하고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주문하신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하려고 했는데, 조직운영의 목적성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공격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렸어요.

그런데 지사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강압적이고 명령에 의해서 상명하달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 지사님 스타일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느슨해 보일 것 같다. 그것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밀고 나가서 제 색깔을 분명히 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사님, 잘 돼 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점에서도 역시 역지사지로 참모들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의원님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과단성 있는 모습으로 “예스, 노”를 분명히 함으로써 색깔이 만들어지고 보다 짜임새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기 도정에서 기구개편을 통해 조직개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잘 했다고 평가하시나요?

1. 질문부제 : 1기 조직개편을 평가한다면?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글로벌 중심의 조직개편 추가 실시

핵심이 글로벌사업본부를 만든 거였는데 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그 당시에 완성을 하지 못했음.)좀 더 경제 중심, 그리고 글로벌 중심의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의원님들께 그 안을 만들어서 보고 하겠음

그러면 글로벌사업단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가동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은 글로벌사업단 조직 체계나 에너지자원과의 배치 문제라든가 공유재산 관리부서의 배치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글로벌사업단은 기형적인 조직 체계로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의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직 형식에 맞추어 배치·구성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면 재조정할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사께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하신 토지기획단 운영을 통한 도유재산의 가치 극대화 실현을 위한 노력은 잘 돼 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채 의례적이고 수치적 관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가뜩이나 없는 재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 가치의 극대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챙기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실·국장님들의 지사 보좌기능에 대한 직무 평가를 하신다면, 잘한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불만이다, 매우 잘한다 이렇게 해서 5점 만점으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드리겠어요?
4점 정도 되네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봅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설득 노력, 예결위에서의 관철 노력 등 많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지사께서 직접 의원님들께 주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소통 아닙니까?
거기에서 격 따지고 지위 따지면 아무 얘기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소방공무원들이 국가 사무를 위해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230억 원 정도의 강원소방헬기 국가 구입 요청을 위해서 지사께서 기획재정부 방문하셨죠?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3년간 매칭사업으로 27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125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한때 지역 언론에 반짝 거론만 되다가 다시 언급이 없어요.
기재부에서는 3년간 강원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27억만 배정해 놓고 있어요.
이번 연말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전액 국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몇 % 정도로 보세요?
지사님께 반 이상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도 현실인데요, 16개 지방도 현장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지방도 403호선 강촌에서 발산 구간 연도별 투입 현황을 보는데 올해 11년 차입니다.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균 65%의 공정률밖에 보이고 있지 않아요.
2020년이 되어야지 완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도청 소재지에 이런 지방도 현장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향후에 아직도 5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1년에 120억, 130억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지사님의 정책적 판단, 관심 이런 것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 4-1, 마지막으로 안행부에서 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했는데 가·나·다 등급으로 했는데 강원도가 다 등급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등급이 공교롭게도 지사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사회복지 분야하고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살률 이런 거요?
지금 도청 예산 배정률인데요, 맨 오른쪽 끝에 보면 24.85%라고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가장 낮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도정을 살피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퍼주기다, 차기 선거 포석이다, 아우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데 어쩌겠습니까?
모쪼록 지사께서는 다수 도민이 동의하고 바라는 시책들에 대해서 소통을 더욱 다양하게 강화하면서 소신과 뚝심으로 색깔 있는 도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족한 살림 속에서 예산 짜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나요?

마찬가지로 지사님께 드렸던 질문인데요, 우리 실장님 도의 주요 시책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의회에다 묻고 계세요?

짧게…….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의례적이고 연례 반복적이고 관행적이다,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사전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주요 시책사업으로 세우고 또 예산을 세우면 의원님들을 비회기 중이라도 찾아다녀야 돼요.

국·과장님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납득시켜 가지고 의회에서는 소모적인 그런 시간들을 절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줘요.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이게 본 의원이 느끼는 평가입니다.

상임위별로 뭉뚱그려진 업무보고와 사업설명, 예산설명 이런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성의 있는 이런 모습들, 적극적인·주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의원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으로서 지사님 보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인지상정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력과 주요실적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것 잘 안 되고 있죠,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모니터에, 저게 도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저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배너 광고라든가 멘트가 한 줄도 없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저게 도민 의견 수렴란입니다.

마지막 글이 언제 겁니까?

달랑 세 개 올라와 있는데 2012년도 건가 그래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지금 YGB라고 해서 강원도 재정 코너를 통합해서 만들었다고 높게 평가를

스스로 하시는데 이용자들은 잘 모르죠. 어렵죠.

강원도교육청은 제가 볼 때 그래도 언론 플레이도 하고 상당히 떠들썩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강원도청은 토론회, 공청회한다고 계획서만 2012년도에 발표해 놓고 나서 진행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여론조사, 의례적인·관례적인 여론조사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 기간을 특정하지 말고 1년 열두 달 다 홍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홍보 결과로 의회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 '아,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왕, 전국적으로 주민 참여 없이 도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시책 얘기만 하면 뭐해요.

토론회, 공청회한다고 얘기만 해 놓고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시간은 없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총괄하시나요, 부서를 총괄하시나요?

이 부분도 이왕 실시되고 있는 예산의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돼서도 이게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손 놓을 게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세수를 조금이라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들 아등바등 애를 쓰는데 강원도청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조실장님께서 소극적이시고 타 부서로 넘기시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맞죠?

시정해 주시고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질문 안 드리고요, 우리 강원도에 별도의 조례나 규칙,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그에 따라서 종합 관리부서도 없죠?

이것은 차제에 본 의원의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별한 관심과 준비를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2. 질문부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답변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추진

간담회 등을 실제로 개최하고 있음.
지금 다섯 개 분야에 대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하였음.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징수 관리와 예·결산 편성 그리고 보고 문제와 관련해서요, 총괄하고 계시죠, 국장님?
지난 3년간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 및 결산 편성 부서 현황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자료 없나요?
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예산 편성 부서가 68개 부서인데 반해서 징수액이 발생한 결산 보고를 한 부서는 96개 부서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이게 2013년도에는 73개 부서에 101개, 2014년도 8월 현재까지 54개 부서에 92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이게.
예산·결산이 안 맞는다고요.
세외수입 징수 결정이 있음에도 예산 편성을 부서별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예측 불가능입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수치의 혼란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실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각 실·국별로 세수 확대를 위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기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치만 부기장에 올리는 수준, 지금 세수가 모자라 가지고 세출 예산 쓸 데는 많아서 아우성인데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실·국장별로 국장님이 주관하시든 기조실장님이 주관하시든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국장님한테는 이것을 서면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농축산식품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 역량강화사업 관련 질문인데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이게?
몇 개 마을을 지정하셨습니까?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는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실적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나타나죠?
자료를 내려주세요.
다음 자료 5-1.
이건 전수조사가 부실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보조금을 나랏돈 빼먹기 식으로 극단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건물 농산물매장을 지어놓고, 마을회관 비슷하게 지어놓고, 컴퓨터실 지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방치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방식에 실효성이나 발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내실은 두 번째 문제다, 이거죠?
이게 사실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정말 기여를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우수마을을 선정할 때부터 발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 사업이 마을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 일회성 사업 2, 3년 내에 이 사업은 용두사미가 된다, 단언컨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단계부터 발전 가능성을 엿보고 또 보조금 지급 방식이 일괄로 한목에 주던 것을 나눠서 주듯이 마을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뒷받침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의 전 마을들이 우수마을 신청을 할 때 '아,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비전과 전망을 준비하지 않고 신청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도의 시책 방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교육행정 분야를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자료 8번을 봐주시고요.

이 수요조사의 주체는 어느 기관입니까?

시·군입니까?

모니터 자료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 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매년 수요 조사를 세심하게 실시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어차피 100% 교육청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강원도와 일선 시·군에 위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제에 제도 시행 방식을 바꿔서 교육청 주관으로 일선 교육지원청이 시·군 자료를 지원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또 파생되냐 하면 교육청 결산서상으로는 예산 현액과 지출액이 일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일하고도 욕먹는 격입니다. 그렇죠?

이거 회계질서 문란이죠. 이것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문제지만 강원도청 회계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국장님, 차제에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교육청 직접 사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주문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 친환경 급식에 따른 도내 생산품 구매 관련 질문, 자료 9번.

도내산 수급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농산물.
쌀 빼고요.
결산검사 시에 정책 지적 받으셨죠?
여기에서 시정처리계획에 제시한 여섯 가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주관이신데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실태 수시·불시 점검, 연중 공급 가능한 품목, 수요량이 많은 도내산 농산물 선정·생산, 저장창고계획, 학교급식 나이스를 통한 생산량 집계 시스템 구축을 교육부에 건의, 도내 농산물의 자유로운 구입이 가능하도록 유통체계 구축, 일선학교에 도내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도모,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적극 유도 이렇게 여섯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처리계획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처리계획 여섯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본 의원이 볼 때 이 여섯 가지 내용들을 보면 뭔가 수동적이고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위학교 재량 급식 체계를 바꾸겠다는 근본적 처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또 한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러기에 불시점검이니 유도니 협조니 건의니 하는 수준의 답밖에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강원도가 진행하는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마 내부적으로 포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학교급식문제는 누가 정리하고 식자재 비율을 높여나가고 강원도 농업·농민·농촌 문제를 연계해서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책을 누가 집행하겠어요.
바로 국장님이십니다.
정책 연계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단순 기능적으로만 이 일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언제까지 일선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께만 맡겨놓으시겠어요.
조금 더 정책 소신을 가지시고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18개 시·군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강원도에서 홍천하고 횡성에 직접사업과 위탁방식으로 시범 실시했죠?
그래서 원주하고 철원이 또 추가되어 있죠?

나머지 시·군은 뭡니까?
꼭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3. 질문부제 :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

답변요지 (교육국장 조성호) :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지원센터 설립 추진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법 조항에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찾아서 컨트롤타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다음 행정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안 할 수는 없고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 10번 띄워주세요.
저 맨 위에 있는 수치 44%가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시·군 교육지원청 평균 수치입니다, 다 합해서.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해 가지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강원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현황’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보신 적 있어요? 매년 도청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각 시·군에. 도교육청에서는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반드시 지침 삼아서 44%의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주무부서 과 계장님들을 통해서 실적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보다 넓고 깊은 문제의식을 함께하면서 도민들께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이 되도록 하고 내실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10.2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연동 의원 [새누리당, 삼척시 제1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시민 중심 행복 삼척 출신 김연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학교,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민병희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삼척시민과 삼척고등학교 동문들의 숙원사업인 삼척고등학교 이전 무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척고등학교는 1960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명문학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명문고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학교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에 따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어 학교 주변도로가 협소하고 통학 시 사고위험이 높아 각종 공해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삼척고등학교 이전문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이후부터 학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또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업은 애초에는 총 사업비 213억 원에서 282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인 대단위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기에 8만 삼척시민과 동문의 운영위원회,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어찌 보면 삼척시와 삼척시민과의 숙원사업이던 그런 일들이 지금 무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무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동문들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무산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 삼척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따가 그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우리 삼척시민들에게는 한 10년 넘게 갈망하고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민들이 실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으로서 삼척시민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척고 이전에 대한 유관기관인 도교육청과 삼척 실무자께서 협의를 거쳐서 또 저번 9월 22일에 교육감님과 김양호 시장님 면담이 있었죠?

그때 면담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양호 삼척시장님과 우리 교육감님이 면담해서 삼척고를 현 부지 내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어떤 추정을 세워서 벌써 확보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무산된 것을 가지고 교육감님에게 따져 가지고 다시 하자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삼척고등학교의 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또 상당히 기대되었던 삼척고등학교 이전 무산의 구체적인 사유와 이전 취소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유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안타까운 게, 삼척시민들과 동문들, 여러 가지 학교관계자나 학부모들이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고 이전부지 설계용역 계약이 공동 도급자로 서울 소재 SD파트너스하고 춘천에 소재한 형제K 건축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현재 이전하는 부지에 사전 지질조사를 안 해 봅니까?

우선 지질조사를 하려면 사전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 확보된 상태에서 지질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유재산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삼척시민은 그 일대가 석회암 지대로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지하동공이 있다는 것도 미리 예견한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삼척시 관계자들이 용역을 해서 올라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허가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삼척시에서 올라온 그 용역만 가지고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삼척고등학교가 김양호 삼척시장하고 교육감님의 만남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삼척시민들과 삼척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삼척고 동문들, 여타 우리 관계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삼척고등학교에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려간 예산이 얼마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27억은 설계용역이나 이런 추진과정으로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13억은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김양호 시장님하고 얘기 나눈 것입니까?

그 나머지는 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쓰여진 예산인 줄 압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석회암 지대인 카르스트 지형에 애당초 학교부지 지반 사전 지질조사에서 신중했다면 어떤 예산낭비와 시행착오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전 지질조사에서 25공의 표본조사를 하는데 두 군데에서 지하동공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무산되었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들어간 추가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하동공 보강사업 추가소요 발생이 약 101억이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학교부지 선정을 그 지역 기관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심도 있게, 원래 삼척시에서 올라온 그대로 교육청이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교육감님께 두 가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척고등학교가 이전 관계로 인해서 수년 동안 10여 년 넘도록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면서도 참으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전혀 되지 않았었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삼척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발돋움하고 또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시설 리모델링 환경사업을 통하여 신축 건물 짓는 것도 최신식 학교로 변모시켜 주실 것과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재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공사하는 기간 동안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삼척시민들과 삼척고 이전 무산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혹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수시키기 위하여 저번에 삼척고등학교 내에서 실시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운영위원장, 학부모, 동문회장, 추진위원장 한 13~14명이 앉아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민이 약 8만 명인데 돌아가서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회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설명회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삼척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게끔 삼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질문부제 : 삼척고등학교 이전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삼척고등학교 시설투자 관련 의견수렴 추진

동공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삼척고등학교가 시설투자도 지연되고 미루어지고 했었는데 앞으로 삼척시민들 대표자 분들께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사후 설명을 잘 드리고 나서 의견수렴을 해서 삼척고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데 많은 시설투자를 할 계획임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4개월 정도 되는 초선 의원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뵈어서 반갑습니다.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현안으로 인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들께서도 지사님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란 참으로 끝이 없다는 것이 제가 최문순 지사님을 뵈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다 있는 일이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무엇 하나 해결하려면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지사님, 제가 도정질문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사님을 뵈면 꼭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척에서 절체절명의 현안사업인 원전건설에 대하여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짧게 “예, 아니오.”라고만 답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원전건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30초도 좋으니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난 10월 9일 삼척에서 민간주도로 실시된 유치 찬반 주민투표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자면 삼척 원전 유치 찬반투표에서 4만여 명에 이르는 서명자 중 약 68% 참석한 주민투표 계표결과가 유치반대가 85%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사님께서도 제가 삼척 원전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있고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도 수차례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 민간주도로 실시한 삼척시민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원전의 영향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대다수 삼척시민의 뜻이요, 또 너무나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삼척 원전 찬반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많은 불신과 반목으로 골이 깊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로 치러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 모두가 수용하여 원전 유치 찬반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주민 화

합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삼척 출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도 강원도 차원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 동참을 부탁드리며 핵 없는 강원도, 핵 없는 삼척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동해항 3단계 개발에 대해서 해양수산 분야 관계자나 아니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나오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좀 모시겠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은 사실 도지사님한테 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자리에 나오시게 했습니다.
제가 우선 오늘도 삼척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갑자기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를 보여주시죠.
지금 저기 보이는 위에 동그란 화살표가 동해안 3단계 공사 예정지입니다.
일자형 해안에서 사실 조그마하게 보이지만 바다 2㎞로 나가서 항만을 짓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동해항보다도 1.5배 더 큰 항만입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정말 신항만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1조 6,890억 원을 들여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동해항 물류기지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일자형 해안입니다.
다시 또 보이는 항만이 있는데 저게 만약에 북방 조류로 인해서 흘러나오면 삼척해안은 정말 불을 보듯이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항만은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삼척해안이 작은 해안들이 다 박살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어느 한 지역을 살리고 어느 한 지역을 죽이자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동해시 오원일 5선 의원님도 계시고 김규태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동해가 잘살고 삼척이 잘사는 그런 정부정책을 내놓아야지 이렇게까지 지

역을 죽이고 동해가 좋아진다면 동해 주민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저것이 지금도 오·하수 처리 방류라든가, 앞으로도 GS화력발전소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방류하는 오·폐수라든가 이 모든 것이 북방 조류로 인해서 삼척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을 온배수하려면 염산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든 해조류가 붙으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염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추진하는 사람들은 300m, 500m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영향이 삼척에 지대한 피해가 오는 거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항만입니다.
지금 여기 보신 대로 1항이 있고 2항을 하는데,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를 하는데 현재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삼척시민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내항을 하자는 것이죠.
내항은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지금 내항 가능지이고 보시면 동해 전천항이 있습니다.
전천항 옆으로 내항 가능지로 삼척시민들이 대안을 내놓은 방법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여기 강릉항에는 방파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퇴적이 된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남대천이 퇴적되어서 강릉에 계시는 김용래 의원님이라든가 몇 분이 계시지만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저기 입구가 퇴적이 되어서 냄새뿐만 아니라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퇴적되는 곳은 퇴적되고 또 침식되어서 해변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삼척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 주세요.
저것은 위에 나온 말대로 북방조류가 심하게 내려오면서, 오목항 식으로 되어 있으면 피해가 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세요.

여기는 강릉, 아까 본 침식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산처럼 퇴적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삼척이 만약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시작되면 삼척은 저렇게 심한 퇴적이나 침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득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런 말을 여기에서 안 할 수 없어서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정말 선배·동료 의원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식방지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침식방지라는 얘기도 안 하고 침식 저감시설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정말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삼척의 피해입니다.
지금 현재 궁촌항에 들어간 돈이, 윗부분에 궁촌항이 있는데 저기 노란 부분에 보면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침식이 되어서 계속 유실되고 있죠.
그리고 돈을 들여서 항을 짓는데 만약 200을 들였다고 하면 그 밑에 침식방지를 하기 위해서 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것이 궁촌항 바로 밑에 강변에서 흘러나온 물에 강릉처럼 퇴적되는 곳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월천해변 침식은 다르지만 다시 한 번 보여 주세요.
옛날 과거 월천해변이었습니다.
지금 하얀 부분이 해변인데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유리별처럼 돌들도 있어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돌들도 있어서 해안이 참 좋았는데 지금 변한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면 LNG가스기지라고 건설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역이, 아까 보시던 지역이 저렇게 계속 방파제, 저것도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다시 보여 주세요.
다음, 다 해변이었습니다.
다음 또 보여 주세요.
이것은 바로 옆 민물에서 내려오는 맞물리는 곳에 퇴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아무런 문

제가 없다고 사탕발림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되니까 뭐냐 하니 그때서야 관심을 조금 가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좀 서툴더라도 나와서 꼭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변을 보면 궁촌항입니다.

궁촌항 매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침식되어서 공사를 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돈을 들여서 계속 공사를 합니다.

이건 매년 수차례 하는 거예요.

1억부터 2억까지 해서 삼척시에서 벌써 7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바로 옆에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거짓말 아니라 100m 떨어진 게 아니라 5m, 10m 떨어진 곳에 집을 지키고 있는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한다면, 또 문제가 되면, 떠나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다음을 보여 주세요.

이렇게 매년 계속 공사를 합니다.

매년이 아니라 한번 문제가 생기면 계속, 마지막 좀 보여 주세요.

제가 내륙항 건설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여 주세요.

제가 내륙항 개발 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조금만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륙항 개발 시의 장점은, 이것은 삼척시라든가 주변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상당한 양을 하게 되면 돈도 절감되고 삼척시와 동해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항으로 함으로 해서 정말 동해시민들도, 사실 저기에 살고 계시는, 내항이 생김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동해항 때문에 인근 주변지역들은 사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번에 보상 문제가 들어가면 말끔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기는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가지만 3,500 가까이가 줄어들 수 있는,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했느냐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뽑아본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공사기간도 약 2년이나 3년 단축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에 보면 돈벼락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보상을 받고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애초에 그 자리가 많이 피해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삼척 해변이 침식저감시설, 침식방지라고 하죠.
침식방지가 됨으로 해서 향후 들어가야 할 돈들이 많이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고성군 명파리 해변에서부터 삼척의 끝부분인 고포해변까지 한 220㎞ 되는 것으로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04개 정도의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2010년부터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한 지역은 단 1개소도 없습니다.
보통이 24개, 아까 말했던 동해안이 오목형, 일자형이 아니라 오목형이 되어서 조류에서 피해가 덜 한 지역은 침식이 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자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쓸려 나가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정말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이 24개고요, 104개 해변 중에서 59개 지역은 우려가 되는 곳이고 심각은 21개소로 현재 우리 동해바다 해안침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걸 보시고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말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원일 의원님하고 영동 지역의 김규태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하고 삼척은 옛날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 지역은 지역을 위해서,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삼척 시민들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경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질문부제 : 동해안 3단계 개발 계획 관련

답변요지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 지역주민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계획수립 추진

동해항 3단계 개발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 한국의 종단철도와 연결되는 그 중간에 강원도가 위치해 있고 또 동해항이 여기에 대한 물류전진기지로 필요성은 있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침식방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고맙고요, 제가 준비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한다고 많이 해 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우리 삼척시민들이 보면 저를 많이 나무랄 것 같습니다.

삼척에 만약에 해안사업이 들어오면 관광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말 삼척에 연간 직간접 유발효과 손해액은 천문학적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 중심, 행복 삼척으로 동굴의 도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삼척시입니다.

1년에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삼척시 관광수입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국토해양부 자료에 나온 것을 근거한 겁니다.

또 10㎞에 달하는 모래해변의 침식저감시설 공사비가 수천억이 될 것이고 문제는 침식저감시설, 침식방지라고 하죠?

이것이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2㎞ 나가서 했던 화면, 피해를 보는 지역은 거기의 10배, 15배 정도 되는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2㎞ 나가면, 20㎞, 30㎞에 항만이, 방파제가 나가 있는 바람에 계속 피해를 보는 곳은 삼척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동해항만청은 2011년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의 일정으로 3단계 개발사업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데 삼척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라는 권위와 주인의식이 없는 용역회사와 탁상공론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건설 위치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 당사자인 삼척의 해당 주민과 소통과 대화를 소홀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심각성을 제기한 삼척시민에게 발목을 잡힌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 이 사업은 중단이 되든가 내항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외항이 아닌 내항, 개개인의 예산절감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이런 내항을 선택해 주시기를 정부와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는 외항 또는 내항 개발 시 동해시 및 삼척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효과 등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확실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공사에 착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채우고 할 그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10.2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용복 의원 [새누리당, 고성군 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금강산의 고성, 고성 출신 새누리당 김용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여러분들과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한 110여 일 지났습니다.

9대 도의원으로서 제가 잠시 모두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을 할 때,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도정질문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의원이 되어서 도정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도정질문 발언자로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잘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같이 공부해서 뭔가 도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개중에 어떤 부서의, 교육감님께서는 도정질문을 하는 의원님과 같이 웃으면서 할 때 이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할 때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확한 답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문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정질문 받으시느라 힘도 드시고 다리도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앉아서 경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를 할 때 그 요구를 꼭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특별대책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지사님, 행정부지사님은 뭐하시는 분이죠?
행정부지사님의 임무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잘 모르니까 지사님께 한번 배우는 겁니다.
경제부지사님은 우리 강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지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지사님, 편히 앉아계시고요, 행정부지사님, 제가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행정부지사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전에 자치행정국장님도 하셨죠?
그게 몇 년도죠?
그러면 제가 한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에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된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행정부지사님, 우리 강원도 행정구역을 다 알고 계시죠?
부지사님이시니까 강원도 행정구역은 전체적으로, 지도상에 나온 행정구역은 다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강원도 섹터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혹시 말입니다, 바닷길은 몇 마일까지 영해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강원도 범주에 속하는 해역이 몇 마일인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깊게 짚으면서, 금강산 관광이 왜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가는가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부지사님께도 금강산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규정이 그렇다면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사님께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강원도에서-정부가 아닙니다. 고성군에 지원했던 사업이나,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명과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향후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일자리 사업은, 바이오매스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18개 시·군 어디나 똑같이 공히 배정되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금강산 육로관광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허나 강원도에서 고성군에 금강산의 재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패널들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차원에서 고성군에 정말 눈에 보이게끔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고성군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줬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육로관광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 고성에는 18개 시·군의 동쪽 가장 최북단에 있는 고성군이 인구 3만뿐이 안 됩니다만, 18개 시·군에서 서자 취급을 받는 곳이 강원도 고성입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지사님, 지사님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압니다.

우리 고성에서는 지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도루묵 지사님, 막걸리 지사님, 그 말이 저한테는 와 닿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절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고성을 관심 있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구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 행정부지사님이나 경제부지사님을 발언대에 모시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여기에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부지사님은 고성군 부군수까지 하셨어요.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가셨다가 경제부지사가 되셨습니다.

금강산이 막혀서 고성경제가 어려운데도 정말 고성 부군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의 애정을 가지고 고성에 직접 찾아오셔서 고성지역 3만의 도민을 한 번도 위로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일회성 행사 때 잠깐 얼굴 비추고 그냥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혼자서 애달파하지 마세요.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부려 먹으세요.

고액 연봉자들 아니십니까?
지사님이나 저나 선출직이다 보니까, 공직생활을 하면 퇴직금을 받지만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지사님, 이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굵고 짧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성군이 규제완화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짧게요.
그러면 말이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말입니다, 규제완화 비정상을 정상화를 통해 국가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화진포 호수가, 저희 고향의 경관 좋은 화진포 호수를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원이 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강원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강원도에 말입니다, 우리 고성의 경제가 어렵잖아요.
알고 계시죠?
몇 번 내려오셨어요?
놀러 오신 거예요?
시간은 없고 할 말이 많아서 짧게 짧게요.
그러면 화진포 내에 문화재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 지사님께 답을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리솜도 인허가를 내줬고 그 다음에 현대아산도 내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철새보호구역인 화진포 호수 내를 오픈시켜 달라는 겁니다.
허가를 내 달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그것은 환동해본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제 요인은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의가 없다고요?
용의가 있고 없고를 국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잠깐, 말 길게 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우리 고성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져서 거진읍 현내면 지역 주민들이 화진포 호수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 두면서 무동력선인 카누, 조정, 요트 이런 걸로 해서 사시사철 찾아오는 관광지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즉 말해서 화진포를 40일만 개방해 줘요.
해수욕장철이 40일인데 오시는 관광객들이, 요즘 관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에 먹을 것 다 싣고 와요.
해수욕장에서 주차비 5,000원 때문에 싸움까지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받는 금액이 5,000원밖에 없어요.
쓰레기 처리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경제를 살립니까?
경제 살리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장사를 해서 지역에서 커갈 수 있는가를, 자립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구역 설정을 국장님 입장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윗분이 해제시켜 준다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까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님.
화진포 호수 이용권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고성군수가 뭘 어떻게 해요?
화진포를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개별적 법률이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관장하고 있고요…….
잠깐, 그런 부분을 나한테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화진포 이용권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용권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요.
그러면 도의 승인을 안 받고 고성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이용권은 어디에 내느냐 이거죠.
거기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같이 서 계세요.
지금 환동해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용에 대한 절차는 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건 알아요.
대신 지정 해제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환동해본부장한테 위임을 시켰고 환동해본부장은 또 문화관광체육국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가 해제 주관 부서예요?
그만 들어가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또 보고를 받을게요.
지금 두 가지밖에 못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6월 21일 육군 22사단의 임 병장 사건은 대한민국 누구라도 다 알 겁니다.
그때 고성군에 지역주민 위로차 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날 모 부군수님하고 군수 당선자분하고 저하고 같이 체육관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피난이라는 것을, 민북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피난을 나와서 추운 체육관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그때 지사님도 그 고통을 알고 그 체육관 마룻바닥에서 주무시고 그다음 날 출발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소속은 22사단이지만 강원도의 제1야전군사령부-원주에 있죠.-예하 부대입니다.
지사님이 왔다 가시고 사건이 종지부를 찍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 하나, 정말 어느 누구 하나 군부대 소령 정도 되는 분이라도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초를 겪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 한마디하고 사과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결산 때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명파리 이장님, 마달리 이장님이 전화를 해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인데요, 제가 고맙게 한 일이 없는데요.”, 했더니 의원님이 질문해서 군부대에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전자치행정국에 비상기획과가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는데 보니까 53사단 출신 중령급 과장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전화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군부대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고성의 마차진사격장이라고 들어봤어요?
마차진사격장은 대한민국 최북단 제진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한 수, 한 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부대는 야전군사령부 예하 소속 방호부대입니다.
4월 1일부터-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5월 말까지 두 달,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 해서 한 달에 20일씩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는데 사격방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잖아요, 마차진사격장을 모르니까.
이 부분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마차진사격장을 모르는데, 이것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제안이거든요.
이게 답인데 이걸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곳에서 하루에 발칸 대공포로 쏘는 발수가 하루에 1,500발에서 3,000발입니다.
인명살상용이 아니라 비행기를 폭파시키는 비상탄이에요.
1,500발에서 3,000발이 떨어지면 그 비상탄이 가루가 되어서 어디로 흐르느냐,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어장 및 북방어장 위치도입니다.
바로 제진 저도어장 쪽에서 사격을 가합니다.
그 사격 반경이 12마일입니다.
우리 어선은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누구든 자유롭게 조업을 해야 되고 오징어채낚기 배들은 야간에 불을 밝히고 24시간 조업을 해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후 1시에 사격을 하는데 오전 10시만 되면 방송으로 전부 다 남하하라고 해서 귀가를 시킵니다.
지금 이렇게 고성 어업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조업재개를 못 하고 있어요.
현내면 어획고가 보통 1년에 12억씩,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수년간 이렇게 자행해 왔어요.
그래도 군부대에서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고명하시고 높은 육군 지휘관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고성 명파리 지역주민과 마달리, 매봉리 주민들한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협의를 해서 좀 보고를 해서 정말 정중한 사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하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라는 그 사과 한마디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풀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성군민들이 강원도민의 일원입니다.
그분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이 도정질문을 할 때 답이 내려지니까 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지역에 주민대피소, 그다음에 원격방송시스템을 수없이 많이 요구했어요.
당초에 그날 그때 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주민대피소는 필히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한번 그것 좀 답을 들어봅시다.
그것 언제 해 줘요?
돈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요.
국장님,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쓸 수 있는 재정보조금을 거기에 한 1억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기분 좋게 던져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금년에 또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어업인들의 아픈 마음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업인들에게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으신지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에 영어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이에요.
어업인들이 쓰는 게 영어자금이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쓰는 영농자금이 있습니다.
축산에서 쓰는 축산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이자율이 연리 3%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수많은 농어가들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이자율이 너무 비싸니까 1%만 내려달라고 수없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농가, 어가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이자를 1%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3%짜리 이자를 1%만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농업경영이나 축산경영, 원예작물, 영어자금 다 포함해서 이자가 한 20억이면 되거든요.
20억 1,500만 원인데, 이 자료는 우리 도에서 직원들이 뽑은 자료입니다.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순수하게 우리 농가와 어가를 위해서, 농민과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자 1%만이라도 보전해 줄 능력이 있으신지.
지사님, 지금 환동해본부장하고 농축산식품국장한테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20억 정도면,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만 알펜시아 하루 이자가 9,500만 원, 1억이라던데 20일이면 이것 1년치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긁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 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 강원도사업이.
대관령음악축제 -저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만- 한 번 하는 데에 30억 들어간다는데, 며칠 하는 데에 30억 들어가느니 우리 농어민들에게 20억만 주면 1% 감이 되거든요.
이차보전을 좀 요청하고요, 이 부분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입니다.
각 시도에서 요구를 해서 정부에 올려놓았으니까 정부에서 이율 1%를 줄였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것을 지속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금년 안에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원될 수 있게끔, 저도 예결위 위원인데 이 계수가 올라오면 환영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환동해본부하고 농축산식품국은 자연스럽게 지사님이 답을 주셔서 국장님들이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질문부제 : 금강산 관광중단 이후 고성군 지원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예산지원 추진

예산 총액과 사업 전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음

또 한 가지, 한강수계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녹색자원국이죠?

국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주최국으로서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사업은 제일 발원지가 고성이죠, 한강 쪽에서는?

흘리지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아셔야 될 부분이 언제인가 지사님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연구하고 가능한 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했던 사항이에요.

한강수계사업으로 고성군에 들어오는 득이 없다는 겁니다.

맑은 물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발원지인 그 지역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한때 명태가 많이 났을 때는 알프스스키장 그 전체 농지가 명태덕장지였습니다.

1996년 이후 명태는 사라지고 알프스스키장도 존치하고 있다가 그나마 없어지고 나서 지금은 자구노력으로 피망하우스, 시금치하우스……10분만 더 주십시오.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초짜는 이래서 항상 초짜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고성경제를 한 뼘이라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강수계사업 쪽으로 해서 신소재 비닐하우스를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의 바람이고 꼭 좀 그렇게 해 달라고 빽 없는 의원한테 “의원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를 나가서 그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강수계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습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초선 의원도 도정질문을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꼭 좀 실현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삽입시켜 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질문부제 : 화진포 호수 이용 계획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화진포 관련 정책의 우순순위를 정해 추진

현행법규 등을 세세하게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오게 하는가가 우선이라고 보며, 그 대책을 세우고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푸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함.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사람이 마음이 비딱하면 자리도 비딱하다더니 바로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질문·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사님 잠깐 좀 나와 주시죠.

지사님, 경청해 주시고 답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본 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말 지사님의 속 깊은 뜻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지사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사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만 제가 꼭 답을 듣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화진포 호수 이용권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그래서 호수 이용권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정말 실무 국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고성군민이 즐겨 찾고 경제효과가 올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깊게 해 주십시오.

아실 겁니다.

여기에 현내면 이명철 번영회장님이 지사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명철 번영회장 잘 알고 계시죠?
이명철 번영회장은 고성군에서는 최문순 지사의 개국공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국공신에게, 원하는 선물이 다른 게 없습니다.
좀 하나 주십시오.
이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금년 안으로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저는 다음에 지사님한테 도루묵에 막걸리 한 잔 권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명파리 이장이 하도 답답해서 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저는 초선이라 이것을 하는지 몰라서, 이 편지를 직접 그분이 써서 “의원님, 지사님한테 꼭 읽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얘기가, 번영회장이나 최북단 민북마을의 이장이 하시는 말이 우리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애절한 사연이 있어서 말 한마디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합니다.”라고만 했더라도 군부대 욕은 안 할 텐데 이제 와서 군부대에서 뭐가 부족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도는 강원도 내의 군부대와도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님한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22사단장 내지 사고 지역의 연대장이라도 그 지역을 방문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전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도정질문인데 제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는 나중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동료·선배 의원님!
제가 웃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고성군민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간성 이북지역은 가로등만 껌뻑대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정적을 깨는 것은 강아지 새끼들이 짖는 소리입니다.
새벽에는 닭 새끼들이 짖는 소리 외에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다만 희망을 안고 살고자 하는 의욕에 저 넓은 동해바다를 마음껏 누비려고 새벽 3시에 어업인들은 발진을 합니다.

그런데 제약을 받는 것이 군부대로부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조업을 편안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어로한계선 이북지역을 가면 범법자를 양성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벌금을 뗍니다, 범법자라고.

환동해본부장이 잘 압니다.

앞으로 그런 어려운 어업인들에게는 계도와 교육을 시키되 행정선이 단속에서 어업인들이 경찰 벌금 받고 정지를 당하고, 우리 도 사업 중에 예산이 집중되는 수산시책사업들은 2년간 정지시키고, 그런 부분을 홍보 계도하는 데에 환동해본부장은 일조하시고, 마이크를 꺼서,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고성의 어려움을 만져주시고 한 번씩 국장님들이 그 지역에 내려가셔 가지고 군수하고 얘기하고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만 얘기하고 와도 누구 하나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꼭 좀 방문해 주셔서 지역구 좀 돌아보고 곳곳을 어루만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햇수로 4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10.2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신영재 의원 [새누리당, 홍천군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라꽃 무궁화의 고장, 건강·생명의 중심도시 홍천군 출신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에서 처음 도정질문을 하는 저로서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는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난 초선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부족하거나 실수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도정질문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나무라거나 크게 혼낼 만한 그런 이슈적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 긴장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 역사에 획을 긋는 큰일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올림픽 개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 안정적인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

정되는 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지사로서 자리에 계셨습니까?
아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감동적이고 소회가 깊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일을 취임과 함께 시작하시는 우리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참 복도 많으시고 영광을 함께 나누는 아주 의미 있는 지사직을 수행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강원도민들도 그날 감격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고 가슴 벅찬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결정된 지가 날을 세어보니까 3년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남아있는 기간이 약 3년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올림픽 개·폐회식 장소조차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도민들께 불안감을 주고 신뢰감을 상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역 간 반목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스피드스케이트장을 비롯한 일부 경기장은 아직도 설계조차하지 못하고 착공은 물론 공사 발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설 경기장 여섯 곳과 보완 경기장 두 곳을 포함하여 신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기장 여덟 곳이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방 언론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는 1년 2개월에서 길게는 2년 9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기를 단축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자칫 부실시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에 부족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 도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겠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에 아직도 매끄럽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의 상태가 보이는 것 같아서 다소 안정감은 듭니다마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바라는 대로 또 우리 강원도민이 염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10월 초 우리 지방지에 게재됐던 기사를 혹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10월 초인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대표 최고회의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올림픽 개최가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거 큰 일 났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강원도를 방문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강원도에서 해야 될 일을 정당의 대표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사님과 우리 강원도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감 추락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행사를 치르면서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 4개월여 정도의 기간 동안에도 모든 일은 우리 강원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치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문제가 되었던 빙상경기장, 특히 스피드스케이트장에 대한 설계 변경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나 논리가 잘 적용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 강원도와 그리고 올림픽조직위원회,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이 3개 기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주변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절실한 부분은 우리 강원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공감, 교감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해당 지역에서의 주민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주민들의 뜻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아침 출근길에 저희 광장 앞에 세워져 있는 올림픽 개최일까지의 카운트 상징탑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로서 1,207일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개최일까지의 상황이고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에 최소한 1년 전에는 테스트 이벤트를 거쳐야 됩니다.

테스트 이벤트를 하기까지는 이제 2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골든타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의 시기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개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준비과정이라고 봅니다.
준비과정에서 이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사님의 놀라운 정치력과 그리고 친화력으로 잘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더 말할 것 없겠지만 비개최 지역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비개최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혹시 발표되지 않은 또는 발표가 되었더라도 어떤 복안이나 대안을 갖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 문제로 인해서 여타의 지역에서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진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비용의 고통분담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해당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혜택을 받을 일이 있으면 함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개최 지역과 주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일자리 나눔 사업이라든가 또 지역 특산품에 대한 판매·판로 문제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가 함께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민들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대략 내년, 후년에 각각 1,000여 억 원씩 지금 안행부에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까?

살림을 하다 보면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기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능력이 있어야 되고 상환방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상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부채 상환한다는 것은 계획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그대로 세계잉여금은 세입이 좀 더 늘어났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지 못해서 남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절약해서 남겼거나 이런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것을 모두 부채를 상환하는데 쓰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계획성 없는 상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산에 의해서 상환액을 편성하고 또 혹시 그것이 모자라거나 여유가 있을 때 일부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 상환 방식을 전체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질문부제 : 기채상환 계획은?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매년 상환하는 방안 마련

조금씩 상환을 해 나가고 있으며 올림픽 이후부터는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어서 조금씩 살림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내년, 후년만 넘어서면 그 이후부터는 부채를 상환해 갈 역량이 있다고 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회자됩니다마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여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의 재편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서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또 지사님과 모든 공무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했고요, 그 서면자료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사립학교 네 곳을 포함해서 총 49개 학교가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병설은 아니지만 동일 구역 내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는 중·고등학교도 3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49개 교나 되는, 이 지역에서 통합 운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교육부와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대략 학교가 설립된 배경을 보니까 1960년대 초반이나 또는 1970년대쯤에 많이 생긴 학교들입니다.

처음에는 단설로 운영되다가 고등학교가 생기면서 병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분리해서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본 의원은 학교 목적의 설립과 또 운영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제가 조금 있다 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병설로 운영되는 것과 단설로서 각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설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개의 기관으로 단설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정말 귀하게 만들어질 때 교장선생님을 많이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설로 많이 추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운영된 것이 벌써 한 50년 이상씩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잘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교육감께서도 교육개혁 정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지금 시대에 맞춰서 반영되고 바뀌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병설로 운영되지는 않지만 동일 구역 내 단설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홍천, 횡성, 도계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학교 시설을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설로 운영된다고 하면 어떤 책임자, 관리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조금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단설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급식소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는 또 제척되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데는 우리 교육감께서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이전되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들은 계속해서 불편함과 부당함을 감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분리·이전돼서 옮겨갈지라도 학생들이 존재하고 학생들이 교육여건에 불편함을 갖고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리는 중복적인 투자문제 때문에, 향후에 이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보다는 다만 하루라도 학생들은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교육환경,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질문부제 : 학생들의 교육 여건 향상 방안은?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추진계획

분리·이전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새롭게 급식소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투자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듦.

다음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모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의 도민화 운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의 도민화 운동은 1995년도에 시행계획을 세워서 199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은 한 2010년 정도 이 조례가 마련되고 난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우리 18개 시·군에서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접경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 도민화 운동 관련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그리고 춘천, 홍천 이 지역은 군인들과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군인과 관련된 행사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인데도 또 이런 좋은 여건일 때 우리 강원도에서 도민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각 시·군에서 제도권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간부 위주의 사업 부분을 말씀주신 거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사병들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병들은 우리 지역에서 약 2년여의 군대 생활을 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만 이 병사들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소비자이고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선 시·군을 비롯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려면 공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기본 베이스에는 우리 지역의 인구늘리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우리 지역에 한 명 늘면 그만큼 교부세 산정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죠?

대략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1명당 40~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사람이 곧 자원이고 사람이 곧 힘입니다.

우리 지역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군인과의 관계,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도 잘 전파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 실업팀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시간에 많이 열기가 고조됐던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모두가 우리 강원도민을 위한 질문이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는 실업팀에 속한 선수가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강원도청 소속이 10개 팀, 또 춘천이나 원주·강릉 등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 33개 팀 정도 총 43개 팀 32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아시아경기대회 보시면서 눈에 익은 선수인데 강원도의 마크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제주도 또는 부산 여타 지역의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선수들이 우리 강원도 소속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메달을 딴 선수가 이번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의 소속으로 출전한 선수들 이상으로 많이 땄습니다.
전체 수가 아마 우리 소속 팀이 21개, 우리 도 출신 선수들이 한 26개 거의 한 50여 개 정도를 땄는데 전체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딴 수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체육발전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업팀 선수들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선수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좋은 예로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처럼 아주 유명세를 타지 않았을 때 일부 기업에서는 이분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투자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능한 선수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선수들이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육성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되시는 분들 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과 여론을 수렴해서 발전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선수들을 잘 훈련하고 관리하려면 훈련과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체육회관 신축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조속히 추진되어서 완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선수들의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선수들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체육회관에 대한 신축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선 시·군에는 아직도 실업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서너 곳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느 곳이라고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내에서 고루고루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강원체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실업팀이 창단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질문부제 : 강원도체육회관 신축 관련

답변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 : 조속한 완공 추진

실시설계가 10월 말 정도 되면 끝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임

다음은 강원도 내 지방도 공사 현황 관련해서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지방도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사가 필요한 지역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국지도를 포함해서 20곳 정

도가 공사가 시행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일부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5년에서, 사업비가 불과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진행된 사업은 그보다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한 200억에서 300억 되는 이 사업이, 또 공사의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업이 과연 5년까지 해야 될 사업인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사 기간이 적절치 못하다 보면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은 편리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상당기간 동안 편리가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방도 관련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 추진 계획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 자료 끝자락에 보면 사업비가 300억 정도, 250억 정도 소요된 사업 2개가 있는데 불과 종합 진도가 2%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만 했다는 겁니다.
한 300억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냥 점만 찍어 놓은 겁니다.
글쎄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특히 해당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제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지역에서 일정부분 사업비를 투자해서 쓰겠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사업이 반려가 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해놓으면 우리 도의 재정적인 집행에는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라고 드리지 않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그리고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의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당 지역에서도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공사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일선 시·군에서 그런 협조가 있을 때에는 물론 잘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관련해서 경제진흥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가지고 잘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년 동안 MOU 체결한 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43개가 되고 실제로 이전해 온 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MOU 체결한 기업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유치된 기업의 수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자료검토가 됐습니다.
향후에 MOU 체결한 기업, 그리고 MOU를 체결할 때에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이전되는 기업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관리하고 운영되는 지역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0분의 시간 동안 제가 준비한 도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자 했지만 의욕에 비해서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설명이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대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임기 동안 함께 노력하고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10.22)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출신]

오늘 돗토리현 지사님이 저보다 한국 말씀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시 한수를 들려드릴까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읊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를 보시면 서른 살에 암행어사가 되어서 백성들의 삶을 두루 살피게 된 정약용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쓴 애달픈 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시고 또 300만 우리 강원도민이 경청하면서, TV를 시청하면서 쉽게 미시령터널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해가 쉽게끔,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아직 모르는 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사에서 뉴스를 통해서 나갔지만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해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각종 언론보도에 엄청나게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특히 KBS에서 집중보도가 이루어졌었는데 보셨나요?

이번 국정감사 문제점도 숙지하고 계신가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전임 국장님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대체 미시령터널이 무엇인가를 해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4개월 동안 준비한 자료를 영상으로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편집을 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서 앉아서 편안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압력을 넣어서 협박에 못 이겨서 했답니다.
이것을 반영했으면 우리 강원도에서 단 한 푼도 안 내놔도 되는 것입니다.
이 협상을 지금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잘 보셨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벌써 영상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빨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본 의원은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았지만 볼 때마다 답답해지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정말 화병이 나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답답하지 않다면 우리 강원도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시령터널 영상에서는 재정의 블랙홀이라고 아까 표현했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시령터널의 건설은 애당초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기극이라는 얘기죠.
사업의 타당성 조사부터 잘못되었고 또 MRG, 최소수입운영보장제도 그것도 폐지되었습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끼워 맞추어 가지고 참 어이없는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참 이런 강원도의 무능력한 행정이 결국 자기 자본도 다 거덜을 내고 운영할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미시령터널이라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역사상 최고 큰 괴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분개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의 사안이 아니고 강원도 도민의 혈세를 100% 지원하는, 올해부터 22년 동안 지원할 것이 5,968억입니다.
자세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단답형으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요.
국장님께서도 잘 보셨죠?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의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료를 보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꼭 추진하실 것이죠?
혹시 아까 광주 순환도로나 여러 가지, 맥쿼리, 지하철 메트로 9호선 현지답사 가서 어떤 소송 사항을 보고 받거나 아니면 가서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부탁합니다.
최문순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적으로 섰습니다.
공적으로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노를 하더라도 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6,000억 원 도민의 혈세가 날아가는데 흥분할 사항이 아니시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흥분할 사항이 아닙니까?
965억을 투자하고 8년 동안 올해까지 961억을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우리가 도민의 100% 혈세로 지불해야 할 예산이 5,968억입니다.

6,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흥분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최문순 지사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2011년도에 취임하셨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세요.
2011년 6월 24일에 본 의원이 초선으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님 취임 첫 해에 도정질문하면서 저 도끼와 칼과 인형 두 개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첫 장 다시 돌려주세요.
그때 기억나시죠?
선물 받으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사진 좀 보세요.
지사님께서 열심히 하겠다고 90도로 저렇게 인사하는 모습 너무너무 저희가 보기 좋았습니다.
겸손한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된 게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도정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끼를 준 이유는 알펜시아,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들 모든 부조리 고리를 다 끊으라고 도끼를 선물했고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저 칼은, 출자·출연기관 강원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60~70% 이상이 전부 다 곪아 터졌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강원도 건전성 재정을 확보해서 강원도를 살려달라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저 사진은 하나는 여성 스마일이고 하나는 남성 스마일입니다.
강원도 300만 도민이 저 인형처럼 정말 행복, 정말 명품 강원도, 행복 강원도,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달라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앨범 부탁합니다.
강원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동서고속도로 개통 변수를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그 당시에 노승만 박사입니다.
지금도 강발연에 근무하고 계시죠.
1999년 민자유치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00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강원도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발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그따위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6,000억이 날라 갑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뻔뻔하게 인터뷰하고, 왜 여태 강원도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령터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4년이 지나서야 이제 하는 척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따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표 좀 한번 봐주세요.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아까 83%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죠?
저 도표를 보시게 되면 1999년도에 한양대에서,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서 처음에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빨간 줄 선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한양대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 용역한 것은 계속 증가한다고 올라갔고 1999년도 아까

강발연에서 난 것도 계속 증가한다고 나왔습니다.
2008년도 실시협약 자본 재구조할 때 이 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때도 엉터리 용역을 발주 받아서 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저 밑에 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8배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 2014년 7월에 우리 강발연에서 다시 연구용역을 해본 결과 거의 8배 이상 급감한다고 자료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듣고자 하는 답변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정하시죠?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 인정 안 하십니까?
자료 2번 부탁합니다.
2003년도에 기획예산처 고시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MRG 보장 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장률도 90%에서 70%대로 낮추라고 했어요.
이 자체도 강원도에서 싹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강원도가 무능력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 공무원, 강원도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지사님께서 깊이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약에-제일 밑에 보세요.-교통량이 50% 미만일 경우는 MRG 재정 지원 자체가 없게끔 기획예산처 고시로 지침이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대로 시행을 했었으면 우리 동서고속도로가 이번에 개통되게 되면 17% 통행량밖에 안 됩니다.
100%에서 17%.
83%를 우리가 전액 물어줘야 되는데 1원도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무시하고, 특이사항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이 무시해 버렸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이 자료를 정말 2년 동안 구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일 밑에 보세요.
2009년 MRG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정부에서 폐지된 것은 2006년도에 정부정책은 싹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공사는 2009년도에 폐지명령을 내려서 2009년도에 싹 폐지되었습니다.
MRG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없애버리라고 해서 없앤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수천억을 강원도에서 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도 개선 안 하고 지침까지 다 내렸으면서도 하나도 적용 안 하고 6,000억을 눈뜨고 지금 도둑맞게 되었습니다.
이것 분노 안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협상이 아니고 정말 차린 상을, 우리 강원도에다가 정부에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이 차린 상을 발길로 차버린 것입니다.
먹으라고 갖다 준 상도 못 받아먹고 발길로 차버린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사님, 맞죠?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어이없습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에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미시령터널 공사가 한창이던 2003년도에 KDI 동서고속도로 분석사업들이 여러 번 나왔고 또 2014년도에 김재진 박사가 이번에 낸 연구서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3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질문·답변을 한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고의적인 배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고의성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어떤 특정지역의 편리를 위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어느 지역의 편리를 위해서 6,00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사기극을 당하고 하겠습니까?
최문순 지사님은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문순 지사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은 현명하시잖아요.
자, 자료 3번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8년간 미시령 통행료와 MRG 수입액을 합쳐봤습니다.
961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총 투자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964억 원을 투자하고 961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전년도까지.
그래서 결국 3억 빼놓고 다 원금 챙겼다는 얘기죠.
벌써 다 그렇게 챙겨갔습니다.
실질 교통량도 지금 나오죠?
추정교통량, 실제 교통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분명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재 미시령터널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시 터널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했던 책임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해야 됩니다.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40억 이상이 지출되고, MRG로 지원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그야말로 문밖으로 나가는 문턱에 톨게이트를 만든 겁니다.
지역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인근지역에 사는 속초, 양양, 고성, 인제 4개 시·군 지역민들은, 거기는 통로입니다, 통로.
문 밖으로 나가려면 어차피 그 길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왜 그렇게 헤아려 주지 못합니까?
그다지 바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지사님 답변 잘못하시는 거죠.
자료 3-1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 약 2,300억을 지원해야

됩니다.
코오롱 외 5개 회사에서 미시령터널에 964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놓고 2년 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2,300억 원에 팔아먹고 먹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64억 투자하고 2년 만에 2,300억에 팔아먹고 먹튀를 했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될 몫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런 재협상을 통해서 자본사업 재구조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버리고 2008년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참 피가 끓습니다.
저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업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거가대교가 4.7%고 용인 경인철이 4.97%인데 저것도 비싸서 다시 재구조를 했습니다.
미시령터널은 실제 수익률이 9.43%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폭리, 정말 사채놀이를 하고 있고요, 금리도 1대 주주가 자회사에 260억을 대출해 주고 최고 65%, 이자제한법, 대출업법 대통령령으로 30%와 39%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위반하고 65%까지, 공기업의 부도덕성 이것은 규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 자료 부탁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민자사업 통행료 요금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연 미시령터널이 얼마나 비싼가, 아니 터널 왕복 3.6㎞입니다, 2개가.
거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얼마냐 하면 6,600원입니다.
들어가는데 3,300원, 나오는데 3,300원, 6,600원입니다.
춘천고속도로 아시죠?
67㎞ 고속도로와 터널 49개를 왕복하게 되면 편도 6,500원에서 주민, 이번에 할인해서 400원 감액 조치했죠?
6,100원입니다.
67㎞ 고속도로와 터널 24개를 뚫고 나가는데 6,100원입니다.
1.8㎞ 들어가는데 3,300원이에요.

왕복은 6,600원이고요.
그리고 ㎞당 요금을 한번 보세요, 894원.
세 번째 보게 되면 만월산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 미시령터널과 공사비가 거의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942억.
거기는 ㎞당 단가가 279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모든 공사와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도대체 도정을 어떻게 꾸려 가느냐 이거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4번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4번에 보면 재구조화 완료, MRG를 만약에 SCS 최소운영비 지원, SCS로 변경할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가 득을 보는 게 3,037억을 득을 봅니다.
지금 협상을 했죠?
대구의 범안로가 협상이 끝나서 2,010억을 벌었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재협상을 통해서 5조 3,579억의 절감효과를 봤고요, 원적산터널 1,428억, 만월산 터널 2,067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MRG, 보전료를 지원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MRG를 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협상테이블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군데 보면 소송을 진행 중인 게 서울메트로 9호선, 박원순 시장이 최초에 당선되어서 오세훈 전 시장이 벌여놓은 메트로 9호선을 협상 파기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3조 1,92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박원순 시장의 최고의 치적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용인경량전철, 1조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저게 재협상을 통해서 계약파기를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주 제2순환도로, 아까 방송에 나왔죠?
지금 4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가는데 4년이 걸립니다.
급급하지 않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 이후에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소송하는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광주에서 이겼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광주가 이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3심, 상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마지막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저렇게 다 승소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최순문 지사님, 지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사님이,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 5번을 부탁합니다.
MRG에서 SCS방식으로 바꾸어 가면 3,03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절감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바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바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바쁩니다.
급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사님, 당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치단체장인 최문순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꼭 하실 거죠?
그래서 지금 하실 거죠?
강력하게 하실 거죠?
최문순 지사님 다시 한 번 300만 도민 앞에서 약속해 주세요.
정말 최문순 지사님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해 주실 거죠?
조용히 해서 되겠습니다.
도청 앞에 와서 꽹과리 치는 사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더 빨리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사님,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6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두 시간짜리 자료라서, 실시협약 문제점 해결방안 법률적 검토를 본 의원이

해 봤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법인에 의뢰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6-1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자투자법입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 여기 45조 1항에 의해서 1항, 2항, 3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상회복 명령과 이익 귀속 명령, 실시협약에 대한 잠정적 유보처분이 있습니다.
6-2번부터 갑니다.
45조를 보겠습니다.
실시협약이 처음부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5조 처분에 의해서 위반한 경우 강원도는 70억원에 대해서 중지, 변경, 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8-3번 부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을 위한 처분이 있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일반적인 공익처분권과 동일하게 강원도민과 통행하는 일반 국민을 위하여 사전변경을 이유로 공익처분권을 강원도에서는 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실시협약의 중지, 변경, 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처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소송과 행정처분 문제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행정처분을 찾아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행정처분을 내려서 문제를 야기 시키면, 그리고 MRG는 우리 강원도에서, 도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의원님들이 삭감을 시킬 겁니다.
시켜주면 우리 도에서는 MRG를 취급 안 하니까 아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소송을 할 겁니다, MRG 달라고. 맞죠?
MRG 취급을 안 하니까 강원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1. 질문부제 : 미시령터널 관련 재협상 의지는?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이기는 방향으로 추진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이기느냐 지느냐로 귀결됨.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명분을 쌓아야 되고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음.

시간이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지사님 한 분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지사님의 결정입니다.

지사님이 반드시 저 일은 내가 정말 한 목숨 바쳐서 하겠노라고 도민 앞에 약속하면 그 일은 당연히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100%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게 30분짜리인데 4분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입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 노란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다 가정용 소비자 요금이 4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인천에 비해서는 거의 6배나 비싸고, 권역으로 볼 때 거의 다 대도시에서는 통합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전체가 하나의 요금체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원참빛 원주·영동하고 평창이 있고 총 6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2개가 빠졌습니다.

지사님,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시켰습니까, 인하시켰습니까?

지사님이 결재하셨습니까?

전국에서 최고 비싸고 서울 대비 4배나 비싼데 이걸 또 인상을 시켜 줍니까?

2. 질문부제 :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이유는?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제도적인 부문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권역을 세분해서 나누어서 편차도 많고 가격이 비싼 것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음. 그것도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 나가면서 가격을 내리기 위한, 큰 대규모 사업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가격이 내려감.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지사님, 원론적인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이 이 아까운 시간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원도민이 피 같은 세금을 내가면서 가스 값을 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그야말로 가스요금이 아까워서 전기장판을 안방에 놓고 전기장판에 모여앉아서 오순도순 한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한 달 동안 때도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도민은 아파트에서 30~40만 원을 물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을 지사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경제부지사님,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강원도시가스하고 참빛도시가스, 2개 도시가스에서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를 이어서 그 자식, 10대, 20대, 100대까지 이어서, 계약기간도 없습니다, 도시가스.
강원도하고 협정서에 계약기간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지사님, 3년 전에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을 모르셨잖아요?
원론적으로 지금처럼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가스, 두 업체 간 담합행위가 있다고 분명히 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파헤쳐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고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서 파헤치면 나옵니다.
나온다고요.
안 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푼다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의혹제기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하세요.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공급비용의 전국 도매 요금을 보시면 908원입니다.
전국 공히 똑같습니다.
도매 요금은 전국의 도시가스요금이 똑같은데 그 주 관, 주 배관 아시죠?
주 배관은 강원도가 멀다고 해서 주 배관 값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강원도까지 무료로 오고 제주도까지 무료로 배관이 가는 겁니다.
그 주 배관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그 배관만 2개의 도시가스에서 설치하고…….
그것을 강원도민한테 가스요금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공급비용으로 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논리입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4년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파헤치겠습니다.
파헤치고 나서 그때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 말씀을 우리 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김성근 의원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어느 누구 특정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모든 300만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지불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더욱더 파헤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이 부분은 최문순 지사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잘못된 모든 일들을…….
최문순 지사님께서 이제 싹 제대로 알권리를 알려드리고 마무리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10.22)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강청룡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4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강청룡 의원입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회에 등원할 때마다 도청광장 앞에 서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D-day 시계탑을 보면서 등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시계탑의 숫자가 1206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평창동계올림픽이 1206일 남았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이 시계탑의 숫자를 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이 시계탑 숫자의 의미가 저희 9대 도의회 임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시작이고 저희 도의회 임기는 2018년 6월 30일이므로 저는 이 시계탑의 숫자를 보면서 의회 의원으로서 충실하고자 하는 본연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본시 의회 의원이란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한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회 의원의 본연의 임무라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고 출신 지역이나 선거구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지난 6·4선거에서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의원들 간에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임기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의회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권혁열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의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과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사전 질문요지처럼 강원도립대학총장님,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장님, 농업기술원장님, 농축산식품국장님에게 간단히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나와주십시오.

제가 눈이 아주 안 좋은 것 아시죠?

총장님,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도립대학 발전과 학생들 취업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대해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도 잘 몰랐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의 2014년도, 올해 총예산이 얼마죠?

그것은 총예산이고 그 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일반적인 경상비를 빼고 자체사업 예산이 2014년도에 얼마였죠?

그것은 내년도 것이고, 올해요.

질문서 요지 다 주고받았는데 왜 뒤의 것을 읽으세요, 앞의 것을 읽어야지.

올해 자체예산이 8억 얼마죠?

요지서 다 주었고 다 있는데 뒤의 것을 읽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도립대학의 예산이 본청 한 국 한 과의 예산만도 못 해요, 8억여 원 정도.

이 예산 가지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 취업률이 어쩌고저쩌고, 대학 구조조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경쟁력을 갖춰라 요구하기도 진짜 민망합니다.

8억 갖고 경쟁력이 갖춰질까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실링을 받으셨는지요?

그중에 인건비, 경상비 빼면 자체사업비…….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반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8억여 원에서 4억이에요, 도립대학.
총장님, 도립대학 졸업생들 평균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교육부에서 조사한 전국 취업률 1위 대학 아시나요?
거기는 취업률이 얼마나 되죠?
89.5% 정도 되죠?
저도 알아보니까 교육대학은 수업을 이론과 실습을 5 대 5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것 같은 신입사원, 일전에 방송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졸업생들 취업률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도립대학에 업무보고를 받고 주변에 확인해 보니까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있어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도립대학에 실습선이라고 있죠, 학생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실습을 하는 실습선.
몇 대가 있죠?
그 2대가 다 얼마나 됐어요, 선령이?
그러니까 한 대가 32년 9개월?
총장님 올 2014년도 대한민국 최대 화두가 뭔지 아시죠?
안전이에요, 안전.
화두가 안전이라고요, 안전.
제가 거두절미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세월호도 맞습니다.
세월호도 맞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2014년도 최대의 화두어는 안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32년 넘은 배 바꾸셔야죠?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뭐만 하면 동계올림픽이야.
아니 동계올림픽하고 애들 교육하는 것하고 무슨 사이가 있다고…….
아, 바꾸었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이따가 지사님한테 확답을 받아드릴게요.
세월호 관련해서 강원도의 소중한 소방직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목숨을 잃었고 소방헬기 구입 문제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들이 교육하는 실습선입니다.
32년 됐어요.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교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요지서를 드린 대로 어떻게 구입하실 계획인지 읽어주시죠.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실습선 32년이 넘었습니다.
반드시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것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원장님처럼 현장 곳곳을 다니는 관계 공무원을 보기가 흔치 않았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농업기술원과 우리 원장님에 대한 각종 루머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사실도 들어와 보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소신껏, 그리고 중앙부처의 인맥을 활용하셔서 보다 많은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백년 앞을 내다보는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작년에 발표하신 것처럼 춘천 서면 서상리·월송리 일대로 이전하기로 언론보도까지 다 되었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없었던 것이 8월에 농림수산위원회 강릉 연찬회에 오셔서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보고하시면서 농업기술원이 현 부지에서 춘천 서면 서상리·월송리 일대가 아니라 춘천시 신북읍으로 이전을 해야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왜 이렇게 갈팡질팡합니까?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미 제가 질문요지를 드렸으니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상리·월송리 일대에 우리 기술원에서 설명회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소리·소문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술원 이전 문제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갈등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으시

면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 이전 문제가 우리 강원농민들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고 예산도 당초 97억에서 47억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포함하는데 제가 기술원에 몇 번 가 봤지만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TF팀이라도 구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기술원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도립대학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립대학 예산은 내년도가 올해 대비해서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사업비가 8억도, 글쎄 나는 그 금액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4억으로 줄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내년도 예산을 본청에서 실링을 받으셨을 때 올해 2014년 대비해서 얼마를 받으셨어요?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올해 대비해서요.
줄어요?
농업 예산이 또 줄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거기도 줄었고, 다음 환동해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피서철이면 피서철 관계로, 그다음에 바다에 녹조현상이 나타나면 바다 현장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환동해본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할 일 많으시죠?
돈이 없으실 거예요.
간단히 끝내자고요.
환동해본부는 2015년도 예산을 얼마나 실링을 받으셨어요, 2014년도 대비, 퍼센티지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또 1.79% 줄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도 제가 의원이 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농업인과 관련해서 행사장이나 현장에서 항상 발로 뛰는,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농업이 힘드신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가 지금 치아 교정 중이라서 발음이 좀 정확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지서를 아주 자세히 냈습니다, 발음이 정확치 않아서.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과 관련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아주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WTO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FTA 등등 농어민들이 힘듭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면 국장님을 비롯한 농축산식품국 직원들도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공부를 하고자 지난 의회 속기록을 다 본 사실은 아시죠?
그리고 가끔 전임 농림수산위원회였던 위원님들한테도 질문을 드립니다, 물어보고.
그런데 전임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농어업단체 회장님도 그렇고 꼭 하나 물어봐 달라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제236회 농림수산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경 당시에 농림수산위원회가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10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로 예비심사를 거부한 적이 있죠?
그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얘기하지 마세요.
97억은 저도 기록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숫자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97억은 얘기하지 말고 100억이 다 안 됐죠?
그러면 그것은 물 건너간 겁니까?
100억 증액 물 건너간 겁니까?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은 저도 알고 100억이 물 건너갔느냐고요.
지사가 약속한 100억이, 도민들하고 농어민들하고 약속한 100억은 물 건너갔는지?
어쨌든 그 1회 추경이 6·4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좀 그랬는데 제9대 의회가 새롭게 들어와서 우리 권혁열 위원장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어촌 관련 예산, 농어민 관련 예산은 지금 가지고는 안 된

다고 우리 위원장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9대, 제8대,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의회도 연속성이 없습니다.
 9대 의회가 되었으니까 강력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반영된 부분을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은 2015년도 예산이 앞에 두 분의 총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원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얼마나 서 있죠,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퍼센티지로 몇 %예요?
 거기도 3.7% 감하죠?
 저기는 반 토막이 났고 줄고 줄고 다 줄었죠?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는 당초예산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원종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장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원종장도 기술원 못지않게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원종장 이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장도 이전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종장도 가끔 갑니다.
 가끔 가는데 기구 및 정원에 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원종장 산하에 답작, 전작, 잠사・곤충, 옥수수라는 4개 담당이 있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요.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장장님이 4급이고 담당이 6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도 있나요?
4급 다음에 바로 6급으로 가는 조직도 있나요?
좀 바꾸셔야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느낀다, 검토한다, 제가 의정활동을 조금 해 봤는데요,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 중에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고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아주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바꾸어야 돼요.

국장님 밑에 바로 5급이 앉아서 국장님 수발한다고 해 봐요.
공무원 할 맛나겠어요?
같은 생각이죠?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종장은 제가 알기로는 1947년 4월 1일 강원도령 제8조에 근거하여 우두동에 설립하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원종장이.
지금도 원종장에 가면 “종자는 생명이다”, “우량종자의 산실”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어와 중요성에 비해서 시설이나 장비는 완전히 고리타분한 아주 옛날 시설이에요.
저도 봤으니까 맞죠, 당연히.
국장님, 원종장이 산하기관 맞죠?
직급도 직급이지만 원종장을 이전하는 것은 장기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당장 시급한 대로 시설이나 인력보강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국장님, 매번 행사 때마다 농축산식품 관련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남들은 같은 편이라고 하는데 저는 짜장면도 한 그릇 못 얻어먹어봤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끼리 짜고 치는 줄 알잖아요.
조용히 불러서 제 얘기를 가끔 들으셔도 될 거예요, 지사님.
저는 3일간 도정질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의원님들 공부 많이 했어요.
PT도 갖다 하고, 어제 우리 김성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와서 잠깐 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집약적인 게 올림픽 문제, 그렇죠?
올림픽 문제하고 또 하나 조직사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저도 원고의 상당량이 농어촌 문제지만 농어촌과 농어민, 우리 명파리 형님이 계십니다.

어제로 김용복 의원님께서 별명이 명파리 의원님이 되셨는데 명파리 같은 지역 진짜 재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3일간 도정질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지사님이 좀 쉬신 것 같아요.

물론 정신적으로야 스트레스를 항상 받으시겠지만 어쨌든 육체적으로, 3일간 다른 데 못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사님 일정을 보면 진짜 체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외로, 전국으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을 연일 강행군하는, 저는 지사님의 일정을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합니다.

선거 때보다 더 바쁘세요.

대단하다고 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같은 편이지만 지사님은 지사님이시고 저는 의회 의원입니다.

각자 처해진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본분에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사님의 구호처럼 오직 강원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의 체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 자신도 부럽지만, 지사님 식단이 주로 채식을 하세요, 아니면 육식을 하세요, 아니면 회를 좀 잘 드시는지?

어쨌든 채식도 하시고 육식도 하시고 다 하시죠?

제가 왜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을 했느냐면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만고불편의 법칙 중 하나가 반드시 사람은 먹어야 산다, 그게 만고불편의 법칙이에요.

밥을 먹든 죽을 먹든 회를 먹든 삼겹살을 먹든 뭐를 먹든 반드시 먹어야 사람이 산다는 것인데 먹는다는 것, 먹거리, 그것이 바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문제는 사람 본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농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 강원

도는 최북단 고성 명파리부터 시작해서 안 힘든 데가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춘천~속초, 원주~여주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현안들이 강원도에서 매우 중요한데 지사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농어촌과 농어민들의 문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도립대학총장님만 빼놓고 나머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전부 마이너스예요.

뭘 심사하라는지 저는, 의회주의자시잖아요, 지사님, 국회에도 계셨고.

의원의 맛은 예산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깎을 예산이 없고 예산이 모자라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부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질문부제 : 농수축산분야예산 감소 사유는?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농수축산분야 전체예산은 증액 편성됨

각 국ㆍ실별 한도예산, 자체 편성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농수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다 10%씩 깎아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고요, 전체예산은 증액이 되었을 것이고 나머지 주요사업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아마 증액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아서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에 실링이라고 해서 자율편성예산이라고 "너네 얼마 내에서 예산 편성해." 이렇게 해서 준예산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너네 이것을 갖고 내년도 예산 살림살이를 짜봐." 했는데 그게 전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계올림픽입니다.

동계올림픽인데…….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사업비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는 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들 다 들으셨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가 심사하겠지만, 하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기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농림수산 분야 예산을 깎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국제음악제 한번 하면 20몇 억씩 깨지고 뭐 한 번 하면 17억씩 깨지고, 그 예산만 가져도 농림수산위원회 예산 굉장히 많이 커버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음악제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일회성 행사,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저도 예결위원회의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제 체질상 여당은 못 합니다.
이해하시고요, 야당 합니다.
만약 예산의 실효성을 따져서 타당성이나 목적성이나 합목적성에 어긋나면 전부 삭감합니다.
삭감해서 몽땅 다 농림수산위원회 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서 농림수산 예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을 왜 10% 증액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가 증액하는 이유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농림어업 분야, 우리 의원들도 지금은 이렇게 웃으시지만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최소한 10% 정도-인건비, 경상비를 빼고-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왕 지사님 나오셨으니까 10% 정도 증액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6·4선거 때 트레이드마크가 감자하고 도루묵이었죠?
6·4선거 때 저도 지사님의 찬조연설을 했습니다.
했고 선거 때 감자 팔고 도루묵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당선되셨는데 감자 값하고 도루묵 값은 주셔야죠, 선거 끝났으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은 절대로, 삭감이 있거나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을 경우에 차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거부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제가 같은 편이니까 사전에 소스를 드리는 겁니다.-문제가 있을 겁니다.
전적으로 책임은 지사님이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농어업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을 결정하실 때 주로 어느 분들한테 조언을 들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결정을 하시는지, 농어촌 관련해서 정책부분에.

고윤식 국장님 조만간 나가실 텐데요. 그러면 그다음은 누구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지사님한테 처음으로 서면질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서면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농림어업 분야에 정책보좌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 겸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답변이 묘하게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관계 국·과장님들이 유능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농림어업 분야 관련해서 특별보좌관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극적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라니까요.

농림어업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은 내년 정도부터, 왜냐하면 제 정보에 의하면 11월부터 도청 또 시끄럽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FTA나 우리 농어업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농림어업 분야에 정책보좌관은 반드시 신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서 요지를 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인쇄과정에서 좀 빠져서, 자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니까 요지서에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농림어업 분야 정책특별보좌관하고 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서면질문으로 뭘 물어봤느냐면 2009년도부터 2013년, 5년간의 전국 자살 현황과 강원도민의 자살률, 그중에서도 강원도 농민·어업인 자살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자신도 잘 몰랐지만-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2009년도에 강원도민들의 고의적 자해, 고의적 자해를 자살이라고 표현한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도에 강원도민 65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672명이 자살했습니다. 2011년에는 68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강원도민 58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고의적 자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살현황, 제가 자세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못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자살한 숫자 중에 우리 농민·어업인들이 얼마나 자살을 했나 알아보고 싶었는데 통계학적으로 전국 단위의 농민·어업인들의 자살 숫자는 있어도 강원도 건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방신문-9월 24일자입니다.-기사내용을 보면 2013년도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 발표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87명이었어요, 2013년 작년에.

하루 1.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이 수치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을 하면 강원도에서 자살하는 숫자가 하루에 32명이라는 뜻이에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가 자랑스럽게 1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만 1위를 했나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만 1위를 한 게 아니에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당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여기도 강원도가 전국 최고예요, 자살률이.

지사님, 지사님의 도정구호가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입니다.

도정구호가 무색합니다.

자살률 전국 1위가 우리 강원도예요.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는 차치하고라도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방신문을 보니까 지사님이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지셨다고 하는데 강원도에 전문화된 자살예방시설 현황과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2. 질문부제 : 전문화된 자살예방시설 현황과 특단의 대책은?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전방위 계획 수립

깊이 들여다보면 별 게 아닌데 1위라는 숫자가 오래 계속되면서 강원도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 같은 인식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다만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다른 시도보다 많은 것은 아님.
똑같은 시도를 하는데 우리는 병원이 멀고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도 사망자 숫자가 높은 것처럼 사망하는 율이 높은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님,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자료설명은 안 하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자살하는 율이 연령별로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조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도내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춘천에서 모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한 달여 사이에 어린 목숨을 끊는 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진정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반드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생들 문제를 비롯한 교육 전반에 걸쳐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고의적 자해, 일명 자살 이 문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작금의 도의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인정하십시오.
지사님의 오직 강원을 위한다는 철학과 소신은 반드시 강원도의회와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도의회가 개원되고 도와 의회의 관계정립을 보면서 아주 여러모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정무부지사 문제도 그렇고 특별보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근자에 강원통합브랜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통합브랜드 문제는 지사님, 요즘 의회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원들끼리 하는 말로 아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데 왜 안 좋으냐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최소한의 시늉이라도 해야죠.
지금 아주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든지, 이게 뭡니까?
통합브랜드 여기저기에서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심기가 불편한데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하고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의회 결정권에 도정이, 집행부가-지사님은 아닐지 모르지만-도전하는 행위예요, 제가 느꼈을 때.
답변은 제가 조금 이따가 들을게요.

그래서 저는 정무부지사 문제나 아니면 특별보좌관 문제, 통합브랜드 문제 등 아주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전에 도의회와 스킨십을 강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맙습니다.
어쨌든 주변의 참모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보다 더 의회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의원들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제발 작금의 의회현실을 실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지사 주변에 누가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직언하는 참모나 부하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지사님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자들은 혹시 없는가, 연일 살인적인 일정으로 국내외를 발로 뛰며 땀으로 적시는 우리 지사님을 홀로 계시게 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때 우리 강원도청에는 지사님만이 홀로 계신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사님, 시간이 되면-제가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한번 들어 보실래요, 도청 3인방에 대해서요.
도청 3인방 아시나요?
이것은 공식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이 워낙에 지사님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가 지난 선거에 내세운 구호가 ‘오직 강원’이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물론 과정, 방식 모두를 ‘오직 강원’에 두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도민들은 이런 최문순 후보에게 ‘그래. 한 번 더 맡겨보자.’라며 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선에 최문순 지사가 정파를 떠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쟁을 하지 않고 양양국제공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올림픽특구 등 민간부문에 힘을 쏟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했던 1기 도정 인사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의사도 피력했습니다. MBC사장 시절을 예로 들면서 깊이 간섭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공직사회가 민관과 달리 피동적인 구석이 많아 인사부터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내내 도지사로 불리며 도청 안팎에서 비하 당했던 과오를 씻겠다는 의지를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참에 최 지사는 그동안 도청인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가며 인해장막을 쳤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근거리의 인사, 3인방 소리를 듣는 이들부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도청인사가 혁신되는 것이고 도청직원들도 인사를 수긍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는, 즉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리는 몰지각한 공직자부터 곁에서 내치라 이 말씀입니다."

지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좀 들으셔야 돼요.

지사님이 3인방이 누군지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하시죠.

아, 이 기사가?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십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아시니까.

모르면 어떻게 물어볼까 써 왔는데…….

이것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들으셨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간곡히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지사님의 스킨십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얘기할 때 100만 불짜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100만 불짜리 스킨십이라고 했는데 지사님,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십시오.

지사님, 의원들에게 협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의회와 의원에게 스킨십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고를 대폭 수정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저의 제9대 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3.18)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구자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제4거구 출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42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는 물조차 나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급수대책이라든지 주민지원 활동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다가오는 농번기에 농민들께서 시름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점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씩 돌아보는 기회를 갖곤 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속성상 오라는 데도 많고 갈 곳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주요 책무인 도정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서는 어떠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앞에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집은 그간 짬짬이 메모도 하고 관심을 갖던 분야를 나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졸작입니다.
오타가 있고 문법도 안 맞고 한데 나름 며칠간 밤을 새우고 준비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

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과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왜 유치하려고 했으며 그리고 유치 이후에 강원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써 봤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후에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투입하는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정한 것인가, 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과정에서의 미비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 강원도가 더 발전적인 그런 강원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순서는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 경제부지사님, 지사님 순서로 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선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국가직 공무원이시죠?
강원도에서의 재직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부지사께서 동계올림픽본부를 비롯한 강원도의 핵심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컨트롤타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부지사께서는 현재 강원도에 근무하지 않고 계신다면 중앙부처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중앙부처에 계신다는 입장으로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논의되고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유치과정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이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도정질문 동영상 자료라든지 의회의 속기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지금 그것을 여기서 틀지는 않겠습니다.-퇴직한 선배 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당시 김진선 지사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펜시아 조성사업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알펜시아가 문제가 되면 강원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강원도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답변하시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분명히 있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펜시아 부채로 인해서 2,154억 원의 이자를 냈습니다, 맞죠?

대략 그 정도 됩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8,982억 원의 순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분양률이 36%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림픽이 유치되면 분양이 한방에 끝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당시 강개공 사장도 그랬고 김진선 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도 전 집행부에서 알펜시아 조성사업을 아주 낙관적으로 관망했듯이 그렇게 관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료집에 예산 투입현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나오고요.

지금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이쪽에서는 2017년도까지 평가액 3,973억 정도의 강원랜드 주식을 전량 매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도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고 있죠, 계획도 있고?

아니,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강원도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저는 정말 알토란 같은 주식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조성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액수가 2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결국은 강원도민들이 사용해야 할 그런 예산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악순환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펜시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유치과정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에 재설계 부분이 일단락됐다고 해요.

지금 1,129억에서 931억으로 198억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감리비용을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120억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이라든지 아이스하키 I 경기장이 철거를 전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6개월 정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체 규모에서 120억 정도를 절감하면 사실 조족지혈(鳥足之血)이죠.

12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큰 틀의 범위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이것을 가지고 6개월 정도 앞으로 못 가고 서로 논란만 거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왜 못했나 하는 의구심도 던지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바입니다.

작년 12월 8일이죠.

IOC에서 어젠다2020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IOC에서 한일 분산개최, 해외 분산개최 얘기가 나왔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아예 검토를 안 하셨었어요?

아니, 부지사님, 제가 주로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객관적이라고 보는데- IOC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분산개최의 몫은 개최지인 평창의 몫이라고 했어요.

그게 조직위의 몫인가요?

아니, 조직위에서 강원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발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아예 검토를 안 하시고…….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민족적 감정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계속 유지

된다고 봅니다.
IOC에서 어젠다2020을 발표하고 해외 분산개최를 주장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개최 도시의 경제성, 사후관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최지 중심의 효과 그리고 비용절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한 것인데, 저는 한일 분산개최를 이렇게 봤습니다.
IOC에서는 동계올림픽 종목 하나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던져 주고 2020년 하계올림픽을 평창과 교환하는 형식도 제안했고요, 매몰비용 1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평창과 강릉에서-우리나라가 협상을 잘 해야겠지만-2개~3개 종목의 하계올림픽이 열릴 수 있다면 평창과 강릉은 동·하계올림픽이 열린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로 평가받고 그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예 검토조차 안 하고 일관되게 불가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이익이었을까요?
슬라이딩센터를 하나 주고 예를 들어 태권도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우리 강원도의 올림픽 메달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으로 평창이나 강릉에서 2020년에 올림픽이 다시 한번 열린다면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열기도 잘 올라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열기가 2020년까지 계속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철거로 설계 중인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도 태권도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노력조차, 시도조차 안 하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아주 이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원도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현재 일고 있는 논란거리 이런 것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협상을 해서 진전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일관되게 검토조차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 9월이면 진천에 동계선수촌인가 준공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조직위원회라든지 문체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IOC에서는 어젠다2020을 발표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올림픽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 입장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이것을 좀 강하게 주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홉 분의 강원도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전형적인 사례 아닙니까?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동계선수촌을 강릉이나 평창지역에 배치하면 국가적인 예산절감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가 과거의 역사에서 올림픽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여수 엑스포, 영암 F1, 그리고 해외사례로는 나가노올림픽, 밴쿠버, 소치,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강원도는 과거의 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참 답답한 심정이고 그런 과정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상임위에서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강원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성공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명시하는 미국의 레이크플래시드라든지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 이런 지역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효과적으로 경기를 치른 지역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얻을 것은 무엇인지 챙길 것은 무엇인지 부지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질문부제 :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계획은?

답변요지 (행정부지사 김정삼) : 과거사례 확인을 통한 최적의 대안마련 추진

사후활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사례들을 전부 수집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음.

다만 경기장 시설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다음은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전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서 뵙자고 한 이유는, 지금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면 참 좋은데 보니까 시간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 6분~7분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강원도가 주인 입장에서 철저히 강원도의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제가 2012년도 12월 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신만희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당시 신만희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개·폐회식장과 관련되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공직자가 아니라서 오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하신 전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신만희 본부장께서는 조직위에서 예산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정부에서 50, 강원도 25, 조직위 25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 스키점프경기장에서 개·폐회식을 열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문체부나 조직위에서는 대회의 필수시설로 본 것이 아니죠?

보조시설로 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폐회식장이 옮겨지면서 필수시설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회 직접 관련 시설, 필수시설.

봤는데 다만 시행령상 개·폐회식장은 대회 직접 관련 시설이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폐회식장 만큼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원율을 결정해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폐회식장 이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던 바가 있지만

적어도 알펜시아, 조금 전에 부지사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도 현재 알펜시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형이라면 왜 그것을, 고원훈련장인가요?
그쪽으로 옮기는 데 강원도가 동의를 했느냐.
물론 타당성은 다 이해합니다.
진입로라든지 관중석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드파일에 명시되어 있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IOC위원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여기가 개·폐회식장이라고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강원도가 계속 밀고 나갔어야 된다.
원장님,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사람들이 치르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경기장과 강원도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직위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 보니까, 정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왜 강하게 어필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왜 끌려다니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강원도의 분담비율이 25% 정도 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에서 전 본부장님께 개·폐회식장 주체로 참여해 달라는 요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죠?
그래서 분담비율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시죠?
대회 직접 시설, 필수시설 같은 경우에 75%는 국비 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25%를 갖고 조직위와 강원도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글쎄요, 이것을 더 논의하면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못 드려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에 철거를 전제로 재설계를 추진하면서 토목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문체부 장관, 조직위원장, 강원도지사가 이렇게 합의한 적이 있었죠?
아마 작년 10월 14일 제2차 고위급현안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합의가 됐다고…….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수의계약은 토목공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그래요, 부지정리,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합의를 본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했죠? 한 것이 맞잖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본부장님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도에서는 문체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죠?
그런데 전날에 장관, 조직위원장, 지사 세 분이 왜 그것을 합의하도록 했습니까?
아니, 여기에 원장님 이름이 있는데…….
아니, 세 분이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사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왜 세 분이 합의를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논쟁하고 싶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적어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참석해서 합의를 했어요.
장관, 조직위원장, 지사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중간관리자분들이 합의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보고를 했어야죠.
제가 여기에서 원장님을 망신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에 근거한, 언론인들이 기사를 쓸 때는 객관적으로 쓰지 않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제가 한 가지만 갖고 나왔는데-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사가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중간관리자들, 특히 동계올림픽본부를 위시하며 이런 분들의 잘못이 상당히 컸었다, 그런 것을 간과했었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고, 대통령이나 지사라는 자리가 무슨 신입니까?
모든 업무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간관리자인 실·국장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이 판단이 옳은지 어떤 판단이 옳은지 그 정도만 전달해 주는 역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본부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점이 평창동계올림픽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이런 분들에게 망신을 주어서는 안 된다, 관리자들이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당부를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을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15분 정도 남은 것이죠.
김지영 본부장님께는 서면으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규석 전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나 지사라는 자리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분산개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고충도 많이 겪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하키 I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비드파일에는 원주 이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원주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상실감이 큽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철거를 설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주문했던 바는 “이축에 대한 재원부담 관리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빨리 정해라.”라는 주문을 계속 드렸습니다.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도가 이런 것을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만 과연 이것을 도비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철거 후에 이축을 하시겠다?

제가 지역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한 말씀을 드리면 아이스하키 I 경기장이 만약에 원주로 이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이 B/C가 문제된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이 계속 이전을 해 오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서 상당히 활로를 못 찾고 있습니다.

동쪽에 혁신도시와 연결된 것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 쪽에는 지금 도로가 없어요.

물론 진입도로가 지방도로도 있고 군도도 있지만 협소합니다.

이것을 원주에 원을 그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상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아이스하키 I 경기장의 원주 배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경기장 지원도로로 충분히 가치 있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북부권, 캠프롱 미군기지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축 예정이었던 캠프롱 부지라든지 그리고 북부권 시민체육단지라든지 이쪽으로 만약 경기장이 들어오면 이쪽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사님께서는 '경기장이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분산개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소신은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사께서 성난 원주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축 절차는 계속해서 고집하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올 초죠, 지사께서 남북 분산개최를 잠깐 언급하셨다가 언론의 포화를 맞으셨죠?

지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지사님이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해야 된다고 주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의 분단 도가 강원도입니다.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에 열리는데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언론인들, 선수들, 관광객들이 휴전선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이벤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가칭 평화올림픽 선언을 지사께서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동계올림픽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올림픽 선언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평화산단을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드린 이런 제안이 평화산단을 해결할 수 있고, 전 세계인들은 DMZ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평화의 상징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산개최라든지 환경 이런 문제는 타이밍을 다 놓쳤다고 봅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강원도에 남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평화올림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사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와 협의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사님은 그래도 뚝심, '토종감자 최문순' 하면서 외쳤던 그런 뚝심으로 강원도가 통일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분단 도의 도지사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거 MBC사장 시절에 평양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추진하셨죠?
평화에 다가가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지사께서는 과거부터 해오셨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호재를 이용해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전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큽니다.
과거의 김왕자 씨 금강산 피격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의 도발로 인해서 지금 금강산 관광도 중단됐고요, 그것으로 인해 고성과 속초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도 평화올림픽에서 찾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추진하면 분명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강원도에서는 9명의 국회의원들을 새누리당 소속으로 다 뽑아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년이면 이분들이 총선에 나갈 것입니다.
이분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분들이 공약으로 낼 수 있게 제안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따지고도 싶고 화도 내고 싶은 것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시기가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분산개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남은 카드인 평화올림픽에 대한 어젠다는 우리 지사께서 뚝심 있게 밀어붙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 질문부제 : 동계올림픽의 남북 분산 개최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북한의 올림픽 참여 유도 추진

북한이 올림픽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어놔야 된다는 입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민병희 교육감님께 누리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초·중·고생들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해 보니까 오늘도 역시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강원도를 사랑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에 대해 과연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강원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하는 의구심은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계속됩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조직위원회의 일이다, 정부의 일이다, IOC의 일이라고 방관하고 있는 강원도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지사께서는 평화올림픽을 위한 그런 노력에 각별히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3.18)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신도현 의원 (새누리당, 홍천군 제2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저는 오늘 작금의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며 특히 농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농업진흥지역 관리 실태 및 농촌 학생 통학버스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농촌과 농촌 환경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침묵할 수 없습니다.

쌀시장이 개방된 이후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했고 농가 부채는 크게 늘어나면서 농민은 이제 점점 이 땅에서 소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 수입농산물은 매년 증가하여 우리 농산물 대신 국민의 밥상을 점령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농촌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농자재 가격인상 등 생산단가는 오르지만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는 등 암울한 농가 경제로 인해 우리 농민의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농촌을 고향으로 둔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자식 같은 가축을 도살 처분해야 하는 등 이 시대의 농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불확실한 농촌의 미래가 막막하여 농촌을 떠나는 자식들 손을 차마 붙잡지 못하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탄식이 절로 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정을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삶의 뿌리이자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좌절과 상실감에서 벗어나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안을 찾아내고 새로운 각오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2일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쌀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인 FTA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6차 산업, 즉 농촌을 경작에서 제조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융·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이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에 대한 실천이라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농촌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정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허용하는 등 농지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지제도의 합리화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농지를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혁파하여 농촌을 새롭게 살리겠다는 뜻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민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 농촌 발전의 발목을 잡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규제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통한 농지제도 합리화야말로 창조마을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시금석이자 농지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농지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창조산업으로서 6차 농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우리 강원도도 보다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강원도 농업진흥지역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제2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제242회 임시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농업진흥지역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취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3조에 근거해서 1992년 12월 24일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92년 최초 지정되고 2007년과 2008년에 한차례 보완한 이후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재조사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다음 3번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홍천군 서면 굴업리 지역으로서 대명비발디파크가 들어서면서 연간 약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한 휴양시설의 진입도로입니다.

이곳은 70번 국가지원지방도를 사이에 두고 우측 적색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좌측 노란색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 사이에 형평성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간단히 1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발전 가능성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규제이면서, 강원도를 포함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물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농지 잠식을 막기 위해서, 또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 우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우리의 식량산업 보호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대표적인 농촌지역 규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과 그다음에 농업 목적에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 제2조에 의해서 경지정리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에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중에 일부 지역의 경우 경지정리가 실시되지 않았고 또 지정 가치가 없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률적인 규제에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2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규제인 농업진흥지역은 10여 년 전에 한차례 재정비가 되고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습니다.
4-1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원도 경지면적 11만 378ha 중 농업진흥지역이 4만 9,284ha로 경지면적의 4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중에 철원군이 1만 4,688ha로 1위이고 홍천군이 5,747ha로 2위인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농지법이 제정된 후에 2007년 6월 1차 정비 시에 농업진흥지역 3,219ha, 2008년 12월 2차 정비 시에 농업보호구역 2,784ha를 재정비하여 강원도는 총 6,003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그 후 여건 변화로 인한 자투리땅 해제는 지난해 6월 말까지 9개 지역 5.58ha, 또 7월 이후에는 3개 지역 2.25ha를 해제하였는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저조한 사유로는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해 5분 자유발언 후에 강원도의 농업진흥지역 중 자투리 토지 해제대상 지역을 조사한 결과 1만 127필지, 3,261ha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러한 해제대상 토지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사한 자투리땅 3,261ha는 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과도하게 묶여 있어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경지정리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의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기준을 확대해서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을 건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국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정 당시에 국민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 농지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농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 정책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생활도 변화되어서 1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에는 연간 136.2㎏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5.1㎏입니다.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1992년에 지정된 이후에 2007년과 2008년에 재정비되었지만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촌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국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강원도가 앞장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국 시도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한 규제 완화 및 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지사님께 건의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의제로 제안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관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해제를 건의하려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중앙정부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 건의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서 18개 시·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건의할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지정해제 대상과 대상별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법규 개정을 포함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농업 기반 정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건축과 일정 규모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등 제한행위를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 개설, 철도 설치 및 택지 개발, 산업단지 등으로 영농 여건이 나빠진 자투리땅 토지에 대해서도 농업진흥지역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후 해제를 하여야 하고 해제대상 면적도 현재 2만 ㎡에서 3만 ㎡로 상향 조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 가축사육시설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과 영농여건분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최상단부와 최하단부 평균 경사도가 15% 이상인 토지 등도 해제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위해 강원도 내 2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지정해제 대상과 불합리한 지정 현황, 그리고 자투리 토지 현황, 영농여건분리지역의 일정 경사도 농지 등을 조사해서 관련 법규의 개정과 건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부제 : 농업진흥지역 전면적 재정비 건의 관련

답변요지 (농정국장 어재영) : 전면적인 재정비 추진
제한행위 완화부분, 해제조건 면적 확대부분은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임.
가축사육시설 제한지역, 이 부분도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타당성을 만들어 갈 것임. 연구용역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임.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도 농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완화와 해제는 이제 시대의 요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도민들의 박수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사님의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농민들의 숙원인 농업진흥지역이 재정비되어서 우리의 농촌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농산어촌 학교의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남, 경북,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많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많은 강원도 농촌 교육현장에서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학생 통학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공부를 하려면 가야 하는 곳이 학교이고, 또 학교까지 오고 가는 것이 통학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골칫거리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12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제출한 자료인 '읍·면·도서·벽지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 통학수단'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읍·면·도서·벽지 지역 235개 초등학교의 학생 9,097명 가운데 22%인 2,004명이 도보로 등·하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버스를 제공받는 학생은 이 중에 55%인 5,29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보를 비롯해서 부모나 친지 등의 자가용, 일반버스 등을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최대 통학 소요시간이 왕복 2시간인 곳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9년도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아이들의 통학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내·좌석·마을버스로 35.4%입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8.3%에 그쳤습니다. 통학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중학교 학부

모회가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시내권 8개 평준화 고교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 22분으로 환승 등을 고려하면 통학 소요시간이 왕복 4시간에 달합니다.
학부모들이 통학 불편을 제기하면서 도교육청의 통학버스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학교 통학으로 4시간이나 소요되어서 몸과 마음이 지친 학생들이 과연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
학력평가에서 아무래도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장거리 통학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교육감님, 통학문제가 결국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통학버스가 도내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현안이자 나아가서 강원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이며, 적은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이 넓은 강원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통학문제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규정한 강원도 초·중·고등학교 통학차량 운영지침에 의하면 폐교지역의 통학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등·하교 시에 여유가 있을 경우 통학버스 운영 학교 학군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등도 가능한 한 탑승을 하되 탑승대상 학생은 통학버스 운영 학교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자료를 보겠습니다.
5번을 보여 주세요.
이 지역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관내 중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한서중학교, 한서초등학교, 모곡초등학교 간에 학생 통학 MOU를 체결해서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중학생 13명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통학버스 우수 운영 사례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6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이 지역은 대중교통 미운행 구간이면서 초등학교 학생 7명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집에 거주하는 중학생 한 명은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학부모가 본인의 차량으로 8㎞ 거리를 등·하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요즘 같은 농한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바쁜 농사철에는 새벽부터 해가 떠서 뜨겁기 전에 일을 하려다보면 학생을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고, 또 저녁에

농민들이 서늘할 때 일을 시작하려다보면 학교에 가서 학생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심정을 아시겠는지요?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7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이 지역은 면 단위 중학교로 학생들이 통학불편 때문에 시내학교로 입학함으로써 폐교 위기에 이르러 지난해 7월부터 학교발전기금 1,300만 원과 학교 예산 800만 원 등 2,100만 원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학생 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모 초등학교에서는 정원 34인승 차량으로 초등학생 13명을 통학시키고 있고 중학교 전세버스와 중복구간을 운행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학교장 간의 협의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업무조정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듀버스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본 의원이 중학교 통학버스 운영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불가할 경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교육감님께 질의했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총예산 4,000만 원 중에 학교 예산은 고작 500만 원, 나머지 3,500만 원은 자치단체, 동창회, 장학회 등에 의존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초등학교 버스와 중복구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중복노선의 경우에는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재정이나 모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낭비나 중복투자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교육감, 비서실장, 장학사 등과 함께 마이스터고 고교 전환에 따른 간담회에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통학버스 운행 문제에 대한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교육 관계자로부터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난 금년 2월 언론을 통해서 교육감 공약사항인 강원 에듀버스,

즉 통학차량 공영제 계획을 수립해서 단위학교에 배정된 통학차량을 교육지원청 단위로 관리 주체를 변경해 지역 학교들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 에듀버스 1차 시범운영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2차 시범운영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면서 2017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듀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아직도 2년여의 기간이 남아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에듀버스를 시범운영하는 지역 이외에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개선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 에듀버스 전면 시행 전에 대중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버스 승차 정원이 모자라면 관내 남는 학교의 차량과 교체하고, 또 등·하교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면 상호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사고로 농촌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질문부제 : 농산어촌 학교의 통학버스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에듀버스제도 운영 추진

현재 초·중등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것은 40% 정도이며, 학교장마다의 책임관계, 여러 가지를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고 봄.

그래서 대안으로 에듀버스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요지서 내용 중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을 못 한 분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3.18)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또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모든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고 또 강원도의 현안문제이자 현재 우리 강원도 언론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문·답변은 하지 않고 그동안 추진했던 결과, 그리고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주요한 현안문제 다섯 가지는,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 과연 왜 우리 강원도민만 이렇게 비싼 도시가스 요금을 내고 써야 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것이고 또 오늘 각종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죠? 미시령터널, 강원도 225개 터널 중 민자를 유치한 곳은 단 한 곳, 미시령터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965억 원을 투자하고 총 30년 동안 거의 7,000억을 가져갑니다.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또 동서고속화철도, 1986년도에 대통령 1순위 공약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헛걸음치고,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계속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교육사업 중에서 누리과정,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속초의료원 파업사태, 벌써 7개월째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고, 여섯 번째는 강원도의 전체 채무가 2018년도가 지나면 2조 6,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대안과 대책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깊이 있는 실무적인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최문순 도지사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느라 너무 바쁘시죠?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더 힘을 내시고요.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짓 남았습니다.

정말 무언가 우리 후손들로부터 최문순 지사님과 9대 의원님들이 '참 일을 잘 했구나.' 그런 평이 날 수 있는, 그리고 후손들한테 정말 나중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업적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이제 잘 아시죠?

공부 많이 하셨죠?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사실 본 의원이 5년 동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개선되는 것도 크게 없고, 그동안 인상은 자제했으나 3년 동안 동결했고 한 번은 16.8% 인하했고, 또 전년도에 6·4지방선거를 치르느라 본 의원이 신경을 못 썼는데 그 사이에 몇 % 올랐죠?

5.8%인가 인상시켰죠?

잠깐 눈만 감고 있으면 가스값이 올라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 데이터가 저기 나와 있는데, 지사님은 거기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 유류값이 폭락했죠?
유류값에 연동되는 게 LPG가격입니다.
LPG는 유류와 연동이 됩니다.
LPG값도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반토막 났다가 요즘 조금 올랐죠?
그런데 LNG는 가격 변동이 없다가 지난달에 정부가 5.9% 인하시켰죠?
그게 다죠?
그러면 LPG가스와 유류, 그리고 LNG가스 셋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느낌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류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되죠, 그렇죠?
유류값이 폭락했습니다.
LPG값도 폭락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값이 제일 비쌉니다.
5.9%밖에 인하 안 시켰습니다.
최소한 30%~40%는 인하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단 대폭 인하를 안 시키는 이유는, 그동안의 LNG 매출에 대한 적자 폭이 약 2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폭 인하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5.9%밖에 인하를 안 시켰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매가격은 전국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공급배관도 주식회사 한국도시가스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원도에 가스회사가 강원도시가스하고 참빛도시가스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회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제출했고요, 추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핫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00만 강원도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월 가스값이 너무 비싸서 전기장판을 틀고 살고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곧 방송이 또 나올 겁니다.
25일 19시 30분에 강냉이를 통해서 2탄·3탄 계속 터져 나갑니다.
지지난 주에 강냉이가 방송이 됐었습니다.
강력하고 냉철하게 우리 강원도의 뉴스거리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인터뷰를 했더니 참빛도시가스 회사에서 저를 고발하겠다고 (내용증명서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강원도 도의원을 고발하겠답니다.
여기 내용인 즉, 사실 과장 그리고 명예훼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의 도시가스 가격이 제일 비싼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강원도에서 도시가스 매출이 1년에 약 2,800억 정도 됩니다.
2,800억 중에서 장학금을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제가 방송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니 거의 10년 동안 5억 9,000인가 장학금을 냈는데 한 푼도 안 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니까 연간 약 2,800억, 10년 동안 한 2조 5,000억 정도 되겠죠.
2조 5,000억 중에서 장학금 5억 9,000이 많은 것입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 2조 8,000억 중에서요.
많은 것 아니죠?
본 의원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서울예고에 막대한 장학금과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제보도 받았고 점검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투자하는 장학금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모 회사에서는 강원도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서 베트남에 65층짜리 컨벤션 센터도 짓고 백화점도 짓고 호텔도 짓고 골프장도 짓고

리조트도 짓고 중국에도 투자하고, KBS에서 방영된 것 보셨죠?
KBS에서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 재투자한 내역 좀 달라고 했더니 없답니다.
30년 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흑자를 내 가지고 벌어가서 전부 다 외국에 투자한다, 제가 그것을 인터뷰했던 것입니다.
도지사님, 잘못한 것 아니죠?
우리 강원도에 많이 투자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그것이거든요.
강원도에서 정말 수조의 매출을 올려서,-그리고 이익금이 얼마인지는 영업비밀이라서 계산을 안 해봤지만-막대한 수익을 내서 우리 강원도 도민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좀 헌신해 달라, 그리고 재투자를 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도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해 보셨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죠?
그리고 지금 4급, 5급 보좌관 9명까지 둡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9명입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유급 보좌관제로 한 명만 해 달라고 수년째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남의 동네 얘기처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이 많은 도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데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아까 구자열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밤 새워서 새벽 4시, 5시까지 공부를 해야지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의 정책 변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 일 없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공부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공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하시죠?
그 많은 업무를 보시려면, 알지 못하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사님은 옆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보조해 주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
제가 봐도 솔직히 저도 불쌍하고요, 동료 의원님들 다 불쌍해요.
지역구 관리하랴, 의정활동하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랴, 공부하랴 이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시령터널 저것 하나 파헤치는 데 5년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 5년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지금 이것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적나라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지금 공급비용의 차이거든요?
가스 원료는 전국 다 원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관로도 국가에서 무료로 다 해 줍니다.
그러면 공급비용, 회사의 모든 설치비, 시설비, 인건비, 부대비용, 그다음에 금융비용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 원가분석을 회계사에게만 맡기면 내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다. 라면 아닌 줄 알고, 사실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본 의원이 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우리 동료 의원 두 분께서 지금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제가 최초에 경건위에 들어가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한 시간을 하는데, 우리 김미영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죠?
용역 책자를 이렇게 두꺼운 것을 주는데 그것을 테이블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용역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30분을 해요.
그러고 나서 “검토됐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아니, 비전문가들이 이만한 책자를 앞에 놓고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질의를 합니까?
뭘 알아야 하죠.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부지사님을 솔직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전문성이.
몰라요.
아니, 허수아비 데려다 놓고 심의위원회하는데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빨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했더니 통장으로 22만 원 주더라고요.

심의위원이라고 22만 원 주더라고요.
그것 받으러 속초에서 춘천까지 왔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본 의원이 2012년부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이니까 이 부분을 없애서는 안 된다면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우리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시 한번 재심의를 받아서 문제점을 거르고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사님이 거기에 참석 안 해 보셨죠?
저는 2년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다 얘기했어요.
“이 가스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다 물어봤어요.
다 모른대요.
지금은 공부 많이 하셔서 아는지 몰라도, 그 용역 책자를 한 달 전에 자택으로 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나서 그냥 거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전문가.
그 뜻입니다.
혹시 오해했을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심각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자 이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아니고 꼭 해결해 주세요.
연구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5년 전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이야기.
우리 도민들께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지사님께 한 표를 던져주셨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을 위해서 하셔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정하고, 뜯어고치고.

도시가스 사업자 2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5년이 지났는데요.

1. 질문부제 : 도시가스 요금 인하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도시가스 가격인하 지속 추진
도시가스 가격 인하를 촉구도 하고 통일도 촉구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중임.
조만간에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또 같은 당이시고 최문순 지사님도 열정이 많지만-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올인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매달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TF팀을 바로 구성합니다.
지금 우리는 TF팀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까?
전문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다 대처해도 5년 동안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대폭 인하를 시켜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국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요, 강원도의 면적이 너무 넓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 시도와 다 비교를 했거든요?
정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깊이 있게 한번 파 가지고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사님 할 말씀 없게끔 만들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통합요금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가스요금 전체를 더 대폭 인하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빠른 시일 안에요.

도시가스는 시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시령터널입니다.
오늘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보셨나요?
이것입니다.
1면에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미시령터널 협상 불발, 소송 불가피',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이고 당연히 연금관리공단에서 소송을 하라고 MRG를 중단시킨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일단 소송 잘하셨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65억을 투자했고요, 2년 만에 코오롱 외 5개 회사는 2,455억에 팔아먹고 먹튀를 했습니다, 먹튀.
날아갔어요, 벌써.
도망갔다는 얘기죠.
2년 동안 벌고, 965억짜리를 2,455억에 팔고 먹튀했어요.
그런데 그 2,455억에 산 회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주입니다.
연금관리공단, 5,000원짜리 주식을 1만 6,500원에 매입해서, 그런 '짓'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짓을 하니까 연금이 고갈되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포스코 사태 보셨죠?
성진인가 그 회사를, 5,000도 안 되고 다 붕괴되는 납품업체를 1만 2,600원인가에 매입해서 지금 검찰에서 전부 다 수사 들어갔죠.
왜 우리 강원도 것은 수사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수사 의뢰를 안 하는 거죠?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의 다섯 곳인가 여섯 곳을 경영하고 있고 매입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5,000원짜리 주식을 9,000원에 매입했고요, 9,500원, 그리고

최고 비싼 게 1만 2,000원입니다.
미시령터널만 1만 2,500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원도에서 매입한다든가 국가에서 매입할 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우리 국민연금 가지고 그렇게 바가지 써서 매입합니다.
그럴 때는 혹여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 2번, 부탁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그 당시에 최초로 설계한 우리 강발연 담당 박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엉터리 자료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강원도에서 해 달라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정답입니까?
강원도에서 해 달래서 했답니다.
지금 최문순 지사님과는 관계없어요.
지금 강발연에도 그런 엉터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강원도를 망치게 하는.
참 한심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발연에서 다시 한 번 용역을 했잖아요?
지금 다시 하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후년이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3%가 준다고 나왔어요.
지금 1년에 35억씩 우리 도민의 혈세를 MRG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후년이면 265억씩 갖다 줘야 돼요.
우리 도민의 혈세를 매년 265억씩 착착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이것 피가 끓지 않습니까?
저번에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바쁩니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닙니다.
지사님, 다 망가진 다음에, 다 부도난 다음에 그때 시작합니까?
완벽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쁩니다.
당장 후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소송 들어가서 그전에 끝내야죠.
결과가 나와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년에 영동권 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금 1,350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미시령터널 보셨죠?
강원도의 225개 터널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내고 통행하는 곳은 미시령터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사님, 이것을 개선해 주세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 엉터리입니다.
더 극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엉터리라는 얘기죠, 순 엉터리.
처음부터 짜고 친 고스톱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하셔서 5년 동안 본 의원이 파헤친 것입니다.
5년 동안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소송을 시작한 것인데 급하다는 얘기죠.
우리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빨리 TF팀을 구성하세요.
인사발령 내지 말고 더 영입을 시켜 갖고 TF팀을 구성해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빠른 소송, 승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진행으로 미흡하니까 다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여기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을 투입시켜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해 주실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다음은 동서고속철도, 가장 우리 강원도의 현안문제죠?

이번에 B/C 0.97 나왔죠?
혹시 용역이 몇 번째 이뤄진 것인지 아세요?
네 번째입니다.
1986년부터 시작해서 2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986년도에 대통령 공약사항, 전국에 철도 다 됐습니다.
우리 강원도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28년 동안 전국에 다 됐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까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그냥 0.97% 나왔다고 해서, 0.97%가 만족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1%가 나와야지만 비용편익, 예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될까 말까 하게 0.03% 적게 준 거예요.
이것 만족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이 무엇이냐 하면 3차산업으로 육성하는 강원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춘천고속철도, 춘천고속도로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춘천에 누가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올까 했었는데 우리가 SOC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400%의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일단 SOC사업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빨리 적극적으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프실 텐데 들어가서 쉬시고요, 교육감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누리과정, 뉴스에서,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문한다 하니까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 회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벌써 나오셨어요?
제가 지금 5년 차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병희 교육감님께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우리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질문을 할 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강원도 누리과정, 제가 자료는 읽지 않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다 생략하고요, 우리 강원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진짜 여러 모로 고통 끝에 3개월 치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이 1,257개가 있고요, 거기 다니는 아동이 지금 4만 4,280명, 직원까지 해서 총 5만 4,000명이나 됩니다.
5만 4,000명에 학부모까지 계산하면 아마 한 20만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육료 중단사태 얘기만 나오면 아주 너무 너무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5,000억 지원이 합의 되지 않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지방재정법」개정을 한다고 했죠?
지금 전체 누리예산이 1조 7,000억 정도 되죠?
1조 7,000억 중에서 예비비로 일단 5,000억을 지원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1조 2,000억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4월 안에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데 일단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드리는 겁니다.
유치원 과정도 있지만 유치원은 일단 뺐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도 유치원은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지원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자 해서…….
만약에 교육감님, 1조 2,000억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 질문부제 : 누리예산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 추진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강원도로 돈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힘을 합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함.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아까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없다,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렇지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 서면질문을 해서 받아본 결과 여야 합의하에 5,000억은 예비비로 지원하고 1조 2,000억은 4월 안에「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도표가 나왔죠?

저 도표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점들이, 그리고 강원도가 3개월만 확정이 됐고 대구라든가 충남 같은 경우, 그리고 전남·경북은 전부 다 6개월, 7개월씩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적은 곳이 3개월 정도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입장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의 국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담당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이지연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분히 질의·답변 들으셨죠?

보건복지부의 간단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업무로?

그럼 교육감님 말씀과 조금 다르네요, 교육감님의 답변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나요?
누구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다시 또 물어볼까요?
한 바퀴 돌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 전혀 다릅니다.
교육부 소관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0분 더 주세요.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명확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셨고요, 우리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명확치 않습니까?
예, 예비비 5,000억, 1조 7,000.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와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잘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이것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을 우리 300만 강원도민들께서도 다 시청을 하실 것인데 이런 식으로 혼선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헤드라인 뉴스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5,000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1조 2,000억에 대해서는 4월 중에「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 쪽에서 지원한다, 아니면 이쪽은 복지부에 지원해서 받아야 된다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도표를 보게 되면 속초의료원,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 오른쪽에 보면 의료원의 누적 부채가 지금 800억입니다, 800억.

800억이고 지금 신축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투자한 게 290억 원입니다.
금융비용은 포함도 안 시킨 것입니다.
금융비용까지 포함시키면 엄청난 예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도민이 주인인데도 시민과 도민을 다 내몰고 노사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그 현실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으셨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이 지난 3월 2일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협약은 재협상을 통해서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현지 행감을 통해 잘못된 부분도 지적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나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하고 왔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러니까 아군·적군이 없는 것 같아요.
지사님은 어느 쪽 편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 의료원에 대한 규정과 세칙이 다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잘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세요.
우리 강원도 의료원에 대한 정관 규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지사님께서는 빠른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굳이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정관과 규정을 가지고 이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의료원에 약 2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을 제외하고도 지난 2014년도에 19억이란 적자를 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원성의 소리가 너무나 높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노사가 협의하려면 양쪽에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풀어줘야 돼요. 해답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측에서는 일단 원장을 바꿔달라고 7개월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단체협약은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에 그 단체협약 말고 강원도의료원 관리 규정, 그리고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원장을 바꾸면 됩니다.
원장을 바꾸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 정관과 규정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인사권이 전부 다 의료원 원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3월 안에 새로운 원장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제 지역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지사님,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7개월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1년, 2년 계속 가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중간에서 우리 도민들은 정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노사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야 합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것이죠?
우리 도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3월 안에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출자·출연 채무 예상 자료 좀 올려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도정질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를 보게 되면 한겨레신문의 보도라든가 우리 강원도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공공부문 부채 예상을 보게 되면 앞으로 2018년도까지 약 2조 6,600억 정도, 우리 강원도는 그야말로 빚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4%의 이자만 따진다면 연간 1,000억이 넘는 이자를 우리 강원도에서 물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이 자료만 해도 30분을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6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원도민 앞에서 우리 강원도의 부채 현실, 그리고 강원도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했던 것은 강원도의 현안문제를 강원도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잘사는 강원도, 부채 없는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3.18)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안상훈 의원 (새누리당, 춘천시 제3거구 출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푸른 산과 맑은 물, 아름다운 호수가 그림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정취가 넘치는 도시, 춘천 지역 출신 도의원 안상훈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강원도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공직을 퇴직한 후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뒤돌아본다고 하면 할 일은 많은데 한 일이 별것 없는 허탈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정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로 국외연수를 가면서 덴마크의 빌룬드라는 인구 6,000의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레고랜드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보기 전에는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현장을 보고 나서는 춘천에 이 정도의 시설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테마파크의 면적을 비교해 봐도 네덜란드는 4만 3,000평이고 춘천은 8만 5,000평으로 규모에서 배 이상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춘천 레고랜드는 중도에 위치하여 자연풍광이 수려하고 배후도시의 인구가 2,000만이라고 하는 잠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레고랜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는 사항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자칫 관리가 부실하여 진행이 부진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게 되어 춘천시민은 물론 강원도민들로부터 받는 질타가 매우 커질 것을 우

려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선사시대의 매장 문화재 문제로 인해서 고조선 유적지 보존 및 개발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레고랜드 건설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되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다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2017년 상반기에 레고랜드코리아를 준공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얘기시고요?
당초 집행부의 보고에 의하면 춘천 레고랜드는 동아시아에서는 최초이고 전 세계에서는 일곱 번째로 건설된다고 했지만,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과 일본에서도 레고랜드가 건설되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200만 명의 국내 방문객 유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춘천시민단체가 제안한 레고랜드 개발사업 공개검증 시민공청회를 집행부가 거절했는데 거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멀린사의 비밀을 유지하기로 협약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히려 춘천시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업추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한 최문순 지사님의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그러신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엘개발주식회사의 재원조달 계획은 600억의 자본금을 단계별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자본금 출자액은 도가 현물출자한 90억 원을 포함해서 20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99억 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로부터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출자에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엘엘개발주식회사의 이사 현황을 보면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8명의 이사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사 현황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엘엘개발주식회사의 총괄대표 민건홍 사장님은 사내이사로 되어 있고 오상덕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엘엘개발주식회사의 사장이 대표이사여야 되는데 사내이사로 되어 있고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하여간 조금 기이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지분 출자를 하지 않는 춘천시의

부시장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춘천시가 50억 정도의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춘천시 부시장이 이사회에 들어간 게 도와 시·군 간 업무 협조를 위해서 라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협조하면 되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전문 경영인을 이사로 추천해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서 본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에는 멀린사와 강원도가 책임지는 부분이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2014년 12월 말까지 엘엘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차익금이 약 551억 원으로서 지금까지 420억 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건설사업관리(CM)비가 15억 6,000만 원, 프로젝트관리비가 2억 3,000만 원, 사업권 양도·양수비용이 40억 7,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감리라든가 이런 비용인데 별도 설계비가 18억 정도 나간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볼 때 현재 감리비가 많이 나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레고랜드 건설사업은 국내 굴지의 1군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건설 주관사로서 책임 준공을 조건으로 본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출자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대건설에서 50억을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49억 원은 언제쯤 출자할 계획인지?
왜냐하면 진입교량 건설하는 데서 입찰에 참여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슬슬 빼려고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엘엘개발주식회사가 발주한 하중도 제방공사의 시공업체가 당초 대보건설에서 대운건설, (주)대주산업의 공동수급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해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해서 계약한 회사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여하려는 도내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닌 것으로, 제 얘기는 모든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레고랜드코리아에 5,011억의 개발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여기에 보면

멀린사 1,000억, 자본금 500억, 차익금 2,125억, 분양수익금 1,386억인데 분양수익금이 계획대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춘천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레고랜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부제 : 레고랜드 관련

답변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 이사회 경영참여 등 시스템을 통한 운영 추진

현재까지 강원도가 최대주주이기도 하고 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역할을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충분히 심도 있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지금까지도 2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 집행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고 주관 거래 은행의 통제를 받아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예, 다음은 지난 2월 1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 강원도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로 오신 이강일 본부장님께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19 지역대가 50개소 있으며 이 중 1일 3명이 근무하는 곳이 1개소, 2명이 근무하는 곳이 28개소, 1명이 근무하는 곳이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 지역대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소방펌프차를 운영하고 화재발생 시 출동하여 화재진압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활동에 임한다 해도 혼자서 대형장비를 유지・관리・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언젠가 타 시도의 1인 지역대에서 혼자 출동하여 화재진압하는 도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하루빨리 인력을 충원하여 1인 근무 지역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차량 노후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 1월 현재 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584대 중 내용연수를 경과한 차량이 175대로서 노후율이 3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중 1대가 노후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소방차량이 노후되면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활동이 지연될 소지가 있고 원활한

현장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후 소방차량의 여건을 모두 해소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총 5년 동안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까?
하여간 소방차량 교체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는 의용소방대 295개소에 8,377명이 편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군의 읍·면마다 설치된 의용소방대들이 화재와 구조활동은 물론 각종 시·군 행사에도 동원돼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다른 단체에 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보수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용소방대의 금년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4억 8,000만 원이나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물가 인상 등으로 예산이 소폭이나마 증가해도 부족할 텐데 의용소방대의 지원 경비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부군수로 활동하면서-일선에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오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이더라고요.
보면 여느 사회단체보다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현재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기진작 대책이 많은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면평가제 운영과 관련해서, 총무행정관님.
우리말에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 도민으로부터 인사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은 도지사 마음대로, 무소불위(無所不爲)로 휘둘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검증을 통해 도민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정당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지난 8월 11일 도지사와 직원 간 소통의 장 행사에서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인선시스템이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국·과장 인사에 선거제도의 장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국·과장 승진 다면평가제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께서는 다면평가제의 긍정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면평가제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먼저 한 번 시행하면서 부정적인 면도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은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두 번째는 사업부서 또는 외청 근무자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부서·인사부서 출신들이 승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서 간 형평성이라든가 평가 참여자에 대한 정보보호 등 세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지난 1월 15일에 KBS에서 방송된 시사토크쇼 '강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원도를 냉철히 이해하자는 프로그램인데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1월 15일의 방송내용을 보면 인사의 중심에는 비서실장과 도지사 부인 이순우 여사가 있었고 문고리 권력이 있다면서 조롱 섞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총무행정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도의 내용이 신빙성 없는 내용이라면 도의 입장에서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보도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이러한 사실 무근인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시 등교제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시 등교제 시행은 초·중·고교생의 조기 등교로 인한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를 해소하고 아침 식사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 확보로 행복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15년에 고교생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 없이 시행해서 시내버스 운행 등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재 9시 등교제와 관련해서-초·중학교는 관계없지만-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25대의 등교 급행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급행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등교시간이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갑자기 20분에서 40분 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고교생들이 통학시간이 늦어지니까 급행버스를 타지 않고 일반버스를 탐으로써 급행버스는 탑승객이 줄고 일반버스에 탑승객이 늘어나서 시내 대중교통에 많은 혼란이 왔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춘천의 경우에는 인구 밀집지역인 석사동, 퇴계동 시점에서부터 일반버스에 학생들이 꽉 차다 보니까 버스가 중간중간 손님들을 태우지 않고 무정차로 지나가서 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9시 등교제를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인데 이런 것 없이 시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춘천시장님과 만난 것 같은데 좋은 해법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해법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5월, 6월, 7월의 9시는 어떻게 보면 한낮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에 서머타임제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측면도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서머타임제를 고려 안 하시고, 하여간 9시 등교제와 관련해서는 춘천시내 대중교통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자체에 협조를 구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 질문부제 : 9시 등교제 운영 관련

답변요지 (교육국장 최종국) : 통학여건개선협의회 구성을 통한 통학문제 해결 추진
9시 등교제 운영관련 다소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임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통학여건개선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학생 통학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음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교육국장님, 들어가시죠.-구제역 관련해서 농정국장님께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강원도는 청정 축산 이미지로 횡성한우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나 2015년 2월 8일 철원에서 불법 입식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춘천, 원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현재 도내에서 1만 3,500여 두의 돼지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불법 입식으로 밝혀졌으나 춘천, 원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아직까지 정확한 유입경로가 파악되고 있지 않아 차단 방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축산 농가는 물론 지역 관광업과 유통업의 피해, 강원도 이미지 하락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돼서 농정국장님께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휘부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이 돼지농가 위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돼지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소홀 등 방역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군 단위에서 구제역 발생 전, 평소에는 거점 소독시설 또는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유입될지 알 수 없으므로 상시 차단 소독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번 구제역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계열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 도의 자료에 의하면 가축 및 사료운반 차량 등을 통해서 74%가 전파되고, 농장별 감염으로는 도축장이 65%를 점하고 있다는데 우리 강원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및 바이러스 변이 등으로 인해서 구제역이 연중 발생하고 있으나 강원도에는 방역조직과 인력이 부족해서 전염병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체계적인 상시 방역을 위한 방역조직과 인력 확충을 위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연중 계속 반복되는 구제역 방역으로 인해서, 수의직 공무원 확충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질문과 관련하여 시정·개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5. 3.1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틀 전 슬픈 일이 생겨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담담하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많이 바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오죽 바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요 사안들이나 사업들의 진행과정을 들여다보고 이러시기보다 주로 오가시면서-너무 바쁘시니까-보고를 통해서 접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바쁘시죠, 지사님?
그럼 사안이나 이런 것은 직접 챙기세요, 아니면 주로 보고를 통해서 받으세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일 관심이 큰 주제가 지역화폐였습니다.
며칠 전에 메인 주제를 무엇을 먼저 할까 하다가 바꿨어요.
시간이 된다면 중·후반부에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얼마 전에 이례적으로 잡혔던 저녁 약속을 취소하시면서까지 원주권 도의원들과 만남을 가지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됐고 여러모로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셨던 점들도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런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뿌리깊은나무들의 실질적인 대표님들이 작가님들이시죠?

대표라기보다는 지분이 많으시니까.

예전에 MBC 사장님 하실 때의 연분 등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강원도로 드라마 촬영장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삼고초려하는 것처럼 애도 많이 쓰셨고요.

그 과정 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질문부제 : 원주 드라마 세트장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상시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원주 관광활성화 추진
원주지역이 아주 잘 발달된 도시이면서도 관광의 포인트가 없어서 관광 포인트를 좀 만들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음.
그중의 하나, 상시적인 문화콘텐츠로 드라마를 찍어보자는 뜻에서 추진함.

작가님들과 지사님의 연분, 그리고 친분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우리 도유지를 매각하느냐, 아니면 원안이었던 임대방식으로 진행하느냐 이것이잖아요?

작가님들이 도나 지사님께 직접 도유지 매입을 요청하셨습니까?

대표가요?

그러면 작가분들은 요청도 안 하셨고, 그런데 매각 얘기가 뜬금없이 툭 튀어나왔을리는 없고 무슨 요청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쪽에서 요청이 있었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와 이사님이 실제로 요청을 하신 거죠, 이사회에서?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들으니까-우연치 않게 들었는데-본사 건물을 확실하게 이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분 대답으로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사님 의중은 그러시지만 또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요청이 있어서 도유지 매입·매각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사님께서는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사회에 총 세 분이더라고요.

세 분 중 한 분은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계속 관련이 있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엄밀히 딱 구분을 하자면 두 분은 비즈니스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술성이 있어도 경영이나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이 엉망이면 회사가 운영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나 아니면 사업 같은, 의사결정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은, 이사회가 비즈니스맨으로 구성되고 또한 그런 마인드로 임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를 정리하고 가면, 현재는 비즈니스맨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도유지 매입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락을 해도 되겠죠?
일단 그 요청은 비즈니스맨들이 대부분이신 이사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고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얼마 전 원주시에서 소방서를 뒤쪽으로 배치하면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지사님?
혹시 그게 기분이 나쁘시지는 않았나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월권행위이고 광역 지자체 산하기관인 소방본부의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장의 말 한마디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시민들께서 곡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도의회의 승인이 필수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기초단체장님의 권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만약에 도지사님께서 '군복무 기간을 1년 단축하겠습니다.' 아니면 '전방부대를 다 빼고 국방예산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대통령님의 고유영역을 쉽게 말할 수 없듯이 이 경우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조율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부지인데, 출동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을 빼면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소방서고 여기 부지가 매각이 되면 여기가 완전히 딱 막히고 뒤에 우리 도유지가 맹지가 되니까 이걸 뒤로 밀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지사님께서도 원주시 의견처럼 뒤로 소방서를 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배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했는데 만약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뒤로 미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얼마 전 본 의원과 우리 동료 의원님 한 분, 그리고 회사 관계자 한분 이렇게 셋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그때 제안을 드렸어요.
"왜 하필 여기를 꼭 매입하시려고 하시느냐, 여기 이런 데에 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가 딱 막히면 맹지가 되어 버리는데"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택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이쪽에 인터불고호텔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전깃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카메라를 도저히 돌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배치도를 보시면 이렇게 배치를 해 오셨잖아요?
여기 뒤가 드라마세트장 위주입니다.
이쪽으로만 카메라를 돌려서 사극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원주시 안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가 완전히 현대건축물로 가득차지 않습니까?
이쪽은 인터불고 때문에 찍을 수가 없고 이쪽엔 학교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쪽 옆에는 tvN 방송국, 현대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로 밀어서 하신다는 것은 관계자분 말을 들어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 인터불고에서 행사도 치르시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 잡은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방서를 뒤로 민다는 것이 촬영상 불가능, 그쪽에서는 드라마도 못 찍는데 이렇게 밀어버리면, 여기에 한옥건축물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해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원주시의 제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첫 번째 이 부분, 원주시민으로서 열렬히 환영하고-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 하고-제작사에도 이건 정말 엎드려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주 도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시고, 그 첫 번째가 합리적이고 후에 갈등이나 분란의 소지가 없는 약속에 근거한 방안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그리고 그러한 기조 아래 모든 원주권 도의원들도 몸과 마음을 바쳐서 아마 진력을 다할

것을 확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소방서를 뒤로 민다는 것인데 앞서 드린 설명처럼 드라마 제작 자체의 불가능과 제작사의 입장을 모르고 제안하신 거지만 왜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다시 언급 안 해 드려도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단체장 임기가 3년 남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3선이셔서 임기가 길어야 7년입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단체장님의 흔적 지우기를 수없이 봐 왔습니다.
나중에 도시 발전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도지역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제안에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변경이 절대 없을 거라고 믿기도 어렵고 봉건 왕조시대의 전제군주가 다시 출현하지 않는 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렬히 환영하고, 두세 번째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원주권 도의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순이와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쳐 내주고 헌신하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그 남자가 전혀 뜬금없이 영희와의 결혼을 발표했어요.
처음에 결혼 약속을 받았던 그 순이라는 여자가 지사님의 친구이시거나 가족이시거나 조카이시거나 따님이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남자가 좀 나쁜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 지사님, 원주시장님께서 한 자리에 함께 계실 때 발표하신 공약 이행, 특히 지사님의 원주권 공약 이행을 도와드리려고 줄기차게 드림랜드를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스스로 약속을 묵살 및 포기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지사님의 드라마단지 공약을 접했을 때 정말 제가, 그때는 선거 때이기는 했지만 '헉!'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박수를 많이 쳐드렸어요.
아마 다 같은 심정이셨을 겁니다.
반곡동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드림랜드는 당연히 1순위이고 그리고 추가로 반곡동에 조성하나보다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드림랜드에서 반곡동으로 선회인 것을 접하고 나서 '이건 아닌데, 난리 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초면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드림랜드 주변은.
플래카드 도배한다고 하고 단체장님실 때려 부순다는 과격한 말도 하시면서 단단히 벼르고 계십니다.
반대로 반곡동 종축장 부지 근처는 관심이 없거나 도리어 미안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순이는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뜬금없는 제안에 영희는 겸연쩍거나 순이에게 미안해하고요.
소수 몇 분의 반곡동 주민분들이 주민들을 선동하시고 들쑤시기도 하고 플래카드를 걸기도 했는데 오히려 반곡동 주민, 그쪽 주민분들께서 대노하면서 스스로 플래카드가 걸린 것이 보이면 떼고 다니셨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 의원님들은 앞으로 이런 결과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난다, 그렇지 않아도 도지사님과 원주시 갈등얘기도 언론에 대서특필 된 적이 있고, 원여고 부지 활용 등 다른 원주권 공약들에 대한 도지사님의 자세와 원주시의 요구사항 등의 차이로 갈등이 빚어져서 2주~3주 전만 해도 플래카드가 많이 걸렸던 것 알고 계시죠?
원주 공약들 중 유일하게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 저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약속이행을 저버리는 것으로 드러나면 지사님께서는 원주에 정말 단 하나의 약속도 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와 도지사님, 그리고 도와 실 같이 남아있는 관계마저도 끊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저희 도의원들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지사님, 영희가 아니라 순이입니다. 순이." 이렇게 안 떠오르게 하려고 사인을 드렸어요.
그런데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제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된 것 아시죠?
그리고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난 이상 저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소초면에 약속하신 것은 지사님이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십니까?
사업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을 다 아시고도 왜 그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은 종축장 부지에 하시고 10월에 끝나면 그걸 바로 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드림랜드 공약도 확실하게…….
그럼 드림랜드에 드라마단지를 조성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공약 이행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 상의를 하시면.
그런 뜻이 아니신 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사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만약에 사업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와 협상이 안 되어서 드림랜드가 아니라고 하면 그 공약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다른 곳에 조성은 되지만 장소가 변동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초면, 순이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공약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약속을 다 해 놓아서 그것만 믿고서 의지하고 있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
6년 전에 본 의원이 결혼을 앞두고-결혼한 지 6년 됐는데-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고.
그리고 “그날 꼭 보자. 뭐 준비해 줄게.” 해서 기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 날 그 친구가 안 왔습니다.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혼식에 오리라고 예상도 못 했던 친구여서 안 왔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안 왔어도 그런 말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되게 잘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것이 이상하게 똑같이 안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섭섭하고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사람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촬영 일정에 차질이 있으면 촬영장을 옮기겠다고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강원도가 겁박당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이 건을 실제 진두지휘하시면서 푸시려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알리고 다니세요, 도 관계자가.
그리고 저도 그분 덕에 참 많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강원도가 그런 소리를 들을만하게 미숙하게 일 처리를 해 왔고 더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을 계기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드림랜드가 아니더라도 협약 체결할 때 유상임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진행했으면 아무런 불협화음도 없고 드림랜드 공약도 차후에 저희가 조용하게 상기시켜드리면서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느닷없이 매각안을 진행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거든요.
6월 당선 때까지만 해도 드림랜드 공약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협약식에서는 종축장 유상임대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10월에는 매각, 그래서 왜 드림랜드에서 종축장으로 바뀌었느냐 이것도 궁금했지만 그것 말고 한 달 사이에 유상임대에서 매각으로, “어떻게 돌연 임대에서 매각으로 바뀌었습니까?” 하고 공직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원주시장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결이 원만하게 됐는데 갑자기 말미에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즉흥적으로 “한옥단지를 조성해서 촬영이 끝나도 여기를 구경거리로 만들면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당연히 비즈니스맨들이 있는 이사회에서 이 안을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관이 도리어 먼저 말을 꺼내줬는데, 드라마로도 성공을 하고 싶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런 부분을 관에서 먼저 제안했는데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는 즉흥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그랬다고 해도 여기서 선을 확실히 그어버렸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을 안 그은 도와 그 모든 결정권의 최정점에 계신 지사님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도가 먼저 드라마 제작사한테 도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했대요.
그리고 회사는 그 말을 믿고 그냥 진행을 했대요, 매입을 생각도 안 하다가.
당연히 진행하죠,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것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원안대로 유상임대로 가라고 했고, 그것도 두 번이나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도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5,000㎡ 이하로 끊어서 넘기자는 제안은 누가 하신 겁니까?
도지사님의 권한인 것은 알지만 그 제안을 누가 꺼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분들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셨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유상임대로, 처음부터 매각하시려고 데려오신 거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유상임대로 계약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5년 유상임대 조건으로 2억을 출자했잖아요.
처음에 유상임대로 가셨으면 지금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았고, 그리고 성공을 했으면 여기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즉흥적인 말로 선을 안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와도 갈등이 되고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선을 안 그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를 제대로 우습게 만들면서 관이 나서서 법의 맹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악용한 겁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한 분과 함께 회사 관계자 만난 것 아시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은 비즈니스맨이니까 으레 그럴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뒤에 저를 설득시키시려고, 이해시켜주려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 관계자분은 평생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평생 공직에 계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고하시고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저보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생각해 보라고, “드라마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부지를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서 제가 “예. 예.” 이렇게 단답만 했습니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던 분, 제 입술을 읽으십시오.

제 입을 보십시오.
절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떡볶이집 개업하는 도민도, 국밥집 개업하는 도민도 사활을 걸고 시작합니다.
실패한다고 누구도 담보해 주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자매도 그렇게 못하고 부모님만 유일하게 실패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실 거예요.
강원도가 제작사, 아니면 다른 기업들의 부모입니까?
물론 우리를 발전시켜주셨기 때문에 도와드려야 되지만 실패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될, 우리가 부모같이 해 주는 그런 자치단체입니까?
다른 기업들도 강원도에 오면 다 이렇게 실패까지 고려해 주고 떠안아주고 책임져주려고 합니까?
선을 확실히 긋고 진행했어야 할 도가 그쪽에서는 바라지도 않는데 먼저 해 준다. 해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결과와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섭섭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터를 잡고 그래야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인데 선을 확실히 안 긋고 끝까지 도가 제작사 담보가 되어주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도가 해도 돼요?
자치단체가 그런…….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저는 뿌리깊은나무들한테 지금 되게 죄송한 심정입니다.
제작사의 이미지가 뭐가 되고 강원도의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지금 서로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깨끗하게 원안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성공을 하시면 추후에 지금 이런 매각이나 매입 얘기를 꺼내셨으면 됐는데, 이것은 지사님 공약이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매입·매각, 본사 얘기를 하시지 왜 유상임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겠죠.
그렇죠, 분명히 욕심이 늘어났죠.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기를 안 듣고, 매각·매입 이런 얘기, 여기다 하면 되겠다는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안 가지셨어요.
결혼식에서 저도 친구가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했으면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미숙함으로 일처리가 그렇게 진행되었으니까 지금에 와서 둘 다 이렇게 섭섭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다가 중간에 그런 제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지금 서로를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다른 말씀도 드릴 것이 많은데, 뿌리깊은나무들에 먼저 정중한 사과를 하시고,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보다 더 빠른 시간은 없잖아요?
하루빨리 촬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단을 내리시고 선을 그으십시오.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이 뿌리깊은나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잘 찍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일이 불거지고 오해를 받고 곡해당하고 땅투기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진짜 가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 공약이 아니에요.
지사님께서는 공약 이행을 하실 책임이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2년~3년 내에 꼭 공약을 실천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민으로서, 그 공약을 보고 박수쳤던 한 도민으로서 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요청드리는 것은.
만약에 안 좋게 되더라도 꼭 드라마단지를 조성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과하시고, 왜 우리 부지가 금싸라기 땅인지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원래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혁신도시예요.
여기가 우리 도유지이고 여기가 인터불고호텔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이 뒤로 굉장히 크게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기를 지나가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혁신도시가 얼마나 거대한지.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상 이것 하나만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혁신도시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런 건물이 없고 여기가 1종주거지역인데, 우리 도유지랑 같은 원룸형태의 집인데 분양할 때 200만 원이었고 현재 실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 건이 있는데 평당 8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유지도 지금 1종주거지역으로 똑같은데, 혁신도시는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시세를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대충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거대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 도유지의 가치는, 혁신도시의 메인입구가 3개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가 있는데 다 차로 10초 거리예요.

이것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혁신도시와 인접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아파트가 지금 완전히 분양이 되어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것이고 여기가 우리 도유지인데, 보시면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서 촬영장소로 적합하지 않죠?

아까 옆으로 못 찍는다는 것이 이래서입니다.

그리고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학교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보이고, 여기가 현장입니다.

이 뒤쪽으로 찍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가 사극촬영지로 적합한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보면 아파트 건물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임대를 해서 여기에 드라마 촬영장을 하신다는데 뒤에 아파트가 분명히 보이시죠?

이것이 사극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서 본 것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아파트, 이것이 원주시예요.

여기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조성을 해도 사극촬영지로 적합한지 그것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 지금 옆에 조성을 다 해 줬어요.

이것도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인터뷰를 보시면 거기 시세가 나옵니다.

300에서 400이고, 보시면 가져왔던 것이 평당 99만 원에 하다 부결이 되고 다

음에 2차에는 55만 원으로 산정을 했다가 부결이 되고 지금은 아직 미보고가 됐는데 평당 100만 원선에서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가 왜 금싸라기 땅인지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가 원주시입니다.
원주시가 이렇게 해서 도시가 뻗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인터불고이고 여기가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여기에 건물이 다 들어찼어요, 혁신도시.
보시면 원형탈모처럼 비어있는 여기를 채우면 도시가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에 만약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점점 채워져 가겠죠.
지사님, 왜 금싸라기 땅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드림랜드가 왜 적지인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드림랜드인데 10월에 반환되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주차장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는 만약에 성공을 해도 도심 한가운데여서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이기구가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되게 큽니다.
주차장 전경이고요, 여기가 글램핑장이라고 굉장히 활용이, 여기는 전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드라마 적지라는 것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시면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조선시대가 바로 연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드라마세트장을 할 곳이 우리 도유지 안에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틀어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새소리도 나고 옛날 조선시대 같은 소리가 나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연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반환을 받으시면 활용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드림랜드에서 이 모든 사업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와 접촉을 해보려고 무던히도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드림랜드에 갔더니 저를 문전박대하세요.
정치인들은 다 똑같대요.
재선하려고 얘기를 했다가 어기고, 저는 처음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저한테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전박대 당하다가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됐는데, 지금 임대 제안하면 받아들이시겠냐고 했더니 환영한대요.
자기는 지금 바로 오케이 해 준대요, 만약에 양해각서를 통해서 지금 임대로 드라마단지 제안이 오면.
당연히 환영을 하고 본인은 작년에 그 공약이 되게 기뻤답니다, 드림랜드 드라마단지.
그런데 끝나고 나서 종축장 얘기 나오는 것을 보고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지금도 조성은 할 수 있어요.
도의 의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그 사업자가 해 주신대요.
자기는 언제든지 오케이래요.
그렇긴 한데 도유지니까 도에서 양해각서 등을 통해서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것을 활용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왜 적지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시연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제가 학곡저수지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인근에 학곡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 사진이 이래요.
여름에 여기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가 우리 드림랜드 도유지와 얼마나 가깝냐 하면, 여기 드림랜드 보이시잖아요?
여기 뒤가 바로 학곡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말IC가 있어요.
새말IC에서 나오시는 도의원님들 여기서 많이 만나시잖아요, 원주에서.
이렇게 오셔서, 되게 가깝습니다.
새말IC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한 중간에서, 학곡저수지가 바로 있어요.
이것 하나도 인프라가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가시면 이렇게 드림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차장, 여기 근처에 먹거리가 굉장히 많고 치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구룡자동차야영장이 있어요.
요즘에 캠핑카 많이 타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있고 구룡사가 바로, 구룡사 적천 스님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적천 스님은, 조선시대의 사극은 불교가 필수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바로 옮겨오기 때문에, 이성계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라든지, 얼마든지 내준대요.
그리고 여기 치악산이 있고 우리 자연학습원도 있고 여기에 가시면 또 야영장도 있고, 봄・여름・가을・겨울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드라마단지가 성공하려면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것을 잠깐만 봐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중간 중간 시연하면, 이렇게 흉물이 됐어요.
완전히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흉물이 되어 있고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이것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저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게 단지를 하면 근처에 시민들이 몰릴 것 아니에요, 밥이라도 팔고 식당이라고 하려고.
저는 이것을 보고 집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래분들이 살기 편하게 좀 만들어 보라고 위의 것들을 보내봤는데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면서 청사진만 제시한 위의 것들 말만 믿고 피해를 보는 것은 아래분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지게 됩니다.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 전 원주에서도 종축장 부지 주변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청사진, 식당가 형성 등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것들에 감히 들지 안 들지는 모르지만 아래분들께서 저한테 모자라고 부족해도 열심히 해 보라고 보내주셔서 여기 서 있습니다.
위의 것들은 아래분들이 주신 권한과 세금으로 좋은 것도 먹어보고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저분들은 고기 한 점 드시고 싶으셔서, 그리고 돈 버셔서 소주 한 잔 사드시고 싶으셔서 위의 것들 말만 믿고 오셨다가 드시던 밥도 못 드시게 됐습니다.
말씀 말미에 눈에 눈물 고이시는 것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성공사례가 나오는데 여기가 왜 성공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두 장소 중에서, 사극 촬영지로 종축장과 드림랜드 중에서 지속 유지가 가능한 관광명소가 되려면 어디가 더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알겠습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마단지를 드림랜드로 추진해 주십시오.
양해각서를 통하면 아까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강원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속 가능한 진짜 우리의 관광명소를 만들려면 드림랜드가 더 적지거든요, 저기에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1편을 거기서 찍는다면-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2편, 3편부터는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강원도민으로서 어디가 더 적지인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축장 부지에서 찍으신다면 무상임대가 아니라, 알아보니까 무상임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상임대에 준하는 지원금을 주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은 일단 보류를 하시고 무상임대가 아니라 그에 준하는 조건을 주시고 촬영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구건축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배우들 대기실에서, 영구건축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를 조금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가 분명히 영구건축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
그랬는데 그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도에서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다 찾았는데, 이렇게 찾았어요.
‘육룡이 나르샤’ 보시면 처음의 계획안, 여기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영구건축물, 여기 한옥마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옥마을, 지금 영구건축물이 아니라 세트장으로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구건축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영구건축물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대장금 2’도 그렇고 이때부터 영구건축물이 주차장 이쪽 초입이 아니라 이쪽에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하고 세 번째 이 '아사달', 이것도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이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틀 전에 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가 제작사에서 직접 제안한 것인데 보시면 여기에도 똑같은 그림이더라고요.
영구건축물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영구건축물 계획이…….
보시면 영구건축물 계획이 2016년부터 1단계 조성계획이고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에 2단계, 그러니까 지금 당장 2015년에는 회사 측에서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제가 아까 5,000㎡ 이하로 끊어온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회사에서 나중에 2018년 이후에도 영구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이…….
영구건축물 계획도 5,000㎡가 아니라 원래 6,000㎡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아드리겠습니다.
계획이 5,000㎡가 아니라, 그러니까 5,000 이하로 잘라 오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회사의 계획 자체가 여기로 만약에 옮기더라도 영구건축물을,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못 찾는데 여기에 있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회사 자체 안에 영구건축물 R&D센터 이런 부분이 6,300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건축물 없이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고, 5,000 이하로 끊어온 것도 회사의 바람과는 다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5. 3.1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곽영승 의원 [새누리당, 평창군 제2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지사직에 계신 지 한 4년 넘으셨는데요, 지사직 하실 만합니까?
스스로는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사님, 지사직을 수행하시는 데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도민들의 수요나 요구는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도 지사님 마음만큼, 욕심만큼 움직여 주지 않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즈음 저는 강원도정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중에 일부는 제대로 보고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간혹 또 면피하느라고 거짓말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로 또 일을 안 하고, 분명히 강원도에 실행되는 국책사업이므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로 열의가 떨어지는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부서 간에 핑퐁하느라고 주관 부서를 정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그것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고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암중모색인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단을 잘못하고 있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력과 자원이 부족한 만큼 지사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 조직, 도청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우선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승진이고 인사이므로 공무원 조직 운영에 가장 중요한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인사를 했다하면 이 조직이 동요하고 비판 여론이 일고 말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사가 제로섬 게임이죠.

한 사람을 만족시키면 열 사람, 스무 사람, 백 사람은 불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난한 인사가 차선책이지만 그나마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확 조직을 뒤집어 놓으면 결국은 행정에 손실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연공서열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인사는 이 연공서열을 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동요하고 비판 여론이 일고 공무원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서고 의욕을 상실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누구나 빤히 압니다.

내가 다음번 언제 승진을 하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서로의 승진 순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학수고대해서 내가 승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조직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껑충 뛰어서 승진을 시키시고 하니까 이런 잡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3년 반 남으셨으니까 균형을 잘 잡으셔서 조직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양 부지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전의 다면평가를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는데 다면평가에 대한 인사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언론에서도 비판 많이 했고.

다른 지자체는 다면평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다른 지자체나 정부는 이것이 부작용이 많다고 거의 폐지하고 있어요, 참고자료로만 쓰고.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누구한테 정보를 들으셨는지 검토도 안 하고 덜컥 쓰셔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아주 맹비난을 하고 확 돌아서서 근무의욕이나 사기가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 안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초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민망한 말들이 도청 안팎에 돌았는데 요즈음에도 가끔씩 듣기 민망한 이야기가 들려요.
밤의 도지사가 있다, 제2의 도지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누구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도청 밖에서, 지사님도 인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판에 공식 라인 밖에 있는, 도청 밖에 있는 사람이 인사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고교 동문 출신 공무원들, 이 사람과 동향(同鄕)인 공무원들이 도청에서 약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도지사님의 지휘권을 훼손하는 거죠, 호가호위하면서.
저랑은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우리 강원도…….
강원도의 영동·영서, 또 영서인 춘천·원주만 해도 지역감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죠?
이 지역감정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도청 인사가, 도지사의 인사가 이 지역감정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를 테면 춘천 출신 도지사가 들어오면 춘천 출신들이 약진하고 강릉이나 영동권 출신 도지사가 오면 강릉 영동권 도청 공무원들이 약진하고 원주 지사가 오면 원주권이 약진하고 이런 형국이죠.
이런 인사가 강원도에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다.
지사님, 현재 한번 볼까요?
현재 강원도청 과장급 이상 출신들을 보면 춘천이 27명, 제일 많습니다.

강릉이 21명, 원주는 인구가 제일 많은데 8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지사님이 춘천 출신이고 강릉 최 씨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원주시에서 공무원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도청 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이건 지사건 시장이건 탕평인사를 주문하는데 탕평인사를 함으로써 조직의 분위기가 확 살아나죠?
골고루 기회가 가고 또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여러 가지로 좋죠.
한 군데에 고립되다 보면 조직의 건강성도 훼손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탕평해야 된다는 이념을 갖고 계시기를 바라고, 제가 보면 지사님의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지사님만큼 마음을 쓰고 업무를 돌보고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있습니까?
패거리를 안 만드시면, 도청 직원들이 지사님만큼 의욕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도청을 확 뒤흔들어 놓으니까 공무원들의 의욕이 뚝 떨어져서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예, 있었어요.
지사님, 기초자치단체장 빼고 다 새누리당이고 국회의원 다 새누리당이고 도의원 대부분 다 새누리당이고, 엄혹하다고 할까요, 이런 엄혹한 정치 현실, 지사님을 싸고 있는 정치 환경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사님이 가장 믿어야 할 곳은 바로 도청 공무원들이다,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들을 잘 움직이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도립의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의료원 생각하면 우리 의료원경영개선팀, 양민석 과장님 이하 팀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원주하고 삼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흑자를 냈습니다.
5개의 도립의료원에 대한 경영 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부채가 813억 원, 지난 5년간 적자가 330억, 연평균 66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모두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도립의료원의 단체협약을 보셨나요?
이 단체협약을 보면 도저히 황당해서, 전 세계 통틀어서 이런 단체협약은 없어요.
이것은 단체협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노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노조만을 위한 협약이다, 원장의 경영권을 근본적·근원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훼손 정도가 아니고.
이게 오히려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그런 규약이라는 것을 노조원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초의료원장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어요.
이제 해지가 되었습니다.
노조가 농성하니까 지사님께서 박승우 원장 퇴진 압력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잠잠하게 주저앉았는데 다시 또 박승우 원장을 4월까지 퇴임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계세요, 그렇죠?
박승우 원장님의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인데 6월 말까지 임기 보장하실 겁니까?
보장하실 거죠?
그러니까 보장하신다는 거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박승우 원장님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말씀하셨고 박승우 원장의 독단에 대한 노조의 주장과 항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승우 원장의 결단은 타 의료원장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의료원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아마 지사님도 내심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말을 끊겠습니다.
올해 삼척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이 흑자를 어렵게 냈지만 앞으로 이 단협이 있는 한 흑자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스물 두 가지 다 말도 안 됩니다.
먼저 의료원 노조가 생존을 걸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보이면 도민들께서도 노조를 용인하시고 응원하시겠죠.
저는 그 이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의료원 노조문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단을 하세요.
지난 8대 도의회와 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의료원 노조 개혁에 대해서 8개 항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 3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고 실행을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우리 지사님의 따뜻한 성품이 도정의 개인 간의 관계에는 좋지만 도청 전체에는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사님의 굿 맨(Good Man), 좋은 사람 이미지에 스스로 갇혀서 결단을 못 내리시고 상황에 이끌려 가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정 부담스러우시면 의회와 토론도 하시고 노사 간의 공개 토론도 하시고 도민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는 거죠.
도립의료원의 소상한 실태를 도민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진주의료원은 매각도 아니고 아예 폐원을 해 버렸어요.
고용 승계를 보장한 매각도 아니고 민영화도 아니고 폐원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진주의료원 폐원을 보면 말이죠, 경상도가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소재지인 경상남도 서부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67.2%의 도민들이 의료원 건물을 청사 건물로 쓰게 해 달라, 단 16.7%만이 다시 의료원으로 재개원해 달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도민들께서는 의료원 문제에 대해 소상히 정보를 파악하신다면 어떤 답변을 하실까요?
의료 사각지대라고 해서 도립의료원의 공적 의료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립의료원이 공적 의료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도립의료원을 이용하는 서민계층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 20%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거대 병원들이, 도립의료원보다 큰 병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원주·강릉 같은 경우에는 도립의료원의 공적 의료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결단만 남겨둔 문제이지 지사님이나 저나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립의료원은 지금 여러 가지 공적 의료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미 다 민간병원에서도 하는 사업들입니다.
특별하게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요.
공적 의료기능을 하려면 노조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료사업 시행 시 노조 합의, 이렇게 3번 항에 나와 있어요.
매년 엄청난 도민의 세금을 잡아먹으면서, 투입하면서 공적 의료기능도 미약하고 66억의 적자가 매년 들어가는 이런 의료원, 정말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의회와 8개 항에 합의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부지하세월로 이렇게 놔두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4월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무려 1조 7,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삼척·동해에 엄청난 고용창출과 경제 파급효과가 날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 경제에 중요한 백년대계가 될 사업이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1. 질문부제 :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예산확보 등을 통해 사업추진 예정
처음에 예측을 잘 못 했으나, 예산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임.
또한, 삼척시민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예정임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해양수산부 예산 513억 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도 이미 2년 전에 끝났고 예산도 내려와 있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삼척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삼척시민들의 우려는 당연하죠.

진작 강원도가 나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해양수산부에 쫓아 올라가서 자꾸 독촉하고 조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이었어요.

방치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발생할 것을 예측을 잘 못 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게 말이죠, 해수부에 민원을 넣고 하니까 해수부 내에는 이런 기류가 있는 거예요, 민원이 있으면 안 하겠다, 다른 데서는 서로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굳이 동해항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척시민들이 굴입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5억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죠?

아시죠?

삼척시민들이 요구하는 굴입식, 기본 돌출식, 또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5억을 들여서 발주했는데 7억까지 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기존에 내려와 있는 513억 예산이 동해항 북방파제 설계 착공비인데 당초 계획대로 여기에 쓰지 않아서 엉뚱한 용역 결과가 나와 울진항으로 옮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중차대한 문제, 강원도 경제에 엄청난 기반이 될 이런 사업들을 국책사업이니 뭐니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울진항으로 간다면 지사님은 강원도에 큰 죄를 짓는 것이죠.

동해항 해양침식문제 협의회, 진작 이런 것이 나오고 했어야 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떻게 나서서, 고충처리위원회가 공식 라인도 아니고 스태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충처리위원회가 이것을 나서서 주관을 해야 될 정도로 일이 이렇게 되어서야, 이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지사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라인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듣건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조직을 차라리 키우고 서기관도 한 명 주고 사무관도 한 명 주고 해서 오히려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도내 상수도 문제, 이 도내 상수도 문제가 좀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사님께서 실무자들로부터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영월·평창·정선군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백·고성이 환경공단에 곧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관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3년 전에 충청도 어디에서는 고추장에 독약을 풀어서 한바탕 야단이 났었는데 이게 환경공단으로 이전되면서 정수장 관리 인원이 반으로 푹 줄어버렸어요.

평창을 예로 들면 6개 정수장 중에 4개 정수장은 주야간 24시간 내내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큰일이죠, 큰일.

환경공단에 위탁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상 요점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직접 관할하는 정수장에 총기류를 지급하는데 이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정수장에는 총기류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인원도 반으로 푹 줄고.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CCTV는 노후되어 있고, CCTV 사각지대가 있죠? 요즈음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이 횡행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독약을 확 던지고 나오는데 CCTV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보안회사가 출동하는 데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30분에서 1시간 동안 물은 공급이 돼요, 독극물이 풀어진 물이.

이건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더구나 영월·평창·정선은 환경공단에 위탁하고 나서 요금이 기존의 다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요금보다 2배, 3배가 많습니다.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꼭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칫하면 강원도가 뒤집히죠. 요즈음 돌연변이들이 하도 많아서, 인구가 많으니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잘 챙겨주시고요, 사회복지 예산이 늘고 복지 업무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의 사회복지직은 정원도 못 채우고 있어요.
또 인사상 불이익도 많이 받고 있고.
이른바 지자체 인사의 맹점 중의 하나가 제너럴리스트는 고위직에 올라가는데 스페셜리스트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 전문가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 업무는 전문지식과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 노하우가 필요한 자리인데 강원도는 그렇지 못해요.
지난 12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복지 부서에 1개 팀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직은 과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여기에 계장을 전부 일반행정 사무관들로 앉혔습니다.
복지직의 계장이 한 명도 없어요.
복지 수요와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일반행정가들에게 맡길 것인가.
지금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43명인데 18명만 복지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행정가이고.
그다음에 강원FC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FC 창단시절에는 강원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도민들의 화합에 기여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계륵,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채가 48억. 부채는 늘고 성적은 떨어지고.
강원도가 40억, 강원랜드가 40억 지원하지 않으면 바로 없어지는 것이죠.
지사님, 도민의 세금으로 그야말로 링거를 꽂고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시간 관계상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성남FC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성남FC를 인수하고 1년 만에 FA컵 1위로 만들었어요.
1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절박함과 다급함으로 만들었다, 우리 강원도정도 절박함과 다급함이 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강원FC에 7명의 감독이 있었는데 다섯 명의 감독이 현 사장 임기 내에 경질됐습니다.
성남FC를 1위로 이끈 김학범 감독, 강원FC에서 쫓겨난 감독이에요.

브라질 감독을 2억에 모셔와 놓고서는 사장 말 안 듣는다고 9개월 만에 쫓아냈습니다, 봉급은 다 주고.
축구 운영은 감독에게 일임을 해야죠.
축구를 안다고 일일이 사사건건 관여하면 감독이 역량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감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출장을 가셔서, 국장님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정책에 동감하시고 같이 가시나요?
그러면 교육감님의 답변이라고 의제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부모의 부와 계층이 교육을 통해서 자식에게 세습됩니다.
교육이 꿈의 사다리, 계층 이동의 사다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패배감과 좌절감과 분노의 씨앗이 되고 불평등의 뿌리가 됩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교육 양극화에 대한 도정질문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교육 양극화에 관련된 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수집했어요.
좀 들어 보십시오.
서울대 입학생들 중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서울대에 입학한 서울지역 일반고 졸업생이 523명인데 이 중 절반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출신 아이들이에요.
이 강남 3구 출신 아이들의 서울대 입학비율은 해마다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점점 더 서울대에 입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서울의 K구 같은 가난한 동네는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한다 해도 서울대에 못 가고 서울 중위권 대학에 갑니다.
국장님, 소득격차가 학생들의 학과점수에 어떤 점수 차로 나타나는지 혹시 자료를 보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은 국어・영어・수학 성적이 192.63점,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학생은 218.32점, 부잣집 아이들의 학과점수가 25.69점 높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왜 높을까요?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고액의 과외를 많이 시켜서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통계청의 2013년 연간 가계 동향을 보면 소득 상위 20% 부잣집 아이들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50만 4,300원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 7만 6,600원의 6.5배, 거의 7배의 사교육비를 더 들입니다.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강원도의 2배인 33만 5,000원, 사교육비를 강원도의 두 배를 씁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일반고의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서울대에 얼마나 가는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자료는 만들지 않는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만들어요.
교육부가 지난해 작성한 서울대 진학 일반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 1,525개 고등학교 가운데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고등학교는 42.3%인 648개 교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가는 일반고 출신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2010년에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일반고가 811개 교였는데 지난해에는 648개로 163개 교가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런가?
특목고・사립고・자사고・과학고・외고 이런 귀족학교 아이들이 서울대를 많이 가니까 보통 일반고 아이들이 못 가는 겁니다.
부가 이렇게 교육을 좌우하는 거죠.
강원도에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입학생을 배출한 학교가 몇 개 교나 됩니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내는 통계가 있는데 어떻게 강원도는 서울대에 몇 명이나 보냈는지, 어느 학교를 보냈는지 파악을 못 합니까?
작년에 서울대 김세직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생 100명당 과학고 출신이 41%, 외고 출신이 10%, 일반고 출신은 0.6%밖에 안 돼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고소득 가정의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저소득 가정의 학생보다 9배가 높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은 저소득층 학생이 27%, 고소득층 학생이 70%로 두 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자녀가 부자가 될 확률은 15%밖에 안 돼요.
가난한 집 아이들 85%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사회 갈등을 낳고 사회적 비용을 낳고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키고.

대학 입학이 본인의 노력과 창의성으로 좌우되어야 하는데 부모의 부로, 할아버지의 부로 좌우되는 거예요.

교육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서 교육이 꿈의 사다리는커녕 계층의 세습 통로가 되는 것이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2. 질문부제 : 교육 양극화 해소 관련

답변요지 (교육국장 최종국) :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비 지원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경상남도는 무상 급식을 없애고 그 돈으로 빈곤층 아이들에게, 학력 차별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최문순 지사님과 힘을 합쳐서 한번 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또 다른 재원이 어디서 납니까?

국장님의 땅을 파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무상 급식, 무상 교복을 확대하겠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매년 도의회와 힘겨루기를 하면서도 무상 급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중도지인 한국일보하고 한국재정학회가 올 2월 초에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복지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62.7%는 비례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선택적 복지는 24.3%가 찬성을 했고 무상 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는 11.9%만이 찬성을 했어요.

비례적 복지란 부자에게 덜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더 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63%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를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줄여야 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40.7%가 무상 급식부터 줄여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무상 보육순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무상 급식은 부모가 져야 될 부담을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료가 있어요.

2012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는 국가에 자기가 받는 혜택보다 4억 3,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요.
그런데 현 60세 이상은 8,000만 원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는 8,000만 원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보지만 우리 손자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4억 3,000만 원의 세금을 국가에 더 내야 됩니다.
이 마당에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을 내 자식, 내 손주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제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기고 자살한 세 모녀가 집주인에게 쓴 마지막 쪽지입니다.
A시에 사는 9살 철수는 주로 식은 밥에 김만 싸서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쌀이 부족해서 매일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요금을 못 내 가스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엄마 없이 사는 이 집 삼 남매는 급식이 없는 방학, 난방이 안 되는 겨울이 두렵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지만 빚 갚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방 두 칸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철수보다도 못한 아이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빈곤 가정의 아이들 절반은 수시로 굶습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42%가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전체 아동의 절반이 주 4회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취미 생활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생일은 엄두도 못 내고 과일과 야채를 먹지 못해서 영양 불균형 상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사회통합을 해치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 발전과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압박합니다.
복지예산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자연 증가분이고 보편적 복지 예산이라서 정작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지 대란으로 온 나라가 야단법석입니다.
바로 보편적 복지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정작 필요한 빈곤층·서민층의 복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힘 있는 중산층과 부유층의 표를 사기 위한 매표행위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빚을 내는 상황인데도 무상급식을 늘리려고 매년 도의회와 힘겨루기를 합니다.
강원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5만 5,000명, 차상위 계층이 5만 명,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못한 생활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1,710억 원, 한 명당 월평균 25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의 뜻대로 전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1,367억 원이 매년 들어갑니다.
이 돈을 이렇게 고통 받는 서민층·빈곤층에 쓴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복지의 본령에 맞지 않겠습니까?
이 비수급 빈곤층은 월 52만 원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6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극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굶는 사람이 20%, 겨울에 난방을 못 하는 사람,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37%, 비수급 빈곤층의 총 자산 486만 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총 자산 559만 원밖에 안 됩니다.
빈손입니다.
국가 간 불평등은 줄고 있지만 국가 내 불평등은 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를 고집해야 되겠습니까?
부자당이라는 보수는 그렇다 치고 서민층을 대변하겠다던 진보는 어디로 갔습니까?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서민층보다 중산층·부유층 표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굶는 아이들을 팽개치고 나만 당선되면 되는 것입니까?
부자에게 덜 주고 빈자에게는 더 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안전망, 조세정의, 복지 본령에 맞는 정책입니다.
그것이 정책이 품어야 할 휴머니즘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수 군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꿈을 이룰 수 없어도, 싸움에 이길 수 없어도, 슬픔을 견딜 수 없다 해도,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어라.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나서 결전에 나서라.

그대들의 세상이 올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5. 3.1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이종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춘천출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춘천 출신 이종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을 모시고 강원도정의 운영 방향과 강원교육 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사님께서는 평소에도 열심히 하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사님이 힘드신 만큼 도민들은 편안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많이 뛰시고 더 열심히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더 알차게, 더 효율적으로 뛰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인 레고랜드코리아에 대하여 어제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과의 자세한 질의응답 중에 중복되는 게 있어서 본 의원은 생략을 하고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사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2017년 개장 예정인데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요사이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문화재 보존을 강조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레고랜드 사업을 여야의 문제 또는 진보·보수의 문제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레고랜드 문제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는 멋진 별칭을 갖고 있으면서도 레고랜드는 그에 걸맞은 콘텐츠를 지니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우리 춘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미래의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지사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2017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혹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도민들과 춘천시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요즘 동계올림픽을 문화·관광올림픽으로 치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죠?
본 의원도 문화·관광올림픽이 바로 애프터 평창을 대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은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로만 알고 있던 대한민국을 드디어 전 세계 각국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준 계기는 88서울올림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어떤 사람이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입니까, 아니면 서비스산업, 관광산업이었습니까?
바로 2차 산업 제조업인 굴뚝산업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낸 것 아닙니까?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비로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로를 개척하고 2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강원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로 남는 올림픽이 되어야 된다고 지사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보면 3차 산업, 즉 지식문화산업과 관광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지사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비중이 대략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55% 정도 되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앞으로 3차 산업 비중이 70%가 되려면-산업구조만 본다면-55%로 계산했을 때 15%는 더 높아져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발시켜 3차 산업 비중을 높이고 3만 달러 시대,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떠한 계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계기가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닌가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청정 자연환경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우리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3차 산업인 문화·관광올림픽으로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는 일대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사업이고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 그렇죠?

올림픽 이후에도 더 많은 내·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먹거리, 잠자리, 놀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를 충분히 준비하고 시민들의 친절한 봉사의식과 언어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관광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체부와 조직위와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경기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올림픽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문화·관광올림픽이 잘 되리라 기대하면서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우리 도의 재정이 파탄이 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어떠한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신년 시정연설이나 신년연설, 그리고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최문순 도정 1기가 동계올림픽 준비 등 도내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비적 도정운영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도정운영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죠?

그렇다면 지사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정 2기의 공격적인 도정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밖으로 열심히 뛰시는 만큼 도청 안에서도 지사님의 도정운영 철학과 비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질문부제 : 도정 2기 운영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인프라 확충 및 도민소득 증대 제일 큰 과제는 역시 올림픽 준비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우리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동해항 3단계 공사, 양양공항 확충, 이런 인프라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

이상으로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안 계시니까 정책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관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특별교부금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강원도교육청은 2014년 평가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도교

육청은 작년에 도 단위 9개 지역에서 7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이 8위, 전라북도교육청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9개 도 단위 지역에는 686억 원이 지원됐는데 그중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6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원액의 8.8%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1위를 한 경상북도교육청은 16%인 110억 원을 차지한 데 비하면 거의 2배나 적은 액수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가 지원액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우리 강원도교육청 학생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평가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교육 성과와는 무관한 단순 실적 중심의 지표가 대부분이며 재정 투입을 유도하는 지표가 많아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지나친 성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상대평가로 인해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진보 교육감님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이 재직 중인 전라남도교육청이 5위를 차지하며 중간급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별교부금도 77억 정도를 받아 우리 강원도교육청보다 17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최소한 중위권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5년도 평가부터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표 등을 평가 지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도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15년도 평가는 잘 준비해서 최소한 하위권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에 따른 평가 지원액이 강원도교육청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부제 : 전국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답변요지 (정책기획관 민관식) : 성과와 반성을 통한 성적 향상에 집중

교육부에서는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등위별로 차등을 두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음.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평가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다음은 최종국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월 2일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린 가운데 이날 개교와 함께 입학식을 하려던 강원도 내의 첫 공립 대안학교인 횡성의 현천고등학교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천고등학교 입학생 46명은 입학식은 물론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수업과 기숙사 생활을 당분간 춘천에 있는 강원학생교육원에서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횡성에서 수업을 언제쯤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3월 2일 개학에 맞추기 위해서, 토목이나 건축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방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땅이 파지지 않는데도 관로 작업을 하고 또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했으며 부직포나 열풍기 등을 쓰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개교도 못 한 데다가 부실공사 우려까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제 의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교가 늦어진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말이 된다고 봅니까?
만약에 일반 학교가 준공 지연으로 입학식을 못 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횡성 현천고등학교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13년 10월에 착공을 했지만 착공과 동시에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공사가 중단돼 실질적인 공사는 10개월에 불과하고 짧은 공사기간 안에 학교 건물을 짓는 자체는 무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신설하면서 계획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검증을 통해 실시하였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국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에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올해 전면 시행을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시범 학교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시범 운영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방침은 201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무슨 이유로 1년 먼저 시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시도교육청 실시 현황도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강원도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이러한 활동을 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을뿐더러 인근 관공서나 기업체들도 학생들을 쉽게 받아주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있는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여러 명의 중학교 1학년학생들이 움직이다 보니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계획했던 체험활동을 시키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인 점도 있으므로 체험활동 실시 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켜서 당초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자유학기제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방 이후 70년간 강원도에는 새로운 철도가 건설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제가 침략을 위해 건설하고 간 철길 1호,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250㎞도 안 되는 고불고불한 철길 1호, 오늘도 무궁화호가 평균 시속 50㎞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어 주권을 찾고,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세계 15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목포까지 시속 300㎞로 달리는 KTX가 하루에도 수십 대씩 왔다 갔다 하는 오늘날 오로지 철도 노선만을 놓고 보면 우리 강원도는 아직 광복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지난해에 우리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이면 세계인의 대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단합해도 해낼까 말까 한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말씀대로 지역·혈연·학연·지연·정파를 초월해서 오직 강원, 오직 도민만을 보고 나아가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3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강원도가 맨 앞에 서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5. 3.1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홍성욱 의원 [새누리당, 태백시 제2선거구 출신]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소 도시 태백시 출신 홍성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를 향한 도정을 펼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열린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85년부터 시작되어 급격하게 진행된 폐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폐광지역인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과 강원도 간의 역할에 있어 그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계획을 확립하여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은 1985년부터 시작된 무차별적이고 무계획적인 폐광정책으로 인해 인구는 3분의 1로 감소하였으며 경제기반이 모두 무너져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간 우리 태백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은 살아남기 위한 각종 노력으로 1995년 폐광지역 회생의 기초 법인 폐특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폐특법의 중요사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한 정부와 폐광지역 간 각종 지원 사업의 근거를 확보함이 첫째 중요사항이며, 두 번째 중요사항은 강원랜드라는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는 종잣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은 폐특법을 근본으로 하여 각자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며 지난 20년을 오로지 지역회생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20년의 기간과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 현실에 있어 과연 폐광지역이 얼마나 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를 되짚어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특법의 2차 연장으로 2025년까지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난 20년간의 과오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10년은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도지사님과 관계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88년 스몰카지노로 출발하여 현재 대규모 시설과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종합리조트로 발전하여 폐광지역에 3,146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296억 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조성 납부함으로써 강원도가 7,660억 원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2011년 1,246억 원을 기점으로 매년 이익금이 감소함에 따라 2014년에는 1,146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그간 경마, 경정, 경륜 사업에만 부과하던 레저세를 카지노 사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하고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이에 대하여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기조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는 이미 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총매출액의 10%를 부과하고 있고 1992년 1월 1일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총매출액에 부과함으로써 455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금이 100억 원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세금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초 국회 안대로 레저세가 총매출액의 10%, 그다음에 교육세와 농특세 2%를 포함해서 총 16%가 부과된다면 강원랜드의 이익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익금의 25%를 가져오는 폐기금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레저세 추정액이 약 2,044억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폐기금은 약 420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강원도의 이익배당금이 99억 원, 그다음에 정선의 주민세는 36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액 555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상에 응하실 때 손해를 보는 금액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결코 강원도가 손해를 보는 그런 협상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이득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정부의 행자부 장관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막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협상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조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관하여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은 강원랜드 이익금 중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약 7,760억 원을 지원받아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현재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이 기금은 강원도에서 공통기금이라는 명목으로 20%를 4개 폐광지역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각 시·군에 20%씩 배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재원임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년간의 폐기금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폐기금은 분명 무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폐특법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만 지급되는 유한한 기금이며 이 기금은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중요하게 쓰여야 할 종잣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금은 SOC 사업과 민원해결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군 단체장의 공략사업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강원도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까 기금운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가 역량이 모자라지 않은데, 별도의 외부기구는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18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

광지역에는 폐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전 보조금, 교육사업 중 방과후학교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감자원정대 등 상당수의 사업이 다른 시·군에는 일반회계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생각해 보면 국·도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기금을 쓰도록 하여 국·도비를 아끼고, 즉 앞에서는 지원하고 뒤에서는 관련 예산만큼 일반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 애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치사한 사람이 줬다 뺏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수백억의 예산을 주고 계신데 뒤에서 살펴보면 폐광지역의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의 특별회계에서 도와주고 일반회계에서 결국 다 삭감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산 증감률이나 모든 것을 따져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도 공통기금 중에 사용목적이 다르게 쓰이는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매칭 사업에 폐기금이 2013년에는 13억 7,400만 원, 2014년에는 40억 600만 원, 2015년에는 79억으로 합계 132억 8,000만 원이 쓰였음을 밝혀낸 것입니다.
 즉 경제자립형 개발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비매칭 도의 일반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 공통기금에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약속하시는 겁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사님의 그런 말씀에 많이 속았거든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와 같아 보이는데 확실한 대답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 사항은 올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기조실장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방금 나가셨기 때문에 발언대로 불러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폐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 말고 폐광지역에 지원되는 돈으로 비축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 현재 약 820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재 기금의 사용은 2011년도에 수립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며 2015년에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1년도에 388억, '12년도에 170억, '13년도에 100억, '14년도에 46억, '15년도에 34억으로 대폭 감소되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최근 폐광지역의 사정을 살펴보면 폐특법상에 지원되던 진흥기금이나 많은 기금들이 모두 중단되고 현재는 폐기금과 비축탄기금, 경제자립형 사업만 지원되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맞춰 비축탄기금을 확대 편성하여 어려운 폐광지역의 경제회복에, 적기에 지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기금의 이자수익을 바라보고 기금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실제 800억 규모의 이자수익이라고 해 봐야 10%라고 봐도 80억이 채 안 되는, 이자수익을 기대할 기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단체 생활을 할 때 석탄산업과에 가서 자금요청을 하면 하는 말이 "강원도에 비축탄기금이 수백억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와서 조르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바에는 이자수익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기금을 어려운 폐광지역이 일어설 때 제때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주민들이 다 떠나고 없는 마당에 누구를 위한 복지사업에 쓸 것이며 생활 향상에 쓸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어날 기력이 있을 때 약도 처방하는 것이지 완전히 쇠진하고 난 다음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지방시대에 있어 18개 시·군과 강원도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상명하복(上命下服)시대에는 지사님의 역할이 조금은 수월하셨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시대인 지금 지역 간의 갈등과 시·군과 강원도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현시점에서 강원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사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 편에서 봤을 때는 못된 자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항명이라면 항명이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와 시·군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지사님, 전에 드린 질문인데 지금까지 우리 폐광지역은 각자의 지역에 맞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의 정책은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폐광 4개 시·군은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만 경제회복에 있어 시너지 효과로 인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지사님께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지사님, 저희들 시·군의 역량을 보면 사실 각종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입안하는 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큰형 격인 도에서 동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이런 정책개발을 하고 4개 시·군을 아우르고 의견을 모아서 어떤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지사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사님, 저희 폐광지역 주민들은 소외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제가 박현창 의원님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욕심이 너무 많다고요.

모든 신경과 이슈가 그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폐광지역은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강원랜드가 우리 강원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 정부와 국회에서는 강원랜드에 대하여 각종 규제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강원도의 존재감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 각종 현안을 짚어보면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설립 요구와 레저세 도입 요구,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은 해결됐습니다만 강원랜드 직원의 대량 해직통보 사태, 이에 관한 강원도의 입장강화 노력 등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자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 질문은 다 되어 가는데 지사님의 답변이 점점 짧아져서 참 난처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참 좋으시고 저희들도 동참할 뜻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보면 과거와 지금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예전에 지사님께서는 강원랜드와 관련된 모든 각종 업무를 보고받고 정확히 아셨는데 이번 해고사태 같은 경우를 봐도 해고 발표가 나기 전까지도 언론을 통해서만 알았지 강원도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주시고 강원도가 제2의 주주로서 권한을-권한이라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행사하셔야만 강원랜드가 강원도의 품으로 돌아오지, 지금은 모든 인사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지 강원도나 폐광 4개 지역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식 또한 본인들을 엘리트집단으로 생각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도 조장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분명히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해서 탄생한 회사이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생긴 회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답변이 시원시원하고 제가 긴장을 한 탓인지 말이 점점 빨라져서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라서 적어놨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100만 불짜리 미소하고 스킨십과 공손한 성격은 우리로서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이러한 강점 때문에 본 의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지사님과 직접 면담을 하면 모든 일을 다 해 주실 듯 생각을 가지도록 말씀을 하셔서 고마운 마음으로 기다리면 정작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사님과의 만남이 짧은 본 의원으로서는 지사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이 어렵다 못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사님, 이제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해 주시는 게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해가 생겨서 앞에 있는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외부 다른 분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사님과 면담을 할 경우에 “예, 예.” 하시다 보니까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려오셔서 저희들한테 지

사님이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가져오라든가 해결을 하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돌아다녀 보면 철벽도 이런 철벽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캄캄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지사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지사님이 세 번 "예, 예, 예." 하시면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지속된다면 열 번은 하셔야지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1. 질문부제 : 강원랜드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다각적인 강원랜드 활용방안 모색 추진

내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에 대한 독점권의 해제가 가장 큰 걱정이 되며,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다만 반대만 하는 것으로는 수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복합문화예술도시로,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만드는 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 관계자들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음.

도박은 약 30%의 매출밖에 차지하지 않는 공연 중심의 레저시설, 그다음에 가족 중심 그리고 국제형,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복합레저도시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요구를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 경로로 의견을 모으고 있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폐광지역은 지금 겉으로는 화려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투입된 자금 때문에 최소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속설에서 벗어날 정도로 깨끗한 면모와 발전의 기반은 다 갖췄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폐광특별법이 2025년까지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4개 폐광지역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폐광지역에 수조 원을 투입하였다는 일반적인 통계만 보고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도 못 한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내면을 보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앞에서는 수조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은 국가라든가 도에서 투입해서 이루어져야 될 SOC 사업에 사업비의 80% 이상이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특별법으로 지원하고 뒤의 일반회계에서는 다 잘랐습니다.

저희 폐광지역의 15년 동안의 예산증액 규모를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부분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딱 3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12·12데모를 해서 폐광지역에 500억~600억의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한때를 제외하면 지금은 비슷한 규모의 시·군보다 태백시의 예산이 오히려 적습니다.

이러한 점을 봐서 다소 무리한 듯한 요구를 하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감안하시어 저희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5. 3.20)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용래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3선거구 출신)

강원도민의 열망을 가슴에 담고 불철주야(不撤晝夜) 발로 뛰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친근한 미소로 도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누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저희 지역 포남2동의 박용백 회장님을 비롯한 통장님들과 단체 회장님들 반갑습니다.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강한 도의원, 제일 강릉의 꿈을 키우는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000만 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하여 도 기관이 특정 시·군으로 입찰업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견적입찰이라는 이유로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업체 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시행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 기관으로서는 18개 시·군 전체에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규모 영세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지역을 한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지역으로 입찰을 제한한다는 것은 좀 어긋나지 않는가?

그게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도는 강원도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그 점을 한번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기회가 강원도 전체에 널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올 연초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본 의원이 볼 때 3,800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강원도 전체에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올림픽을 유치하면 강원도가 획기적인 발전이 되리라 기대하고 세 번에 걸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정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아진다면 무엇이 좋아질지, 고속철도가 생기는 것 외에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이 정말 우리의 우려처럼 강원도에 빚만 떠안기고 그냥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이미 동계올림픽 개최 효과에 대한 회의와 비판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최문순 지사님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시설물의 활용도라든지 성공 개최 이런 방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인이 모이는 올림픽이 열리는 기회를 정말 강원도가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무엇인가가 준비되고 있느냐는 것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많이 들었고요, 어떤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일본의 나가노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개최국이 경기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이렇게 무지개 빛 수치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강원도가 가진 자원과 매력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강원도 관광산업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의 강원도 문화관광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한국 관광의 1번지로 앞서 나갔지만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개발 수단으로 관광을 선택해서 이것이 레드오션(red ocean) 시장으로 진입했어요.

그래서 국내 관광시장은 정말 치열한 경쟁 상태로 돌입했는데 강원도 관광의 특성이 자연관광 위주였거든요.

보면 계절성, 기후성, 시간성 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투자도 물론 소극적으로 했지만 KTX나 전국 고속도로망이 좋아지면서 다른 관광지에 비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태까지 볼거리관광에 안주해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육성을 한 타 지자체에게 비교우위를 빼앗겨서 우리의 자연관광력은 감소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의 관광을 보면 연간 41%가 피서철에 집중되어 있어요.

또한 유명 관광지에 집중되어 있어서, 또 체류형 콘텐츠도 많이 부족하고요.

따라서 강원도는 문화관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마침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발판을 계기로 관광 매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에코힐링관광, 생태자연관광, 그다음에 개별여행, 체험관광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시설물 활용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누구보다도 잘 풀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강원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하거든요.

지사님, 혹시 영국의 내셔널 트레일이라든가 프랑스의 랑도네, 뉴질랜드의 워크웨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레일 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유명한 걷기 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3대 트레일 하면 강릉의 바우길, 그다음에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그런 것들이 유명한데 제가 대관령휴게소를 지날 때 늘 보면 강릉 바우길을 찾는 사람들의 버스가, 주말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주말에 버스가 꽉 차 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차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으로 흩어져 있는 이러한 걷는 길을 관광, 역사, 문화, 예술, 지역의 우수자원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그런 콘텐츠가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정신적·육체적 힐링욕구와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걷는 길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지만, 걷기 관련 행사도 많아요.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면 걷기 힐링열풍이 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아시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는 것을 아시죠?
국내에서는 제주도 올레길이 이미 많이 알려졌고 강원도에도 각 지자체마다 길이 있어요.
도와 민간단체에서 201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길을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화면을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원래는 삼로트래킹길이라고 해서 올림픽이 열리는 정선·평창·강릉을 잇는 길입니다.
그래서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의 명칭을 삼로트래킹길이라고 하기보다는 올림픽바우길이 오히려 더 알리고 올림픽을 치르는 지역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코스를 3년 계획으로 개발해서 올림픽 직전까지 마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길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강원도에는 태백산맥을 주축으로 남북으로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에 비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과 현대의 자연친화적 힐링수요에 부합하는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는 우리 강원도가 걷는 길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대관령휴게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쪽이 도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올림픽바우길을 조성하면서 이 대관령 일대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걷는 길의 메카이자 중심지로 브랜딩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여기에 대관령트레일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쇠둘레길, 산소길, 디엠제트평화누리길, 화랑도순례길, 미시령옛길, 바우길, 태종대길, 원주의 구비길, 해파랑길 등 약 20개 정도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체계와 정비를 잘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지도도 낮고 자금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길 조성사업을 도 차원에서 클러스터화해서 현재 계획 중인 정선·평창·강릉을 잇는 코스 외에도 강원도 전체의 걷는 길로 통합할 수 있는 대관령트레일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붐 확산에 따른 체계를 유지·관리하는 것을 지자체나 인접마을의 사업 지원이나 민간참여 방안 등을 연구해서 종합 센터로서 정보제공도 하고 관광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안전관리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올림픽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 말요?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참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점이 경기장 재배치니 이런 것을 논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잘 치를 것인가에 매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불식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올림픽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직위와 IOC와 강원도 그리고 치르는 시·군들 간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올림픽에 매진할 수 있고 올림픽의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강원도가 가진 자원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시도들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고 또 민간의 이런 시도들을 선별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간다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올림픽 이후에도 이분들이 강원도를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올림픽을 치르는 도시만이 강원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체가 아우러져서 이것을 통해 또 하나의 강원도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1. 질문부제 : 문화 올림픽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길을 활용한 문화올림픽 추진
올림픽바우길 그리고 대관령트레일센터 건립 등 아주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부진하던 강원도의 길들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음.
실무부서하고 시·군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하겠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창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창원에 가셔서 소득이 좀 있으시나요?

그것은 제가 차후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지금 교육감님의 2015년도 핵심 추진과제가 시설복지, 수업복지, 교실복지죠?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그 부분하고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관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지침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자 기간제 근무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셨잖아요.

그리고 다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저도 찬성은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소규모학교 중 19개 학교에-분교를 포함해서-신입생이 1명도 없어요.

그다음에 신입생이 1명인 학교가-분교를 포함해서-28개 교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2,769명, 고등학생은 985명이 줄었는데 2015년 3월 1일 자로 정원관리 38개 직종에 5,489명, 정원 미관리 34개 직종에 974명, 현재 68개 직종에 6,463명의 교육공무직이 있습니다.

2010년 민병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근 6,000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이 있는데요, 교원과 일반직의 정원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교육공무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또한 2010년에 298억에서 올해는 1,480억입니다.

그러니까 1,200억 정도가 증가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추세로 가면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물론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540억을 그 직종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940억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충당하고 있죠?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940억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현재 교육공무직이 학비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보직관리 규정 제5조를 보면 '지역 전보 내 동일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기관의 장은 지역 내 사업 축소·폐지, 학교 통폐합 등 정원 증감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역 간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반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현 교육청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많이 어긋나고 복지는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그다음에 활동의 폭은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하셨습니까?

진행 중이시죠?

안은 올라와 있죠?

그 안에 보면 거기에서 요구한 것 중에 제9조 1항, 제27조 2항, 제28조 1항,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53조, 제79조, 제9조에는 조합원의 공무담임권을 보

장해 달라고 했어요.
‘조합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선거일 1개월 전 휴직을 인정하고 낙선한 경우 낙선일로부터 10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휴직을 신청할 때 3개월로 해 주고 휴직을 유지하고 낙선한 경우에는 한 달 이내로 해 달라는 것이 수정 요구안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거에 나오기 3개월 전에 휴직을 하고 나왔다가 떨어지면 한 달 안에 복직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전에는 1개월이었고 열흘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3개월과 한 달로…….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항은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출마하기 전에 한 달 그러고 나서 10일 이 조항은 있었던 것인데 기간을 더 늘려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27조에 보면 신규채용 및 대체 근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했는데 그것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만약에 쟁의행위로 인해서 어떤 업무가 중단이 됐을 때 전혀 인력을 보충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40조 우선채용 ‘도교육청은 감원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 때 인력풀에 등록하여 우선 재고용한다.’, ‘감원한 자’를 ‘퇴직한 자’로 수정해 달라고 했어요.
퇴직하고도 그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하고 싶으면 받아들여 달라는 요건이고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항으로 볼 때, 본 의원이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주고 지속적인 보장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당연한데 단체협약이나 강원도 교육공무직의 임용규정은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정하잖아요?
그것을 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죠.
앞으로 교육공무직의 복지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이고 매년마다 단체교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인정하는 직종에 대한 급여만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교육청 안에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세세하게 따지자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점을 강원도교육청이 안고 간다는 것이죠.

한 예로 볼 때 춘천교육문화관에는 평생교육사가 5명, 원주에는 2명이 있는데, 또 원주에는 사서실무원이 5명이고 춘천·강릉은 없어요.

이런 유사기관 간 정원의 불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지역 간 교류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하여튼 교육감님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원 조정과 현원 운영권에 있어서 교육감님 스스로가 제약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주체가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교원이나 교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주체가 혼돈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물론 다 같은 교육가족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음은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께서는 시설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설복지 실현과 학교시설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력증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당면하고 있는, 시설직공무원이 10년간 30명이 증원됐어요.

그러면 연 3명이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교육청 일반직공무원 3,500명에 비유한다면 5%도 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에는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나요?

올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따로 채용을 하시죠?

이번에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채용하는 것이 있죠?

자료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최근 시설 분야별에 저런 식으로 업무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학교의 책걸상을 고치는 업무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잠깐 보세요.

내진보강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석면, 라돈 물질 이런 것들은 예전에 없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시설에 대한 그런 분야가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시설

직이 1년에 3명씩밖에 증원이 안 됐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한번 질문드릴게요.

7급을 달고 17년~20년 동안 있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렇게 보면 7급을 달고 20년, 6급을 달고 18년씩 진급을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40대 이상의 기술직이 전체 정원의 71%예요.

그런데 법규 강화, 환경 관련 인식 변화, 교육환경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는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 2,000만 원 이상의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준공까지 지원하라, 또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관리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고, 이러한 이유로 시설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업무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앞으로 10년 후 교육청 시설부서에는 50대 이상의 계장, 차석, 삼석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한 예로 2001년에 공채된 16명의 시설직 중 9명이 타 기관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지금 전문성을 습득한 시설직공무원의 고급인력들이 바깥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봐요.

향후 10년 후를 바라보고 조직 측에서 시설직의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설직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조직의 손실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본 의원이 시설직공무원의 정원 충원을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정원을 관리하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시설직이 늘어남으로써 일반직공무원이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복지를 주창하시는데 학교 시설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학교 행정실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증가하고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 지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시설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안전관리라든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시설과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데 시설업무 비중은 높은데 예를 들어서 배치가 잘 안 되고 이렇다면 업무는 과중되고 일에 대해서…….

학교의 시설업무를 경감해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라고요, 시설직의 시간 외 근무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적체 해소, 그런 것이 개선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시설물에 대한 발전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학교시설 지원강화로 학교업무량도 감소하고 시설 전문인력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10분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교육청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교육감께서 시설직공무원의 확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이라든가 인사, 예산 이러한 모든 사업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실 때는 사전에 우리 교육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상임위에서 몇 차례 주문을 했지만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언론에 먼저 알려놓고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의원을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교육감님이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의회와 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이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교육공무직의 단체협약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분들도 어차피 교육가족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무리한 것은 실정상 지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해 주셔서 하고, 시설직 개선 부분도 증원하는 것에…….

늘 소통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질문부제 : 시설복지 실현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시설복지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시설직의 승진적체 지적을 공감하며,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음.
어느 시기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왕창 들어왔다가 왕창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령대 분포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하는 도정질문이라 다소 서툴었던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조절을 잘 못해서 교육감님하고 지사님께 정말 드려야 될 질문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가 2018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만의 특색 있고 매력 넘치고 정말 다시 찾고 싶은 지역

으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의 부모세대들이 먹고사는 것도 빠듯했을 때 자식들은 가르쳐야 한다는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강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6.1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이정동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원주출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장님께서 지난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시는 왜소증 장애인 수상자에게 자세를 낮춰 눈높이 시상을 하시는 모습에서 10만 도내 장애인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수상자는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와 도의회의 원활한 관계 정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나 기관과 기관의 관계에서는 오는 만큼 가고 가는 만큼 받는 것이 이치이나 최근 모 언론보도를 보면 도의회에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정에 대하여 비협조적이며 충청북도 등 3개 지역 의회와 비교하여 마치 강원도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정비를 받고 있음에도 예산삭감 등 도지사 핵심공약 반대로 도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 도의회가 정말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다수의 횡포로 도정이 어려워지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권한이라야 기껏 예산심사권과 행정사무감사권이 전부인 데 반하여 대다수 집행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대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대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였으나-예결 위원과 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는 저로서는-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을 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안으로 통과를 해 준 바가 있는 그런 사례를 보면 예산심사권의 과다한 행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큰 지적 없이 마무리가 되어 상임위원회별 실·국과 특별한 문제점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봐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도민의 뜻을 받드는 완벽한 의정활동을 하고 도정이 잘못 나가면 질타를 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도의원이며, 도정이 잘못 가면 발목을 잡아서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도의원의 본분일진대 이런 도의원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도정의 걸림돌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저는 언론사의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집행부의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언론보도가 어찌되었더라도 도의회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면 되고, 굳이 따져볼 필요까지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비근한 예로 도민 모두가 의아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예산도 집행부 안대로 원안 의결한 부분과 위원회에서 삭감하고도 증액한 부분을 모두 포기하고 집행부가 내놓은 안대로 예결위에서 의결·통과한 부분을 보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공약을 지켜야 한다면 도의원들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오히려 협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9대 의회 들어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부결한 경우를 보면 명백하게 도민의 의견이나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다수의 횡포를 한 예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련의 의정활동을 하며 도정의 현 상황을 보면 집행부의 뜻에 맞지 않으면 검토해 보겠노라 답하면서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한 바 없고 시정하겠다고 하고도 시정한 바가 없으며, 작금의 현실에서 집행부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굳이 있다면 지난번 도에서 무리하게 시도하였던 원주 종축장부지 문제와 이번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상정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청소년희망장학금 내용이 담겨 있는 청소년육성 지원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 부분에서 우리 도의회가 발목을 잡아 도정현안 추진에 차질을 가져온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현안 추진 사례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가 일반안건 심사에서 다수를 내세워 도정을 방해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는 것으로 회피를 하시는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원만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추경 예결위에서 상임위 심사 중 위원회와 해당 국과 협의하에 상정한 예산을 예산부서인 기조실에서의 막강한 권한으로, 사회문화위원회의 불과 1억 남짓한 금액의 예산 수행을 거부한 기획조정실장님은 지사님께는 충성을 다하셨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 연기처럼 사라짐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도민들과 도의원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부하면서도 일면 실장님께서는 양심에 미안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추가질의 없이 심사에 들어간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 사항이 의회 사상 처음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용 거부에 대하여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의회가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할까요?
언론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순전히 언론사의 판단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회피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회 스스로 강한 의회, 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면서 도 한 번도 강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힘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의회는 도정을 방해하기 위한 강한 의회가 아니며 의회의 위상을 강하고 튼튼하게 하여 의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 시점에서 힘 있는 의회, 강한 의회가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위상은 어디에 와 있는지, 도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여러 경로의 기회를 통하여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부채가 8,000억에 가까우며 알펜시아 부채가 1조,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동계올림픽에 투자되는 비용이 1조 원인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재원 대책도 불분명하다는 정도입니다.

알펜시아 관련 부채 하루 이자가 1억 원이고 여기에 도의 기준부채와 동계대회 추진 후 부채가 추가되는 등등 도민이 들으면 기가 막히고 짜증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우리 도의 재정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엄청나게 불어날 부채로 인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는 예측에는 도나 도의회나 대부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역대 세계 각국의 동계대회는 어느 국가도 흑자를 내지 못하였고 특히 나가노의 경우 그 부채로 현재에도 나가노현민이 올림픽 관련 세금과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강원도는 매년 70억 원을 투입하여 중국관광객을 모셔오고 있고 5분위 이상의 소득층 자녀 중 1만 2,000명에게 연 60억 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춘일자리사업도 막대한 순수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정만 허락된다면 우리 도민의 자녀 5분위가 아니라 전체에게 등록금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중국관광객을 1인당 8만 원이 아니라 더한 경비를 주고 초청한들 누가 그 정책이 나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추진하는 시행자 입장에서야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니 거리낄 것도 없고 도민이 선출한 의원이 승인한 사업인데 내 돈처럼 아낄 이유조차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펴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직 사업이 잘되어 원안대로 추진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성립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야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의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실패를 하여도 현재의 제도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알펜시아 문제로 의회 차원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의회만 머쓱해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선체제의 자치단체가 가지는 폐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도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가 민선체제 이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도민과 시민의 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공직자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실·국장 간에 예산을 쟁취하여 단체장이 원하는 사업을 충성으로 솜씨 있게 성공을 하여야 단체장으로부터 인정받는 현실에서 예산절감은 언감생심 헛구호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의식 있는 기자는 모든 일은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지고 결국 왜곡된 사실만 남게 되어 바로 기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기록되어야 하며, 역사가 중단 없이 이어졌던 것도 수백 년의 일을 오늘의 일처럼 알 수 있는 것도 사관의 불가침권이 철저히 보장된 바로 그 기록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록을 하여, 오늘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은 기록을 통하여 그 성패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몇십억, 몇백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잘못되어도 누구의 책임이며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꼭 양양공항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2013년 이전에는 소액투자로 접어두고 2014년에 70억, 금년에 80억을 투자하고 계속하여 2023년까지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공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집행부의 이론대로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 투자한 예산도 아깝고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투자로 국제공항이 활성화된다면 투자의 효과는 만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70억 원씩 10년을 투자하여 정상화가 된다고 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700억 원 투자사업이 성과가 없다고 본다면 순수 도비를 투자하도록 방치한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큰 죄인이 될뿐 아니라 그때 가서는 이미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덩그러니 빚만 또 도민들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비유를 위한 예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정 규모 이상 도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시행과정은 꼭 기록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기록물로 남아 있어 최소한 앞으로 강원도사에 영원히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며, 지금까지 강원도정이 이러한 기록 없이 흘러와 오늘의 부채를 있게 한 일면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며,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후세에 도정의 지표로 삼을 만한 기록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최초 발의자와 최초 지시자, 중간 결재과정에서 수정되는 내용,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사항, 추진하면서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실패하면 실패하게 된 원인을 기록하여 후세에 도정에 참고할 자료로 분명히 남겨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과정에서 공명심에 따른 무리한 사업시행으로 망치는 사례와 그동안 거론되었던, 의회의 심사내용 중 의회를 설득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면 당사자의 책임문제는 무관하게 그 과정 속에 소재도 분명히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추진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실패가 예견되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도비를 낭비하고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쳐서 도민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말씀에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본 조례를 당연히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도록 할 것이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선 보람이 있을 것이고 시행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후세에 크나큰 죄를 짓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기획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가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하면서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분명사회복지 행정에 블랙홀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분야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을 말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강원도의 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이 과연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교통수단과 산업기술의 발달은 지구 전체의 국가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이런 사회의 문화와 발전은, 더 이상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사고할 시기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우리는 배달민족이고 단일민족이라고 고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국민이건대 우리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완벽한 우리 이웃으로서의 시책이나 정책이 분명치 않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표류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선택적 다문화 복지시책이 추진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이들 가정의 선량한 우리 도민들이 실의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적극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특이하게 우리 강원도만 청춘일자리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려운 강원도 재정에도 큰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강원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순수 도비로 추가하면서 청춘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칭이야 무엇이든 일자리만 창출되면 되는 것이지 도민의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듣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초점을 흐리게 하고, 뭔가 잘못되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나누어 꿈같은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당장이라도 강원도라는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그 속에서 우리 도민은 여유로이 거닐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모두가 현혹되어 도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음은 비록 지금의 도정을 지칭하여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지향하는 종점이 결국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지고 있으며 민선이라는 큰 틀 속에서의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말씀을 언급해 드립니다.

일자리창출사업 그 내면에는 한 달에 10만 원을 받고 고독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점심 한 끼를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위안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일자리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원히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노

인들도 계시지만, 어려운 장애의 멍에 속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허울 좋게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시책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정책으로 예산집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과 국장님의 견해차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향후 장애인종합지원 계획을 사회복지 계획과 분리하여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지원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지원시책이 현재의 땜질식 지원보다 스스로 자립·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지원과 편성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중 청춘일자리사업이 기존 일자리사업과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답변입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충분하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의 답변으로 봐서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해당 국장님과 본 의원과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반 여건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대로 2016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말씀하신 위 내용을 대폭 수용하시어 미래지향적 예산편성으로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도립미술관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개최 계획 관련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획이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비엔날레 정도,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무엇이 문화올림픽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그 지향점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음악감상이 목적이라면 대관령 국제음악제보다는 부산, 서울, 통영, 수원 등의 국제음악제 등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음악제가 국내에도 많이 있고, 국제음악제를 보려면 유명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음악제 등 유럽의 유명한 음악제를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문화올림픽이라고 하여 세계적 수준이 아니라면 음악제나 비엔날레보다는 가장 강원도적이면서도 가장 강원도스러우면서,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가 외부의 방문자 입장에서는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올림픽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마련된 축제 형식의 문화올림픽으로 치러주실 것을 주문하며, 또한 올림픽에 초점을 맞춘 문화도민운동보다는 지속적인 도민문화운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 질문부제 : 문화올림픽 관련

답변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 참여와 다양성의 문화올림픽 추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형식의 문화올림픽 추진에 전적으로 동감함.

그리고 실제로 도에서는 동계올림픽 3대 목표의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참여와 다양성의 축제, 즉 온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가야된다는 데 목표로 추진중임.

도립미술관 설립 관련 사항입니다.

도립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우리 도의 수치이며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는 데 있어 참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황당한 도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쯤은 미술관 건립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문화올림픽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련 시·군 및 비개최 시·군이 함께하며 올림픽 참가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식의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도에서는 이 동계올림픽 3대 목표의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참여와 다양성의 축제, 즉 온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가야된다는 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도립미술관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시는지요?
 지금이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과 관련 단체 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음악제나 비엔날레 같은 전시성, 비효율성 부분의 예산 투입을 일부분 지양하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하였듯이 우리 도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고유 민속 중심의 문화올림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세계 각국의 참가자가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축제형식으로 추진되어 대한민국과 평창올림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당선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사님과 저는 당선증 교부를 함께 받은 동기입니다.
 지사님은 복학생이고 저는 재수를 해서 입학한 초년생입니다.
 지난 1년간 초년생으로서의 신고식을 호되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공약이 거의 90건에 가까운 80몇 가지의 공약 중 75건이 현재 이행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선증 교부 동기생으로서 한 건도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도의원들의 공약도 지켜나갈 수 있는 명목을 지사님께서 제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보다 먼저 앞질러서 해 주시니까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역시 지사님은 달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관련 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도의회가 도정의 발목을 잡아 도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보셨는지요?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결위, 기획조정실 예산을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저희 위원회의 예를 들자면 1억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의 막강한 권한으로 그 예산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산은 지사님 공약 예산에 비하면 지사님의 하루아침 해장국 값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진정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강원도로 만들어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종합발전계획을 저도 봤는데 우리 강원도 실정에 좀 더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그 뜻을 이번 기회에는 꼭 해당 국에 특별히 언급해 주셔서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올림픽은 대관령국제음악제와 비엔날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올림픽 참가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와 강원도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올림픽이 함께 개최됩니다.

특히나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됨에도 일부 올림픽 참가 선수 외에는 대다수 강원도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가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장애인올림픽은 문화올림픽이니 해서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그러나 장애인올림픽은 너무나 조용하며, 지난 월요일에 지사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달빛카페에서의 행사도 해당 부서가 아닌 대변인실에서 진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너무나 열악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지사님은 이해하시죠?

이쯤에서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예술단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예술단 하나 없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 우리 강원도의 실정인데 이번 기회에 지사님께서 강원도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여 올림픽 행사 등에 동참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애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 영역을 통괄하여 장애인예술단이 설립되어서 다른 시도와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려운 강원도 재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주요사업 추진이력관리제로 도민들에게 투명한 예산집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내용에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번 도청 직원 자살 소동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이 이 사건이 이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도 이 해당 부서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사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에 또 2012년도에도 부하직원 성폭행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라면 지사님이 계실 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암담한 것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여직원의 음독사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보고를 다시 한 번 받으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견주어 봐 주시고 사실여부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여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 또 이 여직원이 이렇게까지 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지사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 문제를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마시고 지사님께서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하지만 갑자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서 지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잘 좀 챙겨서 여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실·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하신 바와 같이 검토에서 시작하여 검토로 끝나지 마시기를 지사님과 해당 실·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교육감님, 원주 반곡동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주민들 반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어째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서서 설득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빨리 처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4월 20일 춘천 모 장애인특수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기로 약속하신 적 있으시죠?
4월 20일, 그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울의 모 교육감 재판에 참관하러 가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문상은 낮에 안 하시고 보통 저녁에 하시죠?
물론 낮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낮에 하시고 서울 모 교육감 재판을 참관하러 가시면서 여기에 참석을 못 하셨다는 것은, 제가 아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누구보다 장애 학생들을 사랑하고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 꼭 참관을 하셔야 될 중차대한 사항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문상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과 함께 체험을 통하여 즐거움을 가지려 기다린 많은 장애 학생들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언론도보가 아니고…….

그런데 교육감님, 학교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아, 교육감님이 여기에 오신다.'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우리 교육감님이 오신다고 희망에 부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변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강원학교인권 조례 문제로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셨죠?

지금 도청 앞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도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5월 22일 조례와 관련한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님께서 관련 단체를 고발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관련 단체의 주장이 교육감님의 생각과 다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면서 꼭 고발까지 해야 하는 상태였나요?

그렇다면 교육감님, 대화로서 해결하실 문제이지 서로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문제의 부분이 성 관계, 임신, 출산, 동성애, 성적 지향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게재됨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2. 질문부제 : 강원학교인권조례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교육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를 비롯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그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봄.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련 법안의 순차적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권조례 제정 이전부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주장으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 교수·학습과정에서 지도한 영상으로 동성애 동영상 부분이 몇 군데 있었다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본건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관련 단체들이 말하는 인권의 개념과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권의 개념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논의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당장 인권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이든 일반행정이든 도의원이나 도민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매끄럽지 못하다면 우선 교육감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해결하시겠지만 더 이상 물의가 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관련 단체 또는 도민의 이해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로서 해결하고 인권 제정을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요, 바른 처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성은 기르고 채워져야 할 것이며 인권은 지켜주는 것이니 인권에 앞서 인성이 먼저 길러져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충분한 토의를 하고 진행과정에 물의를 빚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 자신 스스로 한 시간여 동안 과연 이 자리에 선 채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도내에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여야 한다는 책임감과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 많은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과 도본청 및 도교육청 공무원들께도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6.1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용래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3선거구 출신)

강원도민의 간절한 꿈을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을 섬기며 도민을 위해 일하시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위하여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가고 싶고 부모님들에게는 보내고 싶고 선생님들에게는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육행정을 누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강한 도의원, 세계 속의 제일 강릉을 꿈꾸는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9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줄어드는 동계올림픽 D-day 카운트다운 시계탑의 숫자를 보면서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비단 저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나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비전과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격적으로 실행에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올림픽을 968일 앞둔 시점에서 강원도의 준비 상황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사항을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문순 지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새로운 지평이라는 비전하에 경제·문화·환경·평화올림픽을 4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올림픽 4대 목표 추구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올림픽 실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올림픽으로서의 성공의 관건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듯이 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 계획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림픽 시설에 대한 사후활용 계획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 중이신지, 아니면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신 것인지 지사님의 설명과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와 더불어서 강원도의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이야말로 경제올림픽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의원이 힐링관광 산업의 일환으로 강릉 바우길 등 걷는 길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리조트 조성 등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별다른 진척도 없어 보이고 또한 관광올림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올림픽 실현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와 또 올림픽을 개최하는 3개 시·군이 각 5,0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셨죠?

용역 자료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올림픽이라는 용역 자료를?

그 자료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최근에 나왔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살펴보셨으면 하는데, 제가 그 책자 내용을 다 봤어요.

이게 3억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정도의 계획밖에 못 내는가, 참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거든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그렇고, 다음으로 문화올림픽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했으나 앞서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께서 문화올림픽 추진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문화올림픽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화올림픽 실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바로 돈, 예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원도 2018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행사에 500억 원, 기반 조성에 200억 원, 합이 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재정 형편상 지방비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비 확보 규모에 따라 현재 강원도의 문화올림픽 실현 계획 자체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또 현재 수립된 추진계획도 국비 확보의 규모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지사님께서는 명실상부한 문화올림픽의 실현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여러 분들과 한번 힘을 모아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올림픽 실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조직위와 한국환경공단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자원 순환체계 구축,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3대 분야 국외 협력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봉 활강경기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와 더불어서 목표설정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강원도 차원의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전략 2015 세부실행계획상에 보면, 환경올림픽 인프라 확충 분야의 사업계획을 본 의원이 한번 봤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강릉·평창에 하수저류시설 신설, 불량 광고물 정비, 생태하천 복원, 특구지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 재조사 정비계획 수립, 영월 태양광 발전단지 및 붕어섬 에너지파크 조성·운영,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등을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환경정비 사업을 과연 올림픽 4대 목표 중의 하나인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강원도 평창이 어떤 도시입니까?

지난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개최지죠?

그리고 강원선언문을 채택한 곳이지 않습니까?

환경올림픽을 올림픽 4대 목표로 정하였다면 적어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위상에 맞는 사업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져야지,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서 나열한 사례 외에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해 강원도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갖고 계신지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어느 하나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으로 968일 남았는데 이것을 따로 추진한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쯤은 이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사님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지사님이 가지고 계셔야지 나머지 실무에 있는 분들이 그 의도대로 움직이시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의 마지막 목표인 평화올림픽 실현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사실 평화올림픽은 목표설정 자체가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물론 남북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의 목표를 평화올림픽으로 정했다면 이념을 초월해서 올림픽 정신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중앙정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용역 결과의 자료하고 지금 이 경제올림픽과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을 때 강원도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하여튼 지사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4대 목표 실현을 위한 강원도의 입장과 그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올림픽이 단 968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정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좀 더 적극적이고 발 빠른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1. 질문부제 : 동계올림픽 준비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예산투입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올림픽의 4대 목표를 동시에 일제히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은데 정부와의 관계, 또 저희 도의 역량, 그다음에 예산 투입 정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드림.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음.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예산안과 2015년,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까지 확정·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 교부금 배부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계산하여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세를 반영하여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 운영을 최소화할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 상호 비교 공시제 도입 및 재정운용 성과평가결과 공개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는 게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청에 대한 질문이 많다는데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답변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5월 13일에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대로라면 강원교육 재정의 악화와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5·13대책을 철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교육부에 촉구를 했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책이 시행될 때를 대비한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정부의 재정여건이 좋다면 이런 대책까지는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고통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기존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전수평가 등을 통해서 교육 공무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경감하고 신규사업, 대규모 시설사업을 억제하는 등 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2. 질문부제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 발표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TF팀 운영을 통한 낭비요인 발굴 추진

예산편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게 필요하며,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에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기존사업 검토 TF팀을 만들었음.

그래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서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세부 분야의 낭비 요인을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하여튼 이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 발표에 의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 강원교육이 황폐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자 보도 자료에 보면 상반기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499명 중 321명을 수용하면서 예산 전액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2회 추경에 어려운 현실들을 감안해서 50명분 40억 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 모든 예산을 소진하여 하반기에 명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하반기에 명퇴대상이 되는 교원들의 경우 상대적인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전에 이런 수용 인원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교원의 명퇴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을 책임질 교원들의 사기가 달려 있고 또 교원의 수급과 맞물린 임용 예비 교사들의 발령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명퇴가 안 되면 많은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단을 떠나겠다고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에게 더 이상의 열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명퇴만큼은 제대로 예측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전원 수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계획성 있는 수급계획을 세우셔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맞물려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정원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산하에 시설관리직이 7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이분들을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및 소규모 시설의 보수, 외부용역, 작업현장 관리, 소방방재, 인쇄 관련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시설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시설관리직 분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도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외부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그런 일을 내가 왜 하나요? 사람 사서 하지.”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시는 줄 알고.
묵묵히 일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 시설관리직으로 들어와서, 시설관리직은 일반 교육행정직하고 시험과목도 다르죠?
교육행정직에 비해서 쉽죠?
이 어려운 시기에 면접만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관리직으로 들어와서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행정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의 일할 의욕도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그것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 여성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계십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청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의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얼마든지 정원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더니 답변을 미리 다 해 주셔서 제가 뒤에 얘기할 게 없네요.
하여튼 이런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개선해 보자는 의도거든요.
기존에는 시설관리직의 일은 외부용역을 줘서 줄여 나가고 자연감소분은 우수한 실력을 갖춘 행정직이나 기술직 쪽으로 충원해서 필요한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해서 교육행정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시설관리직에 대한 자연감소 인력은 더 이상 앞으로 충원하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정원 안에서 행정직이 8이면 시설직은 2라든가 또 행정직이 7이면 기술직은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새롭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묵묵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이 강원교육 행정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교육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수년씩 공부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이 가지는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제에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 국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을 위한 교육안전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구성원을 보니까 장학관・장학사・행정직・

파견교사・전문상담사・사회복지사・변호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안전과가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 교육안전과를 새로이 만드셨을 때는 어떤…….

교육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안전이라면 어떤 것들이죠?

시설안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타나지 않고 확진된 학생이나 교직원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구성원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있는데 시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교육안전시설과로 해서 2개를 묶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각 시・군이나 강원도에서도 재난안전과라든가 안전총괄과라든가 직제를 많이 바꾸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서를 신설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육청에도 교육안전과라는 과가 있으면 거기에 최소한 어느 정도 시설이면 시설,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쯤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왜? 시설직이나 기술직들은 자기들이 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늘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교육안전과에 얘기를 하면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일선으로 내려가면 다시 돌아서 시설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감님이 어떻게 의원들보다 고민을 덜 하십니까?

그런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직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번쯤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은 꼭 지켜지리라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작은 것이지만 강원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현안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더 나은 강원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도정질문에 임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6.1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임남규 의원 (새누리당, 태백시 제1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임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만 본 의원에게 양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정질문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의원들께서 많은 자료수집과 정보수집,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현안들을 파악하고 연구한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나 5분 자유발언,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현안과 도민의 애로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함에도 그리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시간만 보내면 되겠지.' 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도정이 조금씩 변화하고 상생하려는 모습에 미약하나마 위안이 되고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도민을 대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제시하는 현안들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도정만 먼저 질문을 해서 저는 교육행정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요즘 교육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교육공무직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교육공무직이라고 칭하고 있죠?

이들의 안정적인 근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 기준 교육공무직 전체 인원은 6,540명으로 상당한 규모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인건비 부담 문제, 인력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다 효율적인 질문을 위해 준비된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충북과 충남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도의 정·현원 규모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많고 급여 총액도 연간 계산해 본 결과 한 77억에서 253억 정도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급여 총액 비율을 보면 서울, 대구, 대전,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중 강원도교육청이 여덟 번째인데 반해 교육공무직 급여 총액 비율은 시도 평균 6.1%보다 0.8%가 많은 6.9%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0.8%는 아주 적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만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큰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 정·현원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급여 지출을 최소화하고 처우와 환경개선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단체 활동과 노사분규를 줄여나가면서 일선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에서 보듯이 강원도 교육공무직 정원은 6,540명이고 현원은 6,480명인데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이 있고 정원 외로 관리하는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교육공무직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와 정원관리규정을 근거로 관리·운영해 나가고 있죠?

교육공무직과 정원 외 공무직이 있는데 직종은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교육공무직은 32개 직종, 정원 외는 31종으로 참 다양한 직종이 있더라고요.

직종이 너무 방만해서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강원도청 공무직 직종의 경우 행정실무원, 사무실무원, 터널관리원, 기타 청사미화원, 청원경찰 등 9개 직종에 379명 정도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래요.

교육공무직 32종, 정원 외 31종 해서 총 63개 직종이 분포되어 있다, 관리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체계도 안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종별 정·현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정원에 부족한 직종도 많고 정원을 초과하는 직종도 많은데 정원 관리가 안 된다고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정·현원 과부족이 생기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결원이 175명 정도 있어요.

그중에 청소원은 22명이 모자라고 당직 전담원은 50여 명이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과원되는 부분은 한 115명 정도 돼요.

사무행정실무원은 20명 정도가 과원이에요, 그리고 교육복지사는 한 35명 정도.

여러 가지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만 정·현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원도 많이 생기고 과원도 많이 생기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원 외 교육공무직이 618명이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1,523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580억 정도요?

나머지 한 942억 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그래서 942억 정도의 차액은 결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이들 환경개선이나 교육시설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이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쓰이다 보니까 학교나 각 시설들의 개선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가집니다.

당장 올해만 이렇게 된다면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리종사원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8개 학교에서 급식중단 사태가 발생돼서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고 당시 노조 측에서 요구한 것은 정기상여금 100만 원 지급, 매월 직무수당 5만 원 지급, 명절휴가비 40만 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승폭 5만 원 인상과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을 하셨죠?
어떻게 협상을 하셨나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교육공무직 정원, 그다음에 직종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임금협상이나 노사분규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 당국에서 협상을 했을 때 이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지금 현재도 940억의 차액이 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예산들은 환경개선에 쓰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교육공무직 관리·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 외 교육공무직도 정원을 책정하여 관리하되 주먹구구식이 아닌 철저한 정·현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직종을 최대한 통폐합해서 관리·운영의 효율을 증대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차액 재원은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급여 총액을 타 시도와 비교한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 최종 규모는 낮은 반면에 교육공무직 급여 총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예산 감액 부분들은 교육시설과 환경사업에 투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소신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작성해 주시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일반고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국입니까?
시설 관련인데?
그러면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설 관련이라서 행정국 담당인 줄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내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도내 고등학교 총 116개 교 중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6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제 자료에는 116개 교 중에 65개로 나왔는데, 수치는 별로 차이 안 나니까, 일반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춘천 같은 경우 11개 교 중에 4개 교, 원주는 12개 교 중에 2개 교, 강릉은 11개 교 중에 7개 교, 속초는 5개 교 중에 4개 교, 동해는 6개 교 중에 1개 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숙사 보급률이 50% 남짓 되네요.

그런데 기숙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당국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의 해소를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일반계고등학교나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미달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기숙사를 운영함으로써 모자라는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질문부제 : 기숙사 운영 확대 관련

답변요지 (교육국장 최종국) : 학생수 감소로 인한 기숙사 필요성 감소
현재로서는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음.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숙사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할 정도의 요구가 있었다면 이미 그런 학교들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함.

그러면 현재 기숙사 수요조사라든지 기숙사를 운영하겠다는 학교나 기숙사를 확대하겠다고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조금 전 답변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라든가 대책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태백 지역 같은 경우 3개의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전교생이 학년당 180명 되는데 수용 인원은 11명, 12명이에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기숙사에 서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년당. 보통 40명에서 50명 규모더라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도내 기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하던 중 아주 암담하고 참담한 현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 가 본 실태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점검한 기숙사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도내에 34개의 특성화고가 있죠?
그중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14개 교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노란 칸을 봐 주십시오.
다른 13개 고등학교 기숙사는 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던 중 중간에 노란 부분이-저희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제가 도교육청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원은 152명이에요.
그런데 수용인원은 274명입니다.
저 자료가 맞죠?
그러면 1번 사진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저게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내부 환경 사진입니다.
국장님, 저것 보시고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또 혹여 의원님들이 보시고 이 학교 아이들이 게을러서, 청소 안 해서, 정리정돈 안 해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학교 기숙사는 사실 한 실당 4명이 기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8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2번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해야 될 냉장고, 기타 물품들이 실내에 비치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복도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저것 다 아이들 환경개선과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저 실태 보시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아니, 저도 대충 그쪽하고 토론도 해 보고 내용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이 조금의 오차라도 있으면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태백기계공고에 학년당 인가를 내 준 것이 17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교장선생님도 저한테 제안했고 이번 교장선생님도 제안했고 태백기계공고에서 도교육청에 이런 현실 때문에 개선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우리 도내 학생들 말고 전국에서 온 아이들이 몇 명이냐 하니까 30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30명 남짓인데 저희 태백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도교육청 당국에서는 저것을 증축해서 확대했을 때 만실이 안 되고 비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니죠.
관내에 있는 태백 학생들은 저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현재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능경기대회가 강원도에서 열렸죠?
작년에 최문순 지사께서 예산 10억을 줘서 환경개선을 진짜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실무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홍보

하고 로비하고 설명해서 지금은 정원 외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객지에서 온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 그게 비었을 때는 우리 관내 아이들이 기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돈 얼마를 들였든 어떻게 됐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아까 사진은 실내모습이 아주 지저분하지 않았습니까?
옷장하고 관물대가 실내에 비치되어야 하는데 밖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리정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고,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기숙사 비상계단입니다.
실내에 책상하고 의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앉아서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가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4명이 자야 될 공간에 8명씩 자다 보니 저런 물품들이 전부 다 계단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겠습니까?
요즘 안전이 대두가 되는데, 마우나리조트나 세월호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는데 만일 우리 기숙사에 화재라도 난다, 비상사태가 났을 때 저것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학력으로 인해서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차상위 계층, 결손, 조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합니다.
요즘 복지가 대세라는데 저런 환경에서 학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학생 1명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한 방에 8명이 아침에 등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데 1인당 10분이면 80분이 걸려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저러한 현실을 묵과하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시정을 시켜야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수용인원 외의 관리를 하시든지 새로 더 증축해서 환경개선을 시켜주시든지 그게 바

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현실을 모든 분들에게 알려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산업 발전과 미래 전문기술자 양성 기반이나 전문교육기관이 더 확대되고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고학력자로 인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편을 마련해야만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고 국가 생산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현 실태를 알았으니까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총평을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도내 18개 시도에서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는데 8개는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7개는 지방자치단체나 강원도 공유재산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15개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안 되고 있는 데가 화천, 양구, 양양이죠?
화천, 양구는 계획 중이고 양양은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죠?
8개 소방서는 강원도 공유재산으로 다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소방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하고 강원도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소방서는 향후에 공유재산을 강원도로 이관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방법을 찾다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도 소유 토지라든지 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은 맞춰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우리 지사님과 함께 협의해서 그런 해소 방안 대책이 조속히 나와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마련하실 수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강원도소방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소방학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강원도소방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심의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사이버과정, 소방안전체험교육, 기타 행사를 해서 연간 한 9,000명 이상 소방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더라고요.
맞습니까? 강원도소방학교 주체가 강원도소방본부로 보이는데 맞으신가요?
412억 원을 들여서 태백의 광활한 부지에 강원도소방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축물이 모두 다 태백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의 주체는 우리 강원도인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도 소유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도 압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만 사용 주체가 강원도인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언젠가는 강원도 소유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견해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강원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신입 소방관 1,200여 명을 증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매년 240여 명씩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맞습니까?
신입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지난 5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소방학교를 방문해서 신입 소방공무원들 교육과정도 지켜보고 격려도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찐빵 10박스도 갖다 주고 왔습니다.
생활관도 방문하였는데 1층에서 3층까지 층당 10실씩 2인 1실로 6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신입 교육생들이 90명이에요. 생활관에서 세 분씩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화면으로는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만-두 분씩 주무셔야 되는데 세 분씩 주무시고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나면 생활관에서 편히 쉬고 여가활동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주무셔야 할 공간에 세 분씩 주무시니까 환경이 좋겠습니까?

생활관 증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증축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강원도소방학교 실 사용주가 강원도이고 강원도소방본부인데 강원도소방학교 생활관 20실을 증축하는 데 한 3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태백시와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도에서 18억, 태백시에서 18억 해서 36억의 재원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태백시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 36억이 들어가는데 시·군과 매칭하면 이 건물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백시 겁니까?

강원도는 18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고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한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강원도에서 다 책임지고 증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2. 질문부제 : 강원도소방학교 관련

답변요지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 임대료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 마련

소방학교를 짓기 위해서 홍천군과 협의 하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이전계획을 세웠으나, 태백 철암 안전학교의 운영난과 폐광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태백시에서 요청해서 안전학교를 소방학교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음.

그러나, 4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힘들고, 아니면 임대료를 주든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숙고중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꼭지가 남아 있는데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이나 의원님들 사이에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구조를 위해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버티고 일어서서 우리가 임차하는 소방헬기보다는 새로 소방헬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헬기 구매 추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헬기 구입 관련해서는 적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거죠?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 시간 활용을 못 했습니다. 서울본부하고 세종사무소 관련해서는 나중에 지사님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6.1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한금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철원군 제2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소득 2배, 행복 2배' 실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제 지역구인 신철원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님, 또 학교 어머니회 임원님들이 강원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온 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지역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0만여 명의 해외관광객이 국내 입국을 취소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군부대 사병들의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 상경기도 메르스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며, 또한 강원도는 사상 초유의 가뭄을 겪고 있어 농민들이 그동안 파종해서 가꾸어 온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가 하면 정식(定植)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뭄 또한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접경지역 예산확대 등 강원도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강원도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업무이지만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접경지역

시・군, 도, 시・군의회,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스스로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군사시설보호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국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9,116㎢이며 강원도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180㎢로 전국의 34.9%이나 고도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통제구역은 강원도가 1,201㎢로 전국 통제구역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를 통해서 강원도의 민간인들, 주민들이 가장 많은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면적이 전국의 70%예요.
그러한 통제구역이 70%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에 규제가 심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 보호구역이 많다는 것은, 제한 보호구역에 지금 건축물을 짓거나 이런 쪽은 군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통제지역에 들어가려면 그 지역의 출입증을 제시하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가 전국의 접경지역 중에서 통제받는 면적이 70%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제가 비교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의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춘천시가 그전까지는 2개 읍・면만 해당이 됐었는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지금 춘천시 전역이 접경지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춘천시의 자료가 없어서 부득이 5개 시・군의 자료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죠.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의 규제면적을 보면 2,643㎢이고 접경지역 행정구역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제면적은 2,643㎢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의 98.7%를 차지하고 있고, 비행안전구역・기타 시설구역이 1.3%인 34㎢로 시・군별로 보면 철원군이 전체 면적의 105%예요.
철원군이 100%를 상회하는 105%의 면적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화천군이 64.6%, 양구군이 51.5%, 인제군이 23.1%, 고성군이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통제구역의-아까 말씀드렸지만-69.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국 시도의 면적단위로 환산을 한 것인데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접경지역의 면적은 강원도가 조금 더 많은데 제한구역하고 통제구역을 봤을 경우에 강원도는 1,201㎢이고 경기도는 459㎢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제한구역이 많고 강원도는 통제구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강원도 쪽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를 보여 주시죠.
우리가 접경지역이 있으면서 토지활용을 제대로 못 해서 연간 생산손실액이 1조 7,12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강발연에서 연구・조사한 결과이거든요.
이는 접경지역 5개 군의 연간 지역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생산손실액은 군사보호 규제가 지속되는 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표를 보면 철원군이 6,670억, 화천군이 3,540억, 양구군이 2,005억, 인제군이 1,670억, 고성군이 3,170억, 그래서 1조 7,121억 원의 연간 손실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요.
이 부분도 인정하시죠?
이렇게 영구적으로 가다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생산손실액이 64조 4,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강발연의 연구 결과보다도 금액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가치 손실은 토지 규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거나 토지를 낮은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입니다.
토지활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면 매매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상승할 것이고요.
예컨대 파주 같은 경우와 저희 철원을 비교하면 같은 접경지역이면서도 땅값이

많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한 규제로 인해서 지금 손실액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디엠제트로 설정되어 있고, 표를 보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6조 4,600억 이상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손실액도 역시 강발연에서 조사한 것보다는 더 클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지난 6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엄청난 고통과 규제를 받아오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국가지정 문화재보호법, 강원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등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하여 사회·문화·경제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당초 민통선은 6·25전쟁 직후 1954년 미8군사령관이 주민들의 영농을 제한하는 귀농선 형태로 설정한 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제받고 있는 국민은 지역에서 영농하는 영농민들이 거의 99% 이상이거든요.
인정하시죠?
외지 사람은 민통선으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99% 이상 지역주민인 영농인들만 통제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번을 가도, 저도 전방에 농경지가 있는데 열 번을 가도 갈 때 출입증을 제시하고 나올 때 받아서 나와야 되고, 서로 잘 알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접경지역 사업을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 차이의 폭이 너무 크다.
기존에 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41개 사업에 1조 5,6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 대비 99%의 실적을 보인 반면 강원도의 경우는 181개 사업에 총 9,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 대비 3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실적이 그렇고, 강원도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사업 대비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것은 강원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답변해 주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와 강원도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경기도의 발전 속도를 보면 너무 다르고, 군사시설보호법도 같이 적용을 받아요.

경기도나 강원도나 접경지역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철책 바로 밑까지 횡으로 4차선, 6차선이 전부 났어요.
그래서 도로 옆에 공장이나 주택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번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민통선에 들어가는 것도 민간인 통제를, 지역사람들인데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와 강원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의 과정을 보니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조례를 2009년 3월 13일에 제정을 하고 창립총회는 2009년 4월 3일에 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디엠제트, 세계적 명소화' 용역 중간 보고회 첫 회의를 2009년 10월 12일에 했고, 그다음에 2차 최종 보고회를 2010년 2월 18일에, 그다음에 디엠제트 주요시책 중앙사업 관련 회의를 2011년 2월 23일에 했고, 디엠제트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자문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 토의를 2012년 4월 27일, 같은 내용으로 2012년 5월 13일과 30일,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제가 당초 자료요청을 하니까 창립총회만 하고 그 이후에 이런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 연구실에 와 보니까 이렇게 좀 더 했다는 자료가 들어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맞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 자문위원회가 접경지역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창립총회를 하고 '글로벌 디엠제트, 세계적 명소화' 용역 중간 보고회를 한 번 하고, 두 번 외에는 안 했어요.
그다음에 '글로벌 디엠제트, 세계적 명소화' 용역 최종 보고회를 2010년도에 딱 한 번 하고요, 2011년도에 디엠제트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2011년 2월 23일에 딱 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를 보면 주로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고, 2012년 5월 30일도 60주년 기념사업 때문에 모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 이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3년 1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가졌어요.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 주민들의 현실, 어려운 과정,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자문위원회인데, 그동안 모임을 가진 것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만 시간을 다 소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2012년 5월 30일 이후 3년 1개월 동안 모임을 한 번도 안 가졌다, 인정하시죠?

중간 중간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하고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접경지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한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도 못하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제안을 몇 가지만 드리고 실장님과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의 대폭 완화입니다.

60년 전에 만든 법이 아직까지도, 작은 개정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민통선이 지금 10㎞로 규정되어 있는데 평야지는 민간인들이 철책까지 다 들어가서 영농을 해요.

출입증을 받으면서 하는데 4㎞ 이내로 줄여도 가능하다.

군 장군들하고도 자리를 해 보면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25㎞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10㎞ 이내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지금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을 한기호 의원이 발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접경지역의 사회기반 확충 사업 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해 놨는데 지금 계류되어 있고, 김현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 2건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고, 김영우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접경지역 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군과 국회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접경지역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보여 주시죠.

중간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것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려니까 우리 강원도와 폭이 너무 커요.
저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접경지역에 특별히 더 지원한 것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접경지역에 특별히 예산지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아니, 타 시도와 비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강원도가 너무 초라해서 지금 강원도 시·군 것만 하는데 접경지역이 아닌 타 지역하고 접경지역의 시·군하고 예산편성과정을, 제가 6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쭉 똑같아요.
그전 것은 제가 군의원을 할 때 받아서 전체를 보았는데 똑같고,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지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지사님을 통해서 예산확보, 실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지 않는 한, 괜히 접경지역에 지원하는 척 하는 그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 질문부제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관련

답변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률안 개정 추진
국방부의 국방규제 개선과제에 포함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지난 4월 20일 경기도지사의 강원도 방문시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 방안에도 군사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협약을 했고, 양 도가 힘을 합쳐서 관련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일부 듣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교육님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도정질문에서는 처음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모신 거예요.
신철원중·고등학교의 승진가산점 문제, 이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교육감님이 해 주셨으면 제가 교육감님을 오늘 안 모셨어도 되는

것인데 사전에 해결을 못 해 주신 부분을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 관내 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띄워주시죠.
철원군 관내 특수지 지정학교는 총 27개 중에서 21개가 지정되어 있고 6개가 특수지에서 제외됐죠.
그러한 사정은 아시죠?
두 번째 자료를 보여 주시죠.
철원군은 6개 읍·면이 있어요, 그리고 3개 지구로 되어 있고.
학생 수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갈말지구는-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1,491명의 학생이 있어서 25.4%를 차지하고 있고, 동송지구는 2,994명이 있어서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화지역은 1,375명이 있어서 23.5%를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도 내용을 들어서 다 아시죠?
인구가 많은 지역이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에서 제외된 6개 학교가 군사분계선에서 단지 12㎞를 벗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제외된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적용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그다음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교육진흥법에 벽지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준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 법에 의해서 다 적용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법에 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승진규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자료 3을 띄워주시죠.
이 내용도 교육감님은 잘 아실 것인데, 농어촌 지역은 강원도에서 0.0160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철원남여중·고 4개 교는 접적 '라'지역으로 해서 0.020의 점수를 주고 있고, 김화지역 4개 교는 접적 '다'로 해서 0.0320의 점수를 주고 있죠?
하여튼 접적지역 '라', '다'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자료를 띄워주시죠.

최근 5년간 신철원중·고등학교 만기 5년 이내 철원 동송지구,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으로 전보 내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로 이동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4명, 2011년도에 5명, 2012년도에 11명, 2013년도에 11명, 2014년도에 9명 해서 50명이 철원 김화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죠.

다음 자료 보여 주시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최근 5년 동안 교원 전보 내신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59명이에요.

59명인데 김화나 갈말 이쪽은-자료를 비교하려다가 너무 많고 설명드리기도 복잡해서 신철원고등학교와 신철원중학교만 했는데-2011년도 1년 이하에 간 교원들이 5명이에요, 전체 59명 중에.

1년~2년이 3명, 2년~3년이 4명, 거의 절반 가까이를 신철원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이동한다는 것이거든요.

김화나 철원 동송은 4년~5년 이상 된 사람들의 이동숫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죠?

이러한 내용이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3년 이내 가는 부분이 철원군 전체 선에서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자료.

철원군 내 군부대 현황을 보면 갈말읍에 25개 대대가 있어요, 연대가 하나 있고.

동송읍은 12개 대대에 3개 연대, 철원읍은 5개 대대, 김화읍은 5개 대대, 서면은 11개 대대에 2개 연대 1개 사단, 근남면은 5개 대대가 있어서 철원군 전 지역에 63개의 대대가 있어요.

63개 대대에 3개 연대에 1개 사단이 있거든요.

1개 군에 이렇게 많은 군부대가 집중해 있는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군부대가 이렇게 집중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규제나 이런 것이 엄청 심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갈말읍 지역은 동양에서 가장 큰 포 훈련장, 포 사격장이 있어요.
그게 갈말지역 문혜초등학교하고 신철원중·고등학교 중간에 있거든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쪽을 다니면서 중간에 포 훈련장이…….
하여튼 동양에서 가장 큰 훈련장 및 사격장이 문혜초등학교하고 신철원중·고등학교 중간에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접경지역에서도 가장 특 접경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양 최대의 포병훈련장이 연중 한 280일, 전 군이 거기에 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연중 한 28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말읍의 위치가, 8사단 사령부가 이동면에 있는데 최전방이라고 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자기네들 사단의 최전방이라고 해서 규제가 엄청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25개 대대에 3개 연대도 있고 8사단의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8사단에서 통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뵙고 학교운영위원님들하고 인사혁신처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인사혁신처 이정민 성과급여과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가산점도 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도 주고 이런다.
교육감님을 만났을 때 “인사혁신처에서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교육부하고 자기네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충분한 설명은 못 드렸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 생각은 갈말읍 지역은 그냥 접경지역이 아닌 특 접경지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감을 하시죠?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승진규정에 ‘교육감이 부여하는 승진가산점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률로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끝나고 나중에 저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보면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간지역, 낙도지역,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공무원 승진가산점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군청 소재지가 포함된 곳은 한 곳도 없죠?

지금 접경지역으로 가산점을 주는 지역에 군청 소재지가 포함된 지역은 없잖아요?

군청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전국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군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안 되고, 군청 소재지가 12㎞ 이내에 들어간 곳이 전국적으로 없으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승진가산점을 받고 있는 산간지역, 낙도지역, 수복지역, 접적지구, 광산지구 지역 중에 전체 인구나 학생 수나 군부대 밀집지역이나 동양 최대의 포 사격장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고 군청 소재지가 있는 신철원중·고등학교 같은 그런 지역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어요.

유일하게 신철원만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고, 군청 소재지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지역은 특 접적지구로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 의원이 시간을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관계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승진가산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하고 하시고, 두 번째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승진가산점도 주고 여기에 준해서 교육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수지 수당, 특수지 가산점을, 강원도 조례를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잘 모르셔서 답변을 받기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

그다음에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제4항에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4항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했고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로 이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교육감님하고 더 할 것이 있는데 지사님도 잠깐 모셔야 하고, 국장님 두 분은 못 모실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주시죠.

알겠습니다.

2. 질문부제 : 접경지역 근무 가산점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벽지점수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아 안타까움
접경지역인 신철원 지역 등은 마땅히 벽지점수를 줘야 하는 지역인데 현행 법률과 거기에 따른 시행령 등 여러 가지 조건상 포함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임.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님과 며칠 안 남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제가 강하게 질타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10분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최문순 지사님, 고맙습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뛰고 계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들한테 얘기를 못 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지적한 부분,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접경지역 예산확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디엠제트 전체의 대응방안 및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죠?

지사님,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시고 전문가들로 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다음은 철원의 56번 국도 부분,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께서 약

속해 주신 부분인데 지촌~사내 부분을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청와대에도 건의하시고 기획재정부에도 건의하시고 국토교통부에도 지사님이 직접 건의를 하셨는데 국도 5개년 계획을 보니까 갑자기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그런데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려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방침은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4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농업 부분 문제인데,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건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FTA 부분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조만간 89개 국이 다 타결됩니다.

그러면 거의 수백억의 생산량 감소가 올 수 있고 강원도 농업, 대한민국 농업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농업 예산을 더 확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한 가지만 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56번 국도, 또 경기도와 강원도 사이의 47번 국도 한 6㎞가 지금 2차선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4차선으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2차선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4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철원하고 연결되는 경기도 쪽은 전부 4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공사를 하는 두 군데 빼고는 4차선·6차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 3번 국도도 그렇고 87번 국도도 그렇고 철원군만 유일하게-47번 국도도 그렇고-2차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사님께서 실·국장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강원도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6.18)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심영섭 의원 [무소속, 강릉시 제1선거구 출신]

평소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2만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에 큰 반발을 일으켰던 강원도립대학 총장 임용 등 각종 문제점들과 그리고 강원FC에 대한 해결방안, 또 강원도의 81.9%를 차지하는 산림관리방안에 대하여 강원도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 질문으로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립대학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은 1995년도 강원도 영동지역에 최초로 주문진수산고등학교 설립승인을 받고 1998년 3월 개교하여 지금까지 강원도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에서 유일한 공립대학입니다.

설립연도는 1998년으로 교육부 자구 노력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교 특성화 우수 대학으로 5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연속 교육 역량강화 사업 선정 대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평점 35점 중 27점을 받아서 전국 전문대학 평가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원도립대학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인재양성기관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아왔었습니다.

교수 31명, 초빙강사 95명의 교수진이 있으면서 전체 학생 900명 중에서 강원도 학생이 640명으로 71%를 차지했습니다.

타 시도 학생은 260명으로 29%를 차지한 반면에 강원도 학생 중에서 동해안에 거주하는 학생이 443명으로 69.2%를, 영서지역의 학생은 197명으로 30.8%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강원도립대학은 지리적으로 열악한 동해안 지역의 저소득층, 그리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고교졸업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유일한 공립대학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수와 사무국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들어 강원도정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 지역사회의 한 의원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권혁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해답도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총장 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마 기조실장님께서도 총장 임용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도립대학 교수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대학장 임용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5조 교육공무원 임용에 의하면 공립대학교 총장 임용은 대학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 후보자 2명 이상을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용토록 지방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강원도립대학에서는 지난 3월에 교수 7명, 직원 2명, 조교 1명, 외부인사 5명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는 강원도가 결정한 공모제 방식을 존중하여 다섯 차례의 회의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현재 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고위공무원 1명과 교수 1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1순위, 2순위 후보자 모두의 임용을 거부했습니다.

대학구성이 지역사회 등에 심각한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강원도의 독단적이고 원칙 없는 행정은 추천된 1순위 후보자를 비롯한 도립대학 총장 응모에 사명감을 가지고 신청한 9명의 후보자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민과 특히나 우리 160만 도민 전체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로서 지역사회의 도정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장님, 사전에 공모자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또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임용에 대해서 공립대학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도에서는 이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두 분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밀실행정 의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거진 일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지만 지금까지 실추된 우리 강원도정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1순위, 2순위 후보자 모두에 대해서 함량 미달이라는 이유로 임용을 거부 했습니다.
함량 미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전과자라든가, 대학교 관련해서는 논문표절을 했다든가 그런 결격사유가 있을 때 2명의 후보자 중에서 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위하는 마음인데, 공립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도립대학 교수가 일곱 분입니다.
또 도립대학에 관련된 분이 두 분 계시고 조교 한 명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립대학에 신뢰하지 못하는 교수와 조교를 두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선정됐을 때 여기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모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본 의원이 추천경과를 보면 2015년 3월 18일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선정방법을 비롯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거쳐서 총장 초빙공고, 3차 총장임용

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선정방법이라든가 이 부분은 실장님께도 아마 충분하게 보고를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추천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사전에 후보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대화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추천받은 후보자 2명을 우리 도에서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두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거부했다는 것은 오히려 모두를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총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학 운영에 공백을 초래한다든가 또 도립대학 간의 소통이 부재하거나 내부에서 도지사나 관련부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 강원도 인사와 관련한 잡음으로 모 의료원장에게 조기 사임을 권고해서 절차와 원칙을 무시했다는 사항과 또 내부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원의 갈등, 특히나 도립대학 총장의 임기 전 사임 등을 보면 인사 관련 부서에서 제 역할을 못 하거나 보호자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통부재가, 불통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개선해 나갈 의지는 없으신지요?

도립대학은 올 후반기부터 대학 평가와 관련된 정량평가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 달에 대학평가인터뷰와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어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총장 공백에 따른 대학문제 발생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립대학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총장 임용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또 행정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에 대한 취업률과 교수 승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 교수 직급을 보면 정교수가 6명, 부교수가 14명, 조교수가 11명으로 31명의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 95명 등 총 126명으로 13개 학과 9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성과가 학생의 취업률과 직결되는 것 또한 대학평가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수 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 학업성취를 높여 나가야 하는데 현 도지사 취임 이후에 도립대학에서 승진한 교수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면서 강원도는 정말 중·장기적인 도립대학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총장의 사태 또한 본인이 원해서 사직을 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해결이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동료 교수들의 승진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절충 실패, 대학 구조조정 명분으로 일방적인 학과 폐지, 이 학과 폐지도 보면 자동차학과는 교수가 없고 산업디자인학과는 학생이 없고, 이렇게 두 개 학과가 폐지됐죠?

도지사님께서는 학위수여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수와 도지사님 간의 대화가, 소통이 거의 단절되었다고 학교 측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총장에 대한 강원도의 지나친 간섭, 내부적인 갈등, 총장 사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들이 문제를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 총장이 대학 교수들의 승진과 관련해서 강원도와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도립대학 교수들과 전임 총장 간에도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고 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도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우리 도에서 요구한 교수평가제 변경과 소급 적용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실장님이 봤을 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대학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승진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한다든가 또 정책이 바뀌었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충실히 해 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취업률이 50%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을 하고 도의 여러 가지 간섭으로 교수, 총장 등 구성원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 교수 따로,

총장 따로, 학생 따로 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장님께서는 학교 운영 및 취업률에 대한 직원 사기 문제, 또 이번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접 도립대학 교수들이나 학생들과 자리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유추해 보면 강원도와 도립대학 간의 총체적인 소통의 문제가 가장 많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취업률은 저조해져가고, 대학만 질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한 대학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교수 승진과 교직원들 자체 승진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승진은 4년 동안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원도립대학이 초창기에는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취업률이 60% 이상 근접하는 가장 유망한 도립대학으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도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산하기관인 도립대학을 처음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없는 대학을 표방하면서 한때 취업률이 56% 정도로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55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도립대학에 대한 도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서서히 장학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취업률도 40% 정도로 점점 떨어졌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방법을 내놓지 않고 계속 내부간섭만 하면서 교수평가제 기준을 새로, 또 과거로 소급하여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교수들 간의 여러 가지 혼란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2년도 한 언론사의 사립대학교 교수 승진 임용 보도를 보면 신청자 225명 중에서 224명이 승진 임용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한 명도 승진하지 못한 도립대학의 교수들을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분명 도립대학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도, 등록금 없는 대학을 표방하는데 지금 현재 장학금은 6억원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전액면제라고 하면서 실제 운영비를 뺀 장학금 6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립대학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3년~4년 전부터 계속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취업률이 낮은 학과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실장님, 강원도립대학은 현재 13개 학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개 학과는 폐과하고 앞으로 11개 학과를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3년도 졸업생 채용률을 보면 57.8%인 반면에 2014년도에는 50%에서 49.2%로 낮아지고 또 2013년도 취업률을 보면 40% 이하인 학과가 1개 학과인데 2014년도에는 5개 학과로 취업률이 떨어졌어요.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육성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2014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5개 학과가 취업률이 저조하고 또 학생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징계 교수를 보면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2명으로 총 31명의 교수 중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3년간 징계를 받은 교수가 다수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이분들의 자질문제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학 장비, 실습선을 보면 이미 30년이 지난 선박을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900명 정도 있는데 통학버스가 부족해서 차량을 임대하는가 하면 대부분 장비가 주문진수산고등학교 때 사용하던 장비를 사용하는 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적합한 여러 가지 장비를 실장님께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충을 못 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등록금 없는 대학교를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한때 전국 전문대학에서 최고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운영상황을 보면 학생들 대부분이 국가장학금, 도장학금, 기타 장학금 등 23억 3,400만 원의 장학금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간 등록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납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학교에 등록금을 10만 원 내지 20만 원 납부하고, 또 장학금에 의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 지원은 6억~7억밖에 안 되면서 노후 선박이라든가 실험도구, 실습선 이런 부분은 노후화되어 가지고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국내의 주요 도립대학 중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부제 : 강원도립대학교 경쟁력 강화 관련

답변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 인사제도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대학교수들이 분발할 수 있는 구조나 문화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함
그 중요한 기초가 새로운 인사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함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난번에 도립대학 총장 추천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죠?

총장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것처럼 도지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총장 임용은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맞습니까?

최근 5월 18일 자 모 일간지에 도립대학 총장 임용 사태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에서 “도 인사위는 대학총장임용위의 거수기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끝나고 한번 보시기 바라면서 도 인사위는 도지사의 자문위원회인데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자문 내용만을 가지고 임용 거부 결정을 하였다면 반대로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말인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사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마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두 분이 자격 미달이었어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할 때 어떤 자격이 되어야 총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로 자격 미달이든 부적격한 여러 가지 판단을 추천자가 거부했을

때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고 도립대학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자격이 있어야 총장에 임용되는 것인지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립대학 총장 임용은 위원회에서 다섯 차례나 회의를 거치면서 가장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1순위, 2순위 후보자 중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우리 강원도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본인과의 코드가 안 맞는다든가 또 임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조직폭력배, 개인 사조직도 아니고 또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도립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교수님들, 강사님들,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 지사님께서 하루아침에 무시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도립대학 교수들과 구성원들 또 현안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정말 도지사님이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었는데 참석 안 하시고, 도립대학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 만남의 자리를 아마 몇 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하고의 간담회, 대화의 자리도 한 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하고 그리고 목포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한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5년 전부터 전남도립대학교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도립대학교가 상생할 길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립대학교하고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상 우리 도 재산하고 국가에 규정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구조개혁 등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련법을 가능하게 개정하거나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우리 도립대학을 운영하기가 어렵거나 앞으로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질 때 강원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서울대학교나 국립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사님께서 강원도립대학을 국립대학교하고의 통합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강원도립대학을 4년제로 승격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서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교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사님께서도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처음 대학이 설립될 때부터 취업률뿐만 아니라 성적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2011년도에는 대학생 인구가 70만 명에서 2028년도에는 44만 명, 2038년도에는 36만 명으로 거의 반 이상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도립대학을 보면 자동차학과나 산업디자인학과는 폐과가 됐지만 부경대학교, 경상대학교에서 30년 이상 사용하던 배를 가지고 지금 실습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7일 자 강원도민일보 통합대학교 설문조사에서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의 통합 추진을 보면 66.7%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 간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립대학이 정말 강원도에서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가려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개혁, 또 효과적인 해법을 지사님께서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천했는데 자격미달이라는, 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도 자격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총장 임용에 대해서 좀 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한편으로 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셔서 잘 풀어나가 주시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학 스스로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개혁적 사고가 충만할 때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대학을 계속 운영해 나가려면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포기하려면 차라리 조기에 결단을 내려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끄럽지 않고 강원도에서 도립대학이 더욱더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부제 : 강원도립대학교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 추진
도립대학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음.

다음은 강원도 메르스 사태와 가뭄피해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는 메르스 사태와 극심한 가뭄이라는 이중고로 경기침체가 현실화 되는 어려움에 국면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이지연 보건복지여성 국장님,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가뭄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어재영 농정국장님과 박홍규 농업기술원장님,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일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님과 관계 부처에서 가뭄으로 인해 고랭지 채소 작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창·강릉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평창, 왕산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왕산 안반데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왕산 안반데기에서 평창 도암댐 수하리 방향인 15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도는 고랭지 채소를 반출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15호선이 군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지사님한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6.18)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장석삼 의원 [새누리당, 양양군 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농림수산위원회, 의기양양 양양 출신 장석삼 의원입니다.
최근 120년만에 사상 유례없는 가뭄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메르스라는 신종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과 우려가 많으십니까?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9대 도의회 취임 후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위기상황 극복에 혼신을 기울이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규제개혁 철폐라는 토론에 이어 지난 4월 소기의 성과를 올린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계획 또 첨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계속 바쁘셨죠?

일간에는 본부장님 취임 후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동해안 어민들의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글쎄, 본론은 아닙니다만 군 철책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환동해본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책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정책이나 해양수산관광정책과를 신설해서 그 분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전영하 본부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경계철책 철거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현재의 추진상황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민들은, 특히 동해안 주민들은 철책 철거라는 오랜 염원과 숙원사업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들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현재 지방비와 시·군비로 부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도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동해안 주민들은 '국가에서 이것을 다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방금 얘기했던 대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비용으로 국비·지방비 포함해서 199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죠?

국비보다 지방비가 많았고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18억, 또 시·군비가 92억 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국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압박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면 초창기에는 나름 국비지원이 많이 됐었어요.

하지만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무리한 선거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부득이하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먼저 자치단체의 돈을 써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집행부가 지방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국방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쪽에 아쉬운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는 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해안선 연장이 총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철책구간이 210㎞이고 그다음에 잔존으로 철거해야 될 구간이 161㎞인데 우선 철거대상이 됐던 23.5㎞는 부분적으로 좀 쉬운 지역, 쉽게 말하면 철거가

용이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흔히 사회에서 얘기할 때, 철책 철거가 ㎞당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1㎞ 철거하는 데 어떤 지역은 20억이 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1억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철책 철거에도 앞으로 많은 지방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안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였던 해안가의 철책을 철거하는 마당에 또다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저도 수없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설치한 것을 철거한다면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당연히 국비로 철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사실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영하 본부장님,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진척과정을 우리 의원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강원도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힘드시죠?
 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기업활동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기업의 대표들은 항상 수익의 일부를 기업의 가치 창출과 또 기업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쏟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나 임원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런 것들을 사회나 기업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이 갖고 있는 도지사라는 그런 막중한 -권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 달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 동해안 군 철책 철거 및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행정자치부 대통령상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이 자리를 빌려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경계철책 철거가 우리 강원도민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으로 다가왔지만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앞으로 도비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추산하기로 아직 잔존해 있는 철책이 162㎞라고 본다면 어림잡아서 1,000억 이상대, 구릉지라든가 협곡지역까지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완화로 철거계획은 확정했지만 앞으로 발생할 철거예산에 대해서 정부에 보다 많은 지원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있다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교세요?
PT 2번부터 차례대로 보여주십시오.
원론적인 대답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물론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노력하고 애를 쓰신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있던 지역개발에 대한 제한들을 풀어주자는 의미에서 규제개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가 그 부분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철거하는 상황인데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에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추진하라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보문제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설치한 해안철책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왔겠습니까?
앞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본 의원이 다른 공식적인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멤버(Remember)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 또한 어린 시절을 저런 철책 옆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납니다.
지사님, 혹시 흔적선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일명 방위병들이 1983년도,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옛날 단기사병들이 돈이 없던 시절에 저런 넝쿨, 옛날 해안가는 저랬습니다.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넝쿨을 철사로 놓고, 아니면 나무로 놓고 그 앞을 가랫대 같은 것으로 끌어서 단기사병들이, 해안가에 있는 군 인력들이 흔적선을 남겼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초소에 나가서 발자국이 있으면 밤에 뭔가 좀 이상한 징후가 있었구나 하는, 말 그대로 흔적선이었던 것인데, 본 의원이 흔적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 흔적선으로 인해서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이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공포감, 위화감, 심지어 들어가면 군인들이 주민들한테 경고사격을 하고 또 총부리를 겨누고 위협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요.

본 의원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상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안철책 철조망을 철거하는데 또다시 막대한 예산이 강원도민에게 지워진다면 우리 도민을 두 번이나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책 철거 후에 그 광활한 해변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려면 새로운 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안철책 철거비용을 국비로 조달한 후 지자체에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그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교부세를 확실한 항목으로 내려주든지 명확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사의 권한과 지위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공산당으로 치면 서열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지사님 서열이 행정부에서 20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위가 매일 도민을 상대로, 민생현장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이용하셔서 그 지위를 도민을 위해서 남용해 달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이 접경지역 TF팀 구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본 의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환동해본부장님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분장을 좀 달리 하셔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1,500억이 들어갈지 2,000억이 들어갈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을 강원도가 부담하지 않으면 열악한 시·군이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구간은 1㎞에 28억 들어간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 강원도의 삼척지역, 고성, 속초, 또 강릉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바위나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당 추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억에서 30억씩 이렇게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가 막연하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좋아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뛰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해안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경제유발효과를 추산적으로 약 20조 원으로 잡으셨죠, 맞습니까?
그게 추산적이라고 합니다만 본 의원은 20조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금액과 규모를 산정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세가 아니더라도 산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입니다.
추산입니다만, 1980년도에 동해안 6개 시·군의 평균 땅값이 평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사님은 항상 정확한 액수는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너무 검소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지금 보통 평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매매가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 동해안의 열악한 어민들, 그리고 소작농들,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토지를 대도시의 부동산업자라든가 땅 투기하시는 분들한테 다 팔았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동해안의 주민들 중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0%가 채 될까 말까입니다.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피해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강원도민들에게 가중을 시켜서 한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부의 강력한 실행의지와 계획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하튼 해안철책 철거가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 조금 더 고도적이고 면밀한 전략으로 대정부 투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아까 TF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TF팀을 구성하되-우리 강원도 집행부를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좀 더 명망이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아홉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재위 위원도 계시고 또 접경지역 관련 특위 위원분도 계시고 농수위에도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TF팀을, 우리 도 차원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민관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해안경계철책 철거에 따라 대체시설이나 대체장비 설치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군부대 중심의 대체시설 설치보다 항구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가동해서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사님, 터키의 접경지역 군사시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터키.
못 들어보셨죠?
혹시 우리 도에서 터키의 접경시설, 거기도 철책을 철거하면서 국가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규제완화, 철책 철거라는 소기의 성과에 도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군사시설 설치와 해제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는 접경지역의 군사시설을 해제하면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국가가 철거비용을 투입한 데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안이라고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동해안은 해안철책이 설치된 후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에 따라 재산권 피해 및 경제활동에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해서 국가안보에 따른 피해지역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요청 등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국가방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국가방위법을 한 다섯 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섯 번을 읽어보았는데 그 조항에 그런 내용이 없던데 지사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국가방위법을 골자로 해서 핑계사유를 댔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역할을, 정말 달콤한 소기의 목적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 부분의 어떤 항목이 우리 강원도 혈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시간상 조금만 줄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예산지원이 막힌다면 국가안보로 인해 주민들과 지자체가 큰 피해를 본 만큼 안보세라는 것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안보세 못 들어보셨죠?
이것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법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강원도의 역할이 비록 미미하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또 지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당의 대표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로 인해서 각종 규제와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보세 신설을 요청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법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의 절책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졌듯이 이 부분 때문에 강원도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안보에 대한 세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번 해안철책 철거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군부대 이전 등 각종 군사보호시설의 설치와 해제에 따라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안보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실 겁니까?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사님, 양양공항 이런 것들이 지난번 지사님 선거의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여 이번 규제완화, 군 경계철책 철거라는 정부를 상대로 막대하게 끌어내야 하는 부분도 지사님의 중요한 치적으로 분명히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도민에게 부담으로 오는 단순한 본인의 업적과 치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사님이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이 철거되면 많은 면적의 해변이 공유수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도에서 늘어난 해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구체적인 후속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도 물론 좋습니다만 본 의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은 돈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투자유치와 병행으로 앞으로 해안철책 철거 이후에 흔적선과 철책선을 이용한, 해안초소 및 군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시범해변을 선정한 뒤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안보체험이 가능한 안보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본 의원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안전사고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국가적으로 경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과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군부대 해안경계체험장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릴 때 놀던 놀이터가 주로 군부대 막사, 벙커 이런 시설이었는데 거기에서 놀던 추억이 너무 많이 배어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스릴도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국방부에서 걱정하는 안보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또 새로이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사님, 하여튼 본 의원이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끝으로 본 의원의 짧은 소견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업무분장 사무가 있죠.

업무분장 사무가 있는데 업무분장 사무를 보면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인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국가 고유사무인 국방을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맡았습니까?

한번 그런 논리를 펼쳐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국방부나,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세 분이 기자회견도 하고, MOU 체결을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막연히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민과 동해안 주민들이 그동안 잃었던 권리와 명예를 이제는 회복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앞서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기업과 사회는 그 소속단체의 이익과 향상을 위해서 무궁무진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도, 특히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협업을 해서 앞으로 대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하시면서 좀 더 똑똑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부제 : 동해안 해안경계철책 철거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도민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건의 추진

그동안의 피해만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고 또 피해를 구제하는 비용을 도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정부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음.

고맙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올해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고, 막상 해 보시니까 쉽지 않으시죠?

본 의원이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또 교육감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육적인 철학,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을 아버지가 때렸다고 해서 그것을 아버지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런 답변은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교육감님은 교육감 개인이 아닙니다.

강원도 교육의 수장이시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교육감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 국가에만 팽개치면, 강원도가 무슨 동떨어진 하와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감이 조금 더-죄송합니다.-책임감 있고 조금 더 강원도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또 대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해서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하튼 교육감님의 지금 세계가 원하는 협업, 그리고 창의력,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의 인식은 본 의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본론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틀어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기본교육이,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 뒤에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그동안 수십 년을 교육계에 헌신하고 또 지금은 일선 최고의 단체장으로서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본 의원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대다수의 학부모들, 또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한 번쯤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교육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학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강원도 교육이 뭐가 앞서가는데요?

그렇죠, 인성.

교육감님,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물론 우리가 좋은 말로는 인격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그늘에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기초학력을 다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감님의 그런 생각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육감님이 언론에서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조금 편향적인 게 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현재까지는, 관선 교육감 시절에 일부 그런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이후에 강원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평균 1.03% 증가하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은 0.5% 증가한 통계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하드든 소프트든 인성 중심의,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본 의원은 주문합니다.
 지금 2009년도와 2015년도, 교육감님 취임 전과 취임 후를, 본 의원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교육감님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5위, 고등학교 10위라는 그러한 경쟁력을 나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진학률요?
 제가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진학률 자체가 발표부터 잘못된 것 아시죠?
 저는 거기에서 교육감님에게 실망을 했어요.
 교육감님에 대해 왜 실망을 했느냐면 나름대로 철학적인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선거 때 발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선거 때 발표가 된 것으로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시를 했어요.
 ‘교육감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했는데, 물론 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는 인신공격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와서 했다,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밝히고 나서, 공개하고 나서 후회했다, 후회했다는 소회를 밝힌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을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까 최근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답변의 본질을 잘 파악을 못 하셨든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보십시오.
 아니, 기초학력이 떨어진 애들이 어떻게 대학을 다 갑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학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기초학력에 따라 진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체제가 교육감님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어서 바뀌었다면 얘기가 되지만…….

제 얘기는 마저 해야죠.

반론을 제가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에 포함된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아니라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정말 학교라는 공교육 자체에 의존한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고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그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갔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 교육감님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총알 없이 전쟁터에 내모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것은 나름대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국 대학 진학률을 보면 강원도가 90%입니다.

제일 높은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가 90%이고 오히려 서울의 강남권은 49%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특성과 대안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다가 취업도 되지 않고 이 부분이 대학이라는 취업의 수단으로 막연히 가는구나, 특히 요즘 대학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예전같이 대학이 어려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중하위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할 수 없는 상황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 실업률이 가중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같이 양산한다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것이 너무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질문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의 성과평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교육감님의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거의 최하위 받으셨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의회에 오기 전까지는 교육감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속기록도 보고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본 의원이 처음에 “생각보다 힘드시죠?”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질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 변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감님의 인성과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존경하고 본 의원도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강원도 교육의 앞날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울산교육청에서 2014년도 기초학력미달학생을 대폭 줄인 공로로 인해서 400억 인센티브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아니죠, 내용을 들으셔야죠.
크게 줄인 공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지금 14위, 15위 정도를 하니까 앞으로 올리시면 400억이 아니라, 물론 학생이 좀 적긴 합니다만 우리도 그만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감히 본 의원이 얘기합니다만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있고 현실을 벗어나라는 말이 있는데 본인은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철학의 현실을 벗어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라왔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초등학생은 9만 4,442명이었던 것이 7만 8,400명, 1만 6,000명이 감소되었고요, 중학생은 9,250명, 고등학생은 2,4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교 수의 변동추이를 보면 학교 수의 변동에 비해서 학생 수가 비례적으로 더 많이 감소됐는데 이것을 반증한 것이 강원도의 인구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원도의 인구는 2010년부터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약 1만 5,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반면에 초등학생은 1만 6,000명, 중학생은 9,200명, 고등학생은 2,400

명이 줄었다는 것,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초등·중등·고등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교육감님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 또 교육감님의 지금까지의 과정,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한번 바꾸어 주시는 그런 용의도 현실 속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 구글이 인재채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성과 협업성, 협동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OECD 교육국장인 안드레아스 슐라이허가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회의 교육시스템이 교사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좀 동떨어진 얘기로 갑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권신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월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번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원도 마련할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인권에 앞서서, 학생인권 얘기는 제가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인권에 앞서 인성이 먼저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 교육이 제대로 된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학교경쟁력강화조례, 또는 체인지헌이라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체인지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제가 지은 말인데 어떻게 아십니까?
자료 안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소리를 먹었는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주말에 가면 밥도 해 주고 등산도 가고 지난주에는 야구장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수반되는 이런 시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정책을 늘려주시고요.

특히 부모들이 이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너무 국가에게 책임과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육일선도 부모들에게 책임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드릴 얘기는 많습니다만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한마디를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다 같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건강하고 또 인성이 바른 아이로 자라고 또 한 가지 욕심이라면 공부도 잘하고 또한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그러한 아이가 되어 달라는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인지헌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인성교육법에 맞추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강원교육이 부흥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고요, 끝으로 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집사입니다, 집사.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자식 나무랄 수 없고요, 내 자식 안 예쁜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짧은 답변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나은 그런 강원교육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 질문부제 : 강원도교육청 성과평가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평가수치 향상 추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평가 수치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6.18)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최명서 의원 [새누리당, 영월군 제1선거구 출신]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동해 전역이 농심과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정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새누리당 소속 최명서 의원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12일 후면 다가오는 2015년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 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강원도는 네 분의 도정책임자가 계셨습니다.

최각규 도정 3년, 김진선 도정 12년, 이광재 도정 6개월, 최문순 도정 5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2011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후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를 도정 슬로건으로 경제 우선의 도정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2014년 재선이 되신 이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 관련 부서를 전진 배치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십니다.

경제 우선의 목표는 소득 향상에 있습니다.

소득은 그 지역의 경제활동 수준으로 표시되면서 생산과 고용으로 측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민선 20년 우리 강원도민의 살림살이 얼마나 나아진 건가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번을 보겠습니다.
GRDP 전국 대비 강원도 비중을 보겠습니다.
1995년도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은 12조 6,300억이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취임하던 2011년도는 32조 4,380억이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국의 경제상승분에 기인한 것입니다.
강원도 비중은 1995년 2.89%에서 2011년도 2.44%였습니다.
3년이 지난 2014년도 통계는 지금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2013년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3,034조 7,890억으로 2.44%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추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57.7%였고 고용률은 57.2%였습니다.
2011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57.6%, 고용률은 56.4%, 2014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58.3%, 고용률은 56.5%로 거시적 경제지표로만 볼 때 강원도민의 살림살이는 결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올해 글로벌사업단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1월 1일 자로 개편이 되었습니까?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를 계속해서 맡고 계신 것이죠?
글로벌사업단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바뀌면서 강화되거나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결론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고 기존 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증대하는 그런 전체가 국장님 소관인 거죠?
기업유치를 통해서 이전된 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개별기업 자료는 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열람도 안 됩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용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을 봐 주세요.
이것이 지난해 12월 25일에 보도된 것입니다.
“올해 강원도 49개 기업유치, 강원도는 올해 작년보다 58.1%가 증가한 49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총 투자규모는 1조 5,220억 원으로

최근 3년 내 최대 실적이라고 보도했고 포스코마그네슘제련공장이 옥계 일반산업단지에, 팜앤팜스가 남춘천산업단지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MOU 체결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1. 질문부제 : 투자유치 관련

답변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 기업의 사전 검증 절차 강화

2013년부터는 기업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서 투자가 확실히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유치한 기업 50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에 1조 5,220억 원이 거의 다 지역에 투자가 될 것으로 분석하십니까?

투자유치과에서 2014년 1조 5,220억이 3년 내 최다 실적이라고 했는데, -자료 넘겨주시고요. -투자유치과 BSC 성과를 보면 도내 기업유치 활동이라고 해서 도내 기업을 통한 투자규모 실적이 2조 4,964억 원이었어요.

이것은 결국 2013년이 더 많았는데 2014년 1조 5,220억 원이 된 것이, 뭐 최대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2013년도에 유치했던 2조 4,964억 원의 투자는 투자가 포기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2012년 5월 17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대대적으로 언론브리핑을 하셨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32개 기업과 41조 7,33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협약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확인해 보니까 35개 기업에 52조 2,084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투자유치를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나요?

그래서 한 50조 정도, 우리가 보도한 만큼의 실질적 고용효과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보도된 만큼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다음에 기업유치를 하는 목적 자체가 고용증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실제 이전된 기업을 2005년부터 10년간 자료를 받아 봤더니 1만 989명이 고용되었습니다, 10년 동안.

1만 989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묻는 것은 1만 989명을 고용했을 때 당초 기업체하고 협약하면서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관리직이 몇 명이다, 생산직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는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확인 과정이 과연 우리가 당초에 협약했던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 아시나요?
현장에 가서 담당공무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숫자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당초에 기업 유치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고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강원도의 기업유치로 인해서 향토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 기업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향토기업의 보호 육성이고, 그래서 이 향토기업 자체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더 많은 추가 일자리가 기존 기업에서 창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 향토기업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과가 안 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지원하는 문제, 아시죠?
우리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강원도 자체 시책으로 추진했던 것 아시죠?
당초 목표를 50개로 잡았다가 2014년 말 40개로 끝냈습니다.
올해 사업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늘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보조금 같은 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올해 수출보조금, 기업당 300만 원인가요?
물류비 지원이요.
그러면서 GTI무역박람회, 대형 이벤트를 합니다.
물론 GTI무역박람회 중요합니다.
GTI 두만강개발 계획의 임시적 특별지구에 의해서 국비 따기도 어렵고, 유치를 하는 것은 좋고 거기에 증액해서, 올해 또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강원도가 너무 외형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한 보도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향토기업 지원에 너무 소홀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겠는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 아시죠?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에 강원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를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수도권 기업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수도권 기업들끼리 경쟁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 너무 외형에 치우치는, 너무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시죠?
일자리 창출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은 지금 우리 강원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 일자리 업무를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는 제대로 된,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너무 미흡한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은 청년 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도내 청년 고용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것 아시죠?
자료를 봐 주세요.
2015년 자료입니다.
보시면 청년고용 동향, 강원도가 청년 고용률이 30.4%, 실업률이 18.8%입니다.
전국적인 비율을 볼 때 너무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청년실업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 청년실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강원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학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죠?
그래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역혁신센터 육성 이런 것 하시죠?
이런 것들은 전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전부 국비 지원하고 도비는 일부 매칭하기 때문에 이런 국비 지원,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얼마만큼 실질적 취업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니테크 계획이라고 아십니까?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하고 통합교육을 해서 산학협력체계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숙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 22일까지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원도 경제부서 쪽에 확인을 쭉 해 봤는데 아는 데가 전혀 없었어요.
물론 공문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허브역할을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전문대학교 교수들이 지역 내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협약해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보증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라인을 못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의 산학협력체계가 너무 허술하구나, 이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관리해 주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죠.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쪽에 우리가, 꼭 국비를 받아서 몇백억씩 투자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바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도내 전문대학들한테 쭉 확인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직 기업체하고 협업이 안 된 데가 있는지 찾아서 링크시켜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인재 고용할당제,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력의 문제 같아요.
노력의 문제 같고요, 답변을 잘라 죄송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카지노, 호텔, 조리 이렇게 해서 1년에 몇백명씩 취업을 시킵니다.
정작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폐광지역의 전문대학들은 예전처럼 취직 못 시킵

니다.
강원랜드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폐광지역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면 강원도가 강원랜드를 관리하는, 관리한다는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런 것이 폐광지역의 분분한 얘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광지역에 산재해 있는 대학들 그런 데서 강원랜드에 쉽게 취업이 된다면 외지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 대학에 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스매칭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이고 이것은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들, 우량기업들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그리고 대학이 바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이,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링크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돈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돈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한 자리라도 더 취업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아이들, 후배들, 서울 같은 데에서 알바하면서 제대로 돈 못 받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 도로 불러들이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스매칭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도의 경우 최근 5년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만 개 이상의 미충원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 것도 미스매칭의 원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미스매칭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를 강원도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전력투구했으면 좋겠다, 집중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 인력이 강원도에 몇 사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역 시도별로 일자리 전담조직이 만들어 있지 않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개요?
어디어디입니까?
서울요?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곳을 불러보세요.
울산 과 이름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울산이 과 단위로 하는데 과의 명칭이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종시, 과 단위로 운영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충북, 과 단위로 운영하는데 일자리창출계를 가장 전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자리라는 거죠.
거기에 강원도도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나라도, 10개라도, 국비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정교하게 링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리고 돈 안 들이는 사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담팀을 만들고 그 팀이 끊임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결시켜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위원회 이런 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세요.
우리 업무평가제도가 어떤 게 있습니까?
BSC 업무평가는 지표를 누가 작성합니까?
부서에서 작성하죠?
부서에서 작성해서 성과 계약하고 그래서 그것을 입력시켰다가 거기에 얼마나 진도가 나갔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하고 그렇죠?
지표가 적절한지 점검하십니까?
물론 지표를 부서에서 쉽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가치, 이런 것을 지표로 잡지 않고 그 지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 그런 게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지표가 되면 백날 거기에 실적을 맞추고 열심히 해도 효과는 못 거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BSC 성과지표의 문제는 개인이나 부서가 목표를 내고 그 목표에 맞춰서 지표 조정한 다음에 그 실적을 연말에 가서 평가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현안 추진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는 체제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현안 점검 체제, 지휘부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현안 점검을 할 때, 현안 점검 회의를 가끔 하시죠?
하실 겁니다.
국비 얼마 따기 대책하고, 지사님을 모시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실·국장들이 와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올해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고, 되고 이렇게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추진과정을 삼자적 관점에서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분석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이런 기능은 지금 없죠?
외부위원의 성과평가는 계량화된 수치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얼마큼 갔느냐 마느냐인데 우리가 도정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말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사업이긴 하지만 심사분석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유형의 어떤 시스템이 다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특히 강원도정에서-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 관리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가능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업무 배분을 해서 최고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정책 전담부서 인력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자리 늘리기를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쪽으로 조직과 인력을 좀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강원도 인력수요가 엄청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2017년까지 324명이 필요합니다.
2014년, 2015년까지 일부 나가 있는 인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324명이 필요한데 올림픽이 끝나면 이 잉여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고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도 파견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너무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많은 인력이 나가 있고, 또 앞으로 이 324명, 이 정도 인력을 운영하려면 연간 750억 정도 들죠?
강원FC 사무국에 국장 하나, 과장 하나, 강원도립극단에 두 사람,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세 사람,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 두 사람, 강원발전연구원에 국장급 두 사람, 강원컨벤션뷰로에 두 사람, 강원테크노파크에 한 사람, 고충처리위원회에 네 사람, 의료관광지원센터에 두 사람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별도정원으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이 인원을 받습니다, 파견.
시·군에서 지금 발령받지 않고 들어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41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시·군 재원으로 도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그것이 1년 어학과정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에 대비하는 인력 양성을 하려고 그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과정을 채우지를 못해요.
왜 못 채우느냐 하면 도에서 너무 많은 인력을 빼갔기 때문에.
이 324명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면, 자연감소를 하려면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연감소를 하는 5년 동안 승진 못 합니다.

신규 충원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실·국장들과 쭉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2. 질문부제 : 일자리 창출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일자리팀 인력 확대 검토
일자리는 도민들이 가장 긴급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동의함.
일자리팀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돈 안 드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허브역할만 해 주면 됩니다.
특보들 많습니다, 지사님 특보 등 특보들이 많은데 일자리정책보좌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사님께서 이런 메가이벤트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데 좀 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라든가 대형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다니시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며칠 전 강원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과장 파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나요?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도 체질개선 멈추지 않겠다', 강원일보의 2015년도 6월 5일 기사인데요, '민선

6기 1년을 포함해 도정을 맡은 지 4년간 도 조직 체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수십 년간 공직사회에 이어져온 기본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고착된 공직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과장급 간 보직 파괴가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아직 지사님이 공무원조직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의 목적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공격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주문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압적이고 명령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 수평적이고 개방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느슨해 보인다 하더라도 끈기 있게 밀고 가겠다. 그것이 철학이자 신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가 시간과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좌표를 세우고 전력투구해서 현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공무원조직의 자발적인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공무원조직에서 자발적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조직 그런 문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을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조직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벌을 줄 때는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인사거든요.

지사님께서 지난 4년간 인사를 하셨는데 충격적 인사를 몇 번 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런 충격적인 인사는 조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저는 조직에 오랫동안 몸 담아왔고 또 이 조직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 된다, 파격적 승진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격적 승진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만 좋아합니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하거나 시샘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냉소적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의기를 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진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개인의 불행으로, 또 조직의 상처로 남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좀, 아주 공정한 인사, 공정한 인사는 결국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직원들 간에 긍정적 여론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100%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 또 조직의 자발적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봐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더 주시고요.
다면평가제 이런 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대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선택해야 되겠다.
도정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지사님께서 다 관여하실 수 없으니까 딱 꼬집어서 밀고 나갈 일, 그리고 집중하실 일,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지사님 방에 가서 본 사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하셨나요?
행정서비스 A/S하셨나요?
도의회와 함께 협의하셨나요?
일자리는 몇 개 만들어지나요?
제가 이것을 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도 꼭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운영,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돌아올 예산이 너무 많이 감소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재정 운영을 좀 더 건전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 1년간 강원도의 예결특위에서 교육청 예산을 봤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을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채무가 지금, 자료 올려주세요.
기 발행이 1,687억이고 예정이 1,805억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육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켜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민간투자사업으로 향후 20년간 지급해 줘야 될 예산이 1,770억입니다, 그렇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채무관리할 때 우리가,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얘기하면 채무는 지방채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BTL사업도 채무입니다.
부채, 또는 결산하면서 부채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항목에는 부채라고 했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채무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12번 넘겨주십시오.
11번인가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이 2014년 4월 16일에 교육감님 결재를 받고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약 350억 정도의 추가 재정을 부담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물론 노사협약을 거치면서 했죠, 그렇죠?
노사협약을 하면서 했는데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을 세우면서, 노사협약을 하면서 협약에 따른 단계별 재원 검토를 제가 요구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있습니까?
자료 13번 올려주세요.

이것이 2014년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 문서 원안입니다.
한 장 한 장 다 넘겨주세요.
마저 다 넘겨주세요.
재정추계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350억이 들어가는 이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결재권자가, 이런 재정추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담당사무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담당국장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문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서에 그런 재정추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소급하면서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렇죠?
부족분.
그런데 350억 되는 부족분의 재원을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강원도교육청이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불용액을 어떻게 잡게 되어 있습니까?
불용액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추계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점이 참 묘한 시점입니다.
작년 4월 16일, 350억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강원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건전 재정 운영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민병희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3분 45초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교육감님을 뵙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아시나요?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막시무스는 배역의 진짜 이름이고 배우는 러셀 크로우입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TV에 노출이 많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엊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시교육감님이 재판하는 데도 가셨었고, 그때도 서울시교육감님하고 TV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발표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교육감님을 첫 번째로 뵀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다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투사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교육감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맞지 않는 일에 나설 때는 나서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해서, 그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결정하셨어요, 350억의 재원 부담이 소요되는 것을.
사인하시면서 재정추계 판단을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런 재정추계가 안 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내부에.
거기에 사인했던 계장, 과장, 국장,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1안으로 봤을 때 100억, 2안으로 봤을 때 200억, 이런 종합적인 자료를 놓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니 너무 큰 아쉬움이 남고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2013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교육청 자체 평가로는 학생 수가 늘고 만족도 높고 행복교육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 수상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대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한 시책은 아니죠?

아닙니다.
2003년도에, 완주군 고산면 삼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는 완주군 고산면…….
삼우초등학교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한 사례가 정말 모범사례다, 제가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있었는데, 2002년에 폐교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추진했는데 교장, 교감 다 그 삼우초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정말, 특성화프로그램을 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한 겁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전국에서,
서울 이런 데서 학생들이 찾는 그런 학교가 되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할 얘기를 마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3년 동안 전체 5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60명 이상이 된 학교가 2개 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는 60명 이상이 된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27개 학교에서는 195명이 늘었는데 26개 학교에서는 107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1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교별 지원에는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3억씩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좋은 방안을 실무적으로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서면질문 답변자료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청 기획조정실 조직관리·평가관리팀, 경제진흥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예산과, 책임교육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6세기 강원도가 낳은 개혁가 허균, 그 꿈을 제대로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강릉시 초당동 언저리 어디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율도국을 그렸습니다.

그 땅은 우리 강원도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일 수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 20년, 힘차게 출발한 강원호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동해바다 어디를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과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6.18)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최성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6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 이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가족분들께도 모든 도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내 전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고통과 시름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으며 건강을 해치는 어려운 현실에 함께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뭄을 이겨내고자 많은 땀을 흘리면서 물과 사투를 벌이며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목숨을 걸고 바이러스의 소굴로 들어가 환자들을 살려내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려봅니다.

본 의원이 도의회라는 곳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된 것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지역을 누비며 많은 분들의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던 시간이 어제의 순간이었던 것같이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출되시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부족감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언과 격려, 마음을 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힘을 실어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살피고, 듣고, 의견을 나누며 성실한 자세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다시금 새겨 봅니다.

도민의 하나된 힘으로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에도 벅찬 현실 속에 우리 강원도에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주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내국인 선상카지노 설치 허가, 선거구 축소라는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계획에 실망과 허탈함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와 세월호 국회법 등으로 인한 중앙의 어지러운 문제 속에 우리 강원도의 현실적인 당면과제와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두 번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결같이 하나된 강원도의 중요성을 요청하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의 꿈을 이루고 하나된 강원도를 이끌어내시는 맨 앞줄의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바로 서시어 아집과 독선이 아닌 진정어린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는 데에 노력과 열정을 다해 주셨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충언을 드려 봅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다함께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진심을 담은 열린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모두의 의견을 들어 주시고 마음을 보듬어 주시어 어려운 강원도의 현실을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현명함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을 뵐 때마다 활짝 웃어 주시고 반갑게 손을 잡아 주시는 것에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는 이때가 강원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며 기회가 온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시어 강원도의 큰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진심과 열정을 담아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이번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과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소리를 크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1년여 동안 많이 불편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개선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심은 아니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한마디 역정에 많은 의원님들과 기자분들의 실망과 염려가 발생했던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본 의원은 주변의 부지사님과 실·국장님들, 참관했던 학생들, 기자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진심을 담아 질문에 답을 주셨다고 믿고 앞으로의 도정에 더 큰 기대를 해 보며, 매번 도정질문 때마다 지사님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점에 배려도 해 드리고 최 씨 간의 정도 담고 해서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행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보육비 문제, 학생인권조례 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불신과 분란 없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강원도 교육행정의 참담한 현실과 어두운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많은 문제점 중에서 선정하여 질문을 드

리고자 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도 큰 소리의 답을 청해 보겠습니다.

투명성 있는 열린 행정으로 모두를 보듬고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시겠다는 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더하기 학교 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질문부제 : 행복더하기 학교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잠자는 아이가 없는 학교 추진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이 본질을 벗어나서 너무 과한 경쟁, 경쟁으로 인해서 올바른 인격형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복더하기 학교인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음.

즉 자는 아이가 없는 학교이며,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좋은 성과들을 모든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임.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본 정책을 펼치시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을 하고 계시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더하기 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더하기 학교 지정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떠한 다른 정치적 개념 없이 계획과 기준에 충실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 당시 어떠한 기준에 준하여 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요?

그렇습니까?

심사위원의 학교별 배정 시 1·2·3차 심사에 모두 같은 분들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한 학교에 1·2·3차 똑같은 분이 가서 심사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시나 본데요?
2인 1조인가 3인 1조가 되어서 같은 분들이 1·2·3차 심사를 한 학교에 계속 같이 갔다는 말씀이에요.
모르십니까?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 채점표를 못 보셨습니까?
모르시나 본데요, 심사가 1차 서류 심사, 2차 심층 면담, 3차 현장 실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정을 보면 2차·3차가 같은 날짜에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 심사 지표 내용만 다르게 심사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차 때의 면담 결과가 3차의 현장 실사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 갔으면 어떤 다른 면을 보고 심사를 할 수 있는데 한 분이 계속 가고 더구나 2차·3차가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업무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심사 기준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 정책의 확대 지정 심사 결과를 보면 22개 학교가 응모하고 13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립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행복더하기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한 번도 안 보셨나 봐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한 배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당초 계획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 등 총 18개 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13개 학교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축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심사결과 검토서를 봤는데 그 결과로 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특성이나 교직원의 이념적 성향 때문에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아 교육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자료 2번을 보여주세요.
심사 기준표에는 평가란에 점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채점 결과표를 보면 점수란에 점수가 없어요.
자료 3번을 보여주세요.
심사위원 전체 명단을 저에게 주셨는데 학교 심사 채점 결과를 보면 위원도 지웠고 점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이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준비를 안 하셨네요?
이게 채점표가 맞습니까?
점수도 없는데요?
점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채점표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가렸습니까?
점수를 알아야 왜 지정이 되었고 왜 탈락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나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게 그것인데 싹 지우고 그것만 보내주셨어요.
본 의원이 왜 요구했는지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내셨다는 것은 본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저렇게 위조해서 보내주셔도 되는 겁니까?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셔야지 곤란한 것은 싹 지우고 엉뚱한 의견만 제출해 주시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의견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못 하시는데요, 좀 곤란하고 어렵다고 해서 숨기는 것이 교육감께서 밝히신 투명성 있는 교육과 맞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원본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명단은 제가 받았어요.
심사 채점표 결과에 점수도 없고 밑에 보면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없어요.
심사위원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좀 곤란해서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점수가 없어요.
이번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 본 사업의 1차 응모 현황과 지정 결과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내주셨어요, 두 번씩이나 요청했는데도.
이번에 이게 2차 사업이죠?
1차 사업에 대한 응모 현황과 지정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내주셨어요, 다른 자료는 다 보내주셨는데.
공개를 못 하시는 게 1차 응모 선정 시에도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합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주관한 회의의 회의록이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의든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청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다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습니까?
뭐 곤란한 게 있으니까 빼놓고 저한테 안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의 기본을 지키지도 않고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하는 이런 분들께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강원교육이 어디로 갈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심사 채점표의 종합의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정된 학교의 심사결과를 보면 1차 서류심사에서는 ‘계획서가 많이 부족하다, 기본방향에 맞지 않다, 준비과정 회의 시 비협력적이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없어 보인다.’고 하고 2차 심사에서는 ‘개선하기 좋은 환경이다,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 추진 의지가 강하다, 의지가 보인다.’ 등의 심사결과를 냈으며 심사 기준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도 않고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학교의 예입니다.
반대로 미지정 학교를 보면 ‘협력체계가 좋다, 기본방향과 시스템 구축이 좋다.’ 등의 1차에 긍정적 심사가 있었는데 2・3차에서는 ‘계획이 부족하다, 기본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등의 부정적 의견을 주면서도 의지가 보인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탈락을 시켰습니다.

서류 계획은 좋은데 현장 진행이 미흡해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서류 계획은 안 좋은데 현장 심사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합격이다, 국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선이 안 좋은데 후가 좋아서…….

국장님, 계획이 엉망인데 일이 잘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은 있겠죠.

계획이 엉망이면 일도 잘 안 되는 게 거의 다반사죠?

그 예를 든 겁니다.

본 의원은 심사결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 사전에 학교 지정을 해 놓고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까지 숨겨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공개를 못 하는 이유도 많고. 모든 과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1차 지정을 하고 난 후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철회가 된 학교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지정을 하고 운영과 지원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습니까?

행정 추진에 조금의 의구심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나오실 때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행복더하기 학교 지정의 1·2차 응모 현황을 보면 많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이 된다면 기본방향에 따라 많은 혜택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데도 응모결과가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응모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다수 관계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으로 응모해 봐야 지정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응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교육감님과 이념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응모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심사위원의 구성이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종합해 보면 교육감님과 이념을 같이하는 성향의 학교만을 심사 전에 미리 지정하고 예산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편법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이념적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평가해서 선정,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교육감님도 모르시고 교육국장님도 잘 모르시는데요?
하여간 공평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가 시작도 되기 전에 찬반의 논란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도청 앞에서 학부모들의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육감께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공개질의를 통해 밀실 행정 추진에 관한 것과 추진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하였고 거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를 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왜 거부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규정에 어긋난다고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보 공개는 개인적인 명단이나 전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명단도 있지만 행정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추진위원회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공개를

못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더하기학교 심사위원 명단은 제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면서도 심사채점표의 명단은 지웠어요.
앞에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음 자료에서는 명단을 지우고, 이게 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의 법을 적용하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심적으로 편한 것은 공개를 하고 곤란한 것은 공개를 안 하고, 법 적용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복더하기 심사위원 명단은 저에게 공개해 주셨는데 조례제정추진위원회 명단은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명단을 공개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법을 내 마음대로 일로 적용하고 절로 적용해도 되는 것이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교육감님, 혹시 조례제정 추진위원을 구성하실 때 전체 위원이 다 강원도 소속입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신다는 대답이 오늘 너무 많네요.
그 위원들 안에 교사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 교사분들의 성향 이런 것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조례제정 추진위원의 명단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조례 제정의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공지된 계획으로는 4월에 설명회와 5월에 공청회를 하고 6월~7월경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설명회를 취소하고「행정절차법」까지도 어겨가면서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행정절차법」제38조에 14일 전 공청회에 대해 공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7일 전에 공지를 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공청회에 대한 안내장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여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믿고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교구성원을 위한 인권조례와 강원학교인권조례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 용어인가요?
학교하고 학생이라는 말도 가끔 나오는데요.
강원학교인권조례가 맞습니까?
다른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는데 강원도는 학교인권조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4-1번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내용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제정을 하였고 여기에는 제5조에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에는 광주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제20조, 제21조에 성적 지향, 소수자 학생의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에서 제정을 하였는데 제5조에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3년에 제정한 전북에서는 제8조에「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를 넣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13년 1월에 입법예고를 했다가 2014년 6월에 의회에서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그리고 올해 4월 다시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2012년과 ’13년도에 문제가 되었던「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 즉, 임신・출산・성적 지향・동성애 등은 삭제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성애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이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강원도교육청은 그런 교육을 하지도 않고 할 의사도 없다는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교육감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만드신 전단지입니다.
자, 자료 4-3번 보여 주세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에서, 도교육청이「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동성애 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기에 그 반대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왜 고발하셨습니까?
어쨌든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
교육감님, 반대를 하시니까 고발하신 거죠?
정책에 반대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뜻과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 뭐든지 다 고발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인권조례 공청회 때 배부된 아주 특별한 자료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5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도교육청 관계회의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법」조항을 저희가 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추진한 후 이렇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회의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그 후에 계속 바꿔 갈 수 있다는 이 의미는 일단 조례를 만든 다음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해당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모든 강원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모르는 내용이네요?
모르시죠?
그러면 다음 자료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음성을 변조했습니다.
자료 6번, 녹취영상 보여 주세요.

됐습니다.
음질이 좀 좋지 않아도 들으셨을 것이라 보고요, 교육감님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관계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니까 이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사항인가 봅니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든 이 일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답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녹취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토론용 초안에「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뺐다고 했는데 이 녹음자료는 바로 그 다음날인 4월 18일 강원도인권교육연구회의 회의 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책임 있는 담당자가 조례가 통과된 후에 계속 바꿔 갈 수 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어떻게 바꾸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통과된 후에 계속 바꿔 가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결국「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언제든 다시 넣을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확신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은 생각이 없는데 직원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다 막아주실 거니까.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4월 17일, 토론용 초안에「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뺐다고 했습니다.
조례안에 성관계・임신・출산・동성애・성적 지향 등의 단어나 조항이 없기에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인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 인권교육 시행의 상호협력, 인권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속 구성원의 교류와 교육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은 그럴 듯한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면 논란이 되었던 조항들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병역거부 인정, 동성애 미화 및 조장 등의 보편적 국민의 정서와 떨어지는 결정도 많이 한 곳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정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동성애표현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을 삭제 권고하였고, 2004년에는 삭제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유예로 판결되었습니다.

2006년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하였고 국방부에 병영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지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07년,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영화를 제작하였고 2010년,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2011년, 언론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못 쓰게 했습니다.

2013년에는 2007년에 제작한 동성애 영화를 전국 초·중·고에 상영토록 하였고 2014년, 초·중·고등학교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인권교육지원법안의 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목적으로 군인권보호센터 설립 관련 군인권보호법안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활동을 알고 계십니까?

학교인권조례 제정에서 논란의 중심내용에 대해 많은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진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육감님 소신을 듣자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와 업무협약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동성애가 좋든 나쁘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뺐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궁금해집니다.

교육감님, 이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본인은 그런 내용 때문에 업무협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강원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십니다.

강원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지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성애 교육을 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 교육을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2013년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이라는 강원도교육현장연구원제 자료를 발행한 것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자료 117쪽부터 121쪽의 내용이 인권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임에도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성(性)소수자의 인권이 학습주제인 9-2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9-3번이요.

동성애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적어도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다루려면 동성애에 대한 찬반 양쪽 의견을 다 다루어야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인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강원도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의 인권교육에 대한 생각과는 어긋나게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방향은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1번 자료 부탁합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고자 7세까지 볼 수 있는 그림책을 살펴봤습니다.
인권에 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제목은「인권이 뭐예요?」라는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 다음 자료요.-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요.
집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료, 시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정치는 어른들만의 것일까요?”라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 자료와 같은 인권교육이 선행된다면 국가관 형성뿐만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부모·자식과의 관계 및 소통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여기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 생각도 존중해 줘야 한다. 어린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거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편향된 교

육을 받고 일찍부터 이념적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의 건강한 가족관·사회관·국가관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11-2번 자료 부탁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 자료요.
지난 5월 10일, 청소년인권단체의 활동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자료요.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사진입니다.
12-3번 자료 보여 주세요.
이러한 단체는 중·고등학생들의 폭력 혁명으로 중·고생 혁명 정권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실제 학교를 점거한 적도 있다는데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에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료 13-1번이요.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학칙을 개정하라고 했고 이를 시행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보면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 개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임신, 출산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강원도 내에 임신, 출산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서울의 경우를 보면 학칙에 넣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러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오늘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번 자료 부탁합니다.
아직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동해의 모 초등학교는 교직원이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학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춘천의 다른 학교에는 '청소년 미혼모 학생'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면 '14년 12월인데 서울보다 강원도가 더 빠르게 개정되었습

니다.
도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조례가 아직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이 벌써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13-4번 자료 부탁합니다.
영월에 있는 초등학교 사례입니다.
다음 자료요.
춘천에 있는 중학교의 동일 사례입니다.
다음 13-6번 자료입니다.
영월에 있는 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그 외에 태백, 횡성 등 지역과 초·중·고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학칙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학교별 학칙이라서 교육감님은 모르신다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지정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14-1번 자료 부탁합니다.
2012년 1월, 당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님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 발언내용을 보면 특정 정당의 정치이념을 교육에서 실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강원도 정책기획관 홍 모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글을 진보신당 게시판에 썼습니다.
“강원도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진보교육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토양으로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14-3번이요.
「헌법」에서는 제31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교육기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 조례인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 전체를 위한 조례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헌법」과「교육기본법」은 모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고 있는데 강원교육정책의 핵심인 홍 모 사무관은 강원교육을 진보정치의 실험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강원도 아이들은 중립적인 교육이 아닌 진보정치의 편향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보교육이라는 말이 필요한 걸까요?
교육에서 진보나 보수라는 이런 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진보성 정치 일꾼들을 키우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엄청나게 의구심이 듭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5월 29일, 원주에서 청소년교육의회가 열렸습니다.
180여 명의 학생들이 강원도 시·군별로 골고루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회의 토론 내용에 인권조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15-1번 부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책이 배부가 되어서 필히 읽고 오라고 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15-2번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고 자료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료 15-3번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조 모 교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강사로 모셔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6-1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14년 10월, 서울·경기·강원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국회의원께서 자료 공개와 함께 일선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무너지는 교단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교권 침해 건수가 많이 상승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2011년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시행된 첫해이기도 합니다.
이때 서울에서는 조례 제정을 놓고 큰 갈등이 있던 해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 16-2번, 경기도 학교폭력 증가 사례입니다.
16-3번 자료도 보여 주세요.
인권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17-1번 자료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번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자료도 보여 주세요.
마지막인 17-7번까지 보여 주세요.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셨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드릴 말씀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인권조례와 관련한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짚어보았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가 적용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이렇게 피해가 많다고 여겨지고 많은 학부모 및 단체들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많은 부분이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교권이 살아야 학교가 살고 공교육이 살며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학교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미래가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는 행정과 함께 교원의 권위와 존경심이 더욱 인정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

셔야 되지 않나 강조를 해 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걸맞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며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펼쳐 나가신다면 많은 불신을 야기시키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교육지도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념적 성향의 행동에서 비추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 주셨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편향된 교육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을 펼치셔서 진보성 교육이라는 호칭이 아닌 모든 분들께 존경 받을 수 있는 교육감으로 불려지시기를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한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교육감님께 요청해 봅니다.

처음 하는 도정질문에 준비를 한다고 나름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가뭄이 해갈되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5. 6.1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곽영승 의원 [새누리당, 평창군 제2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선후배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뭄과 메르스에 대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료진들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또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해병대전우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이 자리에서 정들겠습니다.

도정질문 자리가 하나 비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여기에서 말씀드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4개 시·군의 상수도 문제, 잘 챙겨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상황이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도록 실무자들께 지시하시죠.

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다른 항구를 한다든가 굴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침식방지 쪽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학교급식센터를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살리기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셀럽마케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특히 지난번 현대카드인가요?

지사님의 아이디어로 해서 상당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내 전통시장이 57개소에 7,321개 점포라고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강원도상인연합회에 등록된 점포 수만 그렇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점포까지 합하면 한 1만 6,000개~1만 8,000개, 5일장을 다니는 매대가 4,000개~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부 합쳐서 우리 도내 전통시장의 점포가 한 2만 개~2만 3,00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를 3명~4명씩으로 따지면 한 8만 명의 생계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상인들만의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농·축·수산물도 판매되는 만큼 농·축·수산에 종사하시는 도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070억 원, 매년 한 200억 원씩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죠.
예를 들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으로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5년 동안 4만 3,800건에 122억 원의 이자를 우리 도가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인데 우리가 과연 기대만큼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소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통시장의 실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지역의 전통시장 점포 수가 192개, 그다음에 5일장 매대가 120개, 그래서 한 312개의 점포가 있는데 2000년에 312개 점포의 연간 매출액이 37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곳에 대형마트 3개가 들어왔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312개 점포의 매출이 급전직하(急轉直下)하여 8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인 2013년 말에 378억 원을 하던 매출액이 무려 72억 원으로 줄어버렸습니다.

나머지 288억 원은 고스란히 3개의 대형마트로 매출이 옮겨간 것입니다.
아주 살인적인 현상이죠.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1개 점포당 연간 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한 달로 따지면 매출액이 1,00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전통시장 소상인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개 점포당 3명~4명씩으로 따지면 이 지역의 경우 1,000명에서 1,200명 주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인 것이죠.
그동안 지사님이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 왔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더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사님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만 강원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매년 200억씩의 예산을 퍼부으면서 한쪽으로는 전통시장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민병희 교육감님과 함께 추진하고 계시는 무상급식, 이 무상급식을 위한 무상급식센터가 전통시장 소상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무상급식센터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센터는 아시죠?
5개소의 학교급식센터가 있고 앞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런데 5개 학교급식센터 중 세 곳을 농협이 운영하고 있고 한 곳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 곳은 영농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 설립에는 도비, 국비,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지사님, 학교급식센터를 왜 설립하셨죠?
그런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소상인의 목만 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급식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이냐 했더니 지역농산물 소비, 로컬푸드 공급, 급식 질 향상, 농민 소득증대 이런 목적과 기능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한 급식센터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급식센터에 1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해요.
근무하면서 86개 초・중・고등학교 4만 5,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1만여 t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가 한 5억 원이 들어가는데 공휴일도 있고 토요일・일요일도 있고, 방학도 있고 해서 급식센터도 수지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모든 급식센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지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간 한 1만 t의 식자재를 86개 초·중·고등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 식자재의 90%가 전부 외지산입니다.
쌀을 빼면 우리 강원도산은 4.5%밖에 안 됩니다.
1만 t의 식자재의 4.5%인데 아까 강원도가 내놓은 급식센터의 기능과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식센터가 당초 목적은 살리지 못하고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오히려 옥죄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 이런 정책을 왜 추진하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햄, 소시지 이런 것은 외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급식센터를 계속 설립할 계획이신가요?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3년 전인가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급식센터가 생기면서 학교 인근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던 소상인들의 납품이 싹 끊긴 것이죠.
그동안 학교 인근의 소상인들이 식자재를 납품했었어요.
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학교급식에 변질이 생긴다든가 학교에서 식자재를 잘못 발주했다든가 이런 응급상황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인들도 해썹(HACCP) 인증마크를 달고 냉동차·냉장차를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데 한 급식소에서 86개 학교에 전부 배달하다 보니까 이런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 학교급식센터는 비교컨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독려해야 할 지사님께서 오히려 불공정 경쟁을 제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사님,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고 고언(苦言)을 하면 항상 지금과 같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4년 넘게 늘 지켜봤는데 별로 결과가 없어요. 직원들을 단단히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 정책이 가져올 순기능과 역기능, 비용과 편익을 두루 예측하고 타당성검토도 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은 아마 그런 적법한, 온전한 절차가 생략된 채 무작정 도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보다도, 우리 도내에 대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의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내식당에 우리 소상인들이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것이 옳다.

지금 대기업 구내식당이 지역산품을 쓰지 않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쓰지 않고, 서울 소재 대기업 식자재 공급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CJ푸드 같은 이런 곳에서 식자재를 다 가져다 씁니다, 비용이나 이것저것을 따져서. 이것은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지역기업으로서의 기업윤리가 아니죠.

지사님께서 시장·군수와 함께 오히려 이런 것을 독려해서 소상인들을 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도립의료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8대 도의회와 서면으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경영개선은 도정의 당면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며 도의원님들의 강력한 경영개선 촉구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 금년을 의료원 경영개선 원년으로 삼아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수입증대 시책을 독려·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정에서 자구노력의 정도, 실효성과 실적 등 성과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며 보완책을 지속 강구하겠다, 경영개선 자구노력과 지원대책의 성과가 없는 경우에 의료원 일부 매각 등의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의원님들과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의료원 경영개선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도지사는 의료원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막중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인식을 공유하며 정치적·행정적 부담 등 어떠한 이유로도 문제 해결의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뜻이 없다.', 서명하셨어요.

3년이 지났는데 왜 지키지 않으셨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내 5개 도립의료원의 부채가 813억 원, 지난 5년간의 적자만 보더라도 330억, 연평균 66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모두 도민 세금으로 보충해 주고 있어요.

집행부는 올해 안으로 당기순손실을 10억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조직의 무사안일(無事安逸),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지적합니다만 이것은 규정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법으로 신분을 보장하니까, 정년을 보장하니까 일반 직장인들 같으면 한칼에 목이 잘릴 이런 일도 넘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도립의료원 단체협약은 더합니다.
아주 철옹성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의료원 단체협약을 모른다고 하셔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히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체협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과급제 실시 금지, 구조조정 실시 금지, 편하게 가자는 것이죠.
그다음에 규정 제정이나 개정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되고, 공공의료사업 시행 시 노조와 합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의료원을 다그칠 때마다 지사님은 공공의료 기능을 내세우면서 방어논리를 펴셨어요.
도립의료원은 공공의료사업이 핵심 의무이고 책무인데 어떻게 이것을 노조와 합의해야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쭉 들어보십시오.
의료원 폐원・분할・합병・양도 시, 병원기능과 구조변경 시 또 노조와 합의해야 되고 과장급 이상을 채용할 때도 노조가 합의해 줘야 됩니다.
요즘 모든 조직이 필요하면 아웃소싱을 하는데 아웃소싱을 하면 올라갈 자리가 줄어드니까 노조원들이 합의를 안 해 주겠죠.
정규직 업무의 용역 전환 시 노조와 또 합의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단순 업무 같은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외주를 하거나 용역을 주죠.
자리가 없어지니까 못 합니다.
용역 위탁・도급 시 노조와 합의, 5인 이상 정리해고 시 노조와 합의, 비정규직 도입 시 또 노조와 합의해야 됩니다.
의료원 경영은 어떻게 되든 노조원들의 확고한 자리를 보장해야 되겠다.
또 직원 교육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됩니다.

의료원은 어떤 곳입니까?
직원 교육이 수시로 필요한 곳입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의료기기가 발명되는데 수시로 직능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런 교육조차 못 해요.
그다음에 연봉제나 성과급제 도입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되고 임금체계·직제 개편 시에도 노조가 합의해 줘야 됩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모든 조직에서,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감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규정이에요.
이것은 완전 독불장군식 단체협약이죠.
동의하십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조기 퇴직자를 선정할 때도 노조가 합의해 줘야 되고, 산재발생 시 노조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고, 직원 배치전환 시 노조가 합의해 줘야 됩니다.
원장의 독자적인 인사권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직원을 이 부서 저 부서로 마음대로 배치도 못 해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또 매년 전체 직원의 2%가 자동적으로 근속 승진합니다.
특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상으로 인한 사망자나 퇴직자,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원주의료원과 삼척의료원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현대자동차노조가 내가 나가면 내 자식이 내 자리를 물려받게 해 달라고 해서 전 국민이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도립의료원의 자리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단체협약을 해 놓았겠습니까?
진료비 감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협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도립의료원은 경쟁력이 없다.
인사권·경영권을 근원적으로 막고 있고 노조가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웃소싱도 못 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도민들께서 이러한 협약 내용을 속속들이 자세히 알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사님에게는 또 뭐라고 하실까요?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약을 하자고 하니까 못하

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들의 보호막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는 노조위원장 출신인 지사님의 의식이 강원도민보다는 보건·의료 노조에 더 경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지사님 본인도 모르게.
강원대학교병원이 과거 춘천의료원이었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전환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단체협약을 많이 개선했는데도 아직도 부실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방만경영 개선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월에 속초의료원장의 임기를 내년 6월까지 보장하겠다고 여기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죠?
지사님이 여기에서 임기를 보장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으니 만큼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역화폐를 도입할 계획이신가요?
이게 초기 투입이 적게는 60억, 많게는 100억이 듭니다.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1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성공사례도 굉장히 희박하고, 아시겠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것이 알펜시아나 강원FC 짝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서민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사님이 강원도립대 학생들에게 빈부와 무관하게 학자금을 무상 지급하고 계세요.
강원도립대학 학생들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이 236만 원인데 학생들은 이 중 2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재학생이 880명이라서 연간 도비가, 도민들의 세금 77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지사님이 도내 대학생 1만 2,000명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50만 원씩, 그래서 매년 60억을 지사님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해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키는 바람에 지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무상으로 주려고 하셨죠?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왜 지사님의 임기 다음 해까지만 합니까, 계속하지 않고?
지사님, 강원도 내에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많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도 많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초·중·고생들이 지난해에만 1,140명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더 처절하지 않습니까?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간 아이들보다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지, 우선 이러한 아이들을 도우셔야죠.
거리를 헤매고 있고 꿈을 잃은 1,140명의 아이들을 보살펴야지, 어찌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가는 아이들을 놔두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을 놔두고 대학에 간 1만 2,000명의 아이들에게 지사님의 임기 다음 해까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돈을 주겠다,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중학생·고등학생까지, 그 돈을 감당하겠습니까?
지사님, 이것을 추진하고 싶으시면 방향을 바꾸셔서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는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1,140명의 꿈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올리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좀 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사님, 지금 학생들이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출발점에 서 있는데 부잣집 아이들은 이미 30m~40m 앞에 나가 있는 게 형국이죠, 현실이.
그런 괴리,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지사님의 역할이고 교육감님의 역할이지,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똑같이 돈을 주겠다는 것은 그런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고 심화시키는 것이다, 빈곤층의 좌절과 분노를 외면하는 정책이다.
시간이 없어서, 정부정책 말고 강원도 자체적으로 빈곤층과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어요.
집짓기사업을 하는 데 연간 2,400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집수리 지원에 2억 3,000만 원, 차상위계층 긴급 지원에 4억 7,000만 원 해서 연간 7억 2,7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난 5년간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부터 챙기셔야죠.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시스템은 비스마르크, 처칠, 루스벨트 이런 부유층과 보수층이 창립하고 뿌리를 내리고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종종 반대합니다. 파이가 적어질까봐.

이런 퇴행적이고 소아병적인 사고로 어떻게 역사가 발전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장서서 깨뜨려줘야 할 지사님께서 6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빈부와 무관하게 대학생들한테 주겠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지사님, 5분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소득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것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나마 분위를 조정한 것이에요.

지사님, 메르스하고 가뭄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1. 질문부제 : 대학생 등록금 무상 지원 관련

답변요지 (최문순 도지사) : 가난한 학생부터 등록금 지원

대학생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 숫자를 유지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며,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느라 전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난한 학생들부터 주는 것으로 추진.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교육양극화가 증명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학교·고등학교에서 보통 학력 이상의 아이들은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고, 보통 학력 이상의 아이들 수치는 많아지고 있어요.

중간층 성적의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보통 학력 이상의 아이들은 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이고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부자들이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영향이죠.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쳐요.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평균 이상은 돼야지, 왜 그렇습니까?
좌우간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감님과 많은 논쟁을 하셨는데 철학과 교육관이 달라서 그런 논쟁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죠.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나 정부가 이런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현실적인 것, 현실적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죠.
실제 돈이 들어가야 뭔가 효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말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현실적인 양극화 해소책을 늘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도교육청이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셨더라고요.
학교운영비, 수업료, 입학금 이런 것으로 9,800명에게 32억 원을 지원하셨고, 또 9,700명에게 교과서대금 7억 원을 지원하셨고, 1만 4,000명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48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작년에 한 115억 원을 지원하셨어요.
저는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서민·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더 늘려 가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늘려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중도 포기학생이 5년 전보다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나 지난해에도 보니까 1,141명의 초·중·고 아이들이 중간에 학교를 포기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 포기가 제일 많아요, 658명.

그런데 658명 중에 학교 부적응이 453명이나 됩니다.

학교 부적응이라는 것은, 공교육 붕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자꾸 나올 정도로 교단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453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나간다는 것은 교육당국에서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 질문부제 :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관련

답변요지 (교육국장 최종국) : 학업중단숙려제도 등을 통해 학교 부적응 문제해결 추진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학교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상담활동이나 학업중단숙려제도를 두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상담하고 이끌어 주고 있음.

한 50% 정도로 줄어들어서 현재 1,100명 정도의 수준에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력해서 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계층이나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재능과 소질을 계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해야만 1등을 한 학생도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가 빈자보다 돈을 더 벌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빈자를 도울 때 부의 권리 주장이 더욱 정당성을 띨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공익에 보탬이 될 때 자신의 재능과 부를 더욱 향유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의 아이들과 부유층의 아이들이 누구나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게임입니까?

경쟁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고 해서 공정한 게임은 아닌 것입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교육양극화, 교육을 통한 계층의 세습, 교육이 좌절과 분노의 뿌리가 되는 이런 현실에서는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빈자와 부자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기회균등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을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태교가 달라지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사교육이 달

라지고, 그에 따라 대학의 수준이 나누어지고 인생의 행로가 결정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가정의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저소득 가정의 아이보다 9배나 됩니다.
4년제 대학의 졸업비율도 두 배가 넘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 아이의 85%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대학입시는 18년 동안 축적되고 결정된 실력을 평가하는 절차일 뿐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출신지역, 계층, 인종 등을 고려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등록금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명문대학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소외계층 우대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들을 정부나 지자체, 교육당국에서 펴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소멸하고 자본주의가 번영한 것은 경쟁의 효율성을 담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발선의 1등이 결승선에서 1등이고, 한 번 1등이 영원한 1등인 사회는 동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자신의 차기 당선만을 노리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쟁은 효율성을 보장하지만 태생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내기에 이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빈자에게 똑같이 10억 원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닙니다.
부자에게 5억 원을 주고 빈자에게 15억 원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 도립대학 무상등록금,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 등의 정책은 바로 기득권을 고착화하고 경쟁이 나은 불평등을 무시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도민들께서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누가 기득권층과 부유층 쪽에 서고, 누가 서민과 소외계층의 편에 서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피셔야 합니다.
계층이 고착화되는 사회는 경쟁력을 잃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선진국의 부자들은 70%~80%가 당대에 부를 일군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부자

들의 70%~80%는 선대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외 말씀을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최기호 이사관님, 유성택 서기관님, 임래준 서기관님, 이택수 연구관님, 신용철 이사관님, 이국섭 서기관님, 박대준 서기관님, 박세식 서기관님, 남원욱 서기관님, 허남기 연구관님, 전두식 연구관님, 박원규 사무관님, 조상구 사무관님, 이명재 사무관님, 윤교복 사무관님 오랜 공직생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 2막에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5. 6.1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조영기 의원 [새누리당, 양구군 선거구 출신]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악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강원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이로 인해 수고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기후변화 대비 농·축산업 체계 구축과 관련되어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초유의 가뭄사태로 인해서…….

의제와 관련이 없는 가뭄사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최악의 가뭄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실정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떻게 됐든 1년 동안의 농사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와도 많이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농업인들이 피해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또 그 피해가 있으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질문대상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포함되지 않으셨습니다만 일련의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그 상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두려움에 빠뜨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강원도의 실태와 향후 전망,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메르스가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수고하셔서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치안협의회 의장님이시죠?
치안협의회는 회의가 어떻게 열립니까?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두 번 정도?
치안협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룹니까?
치안이라 하면 뭔가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치안예방 및 방범용 CCTV 증설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대비해서 CCTV 설치율이 저조하고, 방범용 CCTV 신규 확대 설치로 범죄예방 및 검거율을 향상시켜 우리 강원도가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텐데 현재 타 시도 대비 강원도의 CCTV 설치율을 보면 중위권에 들어 있고요, 면적이 넓은 우리 강원도는 1㎢당 0.3대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 방범용 CCTV 설치 상황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범죄 발생 시 방범용 CCTV로 인해서 범인 검거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마지막 장을 좀 보여주세요. -6월 11일 고성군 거진시장 내 상가 등 전국의 재래시장에서 속칭 -마지막 페이지 좀 보여주실래요?-네다바이 수법 피해 시 시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범인을 검거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범용 CCTV 확대가 범죄 예방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체감안전도도 많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꾼들은 CCTV가 설치된 장소는 회피하는 습성이 있어서 CCTV 설치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CCTV 사생활침해 논란이 효용성 입증으로 종식된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더 달아달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의원발의로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금년도 3월 6일에 제정을 했는데요, 청청 강원, 또 치안 예방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늘려야 한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 반영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비와 시·군비로 하고 있는데…….

도에 치안협의회가 있지만 시·군에도 치안협의회가 있죠?

지사님이 의장으로 있는 치안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 안 다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정 강원도 이미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경기 서남부권 등의 강력한 범죄예방 활동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데다가 관광객 증가, 도로망 개선 등으로 인구 유입·이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강력범죄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강원도민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낮으나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로 이동해서 잔혹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체를 유기하는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군 단위는 상주인구가 많지 않아서 단 한 번의 엽기적인 범죄로도 위험 이미지가 전 국민들한테 각인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정 이미지 회복에도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범죄인들은 정보를 빨리 압니다.

강원도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면 강원도에는 아예 올 생각을 안 하겠죠.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물론 길을 닦고 도로를 건설하고 교량을 놓고 하는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민의 목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속히 우리 강원도 전체에, 특히 우범지역에 먼저 치안·방범용

CCTV가 설치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동력은 제조업일 수도 있고 교육,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이나 먹거리, 축제 등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천의 산천어축제, 그리고 춘천의 막국수·닭갈비축제가 될 것입니다.

닭의 경우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국조 및 국가 상징물로 삼아 닭산업이 우리처럼 단순한 닭갈비가 아니라 문화, 예술, 기념품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강원도가 닭산업을 한 차원 높여서 산업화한다면 매우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1. 질문부제 : 닭 엑스포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닭 산업 연구 추진

다그로에 관해서는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발전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며 더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연구하겠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는 1999년도에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속초에서 열렸습니다. -그 엑스포 이후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화·체육 이런 다양한 것을 접목한 엑스포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엑스포에 대해서 이제는 접근해야 될 때인데, 특히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과 함께 연계해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없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불안한 것은 2013년도부터 대구가 치맥축제를 하고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짧은 기간에 닭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파격적으로 달구벌을 닭구벌로 표기하는 등 발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50여 년 동안 닭갈비업소가 지켜온 닭고장의 이미지를 산업화하는 데 지사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반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닭을 산업화하고자 협동조합 다그로월드를 결성하고 춘천을 세계적인 닭도시로 만들자고 나섰으나 행정의 지원이 따르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강원도 차원으로 더 확대하여 닭산업 전반을 크게 다루는 세계적인 닭산업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닭산업을 크게 육성함은 물론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닭엑스포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여러 산업박람회 행사 이후에 시설의 관리 등으로 인해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닭엑스포는 박람회 개최 이후에 여러 형태의 산업이 남게 되죠.
그래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 영서지역의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시나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 별도로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춘천시와 협의해서, 명실 공히 강원도 하면 닭갈비, 막국수라고 전 국민이 이해하는데 정작 우리 강원도민들은, 강원도지사님은 관심이 없다, 대구에 치맥엑스포를 뺏기면 이것은 전적으로 지사님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부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 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바 강원도의 중소기업 정책사업은 대부분 있는 기업만 수혜를 받고 정작 해당사업과 정책자금이 필요한 대다수의 도내 향토기업들은 사업과 자금 이용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명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요,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3번 좀 올려주세요.
첫째, 정부의 역차별 중소기업 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만 모든 지원사업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경제와 함께해 온 10년 이상 된 우리 향토 중소기업들은 시대적,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곳에서 지원받아야 하겠습니까?
둘째, 강원도는 외지기업 유치의 혜택은 보장하면서, 기존 도내에서 생산·제조 활동을 하며 공장 등록이 된 중소기업이 10년 전인 2004년에 1,828개 업체였습니다.
도내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난관에 부딪힘에도 도에서는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그런 일반적인 정책 말고요, 중소기업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뭐 없습니까?
그분들이 왜 본 의원한테 강원도로부터 소외받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행정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 또 자금지원정책, 육성정책, 본 의원이 자료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과연 이런 정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을까, 혜택을 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부지사님, 세부적인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향토기업, 특히 강원도 중소기업들 중에서 우리 강원도를 살리고자 노력하신 향토기업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시험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고 있죠?
이 중 시험연구개발업무 사업이 중소기업에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실적이 있어요?
5년간 지원실적,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죠?
이곳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마케팅이 좀, 점수로 주자면 100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도내 제조업 중 식품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종업원 수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전시판매장의 식품판매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30%가 돼요?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아시나요?
왜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디자인업체를 우선하지 않고 타 시도에 있는 디자인업체를 참여시키죠?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 검토하셔서 도내 디자인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 포장박스 제작 지원, 하고 있나요?
중소기업.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우 미흡합니다.
이 부분도 확대해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하는 게 똑같아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신용보증재단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일반보증 350억 원으로 1,100건, 특별보증 100억 원에 100건이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금액 몰라요?
1조 2,000억?
1조 2,000억이, 다 융자를 받아가나요?
도내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줬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경제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1조 이상의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데 왜 운영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죠?
대출조건의 융통성, 대출상환의 융통성,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흑자도산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경영지원자금 조례를 개정해서 공장등록기업 48시간 원스톱 신용긴급대출제도를 검토·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말씀대로 10년 동안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숨 막히는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 중요한 자금을 은행이자에만 연연하면 되겠습니까?
조례 개정을 반드시 하셔 가지고 위기가 닥칠 때 도내 향토 제조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부지사님께서 꼭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님, 그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못 받아가는 기업들은 왜일까요?
그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강원도민의 성원 속에 창단한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은 첫 시즌에서 비록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화끈한 공격축구를 펼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강원FC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도민 화합에 기여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48억 원의 부채를 안고 올해도 112억 원의 예산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2. 질문부제 : 강원FC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부채 탕감을 통한 구단 살리기 추진
과도기로 봐 주시면 고맙겠으며, 부채는 거의 갚아서 올해가 아마 고비일 것으로 보이는데 부채를 정리하면 조금 재정의 여유가 생기고, 좋은 상태가 되면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끔, 구단을 살려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음.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강원FC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질타와 또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원FC축구단의 현주소입니다.
K리그 챌린지 현 순위가 11개 팀 중에서 10위, 3승 3무 9패, 17득점이고 실

점은 20으로 마이너스 3, 구단별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1위 상주 상무 국가 예산, 안산경찰청 예산 국가 예산입니다.
두 팀을 빼면 나머지 구단의 예산으로 하는데 현재 10위인 강원FC 예산이 112억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K리그 챌린지 2015년 정규리그 순위 10위, 지사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단보다 예산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여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본 의원이 강원도청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직접 제가 프로연맹에 가서 받아온 것입니다.
지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시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사님께 도움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의 현재 문제점을 보면 지역 유소년시스템 미약으로 연고출신 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2군 운영의 어려움으로 고졸 신인 및 대졸 신인들이 자체적 선수실력 향상이 없는 현실, 외국인 감독과 선수의 영입 실패로 예산 탕진,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대표이사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불협화음, 예산의 80%는 선수연봉이기 때문에 A급, B급, C급 선수의 분배를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경기분석관 및 분석시스템 미흡, 예를 들어 축구전문가를 영입해서 상대 경기 및 리그 전체를 분석하여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문제라고 보고요, 강원FC 성적향상의 대안 및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지역연고 유소년시스템 정착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유소년 관리 국장 및 에이전시 업무협약이 필요합니다.
지역연고출신 선수들을 체크해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여 프로팀 진출을 시켜야 하고 관중 수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활약한 선수들을 꾸준히 관리해서 팀에 의무감을 형성시켜야 합니다.
예산이 적은 구단은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서 타 팀에 이적료를 발생시켜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프로의 현실입니다.
값싼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서 1년~2년 한국에 적응을 시켜서 큰 팀에 이적을 시키면 국내선수보다 다섯 배 정도의 이적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여태 대표이사가 안 하신 거죠.

전혀 대표로서의 할 도리를 안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 대표이사님을 고집해서 계속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적은 팀들이 예산을 창출하는 데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이적료입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서 이적하고 외국인 선수를 많이 영입해서 이적을 해야 합니다.
경기장 입장 수입을 증대해야 합니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반드시 좋은 경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가서 경기를 볼 것 아닙니까?
또한 홍보마케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대표이사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창단된 강원FC가 과도기라고 말씀하시는 지사님의 말씀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강원도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로서 강원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강원FC로 만들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은 지역의 가뭄 사태로 인해서 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메르스로 인한 큰 타격으로 우리 영동권 지역의 해수욕장권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어 우리 청정강원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비한 질문은 많으나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10.14)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출신)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의원 신분이 아니라 강원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순수한 도민의, 주민의 입장에서 최문순 도정에 대한 충정 어린 마음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처음으로 도백(道伯)의 자리에 오르신 이후 그동안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소탈한 웃음, 또 친근한 스킨십,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등은 저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많은 호감과 강원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호감과 기대감은 간데없고 실망과 허탈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최문순 도정은 시원한 웃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최문순 도정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도정목표인 소득 2배, 행복 2배를 맞이할 수는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의 강원도정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일의 강원도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변인에게 묻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변인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인터넷시대에 도정 홍보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혹시 대변인께서는 도정 홈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왜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쩌면 굉장히 하찮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강원도 홈페이지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홈페이지를 보면 2005년 이후에는 주요 시책이 없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홈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2015년은 아예 없고 도청의 각 실·국 홈페이지를 봐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수두룩합니다.
거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최문순 도정이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10년 전 자료가 그대로 있는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홈페이지 관리 정도야 실무적으로 조용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런 사실을 질문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너무나 당연해서 공론화조차 하기 힘든 부끄러운 사실인데 지휘부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의 어떤 조직 스스로에 의한 시정이나 개선은 참 기대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서라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대변인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비 확보액이 6조 715억 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확보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비 확보액 중에 방금 말씀하신 철도·항만 등 국책사업비가 57.6%를 차지하고요, 복지 관련 보조금이 23.9%, 관광진흥기금이 7.8%, 그리고 지특예산이 10.7%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국책사업은 도에서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재량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나마 지역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인데 이 두 가지 예산을 합쳐 봐도 전체의 20%도 안 되는 1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결국 강원도 재정의 성과로 흔히 얘기하는 국비 확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강원도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가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국가사업은 지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당연하게 이행해야 되는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가적 책무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마치 강원도가 이것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 별로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고 우리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2015년 당초예산이 375조 4,000억인데 이 중에 강원도 관련 국비 예산은 1.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8.4%는 다른 지역이 확보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지특예산 정부안은 총 8,523억 원으로 이 중 강원도 배정액은 5.8%인 493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의 경우 총사업비 2,213억 중에 강원도 관련 예산은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비와 관련된 강원도의 현실인데 국비 확보를 도정의 큰 성과로 내세운다는 것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도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강원 발전을 위해 좀 더 진솔하게 고민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장님, 당연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헌법에 우리 주민의 복리를 위한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혹시 2015년도 도정 역점시책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도정 역점시책은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정 역점시책을 보면 동계올림픽 준비, 글로벌 강원도 구현, 지역경제 구조 전환,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을 선도할 SOC 확충,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에 통일・외교・통상・경제・복지・SOC 등이 화려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강원도 자치사무 맞나.
이것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이 역점시책 중에서 순수하게 강원도만의 자치사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런 노력으로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 타이틀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틀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가지고 모든 세부지침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도정 역점시책이라는 것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베끼고 우려서 화려한 청사진처럼 강원도청의 역점시책을 내놓지 마시고 강원도에 맞는 정확한 목표, 타깃, 액션플랜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이제부터 강원도정의 정체성을 찾아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대학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죠?
최하 등급을 받은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게요.
취・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7점 만점에 거의 1.679점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최하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최하 점수를 맞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강원도와 도립대가 평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첫 번째로 목소리를 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6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이였고 도 홈페이지에도 크게 홍보하시던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평가점수를 보시면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최하점이고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성평가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계량화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을 설득력 있게 포장하고 페이퍼 작성에도 신경을 쓰고, 열의와 정성이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평가가 최하점이고 정량평가가 만점인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도립대 구성원들의 무능함과 안일함, 더 나아가서는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기조실의 태만함 등이 어우러진 필연적 합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 다리를 낫게 하는 처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종합 비타민을 처방해 주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E등급 평가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원 장학금 지급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 인기 영합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에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원도 1인당 개인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2014년도 전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얼마인가요?

2013년 강원도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17개의 시도 중에서 몇 위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6위면 한마디로 꼴찌라는 얘기잖아요.

질문하는 제가 부끄러운데, 관련해서 최문순 도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소득 2배, 행복 2배로요?

2013년도 강원도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소득 2배라는 도정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열 배, 스무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소득 2배를 위해서 강원도만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이 있으신가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득 2배에 대한 정확한 시책이 없다고 제게 들립니다.
전반적으로는 있다고 들리지만 콕 짚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시책이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인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에서 지난 7월 7일에 메르스 극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18개 시·군이 동참했습니까?
그 자리에는 18개 시·군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참 이유가 시·군은 이미 메르스 극복을 위한 계획을 실천 중인데 도에서 뒷북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참석시키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메르스 극복을 위한 시·군의 움직임을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 17일부터 시작했고요, 춘천시는 6월 19일부터 이미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보다 한참 늦은 7월 7일에서야 대책회의를 갖고 7월 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구매, 그리고 전통시장 방문 등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이 도정이 시·군을 이끌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시·군에게 끌려다녀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 뜻 이해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내 26개 기업 1,080억 원, 그리고 해외 6개 기업 356억 원을 유치했다고 하면서 그 액수를 보면 '투자예정금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32개 기업 1,436억 원은 협의 수준이고 실제 투자유치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3년~5년 동안 걸리니까 아직까지 투자유치를 정확하게 한 실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투자유치가 부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부진 원인.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 협소 등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지금 열심히 소속 직원들과 뛰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부진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원인부터 먼저 선행을 하신 뒤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도정의 최고위층이면 이에 맞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죠?
2013년도에는 5만 1,000명이었죠?
다섯 배가 는 셈이에요.
이 수치를 보면 굉장히 괄목상대(刮目相對)하다, 일취월장(日就月將)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최종 목표로 하는 공항 활성화의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로 잡고 계신가요?
그렇게 연도별 말고 예를 들어서 공항 이용객 수는 몇 명, 정기노선은 몇 회선, 공항 운영수지 등 공항의 활성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150만 명이요?
공항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금년 수준이라면 내년도에도 또 69억 원을 예상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6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활성화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69억 원이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

내선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예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시켜 주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예산은 항공사에 지급하는 예산이고 지금 여행사에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행사에 지급하는 근거를 아직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여행사에 주는 근거에 대해서.
국장님,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의 예산편성 목적은 여행사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에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보조금 관련에 따라서 지금 여행사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조금이면 예산편성 목적과 관계없이 집행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달 조금 넘었군요.
앞서 실·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으셨죠?
인수분해도 못하면서 미적분을 풀겠다고 하고요, 기본 행정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 강원도가 글로벌의 중심으로 도약한다고 합니다.
부지사님, 이런 강원도정이 과연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실·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사실 현 강원도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단체장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기존의 계선조직은 배제한 채 비선조직에 의해서 일이 추진됩니다.
비선조직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안성 유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작 이런 일을 담당해야 될 소관 실·국장들은 일이 한참 동안 진행된 뒤에 제3자라든가 아니면 결재 과정의 협조 과정에서 비로소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도 당연해서 그동안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강원도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도지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분들이 바로 강원도정의 최고위 보좌진 아닐까요?

사실 도청 내 부지사 이하 전 직원은 이른바 지사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이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모두가 지사님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지사님과 뜻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지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전 직원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정에서는 그 권리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 부지사님과 실·국장 등 강원도정의 최고위층이 영혼을 잃어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지사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지사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위층 간부님들은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은 과거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또 경제부지사님 또한 남다른 강원 사랑과 경륜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양 부지사님의 부임을 계기로 그동안 정체성 없이 흔들리던 강원도정이 하루빨리 자리가 잡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지사님, 기대해도 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지사님께서 도청 안의 일은 부지사를 비롯한 조직시스템에 맡기고 마케팅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하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매사에 시시콜콜 간섭하기보다는 도지사는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 운영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일정 부분 실천에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하신 것만큼 효과가 있으셨나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기본 행정이 의심의 여지없이 잘 진

행되리라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삐걱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지사님,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지사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설령 몰랐다면 조직관리 능력을 의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은 독임제가 원칙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독임제 기관에서는 부지사 이하 모든 조직과 직원은 지사님의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를 비롯한 어떤 누구도 지사님과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은 이 보조기관들이 당신의 뜻과 같은 행정을 펼치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옆에서 독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사님 본연의 의무이자 업무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유보하거나 게을리한다면 지사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의라는 미명 하에 내부통제와 소통을 소홀히 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모든 책임은 지사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사를 그르치면 결국 만사를 그르친다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잖아요.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인사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를 접하신 적 있으시죠?
 지사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잊혀질 만하면 지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환관정치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지사님의 인사정책이랄까요, 인사 관행에 대한 견해를 솔직

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사의 원칙이라든가.

지금 계속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좀 더 깊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질문부제 : 인사 잡음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확립 추진

내부인사는 대체로 확립 되었다고 보며, 외부단체들의 인사에 좀 문제가 있는데 추천위원들이 미리 노출되다 보니까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것이 차단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추진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좀 시끄럽고 복잡하게 돼서 앞으로 그 제도를 보완해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청탁이나 로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확립하겠음.

지사님, 앞으로 인사에 대한 잡음이 더 이상은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사님께서는 평소에 새롭고 멋진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맞습니까?

그런데 지사님은 2선이시잖아요.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고 도지사 권한이 보기보다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사실 혹시 모르셨나요?

잘 알고 계시죠?

지사님, 도지사 자리가 처음이 아니고 지금 4년이 넘게 재직 중이신데 아직도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식의 견해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돈이 너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신다면 재정 확보가 도정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재정이 없다면 지방세법을 고치자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가서 차관이라도 해야 할 텐데 아직 이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바람대로 만약에 강원도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도지사가 하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돈이 충분히 여력이 된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지사님,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 자원을 처음부터 100% 구비해서 추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고 분배하는 자원의 조정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공공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지사이고 행정기관인 것입니다.

각종 자원이 모든 사람의 욕망을 100% 충족시킨다면 국가가 왜 필요하고 도지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사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원도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공언하시는데 이런 자조 섞인 지사님의 견해로 인해 도민들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전에 모 일간지에서 파산부 판사가 본 망하는 기업의 특징이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정관리 기업이 회생하거나 파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경영자세라고 합니다.

대표자의 경영자세는 회사 존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필자가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밥집조차 주인이 가게에 늘 나와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맛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라고 하면서 회생기업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은 물론이고 약점까지도 소상히 알고 있는 반면에 파산기업의 CEO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몰라서 신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대부분 참모에게 의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우리 강원도의 현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주인이 가게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밥집 국밥 맛이 달라지는데 강원도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직이 삐걱거리는데 그 운영시스템이 알아서 조율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를 향한 거대 비전은 국가비전인지 강원도비전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150만 강원도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원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뗏목 타고 고기 잡는 어부에게 10년, 20년 후의 원양어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20년 후가 되면 지금의 뗏목 어부는 이미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해기사 자격증이 없어서 원양어선을 타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뗏목 어부를 위한다면 미래의 원양어선보다는 내일의 발동기 보급에 힘써 주십시오.

발동기는 뗏목의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서 어쩌면 당장 내일의 어획고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양어선은 그 실현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어쩌면 미래의 원양어선은 현 세대에게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한 원양어선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원도정 수준에서 대놓고 약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들은 4년 내 강원도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가 되고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리라 굳게 믿고 확신에 찬 신념으로 지사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지사님 의지대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대다수 강원도민들은 강원도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권한 역시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업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열악할지라도 납득할 만한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체성 있는 강원행정, 또 실현 가능한 강원행정이 되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400여 년 전에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는 3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사님 임기의 70%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 시간이면 정체성 없이 흔들리는 이 강원도정을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소득 2배, 행복 2배를 향한 옹골찬 행보를 가슴 가득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10.14)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청정 강원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경유차는 원래 더티 디젤, 즉 유해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차로 인식됐지만 몇 해 전부터 폭스바겐을 위시한 많은 회사들이 기술의 발전을 앞세워 클린 디젤, 즉 깨끗한 경유차라는 별칭까지 붙여가며 가격이 싸고 연료 효율이 좋다는 장점만 부각시켜 경유차 판매를 확대해 왔습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서 독일 자동차의 친환경성을 치켜세우며 미국 정부와 자동차 회사들에게 보고 배우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 실시한 테스트에서 예상과 정반대의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와 이를 미국 환경청에 접수하면서 적발되었다는 상당히 웃긴 과정을 가진 폭스바겐 조작사건은 비용 절감이 유일한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해성물질 배출 검증을 핸들이 직진인 상태에서만 한다는 것을 악용해 컴퓨터 회로상 직진에서는 저감장치가 작동하지만 핸들이 방향을 바꾸면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만들어 실제 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보다 40배가량 많이 배출됐고, 미국에서는 자체 통계 결과 이로 인해 해마다 5명~20명이 숨졌을 것이고 이는 지난 7년간 106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수준이며 그럴 경우 총 소모비용이 1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별반 다르지 않고 심지어 경유가 더 비싼 주유소도 흔히 볼 수 있어 디젤차 점유율이 2.7%에 불과하고, 땅이 한없이 넓음

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추정치가 나왔는데 디젤차 점유율이 40% 이상이고 땅이 좁은 우리나라나 디젤 점유율이 64%인 프랑스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20년 이후 파리에서 경유차 운영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미국은 유럽보다 배출가스 규제가 강하기로 유명한데 규제를 충족시키는 차를 만들려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투자회사 엑산BNP파리바에 따르면 유로5 배출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차량 1대당 700유로가 들지만 유로6 기준이 되면 1,300유로가 든다고 합니다.

윌리엄 베커 전미청정공기협회 전무이사는 '폭스바겐의 조작행위는 결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비용을 절감해 다른 업체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폭스바겐도 차량 1대당 300만 원이 드는 요소수를 이용한 저감장치탱크를 설치하면 됐지만 그러자면 차량 설계부터 바꿔야 하고 이는 300만 원 플러스알파만큼 차량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컴퓨터회로 조작이란 방법을 택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지금 해결비용이 100조 원이라는 얘기가 오가며 회사 존망의 기로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SRF와 경유는 다른 종류지만 환경이란 주제에 있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질문에 앞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를 먼저 말씀드려 봤습니다.

먼저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사님, 혹시 가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연유로 가을을 좋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가을' 하면 저는 가을 야구가 떠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현대 유니콘스 광팬이었고, 혹시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으신가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현대 유니콘스가 창단부터 해단 10년 동안 정말 전설적으로 잘해서 거의 가을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또 그때 시기가 제가 딱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야구장도 종종 가고 우승 불꽃을 보면서 우리 현대 팬끼리 얼싸안고 했던 추억이 있는데 저도 지사님처럼 현대 해산 후에 거짓말처럼 야구에 관심이 딱 끊겼는데,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작년에는 류현진, 올해는 추신수 선수가 포스트시즌 진출을 했잖아요?
그때 기분들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추신수 선수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7년간 약 1,518억 원 정도이고요, 1억 3,000만 달러이고 1년에 약 217억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먹튀라는 말도 들었고 올해도 부진하다가 중·후반에 맹활약을 해서 여러 비아냥들을 잠재우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냈는데, 이런 고액 연봉 스포츠선수 얘기를 들으면 1년도 아니고 장기계약으로 7년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7년씩 계약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아니면 너무 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 회사 입장에서 7년 장기계약을 하는 이런 것이 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수들은 계약 전에 활약을 잘하면 남들이 평생 벌기도 힘든 200억 원이 넘는 돈을 1년에 벌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바도 있지만 먹튀일 수도 있어요, 그 선수가 장기계약을 해도.
그런데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 무엇 때문에,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구단들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모험이라면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기계약 연봉을 책정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대해서 팔고 그런 것보다는, 야구는 기록의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록은 3할, 4할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게 확률이에요, 나와서 칠 확률.
도루 몇 개, 홈런 몇 개, 실책 몇 개, 타점, 타율, 주자가 루상에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런 사항들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선수들이 남긴 기록을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선수의 경기능력, 즉 잘할 확률을 보고 200억이나 300억 몸값을 책정하는데 경영자나 구단 입장에서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연봉 책정을 그렇게 높게 할 때 분석을 하고 또 분석하고 이런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예도지사로 위촉이 되기도 하셨던 A연구원의 특정연구원이 계시잖아요?

언제 처음 만나셨고 어떤 연유로 그 A연구원과 그 A연구원의 특정연구원을 알게 되셨으며, 누가 소개해 주신 겁니까?

목사님이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특정연구원께서는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사기혐의로 수배 중이고, 수배 중이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이죠?

제가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상용화에 실패했다는 것은 믿고서 같이 했는데, 돈도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를 했으니까 고소를 하신 건가요?

그런 사실들이 있잖아요.

명예도지사 위촉할 당시에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못 가서 수배되고 이런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사실도?

그러면 당연히 참하나GW 개소식 이런 때는 못 오셨겠네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시기 전에 기술을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위촉하시고 확인을 하셨나요?

비슷하게요?

자료에 보니까 협약 이후에 한번 가서, 기술 시연을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기술을 보기도 전에 협약을 먼저 하시고 시연하는 것을 보러 가신 건데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난 8월에 원주의 B업체와 함께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업체가 기존에도 SRF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A연구원의 신기술을 접목해서 공장설비 일부를 변경하고 현재 A연구원이 했다는 그 기술로 시험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시험생산한 연료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드리기로 하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SRF랑 다른 규격이거든요.

유로5에서 유로6으로 가는데, 이것이 질소산화물인데 반을 절감하라고 하고 거기서 이런 비용절감 문제가 나오니까 속임수를 쓴 건데 자동차에도 이런 규제와 규격이 있는 것처럼 SRF도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0.6인데 이탈리아는 0.3, 필란드는 0.2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아요, 외국이 더 까다롭고.

그리고 염소의 경우인데 이것도 보시면 국내가 다른 데보다 더 높은 걸 알 수 있으시죠?
SRF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규격 자체가 굉장히 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배출 허용 기준이거든요.
이게 다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얼마 이하,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딱 SRF 허용기준만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여기서 회분 20 이하, 염소, 이렇게 이하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A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할 때 이처럼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수치상의 기술검증을 한 적이 없죠?
현재도 명백히 수치상으로 거기에 기술이 부합한다는 그런 입증자료가 없죠?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끊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슬러지는 SRF가 아니잖아요, 슬러지 처리는.
저는 SRF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협약 체결 당시에 기술검증이 안 이루어졌고 현재도 검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약은 체결이 됐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SRF가 쓰레기 뭉치인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중국 쓰레기랑 우리나라 쓰레기랑 성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검증도 안 해 보고 중국에 가서 시연을 보시고 이게 괜찮구나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 이것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것이 아니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검증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저희가 이 기술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생산비용이 절감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업체 중에 이 기술과 협약을 한 거잖아요?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기술을 확립하는 단계의 업체에 장점이 없는데 왜 협약을 체결해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사님, 그러면 유기물질을 추진하시고 SRF는 추진을 안 하셨어야지 그것을 먼저 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기술력에 더 확신이 있어서 먼저 하시는 겁니까?

다른 B에 대한 사업은 안 하시고 A를 해서 그 A가 문제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제성, 채산성에 대한 검증자료도 없을뿐더러 그것도 모르신다는 거네요, 거기 제조방법이 더 싼지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본 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 기술이 확립되고 정립된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생산성 절감을 주 이유로 싸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 제가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을 때도 모든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얘기 하셨거든요, 거기가 싸다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왜 거기랑 체결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지금 참하나GW가 아니라 다른 업체랑 해도 싼 거예요.

협약을 하실 때 꼭 그 회사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사님 답변에 의하면 단순히 시연만 보고 강원도에 기술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고 기술 자체가 입증은 안 된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지사님께서 협약하실 때 6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신 것으로 봤는데 제가 이분 특허난 것, 아닌 것 이런 것을 특허청에 가서 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개요까지 다 읽어보고 그랬는데 6가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슬러지 그것도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불투명한 것이고요, 아직은 그게 확실히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 6가지 전체에서 기술이 있다고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지금 축분처리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여기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RF만 관련해서 기술검증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지금 다 불투명한데 시연을 보시고 나서 그게 괜찮구나 해서 협약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사님이 야구감독이나 구단 경영자이시고 제가 스카우터인데 '제 눈앞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마다 홈런을 때리는 선수를 봤습니다. 우리 팀에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 체결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지사님이 구단 경영자이시고 제가 데이터를 들고 가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비디오도 들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본 걸 가지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보면 안다는 것이?

그런데 규격에 맞았는지 이런 것이 안 나오잖아요.
보고 안다는 것은 정말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협약이라고 해도 선수 기록과 그런 전적을 먼저 봐야 되고요, 수치상으로 입증이 돼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단테스트, 우리 국내에 와서 이것이 중국 것이 아니라 우리 것도 되는지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던지는 공마다 홈런을 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안타를 치는지 그것을 보고 나서 협약을 체결하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신 말씀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예 엉터리거나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요, 방법은 아는데 규격 인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학도 할 수 있고 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지만 점수가 모자라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명이 불분명한 제조 신기술을 원주에 있는 B업체에 접목을 했는데 그 B업체는 기존 규격인증을 받은 업체였죠?
B업체가 저런 인증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A연구원도 보유한 특허가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SRF 제조와 관련해 독자적 핵심기술이라고 말하는 특허는 특허청에서 거절을 당했었어요.
계속 말씀하시듯이 다른 기술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SRF 관련해서는 기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조기술을 바꾸면 B업체가 변경신고를 해서 새로 인증을 받아야 되죠?
여기 보시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서 이렇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두 번째에 있어요. -과태료도 물고…….
B업체가 변경신고를 안 했는데, 시험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판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판매를 안 하죠?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변경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변경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라도 있으면 그게 입증자료나 부적격자료가 되는데 그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 업체의 기술이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럼 그 신고를 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B업체가 시험생산 제품을 계속 규격을 못 맞추고 있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업체가 자기네가 원래 가졌던 기술로 생산을 하면서 소규모만 시설변경을 해서 시험생산량이 적은지, 아니면 자기네가 하고 있던 거의 모든 것을 변경해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신기술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말씀이 아니라 기존 업체가 생산하던 게 A이고 신기술 도입한 게 B면 A를 생산하면서 B를 시험 생산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게 B밖에 없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B업체도 기존에는 쓰레기 연료를 생산을 해서 어딘가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못 팔게 되었잖아요.
B업체 입장에서 그것은 명백한 손해거든요.
그리고 개조 비용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B업체가 그냥 얘기만 듣고 “아, 그래요?” 하고 했으면 그 개조 비용까지도 손해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다고요.
어떻게 규격인증도 안 된 기술을 전문가께서 도입을 하셨는지 신기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A연구원에서 도와 함께 참하나GW 설립을 했잖아요?
저희가 투자해 준 부분은 어떤 게 있고 반대로 A연구원이 강원도에 투자한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투자를 받은 게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A연구원에 도가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알겠고, ‘17억 원을 참하나GW가 9.5억 원 자본설립, A연구원에서 7.5억 원을 투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받은 게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도에서 답변을 이렇게 받았어요.
9.5억 원을 D대표가 자본설립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D대표가 있는 참하나

GW가 9.5억 원 자본설립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투자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동일 답변에 대해서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8월 13일 답변이었고 이것은 10월 5일 답변인데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도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투자받은 것이 있다고 주셨고 그다음에는 '우리 도가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외에도 도가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질문했을 때 전반적으로 답변을 안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답변이, 심지어 어떤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강원도는 A연구원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답변이 왔어요.

A연구원이란 선을 확 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협약서를 보시면, 이것도 궁금해요.

여기에 보시면 A연구원이 우리한테 열병합발전소 설치 추진 2,00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중국투자를 받고 하려고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2,000억 중국투자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원주 업체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전혀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보면 '행・재정으로 최대한 협조한다.' 이게 협약서잖아요.

여기 '상호 행・재정적 최대 협조, 상호 기술발전 노력', 그리고 '강원도에서 상호 협력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와 A연구원이 상호 협의하여' 이렇게 들어 있는데 아까 "우리는 같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답변을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어시간에 국어 해석하듯이 정말 단어 그대로 사업은 A가 하고 그 외적인 상호 협의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헷갈렸거든요.

A연구원과 강원도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 남의 사업 상용화하는 거까지 강원도가 왜 도와줘요?

우리가 받는 이익이 뭔데요?

협약을 해서 그걸 우리가 뭐하러 도와줍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보시면 계약자는 강원도라고 되어 있지만 상호는 ㈜참하

나가 같이 되어 있고 지사님 이름이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도 참하나에는 분명히 참하나GW 자기네 회사라고 되어 있고, 지사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의 임대비용을 왜 내주냐 했더니 “우리 도도 가서 상주해 있기 때문에 ……,”, 같이 공동사업을 안 하는데 왜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왜 그런 겁니까?
그리고 거기의 임대비와 관리비를 다 내주고 계시는데 그 임대비 1,518만 3,570원은 우리가 최소 계약 9개월짜리를 해도 그렇게 들고 A연구원 부담 376만 5,735원인데 그걸 제외하면 거기에 부담하는 것이 1,141만 7,845원을 쓰거든요.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1원도 안 빼고 세금이에요, 세금.
지금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불투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증이 다 끝난 후에 협약 체결을 했으면 성공 가능성도 높고 저희가 그것을 바라고 하겠지만 성공 가능성도 없는데 데려와서 사무실 임대비 내주고, 만약에 성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남 좋은 일인 것이고, 공동으로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뭘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인데 왜 너희들을 주느냐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사용된 돈이 다 세금이라는 것은 인지하시죠?
만약에 실패하면 그 세금을 날리는 것에 책임을 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수치상으로 우리 강원도가 준 도움이고 간접적인 도움이 우리 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시간이 없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저도 주홍글씨 새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 때문에 사람을 놓치는 것을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연구원의 사례는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판단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점검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강원 도의원으로서 도정 판단을 함께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 및 환류를 하는 과정에서 심정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

시다면 머리 숙여 정말 사과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연구원의 예전 얘기들을 좀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하고…….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이 내용이 교도소 가기 전의 내용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물통이고 물을 넣는 곳이고 여기에 특수장치가 있어서 물을 넣으면 그게 에너지화가 되어서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온다 이거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 판결문을 보여드릴 텐데, 판결문 상에는 동그란 통이라고 했으니까 저것과는 모양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였을 수도 있어요.
동그란 통의 내용으로 저것을 비교해 드리면 가스레인지 안에 타는 연료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용접해서 사람들이 못 뜯어보게 하고 불을 켜면 가스를 통해서 불이 붙는데 이게 열이 있으니까 밑의 것이 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밑에 뭐가 들어 있든.
거기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 가스밸브를 잠그고 밑에서 바람을 넣어서 불이 몇 시간이든 가스밸브를 잠가도 계속 나오게, 그게 걸린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이게 그 당시의 판결문인데 결론 부분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징역 1년 3월 받고 그다음에 나와서 또 징역을 살다 나오고 집행유예 기간에 법원에 고발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오·폐수처리업체에서 어떤 일을 해서 고발을 당하셨느냐 하면 자기가 기술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판권을 준다고 해서 5,000, 1억 5,000, 3억 5,000을 편취하고, 이것은 죄목이 1번이에요.
2번은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매월 10%의 이자를, 이게 다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파벳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그걸 바꾸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2억 5,080만 원을 편취하고 그리고 내용이 시연회를 한 다음에, -지사님도 시연회를 보고 오셨지만 -그 시연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판결문상 시연을 한 다음에 항상 그것을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두 개가 아니에요, 판결문에 보면.
그리고 시연회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고액을 받았는데 '대대적으로 시연회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이런 식으로 법원은 판단했잖아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더라도 준다고 한 것을 안 주고,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아까 물연료.
여기에 보면 투자자들 몰래 미리 약 8리터~10리터 폐슬러지를 통해 가연성 고체연료를 넣고 용접으로 보강한 후에 LPG 버너를 이용해서 15분 동안 가해서 기관에 있는 연료에 불이 붙게 하고 하단부의 작은 구멍에 송풍기로 공기를 강제 투입해서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보유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기술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물연료, 우리 세계에 물이다 바다다 이런 게 있으니까 32억 얼마를 이 건으로 저걸 하셨고 막판에 보시면 임금체불도 하셔서 총 재판에서 나온 게 40억 원인가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여드리는데 지사님도 저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셨습니까?
지사님, 특허기술들은 시연을 해요.
그런데 저것은 정말 마술이잖아요, 마술.
마술이라는 게 눈 속임 아닙니까?
마술을 시연한 다음에 투자금을 받아요.
투자를 받고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도가 잘못한 것이고요, 저것은 저분이 예전에 왜 실형을 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드린 것이고…….
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체결이 그렇게 허술하냐는 거죠.
강원도가 그렇게 허술해야 됩니까?
협약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소액이지만 1,000만 원도 세금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사님도 말씀을 주신 바 있지만 간접투자로 우려되는 게 -의도는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명예도지사 위촉이 의도치 않은 무형의 간접 도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사업을 하려면 잘 되어야 하니까, 동업자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선수로서의 기술보유, 성격, 걸어온 궤적 등 기록을 꼭 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기록도 안 보고 ‘강원도가 보장하는데 뭘.’ 이러면서 성급히 지갑을 꺼내는 구단이나 경영자가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가 보장을 했으니까.
없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모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 강원도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른다는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명예도지사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 강원도나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중국에 계신데 중국에 투자할 때도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자격이 없다 해도 남들이 보기에 뒤에 강원도라는 백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신용체크 보고서인데 이게 옛날의 A연구원이에요.
신용등급 부실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A연구원이 폐업상태로 되어 있어요.
휴·폐업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쭉쭉 있는데 이건 시간관계상 넘어가고, 보시면 신용등급이 낮아진 게 카드값 489만 9,000원을 못 갚아서 계속 지연되다가 회사가 500만 원 때문에 폐업된 거예요.
그리고 소송 정보를 보시더라도 3,000만 원짜리 하나가 걸려있어요, A연구원이 피고가 되어서.
사건명이 '대여금'이에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을 대여했겠죠?
패소예요, 원고 승.
A연구원이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했어요.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 설립한 참하나GW 신용체크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 대표자가 D 씨인데 D 씨가 아까 A연구원과 동일인인 것을 알고 계시죠?
A연구원 대표가 참하나GW 대표, 그리고 D 씨가 특정연구원과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대표가.
저는 그 대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A연구원 대표였던 분이나 참하나GW의 그분이나 대표가…….
다른 분이신데, 혹시 D 씨와 특정연구원의 관계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참하나GW 대표를 모르세요?
아, 대표를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참하나GW 대표도 제가, 그럼 이게 불가능하겠네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이.

듣기만 했고 소문이라는 게 워낙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의미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별로 성립은 안 되는데…….

이분도 소송에 걸려서 국내에 못 들어오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투톱이 한국에 다 못 들어오는데 왜 협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 연구원과?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면-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당연히 안 하죠.

1. 질문부제 : 참하나 GW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

관련 기술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기술을 내 놓을 것으로 판단됨.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것은 국내투자든 국외투자든 중국이든 어디선가, 아까 투자사례를 보셨잖아요.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피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저 같으면 이 협약서를 보고 강원도와 맺은, 그리고 명예도지사증을 보면 협약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럴 것 같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증상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두 회사가 A연구원이나 참하나GW는 이름도 다르고 사업자 번호도 다르고 엄연히 다른 회사지만 대표가 같아요.

그리고 둘 다 기술이 특정연구원의 저거잖아요.

A연구원에서 두 분 지위상 공동 설립한 참하나GW에서 두 분이 실제 원톱, 투톱이겠죠?

그런데 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가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두 분이 양 톱으로 계시는 회사로서는 불가능했던 국내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국내투자를 못 받을 뻔했는데…….
예, 맞습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모른다지만, 정말 투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하세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고발을 당하셨잖아요.
지금 당하신 상태이고, 설령 거기에서 시행착오 끝에 기술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꼬여서 기술상용화 단계에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온 A연구원과 함께 설립한 참하나GW가 크게 성공해서 큰 수익이 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 수익이 나는 것 자체가?
우수한 기술을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우수한 기술이라고 하세요?
말씀해 주셨듯이 우수한 기술이고 그것으로 참하나GW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누리는 기쁨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냐고요.
타 시도 분들이 그런 업체와 함께 돈을 벌고, 그리고 실제 피눈물을 흘렸고 지금 흘리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나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흘릴 분들이 '괜찮다, 괜찮다, 강원도야.' 이러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리고 저감장치, SRF열병합발전소를 지정면에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아까 폭스바겐에서도 저감장치 얘기가 나왔는데 저감장치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으려면 -SRF는 분명히 유해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감장치인데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전기사업을 자진 철회해서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는데 전기사업 허가 자진 철회는 저번에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답변입니까?
전기사업을 철회해서 이쪽 저감장치 사업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해당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살펴봤는데 전혀 개연성이 없고, 전기사업 허가나 배출시설 허가는 별개의 사안이고 따로 작성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연료기술이 아니라 발전소를 돌리시려면 연료기술이 확립이 안 되어서 우리 것을

못 쓰더라도 제조된 남의 것을 가져와서 돌릴 것 아니에요.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도가 저감장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고가인데 90㎾, 3,000㎾로는 절대 수익이 안 나고 채산성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좋은 것을 쓸 리가,
아까 폭스바겐 같은 대형회사도 저감장치 때문에 사고를 쳐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과연 써 주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반대에 대해서 한 특보가 '지정면에 추진되는 SRF열병합발전소의 경우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신기술인만큼 지속적으로 지역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지만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주민들이 우선……', 아무리 좋은 기술이 뭡니까?
왜 그런 식으로 도의 입장을 표명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무지몽매한 도민들이…….
무지몽매한 도민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생존에 대한 투쟁이었고 무지몽매한 촌에 산다고 해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기술을 모른다, 신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말씀 도중에 흥분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11. 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진기엽 의원 [새누리당, 횡성군 제1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두 번씩이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 걱정이 많겠습니다만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지난 제249회 임시회 도정질문 중 음주 출석으로 인해 지사님 당사자는 물론이고 본 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민들은 많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다시는 들추고 싶지 않은 일이고 지사께서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성 없는 사과에서 비롯한 진실 공방으로 인해 더 많은 의심을 들게 하였고 대다수 도민들은 지사의 솔직한 진심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만취냐 과로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원도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질문에 나섰던 당사자로서 거론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활신조는 '겸손하자, 정직하자, 용기를 갖자'입니다.

다만 용기를 갖되 진정한 용기를 갖자입니다.
십수 년째 이런 생활신조를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사께서도 진정한 용기를 가지셨다면 자신을 숨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와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고 정당을 달리하지만 늘 소탈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지사를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일련의 행동들은 저를 비롯해서 다수의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필름을 다시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가 아는 지사께서는 늘 겸손하시고 소탈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명확한 진실이 없다면 지사님의 임기 내내 꼬리를 물고 다닐 것은 아마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강원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다시금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사 본인스스로도 자유로워지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매진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담긴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큰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도의회 단상에서 지사께 소중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소탈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지사이기를 본 의원도 소망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용기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도민 앞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주 출석에 관한, 파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했던 지난 임시회 폐회 시의 사과가 아닌 진정 어린 사과를 다시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49회 도정질문 중 20여 분간의 질문·답변 내용을 화면에 띄워볼까요?
도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띄워볼까요?
알겠습니다.
지사의 임기 내내 아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꼬리를 물고 다닐 것이다, 모

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비서실장 인사 조치는 도정질문 파행에 따른 지사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당과 의논하셨습니까?
정무라인의 관계자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금 찾고자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 강원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 신뢰를 잃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 중 강원도의 최대 어젠다이고 이슈인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현안의 그늘에 가려 정작 강원도가 이끌고 가야 할 많은 사업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문순 도정은 이렇다 할 정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강원도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지만 정치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조언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금의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이라는 뜬구름 위를 걷다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 2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해서 18개 기관으로 2015년도 -두 번째 자료를 띄워주세요. -총예산은 무려 6,770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당해연도별 지원액은 무려 250억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출자·출연기관 8곳에서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평가·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자·출연기관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책임경영·투명경영에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출자·출연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두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경영평가 6년 연속 적자발생, 경영평가 4년 연속 최하등급,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요사업들은 알펜시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개공 본연의 업무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경영평가 최하위 성적은 강개공이 아닌 알펜시아의 성적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행자부는 300%가 넘는 강개공의 부채비율을 2년 내 80%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알펜시아에서 답을 구해야 하는데 현재 1조 6,836억을 투입한 알펜시아리조트, 즉 강원도개발공사의 영업이익으로는 1조 189억 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알펜시아리조트 자산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2·제3의 대안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 상태는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미분양에 따른 재고자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입금 상환에 대한 재원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조로는 강개공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리조트의 완전 분리 운영만이 공사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 바로 직전인 금요일, GDC 강원도개발공사 이청룡 사장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냅니다.

지사와는 사전협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DC 즉 강원도개발공사는 5억 원의 지분으로 자회사인 주식회사 알펜시아를 설립합니다.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발생합니다.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계약 관계는 알펜시아에서 계약을 하고 GDC에서 확인을 받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알펜시아는 항상 거수기적인 자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 아웃소싱(outsourcing)의 역할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려 97명에 이르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임직원은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에는 거의 손을 놓은 채 5억을 들여 자회사로 설립된 알펜시아에 모두 매진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금일 보도에도 나왔지만 주택이 없어서, 아파트가 없어서 강원도가 난리입니다.
강원도의 복리증진을 책임져야 할 강원도개발공사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의 모든 객실은 871실입니다.
객실 하나당 판매가격이 평균 12만 원, 13만 원입니다.
15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1년에 반 정도 돌아갑니다, 성수기, 비수기를 합쳐서 딱 반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871실 곱하기 15만 원 곱하기 365일을 하면 아마 476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영업비용, 인건비, 제반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5% 정도 됩니다.
476억 곱하기 5%, 풀가동을 해도 이익이 23억입니다.
하루에 8,700만 원의 이자비용, 한 달 치 이자의 수익도 낼 수 없습니다.
알펜시아는 영원히 회생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에 목을 매고 있고 알펜시아가 모기업이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자회사가 된 기이한 강원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행자부가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회사의 분리 운영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최소한 50일 정도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GDC와 알펜시아의 완전 분리, 자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관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자료 3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대교홀딩스 100억, 강원도 40억, 고성군 40억, 일본 기업인 KIBI가 20억을 투자해서 200억으로 법인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은 대교 50%, 강원도와 고성군이 각각 20%, KIBI가 10%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식회사 대교는 1차·2차·3차 계속해서 증자를 시행합니다.
고성군은 단 한 번 증자에 참여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자의 원인이 강원심층수의 효율화 사업이나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증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융비용 충당을 위한 증자를 하다 보니까 대교홀딩스의 지분율은 62%를 넘어가고 강원도는 20%에서 14%로 하락하게 됩니다.
주주 간 당사자 계약에 의하면 지분율 15% 이하 시에는 이사회의 어떠한 회의·운영에도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초기 출자회사는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계약상은 아니지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제한 계약에 따르면 '당초 회사설립 5년 이후 주식의 매도 및 양도·담보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011년 9월 회사설립 10주년 이후 갑자기 '매도·양도·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로 주주 간 변경계약이 이루어집니다.
2011년 11월 9일은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입니다.
강원심층수 이사직은 강원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서상에 최문순 지사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자료 4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6년 200억으로 설립한 이후 유상증자를 거쳐 자본금은 324억으로 늘어나고 2014년 12월 말 기준 84억 규모로 감소해 부채는 214억으로 증가됩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이니까 연도별 30억~50억 정도의 부채가 늘어나고 자본은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한 40억~50억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파산지경입니다.

영업손실로 인한 계속적인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운전자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교홀딩스와 특수 관계에 있는 대교디앤에스의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파산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께서는 이제 감자, 도루묵 말고 물을 팔러 다녀야 되지 않나 하는 농담을 해 봅니다.

제가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대한 관계법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는 9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의뢰합니다.

강원도민의 혈세로 의뢰를 합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KIPE)의 연구 결과입니다.

평가대상 기관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인재육성재단 등등, 강원심층수의 평가 총평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심층수는 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업무 중심으로 조직이 잘 구성되었고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결 노력을 기울였으며 경영평가를 수검한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준비를 성실히 잘 이행하였음, 특히 예산절감과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 노력과 관련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지사께서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용역을 줘서 평가를 맡긴 결과가 이렇습니다.

회사는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 평가는 최우수예요.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의 4년 치 회의기록 어디를 뒤져봐도 강원심층수와 관련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투자 당시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2013년도 말 2,500원, 현재 1,500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아마 지금은 가치가 더 떨어졌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금 추정가로 매각 시 원금의 70%인 28억의 손해를 보고 매각할 경우 12억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주 간 계약에 의해서 지금은 매도·양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해양심층수산업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심층수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60억 원으로 전체 먹는 물 시장의 1.76% 정도입니다.
심층수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은 10.2%씩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심층수 시장규모의 급속한 확대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설립 10주년이 도래하는 2016년 3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아마 대규모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영실적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고 예측되는바 적지 않은 손실이 있더라도 10주년인 3월 8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출자금을 회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와 관련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도 지방교육재정효율화와 관련해서 주요 쟁점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누리과정 예산,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부금 산정 등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 강력히 반대하고 우리 아이들과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의 문제를 효율의 논리로 좌지우지(左之右之)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늘상 주장하셨던 것이 673개 학교 중 40%인 270개 학교가 통폐합의 위기에 놓여있다, 강원도는 큰일 났다, 농촌이 황폐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효율화 방안대로 했을 경우 2016년도 270개 교 중 당장 몇 개 교가 통폐합 대상입니까?
교육감님,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온전히 교육감님 소관입니다.
그렇죠?
교육감님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2,000개에 달합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연간 40여 개 정도를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의 장단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7개 시도에서 평균적으로 2개~3개 정도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강원도는 1개~2개 정도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은 뒤로한 채 강원도 학부모와 강원도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호도를 했으면 내년도에 270개 학교가 다 통폐합되는 줄 알아요, 농촌이 다 황폐화되고 농촌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자이십니까, 정치인이십니까?
교육감님의 고유사무이고, 지역에서 99%가 찬성을 하고 단 1%가 반대를 해도 통합을 안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맞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평가기준의 배점은 조금 들어갑니다.
크지 않은 배점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도교육청이 의무 부담하게 되면 666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2012년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으로 현재 규정에 따라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려는 것이죠, 지방재정법 개정 후속 조치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012년 누리과정 시작 이후 2014년까지는 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이 크게 없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문제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전출시켜 줍니다.
그런데 2015년에 들어서면서 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소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하지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교육재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강원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축 재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무상급식을 올리지 말고 이런 데에 심혈을 더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이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올리셨습니까?
물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별개입니까?
우리 아들딸들이 아닙니까?
의무지출경비로 하라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법률에 위배되지만 지금까지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했어요?
무상급식하듯이 계속해서 살리시지 왜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교육감께서는 여태까지 교육을 하시면서 법에 근간을 두고 교육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근본 취지가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한 교육,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교육 아니었어요?
참 웃기네, 모순이 엄청 크네요.
이래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 산정, 학생 수가 적은 강원도교육청은 최대 944억 원이 단축된다고 9월 말까지 계속 주장도 했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육부의 2015년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수요액이 53조 8,000억입니다.
이 중에서 학교, 학급, 학생 수를 측정 단위로 하는 수요액은 총 9조 7,000억이에요.
9조 7,000억에서 학교 55.5%, 학급 13.8%, 학생 30.7%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처음 50%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944억이 나와요?
어떻게 944억이 나옵니까?
지금 30.7%에서 7.4%가 상승된 38.1%로 결정이 됐습니다, 108억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이 10월 2일에 교육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교육감 회의를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호도하고 선전하고 선동을 하기 위해서 금액 부풀리기, 뻥튀기를 해도 너무 많이 했어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협의회 모두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교육감이 시킨 것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각 지역의 지역기관장 회의에 이런 내용의 찌라시를 한 장 들고 와서 설명을 했겠습니까?
저도 화가 났어요, 저라도 띠를 둘러야 되겠다.
그런데 다 거짓이었습니다.
1분 내로 해 주세요.
특별교부금을 계상해서 이번에 배정받았잖아요?
특별교부금.
배정받을 계획이시죠?
2,000억에서 3,000억으로 1,000억이 증액되어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봤을 때 강원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께서는 최소한 너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화시켜 나가는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교 관계자들에게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를 보다 더 옥죄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강구해 나가는 방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교육의 문제는 정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학교폭력 및 산림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학생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략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 수가 연도별 15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로 보호조치를 받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서 현재 3만여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1. 질문부제 : 학교폭력 문제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인성교육 추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며, 개개인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서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 다른 아이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봄.

모든 교육이 인권교육이고 모든 교육이 인성교육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인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100%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간 추진되어 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도 대책방안이 있었고 경찰청에도 있었고 민간단체에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실효성을 찾으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년 초 본 의원은 유아 숲 교육 활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림 교육의 활성화를 연구하면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을 숲 교육에서 발견했습니다.

학교폭력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미리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한 적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교육감님, 산림 교육, 숲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미 경북도교육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은 함께 12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학교폭력 예방 숲속치유학교를 시행했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숲속치유학교 운영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프로그램에 만족을 했을까요?
보시다시피 84%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만족했다는 응답을 했고 64%가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숲 교육은 여타 대책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학교폭력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대부분이 사후조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인 것입니다.
예방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감님, 숲 교육 현장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한 유아 숲 교육 활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숲유치원 등 산림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의 예산 지원 및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모난 건물에서 경쟁하는 아이들과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아이들 중 누가 더 행복한 아이겠습니까?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학교폭력을 근절해 주시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숲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 교육, 숲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숲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과 질문·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으셨죠?
동감하시겠습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합심해서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 주기를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11. 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남경문 의원 [새누리당, 정선군 제2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 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3선 의원이라는 그 중압감에, 그리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3선인데 무슨 도정질문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도정질문이야말로 우리 의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강원도가 면적만 넓고, 또 미래의 땅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그 미래의 땅이 과연 좋은 뜻의 미래의 땅인지 아니면 진짜로 낙후도를 면치 못하는 낙후된 우리 강원도를 지칭하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누리과정 문제에 있어서-사실 교육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은 많습니다만-이 문제가 우리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의 큰 걱정거리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산 심의에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가 세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항간에 거론되고 있는 레저세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폐특법과 접경지역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아직도 낙후를 면치 못하는 것은 과연 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행과 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인지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거 폐특법을 제정할 당시에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죠?

그러면 폐특법에 대해서는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숙지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폐특법에 있어서 혹시나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참 잘되어 있다든가, 평

가를 하신다면 실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폐광지역에 지금 대충 투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2조 원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이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일부 도로와 빈집 철거, 또는 약간의 주변 정비된 것밖에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말한 것 이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그만큼 그 지역은 상당히 열악했었다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법으로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시행하는 분들은 결국 관이죠?
도와 지자체가 해야 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만-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진흥지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흥지구 부분이 3조와 4조에 걸쳐서 있습니다, 시행령 쪽에.
진흥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개촉지구 안에서 진흥지구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라도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하라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폐특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진흥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진흥지구는 혹시 어떻게 지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개촉지구 이외에 그 안에 진흥지구를 별도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진흥지구는 정선 같은 경우에는 고한·사북·남면·신동, 태백은 태백시 전역, 삼척은 도계읍, 그다음에 영월은 상동읍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초 법을 만들 때 그 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었고,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에 급격히 망가진 지역을 한정해서 지정지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렇죠?
개촉지구로 지정을 했더라도 진흥지구도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정해 놓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보상도 협의가 안 되고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진흥지구사업비, 그다음에 개발촉진지구사업비 이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예산을 미처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2차, 3차에 걸쳐서 개촉지구로 확대를 해버렸어요.
맞습니까?
그 기준에 놓고 본다면, 우리 정선만 비교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예를 안 들겠습니다, 혹시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놓고 본다면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9개 읍·면 중에서 임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개촉지구로 지정을 받고 진흥지구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흥지구사업비가 없어졌으니까…….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부분도 이제는 저거하지 않고 단지 기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돈이 진흥지구사업비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폐광지역개발사업비라는 것도 있었고 폐광기금도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법을 확 확대해 놓고 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낙후된 곳의 투자보다는 자치단체장들의 포괄사업비 형태로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에 폐광지역개발사업 계획 내에는 민자 부분도 많고 공공 부분도 있는데 실제 지금 공공 부분만 지금 해결해 가고 있고 민자 부분들은 유일하게 강원랜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강원랜드 하나에 의존해서 폐광기금 가지고 과연 이 폐특법에 지정되어 있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시·군에 있냐면,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자치단체장들이 폐광기금을 넓혀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쨌든 일반회계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폐특법에 지원되어 있는 부분들을 플러스알파로 생각해서 집중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차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법은 만들어져 있었지만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1. 질문부제 : 폐광지역특별법을 통한 지원 관련

답변요지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계획

지역에서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를 발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것이 확실한 대체산업이 될 수 있다면 재원 투자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분산해서 진흥지구, 개촉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포괄적이고 이런 지역에 쓰는 것이 가능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 투자를 못 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집중해서 열악한 지역에 좀 더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장님, 우리가 늘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산업이 됐든, 우리가 농공단지 유치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의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는 한 들어오고 싶어하던 기업들도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모든 게 어렵습니다.

제가 경제건설국 쪽의 질문요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한번 우리 강원도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나마 잘하고 있는지 이따가 한번 비교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 강원도는 저는 참 너무 안타깝다, 앞으로 이렇게 가면 강원도에 미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감히 합니다.

왜?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지금 국회의원 숫자도 9명에서 8명으로 주느냐, 8명으로 가느냐, 7명으로 가느냐, 1명, 2명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에 쓰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중에서 각 권역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 보면 가장 많은 지역이 경상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경기도이고 세 번째가 서울이고 네 번째가 전라도입니다.

다섯 번째가 충청도이고 여섯 번째가 강원도이고 제주도가 제일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예전 1970년도~1980년도에는 우리보다 더 낙후지역으로 전라도와 충청도로 비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낙후도는 우리 강원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저는 그 부분들은 -우선 기본적인 도로 인프라부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 숫자와 인구가 너무 적다, 또 우리 중앙부처에 강원도 인맥, 실제적으로 인구 B/C가 안 나오면 정책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의 숫자가 너무 적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더욱 적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 안에서 도의원들한테도 의원사업비 일부를 줍니다.
어떤 지역은 8명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2명, 1명밖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공히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면적이 넓어서인지 인구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면적과 관계없이 어쨌든 의원 숫자로 줍니다.
전라도도 국회의원 숫자가 30명입니다.
충청도도 25명이나 됩니다.
그것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역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당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 숫자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우리보다 더 낙후된 지역으로, '거기 가보면 도로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불쌍하고' 이렇게 비교했지만 지금은 뻥뻥 뚫려 있고 KTX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했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힘이 없었든지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지역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때 묻지 않은 청정지역이고 미래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낙후도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들이 안타까워진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자식들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머물고 생활하려고 하겠느냐, 과연 지사님께서 얘기하는 '소득 2배, 행복 2배'의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만 짚고요.
경제진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폐광지역이든 접경지역이든 특별법으로 지정된 곳은 법으로 만들만큼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국에서 세우든, 그 지역에 뭘 만들어라 이건 안 됩니다.
뭔가 특별한 조치 방법을 찾아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플러스알파로 어떤 기금사업에서 같이 보완을 해서 만들어져야만 점차 낙후도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기금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 이런 형태로 간다면 의미가 없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보면 폐광지역주민의 자녀들이든 폐광지역주민이든 아니면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은 지금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주택보급률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지역의 주민들 70%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보급률이 낮고 주택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수요조사를 떠나서 개발사업 행위 당시부터, 아니면 과거부터 임대주택들 아니면 열악한 곳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이 설립됐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일자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살 데가 없어서 보상을 줘서 다 떠나보낸 꼴밖에 안 됐어요.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서 사람을 유입하려고, 게다가 이주 농민들 이런 분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리 임대주택 확보를 하셔야 된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과거부터 광산에서 공짜로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사택이라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집의 구매라든가 집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매력을 못 느낍니다.
집은 그냥 소유하고 사는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느끼기 때문에 재산 형성의 일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비싼 일반주택자들이 와서 분양을 받아서 사라, 분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만한 여력도 안 될뿐더러.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보상받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라도 지켜줄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그 지역의 경제를 일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보급 부분에 놓고 저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우리 강원도의 임대주택 보급 현황을 보니까 대다수가 빅3 지역에 다 치중했고 아니면 시 단위로 다 몰렸었어요.
그러면서도 주택보급률이 강원도가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도정질문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반갑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장님한테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부분들,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강원도의 국회의원 숫자가 9명밖에 안 되어서 못 한다면, 우리 지사님도 과거에 국회의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인맥을 총동원하시든 어느 부분을 동원하시든 어떻게든 전체적인 도민들을 하나로 끌어내서 다른 특별한 대안을 만들든 길을 찾아야 된다, 이대로 가서는 강원도는 허울 좋은 미래의 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인 남한의 고속도로 분포인데 최근 것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의 것입니다만 보면 이것이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고속도로를 놓고 보면 좀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면적은 넓은데.
유일하게 영동고속도로 하나 됐고요, 아직까지 동서고속도로는 동홍천까지밖에 안 되어 있고, 지금 평택에서 제천까지 들어와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제천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음 자료를 또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 연계 교통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왜 제가 아까 부분에서 저거했냐면 횡으로도 안 됐는데 종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없는 부분이고 사실 4차선이 지자체까지 접근되지 않는, 시·군까지 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에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군청까지 찾아보니까 4차선이 없는 데가, 철원은 경기도에서는 철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강원도에서 가는 4차선이 없습니다.

거기에 화천, 양구, 평창, 정선, 5개였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대다수 접경지역이든 폐광지역이든 결국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뭘 해 봐라, 해 봐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띄웠던 것이고요.

다음 자료를 좀 올려주십시오.

횡으로 올라가는 노선망으로 유일하게 영동고속도로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38번 국도든 뭐든 진입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 같다.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물류비용과 우리 강원도의 인프라로 과연 어느 누가 와서 기업을 하겠으며 어느 누가 와서 저것을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띄웠고요, 다음 것을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자료의 글씨가 워낙 작아서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횡·종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국도에 2차선부터 4차선, 8차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로 했던 것인데,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역시들의 자료를 조사하다가 어떤 곳이 10차선 이상 되어 있는가를 보고자 했던 것이고, 그다음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도 현황입니다.

2014년도 기준 지방도 자료인데 이것은 시·군별, 우리 강원도가 땅덩어리가 넓어서, 지방도의 연장선이 많아서 이게 이렇게 안 되는가 하고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지방도 연장선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라도는 220만 ㎞인데 우리는 160만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 해서 우리보다 유일하게 적은 데는 충청북도밖에 없더라, 충청북도는 우리 면적보다 엄청나게 좁은 데도 불구하고 연장의 차이는 불과 20만 ㎞밖에 안 납니다.

그 뒤의 것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봐 주시고, 뒤의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지도, 국도, 지방도 배정예산을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국토교통부 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국지도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594억이던 국지도 예산이 2015년도에는 377억으로 줍니다.
면적과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의 지방도 예산도 2011년도에 822억까지 갔던 것이 2015년에는 7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뒤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는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받은 자료인데 우리 강원도 내의 국도 4차선 화율은 지금 현재 30.8%입니다.
맞습니까?
국지도는 11.9%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는 0.5%입니다.
맞죠?
그 다음 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는 국도 4차선이 75.9%, 강원도 30.8%, 충청북도가 60.3%예요.
보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만 30.8%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40% 이상의 4차선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결국 우리 강원도의 힘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강원도청에서 잘못하신 겁니까?
어쨌든 4차선율이 낮은 것은 맞죠?
그 뒤에 국가지원도 띄워주세요.
국가지원 지방도 현황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는 11.9%라고 했는데 다른 타 시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뒤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방도 현황입니다.
강원도 지방도 현황을 놓고 보십시오.
타 시도에 비해서 지방도 4차선 포장률이 0.5%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로가 열악하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거리와 면적도 넓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여건이 좋은 원주를 중심으로 한 춘천 이외에는 강원도에는 어느 누가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우리 강원도를 예타로 시행한다면 인구도 적고 모든 부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라도는 옛날에 우리 인구보다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겠지만- 4차선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예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예타 제도상에 면제사업 규정이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강화가 되면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간다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인데 이대로 그냥 저걸 해야 됩니까?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러나 국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 강원도의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방도에 관한한, 아까도 보셨지만 0.5%밖에 안 되는 4차선 포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든 아니면 국도를 과감하게 국지도로 변경해서라도, 예타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한이 있어도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다 못 듣겠는데 일단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보급률도 복선화 부분이 사실 0.1%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소외되고 있다, 그것이 인구 때문이라면 대책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님,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지사님께서 참 다행스럽게 제 방에 오셔서 한 시간 동안 도정질문을 하겠다는 내용 요지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부지사님께서 많은 고민과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래도 건설교통부 출신이시고 우리 경제부지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강

원도의 현실을 아시고, 가능하면 돌아가실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든 영전해 가셔서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면 정책적으로라도 풀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로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느끼신 점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의 면적이 넓고 인구가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폐특법을 두 군데나 가지고 있고 이런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명분을 달아서라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레저세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했는데 시간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실장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분 국장님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문답으로 풀었습니다만 결국은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지사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도 중요합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소득 2배, 행복 2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

지사님, 혹시 시골에 사는 사람이 더 비싼 버스비를 내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사실 조례를 못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조례를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 실제 도민들한테 가야 될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아니면 큰 의미를 못 느끼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 고속도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비는 고속도로로 달리는 차가 제일 싸고 그다음에 4차선, 2차선 이렇게 해서 비포장을 달리는 사람들이 제일 비싼 요금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은 돈도 더 물어야 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지사님의 역할입니다.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를 좀 더 확충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복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정책 결정 방향을 바꿔주실 수 없겠는가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말씀 감사한데요, 의원이라는 게 어떤 때 보면 한계를 느끼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세 번째 의원을 합니다만 의원의 연수비는 한정되어 있고, 사실 의원들도 나름대로 그런 좋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의원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동상이몽처럼 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해당 지역 의원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청 쪽의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진기엽 의원님께서 앞에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예산사전설명회 때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께 보고가 되었는지, 보고가 되었다면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 말씀드렸던 누리과정 부분들, 물론 교육감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세웠죠?
우선 그 부분에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은 지원하되 어린이집은 우리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리체계가 교육청으로 간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강원도의 어린이집 문제는 강원도지사한테도 책임이 있고 교육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누리과정이라는 게 뭐죠?
하나로 묶은 거죠?
통합해서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묶어서 일원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완전 통합이 아니라 누리과정을 발표한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국장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도 아니까, 유치원에 3세~4세 어린이들이 있죠?
그 애들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이기 때문에 지원합니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걸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이들한테 차별 없이 똑같은 부분의 저것을 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관리 전환 체제만 되면 도교육청에서 100%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강원도 내의 책임은 어쨌든 지사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지사님하고 교육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몰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보육료가 정산대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예산을 안 세웠을 때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내려왔잖아요?
가내시해서 책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세우지 않아서 정산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답을 해 주시고, 그날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한테 충분하게 보고드려서 실무자로서 할 일을 다 하시라고.

국장님, 이미 정부에서는 작년도에 시행령을 바꾸어서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물론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모법에 보육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3세~4세의 아이들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형평성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 질문부제 : 누리과정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 필요

3세ㆍ4세ㆍ5세 무상보육은 교육청 책임이 아니며, 그리고 이것을 편성했을 때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편성을 거부하고, 이것은 국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함.

뭐든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답이 없다고 하니까 들어가시고,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지를 확실하게 위해서, 국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감님들의 생각을 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가내시해서 예산을 확정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세우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산 품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안 세웠을 때 그런 문제들을…….

법률 위반은 나중에 따져야 되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은 이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일단 예산을 해 주는 것이 교육감님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원이 없는데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그냥 떠넘기기 형태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뒤에 저거를 하는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교육감님은 상부기관을 따라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민선이라 하더라도 그 민선이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할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11. 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5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3차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촉박한 시간,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 또 도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각별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강원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사업을 연내에 확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분권의 목소리 또한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현실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이 정부는 대륙으로 가는 전초기지로서 유라시아와 연결하는 육·해상 통로로서 강원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광복 70주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풍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면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대한민국 근대화를 앞당겨준 역할을 했다고 학문을 앞세워 친일 미화 주장을 공공연히 하기도 합니다.
정부 산하기관에도 친일 편향적 주장을 펴는 분들이 당당히 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는 일제 식민지 친일잔재 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벼랑 끝에 몰린 강원도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편치 않는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좋아하는 지사님, 사람한테 실망해서 상처받는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요즘 지사님께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만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은 안 드셨습니까?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대 고용률 50.6%로 전국 꼴찌,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과도한 지방채 발행, 정부의 복지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도내에서는 109개 대상 사업이 분류돼서 축소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가 188억 원이나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2005년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입니다.
 129개의 기업이 이전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보조금 지급 총액이 1,2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정상영업 중인 기업은 91개입니다.
 약 71% 수준입니다.
 이 중에 이전 포기 및 부도·폐업 등 사업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38개 기업입니다.
 또 환수 결정된 보조금은 총 355억 원입니다.
 약 30%에 가까운 부실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약 10년 동안 강원도 기업유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일상화가 되어 버린 공격적 기업유치, 전략적 기업유치, 신성장 동력 발굴, 기업에 대한 맞춤・밀착・연계 지원 등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치된 기업은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첫째, 고용창출계획 대비 현재 고용인원이 57%밖에 안 됩니다.
자료 보여 주십시오.
1만 5,000명 고용계획을 제출했는데 실제로 고용된 인원은 8,600명인 57%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평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막대한 보조금 투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지 않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즉 기여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강원도만의 고유한 자산으로 특성화된 기업들을 만들고 키우려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은 30%~40%가 한계기업이 아니라 80% 이상 한계기업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9개 기업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과 경합하는 일반적 기업 유치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R&D 흉내 내기는 더더욱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사님, 강원도에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시책개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될 항목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3대 산업 엔진인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강원도는

단 한 개의 업체도 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강원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기업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GRDP 수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전략적 성장동력 엔진' 하면서 우리가 전력투구한 129개 기업들이 강원도 GRDP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강원도 경제정책의 대전환, 발상의 전환을 위한 수술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명예도지사 임명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적이나 공로가 객관적으로 평가돼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명예도지사의 역할이 공적 행정의 역할까지 규정할 수 있나요, 지사님?

1. 질문부제 : 명예도지사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공적인 검증 추진
공적인 검증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 더 기다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림.

그렇기 때문에 공적 행정의 역할까지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사적 이익과 연계돼서 오해의 소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냉정하게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표에 보시면 신 모 씨,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공직사회에서도 원성이 자자합니다.
도민들에게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신 모 씨가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폐기물 자원화 관련 참하나기술연구원, 최 모 씨의 경우 어느 것 하나 검증된 것이 없음에도 이들이 이야기하는 미래

장밋빛 가능성만으로 임명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본 의원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난 활동 실적과 근거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분석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사전 검증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본 의원은 '에둘러서 임명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 모 씨는 10월 31일 자로 임기가 끝나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이 빛이 바랬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신 모 씨도 함께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신 모 씨에 대한 명예도지사 임명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주문드립니다.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된 자료에 그들의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지사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녹색국장님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으니 강원도의 폐기물 자원화 정책 관련해서 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모 명예도지사님 잘 알고 계시죠?
자료를 띄워 주세요.
혹시 이 화면 보셨나요?
2014년 3월 8일 자 강원도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그 글을 Sequence Number(순서 번호)를 조작해서, 공지사항은 우리 도청의 주무부서에서만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잘 모르시죠, 지사님?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2014년 3월 8일 자입니다.
2014년 3월 8일이면 벌써 훨씬 전 얘기입니다.
명예도지사를 임명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11월 1일입니다.
동해 참하나테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저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작성자가 신현모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문 기술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개인이 어떻게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라는 곳에 글을 남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접근 못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기술로 Sequence Number(순서 번호)를 조작하면 가능해지더라고요.
제가 시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벌써 저 당시부터, 언제 때부터인지는 모르죠.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동해 참하나테크에 대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부평산업단지 내에서 시연과 재연한 것과 똑같은 패턴의 일들을 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이요.
‘참하나GW’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떤 연관이 되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지사 임명 내용 근거에 강원도 기술 홍보 및 중국 방문을 10여 차례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분 직업이 목사 아닙니까?
어떻게 강원도 기술을 홍보해요?
여기에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보자이자 고소인인 전 모 씨는 최 모 씨를 한마디로 “제2의 조희팔이다, 희대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2014년에 최 모 씨를 수원지검에 고소해서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키스트에 근무했던 김 모 교수는 지인들을 다 끌어내어 소개해서 약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2010년 최 원장이 여주교소도를 출소하면서 알게 된 교도관들을 현혹해서 그들의 연금까지 다 투자하도록 끌어들여서 파탄이 났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주무국에서 컴퓨터로 검색만 해 봐도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는지 엄청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10년이 넘는 이들의 행적들에 대해 다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무엇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겠어요.
강원도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실험연구기관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는 적어도 RDF(폐기물 고형연료) 제조지역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지역이다, RDF 고용화 연료사업, 쓰레기를 태워서 연료를 만드는 사업으로 적절한 지역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입장 바꿔놓고, 내가 사는 동네에 타 지역의 쓰레기를 끌어다가 연료를 만든다, 동의할 사람 없어요.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한 것을 해지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드리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TF팀 조직도 원대복귀를 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주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0년 넘게 자료 조사를 한 결과 전국 어느 지역에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어디에도 이 기술을 성공시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다음 피해 타깃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지사님의 열정만으로도 족합니다.
더 지속하시면 과유불급이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헬기 구매 관련해서, 사실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일반인들이나 기자분들도 공부를 안 하면 반박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최고 감독권자로서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라 하더라도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한 번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봤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고 다른 각도에서의 문제의식과 연계시켜서 이 사안을 접근했던 겁니다.
전문적인 분야라고 해서 소방본부에만 다 맡겨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방헬기구매위원회와 같은 개방적 투명기구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희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희석시켜서 이 내용을 호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달청의 지침 권고를 거부해도 무방한 구조 하에서는 소방헬기구매위원회가 있어야만 강제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엄청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백억 원의 외자조달을 한 달 반 만에 해치우는 선례 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본부장님과의 질문·답변을 잘 경청해 주세요.
제주소방안전본부,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헬기 구매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쌓아놓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아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기는 제작기간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8개월을 제시했지만 약 2년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
제가 헬기 구매과정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소방헬기구매위원회라고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체육대회 때 본부장님 때문에 술 많이 먹었습니다.
열악한 소방환경 속에서 지방직 소방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본부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불편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집행부 기자회견에서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대응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게 우선이 아니고,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싸우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대응이 아니고, 본 의원을 먼저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제발 저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이 입바른 소리 하겠어요, 못 하거든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럴 수 있죠?
재발되지 않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부장님과 50분이 아닌 5시간의 질문·답변을 해도 모자랄 텐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17개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장비 구매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별 시도본부에 이관되어 있죠?
장비는 매칭으로?
아무튼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생명의 안전과 보장을 각기 다른 질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거죠?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의 의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시도본부에 전가시켜 놓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본부장님의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시도본부는 프랑스 유로콥터, 어디는 러시아 카모프, 어디는 일본산, 어디는 미국산, 어디는 이태리산 이런 식으로 전국 27대의 헬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종류만 12종이에요.
이게 비효율적인 소방헬기 운영의 난맥상(亂脈相) 아니에요?
예산 100%로 외국산 헬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외화가 유출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보고자 정부가 1조 3,000억 원을 들여서 국산 수리온 헬기를 만든 것 아니에요?
수리온의 장비나 기능 등 어디가 조금 부족하다면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본부장님.

본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까?
그래서 소방헬기 행정에 대한 개념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사실 17개 시도본부가 눈치를 볼 사항은 아니거든요.
급기야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8월 14일에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님들이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소방헬기가 전문적인 분야라고 해서 상당히 폐쇄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지금 전결 권한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죠?
집행부, 도지사님, 부지사님도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23억 원짜리면 한두 번 얘기하다 말겁니다.
23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폐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소방헬기구매위원회를 조직해서 소방헬기를 구매하는 시도본부도 있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 위원회에 도의원들도 포함된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오, 소방헬기구매위원회를 구성해서 헬기를 구매하는 시도본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도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시적 보고가 이루어질 때 오해나 의문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더욱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은 없었어도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점점 더 투명화되는 세상에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를 공개적으로 만든다면

박수를 받을 일이지 누가 문제를 제기합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참 할 얘기는 많고,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공교롭게도 우리 강원소방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회사인 이태리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ugusta Westland)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해군 군납비리, 해경에서도 허위규격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어서 국산헬기로 방향전환이 된 사례도 있었어요.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 조달행정이 허술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최근 제주소방본부와 산림청에서 수리온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외국산과 국산이 경합을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를 2012년에 만들어 놨으면 17개 시도본부에서는 장비에 대해서 건의하고, 주문하고, 촉구하고, 로비하는 활동들을 왜 안 해 오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강원소방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매절차는 잠시 멈춰도 됩니다.
조달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행정부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한 달 반 됐습니까?
1차·2차 외자 유치, 제안서, 규격심사위원회, 가격 협상까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부실이 발생되지 않아요?
강원소방에서 규격서를 작성해서 조달청에 제출할 때 규격심사위원회에 각 기종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왔습니까?
국산 수리온 전문가도 들어왔습니까?
설명회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규격서를 만들어서 조달청에 제출할 때 그 규격심사위원회에 수리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ugusta Westland) AW-139 모델 전문가들은 몇 사람씩 들어와 있었나요?
제주소방본부와 강원소방본부의 선택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제주소방본부도 1차 국내 조달에서 유찰된 것 아시죠?

수리온 하나만 단독 응찰을 했더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방헬기구매위원회를 열어서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시고 마무리 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그게 강원소방의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제주소방본부에서는 국내 단독 입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주소방본부는 가능하고 여기는 안 되느냐는 거죠.
분명히 제주소방본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조달청에서 다 받아들였는데도요?
조달청에서 입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조달?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조달청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잘 받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교육감님을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침에 대한 대응으로 누리과정 예산, 정신이 없으실 텐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보육료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지금 이 싸움은 정부의 준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ll or nothing 게임’을 할 상황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감님의 정치력 발휘를 더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교평준화,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질문부제 : 고교평준화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고교평준화의 성공적인 안착

이번에 평준화 1세대가 졸업하는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의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거의 다 방문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판단됨.

교육감님의 소신과 철학이 워낙 확고하셔서 믿겠지만 제도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원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목고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시책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별도의 시책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 띄워 주세요.

외고와 과학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운영예산, 외고는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과학고는 우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국가발전의 근간 역할을 할 재목들인데, 제가 다각도로 조사하고 파악해 본 결과 과학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원성이 엄청 높았어요.

그 얘기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타 시도 과학고와의 비교를 통해서 연도별 학력 수준의 변화라든가 학습 환경, 교사들의 처우개선 등 교육여건 등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들은 축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학부모들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학교시설과 학습여건 시설 장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원성을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부모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부부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처우 또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내신이나 가산점 등 우수교사 자원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더 꼼꼼히 챙겨서 부실운영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찬조금 관련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사실 속 타는 것은 교직원들이 아니고 학부모들입니다.

저는 부족한 학교운영 예산으로 인해 해소되지 않는 욕구와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파악해서 준비한 세부적인 개선사항과 요구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고교평준화 시책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특목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정말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11. 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최성현 의원 [새누리당, 춘천시 제2선거구 출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과 행복한 동행을 추구하는 새누리당 소속 춘천 출신의 최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를 포함한 44명의 도의원들이 도민의 목소리를 최문순 도정에 전달하고 있지만 어설픈 “예. 예”의 대답과 검토하겠다는 무성의한 소리만 들을 뿐 시정과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도정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께서 모르고 계신 최문순 도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단과 환관행정을 지적하고, 지사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도민 앞에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과 민병희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잘못된 교육행정이 강원교육의 현재 시도 하위 성적임을 깨닫고 대안제시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강원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으로 더욱 정진해야 할 관광산업의 과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도의원이 벼슬입니까?”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팩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 이전에 먼저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도의원이 벼슬입니까?” 그 말속에 내포된 뜻에는 -도의원은 도민을 대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도민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지사께서 벼슬이 저희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이 지난 도정 때 음주하고 오셨죠?
한 잔도 안 드셨습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민들을 포함해서 해외에서까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신임도가 경제적인 효과로 얼마나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지사님의 그런 행동 하나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에 대한 신임도, 신뢰 부분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봉합을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사과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사님,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자고요?
이제 사과는 필요 없고요.
본 의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막아야 될 일을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도 해임을 시켰죠?
사실 여기 함께하신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는데 이제는 대외적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고요.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십시오.
강원도가 화합하고 지사님과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될 때 음주사건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의 정쟁에 휘말리게 되면, 지금 강원도가 무엇으로 유명해지는 겁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회하시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더불어 지금 여기에 의원님들이 마흔네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도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을 상당히 견제·감시하는 목소리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것도 지사님께서는 항상 순한 표정이신데 저희 의원들은 항상 질책하는 것만 보일 텐데 어찌되었든 강원도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본 의원의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보여주기식의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진심어린 답변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적재적소라는 말뜻을 당연히 아시죠?
적재적소에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비서실장의 책임론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당신이 한 일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시다가 뒤늦게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레고랜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레고랜드 부분이 검찰수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얼룩져가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 레고랜드 이사 자리는 당연히 적임자인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두고 레고랜드 이사도 겸직을 시켰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 이전까지 제가 더 묻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빨리 인사 조치를 하십시오.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서 첨언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레고랜드 개발회사인 엘엘개발의 최대 주주가 강원도죠?
강원도가 몇%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는 민 모 씨 같은 경우에 사실 그전에도 문제가 많았고, 더욱이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였던 사람인데 총괄대표직을 맡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면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뜩이나 명예도지사 사기전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이 뭘 하나 하더라도 신용조회 같은 것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현대사회에서는 그분의 이력에 대해 신용조회를 해서 하다못해 돈 500만 원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레고랜드 착공 당시에 '17년 3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지사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정에 없던 내용 아닙니까?

우회도로로 뚫다 보니까 문화재보존구역에 도로 개설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질문이 많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지사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의 사업비가 예상 총사업비보다 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금확보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1. 질문부제 : 레고랜드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자금 확보를 위한 대책 수집 추진

자금 확보는 다소 어려움이 없지는 않으나 계획 중에 있으며, 이리저리 대책을 세워서 큰 차질 없이 되도록 하고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사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을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기조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개월 동안 아주 많은 일을 겪고 계시죠?

지금 기조실장님을 잠깐 모신 이유는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라든지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도에 생기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채 발행이라든지 보증채무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지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라고 했다가 모시겠다고 해 가지고.
엘엘개발이 사업비를 대출받았습니다.
대출받는 데에 있어서 강원도가 대출보증을 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억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큰 금액인데 모르십니까?
2,000억이 넘습니다.
강원도가 대출보증을 섰어요.
대출보증한 것은 보증채무부담행위죠?
대출보증을 서기 전에 도의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그 회사가 주식회사인 게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가 대출보증을 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강원도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주식회사든 법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사님?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요.
정확히 파악이 아니라, 지사님,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시듯이 지방채 발행이나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엘개발에 채무보증을 하면서 2,000억이 넘는 돈을 의결받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했고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사님이 “도의원이 벼슬이십니까?”, 음주, 그리고 대의기관인 의회 무시, 도민

무시, 그렇게 안 볼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만약 지사님한테 보고가 안 되고 이루어졌다면 책임자를 문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의회에 사과를 하십시오.
 지사님이 인사권자이시죠?
 제가 지사님을 맞대한 것은 초선 3개월만인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년이 지나서 11월에 두 번째 만나고 있는데 그때도 인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 3개월밖에 안 된 의원이지만 상당 부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지사님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인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지사께서 더 많은 욕들을 먹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비선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특히 요즘 지사님께서 인사 부분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과장급 인사에까지 직접 관여를 해서 깜짝 발탁이라는 이름으로 발탁을 하다 보니까 제 귀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사님께만 잘 보이면 준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로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만연하다는 소리, 또 하나는 허황된 보고전을 만들어서 지사님의 눈에 잘 보여서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준국장으로 승진해야 되겠다는 의식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다면,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해당 실·국장님들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인사든 행사든 모든 부분을 챙길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 혼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실·국장님들을 믿고 적재적소에 뽑으신 것 아닙니까?
 현재 계신 실·국장님들도 믿고 뽑으신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맡겨놓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끔 깜짝 발탁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과장님들 다면평가하나요?
 그러면 가끔 지사께서 유능한 인재다 해 가지고 깜짝 발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환관, 간신, 측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들으셨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나쁜 표현으로 쓴 게 아니라 사실 과거의 정치에서 신하, 환관, 간신,-현재에 와서는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신하는 9급 공무원부터 정식으로 공무원 계통을 밟아온 분들을 저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고요, 환관이라는 부분은 지사님께서 별정직으로 채용한 부분을 얘기한 것,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최근의 표현으로 또 측근 이런 표현을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9급부터 시작해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일을 하고 단계를 밟아서 그 인센티브로 진급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만큼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사임시켰던 비서실장이라든지 -제가 그전에 언급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보단 중에서도 특정한 한 분 같은 경우는 지사님을 등에 업고 도청인사를 농간한다고 풍문이 자자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사님은 모르신다면 지사님만 눈·귀 다 가리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직자 분들도 있지만 외부기관의 기관장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책특보의 역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정책특보가 아니라 지사님에 대한 보좌업무, 협의 관련 자문,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도의회, 시·군의회, 시민단체 등에 도정정책 반영을 위한 업무협조예요, 그렇죠?

우리 의원들조차 특보단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분이 많아요.

이래서 지사님하고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업무협조가 되겠습니까?

지사님 혼자 열심히 뛰면 뭐하십니까?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원들 마흔네 분 만나려면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44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특보단을 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제 역할도 못 하고 엉뚱한 데에 가서 관련된 일들을 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지사님의 아바타인양 행세를 하는 분들까지 있어요.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비선라인이 준동한다고 했던 겁니다.

지사님께서 인정을 못 하고 계시는데 지사님께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게 당연하죠.

왜? 지사님만 모르는 부분을 다른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쯤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사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사님보다 더 갑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 입으로 자랑을 하고, 팩트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 있는 데에서 내가 이런 인사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
본 의원이 정말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지사님께서 파문이 없었으면 10월에 끝났을 겁니다.
10월에 끝나서 마음 편하게 오늘 의회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오늘까지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사님 참 불쌍하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아세요?
본 의원이 각 과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럴까봐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과거 5대, 6대 의원님들을 만나서 여쭈어봤습니다.
선배 의원님들한테 “도정질문이라는 게 뭡니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의 잘못된, 집행부에 대해 견제한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사님을 위해서 오는 공직자 분들이 없느냐, 왜 없느냐, 만약 지사님한테 무슨 질문을 한다면 다 와서 지사님한테 약하게 해 주고 뭐는 빼 주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렇게 한답니다.
아시겠죠?
입장 바꿔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와중에 지사님을 봐 달라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정말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만둔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여기에 나온 특보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저한테 와서 빼 달라, 봐 달라, 그분들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지사님한테 서 있는 줄이 아닙니다.
지사님은 지금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측근들은 지금, 지사님,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사님의 표정이 정말 공감한다는 표정이라서 제가 이 발언을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정말 의원들이나 공직자 분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지사님께서 판단해서 빠른 조치를 내리셔야 됩니다.
정말 빠른 조치를 내려서, 우리 강원도청 스마트하게 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완전 아날로그예요.
본 의원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멀리에서 본 것하고 가까이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셔서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요?
부탁을 해도 제가 안 봐드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지사님께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오늘 잠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올렸습니다.
실·국장님들이 하는 사업에 비서실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업무협조에 대한 결재이긴 하지만.
업무협조에 결재를 안 하면 협조를 안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 부분에 결재를 받아 오라고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사님이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한 행동입니까?
대타로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설마 실·국에서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버젓이 사인을 하고, 1건~2건이 5건, 10건이 되고 지사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신임 비서실장이 임명되셨는데 다시는 이런 오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강원도에는 외부기관의 기관장들을 임명하는 건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실 뽑아놓은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으니까.
또 재직한 분들을 제가 만나보니 더러 전문가이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칙 없는 인사, 측근 추천인사 이런 부분 때문에 임기도 못 채우고 중간하차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도 그렇고 강원도립대학총장도 그렇고요.
강원도개발공사도 3년 임기를 못 채우고 전임 개발공사 사장이 하차했죠?
그것은 정년인가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지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임명 건 같은 경우도 2015년 6월 15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6월 22일에서 6월 29일까지 모집공고를 냈는데 5명이 응모를 해서 2015년 7월 13일 지금의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 대한 음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사님,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날짜 부분은 잘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본 의원은 공모도 하기 전인 6월 13일에 누가 사장이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사님, 제가 점쟁이인가요?
그쪽 조직에서는 누가 온다는 것을 벌써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6월 13일 온 카톡을 안 지우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말이 되는 겁니까?
공모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5명이 경쟁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그냥 들러리죠.
어차피 코드인사니까 그분을 위한 것인데, 측근이 추천을 하셨겠죠.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휴대폰에 지우지도 않고 있는데, 보안유지라도 잘 해 달라는 거죠,

아니면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그냥 지사님의 심어놓기로 가든지.
지금 보안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사님.
비선라인의 측근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냉정하게.
“하겠다.”, “검토하겠다.” 했는데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립대 총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E등급 받기 전까지 중간에 사퇴한 총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 종교계의 청탁을 받아서 2순위인 후보를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알 사람들은 다 알던데요.
무능력한 총장 때문에 결국 대학은 E등급까지 내려갔고 강원도의 손실액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학생들의 질은 떨어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변명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스마트하게 시스템을 보정하고, 그리고 새로 임명하는 데까지도 6개월 이상 걸렸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생략을 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수련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수련원장 이 부분도 결국 강원도립대의 전철을 또 밟았어요.
인사위원회가 선정한 최종 2명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애초부터 들어와 있던 그 사람들이 임명됐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보단에 줄 섰던 사람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특보단에 줄 서 있어서 결국 그 사람을 코드인사로 뽑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고시를 만들고 다시 섞어놓아서, 도대체 무슨 조직이 이렇습니까?
8월 12일 자 언론사 지면에도 물음표를 달아서 소문에 대한 진실을 요구한 것 알고 있죠?
변명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원칙을 제대로 세우셔서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가동해 주십시오, 아니면 보안유지를 잘 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든지요.
지사께서 현재까지 재임기간 동안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자료 요청해서 세어보았습니다.
212건입니다.
특히 ’14년, ’15년, 최근 들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논리로 보더라도 양해각서(MOU)가 왜 필요한 겁니까?
지사님,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서로 이득을 취하자는 거죠.
기업과 기업, 또는 우리 도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과 MOU를 맺어서 서로 간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한테 줄 것은 주고 또 그들한테 얻을 것은 얻어서 강원도민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지사님이 늘 얘기하는 강원도의 '소득 2배, 행복 2배'를 위해서 MOU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건수의 내용을 보면-지난번에 언론에 공개된 바도 있지만-중단된 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MOU인지 강원도에서 무조건 퍼주기인지, 제가 시간이 없어 이 자리에서 건건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MOU라고 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데 무슨 MOU를 맺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무조건 주는데 왜 MOU를 맺느냐고요, 뭘 얻기 위해서.
또 강원도가 MOU를 맺었으면 상대방한테 뭔가 이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MOU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최 모 씨에 대해서 명예도지사를 주었는데요, 의회에 올려서 해촉시키기로 하셨죠?
언제 편지가 온 겁니까?
지난달 말이면 10월이잖아요.
받는 즉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사님, 그분의 임기가 10월 31일까지였죠?
임기가 10월 31일까지였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10월 8일에 해촉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10월 31일 지사께서 독단으로 해촉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동료 의원인 김기홍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빠른

판단을 해서 해촉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아요?
 10월 8일 저희 상임위에서 해촉에 대한 부분을 담았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소급 적용됩니까?
 끝났는데 10월 8일에 조례에 담았는데 그분에 대한 해촉을 소급 적용해서 우리 의회가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법제처에 확인해 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뭡니까?
 지금 그 내용이 우리 기행위에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보고 불법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팩트는 그게 아니고 10월 31일까지 그분이 명예도지사면 빨리 판단해서 지사께서 해촉을 시켰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해촉을 요청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11월인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룰 수 없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올렸습니다.
 해촉 부분은 10월 8일에 조례에 담았어요.
 저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요.
 아니, 도의 행정을 지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면, 지사님 진짜 MOU라든지, 지사님이 얼마 전에 한복 입고 어디 갔다 오고, 내가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 부분도 할 말이 엄청 많아요.
 대변인실에 들어가 있는 예산 40억, 50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할 예산이에요.
 대변인실에서 왜 그런 데에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한복 입고 춤추고 전단지 날리고, 제가 자동차 영업을 24년 해서 아는데 전단지 날리는 것 저보고 하라면 더 잘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사님께서는 정말 도민을 위해서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을 하세요.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강원’이 아니라, 당선을 위해서 ‘오직 강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직도 몸에 배여서 행사성, 일회성 이런 것에 너무 치중을 하신단 말입니다.
 과로도 그런 쪽에서 과로를 하시는 것이지…….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10단이십니다, 10단.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시는 만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2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것 기억하시나요?
명예도지사로 최 모 씨를 위촉할 때 중국에 가서 하셨죠?
중국까지 쫓아가서 주셨잖아요?
사기꾼이라 못 넘어오니까 거기에 가서 주셨죠.
저 분 주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명예도지사 의결 받으셨습니까?
저기에 기사난 대로 명예도지사증 갖다가 주셨어요.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 황원자이라는 대표인데, 중국 사람이겠죠.
업무협약 체결하고 이 양반도 같이 명예도지사로 위촉했다고요.
하도 많이 주어서 기억도 안 나시죠?
이분 도의회의 의결 받았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도의회의 의결도 안 받았어요.
지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누가 준 겁니까?
명예도민이라든지 명예도지사,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그 얘기를 하실 줄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지사님이 주신 명예도지사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도지사하고 사진 찍고 '내가 강원도로부터 명예도지사증 받았어.'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피해는 지사님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도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타 시도에 있는 명예도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명예도지사 부분은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사님께 이런저런 질의를 드렸는데 제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께서 얘기한 부분을 귀담아 들으셔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어쩌면 측근에서 보좌하는 분들보다 더 명확한, 저희 의원들이 뭘 바라고 그러겠습니까?
지사님한테 뭘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거기에 박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사님께 할 말이 많은 게 시·군 돌아다니신 것 보면 시장·군수님들 만나서 정책, 뭐가 필요하느냐면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가서 행사를 하고 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통시장에 그냥 가서 확 보여주고 떡볶이 하나 먹어주고, 차라리 그럴 거면 지사님의 월급을 주셔서 K-POP 한류스타 하나 두어서 “내 대신 네가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도 뿌리고 네가 전통시장도 살려라.”, 더 잘 할 겁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일임시키고, 그분을 명예도지사 시키고 열심히 가서 뛰라고 그러고 지사님은 정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이런 부분을 체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주파문으로 새정연 도당하고 연정을 맺고 이런 부분이 기사로 나왔는데 지사님, 우리 그런 식으로 정파로 나간 적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의회에서 문제 일으켰을 때 전체 모여서 지사님이 도민을 무시했다고 했지 정파가 나누어져서 새누리당이 지사님을 공격하는 식으로, 다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비추어지는데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연정을 맺고 어떻게 하고, 듣기에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초선 돼 가지고 정말 어린애의 시각으로 볼 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새누리당 의총에서 지사님에 대해서 행감 때 어떻게 해라, 예산 어떻게 세워라 지시받은 적 없어요.
이게 있었고 발각되면 제가 의원 그만두겠습니다.
다 나온 얘기니까 기사 보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사님의 선심성 공약, 예산 이런 것 다 쳐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듬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 주려고, 아시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좀 부족한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얘기 중에 나중에 저하고 말씀 나눈다고 하셨는데 꼭 찾아오십

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얼마 전에 강원도 고교 학생들 수능 잘 보라고 동영상 제작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시험 잘 보라고 춤도 추고 하셨죠?
아니, 교육감께서 잘 보든 못 보든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를 위한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입니까?
교육감께서는 항상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지금도 답변을 하시는데 수능을 보는 아이들에게 못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잘 보든 못 보든 하라는 답변이 책임 있는 말씀입니까, 무책임한 말씀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못 보면, 강원도 안에만 있을 인재들이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바라지, 그렇게 연약하게 키워서,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약자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평등해야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용어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 교육이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노력은 일선 교사들이 하고 계십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이 큰물에 나가서도 경쟁력 있도록 크게,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평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했지만 오늘 못 하는데, 언제인가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에는 지사님과 하지 않고 교육감님과 처음부터 대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시도 평가 모든 부문에서 꼴등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교부금 못 받은 액수는, 손실액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답변을 주십시오.

2. 질문부제 : 강원도교육청 평가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성적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추진

2012년, 2013년에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와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음. 2014년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

교부금 차등지원에 관해서도 약간씩 상승하고 있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정책통제의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본인의 의지와 소견일 뿐이고, 일단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순위가 점점 밀리고 있어요.

교육감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자 아버님을 43년간 모시고 아버님으로부터 강한 인성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인성 중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 '인성교육',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17개 시도도 똑같이 인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순위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식 인성만 좋다고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육정책은 그 아이들의 순위도 올라가고 스펙도 좋아지고 경쟁력을 갖추어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지 언제까지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만 몸담고 있겠습니까?

그런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11. 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기철 의원 [새누리당, 정선군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득 2배, 행복 2배'의 꿈을 실현하고자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학생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문명의 시원인 세계 최대의 대륙 아시아, 열강의 침탈로 빈민대륙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아시아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엽니다.

이제 그 기운이 용트림 하는 곳 동방의 아주 큰 나라 대한민국, 그 허리를 이루는 강원도, 날마다 표정을 바꾸어주는 아름다운 마디마디의 수채화 같은 풍광, 힘겹게 살아온 민초들의 생활이 녹아 있는 삶의 문화, 삶을 연명했던 산철 음식, 이 모두가 관광이며 문화이며 슬로우푸드이고 웰빙이며 힐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원도를 미래의 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년 후면 지구촌 사람들이 우리 마당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올림픽이라는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우리의 주인이 되는 도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혹여 준비에 소홀함이, 혹여 놓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살펴볼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간이 멈춰버린, 그래서 듣기 좋으라고 미래의 땅이라고 불리던 폐광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솔하면서도 애정 어린 시간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비록 사양화되었지만 탄광하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다가오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가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나아가 내 자식, 내 손자가 풍요를 꿈꿀 수 있었던 토대가 바로 탄광이자 석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기본이 된 탄광지역이 지금은 존립 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퇴락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와서 폐광지역종합개발계획을 비판하자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 폐광지역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삶을 이어가야 하고 나의 자식이 살아가야 할 땅이기에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의 주제에 맞게 생태환경 복원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집 앞 겨울은 백화현상으로 썩어가고 동공화된 폐광산은 꺼질까 두렵습니다.

게다가 주민소득의 원천이었던 광산을 대체할 고랭지채소는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이 궁극의 경쟁력이라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서, 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활동은 지구인의 활동이며 우리들의 경쟁 또한 세계 속에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답을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질타를 위한 질타가 아니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도내 폐광산이 총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숙지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폐광을 하게 되면 광해방지를 위해서 보통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1. 질문부제 : 광해방지사업 관련

답변요지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 일제조사를 통한 피해 최소화 추진

광해복구지의 부실로 피해우려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침출수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된 지역에 대한 실태를 행정에서 정밀하게 일제 조사를 해서 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고맙습니다.

비교적 그 정도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의 추진 주체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광산피해에 대한 도지사님의 권한이나 의무는 없습니까?
광해피해방지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도지사는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산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피해방지는 중앙정부사무죠?
그렇다면 이 피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는 폐광이 제도화된 것이 26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청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 물론 국가가 개발도상에 있을 때는 미처 풍광을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때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25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광해관리공단이 벌써, 몇 년도에 설립되었는지 아십니까?
광업진흥공사에서 이 일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단, 탄광에 관해서만 이렇게 하게 되었죠?
지금 광해관리공단이 탄광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광산 전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26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현실이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관광의 일번지라고 자랑하고 있는 강원랜드 바로 아래 켠에 있는 탄광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2번을 보여주시죠.
지금 이 자료화면 좀 보십시오.
지사님, 자료화면 보입니까?
이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원랜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금 저 사진은 정화조가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사진은 고한읍사무소, 우리 정선의 고한읍사무소 사진입니다.
이것을 찍은 지 2주일이 되었어요.
제 손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화조를 거친 후의 사진이에요.
폐광이 된 지 25년이 되었고 그토록 많은 돈을 투입했음에도 혹시 광해관리공단이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강원랜드의 1대 주주가 광해관리공단입니다.
광해관리공단이 1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혹여 폐광산을 복구하는 기금이 투입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 폐해를 전국 광산 중에 70%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겪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금도 결국 출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산업자들이 적립한 돈, 그 돈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 강원도는 강원랜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강원랜드로부터 지역향토기업으로서만 가서 부탁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협력관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본질에서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이것은 지사님한테 드릴 말씀입니다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같은 업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원FC를 강원랜드에서 맡아서 키워보는 것을 2대 주주로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구하셨나요?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더 보여주시죠.
지금 저 화면 보시겠습니까?
이 화면이 어디 거냐 하면 강원랜드 바로 위쪽 고한과 사북 사이에 삼양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삼양아파트단지에서 바로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 산인데 광해방지사업을 일찍이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마로 인해서 쓸려나간 자리에요.
처음에는 전체가 같았어요.
이 앞에 턱이 있는 곳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모양을, 계속 한 20년 흘러내리다 보니까 저 지경이 된 거예요.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우리가 청정 동강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했으니까 저렇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겠죠?
다음 화면 주세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화면은 어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관광 일번지 강원랜드 바로 저 위편이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같이 하셨던 하늘주차장입니다.
K-POP 공연장이었어요.
물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25년 전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런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는 국가사무 이전에, 법적인 문제 이전에 관리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도의원이 벼슬이냐고.
저는 적어도 도민으로부터 위탁받은 벼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 주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엊그저께 발생한 문제라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년 전 장면입니다.
혹시 지도자들이 또 다른 이익과 이권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는가, 환경은 등한시하고. 이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자랑하고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우리의 상처가 난 속살을 보듬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의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토양오염은 그나마 낫습니다.
침출수는 더욱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예민한 문제니까 비켜가더라도 우리 정선 지장천에 갈수기 때 상습적으로 어류가 집단 폐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동원탄좌나 삼척탄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편에 비소광산이 있었어요.
비소는 대기 중에 흘러나오게 되면 중금속이 아닌 독극물로 변합니다.
혹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폐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비철금속광산, 소규모 광산들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탄에서 마차로 넘어가는 팔부능선에서 한번 차를 세워놓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쭉 띠로 이어서 땅이 꺼져 있어요.
안전 푯말 하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재원이었어요.
지금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펼쳐보고 싶지 않은, 팽개쳐버리고 싶은 사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가 전향적으로 이 일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자료를 앞으로 다시 넘겨줘 보세요.
2번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저거 보이시죠?
저곳이 어디냐 하면 삼척탄좌 수갱인데 800m를 뚫었어요.
800m를 뚫어서 50m간격으로 탄을 파냈어요.
50m 간격으로, 광산 용어로는 크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갱도를 따라서 탄을 파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서 물을 퍼내는 그 물이 아까 흘러간 그 물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퍼내는 것이 아니고 위에 넘치는 물만 받아내고 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그 지하갱도에 무엇으로 차 있을까요?

물로 차 있겠죠?
어딘가 터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것이 태백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론화하기에는 너무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장기적으로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도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 살핀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시죠?
요즘 전통시장 살리자고 다방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강원도가 시장 살리기,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구석구석 삶의 모습을 촘촘히 살피게 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하는 계량화된 지표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은 그다지 실효성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 편리성도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도 전통시장 가보셨죠?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또 다른 곳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혹시 난장 아시죠?
예, 5일장, 좌판이 있죠.
좌판을 보면 지역의 할머니들 같으신데, 복장은 할머니 같으신데 이들이 팔고 있는 농산물의 출처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씨알이 너무 옹골차게 생겼어요.
좁쌀이나 기장 같은 것을 보면 너무 옹골차고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오히려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

심을 갖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다음 자료 다시 보여 주세요.
이 장면은 괜찮아요.
그 앞에 장면 보여 주세요.
여기 보면 대충 그냥 꽂아놓고 있다가 치우고 하는데 차라리 수입이면 수입이라고 중국, 몽골 이렇게 써놓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지 소비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적발만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역에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 사업자들, 말은 사업자입니다만 거의 지역의 농사짓는 분들이 소규모로 가공 판매하잖아요.
이분들을 지원해 주고 돕는 일도 하고 계시죠?
이분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권유입니다.
이 업체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지역별로 모아서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연장 속의 공간 같은 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부탁 겸 대안을 촘촘히 살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국장님, 녹색국장님 안 계신가요?
오늘 불참하신다고 하셨죠?
이 질문은 지사님이 받으신다고 답변하셨다고요?
영광입니다.
별도로 모시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국장님을 대신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을 뵈면 아주 속이 상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라는 말로 지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사님 왜 이러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속상합니다.
다시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고랭지채소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으로 완충 식생대를 만드는 대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돌한다고 하죠?
그래서 녹색국에서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비점오염원 방지대책, 농업 쪽에서 얘기하는 밭 기반 정비사업 이 두 정책이 충돌해서 예산을 양쪽에서 손을 놓고 있는 듯한, 그런데 우리 강원도로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계농지를 해결하는 대안이 저는 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을 한 4장 준비해 왔는데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작목인데, 이러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쪽이 법이 충돌한다고 해서 정지된 상태에 있어요.
금년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챙겨서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이 좀 많아서 다음번에 별도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교육감님 그러면 지성의 정점에 계시고 철학으로 적어도 지혜의 샘을 파는 교육감님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 죽이기’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타이틀을 ‘교육 죽이기’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소규모초・중・고 661개 학교가 10년간 통폐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의 것은 놔두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소규모 학교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얘기하나요?
예, 그것은 언론에 발표된 자료이고요.
적정 규모가 사실은…….
그렇죠, 100명 정도는 돼야 교육 기자재, 영양 있는 식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하면 혹시 통합을 했을 때 장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통합이 되었을 때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잖아요.

혹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도 교육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너무 지나치게 학교가 소규모이다 보면 학교를 꾸릴 수가 없는, 교육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정선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교 이후에도 학교를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대로 방치하면 폐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훗날 문화의 자원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지역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학생 수가 적음에도 학교를 꾸미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도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통합이 된다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 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었을까요?

2. 질문부제 : 학생 수 유지방안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에듀버스 사업을 통해 학생 수 분산 추진

에듀버스 사업을 진행 중인데 2차 사업으로 도심에서, 즉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갈 때의 통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에듀버스 사업을 실시해서 도심에 있는 과대·과밀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들이 가게 되면 적정 규모의 학교로 분산해서 가르칠 계획에 있음.

예, 그런 방법도 있겠고 학교를 특성화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지금 많은 학교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의 남평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 지원을 해서 요즘 새로운 ICT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한초등학교에서는 골프 학교를 같이 하고 있죠?

아니면 예술적으로도 다른 학교에서 감히 하지 못하는 것, 그 지역의 업체, 기업들과 같이 손잡고 학교를 키워 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예, 그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도 같이 동참하고요.

그래서 학교가 통합되는 것을 투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강원도 규모쯤 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외신기자들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기초과학이 아주 탄탄한 러시아가 오늘날의 경제, 질서 속에서 이렇게 초라한 국가로 전락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는 초라한 국가가 아니겠죠.

어쩌면 제 눈이 건방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서 '동방의 아주 큰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만의 교육의 모습을, 강원도만의 교육의 비전을, 강원도의 학생들이 성장해서 적어도 경쟁력 있는, 학력의 경쟁력이 아닌 세계 속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받지 못했던 토론교육을 포함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어른으로 키워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말씀을 지사님께 드리지 못함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 몇 년쯤 되셨죠?

지사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기준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도의원이 생각하는 지사님은 도민의 통합, 소득의 증대, 행복 증진 이런 것들, 이에 앞서서 도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는 일이 지사님으로서 우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물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파가 있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 강원도, 언제는 퍽 그렇게 여유로웠습니까만 적어도 우리 경제 규모라면, 강원도의 현 상황 속의 모습이라면 지사님께서 한번쯤 활기를 불어넣는 풀무질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우왕좌왕 바쁘게 움직이시지만 정작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정의 비전이, 어젠더가, 미래의 지향·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도민들과는 열심히 스킨십을 하고 계시는데 핵심적인 여론은 수렴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공통분모의 고민을 뽑아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희망으로 열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도민들이 조금씩 실망하는 것 같아서, 물론 저도 한축을 담당하는 의회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스킨십 뒤에 뭔가를 주어야 하는데 오리무중이고 방향상실이고 우리 의원들이 지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가 아니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도정질문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담고 싶지 않습니다만 실신인지 혼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정이 혹시 혼수상태에 있지 않나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전국 제1의 고령화 지역이지만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없고 젊은이들의 이농현상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청춘을 붙잡아줄 대책도 없습니다.
농도인 강원도지만 농촌에서 벌어먹고 살 소득원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연중 6개월의 농한기를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 강원도는 그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지사님 대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사님께서 주셨던 소득 두 배, 행복도 두 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도민들이 꿈에 부풀었어요.
지사님을 신처럼 모시기 시작했어요.
점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허수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시 초심으로 시작하십시다.
지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도 무보수로 지사님 비서 노릇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지사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애민, 애도의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말입니다.
도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십시오.
도민들이 이제는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강한 자부심,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지사님께서 챙겨야 할 도정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의욕이 바탕이 되면 없던 아이디어도 생기고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이제 감히 넘보지 못하는 미래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희망의 땅으로 일구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녹색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냥 핵심만 대충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녹색국과 같이 질문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촘촘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장님과 김동일 부의장님, 권석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과연 강원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오늘의 질문이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기는 했으나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할 것 없이 도무지 그들의 존재감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중앙정부 또는 지휘부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휘부는 지휘부대로 현실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올림픽을 한다는데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벤트가 문화올림픽으로 둔갑합니다.

심지어 땅이 꺼지는데 권한이 없다고 하고 학교는 없어지는데 넋두리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에게 무엇으로 설득하고 자식들에게 무엇으로 꿈을 키워줄지 본 의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진부하고 고루한 얘기일지 몰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많은 비난과 비판 속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추앙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전무한 여건 속에서 국민의 삶의 기반을 키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고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원은 유사 이래 넘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권한은, 할일은 많습니다.

부족한 자원으로 충만함을 일구고 작은 권한으로 큰 권한이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해 달라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업무를 간과하고 이벤트 위주의 시책을 남발하며 지역의 현실만을 탓하는 이러한 행정 행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11. 9)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규태 의원 [새누리당, 동해시 제1선거구 출신]

결국 제 차례까지 왔습니다.
춘천~속초 고속철도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항의방문을 갔다가 리포트를 늦게 내는 바람에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 마지막에 할 건 아니네요.
이렇게 듬성듬성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 인사 올립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동해의 중심지인 강원도의 북방 개척과 이를 위한 핵심 거점인 동해 묵호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세계 경제계의 관심이 북미와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은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새로운 경제대국의 자리를 굳히고 있고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의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3성 지역에 철도, 도로, 항만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확충을 통하여 태평양 및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새로운 북방경제권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국가 차원에서 자루비노항과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등 경제권 주도 싸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쇄빙선 아라온호의 북극해 횡단과 지난 9월 '유라시아 친선특급 2015' 행사를 펼치는 한편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활동 등을 통해 대륙

횡단철도와 한반도 철도의 연결망 사업,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사업 등을 협의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 개척의 교두보인 강원도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분단 도로서 근 30여 년 동안 추진한 북방정책 사업이 남북교류 중단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다면 이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해양출구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적극적인 북방진출 노력으로 점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가장 먼저 출발한 강원도는 최근 GTI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초보단계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대북방정책의 선도적 위상을 되찾는 방안으로는 강원도 유일한 북방 무역의 전진기지이자 국제무역항인 동해 묵호항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북방 물류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 묵호항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 관리항만과 비교하여 최근 5년간 동해 묵호항에 지원된 강원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관리항만과 강원도 관리항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숫자로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동해항을 통한 수출입 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동해항 물동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출되는 물동량의 대부분은 영동에서 생산된 시멘트와 석회석으로, 특히 석회석은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2014년에 비해 약 2.5% 증가했습니다.

반면 반입되는 물동량의 대부분은 시멘트 공장과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무연탄으로, 향후 동해안권 화력발전소의 계속적인 건설로 석탄류 반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교통물류망 구축 등으로 다른 종류의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동해항의 향후 수출입 품목의 변화 예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이 비전선포식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드리는 것도 또 틀림없이 “동해항 3단계 사업이다, 확장 추진 중에 있어서 끝날 것 같다.” 하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동해항의 체선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국가물류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가 관리항만 중 2014년 기준으로 동해항 체선율은 25%를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 체선율 4%를 훨씬 웃도는 최고의 체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역시설의 취약으로 배후물류시설마저 부족해 항만 기능마저 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체선율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님께 질문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투포트(Two-Port)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추진해 온 무역항만의 투포트 정책은 동해항과 속초항 두 개 항구를 통해 두 개의 외국항로를 운행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즉 동해항과 속초항의 두 개 항만을 거점으로 각각 극동러시아와 일본 스완지 역과의 국제 해운항로로 운항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속초의 ‘스테나대아라인’사가 도산하여 뱃길이 끊겼고, ‘DBS’사로 하여금 동해와 속초를 동시에 운항하게 한다는 도의 북방항로 정책이 동해시와 속초시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동해항과 속초항의 발전 비전과 항만 기능을 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강원도의 투포트 정책의 방향은 어떠하며 그 시정에 대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한번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못할 것 같아서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몇 개월밖에 안되셨는데 이런 것 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책이 이런 것을 물어도 된다는 생각과 또 잘못하면

“건설교통국 소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못을 박아놓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2018동계올림픽으로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여주~원주 간 전철,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문제가 강원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설되어 더 이상 홀대받는 강원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현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접근망이 필요한 동해 묵호항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언급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만을 중심에 두고 철도, 도로, 공항 등이 설계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전략산업 육성 등 산업단지도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핵심사항을 잊고 미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 묵호항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현재 거론되는 동서고속철도 문제에 있어서도 명분 약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래 강원도 발전의 중심이 될 동해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신개념의 물류교통망을 새롭게 짜서 강원도 장기발전 전략에 반영하고 정부 계획에도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항과 인천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가 고사될 수밖에 없듯이 강원도에서 동해 묵호항이 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강원도의 미래 또한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동해항은 무연탄, 시멘트 등 원자력 수송항으로 명기되었을 뿐이며 새롭게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에 대비한 국제무역항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도내 항만이 아니라 부산신항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동해 묵호항이 강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환동해권 물류 출구로서의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반영 여부,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관련 정책 업무의 본청 이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해양 관련 정책 전체가 환동해본부에 있습니다.

해양물류 정책이 강원도정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수산물 전문사업소인 환동해본부의 소관이라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가 환동해본부에서 추진이 어려워서 해양과 동떨어진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나아가 해양관광보다 더 절실한 물류업무는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업무를 총괄적

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본청으로의 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과를 더 대폭 충원하거나 과 단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질문부제 : 해양물류정책 추진 관련

답변요지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 해양물류 관련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필요

현재 물류와 관련해서 강원도에는 건설교통국 교통과하고 환동해본부의 해운항만과 기획·조정, 물류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물류단지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해운항만과에서는 항만 개발과 유지·관리, 국제항로 개척, 해운물류 유치 등 현업부서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출장소 개념인 환동해본부가 국 단위 역할을 하고 있음.

해수부하고의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 또 해양물류 정책의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동해본부가 계속 해양 정책을 맡는 것이 맞다고 봄.

다만 해양과 관련한 정책이 약하다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물류 정책을 할 때 기조실, 건설교통국, 강원발전연구원이 환동해본부와 같이 해서 관련 부서들끼리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필요성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동해를 중심으로 한 가장 큰 이슈는 북극항로의 상용화 가능성 증가에 따른 북방 물류 루트 선점과 중국 동북3성, 극동 러시아 지역의 경제권 부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지역들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항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질문부제 : 강원도 항만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동해와 속초지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추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옆의 자루비노 일대를 지난 10월에 푸틴 대통령이 자유무역항으로 선언했으며, 중국 역시 훈춘 일대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했음.

대한민국도 동해와 속초지역 일대를 자유무역항으로, 무비자로 드나들 수도 있고 물동량이 관세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한 발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강원도의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2017년 원주~강릉 간 철도가 개통되면 동해 묵호항의 경우 국내 타 항만들과 수송거리, 수송비용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동해북부선 철도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의 대표적 실현 가능한 노선이자 부산~강원도~원산~나진 등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이 가능한 철도 노선으로, 화물의 환적 횟수와 통관 절차의 최소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통일 및 북방시대를 대비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올해 내에 수립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구체적인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의 동해항 개발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 주요항만은 종합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부지 개발을 통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항만인 부산신항, 포항항, 울산항 등은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통하여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 묵호항의 경우 제1차,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 지정이 제외되었고, 특히 금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송정지역은 그동안 사업시행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2016년 2월 14일 자로 자동 해제되는 침울한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대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허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2017년 수립 예정인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동해항이 반영되어야만 동해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사님, 동해항이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배후단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해항 배후지역인 송정동 주민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항만배후 송정지역의 경우 공해문제로 급속한 도시슬럼화가 진행되고 있

습니다.
1980년 말 1만 2,651명이던 주민 수가 2014년 말 4,969명으로 60.8%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996년 말 8.6%에서 2014년 말 20.2%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송정지역 주민들은 지난 6년간 집단이주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도 1979년 2월 동해항 개항으로 송정지역 주거·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을 예견하여 1980년까지 당시 2,500가구를 전면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 송정동 주민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계신지, 계시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중 동해항 주변의 ICI(국제복합산업)지구의 사업시행자 미확보로 인한 지정해제에 대한 도정 지휘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사님, 현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나진항에서 포항항까지 석탄운반선을 운항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북한의 나진항에서 포항항까지 러시아 시베리아산 유연탄 4만 500t을 실은 화물선이 운항을 했고 이를 통해 경상도지역 항만들이 대북권역 선점 및 북방 물류 루트 확보를 위해 활발히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경상남·북도의 활발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대한 경상남·북도, 부산, 경기, 인천 등의 광역자치단체를 압도하는 우리 도의 물류확대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북방 및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1년에 수립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하여 고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계획은 국내 항만개발 최상위 계획으로 북방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30개 무역항의 항만 기반시설 확충과 물류 지원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북방시대의 물류핵심은 북극해 및 극동러시아 지역의 자원을 국내로 유입하여 이를 가공·수출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거점항의 역할이 기대되는 동해항의 경우 석탄, 기타 광석 등 벌크화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북방시대가 도래하고 원주~강릉 간 철도가 개통되면 동해항을 이용하는 벌크 및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항만시설 확충계획을 보완하여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해 묵호항은 향후 도래할 통일 및 북방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와 북방지역과의 물류 루트상에 있어 국내 부산항과 울산항에 비해 수송거리는 100㎞~150㎞, 수송시간은 2시간 이상 단축되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극의 항로가 열리고 2017년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물동량 수요가 동해항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부산항에 비해서는 연간 11조 원, 울산항에 비해서는 약 8조 7,000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강원도가 동해 묵호항에 대해 무관심한 것에 비해 국내 항만전문가들은 다가오는 북방 물류시대에 있어서 동해 묵호항의 경쟁력은 강원도 미래경제의 심장이자 가장 큰 자산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묵호항의 지정학적 우위를 잘 살려 북방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강원도는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그 위상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사님의 적극 중재로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해항의 항만 물류단지 조성은 강원도가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광물 전용부두 중 일부를 잡화부두로의 전환을 통해 일반화물 물동량 유입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벌크화물의 친환경 컨테이너시설 건설로 동해안 인근 주민의 환경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연계 물류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강릉~동해 간 동해북부선의 복선화와 국도 38호선 연장, 국도 42호선 도로 확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동해 묵호항은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해상 관문이며 대한민국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입니다.

동해 묵호항을 활성화시켜야만 강원도의 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3.15)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금분 의원 (새누리당, 춘천시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금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득 2배, 행복 2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동분서주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두를 위한 행복한 강원교육에 매진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제97주년 3·1절로 시작된 새봄을 맞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고성 왕곡마을에서 촬영한 동주라는 영화의 주인공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사랑과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 강점기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국민시인 윤동주 시인이 약관 25살 때 지은 시입니다.

희망이 없던 시절 청년 윤동주가 식민지 시대의 국민으로서 당 시대에 대한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과 부족한 자아성찰을 반성하고 있는 이 시 앞에서 저는 일순 겸허해 졌습니다.

1941년 25살의 윤동주 시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나는 이 시대 도의원이라는 이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강원도민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최근 청 내에서 직원들의 음주운전, 성희롱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되죠?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적발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처벌을 강화시켜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계속 느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화, 개인화가 거기에 적용될 일은 아니겠고요, 그것은 어떻든지 간에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유가 아니고요, 더욱더 강화된 어떤 최고 수준의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분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성희롱 발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청 내 성희롱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로부터 신고나 진정서를 직접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스템이 있는데 감사관실에 왜 신고를 안 할까요?
그게 아니라 청 내에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감사관실에도 분명히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쭉 예를 봤을 때 감사관실에 신고를 해 봐도, 직원들끼리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감싸고, 아니면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못 미더운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신을 주신 것은 아닙니까?
도청 내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련된 이러한 사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관실의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여성이라고 해서 꼭 여성과 관련된 쪽만 상담하라는 법은 없고요, 성희롱은 여성만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사관실의 내부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신고를 하면 이것이 분명히 처벌까지 이어진다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의원이 하는 말은 비단 감사관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시는, 또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 책임까지 지고 있는 도지자와 양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행정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금년 1월에 오셨죠?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감사관실에서 적발해서 총무행정관실로 내려오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까 감사관님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적발 시에는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필히 물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대책임을 시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도청 내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처벌도 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면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던 전례가 있습니까?
행정관님, 여기 규정에 보면 ‘음주운전 적발 시 엄중 징계 요구’, 그리고 ‘상급자 연대책임 필행’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또 음주운전자에게 신분상의 문책 외에도 인사·재정상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자리이동은 없이 그냥 신분상의 감봉이라든가 이런 징계만 받고…….
아, 그렇게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시고 적재적소의 인사조치도 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감사관님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음주운전, 성희롱, 공직기강과 관련된 추문 사건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자살시도 사건이라든가 출장 중에 성희롱 사건이라든가 또 상급자로부터의 성

희롱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담당을 하고 계신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한 교육이 아무리 많고 여러 가지 방침이 많아도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소양과 자질의 문제이고요, 조직에서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성향도 파악하시고- 적재적소에 인사 조치를 잘하시는 것이 총무행정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청의 공무원이 계속 이런 불상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시·군의 많은 공직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표상이 되지 않고 도정의 위상이 서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육방침도 있고 인사방침도 있고 어떤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인정주의가 아니라 즉시즉시, 즉결주의로 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총무행정관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시면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총무행정관님께 자상하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미흡해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지금 시행하는 제도만이라도 철저히 일선에 투입이 된다면 이렇게 수치스럽고 조롱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총무행정관님께서 인사고충 처리를 정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지, 직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접했을 때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형평성을 잃은 억울한 조치는 없는지 이러한 각각의 사안을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신껏 누구에게나 불편과 부당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인사에 있어서 억울하거나 손해를 보았다고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총무행정관님께서 늘 상담하셔서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고 도청 공직자의 대변인이 되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원도정에 여성국이 신설된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남성 국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일단 환영을 드리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신데 여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어요.
국장님,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직책은 여성업무만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성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 성립은 되지만 국 설립의 애초 취지는 강원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태동한 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양성평등한 사회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정책은 여성국에서 특별히 주력해야 할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도 30년 넘게 여성활동을 해 왔고 6년째 의원 활동을 하면서 남성 국장님을 모시기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정책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희롱이 범죄가 된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청 내에 성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반비사랑방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 상담원들이 주로 상담을 받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내부직원으로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또 성희롱심의위원회가 2003년도부터 구성되었는데 성희롱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2003년도부터.
이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접수라기보다는 발생이 되었으면 주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책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제가 지난 8대 도정질문 때 도청 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률에 대해서 40% 이상을 채워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2012년 당시에 청 내에 113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여성위원 위촉률이 25.6%였어요.
제가 지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더 떨어져서 23.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저 기초적인 항목일 뿐이라고 치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위촉률이야말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성이 정책에 참여한다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사회 여성

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여성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마 보완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어서 그 자료를 활용하시기 힘드실 텐데 국장님께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잘 구축하셔서 앞으로 여성위원이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여기에 여성인물이 없어서 위촉을 못한다는 이런 변명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라고 해서 꼭 여성 관련 업무를 더 앞에 내세워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성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강원여성계와 더 잘 소통하시고 여성 관련 정책도 발굴하셔서 잘 이행해 주시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새봄입니다.
새봄이 되면 아이들 동요가 생각이 나는데, 지사님 얼굴을 뵈니까 생각이 납니다.
감자에 싹이 났다, 잎이 났다, 묵찌빠 놀이 아시죠?
지사님을 보면 그런 동요가 생각나는데 이제부터는, 자칭 불량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량감자는 싹이 안 나잖아요?
알토란같은 강원도 씨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올해의 화두로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사자성어를 정하셨죠?
정말 올해는 강원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뜻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지사님께서는 2016 도정운영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도민들이 공감하고 또 이에 따른 기대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고 계신 거죠?
먼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여성정책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발탁인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자평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금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쭤 본 게 아닙니다.
뒤에 여쭤 보려고 했고요, 전체 청 내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발탁이라는 것은 다수 중에서 뽑는 것 아닙니까?

다수의 발탁되지 못하시는 분들의 박탈감이랄까요, 상대적 열패감 같은 그런 심경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도 간단히 지사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지사님이 관여하신 정도는 거의 없으신 거죠?

설령 지사님께서 이분은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 수용을 하십니까?

지사님이 최고의 인사권자이신데요.

종전의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 구설이라고 할까 그런 잡음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스스로 배제하겠다는 자기 방침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부제 : 인사 잡음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지속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그동안은 사람을 보고서 판단했었는데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됨.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일방적 투표가 아니고 여러 방면의 투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도지사가 직접 사람을 고르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인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음.

다음에는 할랄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할랄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당히 큰데 이것은 단순히 관광수입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 국가의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특정 종교 지원이라는 부분과 특히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소굴 집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세계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의결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고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 사업은 이미 대구도 철회를 선언했고 충남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또 전북 익산은 주민들 반대로 거의 무산될 지경에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올해 9월 동아시아 할랄포럼과 내년 세계이슬람경제포럼 등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제가 지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제발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 관망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일단 가장 중

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와 또 우리 강원도민들의 안전 아닙니까?
 이것을 가장 우선에 두시고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레고랜드라든가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이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하는 심정으로 이 할랄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지사님께 충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미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3세~5세 아동 무상보육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부 특단의 대책이나 도교육청 추경예산 미편성 시 보육현장이 심각한 혼란 사태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개월분 운영비 27억 원을 우선 지원하였고 3월에는 14억을 지원할 계획이시죠?
 그런데 앞으로 정부와 교육청에서 합의가 안 될 시에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넘겨드리는.
 그것을 상계 처리해서 도에서 직접 보육대란을 막는 그런 조치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빨리 규정을 만드는 노력을 하셔서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4월 10일이 데드라인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드리고자 했던 여성정책 소신 및 공직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여성 고위공직자 발탁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성 최초 부지사, 최초 부군수, 최초 여성비서관을 기록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또 여성공직자에게도 희망을 주셨고, 물론 80만 강원여성들도 모두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도 최초로 인사팀장, 조직관리팀장을 여성으로 기용했다고 행사장에서 여러 번 자랑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최근 청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 결과 그 후속 조치를 보고 정말 허탈함을 금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 설립 이후 28년 만에 여성국장 시대의 막이 내렸다는 것인데 지사님께서는 양성평등시대에 역행하시는, 그리고 강원도 여성계에 대한 배려 없이 인사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님, 도 조직표에 보시면 지사님이 맨 아래에 계시고 쭉 조직표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208명이었어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그중에 여성관리관들이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청 내에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한 명뿐이고요.
혹시 이 조직도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전체죠.
그러니까 그 조직표의 여성·남성 공무원, 지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맨 아래에 있으셔서 위를 잘 못 보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직표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공직자 인적자원을 파악하셨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람을 키우고 적재적소에, 주무부서 근무라든가 점수관리를 해 주셨어야 되겠고요, 또 소요 직위를 감안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여성 임용을 단절시키고 28년 만에 최초로 남성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탄생시킨 기록도 세우셨습니다.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전임 여성국장님들께 양해를 구했다고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했습니다.
무슨 양해를 구하신 거죠?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희롱 사건은 지위고하, 남녀를 불문하고 문책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양해 전화를 하셨을까?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지사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성계의 이해를 받고 아무 문제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몇 분의 전직 여성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시냐고 여쭤 봤더니 그런 날조된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지사님 그렇게 안 봤다고 이렇게 역정들을 내셨어요.

또 덧붙여서 그 밑에 기사를 보면 인사 쇄신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인사발령의 변명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국장, 여성 자리를 다 없애는 것이 인사 쇄신의 차원에서 인사를 하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의, 그 상징성이 남겨졌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없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직 국장님의 책임 문책은 당연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양성평등 시대에 여성이 꼭 그 자리에 가는 법은 없다, 이것은 제가 4년 전에 지사님과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성 의원인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꼭 그 자리에 가게 만든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다른 것은 당연한 듯이 남성 국장님들이 다 차지하고 여성공무원은 오로지 그 한 자리를 두고 여성공무원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부장적 인사시스템 인사정신이 아니겠나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능력에 따라서 다른 요직 국장으로도 가서 선순환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력한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런 전제 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꼭 여성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은 한쪽의 유리한 편파 해석으로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을 하거나 고위직 여성공무원을 임용한다는 기본대책도 없이 서둘러서 의자를 빼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나요?
지켜보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부지하세월이죠.
지사님은 늘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소의 소신이 왜 흔들리셨는지,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제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웃소싱이라는 인사계획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 문책인사는 즉시 해야 하지만 그 자리의 인사는 즉시 안 해도 되는,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사님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해 의 인사파행, 엄청난 질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모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어눌하기 짝이 없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시겠다는 명분으로 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아웃소싱을 관철해 내셨어요.

한국여성수련원 원장 임용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지사님의 인사방침을 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방침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지사님,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결국은 여성 몫을 다 잘라 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하위직에는 여성공직자가 많으니, 기본인프라가 많으니 '시간이 지나면', '기다려주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기다립니다.

하위직 여성공무원이 그 직위까지 가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여성계가.

그런데 그 기다리기까지 답이 없고 관리직이 없는데 여성정책을 누가 관장할 것입니까?

그때까지 아웃소싱이라는 이런 제도를 지사님께서 발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자연적으로 승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지사님의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도청 공직자 비율을 보면 3·4급 정원이 100명인데 7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사님께서 여성부지사를 임용하시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셔서 임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작 1년 채우고 경질을 하셨습니다.

여성부지사 한 번 시켰으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정말 진정성 있게 여성부지사를 임용하시겠다는 공약을 세우셨으면 지사님 임기 내내 여성부지사 한 명은 계속 기용을 하셨어야 지사님께서 제대로 공약을 충실하게 지키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말에 예민하신데 다른 것은 굉장히 무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직자 인사의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년이 되어서 부지사가 자리를 비우시게 되신 것이죠?

보통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공무원 정년이 1년 남았지만 근무를 안 하시죠?

정년이 1년이 남으셨기 때문에 여성부지사로 임용을 하셨고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부지사에서 자리를 이동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사님, 청 내에 4급 여성공무원 두 분이 계십니다.

6월 말에 공로연수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고, 정년이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보장하시고 다른 실·국장으로 임용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니, 부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부지사 경우나, 여성공무원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성고위직이 전무한 시대를 만드시지 마시고요, 지사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단 여성국장 자리 때문만은 아니고 지사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새 학기가 되었는데 '춘내불사춘' 이런 심정이시죠?
괜찮습니까?
누가 뭐래도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기는 것도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는 것을 또한 간절히 원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교육감님의 소신에 대해서 공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자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오직 강원도민들과 누리과정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의 행복을 위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3월 보육대란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누리과정의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 가능성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그동안에 교육감님께서는 "상위법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설령 법에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충되는 것은 상위기관의 판결을 받아보면 될 것이고 강원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은 누리과정을 추진하셔야지 우리 강원도 아이들만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교육감님, 그 말씀은 언론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저 이 틈에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또 어린이집 학부모들,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속이 타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원도 내 3세~5세 아이들이 3만 8,000명이잖아요?
작년 말에는 어린이집 30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명 정도의 원아 수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저출산 등 자연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1,500명 정도는 유치원으로 옮겨갔다고 봅니다.
유치원에서는 영·유아를 돌볼 수가 없는데요, 교육감님, 이 상황대로라면 어린이집보육대란 현실화가 언제쯤 폭발하게 될지 혹시 예측하신 시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교육감님께서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이것에 대한 해결보다는…….
지금 검찰에도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부금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기관 여부는 판단되어 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까?
따라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교육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교육감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것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던 의무지출경비입니다.
다만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서 분명히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또 교육감님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서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교육감님은 근본적으로 보육대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2. 질문부제 : 누리과정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 필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처한 출산장려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수확보를 해서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임.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공약,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0세~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바로 대선공약집 27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교육감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 서기 이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정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보육대란이 일단 일어나면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감님께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하여튼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한 3,0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교육청이 단 6개월 치 만이라도 편성계획을 제출하시면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 배정분 129억 원을 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가 손해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하셔서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정부와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과 일문일답을 나눠봤는데요, 교육감님 말씀 다 이해가 됩니다.

상위법이 우선이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길을 갈 때 꼭 한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기도 하고 융통성 있게 에둘러 가기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돌아가는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성문법대로, 교과서 글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시행령을 그렇게 봅니다.
교육감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압력 단체가 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설득하셔서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교육감님은 청와대 1인 시위를 할 정도의 기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강원도 보육대란도 책임지시고 막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투쟁하신 것입니까?
세월호에서 숨져간 아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선생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교육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법으로만 따지는 사이에 분노가 극에 달하는 도민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원들도 감사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용단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교육감님의 능력이십니다.
누리과정은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정책입니다.
오직 강원도민만을 생각하시고 어렵더라도 먼저 대승적으로 양보하시고 더 큰 것을 받아내시는 아주 좋은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 큰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3.15)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출신]

속초 출신 강원도의회 김성근 의원입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시성 의장님과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과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자료 준비를 많이 하고 도정질문을 하러 나오는데 허리띠가 끊어져 버렸어요.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강도 높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를 쓰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 다음 회기 때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것 아시죠?
강원도 전체가 다 비쌉니다.
영동·영북지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비쌉니다.
높은 편이 아니라 높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 요금을 전체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을까 해서 본 의원이

5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속 질문·답변한 것을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60% 이상이 통합요금제 내지는 2개 권역, 3개 권역으로 다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만 6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통합 내지는 2개의 권역으로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실 것이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비도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문제점을 파헤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개 회사에서 통째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꼭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중요한 사안 때문에 도시가스는 딱 4분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도정질문 내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세하게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시령 터널 문제점, 6년 동안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믿고 해법을 기다리다가는 제가 칠순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인 맥쿼리그룹 쪽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있더라고요.
 미시령터널을 6년 동안 공부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서 석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해결했으면 제가 석사학위를 못 받았을 텐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고 거의 90%의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사님께 질문·답변을 하지 않고, 이 자료를 지사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지사님 받으셨죠?
 공부 좀 하셨죠?
 처음 보셨죠?

그러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미시령터널이 직면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공익 처분을 통한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2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전국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추진사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인천 등이 나와 있는데 거가대교가 약 5조 1,000억 정도 절감되었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철도가 약 7조 5,000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 9호선,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자마자 추진을 했는데 3조 2,000억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미시령터널은 해답이 없는지?
있습니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현 협약상태로 그냥 갈 경우에는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향후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3번 자료를 보면서 간단한 설명 한 가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물가상승률 2%를 가정한다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의해서-MRG(minimum revenue guarantee)제도입니다.-미시령터널 민자사업에 약 5,02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도민의 혈세를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는 2018년부터 적게는 150억 많게는 450억까지 20년 동안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코오롱 외 5개 회사에서 965억을 투자하고 7,300억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여놨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4번 자료를 보여주세요.
그럼 미시령터널의 재구조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4번 자료에 나와 있듯이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재구조화 이후에 교통량이 일정수준 이상 성취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시령터널은 어떤 상황인가?

미시령터널은 재구조화를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주주의 재구조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는 재협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전국에 한 9개의 사업이 있는데 미시령터널에서 밀리면 전국에 있는 사업이 다 밀립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끝장을 볼 겁니다.

질 때는 지더라도 버텨보자,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재구조화로 인한 재정절감 또는 요금 미인상 효과가 있는가?

실제 통행량의 저조로 인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통행량 83%가 줄어듭니다.

17%도 채 안 다니기 때문에 미시령터널은 거의 폐쇄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 자료를 올려주세요.

오늘 공익 처분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강원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사업권 해지를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법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읽어보셨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게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공익을 위한 처분을 실행하여서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보장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공익을 위한 처분 실행 이후에 우리 강원도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강원도에서 해지를 하면 지급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만약 2016년 말에 해지를 한다면 1,900억이면 되고요, 2017년은 1,948억, 2018년은 1,989억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년 약 50억 정도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빨리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것이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시작을 하면 최소 2년~3년 정도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6번 자료 부탁합니다.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공익을 위한 처분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무관청은 공익을 위한 처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억 이상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2,000억 미만일 경우에는 바로 시행해도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절차가 있는데 만약 사업시행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의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1,900억을 직접 지불하든가 강원도에 예산이 없으면 펀드라든가 아니면 제3의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해지 지급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7번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시령 관통도로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몇 %의 이자를 받는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죠?
최고 금리인 연이율 65%까지 받아 갑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7,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 제3의 민간사업자를 정한다면 몇 %인지 아십니까?
요즘 3%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자가 27%로 확정됐죠.
이번에 36%에서 27%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십몇 년 전에 연이율 65%,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3%의 이자로 낮추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절감됩니다.
7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약 80% 감소하고, 미시령터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민간투자법상 공익 처분을 위한 대상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전문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맥쿼리 금융의 최고 권위자와 3개월 동안 상의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8번 자료 부탁합니다.
그러면 공익 처분으로 인한 효과, 보시다시피 2016년 말 기준으로 2,805억 원이 절감되고요, 2017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2,633억, 2018년이면 2,454억 원이 절감된다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9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주무관청인 강원도에서는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되고, 또 회계법인과 금융자문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와 해야 되느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이 있는데 우리가 PIMAC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입니다.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감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첫째, 사업 재구조화의 방법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미시령터널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생겼으므로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익을 위한 처분의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해지 시 지급금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서 도의 재정부담은 계속 가중됩니다.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둘러 추진해야 됩니다.
셋째, 공익을 위한 처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빨리 구성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KDI 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언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한 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셨죠?
'공익적 처분', 이 자료는 석사 논문이 아니라 박사 논문,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국립법률공단인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세계적인 국내 최고의 자문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문단, 최소한 20년~30년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그런 곳에 법률적인 검토를 맡기고 자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공단에 맡기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사님,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무료로 선임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넉넉한 변호사 선임료를 드리고 합니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용역비를 많이 주더라도 공짜로 해 주는 데보다는 훨씬 내일처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공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TF팀이 시급합니다.
바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실 겁니까?
그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공익적 처분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 그 소송은 전부 백지화시켜도 됩니다.
이제 공익적 처분으로 가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되는 겁니다.

법률 자문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검토하시고 그렇게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만약 성공을 하면 그 TF팀은 전부 승진시켜 줍니다.
정말입니다.
알아보세요.
TF팀을 빨리 구성하셔서 이것을 성공하게 되면 전부 승진시켜 주세요.
인센티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일처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금분 동료 의원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 말고,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요.
민병희 교육감님은 한번 시작을 하면 초지일관 똑같은 답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민병희 교육감님이 아니라 '민고집' 교육감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물론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만인이 원하면 조금 바꿀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정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고집을 하시는 것인지, 민병희 교육감님 한 분의 생각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전용을 하고 활용을 했다…….
지금 감사를 시작했죠?
감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하실 겁니까?
그렇죠, 지금 감사가 시작됐으니까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형식적인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나름대로 분명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민이 원하면 내 철학을 접고 도민의 뜻에 따르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이번 감사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를 지켜보고 교육감님의 생각과 도민들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문부제 : 누리과정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교육청은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봄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책임도 권한도 없으며, 그리고 초·중등 교육에 쓸 교육재정도 부족한 상황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이슈화된 레고랜드사업에 대한 허와 진실을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료 부탁합니다.
담당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레고랜드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그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시죠?
3년 전 문제점들을 본 의원이 질문하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PT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오투리조트에 대해 다 아시죠?
의원님들 모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4,400억 원, 그 외에 투자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깡통이 됐습니다.
781억으로 순수매각을 했다는데, 일부 집기들은 전부 경매로 처리됐고요, 강원랜드에서 추가로 지원한 모든 예산들을 다 합치면, 지금 완전히 깡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속초 대포항 개발사업, 처음에는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쌍용건설에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바로 속초시의회에 와서 채무보증을 서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전부 포섭

했습니다.
로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3개월 만에 550억의 채무보증을 서 가지고 지금 속초시가 깡통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국·도비 예산을 매칭할 돈도 없어서 300억을 반납했습니다.
속초시가 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번 자료 부탁합니다.
레고랜드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는 SPC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강원도가 100억을 투자하고, 멀린 100억 이렇게 해서 600억을 마련해서 시작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호텔, 콘도, 상가, 워터파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상·하중도 일원 39만 평입니다.
2018년도에 끝내겠다고 해서 201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콘도, 상가 등을 지었는데 사업비가 얼마냐, 5,011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5,011억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SPC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이것만 설립하는 SPC인데 엘엘개발이라는 시행사를 만들어서 저렇게 공동투자,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일자리는 1만 개이고,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의 해외 사례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거의 50만 명도 오기 힘든 현실인데, 10년간 440억의 지방세수 효과가 있다고 했고 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우리 강원도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4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강원도에서는 SPC 법인 엘엘개발에 무엇을 지원하는가, 일단 11만 5,000평의 부지를 100년 동안 무상임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량건설만 900억입니다.
900억을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림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를 7년간 255억, 취득세 28억, 재산세 28억을 감면해 줍니다.
또한 각종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전부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4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만 시설임대료가 나오는데 과연 40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400억 원 이상일 때만 시설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레고랜드 출자사별 출자내역입니다.
아까 600억이라고 했죠?
자료화면 제일 왼쪽에 최초 출자계획이 6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100억은 현물출자입니다.
부지를 대는 것이죠.
강원도를 빼면 500억입니다.
500억인데 현재 131억이 들어왔습니다.
131억을 가지고 지금 5,000억짜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컨소시엄으로 회사가 들어왔는데 일단 강원도 부지에 대해 SPC 법인 엘엘개발에서 우선매수권을 확보했습니다, 맞죠?
엘엘개발에서 우선매수권을 확보했죠?
지난번에 우선매수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었죠?
437억 원을 106억 원에 매각을 해서 강원도가 316억의 재산손실을 봤다고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었죠?
그것을 지금 소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자세히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에요.
316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엘개발에서 투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손실을 강원도에서 책임지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죠?
설명은 필요 없고 일단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아니, 2,050억 말고요.
그러니까 2,050억 외에 지금 500억을 투자하잖아요?
출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자금에 대한 손실을 봤을 경우 강원도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잖아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라니까요.
중간에 사업포기가 됐을 때 강원도에서 손실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죠, 아닙니까?
2,050억은 최문순 지사께서 채무보증을 하신 것이고, 맞죠?
지금 출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사업이 안 됐을 경우 출자금에 대해서도 전부 책임지겠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잖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손실이 나게 되면 엘엘개발에서 책임을 지나요?
국장님,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오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본 의원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긴 답변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1억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일단 최문순 지사께서 5월 말까지 등기이전을 해 준다고 했죠?
아니, 일단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강원도 현물투자비 100억은 빼세요.
그것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강원도에서 100억 원의 땅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왜 거기에 집어넣어요?
아니, 131억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5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발표했었죠?
그러면 5월까지 131억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번에 8,000평 부지에 대한 것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바로 등기이전을 해 주기로 약속했죠?
그렇죠?
지금 그 부지에 대한 감정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초 감정가가 얼마예요?
지금 감정을 새로 했죠?
최초 감정가가 얼마예요?
강원도에서 2,000억으로 나왔잖아요.
엘엘개발의 분양 금액이 3,400억입니다.
그것은 엘엘개발이 강원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네가 분양했을 경우에 3,400억이라는…….
그것은 강원도와 상관없어요.
강원도에서 2,000억에 매각을 하면 엘엘개발에서 3,400억…….
5년 전 감정가입니다.
지금 다시 하면…….
그런데 왜 다시 하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3,500억~4,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양가입니다, 맞죠?
미래가치를 포함한 분양가예요.
강원도와는 상관없어요.
강원도에서 2,000억에 매각을 하면 엘엘개발 자기네가 팔아서 3,500억~4,000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미래가치라는 것은.
그래서 131억을 투자하고 자기네가 3,500억~4,000억의 분양 금액을 만든 다음에 그 분양한 금액을 가지고 채무보증한 2,050억을 갚겠다고 계약했죠?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지금 131억을 가지고 5,011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이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3월 10일에 기행위에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죠?
원안 의결이 됐죠?
이게 엘엘개발로 넘기는 것이죠?
주차장 부지가 처음에는 임대부지였잖아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시고 일단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2만 1,000평에 대해서 50억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부지로 변경했죠?
왜 변경했습니까?
임대를 주지 왜 매각을 했어요?

2. 질문부제 : 레고랜드 부지매각 관련

답변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 도유지 매각이 기본원칙임
기본적인 원칙은 엘엘개발에 도유지를 매각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임.

이것 보세요.
그만해요, 그만.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엘엘개발 뒤에 엘엘피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알고 있죠?
엘엘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최초에 있었어요?
최초에 얼마를 투자했죠?
없습니다, 1원도 투자한 적이 없다고요.
중간에 끼어들어 왔어요.
엘엘피에서 우리 좀 먹고살게 해 달라, 임대 부지를 사업 부지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매각해 달라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엘엘피에 넘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엘엘개발에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강원도에서 시행사인 엘엘개발에 50억에 매각을 하면 엘엘개발에서 엘엘피에 다시 매각해 주는 것으로 이면합의가 됐잖아요?
계약된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엘엘피라는 회사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압력에 의해서 끼어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엉뚱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근린시설사업 부지까지 같이 포함시켰죠?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이번에 기행위에서 2만 1,000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게 일부는 주차장 부지이고 일부는 호텔이든 뭐든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근린시설사업 부지로 변경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기행위에 주차장 부지 플러스 근린시설사업 용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나요?
드렸는지를 물어보잖아요.
드렸어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녹음파일 틀어 드릴까요?
여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시간이 6분 남았습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2차·3차로 계속 문제 삼을 겁니다.
국장님은 교량건설 900억에 대해 모르시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교량건설이 약 900억이에요.
최초에 교량건설을 현대건설에서 추진했죠?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듣기만 해요.
현대건설에서 추진을 했는데…….
최초에 현대건설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 이후에 대림이 들어와서 같이하다가 대림에 동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끼어들어 왔어요.
그래서 두 회사에서 같이하면서 현대건설을 떼어내기 위해 작전을 짰죠.
듣기만 하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현대건설을 떼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대림건설과 동부건설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가다가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 동부건설은 법정관리 중이었어요.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입찰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동부건설도 빠졌습니다.
법정관리 중이니까 자격미달이죠.
그래서 단독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입찰을 붙인 겁니다.
4대강사업이 생각납니다.

지금 4대강사업 관계자들 전부 구속되어 있습니다.
담합 의혹이죠.
동부건설이 자격미달로 인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두 번의 공개입찰을 했는데 대림만 들어왔죠.
그래서 850억짜리가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겼죠.
그러고 나서 동부가 끼어들어 와야 하는데 어떻게 끼어드느냐, 컨소시엄으로 동부엔지니어링을 끼워 넣습니다, 맞죠?
그것은 맞죠?
지금 동부엔지니어링과 대림이 같이하고 있죠?
그것도 파악하지 못한 분이 답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보다 모르는 분이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다 하려면 5시간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요.
이 자료가 전부 맞으니까 조금 이따 제 사무실로 오세요.
모르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의 실체가 누구냐, 대림건설이 무엇이길래 여기저기 다 끼어들었어요.
작년에 평창 활강장도 대림이 들어갔죠?
그래서 평창 활강장도 대림에서 발주를 받았고, 8억 5,000만 원도 아닌 850억짜리 레고랜드 교량건설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억짜리가 131억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깊은 설명은 하지 않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엘엘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엘엘피, 엉뚱한 회사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을 다 내쫓고 비전문가들이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사님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무자한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레고랜드 꼭 완공하셔야죠?
지금 썩어 있습니다.
곪아서 터졌습니다.
지금 5,000억짜리 사업을 131억으로 하겠다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투자, 3차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니까 그냥 공기만 지연되는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 썩어있다는 것이죠.
영화 검사외전을 보셨나요?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술을 하세요.
지사님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지사님께 적나라하게 밝히고 질문을 하고 따지고 싶은데, 지사님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건설에서 1억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렇죠?
아니, 현대에서 1차 증자에 1억을 대도록 되어 있나요?
지사님, 현대건설에서 50억을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억을 냈어요, 1억.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답답합니다.
이것을 챙기겠다는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이권개입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권개입이 되어 있다고요.
아까 큰 틀에서만 말씀하라고 하셔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시간을 갖고 본 의원이 제2의 레고랜드 문제, 제3의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 계속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 깊게 들여다봤는데 이 사업은 잘될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초만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강원도의회에서, 특히 기행위라든가 소관인 경건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의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조사할 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고 조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위에서 하든 기행위에서 하든 강원도의회가 특위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의회에서 보고받는 자료들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에 사업 부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보고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어이없는 일들도 많이 나오고요, 더 깊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모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레고랜드가 제2의 알펜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3.15)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박현창 의원 [새누리당, 평창군 제1선거구 출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만남의 도시 HAPPY700 평창 출신 박현창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더욱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6일 정선 중봉 알파인 경기 테스트이벤트를 시작으로 보광 스노보드 경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밤낮없이 고생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동계올림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행정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퇴직까지 얼마나 남으셨나요?

아유, 많이 남으셨네요.

그동안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단체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관별 추진상황 보고 및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관련 회의에 시설과장이 참석하다 보니 큰 관심은 없으시죠?

관심이 많으십니까?

국장님,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건설공사 발주금액이 한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이 설계·감리·공사 등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1,600억 원 정도에서 2,000억 원 정도를 발주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육청의 공사 집행방법에 따라서 도내 건설산업이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12월 하반기에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시에 보고하신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설계·감리 용역은 총 390건에 59억 원을 발주했습니다.

그중 지역업체에게 386건, 54억 원을 계약함으로써 건수 대비 99%, 금액 대비 92%를 집행했습니다.

강원도업체와 계약해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에 생산업체가 있는 주요자재와 차양 등 조그만 부속 자재까지 대부분 관외 업체 생산제품을 반영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뒤에서 나옵니다만 사실은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해서 화면으로 띄우려고 했는데 업체들의 이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화면에는 띄우지 않는 것으로,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교실 신·증축 및 다목적실 신축·보수 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발주한 시설공사는 약 1,970건이고 그중 작년도에 시행한 공사는 514건으로 물품구매를 포함해서 2,668건, 1,99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비슷하게 맞습니까?

맞죠?

그중 도내 업체에게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1,991억 원 중에서 공사비와 관급자재 등 지역업체 계약분 1,330억 원을 제외하면 661억 원은 서울·경기 등 관외 업체로 발주가 됐습니다.

국장님, 맞죠?

작년도에 관외 업체로 집행된 금액 중에서 전국입찰을,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원주 혁신초 전기공사하고 혁신중학교 신축공사비,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 135억 원을 제외하면 526억 원은 순수 자재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설공사 중 물품구매로 발주한 공사는 1,031건입니다.

그중 25%에 해당하는 259건은 관내 업체와 계약했고 75%에 해당하는 772건은 관외 생산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물품 대부분이 건축공사 내부에 포함되는 승강기, 금속창호, 수배전반, 무대장치, 냉난방기 등 부대시설로서 관내에서 모두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국장님, 맞죠?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배전반, 금속창호 등의 제품들이 서울·경기·제주까지 유명대학이나 기관 등에 전국적으로 납품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관내 생산제품이 서울·경기 등 관외 유명대학이나 기관에 많이 납품된다면 그 상품의 우수성은 인증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기업들이 교육청의 물량을 발주 받아서 사업이 잘되면 청장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세금도 많이 내게 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위원회도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하면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시책도 추진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도 많이 쓰고 있다고, 앞으로도 더 많이 쓰겠다고 보고는 하셨는데 정작 강원도교육청은 건수 대비 75%의 주요자재를 관외 업체에서 구입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앞에서 다 인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1분…….
부득이하게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자료로 주세요.
본 의원이 자료를, 관외 제품으로 발주한 부분들을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까지 제가 자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화면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1월 말까지 강원도와 시·군 유관기관에서 지역업체 생산 자재 구매실적은 3,340억 원으로 전체 자재 발주의 78%를 강원도에서 발주했습니다.
물론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가 많기는 합니다만 구매율로 볼 때 교육청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는 78%를 관내 자재를 썼고 교육청에서는 25%만 관내 자재를 썼다.
이만큼 교육청에서는 관외 업체 자재를 많이 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혹시 이렇게 자재를 안 쓰는 이유가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관내 업체 생산물품을 사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냉난방기가 없다고요?
춘천에 냉난방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겠는데 춘천에 있습니다.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부 교육청에서 관외 제품들 계약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장님, 매년 11월에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강원에코홈페어 주택·건설박람회, 또 지난주에 개최한 공공구매 설명회에 참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녀오셨어요?
에코홈페어할 때는 제가 못 뵀는데, 참관을 해 보셨어요?
국장님이 훤칠하시기 때문에 확 눈에 띌 텐데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요.
좋습니다.
강원도에서 개발하는 신기술이나 우수한 건설·건축자재를 홍보하고 판매를 상담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주에도 가보고 호반체육관에도 가봤었는데 매년 전시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건축자재를 가장 많이 쓰는 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 관련 공무

원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금년에는 시·군 교육지원청 시설담당을 비롯해서 참석한 것을 전혀 못 봤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별로 반박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설계용역 관련해서, 또 자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용역 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시·군이나 강원도나 설계, 감독, 심사를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야 확인이 되는데 한 사람이 감독이나 심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설계가 끝나면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자재선정위원회는 별도로 만들어서 심사를 하시는데 전반적인 설계내역의 검토는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요?
시·군에서 조그만 공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감독·심사를 보통 같이해서 발주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보고요.
검토가 끝난 후에 최종 확인은 과장이 합니까?
사실은 건축직 과장이 안 했을 수도 있고, 건축직도 과장이 도에는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다고 보죠?
국장님은 건축직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설계내용이나 진행과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앞에서도 나왔지만 문제는 시·군 교육지원청의 경우 특히 건축직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 심의를 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에 건축직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도교육청에 설계전담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검토도 잘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계상에 우리 신기술을 반영하거나 주요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죠?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이고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좀 특별하네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청은 우리 도청하고는 다른 특별한 그것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없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네요.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둡니까?
그럼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가, 공사기간 동안은 임기가 없는 것이고?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사 설계 심의가 끝나고 자재 선정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굳이 공사기간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다.
아, 중간에 또 변경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성능이 탁월하거나 친환경적이고 미관이 우수하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우선순위의 자재를 반영해 놨는데 이게 위원회의 의결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뀐 것이 있었느냐?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건설도시과장을 한 12년쯤 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내용을 대충 압니다.
위원회에서 관외 제품으로 반영된 자재를 관내 생산 자재로 바꾸라고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계시나요?
없죠.
그냥 설계가 되어 있는 대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된다.
문제는 위원님들이 모두 교육청 소속 직원이죠?
학부모들은 사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 전부 교육청 소속의 직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형식적으로, 면피용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앞으로는, 강원도에도 건축직이 많이 있고 시·군 건축직 공무원, 건축사협회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별, 공사 종류, 그다음에 지역별, 예를 들어서 춘천이다, 원주다 하면 그 지역의 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몇십명의 위원들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그때그때, 전반적으로 쭉 정해져 있는 분들이 매일 하게 되면 또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로비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역별로, 공사 종류에 따라 바꿔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설계상 특정한 관외 업체 사양 제품을 꼭 집어서, 일명 스펙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답변하신 그런 사유죠?

하여간 앞으로는 특별하게 꼭 사양이 필요한 부분, 스펙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관내 제품으로 서로 금액이나 제품의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 건설산업도 활성화시키고, 또 회사가 잘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관내 제품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설계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하기 전에 원가 산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신청하시죠?

전문공사 3억, 일반공사 5억 이상이면 신청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까?

구매가 큰 공사는 조달청에 원가산정이나 발주를 의뢰하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계약심사 대상이 아닌 공사 그런 부분도 감액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5억 이상 공사는 대부분, 그다음에 100억 이상이 넘는 공사도 한 푼도 삭감 없이 발주가 됐는데 설계를 워낙 빈틈없이 잘해서 감액한 부분이 없었던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공사가 설계를 워낙 잘해서 한 푼도 삭감이 안 됐는지?

당연히 원가 계산은 조달청에서 하는데…….

강원도나 시·군에서 의뢰를 하면 조달청이든 심사를 하는 강원도에서든 기본적으로 5%는 삭감을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보도가 매년 됩니다만 몇십억을 절감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보셨죠?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지금 말씀드렸던 100억짜리 공사도 한 푼도 감액이 안 됐고, 우리 강원도 내 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5% 이상 삭감이 돼서 절감을 했다는 그런 홍보가 나오는데 강원도가 교육청하고는 기술적으로 수준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은 특별법을 받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수년간 설계검토를 도나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기본적으로 5% 이상이 삭감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매년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 변함없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까지 볼 때 교육청에서 100억 이상 넘는 공사가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이 돼서 낙찰된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설협회하고 우리 강원도건설협회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다는 아닙니다만-공사 낙찰 후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반려하는 등 발주청에서 원도급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장님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본 의원한테는 말할 수 있어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정말 모르실 수도 있고 알고 계셔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말고 지역의 건실하고 성실한 업체에게 정보를 줘서 도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하도급이나 사급자재 구매 관련해서 불편한 구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후임자한테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를 도급받아서 직접 수행하는 건설업체 대표의 애로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재료비의 비중이 노무비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사, 창호를 교체하거나 바닥을 고치거나 할 때 재료비 비중이 노무비보다 높다 이럴 경우에,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이윤 등 법정 제경비가 있습니다.
공사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예산절감 등을 사유로 해서 전부 창문, 지붕 등 물품 구매로 발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하고 설치까지 그 업체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 도급자하고 부속자재를 납품하는 물품업체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1억짜리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창문이나 지붕 등이 관급자재로 별도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시공사하고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처럼 잇몸하고 치아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하자가 나는데 그럴 경우에 쌍방 간에 책임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를 들어보셨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소규모 자재들,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업자가 시공할 수 있게끔 사급자재로 넣어주면 책임한계가 분명해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하시죠?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으셨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교육청 발주공사와 자재 구매 관련해서 건설업체, 자재 생산업체 등 몇 분을 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불편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쾌하신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10분의 1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산하기관의 일부는 정말 절대 권력이라서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자재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면 잘 안 들어주고 또

시공 중에도 현실과 현지에 맞는 공법이나 자재로 설계변경을 좀 해달라고 의견을 내면 전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검토도 해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살하면서 다음에는 아예 불이익을 준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지역기관에서 안 써준다는 허탈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벙어리 냉가슴만 앓다가 끝내는 속병만 생길 것 같아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회사를 이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보셨나요?

준비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너무 깊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달에 강원도건설협회하고 경제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4월 회기 때.

그때 교육감님께서 직접 좀 참여하셔서 업체 대표들 의견을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세요.

그때 꼭 좀 일정을 비워두셨다가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부드럽네요.

딱딱하긴 하지만, 하여간 좀 갑갑합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막 넘기면서, 사실 교육청만 가지고 시간을 거의 써야 되는데, 뒤에 남은 자료가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요.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가수 김혜연 씨가 부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노래 들어보셨죠?

2절에 가면 '광주 목포 찍고,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노래야말로 도내 건설자재 업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야 말할 것도 없고 대전에서 알루미늄 패널을 구입하고 대구에서 가로등, 부산에서 방송설비, 광주에서 지붕자재, 이렇게 다 구입을 하셨는데 지역에 다 있는 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은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자재들이 수배전반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울·경기·제주

대학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자재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주·목포가, 목포는 없어요.

목포는 안 찍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하여간…….

물론 정부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농공단지 제품, 조달 우수제품, 2단계 경쟁제품, 또 제3자 단가계약 등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도 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자재를 지역에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써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 도내 업체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시죠?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관내의 돈이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원사랑상품권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강원도의 돈이 강원도에서 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부제 :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도내업체 생산제품 구매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도내 업체 생산제품 구매비율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위원회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하도급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문제, 100억 이상 물품에 대해서 절감 없이 바로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누수없이 추진하겠음.

이제 시설공사들이 본격적으로 발주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도내 업체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마음으로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적극 사용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는-자료가 좀 많은데-다음에 서면질문을 드리든가 6월에 다시 한 번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18일 보광 스노보드 월드컵 이벤트할 때 입술이 다 터지셔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 나으셨네요?

진부 스포츠산업단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 지사님 보궐선거 당시의 공약사업이시죠?
공약을 하시고 당선되신 후에 다행히 7월 7일에 더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됐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계시죠?
진부 스포츠산업단지는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확정이 되면서 특수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심리와 또 특화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올림픽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듯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성과 없이 공약하신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진부 스포츠산업단지는 사업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부지로 계약한 위치가 원주~강릉 철도 노선 중에 진부역이 위치하는 곳이고, 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인접 등 교통과 물류이동의 최적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전략도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끝이 난 경제자유구역청 구정지구와 비슷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인 진부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직접 챙기고 보셨나요?
그렇죠?
도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지사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보완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사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서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신 바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출하신 상황 자료를 보면-제가 받은 자료는 아닌데-2012년 3월에 강원도 관계 부서 현지확인 및 협의, 동년 12월 동계올림픽특구계획 반영, 2013년 12월 스포츠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평창군에서 착수, 지사님 공약사업을 평창군에서 검토하도록 떠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창군에서 설계용역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하셨는데?
물론 같이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으니까 지사님이 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평창군에서 검토 용역을 해 보라고 슬쩍 옆으로 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 1월 올림픽특구계획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해 3월 도와 군 관련 부서와 진부면 번영회가 참석한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올림픽특구에서 제외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여간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따르면 396억 원을 투자하고 37만 1,000㎡를 조성해서 447억 원에 분양하면 51억 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4년 5월 투자의향 전화설문을 했습니다.

300여 개 응답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가 긍정적으로 입주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 지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만 불가하다는 회신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의 전부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인데도 사업추진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사업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사유가 담당부서의 책임자, 또 사무관까지 인사이동이 계속됐기 때문에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간 담당부서의 국장과 과장 재임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국장님이 일곱 분으로-5년간입니다.-3개월부터 24개월까지 평균 8개월, 과장님은 아홉 분으로 40일부터 1년까지 평균 7개월, 담당사무관은 여섯 분으로 1개월부터 16개월까지 평균 10개월입니다.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니까 업무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어떤 공약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나서 가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당부서에 대한 잦은 인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빈번한 인사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짧게 답변해 보세요.

스포츠산업단지 관련 사무관 이상 국장님까지인데, 전반적으로 도정의 인사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사무관을 16년 했는데 건설도시과장을 딱 12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중앙부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된 그런 것인데 지사님, 특히 경제와 투자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

문에 선임국으로 하셨는데, 지사님 취미가 인사이신가요?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마다 탁월한 소질이 있는 분들을 그 자리에 임명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그래서 중앙부서하고 인적관계도 맺고 해서 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평균 10개월 미만으로 발령을 내시니까 도정업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서가 그렇게 발령이 났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발령이 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파악하고 현안사업 챙기고 여기에 바쁘지 새로운 계획을 만들거나 지사님 공약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인사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부서에 맞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거기에서 잘하면 인사 우대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부 스포츠산업단지 공약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고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부 번영회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또한 사업 예정 토지소유자 재산권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사님, 쾌도난마라는 말을 아시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진부 번영회 하는 날 지사님이 참석해서 '공약을 했지만 몇 년간 검토를 해 보니 사업성도 부족하고 투자자도 없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고 깨끗하고 시원하게 사과하시고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 중에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시면 시원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 질문부제 : 진부스포츠산업단지 공약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대체산업으로 변경 추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차기 대안사업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음.

그래서 떨어낼 부분은 떨어내고 또 새롭게, 지난번에 진부 번영회에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떨어버리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답변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을 도와서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군주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고 신하는 군주를 빛나게 해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도민 모두가 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공직자들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빛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 경전의 명언 중 승자는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드는데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하는 제안과 대안에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때그때 즉시 가부를 검토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3.1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구자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제4선거구 출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다섯 번째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여섯 해로 접어드는 의정활동 중에 가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낳아놓고 아무도 육아에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대상이 된 누리과정 때문입니다.

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재정 권한 배분에 앞장섰던 본 의원으로서는 현재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고 정치적 환경이 재단한 각자의 주장만 난무할 뿐입니다.

정치의 계절입니다.

다분히 현장에 있다고 부르짖던 중앙 권력자들은 이제 다시 민생현장에는 등을 돌린 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에만 분주합니다.

현장의 이해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객관적이고 주민 지향적인 역할이 가장 절실한 순간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고통과 인내, 질곡(桎梏)의 시간은 불가피했습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이뤄낸 1987년 6·29민주화선언 이후 지방자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당시 내무부는 지방자치 체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부활을 규정하였던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중앙 권력자들의 소극적 집단 의도에 의해 기형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를 재개할 시대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중앙집권적 사고에 의해 의회 또한 지방정부 견제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영달을 위한 기구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여건 속에 싹을 틔운 지방자치제도는 내실이 결여된 형식적 운영을 초래하는 모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정부의 장의 권한과 비교할 때 미약하다는 상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주적 조례 제정 이러한 기본적인 권한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재부활 4반세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의회의 질적·양적 성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의회는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기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좀 더 진일보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한계를 극복할 유용한 정책을 생산하고 분열보다는 통합을 추구하는 큰 그릇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앙 정치권이 행사하는 막강한 힘의 논리에 밀려 좌우되는 강원도의회가 아닌 강원도민만 바라보고 강원도민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려 했던 그 첫걸음을 오늘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 강원도에 대한, 강원도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주문을 드렸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동계올림픽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부제 : 동계올림픽 사후관리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최적의 대안 마련 추진

사후관리 문제는 마지막 남은 큰 과제라고 보며, 전부 12개의 경기장 중에 8개는 확정이 됐으며, 나머지 4개 중 일부는 기업, 그리고 일부는 공적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도내 지역 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이런 성 관련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답변 내용을 살펴보니까 '반비사랑방'이라는 고충처리시스템이 있지만 이용실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용할 분이 없었다는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얼마 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신다니까 제가 다행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들보다 더 큰 2차·3차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이런 희한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도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부서 내 환기를 시켜주는 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조치로 인한 환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점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신년연설을 통해서 6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 이 표를 보시면 5년간 청년 실업률만 보더라도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6만 4,000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지사께서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점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이런 고민도 해 보셨습니까?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일자리창출재단 형태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경제부지사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경제전문가로서의 마땅한 지적이었다는 의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구의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현재 강원도일자리지원센터가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별 일자리 관련 정책이 다 각각 있다 보니까 이것을 도에서 수용하기도 어렵고 18개 시·군 또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는 우리 도에서 무엇보다도 역점적으로 챙겨야 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지사께서는 무한 책임자이시죠?

앞으로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 발생 시에는 무한 책임을 갖는다는 자세로 해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누리과정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고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는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은 날로 증폭되고 있고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권 또한 상반된 입장을 보임으로 인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왜 문제가 꼬여서 이렇게 갈등만 양상되는 것인가…….

본 의원은 누리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보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본 의원과 의원님들 간의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원칙에 의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발언을 잘 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주신 임남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다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누리과정,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누리과정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누리과정의 도입취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 해소와 증가되고 있는 복지수요의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저는 이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까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었고 유아 학비·보육료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상도 소득하위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복지제도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았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누리과정을 통해서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취학 전 5세 미만 아이들에게 뭔가 복지적인 혜택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것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께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도민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또한 이 문제를 접하면서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씩 띄워 가면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누리과정 전개과정이 이어집니다, 2011년도 5월부터.

이명박정권 시절이죠.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념으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됩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만 3세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이 지원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게 되죠.

2012년도 1월에는 대통령 신년연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2012년 1월에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때 당시에 아마 총리 담화문으로 발표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원 부담을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시도교육감들하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만난 적이 없다고요?
2011년도에?
그런데 정부는 또 다른 주장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시도교육감들은 배제한 채…….
국무위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럼 현재 정부의 주장은 틀리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서로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누리과정이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럼 기본적인 이해는 했다고 봅니다.
현재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제도의 문제, 법률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제도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체계가 다른, 법률체계가 다른 이원화된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체계부터 정비해 놓고 이런 제도를 시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되는 양상이 벌어졌다, 제가 지적한 세 가지 중에 제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 측 주장하고 시도교육청 주장하고 조금씩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정체계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광역단체, 시·군·구, 그리고 보육시설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양쪽이 체계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제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행정체계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부담문제가 놓여있어서 정말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해서 아마도 2013년도죠, 박근혜 정부는 현 정부 내에 이런 통합과정을 통해서 체제를 개편해야 되겠다, 통합해야 되겠다, 유아교육·

보육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2013년도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다음해에는 실무조직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로 진전된 게 없습니다.
당시에 올해인 2016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중앙정부에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법률적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띄우는 관계로…….
가장 큰 논란이,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규범이 헌법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률도 헌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나라의 규범과 가치 이런 것이 헌법에 담겨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헌법을 넘어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계속되는 갈등의 두 번째 원인이 법률적 문제라고 봤을 때 시도교육청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셨죠?
제가 봐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시행령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헌법을 찾아봤어요.
제31조에 보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75조가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 대통령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어느 법률도 헌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시행령으로 인한 누리과정의 예산문제 이런 것은 헌법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님들께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라든지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먼저 제소하지 않고 제소를 당했을 때 판단을 기다려보자 하는 의견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좀 시도교육…….
동료 의원님들, 국회에서 이렇게…….
여기는 국회가 아니니까 국회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동료 의원 질문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 동료 의원의 질문 도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부의장님,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과정에서는 어떠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왜 안 했느냐는 질문을 했으면 그냥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의견으로 인해 헌재에 위헌판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예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의 문제 이렇게 제가 지적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제도나 정책이 법률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이 된다면 누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어디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필요 없는 논리라고 봅니다.
누리과정 재원부담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국비와 지방비도 없어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로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부가 세수를 잘못 예측하여 엄청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전망은 2015년까지 49조 4,000억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금액은 39조 4,000억 정도 되죠?
10조가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측한 대로 10조가 시도교육청에 배분됐으면 문제점이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예산에 대한 부담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또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게 2015년에 2조 2,000억 정도의 당초예산을 편성했죠?
교육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을 했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재부에서 삭감을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태도가 돌변한 것 아니에요?
이러한 교육부의 이중적 태도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세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삭감을 당하니 이제 와서 방법이 없다, 결국은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주장하는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청에 불용액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죠?
불용액이 왜 많은 것이죠?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부금이 12월 중순에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12월 중순에 내려오면 그것을 어떻게 쓰라는 것이죠?
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도의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장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안 된다는 게 모두의 주장입니다.

2. 질문부제 :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학급 수의 증가로 소요예산 증액 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소규모학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그대로 있고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더 필요함.

그런데 정부는 강원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는 전혀 상반된 시각이죠.

중앙정부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서 보는 시각과는 상반된 시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리과정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OECD 평균 수치보다 상당히 낮은 저출산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을 하라고 하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출산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특히 누리과정 정책을 보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런 보육과정도 지금 국가 스스로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과연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던집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2,750년에 인구가 0명입니다.

한반도에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또 앞으로 한 40년 후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 이하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전문가들의 예측 수치입니다.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수요 같은 것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책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갈등 또한 주목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언제 받았었죠?
처음이에요?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다시피 4대강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저렇게 이분되어 있습니다.
2011년 1월 27일에는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설계에 대한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3년 1월 17일에 4대강사업에 대해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설계 부실로 인해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감사원의 이중적 태도에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강원도교육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감사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누리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 제도적 문제, 법률적 문제, 그리고 예산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에 유연적인 태도 변화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비 비율을 대폭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모든 정치권은 의지를 모아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특별법을 관철시켰고 국비 비율을 대폭 상향시킨 예가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시도교육청에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예산 분담 비율을 다소 유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제도가 선행되고,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알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펴보면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도 계셨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일본 천황이 편하게 먹고살게 해 주는데 왜 그렇게 독립을 운운하느냐, 친일 인사들이 주로 했던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철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공장, 학교를 지어주는데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냐는 논리를 폈습니다.
윤봉길의사는 도시락을 던지고, 안중근의사는 권총을 쏘고, 유관순은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는데 그들의 눈에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였겠느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듯이 IS와 같은 테러집단으로 봤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재부활된 지 2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자치의 핵심 주체요소로 강원도, 도의회, 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논리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사진은 김시성 의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은 강원도를 위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밖에 없겠죠.
이분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시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방자치의 핵심 구성원인 두 분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격려를 하고 누구에게는 돌을 던지는 이런 일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저는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결과에 따라 제도의 문제, 법률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지사, 교육감에게 공약을 했으면 무조건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50%~60% 이상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갈등을 잘 봉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도 좀 더 유연적인 태도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분이 교육감님이신데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사께서는 강원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지사에게 무한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은 강원도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을 때 교육감의 무한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갈등이 양산되고 증폭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발언에……

중간에 발언을 못 했으니까 5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발언을 못 하게 해 놓고 끊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다시피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협한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고,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를 이끌고 있는 지방자치의 3대 핵심인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3.1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용래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3선거구 출신)

오늘은 동계올림픽까지 695일이 남았습니다.
재정자립도 21.5%의 강원도, 2015년 12월 말 기준 도 인구 156만 4,615명, 작년 한 해 5,730명이 늘었지만 동해안 6개 시·군 인구는 3,681명이 감소했습니다.
영동지역 전체인구는 52만 3,666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 대비 33.5%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중심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도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속의 제1 강원, 수량의 도시라는 명성을 되찾고자 힘을 모으고 있는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이끄시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의 앞날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공룡선거구 탄생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못할망정 1석이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여야 없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하여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문화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본 우리 지사님의 모습은 너무도 열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2월 14일 지정되어 3년 내인 2016년 2월 13일까지 구역 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북평·망상·옥계·구정 4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각 지구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설립되어서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꽤 많은 인건비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자문위원은 정부기관, 유관기관, 기업, 협회 등에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2014년 12월 12일부터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분들의 이력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3년간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3년차를 맞이하면서 지난 달 구정지구가 지정해제되었죠?

정주·교육·문화도시를 기대하던 강릉시민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4를 보면 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예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청은 해 보셨나요?

요청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개발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국내의 굴지기업과 외국기업들과의 투자협상도 하고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질문부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중기적인계획으로 사업자 확보 추진

직접 사업자들과 함께 그 지역에 많이 갔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족한 점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음.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좀 더 면밀히 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자들을 많이 물색해 보도록 하겠음.

투자여건으로 보면 강릉~원주 간 복선철도가 건설되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인근의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세라믹산업과 연계한, 주거지역에 필요한 의료소재 산업도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구정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자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좀 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아쉽고, 앞으로 옥계지구나 동해 북평·망상지구가 잘 추진되어서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최기호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포·낙산도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결론이 없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포와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과 1982년 각각 지정되어 자연공원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것도 아시죠?

특히 이곳은 사유지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도립공원위원회에서 해제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1월 환경부에 지정해제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환경부에 다녀오셨죠?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초까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

5월이면 경포와 낙산도립공원은 도립공원에서 해제될 확률이 많네요?

하여튼 도립공원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고 폐지·축소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시도지사는 사실 실제적인 폐지권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주도의 도립공원 폐지 및 축소 변경 규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도립공원 폐지 및 구역 변경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 관할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로 결정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환경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지방자치의 이념으로 볼 때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 경포·낙산도립공원이 폐지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위시하여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다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 정동진에 2014년부터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문화·교통에 대한 평가는 마치고 도에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요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에 투자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얼마나 되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강릉에 와서 샹차오홀딩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이 지구에는 샹차오홀딩스 하나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주도와 같이 자본을 유치하게 되는데,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평창 알펜시아와 같이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우선 중국자본의 부동산 투자 증가는 강원도의 인지도 향상이나 중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투자유치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자본의 강원도 투자형태를 보면 산업 관련 법인 투자가 미약하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로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중국자본가들이 건물을 사들이면서 상권을 장악하고 지가를 상승시키는 등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강원도는 투자자의 한도액을 어느 정도로, 5억 원으로 설정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올해 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방문하여 원희룡 지사를 만났을 때 제주도에서는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적어도 50억 원 정도는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해야 그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자이민의 금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자본의 관광개발 투자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연계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토지취득이라든가 토지상품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 투기가 아닌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지정으로 지

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거기에 거는 기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감안하시어 자본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가 중국자본 관광개발 투자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관련 법령, 제도 등을 꼼꼼히 정비하셔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G-2 올림픽페스티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강릉지역에서 2016년 G-2 올림픽페스티벌이 개최되었죠?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 G-2 올림픽페스티벌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G-2 올림픽페스티벌은 잘 아시다시피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사전 연습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연습은 실전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축제는 실전감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관람객이 6만 명이고 외국인이 230여 명, 예산도 강릉지역만 7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G-2 올림픽페스티벌 행사를 치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관광객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상도 분명하지 않았고 행사장의 공연과 전시, 먹거리가 혼재되어서 산만하고 강릉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된 행사 등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시와의 공조가 잘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사전협의 등은 원만히 이루어지셨나요?

본 의원이 그날 행사장에서 느낀 것은 메인행사를 치르는 곳도 그렇고 장소라든가 동선 부분에서도 너무 어수선하고 장황하다, 그리고 메인스튜디오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일종의 불안감 같은 것도 느꼈어요, 야외 그런 부분이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입장을 못 하고 바깥에 서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내년에도 혹시 그 장소에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제출된 자료에 관람객이 6만 명에 외국인이 230명이었는데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방문객들이 온다면 장소나 안전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렇게 야외에서 개최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트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 같은 것은 그런 곳에서 주가 되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그 주변으로 행사장을 만들어서 진행하신다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경기장과 가까우니까 이동하는 동선도 좋고.
물론 저희가 치를 행사지만 오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찾아줄 수 있게끔, 결국 다시 한 번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올림픽축제는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전계획이 필요하고 예전의 행사방식에서 탈피해서 창조적인 모양새가 되도록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문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축제는 의미가 없다.
내년에 있을 올림픽 축제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누리과정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셔서 자다가도 누리과정 때문에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물론 견해가 다르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도정질문 장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결과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조치를 요구했고,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는 퇴거하도록 조치 및 사무실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전교조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

하였고,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해촉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도 몸담고 있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 따르면 교원의 노동 3권은 헌법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에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설립된 전교조는 적법한 단체가 아니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당연히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후속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요?

강원지부에 있는 노조 전임자 3명은 복직이 되었습니까?

복직하지 않은 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발령이 났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헌법 제33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교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퇴거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퇴거조치는 안 하셨고 강원지부에 사무실은 그대로 있고, 노조 전임자 3명 중에 복귀를 안 하신 분이 계시네요?

인사발령을 냈습니까?

복귀하라고 발령을 냈습니까?

2월 말까지면 지금 3월인데…….

안 하신 두 분은 무슨 이유로 교육감 명도…….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노조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보면 교원의 노동 3권은 헌법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에만 발생하는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두 분은 교육부에서 복귀하라는 명을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2월 말로 냈고 지금이 3월 16일인데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기간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2월 말까지 복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일정기간이라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계속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직자 9명을 내보내면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법률적인 판단으로 항소심까지 판결이 난 부분이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해직자 9명을 살리기 위해서 5만 전교조,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모인 교사들이 사실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도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9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분들은 어찌 보면 전업운동권이에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아요.

일단-전교조에 계셨지만-그런 부분은 내규다?

엄밀히 따지면 전교조는 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요구한 노조전임자 복귀나 그다음에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같은 부분, 앞으로 단체협약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아까도 나왔던 문제인데 헌법 제33조에 보면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설립된 전교조는 적법한 단체가 아니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당연히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제1항~제2항에 의해서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가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도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전임자 복귀하고 사무실 부분, 단체교섭 이런 것은 중지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셔서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부제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법과 원칙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단체교섭은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며, 또 복귀하지 않은 상근자에 대해서는 근무지 이탈로 직권 조치할 예정임.

그러나 사무실 문제는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 추이가 많이 있다고 봄. 그리고 임의단체도 교직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 문제는 교육부 권한이 아니라 교육청 권한임. 그래서 그것은 다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임.

그럼 두 가지는 이행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퇴거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든 것이 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마음에 들면 하고…….

이 부분은 물론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른 그런 것은 없지만 되도록 이런 시기에는 이런 부분을 이행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마찰의 소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지위를 찾으면 다시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무실 퇴거 조치는 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2011년도에 2조 903억에서 2015년에는 2조 4,092억 원으로 19.1%가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반면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2011년도 538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1,464억 원으로 172%가 증가했어요.

인원도 3,261명이었던 것이 5,727명으로 76%가 증가했거든요.

직종도 다양해서 정원관리직종 31개, 미관리직종까지 포함하면 60개가 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교육공무직 인원과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직원분들의 총량…….

물론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증가된 것도 있고 강원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추진한 교무행정사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종 처우비 증가 등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좀 앞서거든요.

한정된 재원에서 교육공무직의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 그분들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될 교육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고 경직성 경비에 따른 예산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이 교육재정의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의 무분별한 양적 증가를 억제하시고 질적 개선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직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을,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고 본 의원도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하고 교육청의 계속적인 공방만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2015년 5월 6일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원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기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국고지원액 이외에 누리과정 지원액을 정부보증 지방채로 발행해 강원도로 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오늘만큼은 법리가 아닌 세상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있어서 잘 아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왜 작년에는 그렇게 법리가 아닌 세상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을 하셨냐는 거죠.

누구보다 우리 학부모님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해서, 강원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지난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주시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대답은 안 그러신데요?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월 3일까지만 해도 “시행령으로 법률을 넘어서는 것은 법치주의의 파기입니다.” 하고 아주 강하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월 2일 전국시도교육감 성명서를 보면 법 부분은 빼고 한결 같이 편성할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주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까와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교육공무직 부분에서 이 문제까지 넘어오는 부분인데-저도 교육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교육부에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지원한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0억 정도 됩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은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감님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쟁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우리 학부모를 위해서, 교육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현명한 판단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답 없는 평행선만 이룰 것이 아니라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우리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소지를 남기셨어요.

교부금률이 인상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규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논의를 하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무조건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더 작년과 같은 마음을, 법리가 아닌 순리에 따르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3.1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유정선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출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강원바이오에너지(주)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의 배경과 강원바이오에너지(주)가 왜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 해역에서도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데에 따른 방안으로 강원도개발공사와 에코에너지, 원주시, 도가 공동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원주 가현동에 만들어진 것이 맞죠?

도에서는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수목적 법인인 강원바이오에너지(주)를 설립했죠?

이 회사의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직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 4명, 비상임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적사항을 보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은 강원바이오에너지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 언론사, 리조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임원진은 강원바이오에

너지라는 전문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비전문가들을 임원진으로 선임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래도 최고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정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적재재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지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지사님의 도정 2기가 출범한 이후에도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인사문제와 관련한 잡음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원도의 인사시스템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지사님의 인사정책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은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 기본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선발하고, 직위에 맞도록 배치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사님이 하실 몫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 의원은 재정상황과 경제적 운영자원이 취약한 강원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공직자를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2011년 도지사 재선거에서 당선되셨죠?
취임사에서 “강원도 공직자들은 최문순을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들을 보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재선 이후 취임사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160만 강원도민들 중에서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하셨다고 보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면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과연 좋은 평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학연과 지연에 따른 파벌인사와 논공행상의 자기사람 심기가 아니라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불거진 인사 난맥상을 해소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자질과 능력에 따라 인물을 발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바이오에너지(주)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운영한 뒤에 강원도가 다시 운영권을 넘겨받게 되죠?

여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일단은 차치하고,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시설이 처음에 몇 대를 기준으로 가동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220대입니다.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평균 80회 정도의 충전횟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택시를 개조해서 58대가 바이오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잘 되고 있습니까?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까?

바이오가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LPG보다 1ℓ당 40원 정도가 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싼 게 아닙니다.

택시 58대가 차량을 개조하기 위해서 약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도비·시비 매칭으로 개조를 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스의 질이 좋지 않아서 차량 엔진 고장이 잦다, LPG 대비 연비가 안 나온다. 효율성·가격 대비 LPG에 비해 비싸다, 충전소 자체 고장으로 인해서 연료 주입을 못 하는 날이 많다, 충전시간이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영업용 택시가 이용하기 부적합하다, 충전요금은 현장 결제가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지로 결산으로 그간 현금을 사용하던 운전자들이 크게 부담을 느낀다, 처음 장착 시 LPG 대비 20만 원 정도의 연비 절감 효과를 약속했으나 현재 LPG보다 1ℓ당 40원 정도가 싸다, 엔진 힘이 달려 약간의 언덕을 오르기도 힘들다. 촉매 막힘으로 수리한 차량이 많다, A/S장소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꼭 선약을 해야 하며 선약을 했더라도 다음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이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사업 초기라고 해도 초기에 제대로 운영하게끔 해 주시는 게 지사님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택시를 개조한 분들이 다시 LPG로 바꾸고 싶으면 위약금을 개인 돈으로 270만 원을 물어야 한대요.
그리고 원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춘천까지 와야 하고 서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해 주시겠습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이용률이 20% 수준인 반면 바이오가스는 연중 24시간 가동하므로 100%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또한 에코에너지 측은 2015년 강원바이오에너지 플랜트의 가동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이 약 100억 원, 전체 매출은 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바이오에너지(주)의 2015년 경영실적을 기초로 판단해 보면 위탁운영 수수료와 급여성 경비 등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매출에 비해 현격히 높아 경영 악화와 적자 누적이 이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례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태백시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강원도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 원, 부채비율 1만 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되어 있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실태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지방공기업 부실화가 강원도민의 혈세는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의 경영 내실화와 흑자 경영을 위한 경영계획을 도민들께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8대의 택시를 개조한 분들은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힘들지 않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용철 대변인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직제가 종전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바뀐 시점이 꽤 오래된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됐더라고요?

실제로는 공보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님께서 공보관과 대변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변인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도에 많은 실·국장님들이 계십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현재 실·국장님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대변인님은 재임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와 비슷하게 들어오셨죠?
지사님 선거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 맞으시죠?
그리고 실·국장님 중에 가장 장수하고 계시는 거죠?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실·국장님들은 계속 바뀌고 계시는데 대변인님만 유독 한 자리에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긴급 현안이나 도정 관할 부서를 막론하고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도 입장이 발표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담당국장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브리핑 같은 데 의존해 오고, 도민들이나 언론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입장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볼멘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의 대변인은 스폭스맨(spokesman)의 역할이 아닌 공보관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 무늬만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닙니까?
청와대나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대변인만큼은 안 되더라도 도정의 각종 현안이 발생하면 도 지휘부는 물론 실·국장, 과장들과 충분한 교감을 거쳐서 현 상황과 앞으로 진행 사항, 도민들에게 당부하거나 알릴 부분 등을 망라해서 시원스럽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와 마찬가지로 드론경진대회, 중국 합동결혼식, 동계올림픽 장비 전시회 등 대변인실이 대변인의 역할이 아니라 이벤트과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해외홍보팀을 설치해서 중국과 일본 등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마케팅과 등 도청의 타 부서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요.
대변인실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정 업무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변인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교육감님, 4월 누리대란이 이제는 5월 누리대란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어제 도에서 예산을 댄 거 아시죠?
도와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까?
예, 됐고요.
도교육청 홍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강원도교육청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관련 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전용하였거나 특정 언론사에 밀어주기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듭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보면 2013년 5월에 특정 인터넷 언론매체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홈페이지 배너 및 플래시 광고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책임교육과 등 관련 부서가 아닌 행정과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2014년 7월 31일에도 이 매체에 다시 감사관실 예산 1,800만 원으로 감사관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강원교육 홍보 배너광고로 집행했고, 2015년 11월에 작은학교 배너광고로 1,120만 원을 행정과 예산으로, 2015년 5월 1,500만 원을 대변인실 예산으로 특정 매체에 집중적으로 집행했습니다.
타 언론기관에 비해 특정 인터넷 언론매체에 많은 액수의 광고홍보비를 매년, 그것도 관련 부서가 아닌 비관련 부서의 예산으로 전용해서 집행해 준 것은 억지로 홍보예산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이 사인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매년 집행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임의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도교육청의 수장으로 계시는 교육감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13년에 또 다른 인터넷 매체에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매년 행정과 2,000만 원, 시설과 2,000만 원, 감사관실 1,800만 원 등 예산이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홍보비용으로 전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교육감님은 전결사항이라서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예산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교육감님, 누리과정을 할 때 계속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른 과의 예산을 특정 인터넷 언론매체에 홍보비로 사용하시는 것은 옳다고 보십니까?
특정 인터넷 언론매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고요.
관련도 없는 부서가 배정받은 예산을 마치 떨이 식으로 처분하듯이 특정 언론에 홍보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배정받은 예산을 일단 쓰고 보자는 전형적인 비효율, 낭비 예산입니다.
교육감님, 잘못된 관행을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공정성과 효율성, 적절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중학교 신설 문제로 인한 간담회에 교육감님을 뵈러 간 적이 있었죠?
유독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도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놓고 먼저 간담회 때는 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에 진학해서 도보 또는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중학교 신설에 대해 100% 공감하고 희망하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현재 춘천시 퇴계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사동・퇴계동에 거주하는 중학생 수가 3,899명입니다.
춘천시 전체 중학생 수는 9,090명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석사동·퇴계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42%입니다.
그런데 42%의 지역에 달랑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우석중학교와 대룡중학교.
우석중학교는 정원이 767명, 대룡중학교는 1,044명, 총 1,811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다 먼 데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 배정을 할 때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넓은 지역에서 달랑 2지망까지입니다.
그것 보고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경기도는 신설 학교가 생기는데 왜 강원도는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인지,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통학시간에 치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고 버스에서 시달리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은 교육자이십니까, 정치인이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감님은 전혀 교육자가 아니십니다.
정치인이십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교육자로서의 명분을 갖고 교육자로서 풀어가야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현재의 사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이 정말 어린이들을 위하고 커 가는 강원도 어린 학생들을 아끼는 교육자이신 교육감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도 좀 더 좋게, 교육자답게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강원도 홍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과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도정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각 실·국별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사업들이 대변인실에 집중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사업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30% 증가했죠?
그런데 관광마케팅과나 동계올림픽본부나 이런 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대변인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예산이라는 미명 하에 홍보비가 대변인실에 집중되어 있죠?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비율을 살펴보면 해외 홍보, TV·라디오 광고, 인터넷 광고, 옥외 광고, 신문·잡지 등의 홍보에 집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 도 이미지 제고가 얼마나 되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면서 이미지가 제고되었나요?
일각에서는 이들 예산이 강원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문순 지사님의 개인적인 이미지 고양을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얼굴이 안 나간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해외 언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교 대상 강원도 특별프로그램 제작, TV 홍보 이런 것들을 지금 해외에서 다 하고 있죠?
광고 및 홍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장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엄청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외 홍보 타임대가 언제인지, 이것이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받았습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대변인님이 이렇게 성의 없이 대변인실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장수 대변인으로 계속 모시고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다른 국장님들도 다른 데 보낼 데 없으면 그냥 계속 계시는 겁니까?

지사님, 참 성의 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광고가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에, 핫한 시간에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아무도 안 보는데 새벽에 나가고 밤중에 나가는 게 광고 효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시잖아요?
MBC 언론사 사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지사님, 그럼 쓸데없이 행사하시지 말고 정말 중요한 시간대에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면 앞으로 행사는 계속하시겠네요?
참 답답합니다.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G-2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강릉 단오공원에서 G-2올림픽페스티벌 한 것 아시죠?
강릉과 평창지역 행사예산 14억 6,000만 원 중 대변인실에 뜬금없이 외신기자 대상 올림픽 감동마케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여기에 3,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었습니다.
지사님, 감동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감동을 주는 것도 마케팅을 합니까?
외신 기자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감동마케팅을 해서 외신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감동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집행된 내역을 보면-강릉 행사에 한해서 집행된 내역인데-외신프레스 투어버스 임차 2회 예산으로 232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변인실의 감동예산이라는 것은 기자단 투어와 접대비로 배정된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참여 관람객 수를 물어봤습니다.
관람객 수가 6만 명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외국인은 달랑 230명이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2년 앞둔 시점에서 외국인에게 홍보하겠다고 만든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달랑 230명만 오고 동네잔치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에 예산을 산정하지 말았어야죠.
의회에서도 예산심사할 때 하지 말라 했는데 굳이 하신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달랑 230명만 할 것이라면 예산을 아꼈다가 내년에 알찬 행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올림픽과 비교할 게 아니라 강원도에 맞춘, 강원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만의 올림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행사에 도청 직원 50명을 참석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정선, 강릉, 평창 등 개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700여 명 정도의 공무원 참여를 요청하셨죠?

그런데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출장 수당을 주었고 대체휴무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본 행사 취지와 전혀 다른 전형적인 행사성, 선심성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공무원들을 불러서 머릿수 채울 것이라면 왜 이런 행사를 합니까?

진짜 6만 명이 온 겁니까?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도 처음 하는 거니까 그때도 실수해 놓고 "처음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도에서 정부에 지불 요청한 국비 50억 원은 너무 이른 시기의 문화행사 추진과 낭비성, 올림픽 재정투입 과다 등 해서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죠?

반영됐습니까?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강원도 집행부의 업무수행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고 따지려고 했는데 20억 원을 더 받아오셨네요?

정말 장한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올림픽을 한다고 시·군별 1문화콘텐츠 육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한 지역축제, 문화행사와 크게 차별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세계인들이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질문부제 : G-2 올림픽 페스티벌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전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올해 공연은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보며, 내년에 연습을 한 번 더 하고 후년에 본 문화공연을 하겠음.

그리고 내년에는 제주도, 부산,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역도 부르고 해외도 초청해서 세계인의 축제가 되도록 더 치밀하고 알차게 준비하겠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쓸데없이 부르지 마시고 정말 올림픽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상설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부실 논란을 얘기한 바 있죠?

모르시나요?

홍보관 부지를 평창에서 강릉으로 옮기면서 기존 디자인은 그대로 적용하여 올림픽 엠블럼 형태로 지은 것도 특색이 없고 접근성 또한 낮아 향후 활용 방안도 없이 그저 흉내만 낸 졸속행정,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원도 문화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상황을 마련해 주시는 게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동계올림픽조직위와 문체부와 강원도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진짜 강원도에서 지사님만 애가 타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 조양호 조직위원장님이 오셔서 사진 찍으시면서 당신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셨죠?

그랬을 때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강원도만의 올림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창동계올림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홍보캐릭터 ‘반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반비 아시죠?

도청 앞에 있던 반비상 없애셨죠?

어디에 갔어요?

그러면 올림픽 끝나면 거기에 무엇을 설치하실 겁니까?

2년 후면 올림픽 끝납니다.

끝나면 바꿔야죠.

아, 지사님이 다시 3선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동트는 강원’과 ‘반비레터’가 전혀 다릅니다.

출간이나 계획이나 모든 게 다른데 통합을 시켰어요.

작년 12월부로 통합을 시키고 나서 올 1월에 동트는 강원을 제가 봤습니다.

반비레터의 어떠한 것도 동트는 강원에 들어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통합해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알아보시지도 않고 대변인실의 잠깐의 판단에 따라서 폐간을 했다는 것은 지사님께서 업무, 뭐라 그럴까…….

아시죠?

우리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이를 통해 장차 맞이하게 될 글로벌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강원도를 세계화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로 위신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상징성과 특성을 갖춘 강원도만의 얼굴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3.1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곽영승 의원 [새누리당, 평창군 제2선거구 출신]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 출신 새누리당 곽영승입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약간 거슬리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자신의 이미지가 도민들께 어떻게 각인되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런 이미지가 구축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에 강력히 맞서고 계시죠.
두 번째는 최근에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소송,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이판사판 탄압정책이자 정치적 흠집내기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시고,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감님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죠.
또 세 번째는 감사원이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도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를 추진하자 감사원이 나서서 법률위반을 조장한다,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틀렸고 감사원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는데, 전교조가 소송을 냈죠.
그런데 1심과 마찬가지로 법외노조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단체교섭권도 없게 되고 정부의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노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판결입니다.

교육부가 이 판결에 따라서 사무실 퇴거조치, 단체교섭 중지, 기 타결된 단체협약 무효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계속해서 전교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단체협약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일부 승인하시고 일부 거부하신 것인데 부분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감님,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이시죠?

그런데 그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의 주장과 원칙이 국민의 대리기관인 정부, 더 나아가 법원의 판단까지 역행하거나 대치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은 온전히 정정당당하고 올바르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적을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적이 아니고 교총이 내놓은 교육감님에 대한 논평입니다.

이 논평을 그대로 옮겨보면 “교육감님은 2012년 평교사로 재직하던 분을 2단계 파격 승진시켜서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도의회가 학교 복귀를 요구하자 이분이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한 후에 다시 비서실장으로 복귀한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 진로교육원장으로 영전했다.” 이렇게 교총이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적법한 것인가요?

교육감님의 이런 인사가 적법한 것이냐는 얘기죠.

적법하긴 하지만 모든 교직원들, 선생님들이 보는 일반적인 정당성에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지적을 교총이 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가 도교육청 전체 직원, 일선 선생님들의 사기나 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용인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른바 교육은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한쪽 시선만을 갖고 계신 인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

이들에게 자칫 편향된 의식이 심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질문부제 : 교육감의 교육정책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교육 추진

교육감인 저보고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보는 한 발짝 나가자, 보수는 지킬 것은 지키자인데 교육에서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생각임.

제가 교육감이 되었을 당시에 교육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다소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함.

시간이 없는데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무상보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무상보육이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 책임이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고 그 이유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다,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그러면 아프리카 토착부족 단위도 아닌 선진국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정부와 강원도의 주장,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교육감님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또 다시 법리논쟁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부 시행령의 합리·불합리를 떠나서 국민의 대리기관인 정부의 법체계를 무시한다면 국가가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더군다나 공직에 계신 분께서, 그런 걱정을 하고요.

우선 법령을 준수하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무상급식을 주창하시고 시행해 오고 계세요, 폭넓게.

무상급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무상교육이 아니라 의무교육?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서울지법에서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무현 정권 때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의 누리과정 예산 불집행은 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에 없는 무상급식은 교육감님의 이념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시는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 연장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불집행도 법령을 떠나서 교육감님의 이념적 판단에 의한 미집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건 무상보육이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당장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올해 무상급식비 1,200억 원, 그다음에…….
 무상급식비 1,200억 원이고 누리과정 예산 그 절반인 660억 원입니다.
 압니다.
 무상급식비 중에 저소득층 생활보호수급대상자 때문에 한 400억 들어가요.
 800억의 예산이 중산층, 부유층에 대한 무상급식비죠.
 그래서 저는 법에 없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법적 우선순위에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법리논쟁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교육청평가와 학력평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주창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은 수월성교육, 전인교육 어디에 치중하십니까?
 굳이 선택하려면 전인교육과 수월성교육 어디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감님이 교육감 직에 앉고부터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핵심 중의 핵심 욕구인 내 자식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욕구를 거스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3.9%였는데 우리 강원도는 4.6%,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요.
 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1년에 2.9%였는데 지난해 4.6%, 다 교육감님 재직기간 동안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 전국 77.5%인데 강원도 72% 이런 식으로 교육감님 재직기간 동안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체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 참여비율이 높고 학교생활 행복도와

진로성취도가 높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역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부탁드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의복불량, 옛날 우리 다닐 때는 선도부 학생들이 학교 교문 앞에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학생들이 있나요?

교복불량이면 벌점을 준다든가 잘하면 상점을 준다든다…….

지금 없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없어졌습니까?

저도 그런 것은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감님, 혹 국민신문고 알고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월 17일 발표한 국민신문고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5단계 중 '매우 미흡'으로 최하위였습니다.

국민신문고라는 것은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이나 희망사항을 올리는 것인데 이게 최하위인 '매우 미흡'이에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학생들의 요구나 희망사항,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희망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또 국민권익위가 2월 22일 2015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이런 것도 발표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기관이 올해 1월 17개 시도교육감님의 직무수행평가에 대한 도민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12위를 기록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또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우리 강원도는 몇 개 학교나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강원도가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1개 학교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의 평가항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업방법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배움을 즐기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학교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 교직원이 함께하는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 이런 것입니다.

다 교육감님이 애쓰고 계시는 항목들이 평가대상이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신…….
이런 평가에 의해 100대 우수학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딱 1개 학교만 들어가 있다.
우리랑 도세가 비슷한 전남도는 11개 학교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감님, 계층이 교육을 통해서 세습화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이라는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연간 상속액 규모가 1970년대에는 국민소득의 5.7%였는데 2010년 이후 8%로 높아졌다, 그리고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하는 비중이 1970년대에는 37%였는데 2000년대에는 42%로 상승했다, 또 15세 무렵에 본인이 생각하는 계층이 성인이 되어서도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층이 세습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감님의 무상급식이나 지사님이 도립대 무상등록금을 하고 계신데 현금복지로 인심을 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부를 치열하게 하셔서 고용을 늘리고 계층이동성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단답형인 “예, 아니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유관기관회의는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담기구는 설치하셨나요?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가 얘기하는 특단의 대책은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가 부유층보다 특히 빈곤층·서민층에서 훨씬 빈도가 많고 잦다.
자료가 있는데 시간상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교 밖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 1,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1,200명, 2014년도에 1,100명, 작년에 1,000명, 많이 줄어든 게 아니죠?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듬뿍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공짜이론에 대해 잠깐 한 말씀 올리고 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념이 넘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있지만 그 잔영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진보의 창시자들은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상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전투적이고 희생이 따르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법과 언론의 자율성을 철폐했고 권력을 중앙집권화했고 반체제 인사들을 강제 노동수용소에 수감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론과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다루었고 관용・관습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시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관용, 토론에 의한 합의 등으로 진정한 진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고집이 세지 말아야 합니다.
겸허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일 것입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많이 만나셨는데요, 그동안은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지 않고 부드럽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입에 쓴 그러나 몸에는 좋은 한약을 한재 올릴까 합니다.
아마 잘 소화하시면 우량감자가 되실 겁니다.
지사님은 현 강원도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건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해제, 레고랜드 파행, 강원FC 존립문제, 도립의료원 적자누적, 인사난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 자리에서 조직장악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리더가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조직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영이 안 선다, 그러면 조직을 통솔할 수가 없다, 조직이 흔들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사에 대해 도청 직원들 대부분이 싫어하는 다면평가제를 강행하고 계세요.
발탁인사라고 해서, 인사라는 게 보통 그렇죠, 1명이 만족하면 10명이 불만하게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인사는 가끔씩 그런 한계를 넘어서요.

그래서 조직원들이 등을 돌리고 냉소합니다.

당연히 생산성·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사님은 공직을 지사님의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면도 보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성수련원장, 1차 심사에서 떨어지신 분을 2차 재공고내서 임명을 강행하셨어요.

특히 40대인 이분에게 2급 이사관 자리를 주었습니다.

도청 직원들 1,000명 중 이사관이 되시는 분은 평생 근무해야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황당함을 헤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사님, 약속을 잘 지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인가 품이 넉넉하시고 인성이 좋으신 홍성욱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사님은 도대체 몇 번 "예. 예." 해야 약속이 실천되느냐고 하시면서 한 20번~30번 해야 되겠다 하셔서 모두들 웃으셨는데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저하고도 약속을 어기셨어요.

이 자리에서 속초의료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일언반구 말씀 없이 임기 중간에 해직하셨어요.

이렇게 도백의 자리에 계신 분이 약속을 안 지키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청년정신 김기홍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참하나GW와-쓰레기 태워서 전기 생산하겠다고 하는-MOU 체결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곧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사님, 잘못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라, 그래서 신뢰를 자꾸 잃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또 결단을 안 내리세요.

결단을 내려야 될 현안들이 많은데 결단을 안 내리십니다.

결단을 안 내리는 것도 결단입니까?

2년, 3년, 4년씩 끌어가는 문제는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일이 진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강원FC 전 임은주 대표 문제, 약속을 못 지키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퇴를 안 하고 엉거주춤 주저앉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의회가 악역을 맡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 지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결단을 내리셔야 될 일인데 안 하시니까 의회가…….
그다음에 골프장 문제로 도청 지사님 방 앞에서 1년 동안 주민들이 농성을 했어요.
지금도 할랄식품단지 반대 농성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듣기로는 할랄식품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만나셔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의견을 교환해서 저분들이 납득하면 그만둘 텐데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또 1년 동안 주민들의 에너지를 뺏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시위를 곧 그만둡니까?
오해를 풀었다면 시위를 그만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강원도정의 국면을 총체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진단합니다.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비서실을 확충하셔서 지사님이 약속하시고 현안을 챙기시는 것을, 지사님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비서실에서 현안도 챙기고 약속도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른바 적재적소, 자리에 맞는 인사를 하셔서 능력에 따라 업무를 할당하시기 바라고, 또 도청 공직자 다수가 반발하는 다면평가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리는데 고집을 피우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기공식만 해 놓고 1년 4개월째 아무 결과가 없고 검찰수사니 뭐니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딱합니다.
어제 김성근 의원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요, 레고랜드 사업비가 5,000억인데 호텔, 콘도, 상가, 워터파크 이런 부지 분양해서 1,460억 조달하고 그다음에 자본금으로 1,500억을 조달하고 파이낸싱 2,050억 하겠다 이렇게 했

어요.
그런데 자본금 1,500억 조달 중에 900억은 멀린사가 레고로 출자하는 겁니다.
900억 원어치의 레고를 테마파크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린사는 지금 출자하겠다고 하는 100억 중에 50억밖에 출자를 안 했는데 1,000억 내고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통째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2,050억 원을 도에서 채무보증해 주시면서 의회의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도 무시하고 탈법적 조치로, 이런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수없이 하셨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내년 말에 절대 완공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오래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레고랜드에 대해 도정질문을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잘 될 겁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이니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무보증 2,050억 할 때 지사님이 결재를 하셨습니까?
지사님 결재도 없이 어떻게 이러한 막대한 채무보증을 합니까?
이런 불투명한 사업에 2,050억이라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예산을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 채무보증을 한다, 지사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강원도와 멀린사가 계약한 것을 보면 38만 ㎡의 용지를 10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하고 100년이 지난 이후에 연간 매출액이 400억 원이 되어야 땅 임대료를 받습니다.
또 거기에 1,300억의 강원도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건설해 주고, 취득세 300억 원 면제해 주고, 그런데 1년 매출 400억이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레고랜드와 비교해 볼 때 춘천레고랜드는 400억의 수입을 올리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멀린을 위한 노예계약을 했다.
법을 다시 공부하세요.
지사님, 이렇습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가 오래 전부터, 전 지사나 전전 지사부터 접촉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가 지금 이런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서 밀고 당기기를 했던 것이에요.

2. 질문부제 : 레고랜드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철저한 준비로 사업 추진

레고랜드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께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가 되었음. 우리 나라에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 돈을 내고 들어온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림.

그런데 지사님이 덜컥 하신 것이죠.
지사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 우선매수권 잘 알고 계시죠?
우선매수권도 이렇게 허황되게 체결을 했느냐,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려 316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6개 중에 4개는 정상화했다,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고 2개는 현 상태 그대로 있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저는 지사님이, 여기에 보면 덴마크 국적의 레고랜드 코리아 초대 사장 이 모 씨 76세 있죠.
보이십니까?
그다음에 LTP, 런투플레이라는 회사입니다.
대표 이 씨의 부인이에요.
그다음에 LP홀딩스 대표는 이 씨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짜고 친 거죠.
지사님, 이것은 우리 김기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참하나GW와 같이, 참하나GW는 남편이 수석연구위원이고 그 회사 사장은 부인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참하나GW의 최 모 사장이나 레고랜드의 이 모 사장이나 아주 화술이 능란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사님을…….
어쨌든 지사님이 판단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화술이 능란한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당초 강원도와 협상했던 게 아니에요.
접촉했던 게 아닙니다.
경기도 등 여러 군데와 접촉하다가 안 되니까 강원도로 이 씨가 왔어요.
지사님이 실적에 급급하셨기 때문인지 선거를 앞두셨기 때문인지 이것을 덜컥 계약을 하신 거죠.
참으로 강원도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레고랜드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지사님, 왜 검찰수사가 일어나게 됐느냐면 여기에 나오는 민 모 씨하고 이 씨 일가들하고 자기네끼리 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갖겠다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내가 오늘 안 갖고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강원도는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조차 못 했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다는 얘기가 감사결과 기록물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물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사안은 없다는 기록까지 감사원 감사결과서에 나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레고랜드 급이 아닌가, 3년 전에 이런 결과가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의회에서 595억이 들어가는 옥계지구 제동을 건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의회에서 이것마저 승인했으면 595억이 날아갔을 것이다.
지사님이 제대로 일을 하시면 의회에서 왜 승인을 안 했겠습니까?
1조 8,000억이 들어가는데 3,300억 기반시설 국·도비, 나머지 1조 5,000억은 민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단 1건도 민자유치 없어요.
멀린사 30억 원 들어온 것 외에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멀린사도 투자대행사라서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누구도 입질이 없어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10년, 20년 걸리는 사업인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우리랑 똑같은 시점에 발족을 했어요.
우리는 66명의 직원이 있어요.
거기는 직원이 48명입니다.
거기는 민간전문가가 3명, 우리는 민간전문가가 1명,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MOU 체결이 단 2건이지만 거기는 MOU 체결이 24건, 같이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지사님의 조직구성원들, 지사님 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사님, 얼마 전에 청장님 이하 사표 내라고 호통을 치셨다는데 사표 받으셨습니까?
사표 받으셨냐고요.
사표 내라고 했다면서 왜 안 받으셨어요?
지사님, 항상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죠.
도정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챙기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옥계지구를 강원도가 직접 한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구정지구를 직접 개발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외국인학교가 있어요.
그 외국인학교가 아주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구정지구가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판단 미스도 있었다, 노력도 부족하지만 판단 미스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강원랜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강원랜드가 지난해에 1조 6,300여 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사내유보금이 무려 2조7,000억 원에 이릅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폐광지역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삶의 보루다, 폐광지역을 위해서 세워진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2조 7,000억이라는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뭐하는 것인가.
지사님, 이런 데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이 자리에서 강원랜드 배당률이 공사기업을 통틀어서 최고 수준이다, 지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배당률을 조금만 낮추어도 연간 300억~400억의 폐광지역 투자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력도 안 하셨어요.
지금도 공사기업 통틀어서 여전히 전국 최고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게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행정의 초점을 맞추셔야지 왜 폐광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레저세에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행정력을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공짜이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6. 3.1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권혁열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처럼 본 의원 혼자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 특별히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행정 일선의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로 그 어느 해보다 굵직한 현안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동해안 해안침식의 원인과 이에 대한 강원도의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대한 중국투자의 허와 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자세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얼굴이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요즘은 약주를 많이 안 하십니까?
저도 어제 잠이 안 와서 조금 했습니다만 술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늘 강원도 토종감자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감자원정대라든가 동해안 도루묵 팔아주기 등 이런 인기성 이벤트 행사로 도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죠?
지난해 지사께서는 모 행사장에 가서-좀 전에 얘기했다시피-강원도에는 불량감자가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불량감자 셋이 누구누구입니까?
우리 지사께서 자청해서 불량감자 셋 중에 가장 양호한 감자가 지사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량감자하고 요즘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오륜감자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륜감자를 연구개발했으면 강원도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야 되고, 또 지사께서 늘 추구하는 행복 2배, 소득 2배, 도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지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형적인 강원도의 토박이 토종감자로 타고난 스킨십과 백만 불짜리의 미소, 추진력, 이런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더욱더 전념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사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침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동해안 6개 시·군, 고성부터 동해·삼척까지 정상적인 해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빨간 곳이 좀 안 보이는데 C·D, C는 해안침식이 심각한 곳이고 D는 해안침식이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전국에서 해안침식이 매우 심각한 곳이 가장 많은 게 동해안입니다.
시들시들하잖아요.
지사님, 학교 다닐 때 학점 C·D·C·D 한번 받아봤습니까?

학사경고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받아봐야 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공부 못 하는 심정을 모르고 소외되고 낙후되고 어려운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킨십이 가장 좋은 지사님이 재선을 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전념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사님, 환동해본부가 지난해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침식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안상태가 양호한 도내 해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사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2일 강릉 정동진의 모습입니다.
관광시설인 레일바이크가 유실되는 등 30여 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가 발생된 지 2개월 되었고 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복구가 안 되는 바람에 레일바이크를 타러 오는 관광객들이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알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고 했음에도 해안침식과 유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동해안 해안침식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계시죠?
인식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지사께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해안침식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동해안은 해안침식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태풍이나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예측불허의 쓰나미 현상이 불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무분별한 해안 난개발과 돌제나 도류제, 잠제 등과 같은 침식방지용 구조물 설치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파고에 의해서 주위의 침식이 더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모래유실을 따라 해변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연안생태계가 파

괴되고 생활과 생계의 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동해안 해안선 223㎞ 가운데 46㎞가 침식으로 유실된 상태입니다.
유실된 46㎞는 도와 국가가 해안침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모니터링으로 원인을 파악했으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그동안 동해안 해안침식 방지를 목적으로 쓴 모니터링 예산은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4년~5년간 50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억 원을 해안침식 모니터링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안침식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대책인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모니터링조사도 중요하지만 원인이 규명되었으면 이제는 대책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안침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본 의원이 8대 때 해안침식의 심각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림픽 연계 해양개발사업단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알면서도 해안침식 예산을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선에 성공한 지사께서 이런 해안침식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주요 공약에 이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해안침식에 따른 국토 유실과 동해안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도청 내 관련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동해안 타 시도와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해수부 등 정부와 국회, 정치권과 협의하여 예산지원 등을 건의,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몇 건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완료 지구도 있고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물론 국비가 왔어요.

그렇지만 매칭 부분의 지방비 부담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에서 지방비가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안침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치중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해안과 연안침식 대책의 핵심은 예산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침식을 막기 위한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미만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피해 수준도 힘겨운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침식의 문제는 휴전선을 지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국토보전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999년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기에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의 추진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사님, 해안과 연안침식 방지, 생태계 유지, 그리고 친환경 연안공원 확보 등의 사업이 올림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에는 올림픽 주 개최지인 동해안 강릉에 전 세계의 관광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올림픽 선수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천혜의 동해안 해안경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동해안의 해안벨트가 전부 다 해안침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곳으로 세계적인 손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올림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올림픽을 통해서 그 지역이 동반 성장·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혜의 동해안이 전 세계에 명성을 남겨서 올림픽이 끝나도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예산에도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해안과 연안침식 방지와 연안보전 사업은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동해안이 어떤 곳입니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세계적 자연유산이며, 금강산과 마주한 세계평화의 염원이 담긴 곳 아니겠습니까?

때를 놓치면 우리 동해안은 영영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국토보전과 관광자원 보호 측면에서라도 동해안 해안침식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해안침식 방지와 복구를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동해안 인근 지자체인 경북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 내야 합니다.

최근 동해안 6개 시·군이 결성한 동해안 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2018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는 도의 동해안방재연구센터 건립도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수립과 집행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전 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찬스를 헛발질로 연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해안의 6개 시·군이 올려준 크로스를 우리 지사께서 멋지게 골로 연결하는 특급 골잡이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지사님, 공도 잘 차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지사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처럼 침식이 일어난 곳만 보지 말고 해안과 연안침식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의 방법은 방·용·보입니다.

방은 해안저지대 방호기술입니다.

용은 해안매립공간 확보와 친환경 해안레저공간 확보 기술을 뜻합니다.

보는 해안유지와 관리 기술입니다.

해안침식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이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에 맞는 대책 수립과 집행은 국가, 해수부, 기상청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보다는 더 현실적인 방·용·보 이 세 가지가 해안과 연안침식 대책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산 수립·집행도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건립될 동해안

방재센터의 주 역할도 이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모래총량제의 동해안 6개 시·군의 확대 실시입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총 6조 2,224억 원이 투입되는 동해안 3단계 확장공사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래총량제가 도입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의 차원을 넘어 연안생태계와 환경, 공간 확보까지 생각하는 종합적인 연안개발의 첫 사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워져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되고 주요 관광지로 변한 연안과 해변의 구조물들을 철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확대되고 항구적인 연안침식 방지대책이 나오고 실행되기까지의 대책은 모래총량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전국 최고의 해변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백사장의 보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래총량제의 확대 실시를 위해 연중 균등예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해안침식 관련 예산 재원은 지특예산인데 우리 강원도는 다른 분야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안침식은 지특사업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부정하고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많이 쓴다는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지특예산만큼은 다른 데 많이 쓰지 말고 해안침식 방지에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강원도는 해안침식 관련 예산 중 지특예산을 다른 분야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중 균등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 해안과 연안침식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또는 생색내기용으로 찔끔찔끔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해안침식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예비비로 수습하고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늘 땜질식 대책, 그때뿐인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는 주민들의 약만 올릴 뿐입니다.
따라서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연중 균등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지사께서는 경북 등 동해안 지자체와 연계하여 필요하다면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염두에 두고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강원감자, 오륜감자인 지사께 매력 있는 미소와 특유의 정치적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안과 연안침식에 대해 지사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소관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역량 부족으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도 통감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지사와 본 의원이 같이 반성문을 쓰자는 것입니다.

지사님, 이제 같이 반성문을 썼으니까 올 한 해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설천을 위해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지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 질문부제 : 해안침식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방·용·보, 모래총량제 등을 적극 도입 추진

해안침식에 관해서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해 주셨고 오늘도 이 세 가지 방·용·보, 모래총량제, 그다음에 연중 균등예산 등 좋은 제안 감사드림.

감사합니다.

어차피 오늘 나오셨으니까 지사님께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서 계시기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건강테스트도 좀 하시죠.

다음은 중국투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이 세계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자본의 한국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우리 강원도는 제주도에 이어 중국자본이 투자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우리 지사께서는 중국자본 유치를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사님, 2010년도 이후 중국이 강원도에 실제로 투자한 건수와 액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까지

모두 59건에 2억 9,076만 2,000달러, 환율 1,300원으로 환산할 때 3,777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를 개발하는 샹차오홀딩스의 2억 8,451만 5,000달러를 제외하면 627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입니다.

결론은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를 빼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중국과 체결한 투자협정, 즉 MOU는 샹차오홀딩스의 강릉 차이나드림시티 개발, 중국 예술인 그룹의 강원도 양양군 예술인마을, 중국 CEO클럽의 원주 투자계획 등 세 건입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세 건도 정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지사님, 투자협정을 맺은 세 건 모두 주체를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샹차오홀딩스는 중국 내에서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차이나드림시티에 투자하는 샹차오홀딩스는 중국의 어떤 회사입니까?

문화예술을 하는 데서 부동산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 펀드회사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펀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과연 자본력이 되는지,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중국 투자자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인허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는지, 또한 착공은 언제해서 준공은 언제하고 분양은 언제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진행속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샹차오홀딩스의 중국자본은 얼마이고 한국자본은 얼마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회사명에 '홀딩스'라고 붙이는 것은 지주회사라는 뜻인데, 물론 외국인 투자법인과 국내법 적용과는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왜 '홀딩스'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샹차오홀딩스는 자국, 즉 중국 내든 한국 내에 자기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있겠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주회

사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과의 합계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지주회사는 순자산 25% 이상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자회사 지분을 40%, 상장회사는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회사 외 다른 회사에는 5%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없게 묶여 있습니다.

지사님, 샹차오홀딩스는 이런 규정을 적용 받습니까?

잘 모르시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샹차오홀딩스는 중국 내 부동산 펀드 유치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샹차오홀딩스는 독자적으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에 투자할 정도의 회사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해야 되고 한국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펀드조성은 다 되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샹차오홀딩스 단독으로 2,000억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 비준이나 지방정부, 성의 비안(备案)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 비준은 10억 달러 이상과 20억 달러 이상 투자금액에 따라 국무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안은 10억 달러 이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억 달러 이하면 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국가나 민감투자업종들은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사님, 샹차오홀딩스가 투자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도청의 자료는 2,000억 원 이상이라고 하고 언론사마다 2,800억 원에서 4,800억 원까지 차이가 큰데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까?

지사께서는 외자유치와 중국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죠?

공감하시죠?

제가 며칠 전 동계특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차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서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의 면담에서 본 의원이 제주도 자치의장님께 중국투자가

제주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중국투자자 대부분이 콘도 및 숙박시설을 펀드형으로 모집하여 분양하고 나면 그대로 달아나는 현상, 즉 먹튀를 하는 부동산업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비자 제도 등 부동산 영주권 이민제도를 이제는 차단하고 영주권 총량제를 선택하려 한다고 합니다.
기금융자로 숙박업소는 융자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중국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주로 쇼핑이 목적이고 이제는 중국도 대외투자를 절제하고 내수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제주도에서 먹히지 않으니까 강원도로 진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2011년 당시 이광재 지사가 공공연히 약속한 알펜시아 중국투자가 사기극으로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2016년 기준 매일 이자만 약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알펜시아의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중국자본을 유치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자가 7,000만 원, 지금 금리가 하락되어서 부분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몇 년 전에는 하루에 이자가 1억 2,000만 원~3,000만 원이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지사님은 연봉이 얼마예요?
본 의원이 당시 강기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알펜시아 협정을 2011년 11월 도와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 사이에 3,500억 원 투자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거론된 알펜시아 투자유치 중국 기업으로는 중국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를 비롯해 한국홍수림홀딩스도 있었습니다만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가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이 회사와 맺은 투자협정은 MOU 단계를 넘어서 MOA 수준까지 갔습니다.
MOU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만 MOA는 말 그대로 실행단계인 매매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폭설로 인해 한국에 못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당시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

한공사는 그해 3월까지 계약금 650억 원을 갖고 오기로 약속했는데 결국 못 가져오고 무산됐습니다.
MOA, 즉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도 묻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중국의 해외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국가 승인의 절차를 자료로 제시하며 확인하고 또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사님, 지난해 1월 샹차오홀딩스가 주최하는 한중 문화교류라는 행사에 참석했었죠?
그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 싸이·소녀시대 등 많은 연예인이 왔었죠?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도비가 안 들어갔으니 다행이네요.
지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흥에 겨워서 춤도 잘 추시더라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던데 기억나십니까?
아주 춤도 잘 추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참석한 이유는 투자가 잘 성사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당시 모두 확인하고 확실하게 챙겼습니까?
2년이 되었는데 사무실 하나는 냈겠죠.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와 2014년 7월에 계약되었잖아요.
인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강원도에서 하죠?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허가는 언제, 2년이나 되었는데 너무 타이밍이 늦었어요.
지사님께서 4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4월에 착공을 절대 못 한다고 봐요.
최소한 4월에는 착공해야만 올림픽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분양을 해서 오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봐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저하고 단둘이 얘기합시다.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라고 해도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일시에 동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우리나라로 치면 PF(Project Financing), 즉 개발 전체에 대한 은행 또는 금융권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PF라는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과 기업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거나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콘도나 호텔의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자금유치 방법 중 샹차오홀딩스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개인자금인지 은행차입인지 펀드인지 분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국가는 투자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이 제주도에, 국제경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수로 전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국 내 샹차오홀딩스 자본금은 얼마이고 한국 내 샹차오홀딩스의 자본금은 얼마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국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은행차입, 즉 대출을 통해 해외투자사업을 진행한 일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샹차오홀딩스가 중국 내든 국내든 모두 자체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 내에서 개인이나 기업투자자를 모집해서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뜻입니다.

샹차오홀딩스가 과거 홍수림투자관리유한공사,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처럼 만에 하나 투자자를 모으지 못한다면 투자는 무산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 지사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실이 있고 다 좋은데, 올림픽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검증・분석・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지사께서 중국 CEO클럽이 강원도에 향후 8년간 1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어떤 절차를 거쳐 투자를 받고 진행할 것인지 로드맵은 없습니다.

그저 막연히 강원도를 찾는 중국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강원도 내 부족한 관광시설 확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MOU를 맺은 CEO클럽이 중국・호주・인도 등에 지부를 두고 평균 연매출 2,000달러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자단체라며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처럼 아무리 대단한 CEO클럽이라도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지사님, CEO클럽과 MOU를 체결한 이후 진행된 상황을 밝혀 주시고요, 현재 CEO클럽 회사들 중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회사는 몇 개이며 투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중국투자자에 대한 모든 것이 금방 이루어질 듯 언론에 홍보해 놓고, 도민의 기대심리만 부추겨놓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 낙후된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등 중화권 투자유치에 집중하려는 계획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한 계획의 실천을 위해 작년 9월 북경에 강원도 중국본부를 신설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는 별반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구정지구의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은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섰지만 결국은 자유구역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이미 수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과 의지의 표현이 자화자찬이나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중국기업과 자본이 유망한 투자처로 강원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보다 철저히 챙기고 투자기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철저히 하여 선언뿐인, 또 법적 효력조차 없는 MOU 체결이 아닌 실질적 투자로 연결되어 우리 강원도 경제가 크게 날아오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전국교육감협의회 때문에 광주에 가기로 되어 있었죠?
오늘 답변 때문에 못 가셨죠?
거기에 안 가시길 잘했어요.
가 봐야 누리예산은 계속 정부에 촉구하자, 끝까지 밀고 나가자,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회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강원도 내 어린이집연합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존경하는 홍순옥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열 일을 다 제치고 이렇게 방청석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교육감님과 제가 멋지게 누리예산을 세웁시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리과정은 논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정쟁의 대상입니까?
그도 저도 아니면 어떤 한 개인 또는 집단의 사상과 신념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이념투쟁의 실천과정입니까?
본 의원은 누리과정을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던진 이기심과 정치적 욕심의 산물, 더 나아가 족쇄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누리과정의 본질과 목적은 뒤로 묻힌 채 오직 특정한 집단과 개인의 이념, 철학을 펴나가고자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 정치이념의 호불호라는 눈앞의 작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큰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은 2012년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해 유아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출발점인 평등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피켓을 든 것도 있고,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2011년 5월 만5세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2012년 3월부터 5세아 대상 누리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 중 관세와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20.27%와 국세·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5%를 더 상향시켜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부터는 3세~4세로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해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고,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해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몇 군데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웠고 몇 군데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은 알고 있습니까?
7개 정도가 세우지 않아서 지금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죠?
감사를 왜 나왔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님, 강원도의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죠?
강원도.
예.
659억 원이죠?
왜 안 세웁니까?
계속 이렇게 안 세울 겁니까?
오로지 고예요?
피박을 써도 고입니까?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달 예비감사에서, 누리예산 미편성으로 감사를 받고 있죠?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감사를 받고 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누리과정으로 인하여 애꿎은 무상급식에까지 불똥이 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도 감사까지 받아가며 밥을 먹어야 합니까?
예?
교육감님, 2013년도 당시 강원도교육감님이셨죠?
그럼 그 당시 이러한 정부 방침과 국회 의결에 대해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소신이나 고집이 달라지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왜 그럽니까?
 그때 교육감협의회에 가서 협의하고, 소신과 철학이 투철한 민병희 교육감께서 교육부에 가서 그때 당시에 따지고 했어야지, 그리고 그때 정책에 반영시켰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누리 가족들이 길가에 다 나앉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만 부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원에 대한 고민은 두 번째입니다.
 누리과정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이념, 특정한 개인과 집단들의 이기심, 정치적인 성향 등이 강원도의 누리과정을 풀기 힘든 난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육감님만 선택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에 의해서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합니까?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편협함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에는 교육기관의 정의가 따로 없습니다.
 이 말은 누가 교육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교육기관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으로서의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 서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누리과정이 유아교육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시행령에서 어린이집을

누리과정에 포함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4조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고, 세부사항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운영을 규정하는 등 보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법 제2조 보육의 개념에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는 등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실제 교육·보육 내용이 유치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규정한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셋째,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항목과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입니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대상이 아니므로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교육감님,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누리과정 재정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방정부는 정부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법치국가예요.

법령에 따라 편성할 문제이지 단순히 대통령 공약이라고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국고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육감께서는 교육감께서 공약했던 무상급식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든가 하는 수많은 포퓰리즘 예산을 다 세웠어요.

우리 누리과정 659억 원은 세울 법한데도 안 세운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거 끝나면 시원하게 한번 세우세요.

제가 배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실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교육이란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굶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들 교육만큼은 악착스러울 정도로 챙기고 실천하시는지,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민병희 교육감님은 정말 모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웠던 때라도 교육이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금 재원 마련을 운운하며 국가가 약속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핑퐁게임으로 말꼬리나 잡으며 이리 빼고 저리 달아나는 언행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피켓 들고 투쟁에 나서는 교육감은 투사입니까, 교육자입니까?

상위법이 이러저러하니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면 헌법에 보장된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 과정조차 부실해진다며 압박하고 피켓을 드는 일이 과연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 1인 시위를 하셨죠?

한번 보세요.

참 잘 나왔는데, 그런데 1인 시위를 할 때 출장을 내고 갔습니까?

그런데 복무점검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위하러 갈 때 저 피켓을 직접 들고 가셨어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시간관계상, 교육감님은 정부의 공무원입니다, 선출직이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강원도의 수장이세요.

근무시간에 피켓 들고 시위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반성하세요.

강원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민의 지금 열악한 교육환경, 교육은 모두의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 유치원은 교육이 아닙니까?

3선에 도전할 생각이십니까?

3선에 도전하신다면 오늘의 이 열악한 강원도 교육현실을 잘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정치가 이전에 교육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강원도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은 갈수록 저하되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학생 감소와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으로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린이집 재원 총 아동은 4만 1,544명이며 교사는

8,835명이고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3세~5세까지 확대하면 아동 수는 1만 9,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생애 첫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한 사람, 집단의 이상한 논리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출발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 교육환경에서 말입니다.

교육감의 이념과 사상, 실천 철학이 아이들의 교육보다 더 우선되는 현실에 우리 강원도 교육이 멍들고 있음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교육감이 보여준 언행은 우리보다 살기 좋고 여건이 나은 서울에서나 나올법한 것들입니다.

교육감은 어느 지역의 교육감입니까?

강원도교육감입니다.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교육감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 내에서 교사와 교육위원을 해 왔기에 우리 도의 특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찌해서 자신의 전교조 경험만을 살려 정부와 맞서고 투사로서의 이미지만 강조하시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신과 고집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교육감의 소신은 이제 도민들과 우리 의회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보다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을 보낼 것을 걱정하며 애를 태우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해 상임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현실적 대안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농림수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민병희 교육감과 함께 3선에 성공해 상생하고 강원도가 정말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확 바꾸어보고 싶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평소의 신념과 소신에 대한 논란보다 아이들을, 학부모들을, 교사들을 더 걱정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좋은 사례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그동안 고민해 왔던 모든 것을 시원하게 확 풀고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을 세웁시다. 어차피 세울 것을 시원하게, 오늘 전라도 가지 말고 세웁시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과 소득증대는 물론 강원도 발전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 질문부제 : 누리과정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정부의 의지와 결단 필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뿐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대안들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제점이 개선되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6.15)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기철 의원 [새누리당, 정선군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문화와 관광의 명품, 산천도시로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는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구촌 최대 축제로 일컬어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민의 단합된 힘에 우리 서로들 놀랐고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힘을 키워갔습니다.

엄동설한에 눈을 털어가며 폭설 속에서 피켓 행진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전세내어 해외 원정응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남아공 더반의 밤하늘에 평창이 울려퍼질 때 우리는 거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변방이 아닌 세계의 중심 강원도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인식의 지평을 넓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민의 삶이 한 단계 도약되리라 확신했습니다.

강원도가 전 세계 사람들로 북적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 진정 지구촌의 중심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5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여행 시 방문지로 강원도를 선택한 외국인 관광객은 6.4%에

불과합니다.
2011년 11.1%에서 해마다 줄어 2015년 6.4%로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국내여행 실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1일 경기도의 2015년 국민 여행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국내여행 방문지는 경기도, 서울시 다음으로 강원도라고 합니다.
관광 1번지라고 자부하던 강원도 관광의 현주소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2010년 30조 원이던 강원도 GRDP는 2013년 35조 원, 2015년 40조 원이라고 도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매년 1조 원 정도 증가하던 GRDP가 2011년 이후 연 2조 원 수준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업유치에 성공해서 매년 1조 원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의원은 원주~강릉 간 철도, 올림픽경기장 건설 등 동계올림픽을 위한 시설투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경제구조가 확 바뀌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 추세는 동계올림픽 관련 투자가 끝나는 내년 이후가 되면 계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강원도가 과연 지구촌 축제를 앞둔 잔칫집이 맞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동계올림픽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그 중심에는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 정부는 평창과 진부에 들어서는 올림픽역사의 규모를 슬그머니 대폭 줄였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수십 장의 현수막을 걸어 놓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원도는 혹여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도민 여러분, 이 난맥상을 과연 어찌해야 합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일어납시다.

더반에 울려퍼지던 평창을 기억의 창고에서 불러냅시다.
평창은 추억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 에너지를 모으고 열정을 발산합시다.
애정을 줍시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사그라지는 올림픽 분위기를 다시 띄워봅시다.
우리가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시들한데 누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요구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올림픽을 강원도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동서로 갈리고 남북으로 나뉜 강원도의 정서적 분열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통합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분위기 조성은 지사님과 도내 공직자 모두가 중심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시대적 소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주 작은 정성이나마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특구 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유사 이래 강원도가 지구촌을 향해서 오늘처럼 포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강원도를 미래의 땅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사님의 수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만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계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많이 치러서 이번 동계대회도 아주 잘 치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사님, 그러시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국격이 올라가고 갈등·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최가 2년도 채 안 남은 지금 당초의 목적은 아주 어렵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크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 붐을 조성시키려면 유관기관 입장에서 잘 치르는 올림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잘 즐기는 올림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올림픽 효과를 체감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이 아주 단순·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식 사업 추진도 체감도만 오히려 분산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필수적입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외적인?
그렇지만 또 다른 우리의 과제죠.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몫이 될 수도 있고요.
생태환경, 문화환경, 도시환경을 부서별로 정리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 강원도의 미래지향지도와 함께 접목한다면 오히려 더욱 큰 몫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시죠?
지사님,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실행되어야 도민들의 경제적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올림픽 특구가 동계올림픽 과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올림픽 특구가 특구 육성과 공직자들의 열정에 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구의 핵심은 민자유치인데요, 이 민자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특구에는 모두 2조 7,666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 중 민자가 2조 4,706억 원으로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특구사업의 성패는 민자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된 민자사업은 총 11개 사업인데 그중 일부 사업만 진전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올림픽 전에 준공이 가능할까, 물론 이후에 계획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사님, 알고 계시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 녹색주거단지, 단독주택단지, 저층고급빌라 조성사업인데요, 106억 원의 민자를 유치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투자자가 불투명하죠?

여기 준비해 온 것에는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대관령 관광숙박 빌리지는 1,5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불투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평리조트 측이 7,000억 원을 들여서 건립 예정이던 연수원과 한류빌리지는 용평 측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촉구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광휘닉스파크 측이 2,600억 원을 들여서 건설 예정이던 숙박시설과 공공편의시설도 보광 측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에 들어설 예정이던 관광휴양형 리조트도 지난해 860억을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후의 진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경기장 건너편에 들어서려고 하던 휴양형 리조트가 있습니다.

숙소 말고요.

송담과 현대가 하고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역시 불투명하고요.

1,480억 원을 들여서 강릉에 들어설 예정이던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강릉시가 아이앤디를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당초 사업기간을 2017년에서 2019년으로 다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제대로 진행 중인 것은 강릉 정동진의 차이나 드림시티, 정선 알파인 경기장 숙소 조성, 트윈비치 경포호텔·강문해변 복합리조트 건립, 금진온천 관광리조트 정도입니다.

경포 관광숙박빌리지 중 로터스 호텔·리조트 개발, 대관령 자연순응형 휴양단지는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어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도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1. 질문부제 :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선 전체 1단계 사업으로 11개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그중에 10개는 이미 착공이 됐거나 설계 중이어서 진행 중임.

샤프게인이 투자가 무산되어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으며, 좀 부진한 것들은 지금 2단계로 진행 중인 것들인데 당초에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의 특구를 지정했으나, 너무 큰 규모로 욕심을 냈던 것이 원인이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몇 개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제 평창 일대가 동계올림픽의 메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겨울 관광의 중심이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이고요.

하지만 그 기대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강원도 부채가 1조 원을 넘는다, 지역 발전의 실체는 원주~강릉 간 철도를 제외하면 보이는 것이 없다.”, 이것이 항간의 올림픽을 보는 시각입니다.

다시 한 번 긴장해서 지난 것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1년이 우리 강원도의 미래, 100년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뛰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볼 아주 좋은 기회인데 어쩌면 많은 것을 설립케하고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지사님,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지난해에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고생 많으신데 …….

제가 질타라기보다는 우리 동계올림픽을 함께 마케팅해 보고자 제안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입니다.

강릉 하키 센터입니다.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입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입니다.
하키 센터입니다.
스키점프대죠.
슬라이딩 센터입니다.
아주 멋진, 정말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건축물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관 조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경기영상을 송출해야 하는데 상대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경기가 야간에 개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건너편은 우리가 주간일 때 그들은 야간이고 우리가 야간이어야 그들은 주간이거든요.
야간경기 개최가 올림픽 주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특히 경기장의 야경에 대한 해외 관심도가 집중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주요 경기장과 주변 건축물의 야경을 높게 설치된 중계타워의 카메라를 통해서 송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중국은 베이징올림픽 경기장의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화려한 야간경관 시설물들을 홍보함으로써 중국의 과학적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화려하죠?
이것이 밴쿠버올림픽의 야간경관조명인데요, 오히려 유럽풍의 온화하면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 야간 조명입니다.
역시 밴쿠버올림픽 야간 조명입니다.
이것은 상징탑이고요.
다음은 영국의 하계올림픽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쪽에서는 처음으로 LED라고 하는 스마트 야간경관을 연출하면서 비용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이고요.
이어서 소치를 보겠습니다.
2014년 러시아는 중국 하계올림픽 전체 예산을 초과하는 최대 규모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함과 동시에 유사 이래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최대의 성과물을 전 세계에 홍보했습니다.

소치올림픽입니다. 아주 화려하죠?
계속해서 우리 국내 경기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시안게임 할 때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관들을 보시겠습니다.
비용의 한계 때문에 기본 경관조명에 해당하는 주차장 보완등 및 일부 투명조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본부에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컷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간일 때와 야간일 때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나라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과 예술을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융합해서 야간경관 기본실시설계를 수립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위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야간경관 투어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출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제3의 물결에서 시대의 패러다임을 농업과 산업, 정보화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넥스트 패러다임은 융・복합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사고와 육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에 육감・문화마케팅을 슬로프에 깔아보아야 합니다.
21세기는 콘셉트, 감성의 시대입니다.
한류문화로 인해 대한민국은 프리미엄급 명품국가 반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기업, 국가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동양의 등불,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다이나믹 코리아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올림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선진 대한민국, 코리아 바이 평창(Korea by Pyeongchang)을 제안합니다.
이미 우리는 고대 신라왕실에서부터 현대감각의 조형물을 디자인하였고 실용화

한 민족입니다.
소득 3만 불의 선진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한국의 전통과 서양문화를 융・복합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84년 이후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나라들은 유고슬라비아,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일본,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순입니다.
그리고 차기 올림픽 개최지는 중국 북경입니다.
이 나라와 도시들은 선진국이고 선진 도시들입니다.
이제 저들 국가의 개최 도시보다 차별화・선진화된 평창동계올림픽을 보여줄 때입니다.
소셜네트워크가 글로벌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뉴글로벌 문화도시 평창・강릉・정선 시티(City)가 올림픽문화도시의 상징이 돼야 합니다.
지구촌에 문화의 차이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먼(Trans-human)・포스트 휴먼(Post-Human)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은 21세기는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과 상상력이 지배하는 하트스토밍(heartstorming),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패러다임의 동계올림픽을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의 올림픽을 치렀으면 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1년 전부터 홍보를 위한 소통을 주문합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동계올림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떠오르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소셜네트워크를 토대로 거대한 활동 무대, 기차를 타고 내릴 때 사용하는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들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의 고객들이 수시로 만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델이 될 수는 없어도 모델이 입고 있는 옷과 가지고 있는 소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샤넬, 루이비통 같은 명품을 소장하기를 원합니다.
21세기의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에는 고객들이 정서적 체험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중시합니다.
올림픽 문화마케팅의 성공으로 고객의 육감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화려한 컬러의 문화상품으로 만든 조형물이 마을입구, 지역입구에 필요한데 몇몇 공직자들은 올림픽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88서울올림픽의 예를 듭니다.

1회성 행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개최되고 있는 시·군과 도,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입구에 상시조형물을 일찍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품격, 청정 강원도, 보석 같은 얼음, 순수함의 결정체인 눈의 스토리텔링, 문화마케팅을 통한 성공한 동계올림픽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스포츠나 경기장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올드 트렌드(Old-trend) 올림픽을 이제 우리는 창조적 트렌드의 동계올림픽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이슈되면서 글로벌 스토리텔링의 품격 있는 올림픽으로 동계올림픽 개최 전부터 지구촌을 한번 놀라게 해 보는 것입니다.

방법으로 1 대 1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의 동계올림픽입니다.

보통 사람들, 스타급 선수들과 올림픽 개최 전부터 관계적 마케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은 부의 축적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만 구입했지만 지금은 필요보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감성이 끌려서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성을 이끄는 바탕은 문화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마케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의 성장엔진이 아시아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신흥 강국 대한민국의 평창동계올림픽은 지구촌과 강원도 부흥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시간은 없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자료는 이미 지난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더 발전된, 더 화려한 설계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작업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하셨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설계를 했더라도 세월의 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 조금,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중앙정부,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동력을 창조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감히 주문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후배 의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6.15)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심영곤 의원 [새누리당, 삼척시 제2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심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도, 또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삼척 원전에 관해서 질문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며칠 동안 도정질문에 임하시려면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평소에 불량감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요즘 젊은이들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 강원도 그걸 표현하느라고 “감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지사님의 홍보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지사님께서는 도정질문에 답변하실 때 낮은 목소리로, 낮은 자세로 하는 모습이 도민들께서 볼 때는 마음씨 착한 지사님, 어떤 분들은 몸도 허약한 지사님을 너무 질타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저보다 한 옥타브 올려서 도민들의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지만 지사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아주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도민들의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지사님께서 도민들의 동정표를 받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 아닌가, 그건 아니죠?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수려한 우리 금수강산이잖아요, 아름다운 산, 맑은 물, 아름다운 해변.

오늘 지사님께 우리 강원도의 원전건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에게 선거공약으로 원전반대를 공약하셨죠?

도청홈페이지에 보니까 지사님께서는 임기 내에 원전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전반대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성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질문부제 : 삼척 원전 반대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중앙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함

만약에 삼척 원전 추진이 실제 실행에 들어간다면 강원도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함.

그게 전부입니까?

지사님께서는 매니페스토 실천 계획에 2014년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산자부에 달랑 한 번 다녀오셔서 원전 백지화가 되겠습니까?

갈등을 빚을 정도로 강력하게 안 한 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상세하게 저희한테 알려줄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회 공동기자회견 하나 하시고, 그때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윤상직 장관님 아시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실 방문한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갈등을 빚을 정도로 했다는 것인지요?

너무 미비했고, 기자회견이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그런 것도 사실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이이재 의원과 현재 삼척 김양호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가셨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불이행하면서 별 활동이 없었던 결과 윤상직 당시 산자부 장관께서 국회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신규 원전부지가 원래는 영덕이 1순위였고 삼척이 2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장관께서 국회 업무보고 때 독단적으로 삼척이 원전 예정부지 1순위라고 보고를 했어요.

언론에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우리 강원도도 작은 지방정부인데 한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상직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원전부지라는 것은 원전부지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삼척이 원전부지 1순위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파가 크지 않습니까?

최문순 지사님을 만만히 보고 강원도민을 만만히 본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사님은 가만히 계셨잖아요?

대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사님의 막연한 생각이죠.

지사님이 2011년도에 도지사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셨죠?

2010년에는 지사님이 안 계셨지만 삼척시와 삼척시 원전유치위원회가 국회, 중앙정부 관계기관에 삼척에 원전을 유치해 주십사 하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서명부로 올렸습니다.

서명부 아시죠?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5만 6,551명이의 인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한 인원이 총 유권자의 96.7%예요.

현실적으로 이 수치가 일어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 지사님이 어느 분이셨는지 아시죠?

그때 아무 대응을 안 한 결과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요, 100명 중에 97명이 찬성했다는 거예요.

독재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독재국가에서도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 있고 군대에도 가 있고 학생은 어디 학교에도 가 있고 그럴 텐데 97%가 찬성한다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김재남 정의당 국회의원께서 서명부를 어떻게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대리, 중복, 허위서명, 어떤 것은 동일인이 동그라미를 쳐서 서명한 것처럼 나오고 주소하고 생년월일도 없는, 서명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위조 서명도 나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인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97%를 가지고 주민이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고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허위로 나타나서 삼척시에서 작년에 다시 투표한 것 아시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85%가 원전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주민의 수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사님도 동감하시는 거죠?
원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이고 행동인데, 특별하게 중앙정부에 약점 잡힌 게 있습니까?
지사님은 관심이 없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안 해 보셨겠지만 많은 도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치 예정부지로 지정·고시를 할 때는 가짜 서명된 서명부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정·고시해 놓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주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절대다수가 반대하니까 윤상직 장관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가정책은 주민투표로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민이 수용해서 우리가 예정부지로 고시했다고 해놓고 이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실질적인 진심이었죠.-국가사무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지사님이 삼척 원전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인용해 왔는데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주민의사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

요하고 원전건설 반대는 삼척시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염원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의 솔직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원전반대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발의하고 강원도의회 의원 44명 전체가 반대서명을 해서 지정·고시를 해제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낸 것도 아시죠?

그다음에 우리 18개 시·군 기초단체장 모임에서 단체장들이 전체 서명해서 성명서를 낸 것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18개 시·군 기초의장단회에서도 성명서를 냈고, 이 정도면 우리 강원도 선출직 전체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강원도민 전체가 반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지사님께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영동지역 삼척에 원전이 건설되어서 작은 사고라도 나면, 지사님은 춘천에 계셔서, 백두대간이 있고 태백산맥이 있고 편서풍까지 불잖아요.

그래서 춘천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게 바로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앙정부에 알려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인데, 아까 조금 전에 열거했던 모든 선출직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녕 우리 도백이신 지사님께서는 춘천에 계신다는 이유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강원도의 굵직굵직한 정책 중에 양양공항 등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색삭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수산업, 레고랜드,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고속철도,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일으켜서 도민들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하려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한 방에 훅 가는 것 보셨잖아요?

이번 총선 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한방에 가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원전건설과 관련해서 지역민이 반대해서 국가에서 수용한 사례를 국내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원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 좀 하시고…….
두 번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우리나라 원전 제1호기인 고리원전 상용화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부산시장이 앞에 나서서 사회단체와 환경단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똘똘 뭉쳐서 2017년도부터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건 부산시장이 제일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지금 계속 뒷짐만 지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내년에 안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후년에 빼는 겁니까?
그것은 지사님이 혼자서 가정하시는 것이고, 7차 전력수급, 이번에 단지 연기된 것은 아시잖아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내년에 하시는 것은 아십니까?
2018년도입니다.
지사님은 원전에 대해서-이건 죄송스럽지만 숫자에 불과한데-전체 내용과 흐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중요치 않기 때문에, 혹시 제가 숫자를 가지고 지사님을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면 도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 원전에 대한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지사님이 앞장서서 20대 총선에 당선된 분들과 함께 한목소리를 내서 원전 반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삼척에 원전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1981년도는 군사정권 시대였죠.
그때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되었다가 16년 동안 시민들이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1998년도에 지정·고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 저준위 방폐장, 아시죠?
저준위 방폐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나 반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게 경주로 갔지 않습니까?
국가의 온갖 사탕발림에,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준위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모든 문제점이 나와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삼척은 '82년도부터 세 번이나 원전을 막아 낸 저력이 있는 곳이고, 지사님이 앞장서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사님은 관심이 없으시니까 하는지도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삼척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촛불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미사도 드리고, 또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삼척시청 앞에서 1만여 명이 모여서 원전반대 시위를 한 것 아시죠?
그때 시간이 있었으면 오셔서-같이 데모하라는 뜻이 아니라-주민의 뜻이 어떤지 봤어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료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82년도 원자력발전소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가 16년 동안 반대하고 투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걸 세웠어요.
그다음 자료, 이것은 그날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1만여 명이 왔었는데-다음으로 넘겨주세요.-여기는 바로 원전 예정지 바로 옆 인근에 있는 관광지입니다.
여기는 피서철에만 100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피서기간에 100억이 넘는 직간접 효과를 올리고 있고요.
하나 더 올려주시죠.
저기 보이는 언덕이 예정지인데 이것이 몇백년 동안 자연적으로 생긴 해변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진짜 가치이고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전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권혁열 의원님께서도 해안침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동해항 3단계에서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해안침식지역입니다.
동해항 3단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하면서 여기도 같이 보전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김연동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레일바이크 관광지, 바로 인근입니다.

이런 것이 원전이 들어와서 다 없어진다고 하면 강원도의 자산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원전 때문에, 또 핵 때문에, 좀 오래된 것이지만 2003년도의 부안사태 때는, 부안 아시잖아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안군수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거기가 방폐장으로 선정됐다고 아주 고맙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핫라인을 통해서 전화하고 그런 것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들도 원전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군수가,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수용성보다 국가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력으로 해서 그날 군수가 감금됐어요, 주민한테 폭행당해서.

주민들 부상자도 500명 생기고 이랬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민의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력은, 거침없는 행정력으로 하면 주민의 큰 저항을 받는다.

앞으로 삼척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지사님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사님이 좀 고생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것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삼척의 화력발전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겨서 국가기관에 전력을 공급한 삼척인데, 왜 저것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실 삼척이 국가정책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희생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어머니들이 교복을 빨아놓으면 분진 때문에, 석탄 가루가 날려서 걸어놓지 못할 정도로, 그때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덜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인근에 동양시멘트가 있어서, 지금은 시멘트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 돌가루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돌가루가 엄청 날려서요.

국가기간산업에 저희가 다 희생되어 온 겁니다.

지금 강원도가 전국에서 환경성 질환이 1위인 건 아시죠?

강원도에서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삼척입니다.

환경성 질환 1위가 삼척인 것은 오랫동안, 몇십년 동안 받아온 환경의 영향 때문입니다.

동해・삼척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 지금 동해도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시멘트공장, 분진, 석탄가루, 미세먼지, 그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이것이 삼척의 화력발전소를 복합화력발전소로 짓고 있는 거예요.
삼척에 LNG 생산기지가 들어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데, 저것이 1·2호기인데 2,000MW예요.
엄청난 겁니다.
저희들은 국가정책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전만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000MW를 여기 강원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수도권으로 송출되지 않습니까?
저것뿐만 아니라 송전탑, 거미줄처럼 얽혀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 희생을 다 감내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삼척이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삼척시민들은 풀 한포기, 흙 한 삽, 돌 하나도 원전을 위해서 헛되이 쓰여지는 것을 못 보겠다는 뜻입니다.
지사님, 지금 제가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지사님께서 오랫동안 서 계셨기 때문에 5분 정도 앉으셨다가 동영상 관람하시고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죠.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계속 앉아계시지 말고 이제 나오십시오.
동영상을 보신 소감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내용 중에 안전한 원전은 없다, 그다음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전을 들여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거죠?
그러면 원전문제는 이렇게 지사님하고 저하고의 약속이고, 도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도립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립대학교가 지난번 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라비아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E등급이잖아요.
강원대학교는 D등급 받았어요.

도립대학교가 강원대학교를 앞설 수 없다고 해서 E등급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이런 것이 우리 강원도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지사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장 임명이 늦어져서 그 기간 동안 도립대학교는 곪아서 썩어가고 있는데, 선장이 제대로 없어서 배는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도립대학교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송승철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시점에 도립대학교의 숙원사업인 실습선을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34년 된 오래된 배를 다시, 부경대학교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실습선으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노력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제점을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던 경양호는 303t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온 탐양호는 653t, 크기로 보면 두 배 정도 되는 것이죠.

탐양호가 오기 전 부경대학교에서는 승선인원이 18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립대학교로 오면서 도립대학교의 승선인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303t급의 경양호 승무원들이 그대로 승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실습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년에 60일 동안 연근해에 나가서 실습하고 그다음에 120일 동안 정박해서 하는데 한 번 나갈 때 15일씩 해서 네 번에 60일 나갑니다.

그런데 60일 동안 승무원들이 교대로 하면서 운항을 해야 되는데 승무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원래 3교대로 해야 됩니다.

3교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적다 보니까 12시간씩 근무하는 맞교대를 하는 거예요, 2교대.

많은 학생들이 타고 교수들도 타고 그러는데 세월호처럼 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승무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배가 들어오고 행사를 하면서-부지사님이 오셨었는데-직원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약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조건도, 근로기준법에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모자

라다고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또 앞으로도 운항하면서 위험스러운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사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2. 질문부제 : 탐양호 실습선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근무현황 파악을 통한 증원 검토

탐양호 실습선의 자세한 근무현황을 파악해서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인사문제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오랫동안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했습니다.
지사님은 삼선에 도전하십니까?
대권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확답하기 무엇하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인사는 지사님의 사람을 찾다 보니까, 도립대학교총장도 그렇고 여성수련원장, 말 못할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서 지사님이 좀 폭넓게, 지사님은 유력한 회사의 대표이사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도지사를 두 번이나 하셨고, 무슨 큰 욕심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오직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지사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소득 2배, 행복 2배인데 솔직히 수학으로 하면 거기에다 루트를 씌워야 합니다.
지금 도민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누리과정 이런 것도 도민들이 진짜, 우리가 도민의 마음을 보듬어줘야 하는데 그 아픈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염장질을 하는 거예요.
지사님이 남은 2년 동안, 재선하셨으니까 더 이상의 그런 것은 지사님의 뜻이지만 오직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또 인사정책도, 인근의 경기도 남경필 지사처럼 좀 협치하고, 그분은 사회통합부지사를 정당이 다른 당인데 추천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협치가 아닙니까?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2년 동안 그렇게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폐광지역, 제가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지금 이 폐광이 제2차 석탄합리화사업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많이 언급해서 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사실 폐특법이 제정됐으면서 20년 동안 해 온 것이, 우리 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1988년도에 4개 폐광지역 인구가 44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1995년도에는 26만 명, 급격하게 떨어져요.
작년인 2015년도에는 20만 명까지 무너졌습니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사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짧은 시간이지만 나오시죠.
저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면 했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은 정치인이 아니지만 선출직입니다.
저 역시 선출직이고 도지사 역시 선출직인데, 우리 선출직의 기본소명은 도민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리예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누리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세금을 누가 냅니까?
도민이 낸 것이지 않습니까?
도민이 자기가 낸 세금에, 자기가 낸 예산 때문에 마음 아파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단어를 짧게 해서 소통하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고터’라고 하면 고속버스터미널, ‘불금’ 이러면 불타는 금요일 이렇지 않습니까?
젊은 층에게 물어보니까 교육감님을 ‘민새’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주 예쁜 이름인데?
민병희앵무새라고 합니다.
그것을 줄여서 ‘민새’라고 합니다.
이름은 예쁜데 교육감께서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이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쓰신 것을 아시죠?

그분이 도중에 '비록 녹봉을 받기 위해서 공직에 나설지라도 마땅히 청렴해야 되고', 그런데 교육감님은 청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공무를 받들어 수행하고 그 직무를 다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출직인 저와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한번 자성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민새라는 말이 진짜 어울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6.15)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최성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6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가족분들께도 모든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사죄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4월 22일에 원주의 시민대표분들께서 의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출입이 통제되어 불편함과 분노감을 만들어 드린 점에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과 사죄의 인사를 올립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의정활동보다 먼저 주민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감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강원도의 교육행정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 주시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원주지역의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현안문제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학성초교 이전, 문막고 교육환경 개선, 혁신도시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문제, 시내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포화 상태에 의한 교육의 질 하향 문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먼저 교육감님의 생각과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 원주여고 부지 맞교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 명륜1동에 있는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 방안이 원주의 최대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구 원주여고 부지 현장을 직접 보고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구 원주여고 상태입니다.
학교를 이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학교에 가 보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시설로써 운동장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건물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고 학교 상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말로 개판입니다.
이렇게 공유시설을 방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만들어 버린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대로 방치하고 계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중간에 운동장이라도 개방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사용하다가 처리를 하면 지역의 불편도 없었을 테고 지역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개방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원주시와 협력해서 제초작업과 방역을 실시하

였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 공유재산 매각 공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유찰됐습니다.
왜 유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질문부제 : 구 원주여고 부지 공유재산 매각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교육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공개매각을 올렸습니다만 계속 유찰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인은 원주시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반 다른 매입자들이 선뜻 거기에 응할 수가 없어서 응하지 않고, 공유재산 교환 관련해서 원주시와 합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육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주와 도에서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만약에 공고를 내서 중간에 매각이 되었다면 명륜1동 주민들과 원주권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각 공고를 중간에 멈추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종축장 부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2015년 4월 23일 언론을 통해 원주시에서는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 일부를 맞교환하여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에 교육청과 원주시에서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요?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난 2015년 11월 23일 원창묵 원주시장님을 만나셔서 부지 맞교환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셨습니다.
합의문 작성 전에 원주시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거부하셨다가 나중에는 협의하신 건가요?
다음 질문입니다.
2번 항을 보시면 '원주시장은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의 맞교환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동의를 구한다.'고 되어 있고, 3번 항을 보시면 '강원도교육감은 위 2의 동의가 되면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가 맞교환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문 내용대로라면 원주시장님과 도지사님이 교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맞교환에 대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합의문 내용을 지키지 않으셨지만 지난 4월 제255회 임시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원주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합의가 되었고 구 원주여고 부지가 청소년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에 공감해서, 어차피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도와 협의해서 같이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합의문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과 원주시장은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을 위해 교육부의 승인을 구하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노력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시장님께서 직접 교육부를 상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주시장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교육감님께서는 부담이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행정적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향후 계획과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번 항을 보면 원주시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2015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교육경비를 줄여서 구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을 알고 계시죠?
이 문제로 원주지역의 교육 관계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등 많은 분들께서 분개를 해서 많이 시끄러웠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점도 알고 계시죠?
사진을 보여 주세요.
그때 그 문제로 집회를 했던 사진입니다.

계속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교육경비 예산이 줄어들까봐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원주지역의 교육 관계자분들은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교육지원청은 1978년도에 건립되어 38년이 된 건물로 향후 5년이 지나면 내구연수를 다 채우게 되는 건물입니다.
5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청사 부지 면적이 현재 7,609㎡이기에 법적 허용면적인 1만 8,907㎡의 40%밖에 안 되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건물의 연면적 또한 매우 부족하며, 121명의 직원들은 업무의 불편과 민원인의 편의시설 및 회의실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과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의 신설·부족 문제 중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 지역적으로 보셨을 때?
원주교육지원청보다는 학교의 신설이 우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급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도시 내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부지 맞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지 맞교환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운하시겠지만- 교육감님께서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도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주시에서 부지 맞교환 제의가 들어왔는데 수용을 안 하면 원주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고 표심에 문제가 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대응하고 안건이 부결되면 도의회가 욕을 먹고 그렇게 진행되리라 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유재산 맞교환에 대해서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전례가 되면 이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따른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고성군의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문제로 도교육청 소유 부지와 군유지의 교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도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으로 돌변을 하였습니다.
항간에는 원주여고 부지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다면 시장님과 합의하시기 전에 지사님과 같이 만나서 협의하는 쪽으로 건의해 주셨다면 뒤에 일어나는 시끄러운 일은 아마도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감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는 강원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일부의견입니다.- 학교로의 재사용이라든지 아파트 신축, 공원 조성, 공유지 매각 등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중에서 어떤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주시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니까 부지 맞교환 부결 사유에 대한 해결 방안과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원주권 현안문제인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 방안,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문제, 원주권 교육환경개선 문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포화상태에 따른 확실한 대책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빠른 해결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이주익 국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원주의 복합문화센터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추진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 4번을 보여 주세요.

구 원주여고 부지의 문화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 원주시에서 도에 제출되었나요?
2015년 12월 31일요?
연구용역 결과 도출 후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법을 협의하기로 했다는데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처음부터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용역사에 알려주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부탁한 것인데 도에서는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 방안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셨습니까?
2015년 4월 23일에 원주시에서는 부지 맞교환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전에 원주시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없었습니까?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계셨나요?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 2일에 원주시에서 부지 맞교환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언론에 공개되고 8개월 뒤인 12월에 원주시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후 8개월 동안 원주시에서는 도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것이고 공개된 것을 알고 있는 도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주시와 도의 8개월 공백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도에서는 원주의 상황이 무섭게 돌아가니까 2016년 1월이 되어서야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1월 13일 강원도 공유재산 심의 회의를 하고 3월 10일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 상정을 하지만 심의 삭제가 됩니다.
이 진행 상황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과는 반대로 도지사님께는 질문 없이 편안하게 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답변석에서 가장 짧은 답변을 하시고 편하게 내려가셨던 것으로 기억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조금 힘드시더라도 최 씨의 깨끗한 자존심을 걸고 숨김없이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질문 중에 교육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드렸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원주시민들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을 잘 구분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원주를 찾아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구 원주여고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기본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공약을 발표하신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께서는 지사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선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공약을 발표하시게 된 배경을 사실대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를 도청 직원분들이나 선거 때 참모진분들과 의견을 나누신 적은 없으신 거죠?
추진현황을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의 선심성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3월에 본 의원이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진행상황을 알아봤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고 5월 말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6월 초에 다시 확인해 보니 아직도 안 나왔다고 하고, 그 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원주시에서 용역 발주를 했고 이를 받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도에서 용역의뢰를 했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번 확인해 보니까 그제야 원주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용역 관련자에게 확인해 봤는데 더 황당한 것은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복합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방향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답을 주고 풀어 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용역의뢰를 수행하는 담당자도 조금 황당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많이 어려웠다는 말도 했습니다.
답답한 것은 정확한 내막도 모르고 도의 직원들은 원주시만 바라보고 있었고 공약을 발표하신 분은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구심은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23일에 원주시에서는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 일부를 맞교환해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시와 도에서는 사전에 부지 맞교환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언론보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23일 부지 맞교환 문제를 가지고 원주의 원창묵 시장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이 서로 합의문을 작성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종축장 부지의 소유 관리자인 도지사님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육감님과 원주시장님과의 합의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합의문 중 2번을 보면 '원주시장은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의 맞교환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문 작성 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원주시장님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으시죠, 그 이후에도?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셨나요?
4월 22일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심의 삭제된 이유를 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 중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2. 질문부제 :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연계 추진
단순히 구 원주여고를 재활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 지역 상권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권을 되살리는 것도 같이 요구하는 상황임.
그래서 도에서는 부담을 갖고 지역 상권이 같이 살아나는 좋은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음.

부지 맞교환에 대한 추진과정과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공약 발표 당시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실 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전혀 예측을 못 하셨던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모른척하고 계셨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원주지역 외 타 시·군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들을 깊이 고민하셔서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원주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원주시장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그 후에 만나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장님은 이 문제로 몇 번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만나서 협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현안문제인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와 시의 관련 담당자분들만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이고 선거공약을 하신 두 분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왜 원주시장님과 만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못 만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의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결정권자인 두 분이 만나서 협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걱정스러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 소속의 강원도 지사님과 시장님이신데, 어찌 보면 큰집 형님과 작은집 동생입니다.
어째서 형제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공유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은 백만 불짜리 미소와 스킨십으로 많은 도민들의 지지를 얻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면 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은 완전 불통이고 전혀 소통하시려고도 안 하셨습니다.
일단 무조건 무시하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의 시 단체장님과 같이 공약을 하시고도 전혀 소통을 안 하신다면 다른 당 소속의 시·군 단체장님들과의 소통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는 지사님의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분이라는 상상이나 할까?'라는 걱정스러운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더라도 지사님의 소통부재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들께서 지사님에 대해 생각하고 보는 것과 달리 '소통에 이렇게 많이 소홀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원주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후 지사님께서는 원치 않는 압박을 받게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없으시다가 4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전에 담당 직원들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회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 타 지역 도의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는데 지사님께서도 이를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고 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텐데 그대로 도의회에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부결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상정을 했을까요?
살인미소와 정이 넘치는 천만 불짜리 스킨십으로 강원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시는 분이라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좋지 않은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공약발표 후 2년 동안 부지 맞교환에 대해서 지사님과 원주시장님 두 분만이 됐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든 의견을 나누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 별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공약은 그저 공약일 뿐, 선거에서 이기는 수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한 원주지역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본 의원도 2015년 3월과 2016년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드렸는데도 별다른 관심 없이 발언과 제안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께서 현수막을 걸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들이 수차례 5분 자유발언을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그냥 맹목적 지시만 내려서 계획안을 만들려고 하신다면 올바른 계획이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원들과 상의 없이 부실한 계획이라도 일단 공약을 발표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계획안을 만들어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힘없는 직원분들 마음에 없는 일시키지 말고 생고생도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이 끝난 직후에는 제 손을 잡고 좋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잘 해결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역 의원들을 찾으시거나 찾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공약을 내세우고 일단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는 어려움이 있으니 대충 시기만 어떻게 넘기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지사님, 35만 원주시민이 그렇게 어리숙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과 원주지역 도의원님들이 드리는 제안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다는 그런 보잘것없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종축장 부지 드라마 세트장 건립 문제로 인해 지사님과 원주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진 모 식당에서 본 의원이 구 원주여고 부지 복합문화센터 설립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주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현재 인터넷으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려다가 못 하셨습니다.
지방선거 때 제가 지사님께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준다는 공약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선이 됐으니까 별 관심이 없다가 지역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 그제야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고 대충 계획을 세워서 도의회에 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일단 도의회에 상정을 하면 원주시민들로부터 욕을 안 먹고 피해갈 수 있고 만약 부결이 되더라도 도의원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상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사님, 원주지역에서는 부지 맞교환에 대한 사항이 부결된 이후에 엄청난 갈등 속에 비난의 여론도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모아 부결시켰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부결 결과를 정치적 의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6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몇 장 있으니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선거 당선을 위해서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공약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이행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다면 선거가 끝나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원주시와의 협의도 추진해 보면서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원주시장님의 부지 맞교환 제의를 모른 체한다면 원주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고 선거 때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일단 수용하여 부실한 계획이라도 도에 상정하면 욕을 안 먹을 테고 상정안이 어떠하든 부결이 되면 도의원들만 욕을 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관해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공약사항과 다르게 갑자기 장소가 변경되어 종축장 부지에 사극드

라마 촬영장을 만든다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계획으로 원주시민들을 현혹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기획사 사장이 드라마 제작으로는 돈을 못 버니 부동산으로 돈 좀 벌게 해 달라는 말을 우리 도의원들에게 전달해 왔는데도 지사님과 원주시장님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며 그분들을 보호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라마 세트장 건립 방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주지도 못하셨습니다.

계획부터 부실한 것을 가지고 왜 번번이 원주시민들을 현혹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된 강원도'의 뜻이 무엇이고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 문제 말고요, 지사님께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들어가는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된 강원도'를 외치시는 분께서 어째서 매번 유독 원주시민들께만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인지, 지역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를 봐서 그제야 움직이는 것을 어찌 봐야 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이끌어내시어 사전에 갈등의 소지를 끊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 원주여고 부지 맞교환 건은 안 자체가 심의 삭제되었습니다.

그 후 28일에 도청의 모 비서관과 서기관께서 원주시를 방문하여 구 원주여고 부지 고지대는 행복주택을, 저지대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제안하셨습니다.

1차 방문 시 원주시에서는 반대를 하였는데 5월 24일 2차로 맹성규 부지사님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LH에서 제안한 행복주택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난 1월 25일 춘천에서 효도아파트 신축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행사 자리에 참석하시어 당시 LH공사 이재영 사장님께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LH공사에 행복주택 건립을 건의하신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공약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지역시민들에게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형식만 취하고 계셨던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뒤에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9일 지사님과 원주권 의원 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조금 다른 차원의 센터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시고서는 뒤에서는 직원들을 보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간담회 자리에서 문화·예술인들은 거지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주권 문화·예술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들의 현재 마음을 전달해드린 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은 거지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는…….
2014년 말경 본회의 정회시간에 당시 모 의원에게 “의원이 벼슬입니까?”라고 하신 기억도 있고 만취상태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도정질문 자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지는 초유의 사건을 연출하셔서 국내 스타가 되신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단어도 쓰셨습니다.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너무 부적절하고 도를 넘는 막장행태와 막말을 서슴없이 해 오고 계셨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고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되돌아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뒤의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술을 너무 좋아하시지만 강원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건강을 잘 챙기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책임감 있고 확실한 대답과 계획을 이 자리에서 35만 원주시민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소통의 문제를 한번 짚어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원주권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싶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밖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책임이 부실하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본 의원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제1도시 35만 원주시민들께서도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질문에서 정도가 심한 말이 있었다면 답답한 심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1분만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된 강원도’를 외치시는 최문순 지사님,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이 시간을 빌려 도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자 한다면 정치적 욕심은 버리시고 교육에 대한 책임감, 교육정책에 대한 성실성, 도민들을 위한 올바른 진실성으로 도민 모두를 위한 참다운 교육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조의 수장, 정치인의 교육감, 진보성 교육감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실천하는 진실하고 현명한 교육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0만 도민을 한 마음으로 결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50만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이 앞에 보이는 나만의 길을 찾아간다면 어느 누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백만 불짜리의 미소, 정다움이 느껴지는 스킨십이 정치적 목적의 가식적 행동이었다면 150만 도민의 선택은 실망과 좌절로,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버릴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모두와 진솔한 자세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눈다면 하나 된 강원도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 속에 모두가 활짝 웃는 그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듣고, 의견을 나누며 성실한 자세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다시금 새겨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6.15)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남평우 의원 [새누리당, 인제군 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 출신 새누리당 남평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제군을 비롯해서 도내 시·군 지역에 강한 비가 오면 고랭지 농경지로부터 흙탕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왜 발생하는지 발생원인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흙탕물 발생원인 자체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다분히 인재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과도한 농작업, 또 무분별한 산지훼손, 또 여러 가지 불법 토사채취 및 객토행위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인재다, 천재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흙탕물로 인한 하류지역의 피해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피해가 하류지역 수서생태계의 파괴 이런 부분, 또 하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상이나 정신적인 고통, 방금 말씀하신 관광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 또한 상수원 오염으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흙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해 왔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원인은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 것이죠?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죠?
국장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해 왔다, 하지만 하류지역의 피해주민들은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하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06년도에 소양호 흙탕물 대발생 해 가지고 그때 대책사업과 제도개선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서 2014년까지 4,450억이 투자되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물론 투자된 예산을 발표한 자료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도에서 발표하는 것,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 또 환경청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 사는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 반면 해결방법, 해결의지에 문제가 좀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상당한 예산과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노력에 좀 더 심각성과 필요성, 절박감을 느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흙탕물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꼭 가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해결방안부터 계획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하여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오전부터 하루 종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정 중에 동계올림픽, 또 동서고속화철도, 각종 현안 챙기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셨죠?
사실 화면이 흙탕물 심각성에 대한 자료로는 좀 부족해요, 제가 보아도.
심각한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흙탕물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데 지사님께서는 흙탕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흙탕물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장마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때만 흙탕물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봄부터 가을까지 연중, 예를 들어서 강한 호우가 발생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흙탕물이 발생되고 또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씩, 일주일씩까지도 발생해서 하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저희 지역구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인제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홍천, 양구, 인제, 또 평창, 강릉인가 이쪽에도, 강원도 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리고 2006년에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춘천시 인근 호수에도 몇 달씩 지속되면서 수도권 상수원에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사실 환경부에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2,000만 명 되는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오염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흙탕물 문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또 여름철, 봄철, 가을철 민박·펜션업계, 또 래프팅산업, 관광객 유입을 막는다든가,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이제는 주민들도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녹색국장님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흙탕물이 발생되면 대형 침사지를 이용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대형 구조물을 이용한 흙탕물 저감사업을 사실 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전문가들과 환경부, 또 도의 녹색수질 담당부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방식에 좀 어떠한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사님의 견해가 있

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눈개승마라는 산채작물 들어보셨죠?

지난해 평창의 산채연구소 개소식 때 지사님도 가셨고 저희 농수위원들도 갔었는데 눈개승마에 대해서 최근에 도 농업기술원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양구군 해안면에서 설명회, 그다음에 시식회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온 대형 구조물에 의해서 하던 것을 농작물로-흙탕물이 농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니까-해결하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이것을 안 했느냐.

농업 부분이 도로 얘기하면 농정국 소관이고 농업기술원 소관이다, 환경부 차원에서 사실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여겨왔는데 그러한 시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해서 전환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인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좀, 그래서 흙탕물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다 보니까 관련되는 부서가 너무 많다.

중앙에서는 환경부를 필두로 해서 농식품부, 국토부, 그다음에 산림청, 도에서는 농정국, 녹색국, 농업기술원, 산림부서, 또 지방산림청, 이런 곳이 다 어우러져서 같이 협업을 해야 최대의 효과를 내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면 아주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 효율성 때문에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업무가 많으시긴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 녹색국 수질보전과에서 주도하면 여러 가지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흙탕물을 유발하는 상류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사실 협조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제공을 하는 측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농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덜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류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흙탕물이 유발되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불법행위 같은 것이 계속 자행되고 무책임한, 듣기가 거북스럽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도덕적 해이다, 그래서 인근 유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나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인근 지자체장들을 설득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지사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질문부제 : 흙탕물 저감대책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장목전환 등 정책방향 변경 추진

이미 흙탕물이 발생한 후에 처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원인은 대개 고랭지채소라고 보며, 농약까지 같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커서 작목 전환하는 정책에 최대의 중점을 두고 있음.
다만 고랭지채소 재배농가의 협조를 해 주어야 되고 수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 정책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함.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접경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접경지역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현재의 현황, 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접경지역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공통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셨듯이 접경지역이 도내에서 가장 낙후되었다, 각종 규제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경제상황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규제타파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좀 편승을 해야 된다.

지금 접경지역의 최대 현안 중에는 규제타파 문제가 있고, 규제를 해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개발이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접경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다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흙탕물 주문에 이어서 접경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해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사실 접경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물론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접경지역의 향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지, 전망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접경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지만 국토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우선하지 못한다,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지원 규정이 없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예산투자가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개정해서 저희 접경지역에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법 제·개정이 이루어져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면, 지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여기의 주민 수가 약 16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는 군 장병 수는 1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화천군은 군 장병이 주민 수보다 많다.
이게 아마 접경지역의 특징, 그래서 접경지역은 사실 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앙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제일 중요시하듯이 강원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경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또 연초부터 남북관계 때문에 사실 군 장병의 외출·외박 등 여러 가지가 통제된 적도 여러 번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 지사님도 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대안을 보면 세금납부를 유예해 준다든가 소상공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고.

그래서 좀 더 정부에서, 이게 또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되풀이되니까 남북협력기금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표에서 본 것처럼 접경지역은 군인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경제구조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차원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면 국방부나 육군본부를 통해서 군인을 위한 복지가 많이 시행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에서 식당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마트도 운영하고 세탁소, 이발소, 모텔, 그다음에 최근에는 도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직접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를 또 제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군인들은 본인들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이 부분이 지역의 영세상권과 상충되는 게 문제죠.

군사지역은 예전에는 군인들 때문에 사실 먹고 살았거든요, 경기도 좋았고.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소비를 해결하다 보니까 지역상권이 상당히 축소·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예를 들어 탄광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물론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통일이 이루어진다든가 해서 군이 지역을 많이 떠

나게 되는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3분의 1만 주둔하고 나머지는 다 떠난다, 만약 10만 명이면 3만 명 정도만 남고 7만 명은 떠난다, 군에 예속된 경제문제에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

물론 당장 오지 않을 걱정을 사서 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과 대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 경제에 의존됐던 이러한 경제구조를, 사실 자립이라는 것은 어려운데 군인들에 의존된 경제를 자꾸 탈피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관광이든 농업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대안으로 이런 부분을 축소해 가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상태로 가면 주둔은 많이 하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질문부제 : 접경지역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규제완화 추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자립을 위해서 디엠제트 관광, 또 디엠제트 경제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고 봄.

즉, 민통선 5㎞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10㎞ 북상해야 됨.

국무총리께서 규제완화 토론회를 위해서 곧 오시는데 아주 강하게 그것을 요청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디엠제트 관광을 위해서 인제, 화천, 철원, 그다음에 고성, 양구 지역에 있는 전망대를 통제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열어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사실 접경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황폐화된 지역의 정서를 들어 보면-극히 일부분 주민의 얘기지만-군이 국민을 위해서 여기에 주둔하느냐, 군인을 위해서 주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전체 주민의 의사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장사가 안 되고 자체 소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정서가 민군의 상생이 아니라 갈등구조 상태다, 이게 더 지나치면 주둔하는 군이 주민들의 사기를 먹고 안보에 전념해야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호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안보를 지키는 군으로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육군본부, 또 도내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면서 이러한 의사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지역 정서를 모르면 무슨 일들에서,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저 군인복지에 의해서 군 장병과 군인 가족들이 편하면 된다 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지난해 6월에 장병 전용 복지시설을 100억 들여서 건립하려다가 지역정서가 안 좋고 또 저희 도의회 접경특위에서 육군본부도 방문해서 그것을 무산시킨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을 전달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무방비로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되어서, 아까 얘기한 접경지역에 많은 군 장병들이 주둔하고 매년 많은 수의 간부들이 전역해서 나오는데 이분들이 가능하면 지역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안정된 소득을 갖고 제대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인구 늘리기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하면 일자리를 갖고 또 정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각 지역에 재향군인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과 간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만 지원을 하면 별도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 없이, 하게 되면 건물 해야지 인원 충당해야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법과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군납, 이게 마지막입니다.
접경지역은 농업이 주업인데 농가들이 가격 문제 때문에 요즘 상당히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농사는 잘 지었는데 가격 때문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처의 일환으로 군납을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농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군 장병이 주둔하는 지역에 군납을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해결하게 되면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한자병기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자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쪽의 의견,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한자교육의 기본목적인 교과서의 한자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한자의 뜻과 개념을 바르게 익혀 우리말을 보다 정확하게 말하고 올바른 글쓰기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한자와 한글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한글은 음을 표기하는 데 탁월한 기능이 있고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데 뛰어난 기능이 있다. 한자의 어휘력이 높을수록 우리 낱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한글·한자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언어능력,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것은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이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요.-또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왜곡된 교육열로 인하여 사교육 의존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저도 반대하는 부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방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350여 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또 향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런 방향을 주장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 인성교육도 그렇고 또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받아들여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당장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한자교육 병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저는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이들한테 성적에 부담을 준다든가 또 다른 짐을 지운다기보다는 재미를 느껴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6.1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이문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3선거구 출신]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부지사님, 각 실·국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앉아 계신 강원도 춘천·원주 어린이집 원장님과 저의 지역구인 원주시 무실동·단계동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독도지킴이 김동수 회장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 673개 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270개 교로 강원도 전체 학교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학생이 3,000명 이하인 시·군 교육청도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1월에 조례를 제안했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입니다.
실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도의원님들이 전국소년체전 선수들 격려차 제주도를 갔을 때 국제학교와 도서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국제학교는 가지 못하고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학교 옆에 관사와 비슷한 집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사도 아닌데 학교 옆에 무엇 때문에 지었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그분이 답하기를 이 학교의 학생이 너무 줄어서 제주도에서는 마을에서 땅을 내놓고 도에서 집이나 공동주택을 짓도록 자금을 대주고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이전해 와서 학교도 살리고 농촌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제주도에 연락을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본 의원이 지난번에 받은 서면답변서의 추진실적을 검토해 봤는데 향후 계획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불참 시·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은 검토 후 시행할 게 아니라, 지금 지방을 살려야 국가도 발전하고 지방과 도시의 공존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지금 2개 시·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공문을 시행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아마 시·군의 실무담당자가 이와 같이 꼭 해야 되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주도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은 학교도 살리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와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금 수능평가에서도 제주도가 1위·2위를 해요.

저도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 도를 살리고 학교를 살린다는 것에 대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청회도 했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청회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한 만큼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 우선 2개 시·군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를 실시하려면 너무 재정적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패와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는 원하는 2개 시·군부터, 그다음에도 2개, 그다음에는 나아가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니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 앞으로 시·군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시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세한 것은 추후시간에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요, 실시해 주겠다는 의지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방금 말씀을 들으셨죠?

강원도는 타도와 달리 작은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작은 교육청도 많습니다.

제주도는 벌써 6년 전에 손을 댔는데,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손을 대야만 앞으로 농촌도 살리고 어촌도 살리고 광산지역도 살리고,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게 목적입니다.

농촌의 인구도 늘리고 학교의 학생 수도 늘려서 공존하면서 발전해 보자, 이제 교육청에만 맡겨서는 힘듭니다.

마을에서 동문회도 나오고 지역주민도 나오고 번영회도 같이 하고 기금도 마련하고, 거기에서 땅도 내놓고 텃밭도 내놓고 이렇게 하려는 사업이거든요.

지사님, 2개 시·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2017년도 사업으로 꼭 한번 시행해 주세요.

지사님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의원은 도의회 출입통제를 솔직히 시인하라, 거짓말이면 더 나쁘다”, “원주시민이 뿔났다, 시민 의식은 발전하는데 후퇴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됐습니다.

지사님, 어제도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원주시민이 굉장히 분노해 있어요.

성나 있다고 할까요,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모토, 불길의 화살에 대해 말씀드리면 4월 22일에 교육위원회가 열렸는데 원주에서 38명이 방청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은 방청석이 있어도 상임위원회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청할 수 없다고 했고, 제가 대표 3명~4명만 참석시켜 드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은 그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오면 본 안건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방청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표들도 방청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4월 22일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9시에 들어가서 12시 반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저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저에 대한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도지사님께서 시장님과 공약하신 내용을 성실히 시행해 달라는 하나의 표시다, 암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질문부제 : 원주종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조속한 건립을 위해 협의 조정하겠음

이문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도가 리더십을 확실하게 발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것으로 사료됨.

빠른 시간 내에 잘 조정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고맙습니다.

저희 원주시 도의원들은 원주시민들이 뽑아 줬고요,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지난번 5월 18일에 원주 도의원님들 여덟 분 하고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주시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주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원주시와 협의를 해서 꼭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사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다가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실 때 청사 이전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투융자심사는 교육부와 하는 것이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이 본 계획안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판매를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원주여고와 종축장부지를 교환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사실인데 그 계획서를 안 냈으니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원주시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일부러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거기까지 알겠느냐, 이 순간만 넘어가면 나중에 예산이 어려울 때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임 전가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이 점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도의회와 이것을 추진하는 많은 분들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타도와 달리 작은 학교도 많고 재정 여건이나 모든 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1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관련된 과에서 도청과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것, 재산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시·군 1개 학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나가

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갖고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주여고와 종축장부지 맞교환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학교를 3년간 방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난무해요.
어떻든 간에 관리의 소홀은 교육청에 있다, 교육감님께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리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교육감님, 그것은 다 알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매매 관계는 원주시와 이야기하시고, 저는 매매되기 전까지의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리가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소홀에 대한 책임을…….
거기 인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감님께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꼭 있어야 되는 게 빠졌어요.
그런데 불법행위다, 범법행위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교육부와 협의해야 되는 투융자심사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갖춰야 할 모든 계획들을 갖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았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초래됐으니 그것은 교육감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늦었지만 그것을 바랐고요, 다음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여 주세요
합의문 3번을 보면 “강원도교육감은 합의가 되면 구 원주여고와 종축장부지가 맞교환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합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맞교환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실하게 수행을 안 하지 않았느냐,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하여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양 기관이 서로 노력했어야 됐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교육감님께 드리고, 어쨌든 그 여파로 인해 원주여고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원주에 정착하고 있잖아요?

혁신도시 내에 14개 기관이 이전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학부모들이나 공무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요.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원래 혁신도시가 신설될 때 유치원 셋,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처음에 공립 기숙형학교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원주고등학교 이전이니 원주여고 이전이니,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했어야 됐는데 신설하지 않으신 관계로 치악고등학교나 북원여고의 학급만 증설하게 됐다, 처음 8학급으로 개교가 됐는데 지금 12학급·13학급으로, 강릉은 학급당 정원이 평균 31명인데 원주는 38명~39명선이에요.

신설했어야 될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결과로 원주교육의 질이 저하되었어요.

‘A’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A’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 1등급을 받아야 될 학생이 2등급으로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교육감님, 지금 학교가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의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이렇습니다.

저도 신설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의 아픔을 아셔서 신설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혁신도시에 중학교는 신설됐는데 남자 고등학교가 없어요.

원주지역으로 오는 14개 기관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야 원주발전의 기틀이 되는데 교육환경이 이러니까 기피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 봤고, 이전해 온 기관들의 공무원들이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점을 꼭 생각하셔서 원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예결위에서 편성됐는데 5월 20일에 의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면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해 주면 9개월치 126억 원의 예산을 세우신다는 뜻이셨고, 또 도의회 측에서는 그렇게 들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교육감님 생각이시죠?

제가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5월 23일에 예결위가 끝났어요.

끝나고 5월 24일에 도교육청에서 강원도의회 측에 한 번 제의를 해요.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채택한다면 9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 168억 예산을 세우겠다고 제의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맞다, 틀리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제의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산이 126억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아요.

편성을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9일 10시에 제256회 강원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첫째·둘째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정부는 현행같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인건비 상승,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 유동적인 재정사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별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책임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육료 지원을 위해 합의에 나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교육위원회에서 의장님하고 협의한 끝에 결국 교육감님의 의중을 엄청 많이 생각하고, 그래도 국가의 장래, 우리 어린이집을 생각해서 제안했던 거예요.

제안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5세 어린이들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부담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기에 강원도민 모두의 우려와 염원을 담아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재육성을 미래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과정을 강화해 오고 있고 어린이집 교육과정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대한민국의 교육의 질은 누리과정 교육의 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초·중등 교육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정치인이시기 전에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든 유치원 아이든 모든 어린이를 똑같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치원 어린이만 생각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법적인 논리나 책임문제를 모두 뒤로하고서 누리과정 3세~5세 어린이를 위해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력과 체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바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교실제를 채택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수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 N+1 학급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서열제다, 능력에 차별을 둔다 해서 수준별 이동을 거부하고 교과교실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추진력이 덜 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같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님의 의견은 저도 존중합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드리되 이제는 학교장의 의견도 존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평준화 세대가 벌써 4년이 지나가서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평준화 이후에 단위학급 집단의 학력 차가 20점~30점대에서 100점까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교육의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예요.

수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일선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학력 저하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제가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서열화 때문에…….
그럼 말씀해 보세요.
쉬는 시간을 더 주면 되잖아요.
9시까지 등교하는데 시간 더 주는 것, 그것은 시간하고 관계없는 거죠.
가만있어요.
교육감님, 됐습니다.
한정된 시간 때문에 앞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할 때 같이 얘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학생의 학교선택권, 초등학생은 중학교 가는 데 다섯 번의 기회를 줍니다. 자기가 희망을 할 수 있는 것.
왜 중학생은 고등학교 가는 데 희망을 안 줍니까?
제가 3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해 줘야 평준화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음 연도부터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계속하시겠습니까?
수능성적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는 제주도가 1위·2위 했다고 했는데 강원도는 15·16·17위예요.
학력차가 뚝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꼴찌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직에 있으면서 생활을 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발표했던 학업성취도평가, 누가 더 학습지진아가 많느냐 하는 것도 강원도가 제일 높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답변드릴 시간을 드릴게요, 이것만 마저 드리고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체력도 그래요.

그러면 동영상 한번 봐 주세요.
교육감님, 잘 들으셨죠?
여기서 제가 다른 건 다 놔두고 교육감님의 견해를 한 번만 여쭙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모든 것은 도민이 생각하고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질문…….
그것은 글쎄, 제가 나중에 또…….
교육감님의 그 생각도 도민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이제 도민들에게 맡기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가능하냐 안 하냐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학력관리라든지 체력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월성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교수학습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수업이 업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업무보다는 수업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업에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그 의지 때문에 일선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학력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고 그렇게 불편을 덜어주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음, 수업교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실을 쓱 한번 들여다보면 자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휴대폰 가지고 문자 보내고 게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습에 흥미를 잃고, 이것이 교실이 붕괴되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

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행복더하기학교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학교 경영을 소신껏 하지 못하도록 전교조와의 협약사항 등을 내세워서 학교장의 학교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그럼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따 따로 또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한번 제의해 보고 싶어요.
교육감님,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데 체험학습의 과정을 놀이·흥미 중심에서 이제는 인내·봉사·희생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질서를 지키면서 물품 사재기를 하지 않고 소방에 앞장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모습인데 중남미의 어떤 나라를 보면 무질서하고 약탈·방화·강탈이 이뤄지고 사재기를 하고,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진보다 더한 다른 혼란이 왔을 때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체험학습의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은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현지 일선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청소년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해 왔는데 그 선생님들에게 고생한다고 점수를 줬어요.
거기의 폐단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꼭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체험학습의 방향을 바꾸는 데 이 청소년단체를 활용하셨으면, 점수를 줘라,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조금 전에 학교장 자율권 얘기하면서 전교조, 특정단체 선생님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일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장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장의 학교 경영 자율권이 너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권한이 없대요.

보직교사 임용, 담임 배정, 교과담임 배정, 각종 교내 행사, 모든 결정의 권한은 교사에게 넘어갔고 교무회의에서 해결되며 학생들을 위한 학교 경영보다는, 그러니까 교직단체, 집단, 이기주의인 그 단체가 추구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피해 가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특정 교직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학교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교육감님한테나 누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4139호, 2016년 5월 24일 자 공문입니다.

제목은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2016년 제1차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알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2016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이것은 2016년 5월 18일에 개최한 것을 알리는 것인데-개최결과 합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 판결에서 법외노조로 판결됐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글쎄, 교육감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래요, 아니라고 하시는 의견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교조하고 특정 교직단체하고 강원도교육청 간에 그전에 합의된 협약사항이 있잖아요?

교육감님, 이 생각은 어떠세요?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조 지위를 상실한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이에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법적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노사합의든 협약이든 맺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실하게 지키는 약속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법외노조인 전교조 합의사항이, 아니, 도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교육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고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한 근거…….

제가 이것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읽을 사항이 아닌데.

자, 그러면 그것까지 답변하신 것으로만 보고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협약사항은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은 앞으로 강원도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진행에 저의 불찰도 있었습니다만,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 할 때는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6.1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함종국 의원 [새누리당, 횡성군 제2선거구 출신]

안녕하십니까?

한우, 찐빵, 더덕의 고장, 횡성 출신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평소 가진 지식과 식견이 많이 부족함에도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제9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을 대과 없이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하고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강원도 발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달려왔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민의의 대표자로서 본직에 성실하고자 하는 충심만 앞섰을 뿐 도정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도민의 뜻을 온전하게 받들어 왔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봅니다.

그만큼 도민들께서 위정자에게 주시는 책무는 엄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위한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일 것입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방법의 차이가 간혹 오해를 낳기도 하고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의 아쉬움들이 훗날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를 사랑하며 영광된 강원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 있는 강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

도정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여전히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 현황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교육감님께 질문이 없는 점 서운하지 않으시죠?

지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의 모 경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강원도 무역수지는 지난해 마이너스로 1조 2,710억 원인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전국 9개 도에서 꼴찌, 청년실업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역대 최악의 경제지표로 평가된 연구소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사님, 이 연구소 발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임기 4년 내에 매년 5% 이상의 성장률로 도민 소득을 2배로 늘리고 행복도 2배로 늘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가 지사님께서 세우신 도정목표인데 지난 재임 6여 년 동안 도정목표를 향한 최문순 호가 과연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본 의원은 도민의 소득 2배를 늘린다는 목표가 지역경제지표는 바닥인데 과연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표로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며, 최문순 도정의 비전이 실질적인 지표로서 미흡하고 모호한 방향성으로 인해 결국 도민들께 이상적인 꿈만 꾸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국내외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점점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0대 성과를 이야기하지만 도민들에게는 현실성 없는 성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현 시점에서 도민 소득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가 과연 실질적으로 도민들 피부에 와 닿는 지표라고 생각하는지, 도민 행복 2배가 복지예산 33%만 채우고 몇 가지 복지사업만 하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도정목표는 강원도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보고 도민들은 앞으로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기대감이 그저 구호로 그치거나 실현될 수 없는 이상으로 남게 된다면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목표를 설정하시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민선 6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을 하셨죠?

지난 2년 동안 불철주야 숨 가쁘게 달려온 해라고 자평하셨는데 열심히 국내, 국외를 뛰어다니신 것은 인정하고 지사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노력하신 것에 비해 10대 성과의 면면을 살펴보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대 성과에 대한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발표하신 도정 10대 성과입니다.

잘 보셨죠?

또 발표도 하셨으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 보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아직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문화올림픽을 위한 재원 확보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죠?

G-2 행사 또는 올림픽 홍보 등에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투여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양공항 활성화, 크루즈 개설 등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모두 올 스톱될 한시적인 성과에 불과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별도로 질문하게 될 레고랜드 국비 6조 원대 확보, GTI박람회, 중국 및 일본 해외시장 개척 또한 실질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사님이 발표하신 도정 10대 성과가 과연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라고 자신하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10대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정 10대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비 6조 원대 확보와 개인소득 증가율 1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니 강원도민이라면 누구나 크게

고무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품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연속해서 6조 원대 국비가 우리 도에 풀렸다고 하는데 강원도민의 체감도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 개인소득 증가율이 전국 1위라고 발표하셨는데 지역경제지표는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소득 증가율이 전국 1위라면 도민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나아졌다는 것으로 지역경제지표 또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무역수지 최대 적자, 고용률 전국 최저, 청년실업률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소득 증가율 전국 1위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인소득 증가율이 전국 1위, 언뜻 듣기에는 좋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개인소득 증가율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1위라는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소득 증가율은 해당지역에서 생산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만을 나타낼 뿐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규모, 즉 1인당 분배소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소득 증가율 1위를 발표하시면서 우리 도의 1인당 개인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죠, 소득률 1위를 발표했지만 개인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개인소득 증가율 통계를 찾아보니 전국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자료가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개인소득 수준은 2012년 전국 최하위, 2013년 전국 최하위, 2014년에도 간신히 꼴찌를 면한 전국 15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소득 수준이 전국 최하위인데 그 소득수준에서 발생한 소득증가율이 전국 1위인 것이 도정 10대 성과로 자랑할 만한 것인지, 자랑하기에는 좀 궁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2013년도까지 강원도의 통상적인 국비 확보 규모가 4조 원대였습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3년간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사업과 SOC사업의 증가분 때문에 이렇게 국비 6조 원이 넘어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6조 원 중 올림픽과 관련된 SOC사업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올림픽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2013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부제 : 국비확보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올림픽 이후의 SOC 예산확보를 위해 전방위 추진
올해부터 6조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다만 지금부터 2018년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계신 동서고속화철도, 강원도 남부, 삼척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삼척에서 제진으로 가는 동해북부선, 제2경춘고속도로, 이 네 가지를 확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음.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6조 원대 국비 확보가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여 지사님의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림픽 이후 다시 국비 4조 원대로 회귀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기대감은 상실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성과가 마치 신기루나 허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올림픽 개최 이후 국비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가장 시급한 SOC사업이 지사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도의회와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대선공약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 1순위 공약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주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까지 동서고속화철도 발목을 잡은 것은 경제타당성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

았던 것 아닙니까?
지난 13일 지사께서 청와대 경제수석, 국회의장 등을 면담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일련의 뒤로 미뤄지고, 미뤄지고 했던 부분들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도민들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나고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도만의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조직의 부재, 전략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 도내에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아는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올림픽 이후 강원도에 필요한 도로, SOC사업이 똑같은 이유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논리에 대한 우리 도만의 논리를 발굴해야 하고 이것만이 국비 4조 원대의 회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 6기 강원도정의 성과 중 하나가 국비 6조 원대 확보인데 만약 올림픽 이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성과는 올림픽으로 인한 반짝 효과에 불과한 것이 되며 크게는 도민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레고랜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적정한 우선매수권, 관계공무원과 전직 특보, 전임 대표이사 비리·특혜 의혹,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한 2,000억의 채무보증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산재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을 본 의원은 레고랜드라는 도민의 관심에 고무된 지사께서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듭니다.

그렇지는 않으시죠?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레고랜드가 왜 지지부진하게 되었으며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당초 레고랜드가 몇 년도에 개장하려고 했습니까?

계획대로 개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거기에 전직 임원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전직 대표이사인 민 모 씨 선임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장을 잘못 뽑아 배가 방향을 잃고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지사님, 전임 대표이사를 어떻게 선임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대표이사 민 모 씨 선임의 최종 결정은 지사님이 하신 거죠?

이사회에서 하지만 지사님의 의중이 많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지사님의 의중이 담긴 선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번 대표이사를 또 바꾸셨죠?

그런 것으로 유추해 볼 때 민 모 씨의 대표이사 선임도 지사님께서 관여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실·국장이나 비서실장께서 이사로 참여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결국 민 모 씨의 선임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레고랜드가 세상에 비리의 온상, 의혹의 온상으로 도민들에게 비추어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레고랜드 부분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모든 것이 어긋나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한 탓에 전임 참모와 임원 등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고

레고랜드는 도민의 자긍심이 아닌 비리의 온상, 의혹의 대상으로 비추어진 것입니다.

지사님께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고랜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비록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점의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레고랜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사가 만사라는 데 동의하시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정명처럼 통용되는 상식이고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사를 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인사 전 실시하는 다면평가가 안면평가가 되고 여론재판으로 변질되었다는 무성한 소문이 있다, 업무추진 능력보다는 인기와 힘 있는 부서에 치중하고 간부들 간 보고서 쟁탈전이니 뭐니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반드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드렸었는데 지사님, 기억하시겠습니까?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인데 지사님, 현재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사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인사시스템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변 참모들이 전횡하는 모양새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질문과 질책을 받으셨습니다.

아직도 인사권을 내려놓으시겠다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7월에 도정 사상 최대의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인사권을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도정목표의 실현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인사를 진두지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이 아닌 자기사람 챙기기에만 열중하신다면 인사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이것이 지사님의 발목을 반드시 잡을 것입니다.

지사님 귀를 크게 여시고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말 많은 노력 끝에 2013년 2월 지정받아 2024년까지 13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5만 3,000명의 고용이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개 지구로 시작한 경제자유구역은 구정지구가 해제되고 불확실한 옥계지구를 제외하면 북평지구 축소, 망상지구만 남게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초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며 화려했던 청사진은 꿈도 꿔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사께서 얼마 전 도정 성과를 발표하면서 동서고속화철도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경제자유구역은 정책과 정책집행과정 모두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표현하기에는 표현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현재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현재 4개 지구 중 구정지구가 해제되고 북평지구는 축소되었으며 옥계·망상지구 또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당초 4개 지구에는 각각 개발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호 연계될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정지구 해제, 북평지구가 축소되는 순간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이미 도민에게 큰 기대에서 실망을 안겨줬던 사업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옥계지구를 도가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계지구는 산업단지로의 개발을 위해서 편입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투자자를 물색하려니까 산업단지의 부분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도가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던 것입니다.
맞죠?
직접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부분은 옥계지구에 포스코와 영풍이 개발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을 여기에 유치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가 직접 개발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계지구 부분은 사업추진의 방향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당초에는 옥계지구를 국내기업으로 하려다가 외투기업과 외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사님, 그거 모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투기업을 유치하면 외투기업법에 의해서 땅을 무상으로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먼젓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 외투기업 유치와 이 부분이 나온 얘기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지사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사님께서 모르셨습니까?
먼젓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외투기업유치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치를 하겠다고 공유재산심의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을 바꾸는 부분을 지사님께서 결정을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과 MOU 체결, 이런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한 후 상해련영과는 MOU를 체결했고 유젠그룹과는 MOU를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적을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유젠그룹과는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도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를 지사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사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5월에 중국의 유젠그룹과 지사와의 만남, MOU를 체결한다고 공유재산 심사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직까지 MOU는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당시 유젠그룹만 유치하면 개발부지의 절반을 사용하게 되어 옥계부지 활성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아직까지 MOU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 설명을 우리 의회가 믿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겠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의 직접 개발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MOU만 믿고 6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후 텅 빈 공간으로 남게 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와 도민 모두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지사께서 확신을 심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에 있어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절차상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최종 확정되는 사안인데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다시 재상정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의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집행부 행태에 아쉬움을 넘어서 불쾌감까지 느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집행부의 지난 3년간 노력보다 최근 몇 개월의 노력들이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아쉬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 아닙니까?

풍문에 의하면 구정지구가 해제되고 북평지구가 축소되면서 지사께서 크게 노하시고 관련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셨다던데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사께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판단하셨다는 것인데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한 총체적인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부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임.

그래서 그 인공호흡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뀔 때를 기다리고, 또 우리 조직도 지금까지는 투자유치 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 조직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서 조직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보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은 지사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신임 청장 선임에 있어서도 옥석을 고르듯 신중을 기해 주시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외부인사 영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현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현재의 강원도정 전반이 성과를 논할 정도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후회와 반성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후회·반성 뒤 이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저 자신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강원도 전체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6.1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신영재 의원 [새누리당, 홍천군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새누리당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선택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면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을 모시고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원주시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한 그간의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원주시 반곡동의 구 종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종축장 부지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공유재산은 서울과 18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4만 7,470필지에 5억 5,000여 ㎡로 약 1조 1,600여 억 원의 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야와 전답, 하천, 도로, 공원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원주시 반곡동 산16-11번지 등 29필지 9만 2,408㎡의 부지에 대해 우리 강원도의 부적절한 활용 계획으로 인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도교육청과 지역주민들 간의 불신과 반목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종축장 부지는 1932년 7월부터 강원도가 가축의 개량을 위해서 우수한 종축을 기르던 곳으로 춘천에 있던 강원도 종축장과 통합되어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가 개설되기 직전인 1995년 12월 말까지 운영되어 왔던 곳입니다.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의 설립과 함께 1996년 원주 종축장이 문을 닫고 유휴지가 된 구 종축장 부지의 당초 면적은 31만 4,026㎡였습니다.

이 중에 22만 1,618㎡는 1997년 말에 원주시가 강원도로부터 ㎡당 7만 6,000원씩 모두 168억 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및 IB그룹, 골프장 등에 재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우리 도 소유의 부지 9만 2,408㎡는 1997년 말 원주시에서 매각하고 남은 잔여 필지로 사실상 20여 년간 뾰족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구 종축장 부지는 9만 2,408㎡로 부지 내에는 원주소방서 부지 1만 6,000㎡,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6,370㎡,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있는 6만 265㎡가 되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 지난 2014년 강원도지사에 재선되시면서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을 통해서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드라마 제작사인 '뿌리 깊은 나무들'에서는 부지매수 신청을 하였고 도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통한 한류문화의 확산과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3만 1,598㎡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의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지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관광 명소로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매각이 아닌 임대를 통한 사업추진을 권고했고 이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부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11월 27일 드라마 세트장 사업의 재추진과 우리 도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이유와 빌미를

들어 면적을 축소한 8,926㎡를 다시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부결되자 도에서는 어떻게든 드라마 세트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아집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의 5,000㎡ 이하인 4,863㎡를 분할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력히 대응하였고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유상 임대를 통한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드라마 세트장 사업은 백지화되었고 구 종축장 부지의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 간의 원주여고 부지와 원주교육지원청 신축을 위한 부지 맞교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구 종축장 부지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3년 7월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폐교로 방치되어 주변 상경기가 위축되고 인구 감소 및 청소년 탈선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는 구 원주여고 부지에 원주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요구하였고 구 종축장 부지와 도교육청 소유의 구 원주여고 부지를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논란은 다시 재점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원주시장과 강원도교육감은 두 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며 도지사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여고 부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토지 3필지 1만 6,500㎡만큼을 분할해서 교환하고자 강원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을 뵈면서 가슴에 왜 배지를 착용하지 않으셨는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오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나가다가 올림픽 카운트다운이 603일 남은 것을 봤습니다.

지사님께서 배지를 착용하시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올림픽 홍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배지도 함께 착용하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교육감님께서 노란 배지를 착용하고 계십니다만 올림픽 홍보용 배지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지사님, 1년 6개월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동일한 부지에 대해서 세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고 또는 면적을 축소해서 매각하려고 하기까지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은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방대한 필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강원도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너른 부지,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 부지를 유휴지로 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진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 종축장 부지의 상황입니다.

저 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동안 활용 계획을 못 찾고 있는 곳입니다.

뒤의 사진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구 종축장 부지가 왜 중요한 땅인가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확대한 사진은 종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린 것이고 이 사진을 보시면 왜 이 종축장 부지에 관심을 갖고 강원도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좌측 상단 쪽에는 구 도심권과 신도시로 연결되는 시내와 밀집 주거지역이 있고요, 또한 종축장 부지에서 상단 우측으로 내려오는 곳은 혁신도시입니다.

말 많은 원주여고도 중축장 부지 위쪽으로 이전하였고 아래에는 공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축장 부지는 우리 강원도에서, 그리고 원주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사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셔서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백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드라마 세트장 때문에 그 지역주민 간의 반

목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드라마 세트장을 놓고 반곡동 인근 주민들과 소초면 지역의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조장됐습니다.
 기관과 주민이 아닌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 지사께서 종축장 부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이 생겼던 상황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지사님께도 그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굳이 '뿌리 깊은 나무들'에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의 감정가액과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 분명히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은 그렇게 매각하면 안 된다, 조각조각을 내 가지고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5,000㎡ 이하로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매각해야 되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회사에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사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재정 확충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정말 재정 확충을 하실 계획이라면 그렇게 팔면 안 되죠.
 그 재산은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적극 나서서 개발해서 추진한다면 지금의 감정가액보다 10배 이상의 재정 확충이 가능합니다.
 몇 평 팔아 가지고 우리 도에 재정적인 이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지사님의 그러한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사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인심 쓰듯이 뚝뚝 잘라서 내어 주다 보면 결국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지사님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목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

입니다.
드라마 세트장은 그렇게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 간 협약을 맺어서 원주시의 소유도 아닌 강원도 소유의 부지를 맞교환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원주시도 우리 강원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심으로 인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부지 교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까?
이제까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최소한 부지만큼은 각 해당 지자체에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제안할 당초에도 도지사님의 생각은 부지만큼은 원주시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니었습니까?
공유재산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향후에 이것이 선례가 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강원도에 여러 가지 요구를 제안할 때에는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전에도 질문 사항이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지 맞교환에 동의해 주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사님께서 선의의 뜻으로 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선의의 뜻보다는 공적인 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원주시에도 납득할 만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셔야 하고요, 강원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축장 부지를 가운데에 놓고 해결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만 나오면 종축장 부지를 놓고 해결하려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원주시와 반드시 협의해서 큰 그림을 그려 주세요.
아까 사진 자료도 보셨겠지만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강원도와 원주시 발전을 위한 방대한 그림을 그려서 남아있는 종축장

부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큰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부제 : 종축장부지 관련

답변요지 (도지사 최문순) : 도유지 관련 정책 종합 검토 추진

지금까지 도의 정책은 토지를 싸게 내놓아서 기업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정책인데 원주시 같은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미 이것은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의석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도 발송했었고 성명서까지 발표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석을 사수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 동안 지사님께서는 한 석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문재인 대표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사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예외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문재인 대표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지만 결국 문재인 대표의 손에 의해서 한 석 줄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동안 한 석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사님께서 다 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석 줄게 된 이 상황에서 앞으로 강원도정을 위해서 정책적인 협조자가 필요할 텐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강원도·국회의원 협의회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 물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제안을 하는 협의회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몫은 고스란히 강원도의 몫입니다.

협의회에서 협의하고 보고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그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협조가 약속이 되었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내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고 이제는 농업도 많이 변모가 되고 발전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양산인 것 같습니다, 전문화가 되고요.
그런데 도내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춰서 농촌 근로자의 인력도 상당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양구에서는 필리핀 딸락시에서 29명의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와서 임시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와 협조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문제는 근로자들의 이탈 문제, 그다음에 사용자와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가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계절마다 필요 인력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농가에서는 5개월 정도는 되어야 부족한 일손이 해결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계절근로자를 확대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시·군으로 확대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국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직접적인 협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종합적인 것만 서브해 주는 입장인데, 사실 시행하기 어려운 시·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방법적인 문제 등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일선 시·군에서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제가 담당직원과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회원등록제 형태로 인력을 확보하고 사용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 사설 인력사무소가 많이 있고 형태도 비슷하다고 보이지만 행정에서 개입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개소당 최대 2억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 관찰을 잘하셔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다른 지역의 사례에 대해 연수를 하셨다니까 우리 강원도 지역에도 잘 맞는 운영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님.
최근 일부 지역의 통장님들 해임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의 이·통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기준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이장과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것은 규칙에 담고 있죠?
시·군 조례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규칙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통장을 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임명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해임 기준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이·통장 임명과 해임에 관련된 안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내용 중 ‘단체행동의 금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소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소라는 것은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기소 내용만으로 해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불구속기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이·통장님들은 꼭 필요한 분들이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갈등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참에 이·통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녹색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무궁화가 나라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무궁화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무궁화가 나라꽃이긴 한데 아직 법적으로 무궁화가 나라꽃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도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묘목 식재라든가 이런 사업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도 무궁화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는 무궁화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다른 시도와 차별화·전략적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홍천군은 한서 선생께서 무궁화 보급사업을 하셨던 역사 깊은 곳이기도 하고 무궁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무궁화 중심도시로 지정받고 보조금도 많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궁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원도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궁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강원도나 해당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무궁화사업이 나라꽃 권위에 맞는 사업으로-강원도 전체적인 특화된 사업으로-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면 홍천군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원도에서도 무궁화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께 질문드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을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뵙는 분들마다 누리과정 예산을 왜 안 세우느냐는 질책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 요구에 상응하는 충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감님께서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구 원주여고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만들었던 단초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주교육지원청의 이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축장 부지의 무리한 교환요구는 잘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실 구 춘천여고 사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구 원주여고의 활용방안, 매각 등의 방식은 반드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관사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께 질문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1인 관사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여태껏 이런 부분이 관심의 중심에 오르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섬마을 여교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대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도 이러한 관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모 방송사에서 보도됐습니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겠습니다만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관사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문드릴 것은 사용되고 있지 않는 관사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사용되지 않은 관사 자료를 보면 30여 동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40동이 훨씬 넘습니다, 올해만 해도 사용되지 않은 관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소중한 재산인데도 쓰이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벽지는 분교로 남아 있는데 그나마도 점차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관사도 동떨어진 곳에 두는 것보다는 집단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그 학교 내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1인 관사는 여교사 혼자 쓰는 관사도 상당히 있고 남교사 혼자 쓰는 관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CCTV나 비상벨 등 설치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신다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교육감님께서 아파트 관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셨어요.

현재는 직원관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관사로 만들어 주셨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입장이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사, 원래 교육감님의 주택, 그리고 짓다가 직원용으로 변경한 세 가지를 혼재해 놓고 보면 누구라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은 교육감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직원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학교에 있는 관사를 포함해서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관사 등등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부제 : 교육감 관사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일반 직원관사로 운영하고 있음

처음에 있던 관사의 내용연수가 지났고 위험해서 헐고 새롭게 관사를 지으면서, 다른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강원도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교육감 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었는데 언론에서 관사를 지은 것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민병희 교육감이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쟁점이었던 것 같음.

그래서 임기 동안에는 안 산다고 발표하고 1급 관사가 아닌 일반 직원관사로 해서 여섯 분이 살고 있는 상태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강원도와 의회가 함께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6.1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출신)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의원 박윤미입니다.
저는 오늘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상속은 재산에 관한 물권이나 채권은 물론이고 채무까지도 물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상속개념은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직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행해지는 업무의 인수인계 절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업무의 인수인계를 마치게 되면 전임자가 이루어 놓은 화려한 실적은 물론이고 전임자가 야기한 부담까지도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임자가 전임자의 공을 누린다고 해서 비난할 것도 아니고 또 전임자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득권의 일부를 제한한다고 해서 반발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금의 강원도정을 돌아보면 공은 누리되 과오·과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개최지로 각종 국내외적 호응은 누리면서 알펜시아로 대변되는 재정건전화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화려한 MOU 체결은 난무하지만 그 실질적 성과는 찾기 힘듭니다.

국책사업은 성대하지만 자체 사업은 미미합니다.

심지어 반년이 지나도록 강원도 홈페이지에는 실·국별 시책이 아직도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바로 이 자리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와 중요성을 그렇게 부탁드리고 강조했는데도 대다수 실·국 홈페이지의 주요 시책은

정확히 1년 전인 2015년 10월에 딱 멈춰서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정의 기초 행정시스템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전형 등으로 대입 합격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2016년 수능결과를 보면 수학 A와 영어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고 또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적이 학교교육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육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잣대임은 분명한데 우리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9대 강원도의회의 전반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2년 후 또는 6년 후에 진정 어떠한 공과 과오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시려는지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이 언제 출범했죠?
그러면 실장님은 언제 부임하셨나요?
부임하신 지 반년 정도 되셨는데 도정 질문·답변은 처음이시죠?
제가 평소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최근 서울 구의역의 안전사고를 보면서 우리 강원도의 안전시스템은 어떤지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 봤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의 주요 시책 한 가지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2016년이 지금 반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게 되면 소관 업무에 대한 당해 연도 추진계획을 널리 알리고 또 설명하고 지지를 얻는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에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7개 분야에 대해서 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죠?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안전지수라는 것은 전년도의 안전 관련된 주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최고 1에서 최저 5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1·2등급은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3등급은 보통, 4·5등급은 취약 또는 위험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총 7개 분야 중에서 어느 것 하나 1·2등급의 안전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서 1·2등급의 안전등급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바로 우리 강원도뿐이더라고요.

사실 우리와 도세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충북이라든가 전북 등도 보면 안전등급이 몇 개씩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거의 다 취약 아니면 위험등급이에요.

특히 화재라든가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같은 것은 위험등급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라든가 교통 등 다 취약해요.

그런데 범죄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금 1등급이에요.

안전등급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의 안전실태가 이 정도이고 그리고 전담부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어떤 가시적인 대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추상적이고 거창한 그런 계획 말고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지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표가 잘못되었다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억울하거나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신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 몇 명이죠?

이분들의 신고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60%가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현재 강원도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총 2,689명이에요, 201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9개 도 단위 중에서 제주도, 전남에 이어서 끝에서 세 번째로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해 동안 신고한 건수를 보면 제주도에 이어서 아주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는 지금 지역안전지수에서 1·2등급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안전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신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취약지역이면 당연히 안전에 관련된 신고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7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1인당 평균 0.5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활동해서 겨우 1건 정도 신고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중앙 정부에서 구성을 하라고 하니까 구성해 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염려가 돼서 실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재난안전업무는 크게 나눠서 생활안전, 자연재해, 안전산업 등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면질문을 통해서 재난안전실의 업무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안전산업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 질문부제 : 안전산업 관련

답변요지 (재난안전실장 김학철) : 도의 주요사업으로 안전산업을 적극 추진

아마도 안전과 관련된 산업은 방재 쪽에, 강원도 전체적인 전략산업지도에 보면 방재산업이 있는데 그것이 안전산업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는 일부 학과나 일부 업체가 와 있는 정도이고 아직 미미한 상태임.

정부와 협조해서 우리 도의 주요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음.

지난해 3월에 정부의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안전시장은 2,530억 불 규모로 연평균 8%씩 성장을 하고 있고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안전산업시장은 35.6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내 관련 산업계는 규모가 영세하고 시장선도형이나 기술혁신형 기업이 부족해서 고기술 제품은 선진국이 차지하고 저기술 제품군은 중국이 국내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금년도에 안전산업 관련해서 71개의 R&D과제를 선정해서 총 6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혹시 실장님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에 대한 관리는 사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체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은 지역사회 주도로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

적이고 또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재난안전업무는 블루오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앞으로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면서요?
마지막 도정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난해 말에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을 마련해서 전국 각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안에 따르면 도내 통폐합 대상 학교는 몇 군데나 되죠?
반면에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매년 학급을 증설하기도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도내 학교의 증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89개 교, 거의 한 61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증축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석여중의 경우에는 2011년에 4실을 증축하고 바로 그 이듬해인 2012년에 1실을 또 증축했거든요.
그럴 것이면 처음부터 아예 5실로 증축할 수는 없었는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수요가 잘못 예측이 됐는지 아니면 설계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실질적으로 교실 증축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좀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죠.
제가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61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고성 도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에 2실을 증설하고 또 3년 뒤인 2014년에 4.5실을 또 증설했어요.
짧은 시간에 또다시 증설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매년 아이들이 그 학교로 전학을 오면 또 짓고 또 짓고…….
예측하기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실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계속되면 그것은-죄송한 표현이지만-무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급의 증설문제가 사실상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새롭게 불거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개선책조차 없이 계속 선례 행정만 반복적으로 답습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례 행정의 답습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77, 교육청에서는 지금 120억 규모의 학급 증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면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학급 증설에 관련된 각종 기준이 법규 때문인지 아니면 선례 답습인지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니까 제대로 된 현실성을 입혀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증축에 관련돼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관련 부서 간에 의견교환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서 저 부서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시설과라든가 행정과라든가.
그래서 부서 간의 소통을 어느 정도 해결한다면 학급 증설에 둘러싼 오해라든가 낭비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벽지 교직원 관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미 소는 잃었지만 또다시 소를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현재 도내 벽지 교직원을 위한 관사는 얼마나 되나요?
벽지 관사에서 홀로 생활하는 여성 교직원 수는 얼마나 돼요?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관사가 단독, 연립, 아파트 다 합쳐서 947개의 시설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홀로 벽지근무 여교사는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안전장치 설치현황은 굉장히 열악

하더라고요.
비상벨이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7억 3,000만 원은 어떻게, 추경이 마무리된…….
그동안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에서 섬마을 여교사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염려돼서 묻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쉬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확실한가요?
믿어도 되나요?
다행입니다.
지금 안전시설 방안 중에 CCTV 설치가 굉장히 유력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중에 회자되는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CCTV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공공안전의 이익이 더 크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여론이 몰아가고 있는데 사생활 보호도 되고 범죄예방의 이익도 면밀히 검토해서 양자 모두의 이익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누구든지 돌발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패닉상태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설보강 등 사전예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후 관리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벽지 발령 여교사들에 대한 현지 근무수칙이라든가 돌발 시 대처방법 등 어떤 사건의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교원이 아닌 일반 직원은 관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전에 교직원 관사를 해당 학교 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죠?

본 의원 생각에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관사에 대한 교직원의 수요가 감소돼서 일부 지역에는 관사가 남아도는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렇게 기능을 상실한 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방치된 관사를 처분해서 시설개선비용으로 충당할 수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각은 있겠지만 여전히 교직원을 바라보는 도민의 시각은 따듯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감사원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잘 알고 계시죠?
감사결과를 보면 시행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결정하므로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해당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주장하시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심을 청구하셨다고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전국 11개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우선 편성하라고 통보했는데 그러면 기대를 할 수가 없겠네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담당 실무자들은 본의 아니게 신분상 징계 등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장님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마련한 돈도 아니고 국가가 용도에 맞게 쓰라고 준 돈의 일부로 편성하는 것인데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에 따른 실무자들의 불이익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권력 또는 국가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행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만든 법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 작용이라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에서 보는 것처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해석을 둘러싸고 종종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디에서 합니까?

본 의원은 1차적인 유권해석기관은 해당부처이고요, 여기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차적인 유권해석기관은 해당부처, 즉 교육부에서 합니다.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의미와 내용은 사실상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어떤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법규의 규제를 받으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규제를 받는 법규는 중앙의 소관부처 장관이고 그 장관이 유권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님이나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 관련 법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확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나 강원도교육청은 정치적 결사체도 아니고 특정 부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지 지금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고쳐야 할 법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령 법규가 자신의 소신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고칠 때까지는 준수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일부 특정인이 아닌 국회라는 헌법기관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합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 질문부제 : 누리과정 관련

답변요지 (교육감 민병희) : 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됨. 강원도교육청이 그것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로고 봄.
그리고 그런 판단은 상식이며, 교육감이 초·중등 교육을 위해서 복무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상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됨.

집행기관이라고요,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감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등이 악법이어서 혹시나 저항권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진정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보십시오.

또 주변의 지인 중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분이 계신다면 헌법소원을 권유해 보십시오.

이것이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또 교육자의 도리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정을 논하고 도의원은 도정을 논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교육청은 도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정책을 집행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도의회가 국회 대신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교육청이 교육부 대신에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것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은 열악한 자치행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참된 교육자치를 실현하시겠다고 출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여건을 바꾸고 또 어떤 제도를 고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라도 정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으로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행태에 나서고 또 이익단체나 압력단체와 같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려 든다면 그것은 행정기관의 모순이자 교육으로 볼모가 된 우리 강원도민의 불행입니다.

진정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과감히 정치인의 길로 나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젠가 한 언론매체에서 서울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년 동안 총 7조 5,000억 원의 서울시 채무를 감소시켰고 2조 원의 서울시 복지예산을 증가시켰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제1의 업적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년 동안 7조 5,000억 원의 부채를 갚고 또 2조 원의 복지예산을 증가시키려면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채무상환에 편성해야 했고 이와 동시에 매년 5,000억 원의 복지예산을 늘려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세입규모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지역적 특성이 우리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빚을 갚았겠습니까?

서울시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7조 원입니다.

강원도는 5조 원입니다.

서울시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제한된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것은 서울시나 강원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갚아왔습니다.

예산규모만 가지고 단순히 비교한다면 강원도는 매년 4,000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갚아나가고 동시에 1,000억 원의 복지예산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물론 서울시장이 부채를 상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누려왔을 전임자의 공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직 4년 동안 전임 시장의 과오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부채를 상환해야겠다는 확고한 방침과 실천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 준 부시장과 실·국장의 역할이 부럽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업적을 널리 홍보하거나 정치적·이념적 곡선을 깔고자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강원도와 또 서울시를 수평 비교하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정의 운영방향과 실천의지, 그리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내 스포츠 관련 산업규모는 연 4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강원도 GRDP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강원도정에서 스포츠산업 관련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산업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몇 가지 흉내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산업? 인식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에게 듣기 좋은 보고거리만 찾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보조기관들의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판단이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릇되면 바로잡고 또 부족하면 메꿔주어야 할 분이 바로 행정·경제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 실·국장님들입니다.

행정·경제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 실·국장님들의 자리는 어떤 지시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남다른 지혜와 경륜을 갖추신 그런 분들입니다.

특히 현장 행정에 관해서는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을 능가하는 식견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조기관의 역할, 그것이 우리 강원도를 살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업무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6. 6.1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박길선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1선거구 출신]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하는 도시, 건강도시 원주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9대 상반기 말미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유재붕 총무행정관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간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현재 도청 어린이집에서 수용 가능한 원생은 몇 명이고 원생을 모집할 때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청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것을 보면 15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정원은 99명이고, 도청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큰 상황이면 당연히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관련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만요.

요즘은 과거와 달리 맞벌이부부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젊은 부부들의 육아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맞추어, 주변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매우 많은 상황이지만 최근

보육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등 잘못된 일들이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젊은 맞벌이부부들에게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아이를 가까운 거리에 둘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보육시설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또한 도청 어린이집은 단순히 직원복지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둔 직원들은 대부분 30대~40대로 강원도정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일 것이고 이 직원들이 육아문제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결국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확대를 위해서 여러 난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난제들을 감안하더라도 도청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육아문제로 걱정이 많은 도청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청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손자나 손녀가 있으십니까?

손자나 손녀가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고 귀하게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어린이는 소중하고 특별한 보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도청 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부디 강원도청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어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도 잘 보급이 되고 더 이상 아동학대를 받지 않는 어린이집, 또 부부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강원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이제 60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통해 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강원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도민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세계 여러 도시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올림픽 개최가 곧 그 지역의 이익창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한편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가 지역의 이익을 지속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콘텐츠 개발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이것을 대회가 끝난 후에도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사업들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가 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우려 속에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1. 질문부제 : 동계올림픽 예산확보 관련

답변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 예산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일단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분담은 중앙정부, 즉 문화관광체육부는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총괄 컨트롤하며, 개·폐회식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들은 동계조직위에서 분담을 하고 그밖에 지방적인 부분은 강원도 소관임.

다만 예산 부분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데 그래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음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강원도가 기재부 쪽과 한 번도 연결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많이 염려스러운데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하고 저희가 힘을 합쳐서 많은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해서 원만하게 예산이 풀릴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고,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각종 언론이나 문헌들을 보면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십조 원의 이익을 추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지역 언론의 노출을 통한 광고효과, 국민의 정서적 효과 등 강원도민이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중요한 사항일 수 있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이 직접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치밀하게 우리 강원도만의 고유하고 다양한 관광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를 강원도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중소기업자금 지원 관련해서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많은 금액이 적립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아, 2020년까지 목표가 2,000억이죠?

현재 이 기금을 활용해서 치중하고 계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목표하고 계신 금액이 적립된 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또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적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 기금 조성에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큰 금액의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사업들을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하루빨리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고민하시기 바라며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차고 내실 있는 기금 활용계획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에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자금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제공이 필요할 텐데 담보제공이 어려워 대출이 힘든 기업들에 대하여 대출의 활로를 열어주는 지원조례는 혹시 마련된 게 있습니까?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경우 기업들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에서 도에서 보조하는 금리를 제외한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데 간혹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도 지원을 받아 대출받는 금리와 지원 없이 순수하게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4%대 금리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똑같은 기업이라면 도 지원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금리가 3%~4% 차이가 나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장기적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1.25%로 내렸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기 어려운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과 대출상담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하고 은행들하고 어떤 금리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은행에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은행과 적극 협의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은행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도내 중소기업들이 도 지원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앞으로 도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혹여 목적에 어긋나게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주 혁신도시·기업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원주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이런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여러 기대효과 중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전 공공기관들의 인재채용률이 2014년도 7.3%, 2015년도 9.1% 정도로 타 지역 혁신도시와 비교해 볼 때 최하위 수준이라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적으로 전국혁신도시지자체협의회에서 지난주에 국회에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파하고 계시죠?

기업도시의 경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27개 기업의 입주가 결정됐고 총 7개 기업이 입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전기업들이 현재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 질문부제 : 기업도시의 인재채용 관련

답변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 상담초기부터 지역인재 채용 반영 추진

강원도에서는 입주기업들과 처음 입주상담을 할 때나, 이전지원금을 지원하거나 할 때, MOU를 체결할 때는 항상 지역인재 채용, 또 고용률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MOU 사항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쪽은 이전하는 본사 직원들이 오고 하드웨어 쪽만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일반기업들의 인재채용을 지자체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기업들이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받고 이주해 오는 만큼 반대급부적인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부분도 생각하고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일정비율 고용을 기업들과 협의하고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동시에 조성되고 있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조성 자체에서 끝나지 말고 지역인재 고용 등 파생효과들을 충분히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다음으로는 혁신도시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혁신도시 내에 학군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자녀문제, 대부분 보면 30대~40대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자녀교육인데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말부부가 되고 대부분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도록 국장님이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내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사오도록 권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는 강원도 학력수준 실태와 관련해서 최종국 교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금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 언론보도에 의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수능성적 분석 결과 강원도 학생들의 평균성적과 1등급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고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쳤으며 수학, 영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현재 학력상황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즘 시대에 공부를 잘하는 것 말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데에 있어 예체능 등 다른 분야의 소질을 함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 돌아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그 사람의 학력, 성적 등 표면적인 점수인 게 현실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저하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원인분석을 해 보셨죠?

선다형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많이 가는데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면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할 때도 대학성적만 가지고 취업하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 같은 경우, 또는 각종 공무원시험이라든가 어차피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면접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지만 1차적으로 거를 때, 작년에 원주에 이전한 기업에서 서른다섯 명을 채용하는데 몇 명이 몰렸느냐면 자그마치 20만 명 정도 몰렸습니다.

그런데 학력으로 1차적으로, 2배 정도 복수로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결국 거기에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까 제가 기업도시 말씀드리다가 취업관계를 여쭈어 봤는데 이 부분을 보면 외지의 대학생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현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어떠한 측면을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간과한다면 우리나라의 현 사회구조상 볼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많이 향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앞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강원도 학생들이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내 과밀학급 실태 관련해서 박병훈 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에 계신 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그간 강원교육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초등학교 교사 임용에서 우리 강원도가 현재 임용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79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아,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과밀학급이 강원도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심각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는 것은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원주권, 아까도 기업도시 내에 학교가 아직 신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학급당 수요가 많은데 조만간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강원도는 과밀학급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사 감축, 일부 학교에 대한 학생 편중현상이 지속되면 해당 문제가 양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원주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에 앞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될 텐데 이 구역에 학교 신설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도정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도민의 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9대 강원도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더욱 열과 성을 다해 후반기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6. 6.1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출신]

아까 박길선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인사하다가 마이크에 머리를 찧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박길선 의원님께서는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 저는 빛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3일이라는 장시간 동안 도정질문을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우리 부지사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민병희 교육감님과 총장님, 모든 간부 직원, 교육청 관련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또 2년 동안 전반기를 이끌어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 위원장님, 동료 모든 의원님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5년, 6년 동안 수없이 질문·답변을 해왔던, 강원도에서도 가장 큰 현안 사업, 수천억씩 연관된 도시가스 사업, 왜 우리 강원도민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가스 값을 주고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터널이 225개가 있는데 왜 멀쩡한 국도를 국지도로 변경해서, -국지도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 도로- 왜 민자 유치를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끔 만들었는가?

그냥 국비를 받아서 공사하면 됐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민자 유치를 해서, 965억을 투자하고 약 8,000억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업이 아니고 잘못된 사기극이 아닌가라고 과감하게 본 의원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6개 건설회사에서 컨소시엄으로 965억을 투자하고 2년 만에 먹튀를 했습니다.
2,450억에 팔아먹고 튀었습니다.
그럼 누가 샀느냐,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샀습니다.
누구의 주식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주입니다.
연금공단에서 매입을 했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흥청망청 사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영동지방,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미시령터널은 1년에 차량 통행량이 약 600만 대 정도 됩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끝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춘천시에 공사하고 있는 레고랜드는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 큰 틀에서 한번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표가 나왔는데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전국의 도시가스 시설 설치 요금 비교 현황입니다.
도매 요금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공급비용과 소비자 요금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급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고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종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어떻게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이 쓰는 도시가스의 1년 총매출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강원도 전체요.
한 2,500~2,6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2,822억입니다.

2,800억인데, 2015년도에 1.59%를 인상시켰어요.
1.59%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약 5.6% 정도 인상을 시켰어요.
저도 자료 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상률이 5.6%면 약 160억 차이가 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 차이가 납니다.
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이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심의를 하시나요?
본 의원도 2년 동안 심의 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그 자리에서 갖다 주고 보라고 그래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올해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비전문가라는 거죠.
심의 위원님들이 비전문가인데, 본 의원이 이것을 5년~6년을 파악해도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회계법인에서 하잖아요.
심의 위원들은 그냥 거수기예요, 거수기.
그냥 와서 점심 한 끼 먹고 수당 받아 가면 끝입니다.
무시해서가 아니고 못 합니다.
한 달 전에 갖다 주고 분석을 해 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5년~6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상식선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만약에 도시가스가 5%만 인상이 돼도 16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 차이가 생기는데, 만약에 도시가스를 떠나서 내가 개인사업자라면 심의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들한테 잘 좀 봐 달라고 항상 읍소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36년 만에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를 파헤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지금 약 30% 이상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도시가스에 관심을 갖고 나서 많이 인하가 됐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1. 질문부제 : 도시가스 관련

답변요지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 도민적 이해와 분위기 성숙을 통한 요금인하 추진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일곱 차례 도정질문, 스물네 차례 서면질문, 수시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셔서 일단 도시가스 인하에 대한 도민적 이해는 돼 있다고 판단되며,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지금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해서 그런 제도와 분위기를 잘 감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국장님, 100%에서 1.5%면 별거 아니에요.

요즘 하기 좋은 말로 “물가 인상률이 몇 %인데 그 정도도 안 해 줍니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1.5%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50억 돈입니다.

말 한마디에 50억 돈이 올라가 버립니다.

엄청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더 들여다보고 밝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난방, 등유값이 쌉니까, 도시가스값이 쌉니까?

다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강원도 평균.

등유가 더 싸죠.

도시가스값이 더 비싸요.

딜레마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알 권리를 분명히 알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도시가스값이 더 비싼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일부러 가스설비를 해서 가스를 사용하라고 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반 도민들은 몰라요.

지금 도시가스값이 무조건 싼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일부 지역은 등유값이 더 쌉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거의 비슷한데, LPG하고 LNG하고 열효율이 몇 %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약 30% 차이가 납니다.
단가로 볼 것이 아니고 열효율, 그러니까 LNG는 열효율이 엄청나게 센데 LPG는 약하다는 얘기죠.
물을 1시간 끓일 것을 이것은 1시간 30분을 끓인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싼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 의원이 비교분석표가 다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 알리라는 얘기죠.
수치와 데이터를 정확히 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민들한테 요즘 어느 지역은 얼마 정도, 지역별로 비교표 있죠?
그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바로 실천을 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 주실 거죠?
도매 요금 인하로 인해서 가스요금이 인하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1년 전인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강원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원주 시민단체에서 도시가스 요금 내리라고 집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 확인해 보세요.
그 당시에 원주가 원주 도시가스 요금을 35%인가 인하시켰습니다.
자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춘천에는 점잖은 분들이 사시니까, 시민단체가 조용하니까 25%밖에 안 내렸어요.
약 10%를 덜 내렸어요.
그런데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여기는 더 점잖은 분들이 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6.8%밖에 안 내려줬어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한 데이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목소리 큰 지역은 더 내려주고 조용히 있는 지역은 덜 내려주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꼼꼼히 따지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도시가스 너무 비싸다.”, “정말 잘못됐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지금 거의 6년 동안 본 의원이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어요.
이제는 끝낼 때가 됐잖아요.
전국의 가스요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소비자 요금도

공급비용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공급비용 자체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가스배관을 지금 강원도 고성까지 다 묻었죠?
 영월, 삼척 이쪽도 다 묻었죠?
 거의 다 됐죠?
 한국도시가스에서 시설을 해 주는 거죠?
 그럼 가스배관과 도매 가스요금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도시든 집 앞까지 무료로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주도나 서울, 경기, 삼척, 고성이나 가스 도매 원가는 똑같아요.
 그렇죠?
 도매 원가가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강원도는 공급비용이 몇 배씩이나 비싸냐, 수없이 들어서 압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든다는, 그래서 유사한 지역인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비교해 봤어요.
 비교했더니 우리 강원도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보다는 제가 전문지식이 더 많습니다.
 공급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 참빛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설비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본 의원이 확인까지 해 줬지만 설비 자체를 일반 사업자가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법령에는 일반 사업자가 2급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설비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모든 시설은 다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는데, 일반 업자들은 못 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 스피커폰으로 들려드렸어요, 항변하는 소리를.
 만약에 그네들이 설비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제재를 하고 압력을 넣고 협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이, 영세사업자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작은 설비까지 전부 다 해야 합니까?
 아니, 일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스피커폰으로 확인해 드렸잖아요, 확

인은 됐죠?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죠?
있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롯데처럼 세무조사를 하든가 강원도에서 뭔가 분명히 액션을 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하청시설 같은 것은 아버지, 아들 다 해먹을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눠 줘야죠.
같이 함께 공생하고 상생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강원도 도민들의 사업체에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강제법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잖아요.
바로 하세요.
문제점이 너무 심각합니다.
거기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니까 땅속에 들어가는 설비가 10억이 들어가는지 20억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동파이프가 들어가는지 금파이프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물론 기준은 있지만 그 이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1년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 3%만 플러스 시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국장님, 본 의원이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세워주고 당장 이것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예, 7월 말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 삼척, 강릉, 속초, 물론 양양, 고성까지 들어가겠지만 이쪽 지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스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요금은 아직까지 비교를 안 해봤지만 진짜 폭탄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기름 쓰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종 국장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3일 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오늘 지사님께 답변을 안 듣고자 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심각성을 조금 알고 계시죠?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서른 번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은 아주 대단한 살인미소를 가지고 계셔서 화를 못 내겠어요.
 다음은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자료 준비됐나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큰 틀에서 간략하게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미시령터널에 965억을 투자하고, 방법이 무엇인가, 6년 만에 찾아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타 사업으로 전환한 추진 사례를 뽑아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2,000억을 절감했고요, 거가대교는 약 5조 1,000억, 천문학적으로 절감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도 약 7조 5,000억을 절감했습니다.
 천억 단위는 비교도 안 되고요, 전국 사례입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처음에 미시령터널 용역을 했을 때 완전히 엉망으로 했습니다.
엉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엉터리 용역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완전히 급감해서 83%가 줄어든다, 그럼 미시령터널 도로는 거의 폐쇄 상태로 간다고 15년 전에 KDI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제가 누구라고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만-통행량이 계속 증가한다고 저기 화살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엉터리 그래프를 만들었느냐고 -저것은 지금 제대로 만든 것이고요. -질문을 했습니다.
방송까지 같이 나갔었는데,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정도로 접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965억짜리를 8,000억씩 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료 3번 부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우리가 법정으로 가서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무지무지 연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국제변호사까지 다 동원해서 6년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사실 무의미하고 만약에 미시령터널을 재구조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시령터널은 현재까지 수차례 협상을 요구했으나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행량 저조도 무의미하다고 해서 현재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4번 부탁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답이 무엇이냐, 공익처분이라는 방법을 6년 만에 찾아낸 것입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주무 관청인 우리 강원도는 다음의 경우 공익을 위해 처분할 수 있음이라고 있는데 5년 동안 이것을 못 찾았던 거예요.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강원도에서 직권으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연금공단에서는 2,450억으로 매입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돈 안 줘도 됩니다.
아래에 나온 것처럼 2016년 올해 말까지 우리가 1,907억만 주면 그냥 계약파기가 됩니다.
7,000억까지 안 줘도 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약 5,000억 이상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미시령터널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남도지사가 누구시죠?
홍준표 도지사는 수익률이 83%가 나는 사업을 공익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웃기죠.
우리는 수익이 17%밖에 안 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시령터널은 결국 문 닫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경남의 홍준표 지사는 83%의 수익이 나는데도 공익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강원도하고는 지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부탁합니다.
이것은 이해하실 수 있게 절차를 간단하게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주무 관청에 의한 사업시행자 청문 실시가 있는데 2,0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러면 미시령터널 공익처분에 대해서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예, 이길 수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은 수익률이 17%도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1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1년에 우리 도민의 혈세를 우리 강원도에서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되느냐, 앞으로 260억에서 300억을 매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사태가 곧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다는 거죠.
언젠가 지사님께서 아직 도래되지 않은, 벌어지지 않은 사태에 대해 김성근 의원님이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그것 아닙니다.
300억을 먼저 주기 시작하면 이게 2년~3년 걸립니다.
그때는 1,000억 이상을, 도민의 혈세를 지급한 다음에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늦었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장 부탁합니다.
공익처분으로 인한 효과 절감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소 절감액입니다.
최소로 했을 때 저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 도민들의 통행요금을 안 받아도 되고 지역구 주민들은 톨게이트 자체에서 지역민들 할인 혜택으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강원도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천문학적인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었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개인 법무법인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님이 역사에 길이 남을 공익처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업 재구조화의 방법에는 미시령터널이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통행료 감소로 인한 재정지원금 급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익을 위한 처분 시기가 늦을수록 해지 시 지급금의 규모가 늘어나서 점점 우리 강원도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전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최고 유능한 테스크포스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령터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실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 좀 많이 하셨나요?
저는 지금 6년밖에 하지 못했는데 실장님은 얼마나 하셨나요?
제가 1년 할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행정고시 출신이죠?
사법고시 패스한 분보다 저는 더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 실무팀들하고 이번에 사전간담회를 가졌었죠?
제가 소개시켜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제가 5년 동안 찾아 헤매다가 그분들이 글로벌기업에서 호주의 매커리 금융 쪽과 연결되어 있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서 한번 자문을 얻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 965억을 투자하고 2년간 수익을 올린 이후에 매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400억에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장주, 주식도 전국에서 최고 비싸게 매각을 했습니다.
연금공단, 국민의 세금인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눈먼 돈인가요?
그러니까 만날 연금이 고갈되어서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공익처분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는 연금공단에다가 1,600억만 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8,000억 정도 안 줘도 됩니다.
빨리 밀어붙여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사업 재구조화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되고 공익적 처분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다 끝나가거든요.
레고랜드 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질문부제 : 미시령터널 관련

답변요지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 재정관리 강화 적극 추진
강원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 관리를 해 나가겠음.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사실 김한수 국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10분 정도는 최문순 지사님께 여쭤보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레고랜드 자료가 저한테, 사실 아까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만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발전 방향에 대해 오늘은 지난 과거보다는 오늘부터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의회에서 채무보증 2,050억 선 것 있었죠?
그런데 우리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투에서 서류 보완명령이 내려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 전에 강원도의회 승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라고 해서 엘엘개발에다가 통보를 했고 강원도에다가 보냈다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사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몇 월 며칠 어디로 보냈는지 그 자료를 공개해도 될까요?
참 안타깝고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무엇을 지적하기보다는 혹시 지사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채무보증 2,050억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법적자문을 다 얻었고, 법적효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한국투자신탁에서 서류 보완…….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엘개발 부담 공사비가 약 2,400억이고 멀린이 1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한화로 따지면 약 1,05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번에 대림산업과 SK,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서류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그 공사비가 약 1,500억~1,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0억에서 이번에 3개사 본 공사 1,500억을 빼더라도 레고랜드 입구 광장공사비가 약 3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총 2,700억 이상 되는데 여기에서 1,600억을 쓰더라도 약 1,000억 이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언론이나 어디에도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경건위 위원님들도 아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이 1,000억 이상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죠?
지사님께서 얼마큼 알고 계신가, 그리고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지사님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혀 보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사님께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남은 5분 동안은 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를 보니까 다 대외비입니다.
사외비라고 다 찍어놨습니다.
다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도가 정말 강원도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그야말로 정말 투명하게, 도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한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공개를 하면서,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하나를 안 보내요.
다 대외비이고 뭐 그렇게 감출 일이 많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순 엉터리, 엉뚱한 일들이 막 뒤에서 벌어지고, 그러니까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전혀 모르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PT자료를 사용해서 임OO 회장이라는 분이 6개 회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드린 것 있죠?
그래서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국장님도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전 사장인 민모 사장이 전과 20범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전과기록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번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지 전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임OO라는 분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검찰청 전과기록이 저한테 지금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개인신상이라서 말씀 안 드리지만 엄청납니다.
10건이 아니고 줄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검찰 자료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도대체 왜 음해를 하고 이렇게 흙탕물 싸움이 되어야 되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자료를 제가 이만큼 갖고 있어요.
지사님, 다 드릴게요.
본 의원은 단 한 마디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본 의원이 명예훼손 고발 조치 당할까봐 자료가 없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속한다면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는 이 자리를 통해서 자료를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전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통째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똑바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마음 알죠?
누구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보자고, 지사님께서 몰랐던 과거 일이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300만 도민 앞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답변 한 마디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자의든 타의든 알게 되었으니까, 그게 솔직하고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사님, 지금 하신 말씀이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말씀이라고 본인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다 드리세요.
무슨 그렇게 대외비, 사외비가 많습니까?
다 감추니까 이런 썩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왜 안 줍니까?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시겠습니까?
개방 하나도 안 돼요.
자료를 요구하면 전부 다 대외비라고 해서 자료 하나도 안 줍니다.
지사님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료가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 주세요.
지사님한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부분, 그리고 도민의 재산입니다.
알 권리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한수 국장님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탁동훈 대표님,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과거 것은 과거대로 가고 추진하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아주 투명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가 남았는데, 김한수 국장님께 질문할 게 있는데 중국으로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예민한 질문은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김규태 위원장님, 들으셨죠?
이제 자료 요구는 바로 도지사실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사님이 척척 자료를 주신다니까, 사실 대외비는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무슨 다 대외비입니까?
99%가 대외비, 이런 일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과 경력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작업을 통째로 다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의원님들 저한테 오세요.
다 보여드릴게요.
개인신상이라서 여기에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문순 도정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절차를 거쳐서 검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6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 장

5분 자유발언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4. 7.15)

5분 자유발언 : 이기찬 의원 (새누리당, 양구군 선거구)

발언요지 : 응답하세요, 최문순 지사님!

최문순 지사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 청춘양구, 양구의 큰아들 이기찬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함께 경청코자 참석해 주신 박수근 화백의 장녀 박인숙 선생님, 김현옥 자부님과 최옥희 양구군수 사모님, 그리고 박미량 올리브그린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역사적 의미가 큰 제9대 강원도의회 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27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동양의 밀레, 한국미술의 거장 박수근 화백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탄생 100주년의 뜻깊음을 되새기며 지난 2007년 이후 7년간 지지부지하게 추진되어 온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의 몇 가지 문제점과 현재 운영중인 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 도립화의 당위성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서, 특히 문화올림픽을 주창하고 계신 시점에서 강원도립미술관의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강원도립미술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운영자문위원회의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당연직으로 3명, 춘천 7명, 원주 2명, 강릉 3명, 4명의 서울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도립미술관 선정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밀어주기식 정치공학의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정치적인 현실을 떠나 창조의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에서는 도립미술관 건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향후 운영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아보면 작은 규모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 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금융 등이 Big3 지역에 집중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의 원리를 찾아 여러 방면으로 중앙정부에 도민의 뜻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이 보유한 특성과 자원을 활용·추진해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이로 인한 강원문화 구축의 백년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박수근 화백의 생가터에 자리잡은 군립 박수근미술관을 도립미술관으로 승격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먼저 박수근 화백은 독특한 화법으로 서민적 생활상과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미술의 거장입니다.

또한 박수근미술관은, 98년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선정, 2002년 10월 25일 개관하여 1일 평균 1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원한 마음의 힐링 명소로서 370점의 150억 원대에 이르는 박수근 화백의 작품과 유품이 소장되어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대를 같이 한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천경자 작가들의 작품 53점, 현대작가들의 300점이 함께 전시·보관되어 있습니다. 돈으로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 말하겠습니다.

둘째는 강원도립미술관으로 지정되면 기 운영 중인 700평의 건물과 400평의 전시장 미술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증축부지 3만 평이 군유지로 확보되어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훌륭한 컬렉션과 짜임새 있는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도립미술관의 신설 후 운영에 있어서 자리 잡는 데 최소 4~5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박수근미술관은 12년의 운영경력으로 지역의 미술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양구는 이제 춘천과 25분, 수도권과는 1시간대로 가까워짐으로써 문화와

여가, 그리고 웰빙 청정먹거리를 통한 국토 정중앙의 지정학적 자산의 이점을 살려 관광객 확보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타 시도의 도립미술관과 차별화 및 특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삶이 그랬듯 세계적인 한국미술의 거장 박수근 화백으로 강원도립미술관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사항들이 접목되고 만들어질 때 최고의 강원도립미술관이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강원도정 중 하나의 큰 틀은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사님께서는 여러 연설과 행사에서 주장하셨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근미술관에 방문하셔서 도립미술관으로의 승격의 필요성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 봅니다.

부디 강원도립미술관의 선정이 꼭 박수근미술관으로 연계되어 강원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4. 7.15)

5분 자유발언 : 권혁열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최문순 도정 출범 강원경제 새판을 짜라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번째 임기를 맞는 최문순 도정의 미래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불과 3년여밖에 남지 않은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농수산업 등 우리 강원도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3.6%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목표 5.2%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 강원도의 경제체질이 매우 허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의 구조를 다시 짜고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할 때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최문순 지사께서 경제자유구역 유치의 공을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하나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단지로의 발전을 약속한 옥계지구의 경우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직접 개발한다며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도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는 어떻습니까?

빙상경기장은 약속과 달리 설계변경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강릉의 상황은 제쳐두고 도가 앞장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도가 할 일입니까?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개·폐회식장과 국제방송센터, 메인프레스센터 등 대회지원시설 조성사업은 사업자를 아직도 못 구하고 있는 답보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문순 지사께서는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중 FTA 체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농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의 대책은 감자원정대라는 이벤트성 대책으로 땜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림픽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도내 농수산물의 올림픽 관련 대책은 그림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가장 기본적인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 관세 유예화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임에도 우리 도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지사께서는 알고는 있습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인기 영합 정책만 좋아하고 홍보했지 정작 급식에 우리 도내 농수산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행복 2배, 소득 2배'라는 말이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회에서 북방항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우리 동해항이 모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도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에 대한 문제점만 알고 있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내 경제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지사는 자

신의 공약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한 사람을 위한 자리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우리 도의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무부지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경제부지사가 필요합니까?

본 의원이 볼 때 경제실무와 통상분야에 경험을 쌓은 실무형 경제부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사를 보필해서 도약을 위한 새로운 강원도 경제판을 짜고 경제구조를 혁신해 새로운 창조경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일보 설문조사에서 지사가 앞으로 4년은 강원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2018년까지 강원도를 대한민국 경제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끌어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사의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개방형 직위 공모는 감사관과 대변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건 틀렸습니다.

통상과 실물경제 등을 경험한 실무형 경제부지사를 공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영서 도지사가 아닌 진정한 강원도 도지사로서 소득이 2배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행복지수도 2배로 늘어나는 강원도형 경제발전모델을 만들고 실천하려면 본 의원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도민들의 뜻임을 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FTA 대비 도내 농수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 올림픽 푸드사업,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확대, 쌀 관세 유예화 종료에 따른 대책, TPP 가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조례안 개정보다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경제부지사로 확대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농수산 분야의 남북한 경제협력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남북교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칭 남북농수산경제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도의 현실을 보다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본 의원의 발언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4. 7.15)

5분 자유발언 : 곽영승 의원 (새누리당, 평창군 제2선거구)

발언요지 : 제9대 강원도의회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새누리당 곽영승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의 순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지자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순으로 봅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권한에 비해 책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용, 규제, 세금같은 관심이 높고 부담스러운 일들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중앙부처 소관입니다. 반면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정부에 세금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인심을 쓰기에는 좋은 자리입니다.

강원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간 120억 원을 운항장려금 등으로 항공사 등에 거저 주면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양양공항이 그렇고, 연간 85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도립의료원이 그렇고, 적자덩어리인 속초국제관광정보센터 등 수많은 도립기관이나 건물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10여 년 넘게 결실 없이 관행으로 해 오고 있는 동북아지사성장회의와 동남아 관광장관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는 아직도 삶 자체가 고통인 도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모양새나는 일에 쓰지 마시고 빈곤층과 서민층을 보살피는 데 쓰는 것이 인간 본성에도 맞고 도민통합에도 맞는 일입니다.

분노할 힘마저 잃어버린 이들이 검은 구름 너머 희망의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목민관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동체의 근간인 연대의식을 되찾는 길입니다.

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집행부는 개선하겠다는 말뿐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분개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강원도의 정책결정권자들께서는 도인의 경지에 도달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또한 고교무상급식같은 폼 나는 정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상교육같은 무상상품이 과연 진정한 복지입니까?

세금으로 무상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무상입니까?

이는 더 많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계층의 복지를 도외시하는 것이기에 복지로 포장한 또 다른 인심 쓰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잘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거리를 좁히고 이른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소통해야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종북좌파가 진보진영을 휘두르고 기득권을 가진 수구세력이 보수진영을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의회에는 종북좌파는 수구꼴통은 없다고 보지만 대신 개인적 욕심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 욕심으로 인해 올바른 좌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도민들을 섬기는 공직자들로서 개인적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이견에서 해법을 찾는 중도, 중용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편향된 이념으로는 도민의 복리나 학생들의 장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생각이 바뀌면 도민들의 삶과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은 생각을 바꾸기에는 힘든 연령입니다. 그러나 변해야 하기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수용해야 합니다.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진영논리를 벗어나 소통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돈, 권력, 명예보다 소중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치들을 배제한 돈, 권력, 명예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고 고쳐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4. 7.15)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가 지향할 방향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출범에 있어 강원도정의 방향, 특히 복지정책의 지향점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평소 가진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제도인 시장경제는 무한경쟁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사회 전체의 파이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제도입니다.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61년간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논쟁, 열강의 철저한 이기적 행태, 민족의 자주·주체성, 완벽한 친일 청산, 최부층과 최빈층의 격차, 이 모든 명제와 토론거리 등을 뒤로하고 본 의원이 가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가 빚어낸 파이의 크기가 사회주의가 빚어낸 그것을 월등히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한민족, 한 문화, 쌍둥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61년의 시간이 말해 준 것은 최소로 보아도 30배 이상의 파이 크기입니다.

TV에서 접하는 새터민 형제자매의 이야기들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표현할 수 없는 서글픔과 울분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간부급 집안이라도 최고의 결혼선물이 초코파이 한 상자이고 결혼할 때나 초코파이를 먹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앓아누우신 어머님을 위해 큰 마음 먹고 구한 생전 처음 보는 라면의 간을 본다는 게 너무 맛있어 그만 반 이상을 먹다 정신

차리고 나머지 반만 어머님께 드렸다는 이야기 등은 절대적 파이 크기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느끼게 해 줍니다.

혹자는 선진국 빈곤층이 먹고 마시는 음식 질이 미개발 국가의 부유층이 먹고 마시는 그것보다 더 위생적이고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지만 파이 크기를 극대화시킴에 있어 인류가 고안한 최고 장치라는 달콤함 속에는 어쩌면 앞서 언급한 것보다 더 짠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경제라는 제도는 모두의 손에 30배 이상의 파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0배, 100배, 1,000배의 조각을 받는 것이 허락된 이들이 있는 반면 한 조각을 겨우 챙기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라면 등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시장경제 사회에 살면서 누리는 호사가 어쩌면 그게 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 형제자매들 대부분이 평생 맛보지 못할 먹거리를 사기 위해 한여름, 한겨울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 피서·피한을 위해 철마다 남반구로 골프, 스키 여행을 떠나는 어르신들, 청년실업 증가로 웬만한 일자리 경쟁률이 20 : 1은 가뿐히 넘고 구인·구직박람회에 어김없이 청년들이 꽉꽉 차는 가운데에도 스무 대 중 한 대라 말하기도 무색할 만큼 워터파크, 스키장 주차장을 꽉꽉 메우는 고급 외제차들과 청년들, 같은 시간 또 다른 세상의 공존이 시장경제 사회입니다.

절대적 가난은 벗어나게 해 준다는 달콤함으로 상대적 가난으로 흘려야 하는 피눈물을 재료삼아 절대적 파이 크기를 키워가는 메커니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보다 더 모순투성이일 수도 있는 그 메커니즘을 인정하고 그나마 그 피눈물을 닦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란 세금이란 형태를 통해 1,000개의 파이를 가진 사람에게 400조각, 500개의 파이를 가진 사람에게 100조각의 파이를 걷은 후 한 조각도 확보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입니다.

부의 재분배, 즉 이미 분배된 부의 일부를 소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다시 걷고 처음 분배받은 부가 턱없이 부족한 이들에게 다시 나눠주어 인위적으로라도 1차 분배상태보다 부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복지의 핵심입니다.

정치인들은 다시 걷힌 세금마저 동등하게 나누자는 부자들의 탐욕 앞에 순수한 복지개념을 무릎 꿇렸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가난한 사람을 먹이느냐는 비정함과 이기심은 세금을 내고도 600개가 남는 사람, 400개가 남는 사람, 1개도 있을까 말까 한 사람 모두

에게 다시 걷힌 500개를 누구나 똑같이 100개씩 나눠달라 요구했고 100개, 1,000개의 파이를 얻는 능력을 가진 고학력, 부자들은 이런 후보들을 골라내고 당선시키는 능력으로 긴 시간에 걸쳐 원래의 복지취지를 돌연변이 복지개념으로 교묘히 대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변질된 개념이 더 널리 퍼져 있어 순수한 마음의 정치가들도 이를 정의로 혼동할 정도로 괴물개념이 성장해 버렸습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의 33%까지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용단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복지비가 파이 한 조각마저 얻기 힘들어 걱정하며 울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쓰인다면 제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이라도 벗어 보태겠습니다.

복지라는 단어가 가진 긍정적 어감을 앞세워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당한 괴물서비스 정책으로 인해 고개를 돌려 미소지을 이들은 철저히 부자들입니다.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자기 절제마저 가능케 하는 물질에 대한 애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돌연변이 서비스 정책이라도 부자들만큼 기뻐할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최문순, 민병희 두 분을 속일지도 모르는 누구나의, 누구나에 의한, 누구나를 위한이란 포장된 이기심, 곧 변질된 서비스정책 지향은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강원도를 열어줄 것이며 최문순, 민병희 두 분을 당당하게 세워줄 약자만의, 약자만에 의한, 약자만을 위한이란 인기 없는 진정성, 곧 원래 개념의 복지정책 지향은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강원도를 열어갈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4. 7.15)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 현안에 관하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첫 임시회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 4년 동안 강원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 부탁과 함께 제 스스로도 4년의 의정활동에 오직 도민의 행복만을 중심에 놓고 혼신을 다해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굳게 다짐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어제부로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월드컵 대회를 보면서 스포츠가 어떻게 국민을 단합시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국민을 분열시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남미 축구강국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4위의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국민들은 축구경기를 보며 울분을 터뜨리고 경기 결과를 보면서 폭력적으로 변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브라질 국민에게 있어 축구는 희망이며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경기 결과에 대해 큰 괴리가 발생한 것이며 실망한 국민들의 울분이 폭력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브라질의 축구경기와 국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강원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강원FC는 현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원FC의 발전적 해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원FC가 처음 출범할 때 강원도민들께서는 축구를 통해 도민을 단합시키고 강원도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울 수 있다는 큰 기대감으로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 지원했고 심지어 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 아낌없는 투자를 했었습니다.

도민의 주머니를 털고 혈세를 쏟아붓는데도 구단 운영은 부패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이사진의 무능으로 재정은 고갈되고 이런 상황에서 팀의 성적이 좋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또 성적이 부진한 강원FC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은 자연히 멀어졌습니다.
아니, 브라질 국민들처럼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FC의 2009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도의 지원내역을 보면 홍보비 40억을 포함해서 보조금 160억, 총 20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반면에 결산 결과를 보면 매년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금년 5월 말 현재 수입 예정액은 27억 원이며 부채는 36억 원으로 9억이 부족합니다.

집행 예정액은 40억 원으로 부채를 합하면 총 49억 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까지 36억 원의 부채를 전액 탕감하더라도 내년부터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4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FC의 경기실적으로 보아 다른 시도의 구단처럼 대기업 스폰서를 끌어들이는 것은 요원하며 결국 비리와 방만운영으로 펑크 난 강원FC의 재정적자를 도민의 혈세로 메꾸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강원FC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횡령 등에 대해 강릉지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나 별도로 실시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강원FC 특별검사 보고회에서 도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도민의 혈세가 지원된 만큼 철저한 환수조치와 그 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FC는 프로축구팀이며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어야 하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팀은 해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망과 좌절감으로 도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강원FC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진 몇 명을 재구성하고 단순히 구단이 짧은 역사로 인해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반복할 것입니까?

강원FC 문제를 나와는 상임위가 다르다고, 나는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라는 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강원FC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고 참아온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깨지며 도민들은 분열될 것이고 분노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며 지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 9.16)

5분 자유발언 : 진기엽 의원 (새누리당, 횡성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수도권 규제완화 그리고 강원도

새누리당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 운명은 앞으로의 4년이 결정적 시기이다. 앞으로의 4년은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경제활성화,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비롯한 각 시·군의 단체장 후보들이 내걸었던 경제살리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공약들은 우리 도민들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동계올림픽은 물론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의 기업유치는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마저 기업의 지방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기업유치 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신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기반으로 기대를 모았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 지정 고시된 이후 동년 7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 투자유치 및 성과를 올리겠다고 하였지만 계획만 난무하고 지금까지 본계약 제로라는 실적이 전무하고 전략부재 등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강원도에는 국가산단 1개소를 비롯한 일반산단 17개소, 농공단지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업체 수는 1,423개, 고용인원은 2만 4,203명이 고작입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이란 도정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추진 중인 일반산단 19개소와 농공단지 7개소 마저 수도권규제완화에 봉착해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는 정부의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 이후 강원도의 기업유치 실적이 예년에 비해 반토막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2008년 91개소, 2009년 130개소, 2010년에는 81개소의 기업을 유치했지만 지난 4년간 강원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3개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쳐 점차적인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강원도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현행법상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지정이 해제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일반산단과 농공단지 26개소 또한 허물 벗은 흉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대응, 그리고 지난 4월 강원도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수도권규제완화의 대안마련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의지는 물론이고 수도권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강원도지사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의 도정목표인 도민소득 3만 불 달성, 소득 2배 행복 2배, 일자리 10만 개 이상 창출, 고용률 60% 이상 달성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이것은 곧 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150만 도민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함은 물론이고 강원도의 기업유치를 위한 기초 환경을 면밀하고 냉철하게 파악해 강원도만의 전략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강원도 면적에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82%, 전국 국유림 중 강원도의 비중이 56%인 점을 감안할 때 강원산림의 이용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의 공적기업화 산림치유, 대규모 산림관광휴양단지, 산림교육 등 산림 관련 기업유치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된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비 강원도의 기업유치 전략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는 효율적인 기업유치 플랜을 만들 것과 이미 유치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우선 순위 등을 파악할 것을 본 의원은 주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 9.16)

5분 자유발언 : 심영섭 의원 (무소속, 강릉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강릉시내 중학교 신설 및 이전에 관하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년대계라는 교육에 있어서 도심공동화와 인구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릉 남부권 여자중학교 설립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7월 15일 성덕동 학부모 연합회와 간담회에서 강릉 남부권 여중생들의 등·하교 불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가 늘고 있는 남부권 일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학교 신규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해부터 남부권 주민들은 물론이고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릉시 남부권 중학교 설립문제를 호소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잠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강릉 남부권은 3만 4,000여 세대 8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인구수는 3,000명으로 이 중 여학생이 1,400명인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부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들어서면서 향후 학생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강릉 남부권에는 중학교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강릉중학교와 경포중학교로 남자 중학교만 두 곳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강릉 남부권 여중생 1,400명은 매일 4㎞ 이상 떨어진 중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버스를 2회 이상 갈아타거나 아니면 매일 학부모님들이 승용차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내년도만 해도 강릉 남부권 동지역 6개 초등학교에서 700여 명이 중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만 절반인 여학생 350명은 또다시 먼 길을 나서야 합니다.

왜 강릉 남부권 여학생들만 원거리 등·하교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강릉 남부권 여학생들만 원거리 등·하교 불편을 겪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강릉 남부권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또한,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근접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8월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강릉시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공청회를 여는 등 지역 내 순수 남녀 중학교의 남녀공학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하여도 여학생 수만큼 남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청회 때 밝히셨듯이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안과 중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등 후속조치를 하루속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은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학생 수가 부족한 반면 택지개발로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곳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통해서 강원도의 작은 학교 폐교를 막아내셨듯이 보다 넓고, 먼 시각에서 학생현황에 맞춰 학교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심을 때 최소 30년 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육에 관한한 정책 성과를 빨리 얻으려는 마음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군대 안에서의 가혹행위 등 요즘 일련의 사고들을 되돌아보면서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바른 제도 안에서의 꾸준한 교육투자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강릉 남부권 중학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 9.16)

5분 자유발언 : 장세국 의원 (새누리당, 화천군 선거구)

발언요지 : 도내산 농축수산물 군납확대를 위한 군 급식시설 디지털화 지원 사업 촉구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산 농·축·수산물 군납 확대를 위한 도내 주둔 군부대의 급식시설에 HACCP인증 지원사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6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에 따른 각종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접경지역생산 농·축·수산물 군납 지정·고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군과 지역이 상생하는 군납 구현을 위해 군납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명시와 지역생산 농·축산물 납품근거 마련 등 고품질 지역 농·축산물 공급확대 방안과 군부대와 유관기관 간에 네트워크 구축 등 강원 농·식품 군납 확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강원도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군부대의 급식시설 현대화 및 디지털화 지원사업이 선제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지속발전 가능한 민·군·관 간에 상생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역 순환형 유통생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장병급식용으로 강원지역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구매규모가 약 1,7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병영문화 선진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강원도의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부대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강원도 특성에 맞는 군부대 급식시설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급양함양과 전투력 증대를 위한 군 급식시설 현대화 및 디지털화 사업은 국방부의 전력증강 우선순위에 밀려서 자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면서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군 복지 협력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한다면 강원도가 군납확대를 요구하기 전에 군에서 자발적으로 도내산 농·축산물 구매를 확대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군 급식관련 급양관이나 영양사, 취사병들은 HACCP 기록관리라든지 각종 자료취합 및 통계관리, 식중독의 원인인 온·습도 관리 등 이러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급식시설 디지털화 지원사업은 이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자주적 일체감을 형성시키고 인력이나 시간 등 낭비요소 제거로 업무능률이 향상되면 이들과의 유대가 강화되고 이 또한 도내 농·축산물의 군납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는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해서 군납식품 위생 상태를 매일같이 검사하는데 지난해 강원지역 군납식품 위생상태 점검규모가 14만t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식자재 위생검사 업무량을 줄여주고 철저한 식품검사와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WIN-WIN 전략 면에서 군부대 급식시설 디지털화 지원사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2018년까지 도내산 농산물 군납을 2,70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군납확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군부대 급식시설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역 순환형 유통생태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또한 도내 농산물 군납확대와 식중독 없는 건강한 병영생활 기반 구축 지원 등 식자재 분야에서 민·군·관 간에 선순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납확대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과 식품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군부대의 급식시설 현대화,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셔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 9.16)

5분 자유발언 : 원강수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5선거구)

발언요지 : 도정현안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초선의원인데 본회의장에서 처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면서 불철주야 강원도정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청 직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도지사님이 바쁘셔서 자리를 못 해 주셨는데 제가 발언신청을 한 이유는 민선5기 3년을 보내고 민선6기 새로운 4년의 임기를 보장 받으신 재선에 성공해서 4년을 보내셔야 하는 최문순 지사님의 성공적인 도정을 기원드리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원FC 문제입니다.

지난 2008년에 창단을 했어요.

그리고 채 4년이 가기 전에 강원FC에 들어간 창단 자본금 90억 원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잠식이 되었습니다.

90억 원이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4년도 안 되어서.

그리고 구단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강원도가 계속 수십억 원씩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FC가 프로축구 구단이기 때문에, 스포츠이기 때문에, 순위를 매겨야 하는 순위경쟁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어요.

1부 리그에 있든 2부 리그에 있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강원도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FC 창단 자본금 90억 원이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없는 상황에서도 강원도에서 자본금 마련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돈을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그 돈 다 집어넣었는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들어갔던 수십억 원의 돈, 방만 경영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진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민들의 피 같은 돈을 걷어서, 지사님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원FC와 관련된 도지사가 세 명입니다.
전직 두 명, 현직 한 명,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제일 큰 막중한 책임이 관리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저는 지사님이 도민들께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힘들면 해명이라도, 설명이라도 하는 자리가 있는 것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강원FC의 방만한 경영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나 매스컴에서 보도하니까 뜸들이고 있다가 불과 8일만에 감사도 아니고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8일만에.
불과 8일 동안 이루어진 검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비위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강원도가 경영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파견공무원을 몇 분 보냈는데 그분들 중에 또 일부가 방만경영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강원FC가 강원도하고 별도의 기관이라고 해서, 영역이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강원도가 대주주 아닙니까?
최대주주입니다.
그리고 구단주가 누구입니까?
도지사예요.
그리고 이사회에 강원도청의 간부공무원이 두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이라고.
당연직 구단주라고요.
당연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강원FC의 구단주를 못 합니다.
왜 도지사가 강원FC의 구단주를 맡아야만 되느냐, 최대주주예요.
도지사만이 강원FC를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고 착실하고 빼곡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뜻에서 당연직으로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수십억 원씩 지원했잖아요.
관리 책임이 엄연히 있는데도, 몇 년에 걸쳐서 혈세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저는 도의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민 세금이 헛으로 줄줄 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저는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양국제공항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금 모자란데, 양양국제공항을 2002년에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만들었는데 지난해 2013년부터 강원도가 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수십억 원씩 투입했습니다.
올해도 7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예산 10억 원이 또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가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20만 명 입국자가 이렇게 돌파했다고 하는데…….
관광정책을 제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항에 입국해서 트랩에서 내리는 순간 서울과 제주도로 가고 강원도에서 쓰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강원도에서 무슨 물건을 사고 어디에서 묵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밝힌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70억이든 700억이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림살이가 빠듯하니까 예산순위를 매겨서 좀 더 기대효과가 큰, 산출효과가 큰 그런 예산씀씀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어서 시간 계산을 잘 못하고 한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 9.16)

5분 자유발언 : 유정선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발언요지 : 강원도 통합브랜드 강원마크 관련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양해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강원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브랜드 '강원마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브랜드는 이념, 목적, 활동, 표현 등을 기획하여 강원도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대상의 이미지나 감성, 차별화와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창출하고 신뢰성을 구축하는 디자인을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꾀하는 '이미지 통일화'가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마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 세계화에 맞추어 강원도를 마케팅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질 강원도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하고 여러 전문가들께 자문한 결과 강원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생략된 채 일부 자문단원들의 의견만으로 단시간에 졸속 결정함으로써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었다, 8,000만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는데 강원도의 특성이나 이미지, 상징성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 미래 지향적 조형 감각이나 콘셉트의 구현이 부족했고 집행부가 세계화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집행부가 강원도의회에 상정된 통합브랜드 조례가 심의·통과되기도 전에 홍보 기간이라는 이유로 통합브랜드가 이미 강원도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문서, 서식, 명함, 홍보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의 조례 심의와 제정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단순히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는 집행부의 이 같은 불법과 잘못된 인식에 대해 강원도지사께서는 반드시 해명과 사과, 그리고 다시는 강원도의회를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강원도 집행부가 강원도의회를 합법적 의결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브랜드 강원마크 개발 과정 및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 통합브랜드인 '강원마크'의 개발 배경과 계획·진행과정에서 도민여론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생략한 채 단시간에 졸속으로 진행한 점과 둘째,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했다면 강원도민은 물론 출향도민들의 공모형식이나 참여기회 부여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외주업체에 떠맡기듯 브랜드 개발을 진행하였다는 점, 셋째로 통합브랜드 개발이 '로고 디자인'화 되었다는 점으로 강원마크는 강원의 초성인 'ㄱ과 ㅇ'을 이용하여 강원도민의 열정과 하나 되는 강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원도의 다양한 지역특성과 이미지, 상징성 등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는 전문가와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넷째, 9대 도의회가 시작되면서 논란을 빚은 부지사 인사 건과 이번 '강원마크'의 경우를 반추하면서 도의회의 적법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최문순 강원도정의 독선으로 진행된 불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통합브랜드 '강원마크'가 도정교체 등 여건변화에 상관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로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강원도의 주장과 다릅니다.

심지어 '강원마크'는 지역특성과 미래 지향적인 조형감각과 콘셉트가 부족하고 시대의 트랜드에 뒤떨어지는 1990년대의 이미지라는 혹평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는 물론, 이를 통해 장차 맞이하게 될 글로벌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소한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크고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도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강원도정의 지금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는 결코 강원도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고 봅니다.

‘강원마크’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공론화하고 다시 검토해서 강원도의 상징성과 특성을 갖춘 강원도만의 얼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9.25)

5분 자유발언 : 이종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춘천)

발언요지 : 춘천시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와 춘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고인돌 101기 등 총 1,400여 기의 청동기시대 유구와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레고랜드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중요 문화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원도형 문화재 보존방안과 레고랜드 개발방안을 보다 치밀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지난 19일 문화재청 회의실에서 레고랜드 조성 현장의 유적 보존방안을 재심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내일 또 다시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엘엘개발은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시 환호 보존방안으로 원 발굴 위치에 환호 표시를 하고 레고블록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주거지는 수장급 주거지의 모형을 복원하면서 정보통신 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지석묘의 경우 지하 구조물 설치 후 일부 지석묘를 원위치 복원 및 전시하는

1안과 지석묘군 중 일부 지석묘 지상 복원 및 전시하는 2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형 문화 보존 방안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과 병행하여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향후 사업과 연계시킬지에 대한 계획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강원도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북한강과 남한강을 따라 형성된 선사유적지는 인류 문화의 보고이자 후대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줄 문화산업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윈윈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해시 북평공단 조성사업 중에 발견된 추암동 고분군의 이전복원사업, 춘천시 거두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에 발견된 청동기시대 대규모 사냥터로 추정되는 함정유구의 처리사업, 영월군 하송리 도시개발 아파트건설사업 중에 발견된 총 7동의 절터 처리 등의 사후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문화재청의 보존 방안을 충족시키면서 강원도의 실익을 추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문화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사회에 회자되는 말로 이순신 장군님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듯이 강원도는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 만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각오로 내일 문화재위원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9.25)

5분 자유발언 : 임남규 의원 (새누리당, 태백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도민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임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태백 열차 충돌사고 등의 대형 사고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특히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이 실의에 빠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소방헬기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회피비행을 하며 추락한 5명 대원의 안타까운 희생도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인력과 개인안전장비 부족, 대응장비 노후화 그리고 처참한 현장 상황 속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오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대형 재난·재해의 위험에 적극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가 추구하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의 실현을 위해 경제

·사회·문화·복지 등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도 시급하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요소이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방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소방인력 보강과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우선 아직도 읍·면 단위에서 혼자 근무하는 1인 지역대의 해소와 구급차 탑승 인원 보강, 구조대 인력과 생활안전구조 전담인력 확충 등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강하여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용으로 운영되는 필수차량 총 400대 중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135대의 교체와 고가사다리차 등 필수장비를 보강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다치거나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장비 보강과 함께 처참한 현장근무에서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은 공기호흡기 30%, 방화복 39%, 소방헬멧 53% 등으로 노후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헬기 추락사고로 동료들을 잃은 특수구조단 대원들을 비롯하여 처참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양소 건립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소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장기적인 보험이라는 전향적인 인식을 갖고 소방인력의 증원과 노후한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분야에 대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9.25)

5분 자유발언 : 이기찬 의원 (새누리당, 양구군 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산림수도를 위하여

1434년 4월 24일 신미일에 세종대왕께서는 병조에 전교하시기를 남산의 안쪽과 백악산, 무악산, 성균관동, 인왕산 등과 같이 소나무가 희소한 곳에는 잣나무와 상수리나무 등을 심게 하라 하시고 식목의 중요성과 수종 선택의 필요성을 역설하셨기에 치산치수가 덕왕의 근본임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의 꿋꿋함으로 도의회의 표상이 되시는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토 정중앙 청춘 양구의 큰아들 이기찬 의원입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를 위하여 동분서주 강행하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혼을 다 붓고 계신 이경희 부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18개 시·군 1,800만 그루 나무심기 강원도민운동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라는 뜻으로 나무를 심는 일은 모두 사람을 심는 일, 인재를 양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중국 전국시대 관자(管子)의 말입니다.

이제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가 아닌 인접 광역 자치단체에서 또는 먼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겨울 축제로 느껴지는 듯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2010년 7월 더반에서 평창의 결정은 수십 번을 들어도 기쁨이 밀려오는 행복한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90%에 가까운 도민 모두의 눈물 젖은 도전이었고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평창, 강릉, 정선 등의 개최지를 제외하고는 뜨거웠던 함성을 들어보기도, 찾아볼 수도 없는 듯합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더 크게 더 높게 도약을 해야 할 강원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18개 시·군이 각 100만 그루, 합이 1,800만 그루 심기의 필요와 당위성을 말씀드린다면 168만 7,351㏊의 산림면적과 수종이 형성된 산림수도 강원도의 자존심의 명성을 키우고, 더워지는 강원도의 열섬현상 완화로 쾌적한 온도와 산소배출과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청정강원, 풍수해로 인한 산사태와 자연생태계의 보전으로 인류가 번영하는 최고의 부가가치가 샘솟는 산림녹화를 통하여 숲을 통한 힐링과 관광명소로서 자부심과 18개 시·군의 고정적 자산이 될 것이며, 연간 111만 4,30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행복한 강원도 금수강산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주요시설 대부분이 새롭게 조성되어 주변경관이 열악하고 전 세계의 방문객과 선수들에게 뷰티풀(Beautiful) 함성이 나올 수 있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개최지는 물론 강원도의 멋진 관광지 주변에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에서는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숲 조성이 필요하고 향후엔 숲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1,800만 그루 식재를 위한 추진 방법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용역을 통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595억 원을 투입하여 조림, 도시숲, 학교숲, 나눔숲, 가로수, 도민의 나무 갖기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한 해 평균 2,442㏊에 553만 6,000본의 조림사업을 통하여 도시숲 36개, 생활숲 53개, 나눔숲 21개, 가로수 112㎞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올림픽의 정신을 공감하고 세계 평화와 스포츠의 도전 정신을 키우기 위한 평창동계올림픽공원을 전 세계인의 내 나무심기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 스포츠, 경제교류 등 수많은 국내 입국자들과 교포들에게 사업을 홍보해서 식재하는 방법을 추진해도 큰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심기 운동으로 성공을 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 대전, 광주, 충남, 제주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을 비롯한 7개 시・군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대구광역시는 400만 그루 나무심기로 세계적인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자연자원을 통한 휴양도시 구현과 시민이 참여하는 젊은 도시 창조로 주5일제 근무 정착에 따른 여가문화 이용증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임학회지 2011년도 게재 내용을 찾아보면 1인당 생활권에 숲 1㎡ 증가 시 여름철 한낮온도 1.15℃를 낮춤으로써 도시열섬현상이 극복되고 1ha의 숲은 6.4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4.7t의 산소를 배출합니다.

여름철 냉방온도 1℃를 낮추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절약은 7%의 절감효과가 발생됩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피크시간 대 강원도만 112억 원이 절약됩니다.

이것을 나무심기의 효과로 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 맞는 수종을 말씀드립니다.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상수리, 신갈,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등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는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에서 확대된 대표적인 친일 잔재이기도 합니다.

조선 왕실과 신하들의 기를 빼앗아 남성의 구실을 못하게 하고자 을사늑약 이후에 경복궁 주변과 경전 안에 열매를 맺지 않는 숫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풍수학자들은 양택을 해서 가옥을 신축 시에는 수놈 은행나무를 심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십장생의 하나이고 한국의 나무 중에 유일한 탄생신화를 가진 최고의 으뜸인 소나무 그리고 숙종의 애첩 장희빈의 처소를 지을 때 사용된 대암산 전나무, 낙엽송 등입니다.

이제 숲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함께하는 최고 자산입니다.

한류 열풍의 진원지인 남이섬의 메다세콰이아는 지난 90년대 초에 식재된 것입니다.

누가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뜰 줄 알았겠습니까?

경남 함양의 최치원이 만든 상림원은 1000년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속담을 전합니다.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한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9.25)

5분 자유발언 : 신도현 의원 (새누리당, 홍천군 제2선거구)

발언요지 : 농업 진흥지역 지정은 전면 재정비 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까지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오직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도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고자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년도 넘은 낡은 농촌규제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제도는 1992년 12월에 도입되어 2007년 한 차례 보완 정비를 한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시행중인 대표적인 농촌규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현재 3만 9,000여 ha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내 전체 농지면적의 35.7%에 이르는 매우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20년 동안 산업이 변모하고 다변화하면서 수많은 여건변화가 생겼으나 농촌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이고 농업인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덩어리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이야말로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며, 이제는 기존의 생산중심의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체험

관광, 서비스를 아우르는 융복합의 6차 산업만이 농촌의 가치와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귀촌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람직한 농촌산업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산 높고 물 맑은 오지마을입니다만 그런 마을로 향하는 도로변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그만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하나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농촌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은 아예 접근도로조차 없는 산간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상대로 식당을 허가받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없는 곳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농업진흥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으로 상반되게 지정되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대명비발디파크는 사시사철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휴양시설이며, 이 시설로 가는 진입도로는 서면 굴업리 70번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런데 그 길 우측은 계획관리 지역이나 좌측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일부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중복 지정 고시되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따른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등 농촌지역 이곳 저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기반시설이 정리되지 않은 지역도 과도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농촌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만 하고, 일반주택의 건축과 일정규모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등 제한행위를 완화함은 물론 관리지역세분화 이전처럼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지법 제31조에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건변화의 조건이 도로, 철도설치 및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주택, 시설물 건축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과 가축사육시설 제한지역으로 우량농지의 존치요건이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도 해제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미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인구유입효과를 가져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공동화 현상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지금의 농촌은 농자재 가격의 인상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7월 내년 1월부터 쌀 수입을 관세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였으나 국제검증 과정에서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으므로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정부 정책의 외면으로 점차 고사되어가는 농촌경제를 살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한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에 맞도록 농지 규제를 푸는 것만이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 속도를 높이는 대안입니다.

날로 궁핍해지고 피폐해져가는 농촌경제 살리기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9.25)

5분 자유발언 :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발언요지 : 평창겨울올림픽의 강원이익 극대화를 위한 SOC 대응 방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는 평창겨울올림픽 준비 부진과 강원도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창이 남아공 더반에서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고 이미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요하는 철도를 비롯한 SOC사업 추진이 부진해서 개최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도를 비롯한 SOC사업은 7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이며, 공사구간 또한 산악지역으로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원주~강릉 철도사업만을 보더라도 3조 9,000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둔내~강릉 구간만 공사가 진행 중이고 원주~둔내 구간은 2013년 12월에 구간이 확정되었고, 강릉시내 지하화 공사도 이제야 공사가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2017년 프레올림픽을 감안하면 불과 공기는 2년이 고작이라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본 노선은 올림픽 기간 내에 개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노선 개통으로 올림픽 기간 중 11만 명의 올림픽 참가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국내 참가자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 교통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간 중에 폭증하는 교통문제의 완충역할 수행을 위하여 원주~여주 복선전철사업의 조기 추진이 거론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주~여주 복선전철사업은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아직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아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OC사업이 인력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 물류 수송만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은 강원 동해안의 물류를 내륙으로 수송하는 수송로로서의 역할과 겨울올림픽 개최 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인구와 호남·영남의 참관 국내 방문객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조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노선이 개설되면 1일 평균 34회의 여객열차와 33회의 물류수송열차가 운행중인 청량리~원주 간 중앙선의 단선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통량의 포화상태를 해소하고 분산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노선의 건립이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것만으로 방관할 수 없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겨울올림픽을 유치하고 4년의 세월을 하는 일 없이 보냈다면 앞으로의 4년도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닙니다.

철도사업의 경우 일반 도로사업과는 달리 건립 후에 반드시 시험 운행기간을 거치고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운행을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2년여 밖에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더 개최지 도민으로서 속이 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겨울올림픽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겨울올림픽이자 평창올림픽으로 세계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앙정부도 대응이 부실한 점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강원도만의 올림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중앙정부에 당당히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여 건립한다고 하지만 우리 집 안방으로 거치는 노선은 분명히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도와 강원도의회가 강력한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 두 노선 모두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10.10)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피서인파가 몰려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관령에 첫서리가 내렸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초 미시령터널에 대하여 언급할 예정이었으나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동계특위 구성에 대하여 발언함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5분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오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도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설을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의회는 스스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체로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각개의 의원 한 분, 한 분이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에도 의원들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의가 있고 상호존중의 문화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온전히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고 제대로 도민을 대표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7월 18일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동계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주문에 분명히 구성인원이 15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한 것은 상임위별 인원 할당도 고려했지만 본 의원은 더 많은 의원님들이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침체된 동계올림픽 열기를 전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전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구성인원을 10명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대표발의한 의원을 무시한 처사이며 함께 서명하신 동료 의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동계특위 활동기간과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재발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동계특위 구성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에서 참으로 낯 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계특위 구성안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2개가 발의된 것입니다.

2011년부터 본 의원은 동계특위 구성안 발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는 없고 오로지 개인의 명예만을 쫓는 분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적인 협의체인 의회에서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 강원도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그리고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지원에 모든 동료 의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예산 확보와 스포츠시설 확충과 SOC사업 확대를 위해서 함께 활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계특위 구성의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계특위 구성은 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동료 의원의 단합된 관심과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 가슴깊이 새기고 자중하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10.10)

5분 자유발언 : 장석삼 의원 (새누리당, 양양군 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의 하늘은 열어야 한다.

반갑습니다. 양양 출신 장석삼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소중한 정책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김금분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발전과 154만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부단히 애쓰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또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특히 도민의 공복으로서 묵묵히 도정을 뒷받침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가 향후 50년의 미래를 넘어 100년 대계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명운이 좌우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합리적이면서도 타당성 높은 공감의제를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도는 북유럽의 선진 소강국처럼 관광을 각종 산업에 접목시켜 나가야 하는 관광산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대기업을 통한 산업도시로 성장하면서 시민소득 1위로 올랐다면 우리 도는 미래관광산업을 기반으로 지금은 다소 흔들리고 힘들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약의 기틀을 일구어내야만 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도의 하늘길인 양양국제공항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양국제공항은 3,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지난 2002년 개항하였으며 지난해까지 공항 이용객 수는 78만여 명으로 모두 1만 5,000편의 항공기가 운항되었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12년 동안 투입된 지원금은 약 7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적 침체기에 빠져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라는 호재를 만났고 올림픽 관문공항으로 집중 투자하면서 중국관광객의 성장과 변화 속에 민선 5기 도정에 반영하여 지금은 개항 이래 지난 9월에는 이용객 20만 명을 돌파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투자 대비 효과성을 비교하며 현재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지원예산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한 곳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우리 도의 실질적인 관광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희망과 믿음은 동서고속도로의 인프라 구축과 그 완공으로 미래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양양공항은 주변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회생이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각의 원점을 멀리 다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속도로의 인프라 구축은 청주공항이 수도권과의 근접성으로 실마리를 찾아 활성화되었듯이 동서고속도로의 완공은 양양과 수도권과의 거리를 불과 1시간 30분으로 단축시키는 허브공항으로서의 대체기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은 우리 도의 심장이자 동북아로 뻗어나가는 관문이기에 앞으로 이용객 유치는 물론, 물동량도 늘려 대외무역의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하며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도내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연계한 경쟁력 높은 관광상품도 개발해 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양국제공항에 연속성 지원이 시급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양양국제공항을 설악권이나 강원도만의 공항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동북아 중심 공항으로 키워내기 위한 분야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집중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부양으로 직결시키고 시너지효과가 도내 곳곳에 투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광정책과 접목시키는 과감한 인식 전환과 주도면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현재 국내선 정책을 국제선과 병행하는 과제로 삼고 저가항공 및 준중형기 도입을 주문하고 다양한 노선 확대와 개항공항 지정과 활주로 연장, 동해북부선 연결 시 공항역 설치 등 추진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재원 마련을 위하여 조속히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건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 사업자와의 긴밀한 비즈니스로 도내 경기부양 촉진, 운항지원금 조정, 저가상품 자제로 다양한 음식·관광·숙박을 유도하여 강원도 고유의 문화를 보여주며 정기성 전세기의 전환과 카고 등 화물수송능력을 지향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양양국제공항하고 연관된 인근 지자체 및 타 시도와의 공조로 재정지원금을 요청 및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초선인 저에게 양양국제공항은 늘 함께해야 할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나 출국장에 들어서면 설레는 마음을 느끼듯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가 우리 도에 밝은 미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믿음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 작용을 통해 경기부양이라는 과실을 반드시 따낼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2002년 개항 초기부터 민간인 최초 100여 차례 전세기를 운항하였던 경험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로서 많은 손실을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부디 이제 갓 날갯짓을 한 양양국제공항이 좌초되지 않고 안착할 수 있게 154만 도민의 희망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10.10)

5분 자유발언 : 심영곤 의원 (새누리당, 삼척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삼척원전유치에 대한 삼척시민들의 냉철한 선택과 강원도의 미래

안녕하십니까, 삼척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심영곤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 의원 및 동료 의원님,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삼척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며 또한 강원도 전체에 큰 여파를 몰고 올 삼척 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 지정 고시 철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강원도가 삼척 원자력발전소 백지화 및 청정 강원도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랜 문화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삼척시는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정책으로 2012년 삼척시 근덕면 일대가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원전 유치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민 수용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결과입니다.
이에 삼척시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의 수용성 여부를 확인하고 갈등 해소 및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삼척 원전 유치 신청 철회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선관위가 주민투표 사무관리 위탁업무를 맡지 않으므로 삼척시민들은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10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표자의 85%가 원전유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삼척시민들의 자유롭고 정당한 의견이 표현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전은 주민투표의 결과를 떠나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우리 청정 강원도에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삼척시에 이웃한 울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수산물 생산기반 파괴와 인구유출이 계속되는 등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대재앙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원전은 국경이 있지만 방사능은 국경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냉각수는 태평양으로 흘러갔고 방사능 증기는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원전은 없습니다.

원전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생산과 송전까지 원전 주변은 죽음의 땅이 됩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땅과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척시와 인접한 동해시, 태백시,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관철시킴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자연 강원도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소 백지화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삼척시민들이 선택한 투표결과를 받아들여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강원도에 원전을 건설하려는 정책을 즉시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강원 도민 모두 원전 백지화를 위한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10.10)

5분 자유발언 : 최성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6선거구)

발언요지 : 양보와 협력 속에 강원도 발전을 이루어내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반도의 중앙부 강원도에 살고 있는 한 도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큰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의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도민의 하나된 힘으로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여주~원주 간 수도권철도 건설,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 국립동계스포츠훈련지구 조성 등의 주요 당면과제가 펼쳐 있습니다.

원주혁신도시의 올바른 정착, 원주기업도시의 성공적 기업 유치와 함께 원주의 첨단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산업자원부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집중적인 행정적 지원과 533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에 2013년 말 기준 4,966억 원의 매출과 2억 5,989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려 지난 5일에는 전국 160개 산업특구 중 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하여 첨단복합단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북극항로시대를 열고 중국의 환동해권 출구 전략지로,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와 대륙으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며 세계적 관광지로 다시 태어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춘천의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은 외국인 직접투자 1억 불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 연간 200만 명 이상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며 10년간 5조 원이라는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춘천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재창출하고 문화관광 육성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전 국토의 16.8%, 전체 인구의 3%인 150만 인구가 사는 작은 땅 강원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소득 2배, 행복 2배”의 목표는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한 의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정을 이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되시는 공직자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의 엇박자나는 이전과정과 기업도시의 조성과 기업유치 상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불안한 출발 등과 함께 SOC사업의 확실성 없는 기대감 등을 무어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정을 이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이 모든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이를 어찌 책임지실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 전 5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원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와 6,009억 원이 투입되는 춘천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유치 실패라는 뼈아픈 일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우리에게 가까운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18개 시·군 자치단체의 이기적인 면이 개입되지 않는 대승적 차원의 접근과 역할, 교류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화합의 장을 열어가는 데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된 강원도”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손잡고 희망을 열어갈 때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된 강원도”를 이끌어 내는 그 맨 앞줄에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바로 서시어 소통하시고 화합을 이끌어내셔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아홉 분과 도의회 마흔네 분의 의원님들이 정치적 무장해제로 진실성 있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긴밀함 속에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웃음과 말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강원도의 진정한 미래를 걱정하시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뭉치면 그 속에서 희망은 저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해하고 존중하며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통 큰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며 최문순 강원도정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정의 강한 의지와 열정을 기대하며 작지만 강한 강원도, 역동하는 강원도,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강원도, 행복이 넘치는 강원도의 미래를 그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10.10)

5분 자유발언 : 김용래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교육 현안 개선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강릉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 교직원의 건강검진현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동 시행령 제25조, 암관리법 제11조 암 검진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하여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5조에 의거하여 사업자와 근로자 공히 1차에 5만 원, 2차에 10만 원, 3차에 15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의 2012년 건강검진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 1만 4,674명 중 1만 2,720명만 1차 검진을 받아 평균 86.68%의 검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99.6%, 화천교육지원청은 66.23%로 무려 33.43%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만 해도 미검진자는 3,634명으로 과태료도 1억 8,170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건강검진은 교원과 일반직 기준에 따라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데

한 번 건너뛰면 2~4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최근 2년간 강원도 교직원의 건강검진율은 약 80% 정도로 일반 기업체의 92.5%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폐결핵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결핵은 국내 전염병 사망 중 75%를 차지하고 사망순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교육청 일부 교직원들에게서 폐결핵의증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총 542명의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되어 해당 426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도에서는 교사로부터 폐결핵이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활동성폐결핵의 경우 접촉자의 30%가 감염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면역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병력을 숨기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바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교육감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0% 건강검진이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10.22)

5분 자유발언 : 이기찬 의원 (새누리당, 양구군 선거구)

발언요지 : 지역은행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 청춘양구, 양구의 큰아들 이기찬 의원입니다.

오늘 벌써 청말띠의 해 만산홍엽지절(滿山紅葉之節)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새해 목표했던 부분들은 얼마나 또 하고 있는지, 그 결실의 계절에, 수확의 계절에 제 자신도 한번 올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정말로 말처럼 많이 뛰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도 해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 의원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하지만 의원은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 지역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추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시황은 일찍이 중국을 천하통일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화폐 개혁이었고 도량형의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스페인의 함대가 머무는 자리에는 돈을 통한 생산성과 돈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번영과 세계 제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의 관리와 생성이 세계인류문명을 함께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의 지역은행 설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의 경제 상황을 보면 강원도는 2012년도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이

33조 8,530억 원으로 전국의 2.5%, 기업체는 총 113개로 전국의 3.4%이며,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39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왜소한 경제 규모로 인해 강원도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강원도 자금의 역외유출 비율은 3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경쟁력이 비슷한 충북의 26.8% 보다 훨씬 높습니다.

강원도가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189개의 기업들은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시중은행을 방문할 때 수도권보다 담보비율이 낮고 정착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이전기업은 도내 은행권보다는 수도권 은행을 이용함에 따라 경영난에 봉착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지역은행이 없기 때문에 또 지역 이전기업에게 자금에 대한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핏줄은 자금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은 지역의 경제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방은행은 지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지역 내에서 순환시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환류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절 강원도를 모태로 한 강원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 때 조흥은행에 합병된 후 강원도의 지역은행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강원도에 지역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도민의 힘을 결집하여 지역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은행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충해야 합니다.

1년간 외지로 유출되는 자금이 무려 4조 원이 넘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밀착경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은행 여신규정에는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에 신규대출을 45%, 지역은행은 60% 이상을 지역 내 기업에 대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경영자금 확보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발전, 지역인재 육성 견인기능이 확충됩니다.
대출 수요를 충족하고 금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행의 경영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청년 일자리가 1,000개가 만들어져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금융 관련 우수인력에게 취업기회를 늘림으로써 지역경제활동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첫 번째 체계적·전략적·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TF팀을 만들고 외적으로는 공식적인 에이전트사를 만들어서 도 특성에 맞는 설립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업무분담을 하고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설립자본금 모집 등을 추진하고 정치적으로는 1도 1은행을 위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은행 설립에 따른 과다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타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재 강원신용보증재단 청사를 이용하여 기초자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역 연고 대기업투자자 확보 도 시·군 금고 선정 등으로 금융시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은 단일시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계금융시장에서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국내 은행, 보험 등의 통합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시대에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현 정부나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여러 저축은행 등의 파산이나 강원도민들의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진 강원FC의 트라우마를 연관해 염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앞장서서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도내 경제 관련 단체들과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한다면 지역은행은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본 의원에게 지역은행 설립을 위해서 기본 출자금이 250억 원이지만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도의원들께서도 더 좋은 투자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충청도에서는 과거 없어진 충청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되찾고자 노력하여 하나은행을 충청하나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신한은행을 강원신한은행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밥그릇은 우리들이 찾아먹어야 합니다.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입니다.

강원도 지역은행 설립은 아우구스투스황제의 말처럼 “천천히, 서둘러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10.22)

5분 자유발언 : 김기철 의원 (새누리당, 정선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동계올림픽 이후 활용방안과 FTA 농업관련 대응방안

아리랑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축복의 땅, 정선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행복한 웃음의 최문순 지사님, 행복한 학교 만들기 민병희 교육감님!

훗날 당신들이 있어서 오늘이 행복했다고, 내일이 아름다웠다고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의 기초 산업이며 이 땅의 다원적 기능의 정점에 있는 농업이 어느 때 한번 여유로웠던 적이 있었겠습니까만 특별히 자유무역협정 WTO에서 국가 간 협정인 FTA로의 변화로 심각한 도정에 직면했기에 저는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 환형은 미국과 EU 등 46개 국과 협정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등 3개 국은 타결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등과 협상을 준비 중이거나 협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칠레, 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등은 대부분이 농축수산물 수출 강대국입니다.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의 피해 조사에 따르면 한미FTA 15년차 생산 감소액은 12조 2,000억이 예상되고 한EU FTA 15년차 생산 감소액은 2조 6,000억입니다.

한중FTA는 한미FTA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달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간접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입 증가로 인하여 작목 전환이 유도되고 이는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수입 증가로 인하여 소비 경쟁의 관계에 있는 타 품목의 가격 하락에 따라 소득이 감소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약 27조에서 52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FTA의 경우 생산비는 우리의 20~30%에 불과하고 가격은 우리 농산물이 2~3배 수준이어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1915년부터 쌀 관세화 개방으로 쌀 생산 기반이 급격히 위축되어 국제가격이 요동칠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 쌀 시장의 큰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식인 자포니카 계열의 가격은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민경제 불안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우리 도만이 가지는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정 시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첫째, 농가소득 안정이 농정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쌀소득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을 포함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확보 차원의 농가소득 보장이 가능한 직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도의 다수 농가가 해당되는 명목뿐인 밭 직불금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정 역할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소득원 개발과 낙후지역 개발, 특산품 개발, 원산지 관리 등 지역 밀착형 농정의 강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농정추진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모든 농산 식품은 안전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우리 농산물 식품의 경쟁력은 안전성 제고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여 이를 위한 이력 추적제, 친환경 유기생태 농업, 원산지표시 제도, GMO 라벨링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여야할 것입니다.

넷째, 쌀 생산기반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한 고정 직불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보전 비율을 100%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농업·농촌을 살릴 범국민 운동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로컬 푸드, 학교 급식, 슬로우 푸드, 슬로 시티, 생협, 사회적 기업, 각종 직거래, 토종 종자 보급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과 농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농정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래 농정 패러다임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극대화와 안전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의 강원도 농정 방향을 재점검하고 미래 농업

가치 창출을 위해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하며 감히 초선으로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11. 7)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하여

자료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을 살피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9월 22일 양양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개항 12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20만 명을 경신했고 국제선의 경우 9개월 만에 이용객 수가 개항 이후 12년간의 누적인원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보다는 가슴이 답답해 옴을 느꼈습니다.

100원의 예산을 투자해 도민이 100원의 행복을 느꼈다면, 그리고 100원만큼의 강원도 미래가치를 만들어냈다면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의 재정정책을 보면서 본 의원은 효과적 측면이나 미래지향적 측면 등 어느 것을 보아도 낭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강원도의 야심찬 계획 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취항노선 수만 증편되었고 공항 이용객 수만 늘어났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강원도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발전과 어떻게 연계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002년 양양공항 개항 이후에 2010년 9월까지 강원도와 인근 지자체에서 양양공항 활성화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을 보면 국제선 81억 원과 국내선 34억 원을

통합해서 11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으며, 강릉・속초・양양의 지원금까지 합치면 125억 원이 넘습니다.

자료 2번 부탁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노선을 더 늘리기 위해서 90억 원대의 운항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2일까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간 전세기 운항장려금으로 전세기 사업자에게 국제항로의 경우 1편당 400만 원, 국내항로는 편당 150만 원씩 총 6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돈으로 관광객을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양공항 이용객을 보면 국제선 이용객 중 중국 관광객이 98.3%로 압도적이며 국내선 이용객도 6만 7,000명으로서 중국 관광객이 5만 6,000명으로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입국 중국 관광객 여행일정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의 계획이 얼마나 허구인지, 어떻게 죽을 쒀서 그야말로 강아지를 주고 있는지 여실히 나타납니다.

중국 관광객의 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1일차에 양양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지만 바로 제주도로 이동해서 하루를 보내고 3일차와 4일차는 서울에서 면세점과 도심 투어를 진행합니다.

강원도 일정은 출국 전날 대형 콘도에서 숙박을 한 뒤에 출국 직전 3시간 정도 속초 아바이마을과 설악산, 또 양양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특히 소비성 일정 중 강원도 관광은 양양 전통시장을 30분 정도 방문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원도가 양양공항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지역 기여도는 등한시한 채 투입예산으로 제주와 서울에만 큰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원도민의 혈세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서울과 제주도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체류하는 동안 1인당 약 30만 2,000원을 소비했으며 이는 1인당 도에서 지원한 모객 인센티브 3만 원의 10배가 넘는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한국을 방문할 중국 관광객이 6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약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 1인 지출액의 12% 정도만 강원도에서 소비하는 것을 가지고 강원도가 큰 이득이나 보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도 좋고 동북아 거점공항도 좋습니다.

이용객 100만 명 시대를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문한 관광객들이 강원도의 숙박시설에 머물러야 하고 강원도의 식당에서 그야말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강원도의 관광지를 관광하며 쇼핑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행업체와 항공사나 다른 지역의 배만 불리는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볼거리와 먹거리가 부족합니까?

중국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한류와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쇼핑할 수 있는 면세점을 확충하고 쇼핑공간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먹거리를 개발하고 편안한 잠자리와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세계 속에 강원도를 만들어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11. 7)

5분 자유발언 : 안상훈 의원 (새누리당, 춘천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도청 주차문제 해결 및 춘천시 동면 저수지 활용 방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산과 강, 호수가 그림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정취가 넘치는 도시, 춘천지역 출신 도의원 안상훈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위해 1일 평균 333㎞를 이동하시면서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청의 심각한 주차문제로, 사소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으나 도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원인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도청광장에서 서울에서 왔다고 하는 민원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민원인이 하는 말이 도청에 주차를 하려고 세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 아래 골목에 주차를 하고 온다고 하면서 그 민원인이 하는 말이 “강원도지사는 동계올림픽 준비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도청 주차장의 확충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짜증스럽다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지사님이나 핵심 간부공무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관 앞에서 차량에 승하차하시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등원하실 때 의원 지정석에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도청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심각한 주차문제와 미래의 청사 부족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 첫째는 도본청의 직원들 차량은 의회사무처 뒤편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공간과 산꼭대기 주차장, 그다음에 신관청사 뒤편 웰빙센터 앞의 세 군데의 주차면을 합하면 약 180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일체 주차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차량을 주차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도청 외곽지역에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사님 공관 앞에 약 1,900평과 그다음에 세종호텔 올라가는 쪽의 콜센터 부근 약 400평 정도를 구입하면 24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충분히 주차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 그것은 계산상으로 맞는 이야기이고 실제는 우리 도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나 회의, 또 인근지역 주민들, 인근지역의 기관·단체 차량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 번째 조치할 사항으로는 바로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쓰고 있는 -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재산을 구입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재산은 면적이 약 1,800평이 되고 건축된 지 50년이 다 된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볼 때 약 35억 정도 되는데 감정하게 되면 40억 원 내외가 될 것이기 때문에 3년 분납을 조건으로 구매한다면 우리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구매협상에 임할 것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동면 장학리에 있는 후평저수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본 저수지는 지난 1957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면적이 약 3만 평에 몽리면적은 25ha였는데 2000년대 이후 동면 만천리와 장학리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국도 56호선 확포장 공사 등으로 인해서 급수구역이 전혀 없는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본 저수지를 문화·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시를 드리면서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인근에 위치한 강원중·고등학교와 한림성심대학과 연계해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 또한 춘천의 동부지역, 즉 후평동과 만천리, 장학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는데 주민의 여가선용 활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감님, 교육연구원 구매협상에 임하시겠죠?

국공유지도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선거 기간 중에 돌아다녀보니까 직원들의 공간이 너무 넓어요.

엄청 호텔처럼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최문순 지사님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춘천지역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후평동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사님 모친이 후평동 1동에 살고 계십니다. (일동 웃음)

바로 기계공고 앞쪽에 살고 계시는데, 유남순 여사님이시니까, 후평동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11. 7)

5분 자유발언 : 권혁열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고교 무상급식이 우선 순위가 아니다.

저는 오늘 '무상급식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교무상급식이 우리 강원도의 현실에서는 모든 여건상 시기상조이기에 고교무상급식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고교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학교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토끼처럼 학교에서 밥만 먹고 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기에 영합해 지지자들 그늘에 숨어 학교를 밥 먹이는 장소로 전락시키려는 분들이 있어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유소년과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입니다.

또 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제시하는 선생님들의 소중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의 장소가 석면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석면은 주로 교실 천장과 벽면, 복도, 화장실 천장과 벽면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면의 피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석면 비율은 93%로 가장 높습니다.

중학교 91%, 고등학교 90%가 석면 범벅 학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부산, 경남과 함께 93%나 됩니다.

즉, 도내 학교 10곳 중 단 한 곳도 온전한 학교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교육청의 조사결과를 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치원 377개 원 중 325개, 초등학교 389개, 중학교 155개 학교가 석면 범벅입니다.
특히 더 각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는 도내 전체 7개 학교가 석면 의심 학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초·중·고 교사 12명이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에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아홉 분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성상 잠복기가 긴 석면의 피해로 인한 발병은 최고 3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숨진 교사들은 평균 27년 동안 재직했고 대부분 은퇴시기를 전후해 발병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본다면 교사 어느 누구도 석면의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만 석면피해자입니까?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언제 석면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석면범벅 학교 대책은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전면 교체작업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석면의 잠복기가 긴만큼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도내 석면 의심 학교 판정조사 결과 상태가 양호한 3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면 교체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석면 의심 학교를 일일이 교체할 수 없고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석면 범벅 학교 시설개선이나 안전한 교실 만들기 예산으로 고교무상급식에 써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매뉴얼과 선사가 제출한 서류를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했었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석면 범벅 학교 문제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도내 대부분의 학교를 관리상태가 양호한 3등급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왜 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현장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도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분야에 예산이 더 투입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서는 같은 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선거구호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의 견해도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미래를 위한 지덕체를 함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도의 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약 8,7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동계올림픽 및 산적한 SOC 사업 및 복지예산으로 인하여 1,2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알펜시아 관련 이자만 매년 370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고교무상급식으로 인하여 635억 원의 빚을 더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21.61%이고 도교육청도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전국에서 최초로 고교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재정자립도가 좋은 경남과 경기도에서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고교무상급식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학생과 선생님, 또한 학교 시설개선이 우선입니까?
아이들이 내일의 희망을 가꾸기 위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와 교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복지, 처우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눈뜨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와 한국환경공단 수원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나서 관내 153개 각급 학교에 대해 학교 내 석면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왜 고교무상급식보다 석면 범벅 학교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사와 교육감은 잘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짜 밥 먹이기, 아니 고교무상급식을 위해 정작 중요한 기본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중단하기를 기대하며 차제에 고교무상급식은 우리 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도민들의 선택을 강요하고 의회를 압박하고 일선 시·군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11. 7)

5분 자유발언 : 신영재 의원 (새누리당, 홍천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는 현행의 기준이 투표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 대 1에 이르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구수만을 가지고 판단한 결과로서 지역의 특수성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명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이 그대로 단순 적용된다면 수도권에서는 24곳의 선거구가 새로 생겨나게 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18곳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며 우리 강원도의 경우 홍천·횡성 선거구와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 등 두 곳의 선거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도농 간의 양극화 및 정치적 쏠림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 자명하며, 특히 개별 행정구역의 독자성이 무시되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국가정책기조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면적은 대한민국 면적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소속 국회의원은 9명뿐이며 전체 300명 국회의원의 3%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은 강원도 면적의 3% 미만의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48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현재의 중앙정치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강원도는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하려고 해도 인구수, 경제성 등을 이유로 늘 무산되고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적다고 해서 지역 대표성이 축소된다면 강원도 내 농어촌 지역 복합선거구는 정치적인 물리적 힘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과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 내 9개 선거구는 지역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지켜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대로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강원도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원 선거구와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민심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지방의회의 정치 영향력은 약화되고 지역민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기 힘겨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리라 봅니다.

우리 강원도는 WTO에 의한 쌀시장 개방과 미국, 중국, 유럽 등과의 FTA 협약으로 인해 농촌과 농업인들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특히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 등으로 강원도의 살림마저 넉넉지 않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강원도의 의석수마저 줄어든다면 중앙정치 무대에서 발언권은 물론 정치력도 약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거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헌재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범도민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과 도민의 뜻을 전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강원도 선거구 대책위원회' 설립을 건의합니다.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구 재 획정과 관련된 지역과 연계하여 지방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도출하고 선거법이 개정될 때 강원도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도내 9개 선거구와 2018 겨울올림픽을 비롯한 강원도의 현안사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및 의원님들께서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11. 7)

5분 자유발언 : 함종국 의원 (새누리당, 횡성군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정 현안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새누리당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세와 신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전을 보면 정치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치를 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공동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념과 사상이 잘못된 사람을 대표로 뽑음으로써 혼선과 불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중에 안민석 국회의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국가가 호구냐, 강원도가 돈을 다 내고 해라. 강원도민들이 돈을 걷어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는게 맞다. 국고를 한 푼이라도 더 빼가지고 일단 지어 보자는 것 같다."는 등 강원도민을 비하하고 온 국민의 성원 속에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강원도민만의 지역행사로 왜곡한 저급하고 입에 담기도 창피한 행태의 막말성 발언을 접하는 순간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9월에도 오색로프웨이 사업추진 부결에 대해 당시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합당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논평을 써 강원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이 국회의원은 2012년에는 오색로프웨이 중단 촉구 결의안을 20여 명의 찬성자를 모집해 국회에 상정하는 황당한 사건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김동철 국회의원은 2012년 강원랜드 규제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강원도 폐광지역의 실정과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한 폐광지역 도민의 분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들의 지역이었으면 이렇게 하였을까?

대한민국에 올림픽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강원도민만일까?

다리가 불편해서 설악산에 올라가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원도민만 있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강원도민만을 위한 현안이고 문제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지사님 임기 중에 어떻게 하나같이 지사님과 당을 함께하는 분들께서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 지사님의 정치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당 차원의 대응과 소통을 소홀히 한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지사님의 스킨십은 100만 불짜리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부디 정당 내에서도 이 같은 스킨십으로 강원도의 현안에 대해서 100만 불의 가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정당인이기 이전에 강원도민입니다.

모두가 강원도가 잘 살기를 바라고 도민이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 염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사님, 우리 모두가 강원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탤 테니 다시는 이런 발언이나 행동으로 도민을 분노케 하지 않도록 지사님의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잊고 살기 쉽고 실천하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등 뒤에는 우리 도민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11.25)

5분 자유발언 : 김규태 의원 (새누리당, 동해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노 · 사 · 민 · 정 활성화와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파도치는 도시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인사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어 내기 위한 평소의 소신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민선 6기 도정의 슬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의 소득이 향상되어 행복이 배가 되고 이를 통해 도민이 하나 되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꾸며 사는 세상, 남녀노소 지역에 구분 없이 도민 모두가 갖는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강원도가 가야 할 길은 너무도 멀고 힘겹게 느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국 평균 50.1%의 절반도 안 되는 21.6%의 재정자립도, 남과 북, 동과 서로 나뉘어진 지형적 특성과 인구 구성, 도내 취업자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산업구조 등 '소득 2배, 행복 2배'라는 소망이 우리가 돌려야 할 바람개비라면 그것을 돌릴 바람의 환경은 너무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그것을 들고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스피드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겠지만 그 계획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 본 의원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추진으로 SOC 확충 자본 유입과 개발수요 증가 등 일시적 성장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투자와 개발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장기적 비전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익성이 담보된 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창의력을 발판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작지만 강한 기업, 다양한 업종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 지원의 시작이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그 방향을 바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노사가 원하는 교육은 모두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시의 지원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직업훈련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중소·영세 사업장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10여 년째 이어가고 있고 취업 미스매칭이 존재하는 업종에는 다양한 교육과 실험을 통해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의 경우 시의 지원으로 노사가 함께 숙박 가능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 지역의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여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예로 든 기초지자체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 그 틀이 미약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찾아지고 만들어져 강원도 전체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다양한 업종에 우수한 인력을 만들어 내는 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 취업자 중 70%가 넘는 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저임금·비정규직화 문제 등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향을 공유하며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하는 것까지 모두 노사민정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첫 사업으로 산하 18개 시장·군수 모두와 도내 모든 노사민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강원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 비전을 공유할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노사민정이야말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향해 끝까지 함께 멀리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해와 협력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넘어 진정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노사민정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11.25)

5분 자유발언 : 홍성욱 의원 (새누리당, 태백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랜드와 전직이사와의 민사소송 관련, 감사원의 편파적 표적 감사와 관련,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지역 길들이기 지시 관련

300만 강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홍성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정에 힘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교육을 책임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일 본회의에서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승인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관심 있게 다루어야 할 한 부분인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4개 시·군, 강원도, 정부의 관계를 되짚어 보고 이를 정리하여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개선해 보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랜드의 설립은 당시 광산 합리화로 인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자 광산지역 주민들의 피나는 투쟁의 결과로 당시 정부로서는 승인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를 승인한 것은 이를 중심으로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 하나로 설립하였습니다.

초기의 강원랜드는 그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며 카지노의 건설장소를 두고 폐광지역 간에 갈등이 있었으나 강원도의 중재와 노력으로 스몰카지노로 출발하여 초기 성공이 보이자 폐광지역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각 지역의 이익보다 현재의 카지노를 더욱 키워서 반석 위에 올려놓은 다음 우리의 이익을 찾자는 강원도의 설득을 믿으며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제주도, 전라북도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요구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지금의 강원랜드가 탄생

하기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4개 폐광지역 시·군은 참아왔습니다.

설립 초기의 강원랜드의 사업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그 첫째 사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출연으로 사업시행의 첫 해는 강원랜드 이익금의 10%를 시작으로 점차 그 출연금을 올려 50%까지 늘려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중요 사업계획으로는 폐광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약속된 각종 개발계획을 지원 또는 직접 실행하여 지역 경제를 살려간다는 중요한 사업 계획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적과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출발한 강원랜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막대한 이익과 자본금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종합리조트 회사로 발전하였으나 강원랜드 출범 16년이 지난 현실은 초심을 잃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지역사회와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는 현실입니다.

먼저 폐광지역의 현실을 점검하여 보자면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지역은 도시의 외관은 강원랜드 건물과 관련 시설들이 입주하여 화려한 외모는 갖추었으나 서민들의 생활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따른 전·월세 부담 증가와 강원랜드의 성장과는 달리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경제로 인한 이중고를 견디지 못하는 서민들의 이주로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으며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많은 외주업체의 환경은 나날이 나빠져 현지민들의 이직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가장 큰 지역인 태백시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투자로 인한 과도한 부채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행탄광의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삼척시 일원과 영월군의 사정 또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강원랜드 2013년도 제16기 재무제표에 의하면 카지노 매출액 1조 2,773억 원의 매출 중 국세 2,125억 원과 관광진흥기금 1,274억 원, 주식배당금 566억 원, 총 3,965억 원으로 강원랜드의 수익금 중 약 72%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을 앞세운 감사를 빌미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간에 약속된 각종 사업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2012년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도산위기를 살리고자 결정한 강원랜드의 지원금 150억 원을 문제 삼아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추천 이사를 모두 부단체장으로 교체하는 일을 단행함과 함께 2013년 말 특별감사팀을 투입하여 당시 지원을 찬성한 이사들의 판단을 배임혐의로 결론

내리고 강원랜드로 하여금 당시 이사 8명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토록 지시하여 강원랜드와 이를 항변하려는 이사 측 간의 변호사비만 10억 원에 이르게 함에도 부족하여 산업통상부 친위 사회단체를 통한 형사고발까지 진행하는 정부의 소위 폐광지역과 강원도 길들이기 행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를 중심으로 그간 소원해진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날로 심해지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항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11.25)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도의회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도민의 행복 2배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 한 신념이 강했던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정치 이의 있습니다.", 2015년도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최근 강원도 비정규학교, 즉 야학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야학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등의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해 배움을 평생 가슴속 깊은 응어리로 지니고 살아오신 도민들께서 검정고시에 합격해 졸업학력 인증을 받는 기쁜 자리였습니다.

졸업생 대표가 눈물을 보이며 지난 시간 소회를 읽어 내려갈 때, 한 분, 두 분을 시작으로 마지막 줄을 읽을 때 거의 모든 졸업생이 우시는 모습을 보며 '오늘이 평생 가슴에 맺히셨던 한이 풀리는 날이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란 생각에 저도 함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내년부터 강원도 전역 야학 지원예산 7,200만 원 중단과 함께 가슴에 맺힌 배움의 한을 풀어드리는 날이 이제 달력에서 사라지려 합니다.

지원을 했던 해당 과의 업무와 맞지 않아 80% 이상을 청소년으로 채우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니 연령비율을 맞추라는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요즘은 청소년 교육시설이 따로 있고 실제 야학에서 배우는 도민들 연령이 대부분 가정형편 등

으로 배움의 시기를 놓치신 어머님, 아버님 세대임을 감안하면 실제 중단을 통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과의 업무 성격과 맞지 않다면 다른 과에서 비슷한 명목으로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집행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다면 투명하게 개선해서 도민들께서 계속 학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갑작스런 통보로 이제 그분들의 한이 풀릴 기회가 박탈되기 직전입니다.

도 전역 7,200만 원 지원, 적지는 않지만 5조 원에 가까운 도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예산으로 그처럼 많은 도민들께서 실제 '행복 2배'를 느끼실 수 있는 다른 사업이 또 어디에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일몰 아닌 일몰과 함께 여러 신규 사업들이 포진해 있는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긴요긴급한 예산도 담겨 있었지만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그로 인해 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불요불급하고 단순히 공약에 매몰된 거액의 예산들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진행자가 대학 축제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의 등록금이 하늘에서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을 검토하며 "몇몇 사업에서 내년 국민들의, 우리 강원도민들의 세금이 당장 불요불급하거나 단발성 행사 등으로 도처에서 줄줄 흐르게 생겼습니다."라고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아니 효과라도 있을지, 그 사업들로 몇 명의 도민들께서 마음 깊은 곳 감동과 고마움의 눈물이 흐르는 '행복 2배'를 느끼실지, 약속이라는 단어에 묻혀 현실을 외면하고 사업을 이행하는 것과 용기를 내어 현실을 직시하고 차질 없는 올림픽 준비 이후로 약속 이행시기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도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정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진짜 멋진 리더다운 결단일까 등 여러 개의 물음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의 생각과 함께 한 가지 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도 교육감님들은 교육자이시지 단 한 번도 정치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님들이 밤을 새워 숙고하시고 신경 쓰셔야 할 정작 중요한 요점은 교육 그 자체인데 방향을 잃고 교육 외적인 것, 정치인들처럼 쟁점을 만들고 편을 나누어 관철하는 것에 관심을 두시는 걸 보며 본연의 업무에 대해 혼동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군이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무기를 구입하거나 개발할지, 어떤 훈련을 할지, 어떻게 전투력을 극대화시켜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지인데 병사들의 휴가 교통편이 어떤지, 병사들이 다 똑같은 시계를 차는지, 식자재 공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온통 관심을 집중한다면 장군이 가져야 할 본연의 업무에 대한 방향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방은 국방력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 그를 뒷받침할 환경,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자라게 하는 인성교육 등에 투자하면 됩니다.

교육이 아닌 그저 교육 외적 쟁점에 불과한 두 가지 사항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 의원은 10대일 때 먹어보기 힘든 돈가스를 20대일 때 더 자주 먹을 수 있었고 20대일 때 다녀보기 힘든 해외를 30대일 때 더 자주 가볼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거리에 쓰러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정신으로 옆 사람처럼만 살아낸다면, 이처럼 10년 정도씩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여건이 나아져 자동차를, 집을, 여유를 더 쉬이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상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30대의 부모와 이미 최저생계비 130% 이내의 가정에는 지원되고 있고 아이 성적만 오른다면 월 몇 만 원 이내의 급식비는 충분히 낼 의향이 있는 40대~50대 중산층 이상 부모님의 경제여건을 생각하면 2개월~3개월만이 아닌 전체 기간을 두고도 상식적이고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그와 관련해 신념이 강했던 정치인이 했던 발언인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란 말을 인용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재정과 현실에 눈감으며 약속에 매몰되어 빚더미를 후손에게 전해줄 수도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출직분들, 이를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지만 또 충언도 드릴 수 있는 공직자분들이 나중에 도민들로부터 “빚더미 강원도를 만든 당신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11.25)

5분 자유발언 : 진기엽 의원 (새누리당, 횡성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무상급식 및 FTA대응 농업 관련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열의를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강원도 농업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한중,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이미 한미, 한·EU 등 총 52개 국과 타결되었고 각국과의 FTA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모두 농업강국, 축산강국이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농축산물 비중이 큰 한중, 한·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에 이어 오세아니아까지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완대책이 강원도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수출 증대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어업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식량 주권을 포기한 나라는 미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품종 개발, 기술 보급,

농업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이를 위해서 농어업 분야에 예산을 확대 투자하여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서를 펼쳐 본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 농업예산은 금년 대비 13억 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강원도 본청 실·국 중 안전자치행정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농축산식품국 예산만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1,092억 원, 동계올림픽추진본부 2,058억 원, 심지어 기획조정실마저 506억 원이 증가되는 와중에 우리 농업예산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동해본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 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 농어업의 현실입니다.

작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액되는 예산조차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204억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을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2014년도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교육감께서는 도내산 농산물 100%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입찰방식 등을 핑계로 우리 도내산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이란 말 역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 행감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우리 농어업인 또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부탁드린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무상급식의 확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였지만 약속대로 도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이에 더하여 친환경 농수산물까지 사용한다면 농어업 종사자는 소득을 올릴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강원도산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러한 조건이 선결되었을 때 무상급식을 논하기로 하고 현재는 우리 농어업이 맞게 되는 FTA 등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우리 강원도의 농업 예산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입니다.

1위인 전라남도와 비교하면 37% 수준, 산지가 71%를 차지하는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경상북도와 비교하였을 때는 4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1개 기초단체 중 시 지역이 28개인 경기도보다도 적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 농업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미 타 시도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응추진단을 운영, 실태분석 및 품목별 대책, 수출 확대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금년 대비 2015년도 당초예산 농업분야 감액편성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농어업, 농어촌의 환경에 늦장 대응하는 강원도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최문순 지사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FTA 체결에 따라 강원도는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략과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농축수산업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FTA에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부문 관련하여 2015년 당초예산 편성액을 보면 농업부문 감액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을 두고 이런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고 강원도 농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계올림픽,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강원도 농어업이 처한 현실과 농어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어 선택과 집중하여 다가오는 자유무역시대에 우리 강원도 농어업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11.25)

5분 자유발언 : 강청룡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학교 급식 확대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 강청룡 의원입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소위 무상급식이라고 칭하는 학교급식 문제에 관하여 평소 저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원론적이며 교과서적인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갖고 재벌이나 부자들의 아들·손자까지 공짜 밥을 줘야겠느냐 식의 원초적 표현의 비유나 학교현장에서 학교급식 말고도 더 시급한 게 있다는 식의 논리비약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잘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잘 먹이자는데 그 무엇이 우선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고등학교까지는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는 내일부터 2015년도 강원도 살림살이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도표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학교급식법과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드립니다.
무상이니 공짜니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중을 기하여 자제하고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확대 예산안 현황입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87억 원을 들여서 특성화 고등학교 전부와 소규모 고교생 그리고 저소득 특수학생과 셋째 자녀 이상, 그다음에 횡성·정선 지역의 보조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87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학생이 고등학교 한 학년, 3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1억 원을 추가하여, 그 71억 원은 교육청이 23억이며 지자체가 48억인데 강원도가 24억 정도, 시·군이 24억 정도를 들여서 1만 1,998명의 학생들에게 확대하자는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이나 우리 강원도 재정을 보면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원도와 교육청이 저 정도의 예산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으면 많다는 것, 그렇지 않고 저처럼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 예산안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농업은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10년 역임하면서 지난 시절 강원도 17개 시·군이 학교급식을 실시할 때 강원도에서 우리 춘천만이 빠졌을 때 학부모들의 분노에 찬 실망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고 올라왔습니다.
1만 1,998명의 학생 세대가, 저 금액으로 말하면 1인당 59만 원 정도 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에게 59만 원 정도라도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일거삼득 아닙니까?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 부모들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학교급식은 친환경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 때도 지적하였지만 지역산과 도내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나 우리 모두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반드시 친환경으로, 지역산·도내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에 우리를 짊어질, 아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우리 세대들에 대한 투자로 학교급식을 보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12.16)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의회에 방청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강원대학교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성근 의원입니다.
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 8,000억 원,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입니다.

6,993억 원, 우리 강원도가 6개의 경기장을 신설하고 2개 경기장을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수를 하면서까지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기쁨은 잠시였고 어떻게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낼까?

어떻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서 준비를 마무리할까?

아마도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여러 의원님들도 노심초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민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경기장 건립이 제대로 빨리 추진되지 않고 설사 어렵게 준비를 해서 경기를 치러낸다 하더라도 수십억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경기장들에 대한 사후관리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이때에 IOC의 동계올림픽 분산개최 권고에 소위 멘붕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도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를 모든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수많은 국제행사를 치렀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게임과 각종 엑스포 등 이런 대규모 국제경기나 행사는 거대한 규모의 시설과 설비가 필요하며 이를 건설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역대 올림픽을 개최한 많은 나라 중에 과도한 경기장 건설과 사후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서 적자를 떠안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가 있는 반면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사전준비 단계부터 사후의 활용 방안을 고려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실패의 경우는 1998년 개최국인 일본의 나가노이고 성공의 사례는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였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가 올림픽에서 사용한 11개 경기장 중에서 신축 시설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8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했고 솔트레이크시티는 올림픽과 함께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본부를 유치하였고 스포츠의학 특화 병원을 만들면서 미국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환경올림픽을 표방하면서 의욕적으로 대회를 준비했던 일본의 나가노는 경기장 신축을 하는 데 과도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개·폐회식장과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위한 모든 시설을 새로 지었고 실내경기장 5개 중 4개를 신축했습니다.

나가노는 대회를 준비한 5년간 고속전철과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4년 동안 투입할 금액의 비용을 몽땅 한꺼번에 지출했습니다.

인구 30만 명의 나가노는 대회 이후에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6,000억의 막대한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를 나가노처럼 빚더미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솔트레이크시티처럼 새로운 발전의 전기로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릴레함메르의 치밀한 준비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릴레함메르는 대회 개최 이전에 올림픽 이후 활용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시설은 아예 처음부터 가건물로 지었고 올림픽 후에 전부 다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사후 활용을 고려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미디어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도 적정하게 하고 이미 지어진 펜션과 숙박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규모로 확충되는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복합적인 관광 비전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을 얼마나 멋지게 치러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껍데기뿐인 명예를 물려주기 위해서 빚더미의 고통도 함께 물려준다면 그것은 바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사후대책을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준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하며 조속히 도지사님과 의장님께서는 올림픽 사후 활용 위원회를, 특별기구, 상시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12.16)

5분 자유발언 :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발언요지 : 혁신도시 추진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주혁신도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3개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원주로 이전하는 정부의 추진사업입니다.

그러나 2013년까지 이전 완료한 공공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보훈복지공단, 산림항공본부 등 3개 기관에 지나지 않고 2014년 올해는 대한적십자사와 지난 주 대한석탄공사가 이전을 완료했고,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해서 38.4%의 사업추진율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이전한 몇몇 기관은 전체 기관이 이전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서울에 남아 있는 이상한 반쪽의 이전 기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과 원주의 거주지 여건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문제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사실입니다.

사실상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공동주택 입주도 시기에 맞춰 완료하도록 노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전하려는 당사자들은 특수학교 전학을 요구하는 등 마치 선심을 쓰듯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러운 작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우리 교육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혁신도시 내에 신설 초등학교 1개 교와 중학교 1개 교는 2016년과 2017년에 개교를 계획하고 있어서 혁신도시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내년 말이나 입주가 가능한 공동주택 7,700여 가구의 문제도 있지만 원주의 지역 주택 여건을 비추어보면 현재까지 이전한 공공단체 임직원 중에 입주가 어려울 만큼 원주의 주택사정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교육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원주 주변의 특수교육기관은 과학고등학교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전부인데 이곳 또한 학생의 수용 여건이 현재 인원에 더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부모 입장에서 충분한 이해는 가지만 지극히 이기적인 사고에서 발현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전부가 지방의 우수한 학교보다 성적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방에서 알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한 경우도 많고,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 진학 후 지방의 학생들이 훨씬 우수한 재원이 되고 사회생활도 모범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여건만으로 가족 전부가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를 보면 다소 의아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중앙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방분산정책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시기를 늦추고 반쪽만 이전하는 실태를 보면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지방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비 8,396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도의 혁신도시 추진부서는 담당급 1명과 직원 4명이 전부이고 원주시 조직 또한 고작 담당 1명에 직원 3명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나마 이들 직원들은 기업도시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4명의 직원이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구성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들 또한 별도로 혁신도시 부서를 신설해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원주시와 비교하면 추진하는 행정조직의 사이즈부터 다릅니다.

당초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에 149개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지금처럼 갖은 명분으로 지연이 된다면 사업의 당초 효과를 거두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전을 시작한 지금부터가 사실상 혁신도시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혁신도시 관련 부서를 보강해서 우리 도로 이전하려고 계획하였던 기관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12.16)

5분 자유발언 : 김용래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2018 겨울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교육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창이 남아공 더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고 이미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회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문화올림픽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아 걱정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 앞선 ICT 기술을 효과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폐회식장 조성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문화올림픽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문화·환경·평화·경제올림픽의 4대 목표 중에 으뜸입니다.

경기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올림픽이 묻혀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문화올림픽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문화올림픽을 강조하는 것은 국격이 걸려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올림픽 유산을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일회성 스포츠대회를 치르려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말 평창을 방문하시어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서 세계인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다시 찾을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강원도가 올림픽을 통해 활력의 도시, 새로운 가능성의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상품화하고 이에 앞서 평창의 브랜드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문화콘텐츠 개발과 함께 도민 모두의 수준 높은 품격 함양 등 성실한 준비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실질적인 주인인 강원도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올림픽의 주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도민 전체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18개 시·군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만들어야 됩니다.
2006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이탈리아 토리노는 8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 밀려 쇠락한 공업도시로 낙후된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토리노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토리노만의 지역적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문화도시적 콘텐츠를 찾는 데 노력한 결과 현재 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도 올림픽 당시 강조했던 고대문명의 도시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준비해서 전 세계인들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다이내믹코리아와 붉은악마를 보여주었다면 2018년 동계올림픽은 ICT를 결합한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조직위원회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얼굴이며 당대 혁신적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증명하는 유산으로 남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감동받고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각에 맞는 개·폐회식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아낌없는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림픽 때 몰려드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강원도의 문화와 얼, 그리고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인 아트센터 건립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문화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올림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12.16)

5분 자유발언 : 장세국 의원 (새누리당, 화천군 선거구)

발언요지 : 단체급식소 식품안전 실태 관련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 단체급식소 식품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에서 보듯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식중독 발생자 수는 총 4,958명으로 2010년 대비 1,100명이 감소했습니다.

2번 자료 보여주세요.

그러나 지역별 주민 1만 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를 보면 강원도는 2012년에 6.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3년은 3.6명으로 1위인 전북 4.3명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합니다.

또한 주민 1만 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0.07명의 대전으로 3.53명인 강원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번 자료 띄워주세요.

강원도의 2013년 식중독 발생 원인은 총 환자 수 554명 중에 80%인 437명이 기업체나 음식점 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2012년 대비 495명에서 2013년에 29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합동점검과 급식안전체계 구축으로 이룬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만과 홍콩 관광객들이 춘천의 한 닭갈비집에서 식사를 한 뒤 노로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고 보도되면서 춘천 닭갈비골목 업소들이 직격탄을 맞은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춘천지역 4개 군부대에서 장병 18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군부대 식중독은 37건이 발생하여 1,062명이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선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에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강원도에 주둔한 군부대 식중독 발생이 보건소에 신고 된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의한 역학조사는 1건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부대가 식품위생법은 물론이고 자체 훈령조차도 지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런 점이 군부대 식중독 예방관리를 소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장병들의 건강은 전투력과 직결되고 식품위생법 안전성은 보건당국과 협조를 통해서 보다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이 영내에서는 물론이고 영외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또 강원도민화운동 차원에서라도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에는 2018겨울올림픽이 열릴 평창에서 관광객 10여 명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여서 인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범도민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언급하였듯이 우리 강원도의 식중독 발생자 수를 보면 2012년에 전국 1위, 2013년에는 2위로 기록되고 있으며 1년 전 닭갈비업소 대란 등 식중독 강

원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단체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강원도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체급식소 합동위생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에 3,304회를 점검해서 37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고, 2013년에는 44개소를, 금년 9월까지 40개소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만으로는 급식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체급식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급식안전관리, 민・군・관 협력체계 구축, 범도민 식중독예방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단체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대책을 재정립하십시오.

식중독 없는 청정한 급식환경에서 올림픽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12.16)

5분 자유발언 : 구자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발전 방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지 못했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 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자축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민선 6기를 맞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 도민들과 약속했던 도지사 공약은 의회의 제동에 한 발짝 못 나가는 모습입니다.

일부 고위 간부 등을 비롯한 직원들의 부적절한 일탈행위로 강원도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인사에서 대대적인 쇄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삼수 만에 어렵게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비 지원 축소 문제로 갈등을 빚더니 IOC 해외분산 개최 요구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 요인을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2년 전 도청 앞에서 삭발의 의지를 보이며 원주시민 3분의 1인 11만 명의 서명부를 지사님께 직접 전달해 드린 일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원도 전역에 올림픽 열기 확산, 아이스하키1경기장의 이축예산 600억 원 절감, IOC가 요구하는 2만 3,000여 개의 숙박시설 해결을 타당 이유로 밝혔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설계와 시공에 따르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도내 비개최지 15개 시·군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최지 3개 시·군에 투입되는 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해 좌절감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절감과 사후관리 불충분을 이유로 경기장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설계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OC 또한 비드파일을 스스로 파기했고 모든 결정은 평창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강원도의 몫과 부담이 무엇인지, 무엇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직위와 강원도만 원안 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관리를 위하고 대회 개최 3개 시·군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폐회식장은 당초대로 알펜시아 스키점프대경기장에서 열려야 합니다.

접근성과 폭설 시 편의대책 등이 제기돼 사업 부지를 이전하려고 한다지만 지난 6일 르네파셀 IOC 위원의 문제제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1,300억 원을 상회하는 신규 재원 투입과 과다한 관람석의 건축은 재고돼야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사전에 조성했던 점과 그렇게 말 많았던 알펜시아의 가치 상승을 위해 반드시 올림픽 상징물인 스키점프경기장을 활용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사후관리 문제를 이유로 폐막 후 철거로 논의 중인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춘천에, 아이스하키1경기장은 원주에, 스노보드경기장은 횡성으로 분산 개최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도내 개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도민들의 올림픽 열기 확산은 물론 개최지역의 숙박난 해결과 철거로 인한 예산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파괴 주장이 거듭되고 있는 중봉 알파인 경기장의 경우 500년 이상 보존된 원시림을 파괴하지 말고 두 번 결과를 합산하는 투런 경기방식을 IOC에 강력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 간 분산 개최를 주장하는 마당에 IOC가 환경수도인 강원도의 입장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도 참 중요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낙후된 도내 SOC 확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산 개최를 한다고 동계올림픽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7일간의 경기가 끝난 후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지 절망을 안겨줄지 선택할 시점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고 강원도의 미래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정치인들 역시 대회 개최 시·군의 비판 여론만 의식해 인기영합식 발언을 쏟아내기보다 대회 개최 시·군과 강원도가 잘살 수 있는 선택지가 어디인지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4년 뒤인 2018년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강원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사죄 대신 박수를 받는 모습이 연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2. 5)

5분 자유발언 : 심영섭 의원 (무소속, 강릉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강원도 인구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영동지역의 경우 6개 시·군의 인구는 일제히 줄어 3,200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도권으로 분리되어 인구가 증가한 영서권과는 달리 영동지역은 교육과 취업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8월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인천의 경우 당시 2만 5,000명에 불과하던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인구는 10년 새 10배가 늘어 현재는 강릉시 인구에 육박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망상지구는 지난해 말 캐나다 던디그룹에서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하여 다음 달 중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개발 규모를 확대하여 9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2016년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가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강릉 옥계지구는 오는 6월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7월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해 내년 2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

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 구정의 경우 오는 3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의 부분사업자 참여 방안을 마련하거나 땅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무역과 황해경제 전진기지 육성을 목표로 2008년 야심차게 출범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 실패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7년 동안 387억 원의 막대한 예산만 투입한 채 결국 2014년 8월에 지구 지정이 해제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3년 이내에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 기업을 찾지 못한다면 지정 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지난 2014년 11월 강원지역 물류 현황 및 과제라는 연구자료를 통해서 강원도에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게 유입되는 원인을 강원지역의 물류시설 및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 자원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강원도 여건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미래 먹거리 첨단기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빌게이츠 등 세계의 IT거물들은 식품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첨단 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도 첨단 식품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지역을 국내외 벤처기업에게 최저가로 부지를 임대하는 등 벤처기업을 미래의 향토기업으로 키워서 정책과 함께 개발 여건이 좋은 경제자유구역 공유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강릉 구정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부응하여 가톨릭 관동대 의대병원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 유치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지사님께서는 강릉, 동해 지역 주민을 비롯한 강원도민 모두를 알

뜰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울 때는 언제고 지금은 수도권 육성 정책을 연이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공동회장으로 계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를 투자 유치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차별화된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투자 유치로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되돌아봤을 때 2018년도가 강원도 역사에서 황금시간대로 기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2. 5)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도정현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인사철만 되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시·군이 불꽃 튀는 혈전을 벌이고 있는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받아야 되는 현실을 주민 대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군 인사 교류에 대한 시·군의 주장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시·군도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항과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각항과 제39조에서도 시·군의 인사는 당해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부시장·부군수의 인사권은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주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인사 교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교류 근거로 들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는 강력히 부단체장 교류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인사 교류의 당위성으로 첫 번째, 시·군이 무차별적으로 자체 승진을 시도할 경우 교류를 시행 중인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시·군 자체승진이 확대되면 민선자치단체장들의 논공행상이 더욱 노골화될 우려가 있어서 시·군과의 협업을 위해서 부단체장 1 대 1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도자료가 사실이라면 도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부분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어디에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정함이 없음에도 유독 도에서 부단체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인사 교류에 목적이 있지 않고 부단체장급 이상의 인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달리 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의 빠른 순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인사 교류는 시·군이나 도의 부단체장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고 일부 상위 직급만을 위한 교류로서 온 세상이 떠들썩해서야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상위직급 승진 대상 공무원들의 그릇된 보고와 욕심에 도지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가 목적하는 부단체장 인사 교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춘천시와 대립각을 세우던 도지사는 이제 속초시를 상대로 동일한 사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보복으로 부군수·부시장 화상회의에서 속초시를 제외하고 도비보조금을 감액하고 시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을 시상에서 제외하고 장기교육자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보복이 행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시장·군수협의회가 벌떼 같이 나서서 규탄하는 시점에 도는 이러한 사태는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마이동풍 격의 행정을 하고 있어 도민의 대표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강원도의회 의원이 벼슬이 아닌 것처럼 도지사도 벼슬이 아니고 도민이 선출한 도민을 위한 봉사자일 뿐입니다.

도지사님은 2013년 9월에 노조 강원본부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부단체장 인사 관련해서 100%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할 것이며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바로 연락해 달라고 했다는데 시·군의 의견 수렴에서 도에서 부단체장을 보내는 것으로 100% 수렴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와 내일의 얘기가 다르고 시시 때때로 기준이 다르다면 도지사를 믿고 따를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사 교류가 강원도를 위한 교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특정 직급의 시·군 승진 기회를 막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인사 교류는 관련법에서 정한 것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시·군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보내고 도에서 필요한 시·군의 분야별 필요 인원을 받아서 지역의 실정을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도의 발전을 이루는 한도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특정 직급을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고집한다면 세간의 질타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정 직급만을 위한 인사 교류와 보복 행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도지사라면 4급 한 명을 더 내보낼 때 도민을 위해 얻어지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진정한 도지사일 것입니다.

만일 일부 직급의 의도된 이설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 사태를 주도한 사람은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판단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졸렬한 보복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특히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표창 기회나 교육 차출 기회를 막는다는 것은 도지사가 할 일은 아니며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교류 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의 편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라는 충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2. 5)

5분 자유발언 : 남평우 의원 (새누리당, 인제군 선거구)

발언요지 : 접경지역 장병을 위한 복지시설 재검토

하늘내린 인제, 인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남평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득 2배, 행복 2배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방부가 수립한 제2차 군인복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이 현실화될 경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앞세워 지난 1970년대 초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과도하게 지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로 소외 되어 왔습니다.

도로, 건축물 등 인프라 시설 구축과 재산권 행사에 각종 제약을 받아 왔으며, 사회·경제·문화·교육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접경지역 외 타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접경지역 5개 군 인구수는 1970년 26만 9,000명에서 2014년 15만 9,000명으로 무려 41%가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기준 접경지역 5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8.1%로 도내 여타 6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 13%보다 4.9%가 뒤져 있는 상태이며 이제는 도 출신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60여 년 간 남북 분단에 따른 국가 안보와 편익을 위해 국가에 기여해 온 반면 차별과 고통은 접경지역 주민이 떠안고 왔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로부터 삶의 도움을 받아 왔으며 현 시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군부대 장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특히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 상권이 군장병과 면회객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방부는 2015년부터 100억 원의 예산으로 화천, 양구, 인제 등 접경지역 군부대 안에 장병전용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병사들이 쉴 수 있는 객실과 목욕탕,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 다양한 위락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병 전용 복지시설은 접경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시설은 대부분 접경지역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종과 겹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자영업자가 기존에 군부대에서 운영 중인 복지회관, 마트와의 경쟁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이 현실화될 경우 외출, 외박 나온 장병들은 자연히 군부대 내 복지시설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접경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결국은 접경지역 경기는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침체되어 고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접경지역의 경제는 무엇보다도 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군부대 내에 복지시설 건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제2차 군인복지 기본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1년 전인 2013년 11월에 발표되었음에도 국방부에서는 계획수립 전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군이 신뢰를 기초로 상생할 때 군의 전투력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군 장병을 위한 일방적인 복지는 자칫 군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은 국가 안보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헤아리시어 그들이 각자의 생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군부대 내 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 재검토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2. 5)

5분 자유발언 : 최성현 의원 (새누리당, 춘천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적극 유치와 레고랜드에 관하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함께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또한 강원도청 공직자분들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2015년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살맛나는 강원도 만들기 춘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유치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200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에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를 시작으로 2007년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제3센터가 유치된다면 900명 일자리 창출과 4,000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소비전력의 효율성으로 연 19억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며 이 외에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유치는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대형 공기업을 유치하는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예측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이면 수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전산자료의 안정적인 저장을 위해 2013년부터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3년 신청한 후보지는 강원도 춘천·부산·대구·제주·경남 진주이며 당시 현지실사와 평가를 마치고 2013년 내에 결과발표를 하기로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혹자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 대상지가 선정되어질 것이라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강원도는 2013년 신청한 춘천의 지리적 이점 및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조건과 평가요소에서 우수한 점을 부각하여 유치노력을 최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 노력과 활동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참으로 궁금하며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의 우선 추진사업으로 지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레고랜드는 동아시아 최초로 조성되는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한 테마파크입니다.
우선 레고랜드 명칭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레고랜드 빌룬드・윈저・캘리포니아・도이칠란드・플로리다・말레이시아 등 광역단위 지자체의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의 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레고랜드 춘천과 같이 지역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고랜드가 춘천에 있다는 것과 이름이 레고랜드 춘천이라는 것은 도시 브랜드와 파급효과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이 아닌 강원도에 큰 기회인 것은 그냥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설정할 때 레고랜드와 지역이 분리되지 않도록 인근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도 주문합니다.
그 이유는 레고랜드 방문객을 춘천 시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근 캠프페이지에 대형 쇼핑물 유치와 애니메이션 인형극과 같은 문화・관광상품과 구름빵 래핑 셔틀버스 운행 등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200만 명의 관광객이 레고랜드 방문만 하고 돌아간다면 실제 춘천의 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더욱 불안한 것은 추진과정에서 문화재와의 상생방안 및 교량사업비에 대한 국비확보 등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헌정회관에서 도종환 국회의원 주도로 레고랜드 백지화에 대한 토론회와 일부 단체들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의 빠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은 물론 레고랜드의 활용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전략수립 및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사과를 표명하였으면 원고를 접으려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대통령을 견제합니다.

심한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요구합니다.

대통령도 인간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이 벼슬이십니까?”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하는 막말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본회의장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에게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언성을 높여서 “도의원이 벼슬이십니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사님의 진심이 밖으로 표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상시 도의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냈고 지금까지 이중적 성격, 가식적인 스킨십으로 강원도민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최문순 지사님, 이제 2015년을 맞이해서 모든 도의원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표명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섬기기와 도의회와 진심어린 상생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2. 5)

5분 자유발언 : 구자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평창동계올림픽 이대로 좋은가?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도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제241회 정례회에 이어 오늘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성공개최를 위한 충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새로운 개·폐회식장을 설치하기보다는 평창올림픽 상징물인 스키점프 경기장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철거로 설계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아이스하키 I 경기장은 춘천과 원주로 분산개최 시키자.

환경파괴 주장이 거듭되고 있는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환경수도인 강원도에 걸맞는 대안을 IOC에 강력히 제시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조직위와 강원도의 입장은 신규재원을 투입해 개·폐회식장을 신축하겠다. 시간이 없으니 분산개최는 불가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개 경기장은 철거하겠다.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고 폐막 후 복구하겠다.'

한 마디로 무능력과 무대책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사견이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를 우려하는 다수의 언론과 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와 도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실망을 넘어 개탄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1년 더반의 함성 이후 도의회를 포함해 도내 모든 언론에서는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와 함께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최권을 확보한 상황이므로 면밀한 검토와 강원도가 주인공이 돼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치 직후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향적 검토를 했더라면 투입예산 2,000억 원이 넘는 경기장의 철거를 운운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환경파괴가 예상된 상황임에도 IOC에서 제시한 국제 기준을 핑계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외부로부터 촉발된 상황이었지만 IOC의 개혁 대상의 빌미를 제공했던 주체는 강원도와 조직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시각을 바꾸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했더라면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들은 도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IOC가 양해하는 상황에서도 이전의 개최지에 포함됐던 곳을 되살리는 검토조차 거부하는 강원도,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오로지 논란의 확산만 막아내려고 하는 공직자들, 폐막 후 이축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호언했던 지사님, 이제는 철거를 해 버리겠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들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던 지사님,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골프장 허가 재검토 지시를 내렸던 소신과 용기의 토종감자 최문순 지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허접한 개량감자들의 농간에 방향을 못 잡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난의 대표사례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알펜시아 조성사업,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 이벤트의 교훈도 망각한 채 강원도는 2018년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평형수를 빼고 승객들의 안전을 저버린 세월호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난이 불 보듯 뻔하고 사후관리 부실로 강원도민들의 행복과 소득을 앗아가며 침몰의 길을 택하는 강원도호를 이대로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강원도민들로부터 두 번의 지지를 얻어내신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피와 땀으로 삼수 끝에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그 후 3년 6개월 동안 강원도는 과연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절망을 주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미래가 아닌 강원도의 위기가 3년 4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호의 위태로운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평형수를 채워야 합니다.
강원도의 운명을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십시오.
다음 달 도정질문을 통해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2.13)

5분 자유발언 : 권혁열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촉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를 이끌어 가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문순 도정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강원도의회의 위상 정립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의 지방자치를 감히 본 의원이 평가해 본다면 인사권과 재정 편성권, 각종 인허가권 모두를 단체장에게 몰아주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의미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민의 뜻을 받들고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양 날개가 한쪽만 커지고 비대해진 기형적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격하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권이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왈가불가할 의도도 없습니다.

문제는 도 산하기관과 정무직 인사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 특정 정당 출신, 특정 시민단체 출신 등 편향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즉 해서는 안 되는 인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여론이 많습니다.

취임 초 부지사 문제를 시작으로 정책보좌제도 운영 등을 보면 도민들의 뜻이 반영된 인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제안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 보완에 관한 제의를 현행법 체계를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향적이고 민주적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한 지사의 이러한 행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귤화위지(橘化爲枳),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의 성질도 변할 수 있다는 말인데 본 의원은 혹여 지사께서 제도에 안주해 자신의 성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도의회의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의견'의 회시문을 통해 도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는「지방자치법」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 시도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라북도 도의회, 제주도 그리고 인천시와 성남시가 법과 제도를 몰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지방공기업법」제7조와「지방자치법」제2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도지사·시장 당선자들이 자신들의 고유 권한 중 일부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인사 전횡이나 관피아·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에 두 가지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절차적 투명성이고, 둘째는 객관적 적합성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줄을 잘 섰다고, 또 평소에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써 보자는 식의 인사는 곤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논란도 많고 빚도 많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지금까지의 주된 업무가 부동산 개발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주요 산업이 부동산 개발입니까?

농·수·축산업 등 FTA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와 마케팅,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올림픽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 등 강원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거리를 만들려고 세워 놓았는데 이에 대한 입안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은 주어지는 예산으로 지사의 의중이나 살피라고 세워 놓은 기관이 아닙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투자 유치를 통해 도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하라고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지사의 임명으로만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인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능력이 없거나 잘못된 인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이 법상 한계점이 분명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사의 강한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앞서 의회·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강원도 인사청문회도입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누구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폭과 넓이를 만들어 갈 것도 아울러 제안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본격 시행 전 도 산하기관장 및 정무직 인사에 대한 사전 임명동의안 등 제한적 청문회 제도 도입을 지사가 적극 검토해 줄 것도 제안합니다.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2.13)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정 전반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무대접·푸대접', 지난 반세기간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고 무시될 때마다 내뱉던 서글픈 단어입니다.

요즘 원주 곳곳을 다녀보면 무대접·푸대접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원주 시민들께서 서운함을 넘어선 참담함을 토로하는 대상은 중앙정부가 아닌 바로 현 강원 도정입니다.

본 의원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인사 관련 원주 무대접·푸대접에 대한 현 도정 답변은 중앙정부와 무섭게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원주는 인재풀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없다. 사람을 키워라."

근래 지사님들을 배출한 특정 시·군 위주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인사 관행이 원주 및 다른 인사 비주류 시·군 인재들의 도 진입을 막는 건 아닌지 숫자를 보고 들었던 생각으로 했던 질의는 우리가 매번 당하는 중앙정부 논리와 정확히 똑같은, 아니 그보다 한술 더 뜨는 답변으로 돌아왔고 인구 33만의 원주는 인구 대비 무능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도시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취한 조치도 그나마 얼마 있지 않은 원주 출신 공직자들에 대한 심리적·언어적 학대였습니다.

원주 시민과의 약속 이행 현실은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지난해 5월 15일 후보등록 첫날 원주시청을 찾으셨던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님께서는 같은 당 후보였던 현 원주시장님과 함께 원주 공약발표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날 발표하셨던 약속들 중 현재 원주한류문화센터조성 관련 구 종축장 도유지 매각 외에 이행 시도의 'ㅅ'이라도 볼 수 있는 약속은 단 한 건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다른 약속들 중 단 하나에서라도 실현의 'ㅅ'을 보게 될지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서 울컥하는 요즘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날 발표하신 다른 약속들은 모두 접고 단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1월 원주시가 도에 매입을 건의했고 이후 도지사 공약으로 채택된 옛 원여고 부지를 활용한 종합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10년 분납상환 같은 방법을 통해 옛 춘여고 부지 활용과 공평하게 이행해 가시면 되는데 굳이 장기 과제로 분류하시는 심지(深旨)는 무엇입니까?
강원도 안에서의 강원도를 원주로 보고 타 시도에서 강원도민을 평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강원도 내 암하노불은 원주시민이라 여겨 쉽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학성동 호수공원 조성의 실마리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레고랜드 유치 기념인 듯 결국 부수기 위해 조립하려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몇천억 원짜리 경기장 블록 쌓기, 행사를 치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 등 남북분산 개최 가능 발언으로 재촉발된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원주 아이스하키 경기장 재배치에 대한 당위성 설명은 이 자리에선 안 하겠습니다.
IOC 핑계로 일관하다 상황이 바뀌니 시기 부족으로 옮겨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핑계도 잠깐만 더 버티면 진짜 현실이 되고 마니 오늘은 IOC와의 약속이자 2012년 7월 18일 도지사님 집무실에서 강원도가 책임지고 옮겨 주겠다고 하셨고 전 세계에도 약속했던 대회 후 이축만 얘기하겠습니다.
경기장 재배치가 최선책이지만 이러저러하다면 원주시민은 이축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요즘 동계선수촌 활용 등 모든 빙상경기장의 존치 얘기도 나오고 있어 경기장 대신 이축 비용을 받게 되는 뼈아픈 경우가 오더라도 원주 노불들은 이를 조개가 진주를 품듯 기꺼이 마음의 사리로 품어보려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이 위로금을 학성동 호수공원 조성에 보태어 현재로선 유일무이해 보이는 공약 실현의 실마리를 손에 쥐어 드리고 지사님을 실패의 'ㅅ'밖에 읽히지 않는 상황에서 꺼내드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철거냐 존치냐 운운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33만의 노불이 부릅뜨고 있는 66만 개 눈앞에서 행여 이축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 싶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원주 구 종축장 부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해 조성하려는 드라마단지는 아마 현 시점에서 원주와 관련해 지사님이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실현하시고자 하는 단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바로 옆인 해당 부지의 현재 가치 측면에서도, 단시간만 고려해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향후 가치 측면에서도 도가 계속 보유하는 것이 도 미래 공유재산관리에도 합리적이고 도 전체적 이익에도 부합하다는 심사숙고 끝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초 언론에 보도되고 계획했던 대로 유상 임대방식으로 추진하라며 두세 달 사이 두 번이나 부결한 사안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사님의 용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혹자들은 지사님의 대중들에 대한 스킨십과 온화하고 낮은 자세의 이미지 때문에 강원 도정의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번 세 번째 도유지 매각 시도를 앞두고 기행위 위원 한 명, 한 명은 집행부로부터 5000㎡ 이하의 도유지는 도의회 승인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원들에게 보고는 하면서 추진 중이라는 초강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귀걸이, 코걸이 같은 그때그때마다의 매각사유 설명은 매각 그 자체에 대한 강한 의지 외에 어떠한 설득력이나 타당성,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고 이번 세 번째 준비해 온 4,863㎡ 매각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케 만들어 왔습니다.

현 강원 도정은 마음먹고 꼭 추진하려는 사업 수가 적을 뿐이지 필히 하고자 하면 마치 의회 무용론자의 독재국가처럼 어느 자치단체보다 과감하게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실망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초강수 추진력도 있는 강원 도정이구나 싶습니다.

원주 노불 손바닥의 손오공을 깨우지 마십시오.

독재국가 의회 무용론자를 방불케 할 추진력을 부르는 강한 의지를 원주에서 하신 다른 약속 두어 가지 만에서라도 더 보여 주신다면 노불은 펴려던 손바닥을 기꺼이 다시 쥐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2.13)

5분 자유발언 :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발언요지 : 도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에 관하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과 정당을 떠나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도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매력적인 21세기 리더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인재사관학교인 GE 연수원에서 발표한 21세기 리더의 조건인데요, 첫째는 자신과 남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라.
둘째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셋째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고 겸손하라는 것은 의회 자체 내의 소통과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합니다.
도민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대승적으로 화합하고 합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9대 도의회 출범 이후 집행부와 의회, 당정 협의 등 대화는 실종 상태였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와 강원도민, 도의회를 위한 소통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시 소통체제의 구축입니다.
지난달 전라남도로 사회문화위원회 현지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간담회에서 전라남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많은 현안사항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남 의회는 집행부와 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신기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는 집행부와 의회 의원의 구성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겠지만 도와 의회가 소통이 잘된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펑 뚫리고 묵었던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지사 직제 아래에 도민소통실장이 있고 소통실장 안에 소통기획담당까지 다양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과 지사, 도의회와 지사, 그리고 도의원과 지사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안사업 챙기랴 해외 투자 유치하랴, 콩 튀듯 팥 튀듯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도지사님 얼굴 어쩌다 한번 보고 식사 함께 한다고 해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60%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소통의 부족과 왜곡이 문제의 원인이고, 또 원활한 소통이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최문순 도정과 9대 도의회, 8개월간의 그 소통점수는 몇 점일까요?
앞으로 남은 3년 4개월은 강원도의 미래가 걸린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입장만 말할 것이 아니라 도정 현안, 도민 관심사업, 그리고 대정부 과제 등에 대하여 도의회와 집행부의 정례적이고 심도 있는 소통과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교감과 공유의 시간을 통해서 강력한 강원의 힘을 갖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후약방문식의 대화나 설명보다는 미리미리 협조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도에 과감하게 소통 관련 직제라도 만들어서 소통의 원년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회 내 토론과 대화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8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모든 것이 정당과 지역의 이익을 바탕으로 재단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도의회가 도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었다면 도민의 이익과 미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민 중심의, 또 도민 우선의 시각과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당 위주와 의정활동으로 의회 내에서도 소통과 대화가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이 소통이란 단어, 커뮤니케이션은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과 강원 관광의 혁신적인 도약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소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2.13)

5분 자유발언 : 박현창 의원 (새누리당, 평창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동계올림픽의 정신에 강원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만남의 도시, HAPPY 700 평창 출신 박현창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의정 단상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강원 발전 초유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인해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대회 조직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관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소통하고 또 소통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이루기 쉽지 않는 과제임에도 섣불리 내던진 말에 대한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은 실망스럽기만 한 모습입니다.

문체부로부터 시작된 경기장 재설계 논란, 개·폐회식장 장소 변경 논란 등에 이어 급기야 대회 분산 개최에 이르기까지 대회 관련 준비 주체들 각각의 생각이 깊은 논의 없이 개별적으로 촉발되어 언론을 통해 확대되고, 또 후속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엄중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많은 불면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 모든 일의 원인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원인과 책임을 찾지 말고 우리가 먼저 자성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워진 세계 경제, 국가 경제의 위기로 국비 지원을 줄이려는 정부, 더더욱

힘겨운 살림살이를 꾸려야 하는 강원도와 개최 도시, 대회 준비를 위한 기본 경비 확보조차 힘겨워하는 조직위원회, 그리고 대회 준비에 문제가 있다고 불났다고 소리치면서도 정작 물 한 바가지 들고 뛰어오지 못 하는 그 외의 모든 주체들도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간절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이 강원도의 새롭고 힘찬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확신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되었던 강원도를 늘 기억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강원 발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 그룹과 언론에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고 강원도와 도민들께서도 목소리를 높여 주문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계올림픽 관련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강원도가 있어야 합니다.

올림픽 현안문제가 불거진 이후 소극적인 대응으로 급급해 온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올림픽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에 끊임없는 소통을 지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분산 개최 불가 등 한 번 결정된 사안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강원 감자'의 뚝심으로 초지일관 밀고 나가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제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 세일즈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현장에 강원의 문화를 전하고 강원도를 세일즈하기 위해 우리 모두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세계에 우리의 수준 높은 문화와 명품 관광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강원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염동열 국회의원께서 추진 중인 올림픽 배후도시 관광상품인 레인보우시티 개발사업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올림픽의 실현이야말로 강원도 전역에 올림픽의 효과를 전하는 통로임에도 현재까지 관련 준비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특구 개발을 위한 노력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구 개발을 어렵게 하는 제도의 한계를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자 지정을 받은 시행자의 실질적인 특구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공공부문 특구 개발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실망의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특구에 그치지 않고 계획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특구 개발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인력입니다.

이 모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우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청 내의 정서는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을 기피하고 관련 업무조차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올림픽 관련 부서 근무 시 근무성적평정 우대나 직위·직급의 우선 승진, 포상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 해결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되었던 강원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더 크고 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노력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2.13)

5분 자유발언 : 김금분 의원 (새누리당, 춘천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도정 현안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춘천 출신 김금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속초의료원과 관련하여 도와 국회에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해법을 강요하는 일이 일어났기에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8대 후반기 2년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현재는 소관 위원회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그동안 도내 5개 의료원은 누적 적자가 820억 원에 달하고 매년 50억 원 이상을 도에서 지원하지만 30억 원 이상씩의 적자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대 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미온적인 의료원 경영개선 의지를 강하게 지적하고 위원회 내에 의료원대책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집중 강구하였습니다.

2012년 의료원 경영개선자금 50억 원을 지원할 당시에 도지사님께서는 향후 경영개선 대책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며, 정치적·행정적 부담 등 어떤 이유로도 문제 해결의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뜻이 없음을 밝힘과 아울러 자구 노력과 지원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의료원의 폐지를 포함한 통·폐합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는 친필 서명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친필 서명 답변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에 힘입어 강원도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 용역이 실시되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5개 의료원이 각각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여 현재 추진에 탄력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도 경영개선 의지가 있는 의료원부터 예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일부는 경영개선 의지가 가시화될 때까지 지원을 유보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속초의료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협 해지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관 및 제도 개선, 인사 및 경영권에 관련한 요구사항 거부, 부당한 약재비 및 부가세 3억 7,800만 원 환급 등 모범적인 경영개선 실적을 보인 의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물론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은 잘 인지하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렇게 단체협약 해지의 성과를 내고 3월 2일이면 단협 해지 만기일이 되는 이 시점에서 강원도는 느닷없이 원장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기를 정해서 임용하였다면 그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해임 또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 루트도 아닌 곳에서 어느 날 불쑥 찾아가 2월까지 사표를 내라는 통보와 사임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예산상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조건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사님께서도 속초의료원의 경영개선 추진이 가장 모범적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며, 내심으로 지지하고 또한 환영하여 왔던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든 간에 강제적 외압이라면 그 사태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지도자라야 공직자이건 도민이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모처럼 제대로, 새롭게 추진할 단체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시기가 되고 여타 의료원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제동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내년 6월을 임기로 임용해 놓고 빈약한 이유를 들어서 사임하라는 이치는 어디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지사님에게 있고 비록 지사님의 의중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또 아무렇게나 그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임을 권고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유치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단속도 지사님의 몫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퇴에 기인하여 그동안의 의료원 경영 정상화 노력이 성과 없이 끝나고 지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이 무용지물이 되어 의료원 경영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두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3.11)

5분 자유발언 : 최성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6선거구)

발언요지 : 옛 원주여고 부지 매입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을 먼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은 나오는 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의 최대 현안 문제인 강원도의 옛 원주여고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기간 중에 원주를 방문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강원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명륜동 옛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여 공연장과 창작실,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갖춘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원주여고는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명륜 1동 소재의 옛 원주여고는 도교육청에서 학교 용지 2만 9,660㎡와 건물 1만 1,365㎡에 대해 이달 초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 공고를 내었고 공개 매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매각을 원칙으로 원주여고 이전을 추진하였고 유지·관리도 어려운 만큼 부지를 일괄 매각한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도지사님과 원주시장님께서 동일한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고 원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도지사님은 원주여고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만 했을 뿐 현재까지 부지 매입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고 반면에 원주시에서는 강원도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약속을 지키리라 믿고 문화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하여 발표한 하나의 공약사항을 가지고 두 분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부지 활용에 대한 의향을 강원도에 물었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했으며, 특히 문화예술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사업과 관련된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약을 발표하기 전 사전에 교육감님과 협의하여 발표를 하셨다면, 어찌 도교육청과 강원도의 일처리 방향이 다른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장기공약 실천 과제로 분류하고 직접 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공약 당시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춘천에 문화공간을 만드는 데는 타당성이 있지만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을 하면 원주시민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될 것이기에 도에서 매입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해서 부지 매각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정보도 접하였습니다.

원주시민들이 눈과 귀를 막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영서 남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더 큰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유보하고 공약사항인 옛 원주여고 부지를 하루속히 강원도가 매입하여 문화예술공원을 건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개발 계획에 대한 긍정적 검토 결과가 나온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약에 준한 개발을 적극 추진하시고 만약에 다른 연구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사님의 공약에 준하는 개발 계획을 세우시어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문제점을 돌이켜 보면서 최문순 도지사님의 소통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 동일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계시는 원주시장님과 민병희 교육

감님과의 소통에도 얼마나 큰 문제가 있기에 협의조차도 없이 공약을 발표하고 후에 각자의 의견대로 일처리를 해나가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며, 다른 일들은 협의나 하면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민들에게 한 표를 얻고자 계획 없이 햇빛공약을 발표하여 목표를 이루고 그 후에는 이런 저런 핑계로 어렵다고 계획조차 세우지도 못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최문순 도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면 백만 불짜리 미소와 소통으로 서민과 함께 시장 바닥에 마주 앉아서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도지사님의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불통의 극치를 강원도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서민들과는 편안한 소통으로 함께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이 어째서 가까운 분들과는 이리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지사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궁금해 집니다.

올림픽 관련 문제, 원주 종축장부지 매각 문제 등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도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시며, 의원이 벼슬이냐고 많은 분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지사님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강원도정 집행부의 소통이 절대 불통인 것은 직원분들의 충언이 부족하기에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사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도지사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인가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을 때 최문순 도정에서 추진하는 '소득 2배, 행복 2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된 강원도'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맨 앞에 서시어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셔야만 강원도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웃음과 말로 사랑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강원도의 진정한 미래를 걱정하시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작지만 강한 강원도, 역동하는 강원도,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강원도, 행복이 넘치는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3.11)

5분 자유발언 : 이문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교육청 인사정책의 시정 방향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패권주의를 방불케 하는 인사권 남용으로 학교 현장을 황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것 하나 학교의 자율로 교육을 실천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교육감 인사권의 남용을 바로 잡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인사권을 남용하였습니다.

2010년 9월, 교육감 당선과 함께 현 비서실장을 파견교사로서 비서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을 단순 보좌하기 위한 평교사의 비서실 파견 근무는 법 취지에도 부당하고 결국 학생 교육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곧 학교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강원교육계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견교사 근무 1년 6개월 만인 2012년 3월 1일 자로 교육연구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의 맹점인 장학사는 공개경쟁으로 임용하지만 장학관은 직위에 관계없이 일정 교육 경력만으로 특별 채용 가능함을 이용해 비서실 파견 근무자인 평교사를 교육의 중요 직위인 교육연구관 직위에 파격적으로 전직 임용한 것은 당시 일반화된 교원 인사 원칙과 괴리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의회와 언론, 교직단체의 강력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6개월 만에 다시 평교사로 전직하였습니다.

교육감은 그 후 현 비서실장을 2012년 10월 1일 비서관 직렬의 지방계약직 5급 상당 사무관으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임용은 해당 직무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비서실장은 비서직과 거리가 먼 교직 경력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비서실장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교직과 비서직의 연관성을 볼 때 교육감의 과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더욱 분개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 2015년 3월 1일 자 교원 인사에서 현 비서실장을 계약직 사무관에서 장학관으로 파격적인 특별채용을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교육계 인사에 유례없는 핵폭탄 투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내용인 장학관을 특별채용할 때에는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교감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간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온 2만여 교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어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교육발전의 저해와 교육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실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서는 상의하달식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실제 직원들은 상부의 눈치만 보는 수동적인 행정 행태를 보임으로써 조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 비서실장은 교육감의 비호를 등에 업고 도교육청 계선조직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는 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은 특정 교직단체 교사들의 감시 속에 학교 업무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들의 뜻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그릇된 인사행정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강한 부정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교육감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오죽하면 교육부에서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파행적인 인사권 남용이 교육 현장에

미칠 심각한 폐해를 우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은 모두가 교육감이 법령을 악용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원교육 현장에서는 2015년 9월 이후의 인사에서 강원도교육감이 인사권을 또 남용하여 현 비서실장을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으로 임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현명치 못한 처사로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와의 갈등을 초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여러 형태의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이 일부 타 시도 진보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새 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준비되지 않은 9시 이후 1교시제 때문에, 중학교 신입생 반편성고사 폐지 때문에, 선심성 무상급식 복지 정책 때문에 학교 현장이 행·재정적으로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시정하실 것을 엄중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강원도교육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3.11)

5분 자유발언 : 원강수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5선거구)

발언요지 : 원주 현안사업 관련

원주 출신 원강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리 길지 않은 5분여의 시간 동안 제 지역구인 원주시 반곡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아주 상식에 기초한 그런 시각으로 우리 강원도청에서 근무하는 4,2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주시 반곡동에 지금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13개 이전 공공기관 중에 지금 대여섯 개, 그러니까 절반도 채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땅이 모자랍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고요, 단 한 번에 분양이 끝나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마트, 상가 건물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한 달 만에 그곳을 지나가면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땅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 100만 평 부지가.

그런데 그 혁신도시 코앞에, 길 건너에 바로 문제의 종축장 부지가 있습니다.

1만 8,000평 부지이고요, 지목은 지금 밭과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산이지 거기는 지금 산이 아닙니다.

나무만 몇 그루 심어져 있어요.

종축장으로 몇 십 년 동안 써 왔기 때문에 아주 평평하게 평야처럼 다져져 있습니다.

그 땅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원주 도심이, 지금 외곽으로 신도심이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형성되다가 그 종축장 부지에서 딱 막혀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종축장 부지의 위치가 상상이 되시죠?
춘천으로 얘기하면 지금 퇴계동이나 석사동의 신도심, 택지 개발된 곳,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1만 8,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왜 강원도의 공약사업에 등장했는가, 제가 가만히 지금 시간을 그려보니까요, 작년 지방선거 앞두고 도지사 공약으로 드라마 세트장 유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작년 9월 11일에 강원도와 원주시, 그리고 드라마 만드는 외주 프로덕션, 3자가 모여서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1만 8,000평 부지 중에 9,500평을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규모를 줄여서 공유지 2,700평을 또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또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다 답사를 하셨어요.
아주 지극히 상식에 기초한 그런 결정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더 이상 나갈 땅이 없으니까 바로 그 금싸라기 땅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미래 개발가치는 지금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산정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드라마 세트장 유치를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것도 특정 업체에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본이라고 해서.
강원도의회가 제안을 했어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약사항이니까 해라, 원주에 드라마 세트장 들어오는 것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곳이 강원도 치악산 드림랜드입니다.
오는 10월 28일에 6만 2,000평이 강원도 품으로 다시 돌아와요, 도유지 6만 2,000평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환경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환경법 때문에 안 되는 것, 법에 저촉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가야 역사테마파크, 드림랜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 '김수로' 드라마 세트장이 지금 있어요.
환경법에 저촉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만약에 임대기간이 지금 남아 있다, 서너 달 남아 있어서 드라마 제작일정하고 맞지 않는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양해각서 아닙니까.
갑과 을이 만나서, 갑이 지금 강원도입니다.
을이 드림랜드 사업자이고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해 줄 테니 우리가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에, 6만 2,000평 그 넓은 토지 한쪽에 만들겠다, 그것을 못 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그것이 기술행정 아닙니까.
그것 검토 안 하고 무작정 거부를 해 놓고.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최적의 조건입니까.
치악산 자락 관광단지 바로 아래에, 고속도로 IC 바로 코앞에 있고요.
원주분들은 지금 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시내 한복판에다가 생뚱맞게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10년인데, 장기임대로 해서요.
자, 작년 연말에 부결된 것을 강원도가 어떻게 했느냐, 올해 1월, 2월 들어서 측량작업을 했고 감정평가 작업을 했습니다.
의회 동의 하나도 없이요.
저는 거기서 엄청난 큰 문제점을 봅니다.
"5,000㎡ 이하의 공유재산은 도의회 승인 없이 매각처분할 수 있다." 그 단서조항으로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그 단서조항은 5,000㎡ 이하 면적의 공유재산을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의회 승인 없이 매각처분할 수 있다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준 그런 취지입니다.

법의 취지를 완벽하게 지금 무시하고, 그렇게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하면 강원도의회의 승인 없이 도유지 몇천 건을 다 팔 수 있어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지금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안 해도 드라마 세트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기간 중에 얼마든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세트장 철거비용을 사업자로 하여금 보충해 주겠다는 그런 논리로, 전체 종축장 부지를 가로막는 대로변 앞에, 1,473㎡를 끊어서 공유재산관리법의 그 단서조항을 피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완전히 꼼수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지 않으면 거기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강원도민에 대한 겁박입니다.

저는 이런 꼼수행정이나 특혜행정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민행정을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3.11)

5분 자유발언 : 남경문 의원 (새누리당, 정선군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랜드 계약제 직원 해고에 따른 구제관련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규직 전환이란 확신을 가지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다 해고의 위기에 처한 강원랜드 계약제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월 17일, 강원랜드는 1차 교육생 288명 중 152명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는 5월 26일에 2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차 교육생 177명 중 92명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생 465명 중 절반이 넘는 244명이 계약 해지가 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에서 지난 2월 1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전년 대비 2.9% 증가한 1만 7,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했으며 고졸자·지역 인재 등 사회 형평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능력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인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만 놓고 본다면 위의 세 가지 내용이야말로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장 증설허가를 받고

테이블 증설 및 영업장 확장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을 선발했습니다.

강원랜드의 교육생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등 수십 대 일, 또 많게는 수백 대 일을 거쳐야만 선발되며 2년간의 직무훈련과 적응기간을 거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생에 선발되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들어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곧 정규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생들에게 창졸지간(倉卒之間)에 날아든 계약해지 통보는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는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랜드가 계획했던 적정 인력들이 제때에 현업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당장 증설된 시설을 운영하는 일도 불가능해져 향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지경입니다.

이번 교육생 대량 실직사태의 발단은 공기업 임직원 정원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의 정원을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장 증설을 허가했으나 이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기획재정부가 막는다는 것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경제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기업 구조 개혁의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우량한 공기업에게까지 적용하여 오히려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와 폐광지역 회생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온 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혁과 인원감축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직군이 많음을 감안할 때 한 번 더 재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기업이 지닌 경영의 특수성과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공기업 선진화를 외치며 구조 개혁의 칼날을 휘둘러 왔지만 오히려 공기업의 부채는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이번 대규모 실직사태는 경영진의 장기 경영공백으로 말미암아 강원랜드의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반영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일방적인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영진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도 이번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2대 주주로서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협력관까지 파견하고 있으면서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방관한 것은 강원랜드 임원들과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원도와 현 강원랜드 경영진에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함과 동시에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3.11)

5분 자유발언 : 심영섭 의원 (무소속, 강릉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신소재 클러스터 사업 관련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모든 기술자원이 집적화된 산업기술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크노파크는 1997년도에 경북 등 6개 지역에 최초로 조성된 이후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8개의 테크노파크가 각 지역의 산업 육성을 명실상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의 테크노파크는 춘천 바이오산업,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그리고 강릉 신소재산업을 잇는 삼각 테크노파크의 밸리를 바탕으로 2003년 성대하게 출범한 이래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지금도 강원테크노파크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발맞추어 우리 강원도를 신동북아시대를 이끄는 생명·건강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구조용 신소재, 생활 의료기기, 웰니스 식품, 스포츠 지식서비스 등 4개 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신소재 산업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부속센터인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으로 말씀드리자면 2001년

강릉시에서 육성한 파인세라믹 지역기술혁신센터를 2005년 통합 흡수하면서 출범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공장 등 5개 동의 지원시설과 150종의 장비를 구축하여 87개 기업에 기술·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강릉시에서는 2005년부터 도비보다 78억 원이나 더 많은 180여 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릉시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 그리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 2차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 2014년 8월 새로이 제5대 원장이 취임한 이후 강원테크노파크와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이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테크노파크 조직 내의 인사와 관련된 무성한 소문을 그저 소문으로 흘려듣기에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강원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이기도 하십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의 신소재산업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이끌어낸 근간이며, 앞으로 전 세계 신소재산업의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려는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이러한 강원테크노파크가 더 이상 내부 갈등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사람을 얻는 자만이 리더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2,500년 전 공자께서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또한 일류 조직은 행동의 중심에 고객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고객에는 내부고객인 조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부고객인 조직원이 떠나는 조직,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조직, 근

자열하지 못하는 조직이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원자래를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원테크노파크의 인사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강원테크노파크가 내부 갈등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5. 3.20)

5분 자유발언 : 최성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6선거구)

발언요지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치악산의 높은 기상이 살아 숨 쉬는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면의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한 학생의 학부모로서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식중독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개선대책으로 CCP 실시간 기록관리 및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작업공간 구획으로 교차오염방지, 현대적 조리기구 확충,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 등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올해까지 100% 완료하겠다고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화면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의 실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현재의 상태는 타 교육청에 비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생관리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은 많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설치 완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화면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교육청의 536개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CCP 실시간 기록관리 및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 운영 실태를 조사한바 대상 학교 중 수동으로 관리하는 학교는 522개 학교, 정보화한 학교는 14개 학교로 정보화율이 2.6%로서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정보화사업은 지난해 말 100% 설치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화면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해썹(HACCP) 제7원칙의 문서화 규정에 따라 급식현장의 영양사, 조리종사원들은 제반 양식, 점검표 등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CCP 기록일지는 식품안전성의 신뢰를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조리공정, 식재료 품질 상태와 이력 등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유일한 자료입니다.

화면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급식 CCP 기록이 잘못 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급식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점검은 성실하게 하는데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기록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조리 종사원들은 위생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있고 몸에 물이나 기름 등이 수시로 튀기 때문에 상당수가 업무 후 기억을 더듬어 수작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식중독의 교차오염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화면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CCP 기록지 수동기록관리, 정기점검 대비 각종 자료 취합 및 통계관리의 어려움, 식중독 발생 시 선별적 대응 곤란, 식중독의 원인인 온도·습도 관리의 어려움 등과 같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관계자들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염려와 걱정, 불안 속에 가슴을 졸이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학교급식 기반구축을 통한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는 물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 능력 증대를 위해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7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CCP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자주적 일체감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시간, 인력 등의 낭비 요소 제거로 학교급식 관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식중독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안전한 급식관리와 CCP 실시간 기록관리로 교차오염 방지 등의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8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듯이 안전하고 편리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급식 관리로 시간・인력 절감, 식자재 관리, 행정력 절감, 소모품 절감 등 학교별로 약 2,2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학부모들에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로 인식되어질 것입니다.

화면9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강원도는 100% 도내산 식자재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였으나 도내산 식자재 사용실태를 조사한바 도내산 쌀 이용률 100%를 제외하면 도내산 식자재 이용률은 약 50%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본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면 도내산 농산물 사용률 향상에 영향력 있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업무 능률 향상 및 사기가 진작되어 자발적으로 도내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에 제시한 CCP 실시간 기록관리 및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을 적극 검토하시고 예산 확보 및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5. 3.20)

5분 자유발언 :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5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소방헬기 구입관련 막대한 국고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더 이상 발전적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애쓰시는 강원소방가족 여러분들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해 광주의 하늘에서 프랑스산 유로콥터와 함께 산화해 가신 다섯 분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소방헬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를 간곡하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230억 원에 대한 전액 국비 반영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강원소방헬기 구입을 위한 3년 차 예산 지원은 50 대 50의 지방비 매칭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사무를 위해 임무수행 중 소실된 만큼 도비 부담의 귀책사유가 전무함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소방헬기 구입비용의 전액 국비 반영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국군과 경찰에 이어 소방안전 분야에서도 국책사업의 결과물인 국산 헬기를 반드시 도입해서 더 이상 막대한 국고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전국 15개 항공구조대에서 25대의 소방헬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0% 외국산

으로 12종의 헬기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 산림청과 해양경찰, 세관, 도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관용헬기를 포함하면 모두 19개 기종에 107대가 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2013년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의뢰한 관용헬기 입찰에서 국산 수리온 헬기를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윤호중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상규 조달청장의 답변은 '국산 수리온은 2012년부터 본격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구매할 수 있으며 앞으로 외자구매를 가능하면 내자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6년간 1조 3,0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서 탄생시킨 첫 국산 헬기를 국방부와 경찰청을 제외하고 국토부, 국민안전처, 조달청 등 정부부처 간 따로국밥식으로 외면하는 웃지 못할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고발하는 바입니다.

2013년 충남의 사례에서 보듯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부, 조달청 등 정부 관련 기관을 통해 국산 헬기 수리온이 소방본부 다목적 헬기로 입찰 자격과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산 헬기를 외면하고 특정 기종의 특혜 시비의 우려를 안고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산 헬기 수리온을 사용하고 있는 국군과 경찰의 안전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2009년 소방헬기 구입 당시처럼 수의계약 추진으로 감사에 지적받아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원소방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에 맞는 적합한 내용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격서가 작성되었는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는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편협한 판단과 착오가 있었다면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즉시 외자조달을 내자조달로 전환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산 헬기가 없어 100% 외국산 헬기를 도입해 왔지만 정부의 국책사업을 스스로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원도가 앞장서서 막대한 국고의 유출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 이강일 본부장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가 국산 헬기를 낙점할 경우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국산 소방헬기 도입의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 헬기 운용의 장점과 안전성은 이미 국군과 경찰청의 수리온 헬기 배치 운용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원지역의 군부대에서도 수리온 국산 헬기가 배치될 예정이랍니다.

기관 간 협조와 공유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듯 국산 소방헬기 도입의 이점은 일석삼조의 효과적인 예산 사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5. 3.20)

5분 자유발언 : 임남규 의원 (새누리당, 태백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역균형발전 대책 촉구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임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민관합동회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동시다발적인 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입지 조정과 투자 집중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과 국토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은 국민들의 합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정부가 직간접적 방법으로 규제완화를 되풀이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와 의무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이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계류된 것에 대해 실망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방 경제를 죽이는 정부의 역주행 수도권 정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인접지역인 우리도에 직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일례로 동계올림픽특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기업 유치와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의 지방투자심리 위축으로 우리 도의 기업 유치 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면 지사님이 공동회장이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유관기관, 시도 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북방경제시대 강원도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성장거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우리 도 규제완화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삼중으로 묶여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의 조정과 동해안 군사철조망 철거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 대안이 지방 규제개혁 정책과 연계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도의 토지이용규제와 지역경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국방, 물, 산림, 환경, 생태 규제 등에 대한 규제보상시스템 도입과 이로 인한 국가 재정 배분제도 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 및 관광시설 등에 대한 투자유치 실패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논리 마련과 도 내외 언론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현행 수도권 규제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본 의원은 재차 정부에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현재 우려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비수도권 지방의회와 시도, 시민단체 등과 공조하고 결집하여 정부에 강력한 대응과 대처를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5. 3.20)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 소득이라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증가하는 것이어서 단시간에 2배를 달성하기 힘듭니다. 소득과 달리 행복이라는 것은 관심과 사랑을 자양분으로 단시간에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민들의 선택으로 도백의 자리에 있으신 지사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참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도민의 사랑을 받으셨고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당신이 뜻하신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실 수 있으니 매일 하늘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해 하셔야 할 정도로 참으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 주민들은 아니지만, 행여 나중에 높은 분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후환이 두렵고 겁이 나더라도 공약이었던 흉물이 된 구 원여고 부지 개발 미이행을 도저히 견디다 못해 현수막으로나마 마음의 응어리를 써 내려가신 명륜1동 원주시민들, 원주에 사는 우리 강원도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장남 혹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은 후에 시장·군수, 대통령, 도지사처럼 큰 권한을 받게 되어 뜻한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행되고 있는 공약인 지역화폐 유통처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들인 사업의 결과가 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지 모르는데도 추진되고 있지만, 고작 도 전역 7,200만 원 드는 사업을 이런저런 핑계로 일몰시킨 강원도정으로 인해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과 눈물겨운 가난으로 인해

공장으로, 일터로 내몰렸던 장남 외의 아들들, 특히 딸들처럼 강원도 전역에 배움의 한을 가지고 야학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도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주 누리야학은 터전을 잃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배움의 한을, 가슴의 응어리를 가지신 도민분들 때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허름한 건물 4층, 단돈 1원의 지원도 없지만 선생님들은 자비로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자비를 걷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 주름진 얼굴의 제자들에게 다시 교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해주지 못하는 행복 2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강원도가 빼앗아 간 행복 1배라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졸업장을 가지지 못한 아픔을 가지신 분들은 시대적 희생양이 된 여성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주경야독하며 검정고시를 보려고 아픈 무릎으로 4층까지 오르시는 분들은 바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신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든 어떻게 해서든 7,200만 원을 마련해 드리고 싶지만 제 힘이 도지사님에 비해 극히 미비해 고작 견제만 간신히 할 수 있는 저 강원도민 김기홍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과정을 고쳐야지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일몰되어야 할 사업들은 추진되고 확대시켜야 할 사업들은 일몰되는 도정에 이의 있습니다.

100%의 확신으로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7,200만 원은 충분히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말씀올린 적이 있는데도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시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같이 보이시는 지사님께서 끝끝내 완강히 반대하신다면, 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를 일이지만 지사님이 뜻하시면 눈 감았다가 뜨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는 아주 작고 쉬운 일이지만 이처럼 큰 행복, 확실한 행복을 도민들께 드릴 수 있는 사업부터 하나씩 푸시고 과감한 결단과 정리, 그리고 결심을 통해 큰 사업들도 풀어가셔서 더 사랑받으시는 지사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강원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 3월 6일 누리야간학교 이전 현판 제막식에서 김재용 교장이 했던 말을 담은 영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도민이 온 강원도 전역보다 귀합니다.
진정 행복 2배를 달성하고자 하신다면 꼭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천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타인의, 도민들의 행복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신의 행복도 결국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동영상에 나오는 저 자리에서 십시일반 물질과 시간을 모아 헌신하시는 젊은 야학 교장선생님께, 그리고 다시 교편을 잡으시는 백발의 퇴임하신 선생님들을 비롯한 스무 분의 선생님들께 마음으로부터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저와 지사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저분들 마음 반만 닮아간다면 단언컨대 강원도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천국은 그 행복을 지켜주려는 진심과 노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 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4. 9)

5분 자유발언 : 이문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주외국인 지원과 관련하여 수년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원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대해「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12조와 제13조에 근거하여 9대 강원도의회에서 본 의원이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타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거주외국인 관련한 업무를 사무위탁의 방법을 통해 신뢰할 만한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강원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 1.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 말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가 인구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현격히 줄어들며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경제·사회적으로 긴급한 현안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과 보육 정책, 그리고 청년세대 취업률 증가 정책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강원도의 생산가능 인구가 대도시나 주요 산업도시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그 심각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급기야는 이미 농촌과 어촌의 생계형 농부, 어부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되었던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는 강원도 산촌과 어촌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 숫자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특성상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전무한 형편이며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여력도 없는 이들에 대하여 원주에 있는 민간단체인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2003년부터 영동・영서권을 막론하고 도내 전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한국어 교육, 여가 활동 증진, 의료진료 등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13년 말에는 부설기관으로 원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도내 최초로 거주외국인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화, 선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로로 인한 강원도지사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성실히 활동을 지속해 왔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강원도 유일의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지정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수년간 운영하며 대내외적으로 사업과 활동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한계로 인하여 운영과 서비스 확대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원주・횡성 지역과, 멀게는 홍천・양구・인제・강릉・속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원도는 최소의 재정을 투입하여 도내 산업체의 핵심 인력 중의 하나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한 민간단체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기초적인 산업과 경제의 버팀목이며 이왕에 온 이들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로 이들이 도내의 체류기간 동안 잘 정착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은 직접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산업과 생산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도내 다른 산업으로의 파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외국인 주민으로 부르며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면 그들이 보다 쉽게 정착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무관심과 무대책, 무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외국 인력의 타 시도로의 유출이 반복·지속될 것이며, 중소기업과 농·어업에서의 인력 부족은 강원도의 영원한 숙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최악의 출산율에 따른 다양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 결과를 맺을지는 알 수 없으나 거주외국인 180만 명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한다 할지라도 생산 가능인구 공백기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타 광역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 부족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는 강원도로서는 상당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인력 부족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늦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거주외국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검증되고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기초 지자체와 타 광역 지자체에 바람직한 정책을 전파하는 선진 행정의 강원도정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4. 9)

5분 자유발언 : 김용래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교육현안 개선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가끔 학교에서 강제 전학 조치되거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의 교육 문제, 전입학 문제에 대하여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2013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지난해 2014년도에는 현저하게 낮아져서 학생 생활지도에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문제 학생을 강제 전학 조치하면 학생의 생활환경 등 특성과 적응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기보다는 순번제로 전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생들이 일순간의 실수나 또는 여러 가지 사안이 결부되어 학교에서 퇴학조치가 내려지면 갈 곳이 없어 아무 대책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안학교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 2015년도에 공립 대안학교인 현천고등학교가 설립되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가르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일부 학생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정원이 3개 반, 45명밖에 안 됩니다.

또 부적응 학생들의 특성상 대안학교에 가기를 꺼리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자퇴를 하거나 제적된 학생이 강원도에만도 1,910명이나 됩니다.

전학을 하거나 편입을 한 학생도 2,449명으로 총 4,359명이나 됩니다.

어린 나이에 일탈이나 실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학생들을 소위 문제학생이라고 분류해서 다른 다수의 학생을 위해서라는 논리로 학교가, 교육계가 계속 외면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교육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도 아니고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다면서 외면해 왔던 이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상담교사도 있고 학교사회복지사도 있고 지역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건가요?

정말 이 학생들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학교를 자퇴한 한 여학생과 부모가 얼마 전 원주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전입학 문제로 학교 관계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학교 관계자들께서 청와대에서 와도 못 받아준다며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 파악을 해 보니 2년간 123명이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 학교는 강원도 최고의 자퇴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모두를 위한 교육? 좋아하네요. 개뿔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민병희 교육감님과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본 의원이 제시한 이 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이제는 교육가로서, 부모로서 대안다운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4. 9)

5분 자유발언 : 강청룡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 촉구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강청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위 무상급식, 공짜급식이라고 칭하는 학교급식 문제에 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진행형인 사안입니다.

근자에 경상남도 도지사께서 학교급식을 철회함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직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강원도지사와 교육감님께서 학교급식 문제의 확고한 의지와 강원도민, 강원도의회와의 합의와 협력 속에 경상남도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학교급식 문제 전반에 걸쳐서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2014년 학교급식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강원도가 아홉 번째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학교급식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이나 도민들 그리고 일선 현장에 계신 종사자들 그리고 식자재 문제와 관련하여 농어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이지만 일부 학부형들은 아직도 학교급식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식의 질이나 위생문제, 그리고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시설개선 문제와 신분불안 문제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은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문제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조속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그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 중 철원, 정선, 홍천, 횡성, 원주에서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단체에서 서울, 경기, 충남, 제주도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현재의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부 다 설치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점에서 강원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는 조속히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식자재 구입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일선 현장에서는 반드시 친환경 농수산물로 지역산과 도내산, 국내산을 구입하게 되어 있지만 입찰방식을 취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대관령 감자 한 박스를 구하고 오징어 한 박스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역급식센터에서 100박스, 1,000박스를 구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위생문제, 학교급식 질의 문제, 그리고 시설 개선 문제, 그리고 신분 문제, 우리 농어업인들의 식자재 공급문제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광역센터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뚱맞게 학교급식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친환경학교급식 조례에 의하면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학교급식이 실시된 지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시행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는 혼란만 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의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가동을 하든 아니면 조속히 다른 TF팀을 구성하든지 간에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 예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고에 없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지사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18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 그리고 우리 도의원, 시·군 의원님들은 강원도민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특히 의원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이나 행사 시에 의회 의원들에 관한 예우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도 단위 행사를 할 때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시·군 의원들도 도의원 못지않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4. 9)

5분 자유발언 : 최명서 의원 (새누리당, 영월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의회와 집행부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관하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최명서 의원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 매각 건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 10여 개월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25일에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선거가 참 힘이 들었다. 그 힘든 선거를 거쳐 바로 이 앞에 앉아 계신 당선자 여러분들이 매우 존경스럽다, 우리 각자의 생각은 달라도 존재하는 의미와 추구하는 가치는 같을 것이므로 서로 존중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주변엔 왜 그렇게 어렵고 행정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일개 도의원이 이럴진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도민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은 훨씬 더 크실 것으로 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요,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다는 보편적 진리를 저는 작지만 도의원 선거를 통해 깨달은 바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처음 접했던 일은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정무부지사 변경안 부결은 초선 도의원인 저에게 많은 의문과 아쉬움을 남게 했습니다.

여성부지사 임용은 최문순 도지사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경제부지사에 마땅한 여성 적임자가 없다면 공약실행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바꾸고 임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선 발령 후 진행을 해야 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주시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었습니다.

부결 처리했습니다.

사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원주 출신 의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각이라며 많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가장 재산가치가 높은 토지,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심 한가운데에 집단화되어 있어서 개발 가능성이 무한한 토지를 그것도 수의계약에 매각하겠다니,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현장도 나가 보지 못하고 안을 처리할 수 없어서 10월 회기에 현장을 나가본 후 논의 끝에 또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도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면적범위 내 매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 이후 원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언론보도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청의 조직개편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실 8국의 제한된 틀 속에서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조직 관리의 기본원칙들이 무시되었습니다.

통솔의 범위를 훨씬 넘겨버린 기획조정실, 총무행정관 같은 기형적 조직이 만들어 졌습니다.

보다 역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사업부서를 TF 형태로 한 개편 이전의 조직이 더 적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급 임용에서 정·준국장 구별 없이 풀제로 인사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우선해 도정을 이끄시겠다는 도지사님의 의지를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가결 처리한 것입니다.

지난 3월 회기에서는 전국 초유의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의 역할 체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모 지방지에 글이 실렸습니다.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추진 배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요란하게 소통 의지를 보여줘야 할 만큼 절박한 속사정이 있었는가, 지나치게 무거울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가벼워서도 안 된다는 것이 양자의 관계가 아닌가, 의회가 집행부의 관성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도 흔들어 보고 의심되지 않는 것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 의회의 소명이다,’ 화합하는 일보다 그 숙명적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대를 통해 자기의 존재와 정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도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치악산 드림랜드로의 드라마 제작단지 조성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십시오.

내용도 잘 모르면서 소속 정파가 다른 도의원들이 도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정치논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의결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소속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우리 강원도가 너무 어렵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사전 설명과 협조, 느리지만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합의를 이뤄내는 선진화된 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4. 9)

5분 자유발언 :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5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소방헬기 구매사업 관련(정녕 700억 국고의 해외유출을 주도 하시렵니까 !)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소방헬기 구매사업과 관련해서 '정녕 700억 국고의 해외 유출을 주도 하시렵니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0일 이 자리에서 막대한 국고의 유출을 막아달라고,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중지하고 점검·시정해 달라고, 국군과 경찰에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다목적 국산 헬기를 채택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발언 이후 공식적으로 그 어떤 반박이나 해명, 설명과 답변을 주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소방헬기의 수령이 최대 30년 간다고 합니다.

관행대로 외국산 헬기를 구입해 버린다면 최대 700억 원이 넘는 국고가 유출된다고 합니다.

정녕 강원도는 700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유출되는 것을 주도하겠다는 말입니까?

한두 푼도 아닌 230억 원의 예산 지출 문제를 왜 실무진 몇 사람의 주장대로, 문외한인 제가 봐도 적법하지도 않고 공정치 못한 방식으로 철저히 국익을 외면하는,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까?

누군가 이 질문에 책임 있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이런 모습을 보고 투명한 강원소방헬기 구매행정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소방가족 여러분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강원도 2,320명의 소방가족 여러분, 41명의 특수구조단 여러분, 20명의 항공구조대 여러분!

혹여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속에서 생명을 걸고 악전고투하는데 왜 딴지를 거냐.'라는 건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소방대원들은 알지 못하는 소수 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밀어붙이기식 소방헬기 구매행정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가족 여러분!

명백히 잘못된 것에 누군가는 아니라고 외쳐야 하는데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원 한 사람의 문제제기이지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조용히 일사천리로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만 놓고라도 강원도민 공청회 한번 열어볼까요?

아무리 전문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일선 실무자의 편의적 발상에만 의존하는 최종결재라인 지휘부의 소신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또 진행상황에 대해 폐쇄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첫째, 700억 국민의 혈세를 외국에 유출시키지 말아주십시오.

2,320명의 강원 소방가족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 한결같은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강원소방헬기 구입은 정부의 조달방침과 관련 법규대로 외자조달이 아니라 반드시 내자조달로 변경 조치되어야 합니다.

국산헬기 수리온은 관용헬기 국내 조달을 위한 다목적헬기로 국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특별감항인증 규정에 의거 소방헬기로서 국내 조달이 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생산라인 등 현지 확인 시찰은 해 보았는지, 내자조달에 대한 법규 조항 확인은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지침과 관련 법규를 위배하면서까지 외자조달을 고집하는 억지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조달청의 내자조달 권고를 수용, 이행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내 판매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산헬기 업체는 법인세와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기에 혈세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자조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강원소방에서 작성한 규격서의 불공정시비를 즉각 시정해 주십시오.

한 가지 실례로 엔진최대이륙마력 규격이 1,600마력 이상이라는 규정과 최대이륙중량 9,000㎏ 이하라는 규격 내용은 중형급인 AW139 모델과 중대형급인 수리온 모델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가격결정방식이 최저가낙찰제이기 때문에 이미 국산헬기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문외한인 제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정부 조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유사 동급 헬기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격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산헬기 수리온은 삼성이나 현대 등 사기업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특정 사기업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소방장비 구입의 권한과 주체가 시도 본부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안전처는 국토부・국방부・경찰청・조달청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소방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화통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강원도가 국정 난맥을 저지르는 한 주체가 되어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는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제대로 된 보고 한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확대되어 저지러질 대로 저지러지고 난 후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 주실 것을 엄중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4.16)

5분 자유발언 : 박현창 의원 (새누리당, 평창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농업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만남의 도시 HAPPY 700 평창 출신 박현창 의원입니다.

42년 만의 겨울 가뭄이 봄까지 지속되던 중 지난 4월 2일부터 내린 단비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가뭄이 해갈되고 산불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나 물 부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저수지의 용수가 고갈되고 하천의 물이 말라 하상굴착과 지하수 개발 등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련 기관 모두에서는 많은 시책을 만들어서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정작 가슴 아픈 것은 FTA로 인하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농민들의 걱정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평생을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들도 더 이상 농사를 지어봐야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다른 일들을 하면서 농산물을 사먹는 게 빚을 덜 진다는 몸부림과 아우성의 메아리 속에서 본 의원은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 기반시설인 용·배수로 재정비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드립니다.

1980년 초부터 우리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룩한 강원도 내의논밭 경지정리 면적은 작년 말 기준 853개 지구에 4만 2,965ha이며 그중 1985년도 이전에 준공하여 30년이 경과한 지역은 208개 지구에 1만 2,758ha,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완료하여 20년이 넘은 지역도 220개 지구 1만 140ha에 달하고 있습니다.

논밭 경지정리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 영농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공사 당시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토공 수로 조성이나 공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 수로관 시공에 따라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노후, 붕괴, 세굴 등으로 당장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최문순 지사님!

아쉽게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비 지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작년보다도 1억 1,200만 원이 감소된 3억 3,600만 원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고 창피할 정도의 예산입니다.

도비 40억을 지원하면 시·군비 60억을 부담하는 40% 지원 사업으로서 지역의 건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흙탕물 저감 등 그야말로 건설 복지, 농업 복지를 실감하게 해 주는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용 취입보 및 어도 설치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농업용 취입보는 3,894개소이며 혜택 면적은 2만 5,284ha로 관리되고 있으나 그동안 논에서 밭으로 전환된 농지이용 실태를 정밀 조사한다면 취입보를 이용하는 면적은 이보다도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취입보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 중 3ha 미만의 수리답이 2,330개소 3,061ha로 평균 1.3ha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농업의 수리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어도 설치사업은 10개소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3억 3,600만 원과 비교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유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도 사업비가 많은 것이 아니고 수리시설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표현이며 어도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신 환동해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천에 설치된 취입보 안에는 우기 시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토사가 퇴적되어 꺽지, 쏘가리, 메기 등이 서식하던 바위틈을 모두 메워버리므로 그 많던 토종 민물고기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또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취입보, 용수로 등 수리시설의 파손, 유실, 전도,

세굴 등의 수해 피해가 엄청나게 크며 취입보에 붙어있는 어도의 피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규모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비 부담은 지방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며 대부분의 시·군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복구 사업을 마무리 합니다.

참고로 2006년 집중호우 시 평창군의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사례를 말씀드리면 취입보를 비롯한 용·배수로 시설 피해는 197개소에 350억 원이었고 537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나름대로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별로 취입보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밭으로의 전환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혜택 면적이 전무하거나 3ha 미만으로 산불 등 비상용수 등의 활용이 필요 없는 취입보는 과감히 철거하여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꼭 필요한 지역은 양수장이나 관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국가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이관하여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육체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 많은 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청정한 강원도의 환경을 보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검토를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4.16)

5분 자유발언 : 원강수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5선거구)

발언요지 : 원주 종축장 부지 현안 관련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강수 의원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강원도청 5,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강원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원주시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 드라마세트장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구 종축장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활용 계획은 자치단체가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강원도는 종축장 부지 가치에 걸맞은 활용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활용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의 위치가 워낙 좋고 보유 활용도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영개발 또는 공공기관들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공공타운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화 불모지인 원주시의 상황, 원주시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갈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종축장 부지에 문화와 산업을 한곳에 접목시키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마이스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철자의 약자인데요, ‘MICE’라고 합니다.

M은 Meeting입니다, 기업 회의나 소규모 모임. I는 Incentives입니다.

기업에서 실적이나 성과가 좋은 직원들을, 말하자면 포상 관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C는 Convention으로 국제회의입니다.

그리고 E는 Exhibition으로 전시회를 뜻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종축장 부지 한곳에 집중시키면 굉장히 유용한 시설로 원주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산업의 대표 아이템이 컨벤션센터인데 컨벤션센터의 성공사례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ICC제주'라고 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이 제주컨벤션센터는 여러 회의실을 갖추고 있고 레스토랑과 같은 상업시설, 대규모 판매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건립이 돼서 지금은 제주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제주도민의 자존심과 같은 시설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제주컨벤션센터는 4,000석 규모의 공연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실내 공연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치악예술관은 660석 규모이고 백운아트홀은 970석 규모입니다.

진짜 큰 규모의 수준 높은 뮤지컬 공연이나 또는 질 높은 콘서트 개최는 원주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강원도가 이런 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를 종축장 부지에 건립을 하면 혁신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와 여러 행사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마침 정부도 마이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법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전담 부서를 두고 관련 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기본적인 성공 요건은 시내 중심부에 자리를 잡아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종축장 부지는 그런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원주 도심과 혁신도시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땅, 노른자위 땅인 구 종축장 부지에 문화와 관광, 컨벤션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주시민의 이익과 종축장 부지 가치를 지켜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본 대로, 느낀 대로 몇 마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자치의 본질인 의회의 권능을 지켜주시는 데 힘 써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남규 위원장님, 구 종축장 부지의 가치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맥을 잡아주셨습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해박한 경험으로 종축장 부지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기홍 의원님,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으로 원주시민의 이익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성현 의원님, 수의계약으로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짚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봉 의원님, 원주시민의 이익과 강원도의 이익을 동시에 지켜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서 의원님, 묵직한 울림으로 합리적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 의원님, 종축장 부지 매각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본질을 꿰뚫는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매각에 대한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짚어내서 검토의견을 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구성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살아있는, 역동성을 느끼게 해 주는 묵직한 울림이 있는 검토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4.16)

5분 자유발언 : 김규태 의원 (새누리당, 동해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강원관광발전을 위한 전문 관광종사자 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관광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파도치는 곳 동해시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강원관광 발전을 위한 전문 관광종사자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평소의 소신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광산업은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증대 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수출 100억 원으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가 79명인데 비해 관광산업은 매출이 100억 원 증가할 때 고용이 229명이 늘어 세 배 가까운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관광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종사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37.7%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바로 '굴뚝 없는 청정산업 강원관광'을 발전시킬 유사 이래 최대의 기회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곧 강원도의 미래와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경기장 건립 등 시설 부분에만 매진해 온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3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광종사자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는 18개 학교에 33개의 관광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매년 2,400여 명의 예비 관광종사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40여 개의 관광호텔업을 비롯해 111개의 관광사업체와 254개의 여행업계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비 관광종사자를 채용해도 즉시 현장에 투입할 정도의 실무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실무형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산학협력체계를 확고히 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학협력체계를 통하여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광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원 또는 수련원과 같은 전문 관광종사자 육성시설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현장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운영 중인 70개의 골프장과 건설 중인 12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에서는 운영에 필수적인 경기 보조원이 부족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타지에서 인력을 수급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관광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기관이 운영된다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는 구인난을 해결해 주고 예비 직장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을 비롯한 많은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광산업의 특성상 아무리 좋은 시설을 구비한다 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자질과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시설과 홍보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한국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광종사자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강원관광 발전의 미래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전문 관광종사자 육성시설에 대하여 도정의 책임자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4.16)

5분 자유발언 : 구자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도정 현안에 대한 점검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우선 9명의 실종자를 포함해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애도와 함께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강원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모전으로, 정파 간 갈등으로 비화했던 원주혁신도시 인근 도유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어제 옛 종축장 부지에 추진했던 드라마 세트장이 결국 무산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를 떠나 충남 부여에서 곧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민,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논란의 차단과 갈등의 해법은 찾을 수 없었는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을 되돌아보면 이 사항과 관련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정책협의는 실종된 채 불명확하고 무분별한 폭로전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난무했습니다.

또한 도지사와 원주시장은 투기 의혹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매도당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도의회에서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도에서는 레고랜드 조성사업에 도유지를 최장 100년간 임대해 주고 진입교량도 건설해 줍니다.

도내 이전기업에게는 입지 매입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줍니다.

동계올림픽의 일부 시설은 부지를 제공한 대학 측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도지사와 해당 지역이 주는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부지 매각논의는 과거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했던 국내 자치단체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업체의 원주 정착과 드라마의 지속적 촬영을 요구하는 제안으로 시작됐던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SOC 성사, 수도권 규제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과 정쟁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유지 활용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도유지별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과 방안을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분석해 제시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고 즉흥적인 개발 논의나 무분별한 반대를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역시 발목 잡기식 결정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재산이 가장 효율적이고 강원도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치열한 고민과 성찰,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정파를 떠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회상이 정립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동료 의원을 언급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급한 언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5. 7)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에 드리는 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29일 양구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강원도 번영과 양구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해 진력하신 조영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올리며 준비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년 전 강원도개발공사 본사가 춘천에서 평창으로 이전한 이유였던 알펜시아 운영 정상화 목적이 달성된 만큼 '강원도개발공사의 본사와 인력 재배치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과 125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물을 건립했다가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갈 오는 7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소 마련을 신축이 아닌 임대로 하면 안 될까?'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언하고자 합니다.

엄연히 다른 주제이기는 하지만 하나를 풀면 하나가 같이 해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두 주제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본사 이전은 지난 2010년 김상갑 전 사장님 취임 직후 강원도개발공사 재정난의 원인인 알펜시아 회생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취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전 당시 알펜시아는 198억 원 매출에 영업손익 246억 원 적자, 감가상각비 149억 원을 제외한 현금기준 영업이익 9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문제가 심각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2013년 521억 원의 매출에 170억 원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현금기준 영업이익 39억 원 흑자를 달성하는

등 2년 전 이미 리조트 운영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가 평창으로 이전했던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사 및 인력에 대한 적절한 재조취가 취해지지 않아 많은 직원분들과 가족분들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한창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까지는 감수할 수 있고 감내해야 할 불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두 부부가 함께 양육을 하거나 낮 시간만이라도 어린이집 등을 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유가 아닌 아이를 돌보아야 할 시간이란 물리적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회사를 그만둔 강원도개발공사 직원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0년 이전 당시 직원 수가 129명이니 주요 임직원을 제외하면 거의 절반이 회사를 그만둔 것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떠난 젊은 직원들의 이직 이유가 아이 양육 하나만은 아니었더라도 이에 따른 업무 공백과 업무부담 가중은 분명히 또 다른 이직자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설립 목적과 이유는 알펜시아 하나가 아닙니다.

분양과 운영을 통해 알펜시아 부채를 갚아가려던 애초 계획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적으로 인해 운영만이라도 정상화해 보자는 배수진을 치는 자세로 본사 이전을 했던 것이고 운영에 있어 이미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전 직원이 평창에 있다고 분양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분양실적은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고 SOC기반 등이 조성되고 있는 시간과 환경에 기인한 것이지 전 직원이 평창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서울, 부산, 광주처럼 큰 자본이 많이 오가고 큰 자본가들이 많은 대도시에 있는 것이 분양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현재 본사에 있는 인력 중 실제 알펜시아와 관련한 업무 인력은 약 30% 이내에 불과합니다.

3년 뒤 올림픽이 끝난 후 앞으로 다른 업무영역에서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야 할 70% 이상의 직원들을 설마 2018년 이후에도 계속 평창에 남겨두려 하시는지요?
이처럼 강원도개발공사가 현재, 또한 3년도 채 안 있으면 끝날 올림픽 이후 본연의 업무인 산업단지개발, 공공개발사업, 주택단지개발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본사 및 인력에 대한 재배치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알펜시아와 직접 관련된 업무 인력 외 본사 인력 조기 재배치는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500여 명, 내년 하반기까지 추가 300여 명 등 평창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5억 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 사무실 신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후 활용 방안이 없어 올림픽 이후 철거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본사 건물인 구 한국콘도 건물에 공간만 확보된다면 이를 조직위가 충분히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조직위도 그렇게 할 용의가 강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지었다가 철거한다는 얘기에 익숙해져서인지 125억 원이란 숫자가 놀랍지도 않은가 보지만 지었다가 그냥 부수기엔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이 후원한 돈과 회장님들이 낸 세금도 포함된 돈이겠지만 125억 원이란 숫자 안에는 분명히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늦은 밤까지 불을 켜고 점포에 앉아 있는 자영업자들의 땀방울과 추운 겨울 좌판에 앉아 손을 호호 부시는 우리 국민, 도민들의 입김이 배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땀방울과 입김이 내 형제자매, 내 어머니의 그것이라 느끼고 그 애절함이 배어 있는 125억 원 이상의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진 국민과 도민의 명령임을 기억하자는 말씀을 올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5. 7)

5분 자유발언 : 권혁열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총장보다 내 사람 심기가 더 중요한가?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의 3선 당선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 본 의원은 원칙과 기준도 없는 최문순 도지사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어」에 자공이 공자에게 정사를 묻자 양식과 군사를 풍족히 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이 믿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공이 이 가운데 부득이하게 반드시 버린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냐고 다시 물었더니 공자는 식량과 군사는 버려도 되나 반드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최문순 지사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이기에 인용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 자신이 만든 도립대학 총장 직선제라는 룰과 제도, 원칙은 만든 그날부터 깨져버렸습니다.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도립대학 총장 인선과 관련해 과연 최문순 지사와 그를 따르는 소위 보좌진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원칙과 믿음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2순위였던 당시 원병관 후보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총장으로 임명하더니 그마저도 임기를 불과 7개월여 남겨두고 아무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사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총장의 장기간 공백에 따른 학교 운영의 파행을 막고자 15명의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숙고 끝에 1·2순위로 결정된 공모 결과를 올린 두 사람의 후보를 부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방패막이를 이용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옹졸한 행동입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룰과 원칙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룰과 원칙 위에 군림하려 하고 교언영색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권력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해바라기, 사쿠라, 간신이라고 부르지요.

최문순 지사의 원칙 없는 인사가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끼어 활개를 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립대학 총장 인선에 대한 강원도의 결정이 얼마나 가당찮았으면 지역사회단체들과 동문회, 주민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원칙대로 수용하라며 대학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겠습니까?

대학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올린 두 사람의 후보를 부적합으로 판정한 이유가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역량 부족과 함량 미달이라고 합니다.

공모과정에선 정확한 자격기준도 없이 관망만 하고 있다가, 아니 자기 사람이 되겠지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더니 결과적으로 피박을 쓰게 되어 이제 와서 파투가 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안들을 풀어갈 적임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아울러 두 사람의 총장 부적격에 대한 심사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공모에 신청했던 10명의 후보자 명예와 실추된 자존심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의회 보고와 함께 도민 모두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비롯한 그 어떤 외부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이를 보호해야 할 학문의 전당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부끄러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믿음을 깨뜨린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사과 없이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대와 9대에 같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은 설립취지에 맞도록 학과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누차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립대학에는 우리 도의 핵심 산업인 농·수·축·임산 관련 학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이에 대한 대안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문순 도정은 도립대학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방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립대학의 예산은 최문순 지사 취임 이래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예산조차 지사의 대표적인 인기영합 공약인 반값등록금 지원에 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학문과 연구,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에 들어가야 할 예산은 뒷전입니다.

오늘의 도립대는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인지조차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도립대학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심사숙고 끝에 결정해 올린 1·2순위 두 사람의 후보를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일언지하 단칼에 내리쳤습니다.

강원도의 이번 결정은 대학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었고 교수들을 핫바지로 돌려세웠으며 상생해야 할 강원도민과 지역사회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러한 최문순 도정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총장 선출과정을 보고 도립대학의 미래 발전을 바라보는 강원도민과 도립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관계자 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도립대 정상화 대책위에서 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어 오늘도 주민들이, 단체들이, 동문회들이 도청에 항의 방문 온다는 것을 본 의원이 그러지 못하게 막고 왔습니다.

이번 도립대학 총장 사태가 최 지사의 결정인지, 아니면 지사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다른 제3의 해바라기 세력들의 작당인지 진상과 진실을 지사께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최 지사의 의중이 아니고 제3 세력들의 작당이라면 먼저 그 작당들부터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대학 총장 인선과 관련해 먼저 공모제로 선출된 자를 원칙대로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총장 임용 문제를 직선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임명제로 갈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큰 저항이 닥쳐올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만든 원칙도 깰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최문순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5.21)

5분 자유발언 : 최성현 의원 (새누리당, 춘천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과 행복한 동행, 춘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최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방청석에 함께한 '진태스타일 밴드'와 '사랑채 밴드' 회원님들, 그리고 강원도 의용소방대 18개 시·군 대장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11일에는 춘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대학교에 문을 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 주셨는데 전 세계의 빅데이터 시장은 연평균 35%를 넘는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선진국들도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은 그간 피해의식에 젖어 살고 있었다는 게 현실입니다.

분단국가의 표상처럼 허리 잘린 땅은 일찌감치 국토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고 군사시설 보호와 환경보전의 명분으로 투자와 개발에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제한과 규제로 꽁꽁 묶여 있고 연고주의에 가려 인재 등용에서도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낙후되고 소외되는 지역 강원도, 바로 우리들이 절감해 온 현주소입니다.

6공화국부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춘천~속초 간 도로망, 15년이 걸린 경춘선 복선화, 올림픽 유치가 안 되었더라면 원주~강릉 간 복선 철도 또한 추진이 요원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도가 시행한 사회적 조사에 의하면 도내 대학생 중 강원도에 정착하겠다는 학생은 22.7%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강원도를 떠나야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런 차에 네이버가 주도하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발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만큼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금광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수치, 문자, 영상 등 방대한 물량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기술입니다.

네이버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모인 빅데이터 산업의 거대한 광맥으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 광맥에 쌓여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캐내어 더 좋은 제품으로 가공해 내는 허브 역할을 해 내야 될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네이버에 강원도를 검색하면 강원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강원도청 웹문서와 페이지가 보였다면 빅데이터 포털에서는 강원도와 관련한 기상·교통·인구분포·관광·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농업시대가 열려 강원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점 또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합니다.

강원도의 전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의료기기나 스포츠 지식서비스 산업 등과 연계한 모바일 앱 개발과 레저·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에도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중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또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개발연대 불균형 성장 정책 과정에서 지체되고 정체된 지역과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크게 보강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 지역기업으로서의 연차를 더해가고 있지만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는 그동안 네이버가 연고기업으로서의 진입 단계를 지나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실현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이 센터를 통해 강원도의 대표산업인 관광과 헬스케어, 바이오 등 각종 분야에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 춘천에 둥지를 튼 의미를 춘천시민들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취지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최문순 도정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전국에서 열 번째로 설치되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국내 최대 포털 기업인 네이버와 대학, 그리고 강원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손을 맞잡고 나간다면 전국 최고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발돋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역동적 관계 속에서 창조경제의 꽃은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로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5.21)

5분 자유발언 : 김용래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생활정치실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4월 27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생활정치실천연구회에서 서울 강북구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전문재활교육기관인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장애인식 개선교육 및 장애체험을 직접 경험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들을 여기 계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 필요한 정책의 추진을 제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 당시 국립재활원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담당하시는 강사님으로부터 받은 첫 질문은 '장애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했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이 심퍼시(Sympathy), 즉 동정(同情)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장애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장애인은 도움을 줘야 하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엠퍼시(Empathy), 즉 공감(共感)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으로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본다면 절대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체험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박윤미 의원님과 박길선 의원님이 휠체어를 앉아계신 분을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아주 경사가 심한 오르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 저곳을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 비장애인이 뒤에서 밀어준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여성분이 보일 것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분을 직접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불편한 것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직접 느낄 수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아주 깜짝 놀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발생 원인으로 선천성 장애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의 발생원인 중 88.9%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였으며 일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한 선천성 장애는 11.1%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애의 원인은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늘 상존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화재 사고, 등산, 각종 운동의 과정 등에서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나 찾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선천성 장애와 달리 후천성 장애는 철저한 안전교육, 생활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부터 바뀌어야 하고 또 시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국립재활원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가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으며 활동 중인 강사도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제언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상설화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을 통해 이들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공감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제언을 드립니다.

개설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에 도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 발생 원인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적 장애가 88.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사전 교육을 통하여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과 체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체험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생활정치실천연구회는 김동일 회장님을 필두로 하여 열두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 다양한 현장체험을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좋은 의견들을 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5.21)

5분 자유발언 :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5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소방헬기 국산 구매 관련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소방헬기 구입 관련해서 국산헬기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 세 번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일 자로 육군 의무후송항공대가 창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산헬기 6대의 수리온으로 이루어졌고 그중 1대는 춘천에 배치된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과연 외국산헬기로 구성된 소방헬기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국방용과 소방용이라는 용어의 차이인가요?

왜 육군은 강원소방본부처럼 성능이 뛰어나고 검증된 외국산헬기를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 생명을 좌우하는 국방력의 문제인데 세계의 유력한 외국산헬기를 왜 실전에 배치하지 않는 것인가요?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의 혈세 1조 3,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국적 지형에 맞는 우수한 성능의 헬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은 최소한 개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실천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의 문제 제기는 헬기 성능이나 장비 규격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낱 질 낮은 헬기를 가지고 로비 정도로 호도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밝혀둡니다.

전국 15개 시도소방안전본부에 100% 외국산인 25대의 소방헬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산헬기가 생산되지 않아 시도소방안전본부마다 각기 다른 나라와 각기 다른 기종의 외국산헬기를 채택하고 사용하다보니 필연적으로 따로 국밥 식 헬기소방행정의 비효율과 난맥상을 보여 왔습니다. 헬기 구입 따로, 조종사 교육 따로, 정비사 교육 따로, 부품 구매 따로, 다 따로 따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헬기소방행정의 엄청난 비효율과 예산낭비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개선 노력이 전무합니다.

헬기소방행정의 선진화와 효율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시도 본부의 개별적, 독재적 판단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의 타성적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정부가 나서서 주도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국방부와 경찰은 채택하고 국민안전처 등 나머지 부처는 외면하는 국산헬기 문제를 볼 때 과연 정부의 국무조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아도 국무조정 기능이 필요한 사안이라 동의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작정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전국 시도마다 각기 다른 수준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으며 살고 있는 웃지 못 할 현실에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헬기 구매와 관련해서 조달청의 조달행정 수준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상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면 규격서에 제품의 제작기간이 있는데 강원소방본부가 조달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양양에 있는 이태리 아우구스타 AW139모델 수의계약 과정과 거의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거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잘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제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국고 유출 문제를 제기했듯이 헬기 판매 업체에 대한 과세 문제도 조달행정 진행 과정에서 반영하여 지적되어 바로잡아 주는 단위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제 조달행정의 한심스러운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와 조달청에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과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형식 승인이나 특별감항인증 등 국산헬기를 개발해 놓고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회에서도 항공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5.21)

5분 자유발언 : 곽영승 의원 (새누리당, 평창군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정 어디로 가나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 강원도정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알펜시아, 미시령터널, 가스값, 도립의료원, 강원FC, 동해항, 도처에서 예산을 잡아먹고 있는 도 산하 건물과 기관들, 양양공항, 경제자유구역, 인사 난맥상 등 수많은 문제들이 도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진전된 것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전임자가 추진했던 것들입니다.

문제점들 또한 전임자가 추진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전임자만 탓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이 도정을 맡은 지 만 4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도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도정의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시간과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안들은 무엇보다도 지사님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데 결단은커녕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하신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적극 행정, 소신 행정은 기대일 뿐 소극 행정, 피동적 행정을 넘어 부작위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백화점식입니다.

온갖 문제를 놔둔 채 새로운 일을 시도한들 도청 조직의 총역량이 제대로 투입되겠습니까?

좌표를 세우고 전력투구해서 우선 현안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무언가 결과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지사님은 아직까지도 행정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행정을 모르면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온갖 행사장에 다 참석하시느라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신 조직이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데 인사 난맥으로 도청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조직 장악도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자발적으로 역동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관료조직과 행정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지사님의 생각대로라면 도청 조직의 자발적 역동성은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견인해야 하는데 지사님의 일관성 없는 인사정책으로 도청 구성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포퓰리즘까지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강원도립대 무상 등록금에 이어 도내 대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돈이 없어 고등학교도 못 가고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상당수 초·중·고생들에게는 눈을 감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공짜로 주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입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래리 바텔스’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2009년에 미국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돈 많고 힘 있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50%나 더 많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빈곤계층은 그들의 주장을 정치권에 전달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런 경향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사님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이 학자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집니다.

당장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누리과정예산, 노인기초연금 등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또 지사님은 도입에 60억 원이 필요하고 매년 운영비가 1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지역화폐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지역화폐에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이 또한 강원FC 못지않은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저는 국장님들의 분발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장님들은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이 얼마나 보람된 직업입니까?

국장님들이 순정한 위민행정의 마음으로 도정을 살피시고 지사님을 잘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5.21)

5분 자유발언 : 조영기 의원 (새누리당, 양구군 선거구)

발언요지 : 접경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촉구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대장 여러분과 인터넷 동호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새누리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결특위 김기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처럼 “강원북부 접경지역에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감한 예산지원과 세부적인 발전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해 보전산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전체면적 대비 각종 규제면적의 비율이 200%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규제들은 지역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여 각종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1%로 도내 다른 6개 군의 13%보다 4.9%가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강원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환경

보전에 가려 투자와 개발에서는 항상 뒷전이며 각종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음에도 중앙정부 및 강원도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행, 국가균형발전법상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규제가 산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염려스러운 점은 강원도 내에서도 시·군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가 펼쳐지는 인근 지역들은 많은 SOC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과 연관이 없는 지역과 접경지역들은 정책적인 상황으로 인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개발사업들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강원도의 미래가 달린 큰 과제이자 강원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경제의 중심, 관광의 중심도로 만들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전 도민이 하나 되어 함께 치러야 할 중대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향후 강원도가 통일시대 북방경제의 중심지로 나서기 위해서는 역사적·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은 통일시대의 남북교류 중심지, DMZ 생태관광 중심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북방경제 개척의 최선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강원북부 접경지역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한 예산지원과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사님께 간절히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5.21)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FC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18개 시·군의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인터넷 동호회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속초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FC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축구는 강원도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서 100여 년 전인 1920년을 전후해 관동 단양제 축구대회에 각 지역을 망라한 50개 팀이 출전해 전국 규모로 열려 일찍부터 강원도는 전 국민에게 최고의 축구 열기를 전파하고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강원도를 연고지로 한 강원 풋볼클럽이 2008년 창단되어 2009년 시즌 K리그의 열다섯 번째 구단으로 참가하였고 비록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화끈한 공격축구를 펼치며 도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선수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잦은 감독교체 등으로 작년에 2부 리그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으면서 축구를 통한 강원도의 힘을 보기를 원했던 많은 도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2014년 특별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구단 관계자들의 불법 회계운용과 공금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강원도는 2009년 30억 원의 주식취득을 시작으로 올해 예산 40억 원까지 합해 총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강원FC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구단 운영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강원인의 꿈과 희망을 초록 그라운드에서 펼치라는 도민의 지상명령을 뒤로한 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강원FC에 대해 본 의원은 이제 종합적인 실태 및 경영환경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책 마련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바로 구단의 경영정상화 방안입니다.

경영정상화야말로 1부 리그 승격을 통한 도민들의 자존심 회복의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해체 방안도 검토하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강원FC를 살려야 하는데 정작 자구노력을 해야 할 구단은 관심이 없어 보이고 앞장서 스폰서 발굴이나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어 보인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구단의 재정확보 노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생하기 위해 연봉 2,000만 원의 어린 선수를 키워 2억 3,000만 원에 1부 리그로 이적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18개 시·군의 유소년 선수단을 확대 운영하고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무국 인력 감축, 선수연봉 축소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도내 어려운 경제여건상 적극적인 후원 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원FC의 부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창단 이후 연간 평균 103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됐으나 이는 K리그 평균 수준에도 못 미쳐 타 구단 대비 선수인건비 총액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부 리그 우승팀인 전북현대는 순수한 선수연봉만 118억 원입니다.

올해 강원FC의 전체 선수연봉 15억 원과 무려 8배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전북현대의 이동국 선수연봉이 20억입니다.

우리 강원FC 전체 선수 30명의 연봉은 15억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구단주인 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구단인 성남FC도 선수연봉으로

만 60억 원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부 리그인 이랜드와 대구FC는 30억에서 40억씩 선수연봉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가 더 이상 강원FC를 움켜쥐지 말고 구단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여 키울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강원랜드에게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강원랜드는 강원FC 지원과 관련해서 전반기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후반기에 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5년 동안 226억 원을 후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강원FC의 새로운 구단주로서 강원랜드에 대한 적합성 등에 대한 도민여론과 도와 강원랜드의 입장 그리고 강원FC 육성 종합대책 등 여러 각도에서 강원도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론화 작업은 강원FC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문 축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도화선 역할을 하며 강원FC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촉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도 집행부의 심사숙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5.21)

5분 자유발언 :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발언요지 : (구)원주여고 부지 활용방안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 원주여고 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여고는 1945년에 개교한 이래 70년 동안 수많은 학생을 배출한 강원권의 명문 여고입니다.
저 역시 원주여고 출신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7월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구 원주여고 부지는 2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초 구 원주여고 부지의 활용계획은 최문순 지사와 원창묵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에 공연장과 청소년 문화센터, 게스트하우스, 창작동 등을 갖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영서 남부권의 문화·예술·창작 활동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지난해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구 춘천여고 부지 매입을 추진하자 도의회에서도 구 춘천여고 부지 매입 의결 조건에 '강원도 차원에서 구 원주여고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수립 후 매입 등을 전제'로 명시해 원주 시민들에게 더욱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구 원주여고 부지매각 절차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원창묵 원주시장은 강원도 소유의 구 종축장 부지와 도교육청 소유의 원주여고 부지 교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공동화되고 이에 따른 심각한 도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구

원주여고 부지, 그리고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교육지원청, 이 두 기관이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도와 교육청의 재산 교환을 통해 동시에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원 시장의 제안에 전격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 시장이 맞교환 제안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 데도 도나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원주시 명륜동의 현 교육지원청 부지는 강원도 전체 학생 수의 30%를 넘는 인원을 감당하는 기관으로서 현 부지가 너무 협소해 더 넓은 부지로의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원주는 도내 최대도시로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다양한 개발여건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부분에선 여전히 미흡하고 취약한 실정입니다.

저는 구 원주여고 부지가 강원도 예술창작센터 기능과 영서 남부권의 복합문화 허브공간으로 활용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를 서로 맞교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검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교환에 따른 가격차이로 어려움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응하는 교환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진정으로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추진하려는 도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도와 교육청 관련 부서가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저의 여고시절의 추억이 오롯이 남아 있는 교실과 책상과 운동장이 우범지대로 전락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방치된 공간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음악과 연극공연이 펼쳐지고 지역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선보이는 곳, 시민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생활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러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구 원주여고 부지가 지역민의 사랑을 담뿍 받는 시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당초 공약대로 옛 원주여고가 원주 시민의 문화커뮤니티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6.10)

5분 자유발언 : 이문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장애인야학 지원에 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학령기를 놓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의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명시는 교육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제도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시대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교육의 권리에서 당연스럽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41.4%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성인장애인의 학력은 여전히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는 가난을 낳고 그것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악순환이 장애인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그보다 더한 헌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보장해 준다 해도 과거 교실에서 밀려나 교육을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때에는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성인장애인 야학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전무한 실정입니다.
강원도의 평생교육기관은 지역에서 성인 비장애인들의 평생학습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이용하기에는 장애 감수성이나 접근성, 욕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 성인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학령기를 놓치고 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늦게나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야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원주, 강릉, 동해, 속초지역에 4개의 장애인 야학이 있으며 원주시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반딧불장애인야학’은 강원도 최초로 2008년부터 원주시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성인 문해교육을 시작했으며 현재 50여 명에 가까운 성인장애인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비영리단체만으로는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을 책임지기에는 재정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 매회 장소를 옮기면서 진행하고 저녁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야학에 등교를 해도 교실이 부족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몇 년째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공간인 ‘반딧불장애인야학’이 평생교육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은 성인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 이전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딧불장애인야학’은 최소의 재정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한 민간단체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라고 해서 소외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현실과 환경에 강원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학력 향상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진일보(進一步)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필요하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기초지자체와 타 광역지자체에 바람직한 정책을 전파하는 선진행정의 강원도정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6.10)

5분 자유발언 : 김규태 의원 (새누리당, 동해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DBS선사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9년 동해항에서 취항한 DBS 크루즈훼리 운항과 관련한 강원도의 입장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동해는 한·중·일·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해양무대이자 향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 전성시대를 가져올 미래공간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해의 미래가치를 인식한 부산, 울산, 포항시 등의 자치단체들은 동북아 물류 흐름 속에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한경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 및 북방시대 환동해 물류 여객 중심지 육성을 도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해항·속초항에 TWO-PORT 항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강원도 주요 업무시행 계획에 따르면 동해항은 DBS항로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여객물류 유치, 속초항은 중단된 속초~자루노비·훈춘항로 재개로 TWO-PORT 항로 완성으로 인한 북방항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해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동해항을 기항지로 일본 사카이미나토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하는 DBS 크루즈훼리가 2009년 취항하여

현재까지 항로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기대와 함께 우려감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DBS선사에 동해시의 시비를 제외하고도 강원도는 약 27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비를 보조하여 이제 겨우 자생력을 가질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속초항의 스테나대아라인사의 항로를 DBS 사에 운항 허가함으로 1개사가 2개 노선을 운항하게 된다면 1개 노선은 적자가 자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나대아라인은 운항 16개월 만에 경영난으로 운항 정지가 된 바 있고 특히 DBS선사의 경영난이 예상됨으로 동해시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테나대아라인이 허가 운항되어 양 선사가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한 선사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 이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로운항은 재정투자사업인 도로나 철도가 아닙니다.

민간선사의 경쟁력과 물동량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동서횡단 교통망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 수 있지만 국제항로는 이 역설이 먹히지 않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경제학이론이 적용되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ONE-PORT 정책으로 진행하다가 여건 성숙국면에서 TWO-PORT항로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강원도의 조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의 중국 훈춘~러시아 자루비노 직항로 개설 및 포항 영일만항의 러시아 자루비노 항로 개설 동향은 더욱 우리 도의 북방항로 경쟁력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은 기왕에 어렵게 유지한 동해항 DBS 크루즈훼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축 형성을 공고히 하는 국제항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더욱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과 경북 등 타 지방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관광, 공산품, 농수산물 수출 등과 연계하여 강원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안 마련을 주문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6.10)

5분 자유발언 : 진기엽 의원 (새누리당, 횡성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의 극심한 가뭄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때 이른 불볕더위와 예년에 못 미치는 강수량으로 인한 강원도의 극심한 가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이 가뭄 공포에 들썩이고 있는 요즘 도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58% 수준이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예년의 39% 수준으로 가뭄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마전선이 강원 지역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뭄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의 중심에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오직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우리의 의지가 무색해 질 만큼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이 댐 건설 이후 최저 수위를 기록했는가 하면 물줄기 폭이 120m에 달하던 하천이 2m~3m의 실개천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모내기한 모가 말라죽는가 하면 고랭지 배추와 무는 파종도 하지 못한 곳이 허다하고 옥수수 등의 밭작물은 생육에 크나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일 강원도에 최고 9.5㎜, 평균 2.6㎜의 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는 도민의 마음은 눈앞에 아픈 자식을 두고도 전혀 손을 못 쓰는 부모의 심정처럼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무심한 하늘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항상 이맘때면 장관을 연출하던 강변의 푸르른 들판 풍경은 타들어 가는 황무지로, 습기를 잃은 강바닥은 황량한 붉은 언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도민들의 심각한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정과 스프링클러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히 지원하고 농림식품부에 국비 55억 원과 국가안전처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엊그제 국비 26억 원을 배정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강원도 농촌의 현실입니다.

중앙부처는 이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가적인 긴급 용수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의 가뭄대책은 용수가 부족할 때마다 관정을 파고 보와 농수로를 정비하는 임시방편이 다였습니다.

이 같은 지원책들이 극심한 가뭄 앞에 역부족일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마음 편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강원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가뭄은 이제 심각한 재해로 인식되어야 하며 우리는 철저하고 체계적·지속적 준비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뭄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보다 진일보하고 항구적인 정책 수립과 더불어 대응체계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한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자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가격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기상청은 3월에 내린 전국 평균 4.5㎜ 비의 경제적 가치를 약 2,5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봄비가 아니라 금비인 것입니다.

지난겨울부터 가뭄이 오래 지속된 탓에 적은 강수량에도 농작물 등의 성장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경제적 효과를 준만큼 앞으로 내리는 비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클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주먹만 한 금덩이보다 한 잔의 물이 소중하듯이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말라붙은 땅과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모쪼록 장기화되어 가는 가뭄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번 가뭄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가 되어 도민들의 가슴에 단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5. 6.19)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하여 올리는 제언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54명 탑승자 중 228명이 사망한 1997년 KE801편 괌 추락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항공사고는 한 가지 요인으로만 일어날 확률이 극히 드문데 이 사고의 요인으로는 지독한 악천후, 고장으로 인한 활공각 유도장비인 괌 공항 글라이드 슬로프(glide slope)의 부재, 그리고 우리 문화의 특징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받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겨질 만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겨내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충·효·예로 대표되는 위대한 우리 유산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는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착취하던 위정자들이 도망갈 때도 스스로 의병을 조직해 싸웠던 민초들의 혈관, 백의종군이란 굴욕을 마다하지 않고 끝내 민족의 성웅으로 추앙받으신 이순신 제독의 혈관, 곧 과부와 아비 없는 자식이 될 딸과 두 아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은 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하얼빈 행에 오르셨던 도마 안중근 의사님의 혈관을 타고 흘러 폐허에서 기적을 이뤄낸 아버님 세대로 이어져 2002년 거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우리의 혈관에서 폭발된 국가를 향한 '충', 부모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하여 머리털에 칼을 대지 않고 상투를 틀며 묘 옆에 여막을 지어 3년간

부모님을 섬겼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효심을 바탕으로 요즘식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효', 스승님과 함께 걸을 때 한 발 뒤에서 따르되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되며 손윗사람이 수저를 들 때까지 수저를 들지 않고 잔을 가리고 몸을 돌려 마시는 '예'는 오늘날까지 우리를 우리처럼 느끼게 해주는 한국인다움의 근저요 자부심입니다.

이 유산들을 시대의 실정에 맞춰 융통성 있게 지키고 계승해 간다면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도 반만년을 이어온 위대한 조국을 유구토록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건 진일보한 방향일지라도 쉽게 변화시키기 힘든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제약, 갈등, 아픔 등은 역사적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주와 국가, 대국에 대한 신하들의 무조건적 충은 때론 결과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로 이어졌고 효와 예의 차원에서 상복으로 어떤 것을 입을지가 국론분열의 중심이 되기도 했으며 선조들께서 상투를 자르는 과정은 실로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괌 사고도 이처럼 미처 시대와 상황에 발맞춰 변하지 못한 문화가 큰 부분 기인한 아픔이었습니다.

악천후와 괌 공항 장비 고장만 없었어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장비 수리기간 동안 1,500여 편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악천후가 있던 그날도 사고는 우리나라 비행기 편에서만 일어났습니다.

문화 간 차이를 분석하는 홉스테드 지수 중 권력간격지수인 PDI는 그 나라 문화가 위계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나타내는데 조종사들의 PDI 측정 결과 한국은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실제 괌 사고 블랙박스에 의하면 부기장과 기관사는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장의 권위 앞에 행여 심기라도 건드릴까 mitigated speech 즉, 돌려 말하는 완곡어법으로 시종일관했고 기관사는 "기장님, 육안에 의존해 착륙을 시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상레이더를 보십시오!"란 말을 감히 하지 못해 '오늘 기상레이더 덕 많이 본다.'란 혼잣말로 의견을 표출했다 합니다.

충돌 12초 전 대지접근 경보장치가 여러 번 울렸는데도 충돌 7초 전이 돼서야 부기장은 가까스로 용기 내어 착륙포기를 권유하고 5초 전에 착륙포기를 외칩니다.

4초 전 기관사도 "올라갑시다." 하며 기장이 복행신호인 'Go Around'를 외칠

것을 종용했고 2.3초 전 기장은 Go Around를 외치며 조종간을 당겼지만 무게와 관성을 이기지 못한 801편은 공항 남서쪽 4.8㎞에 위치한 언덕을 들이받고 맙니다.

본 의원 또한 예의를 중시하고 부당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손윗사람 앞이면 꾹 참고 웃어넘기는 것을 일쑤로 여기는 전형적인 한국인이지만 위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고 앞으로 계속 시정해 가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지 않은 상황에선 구성원의 정서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예의 바르다고 인정받는 모습이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만큼은 서구인들처럼 기장이 오판하고 있음을 단 몇 초가 아닌 수분 전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율적 판단하에 부기장이 조종간을 뺏어 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상투를 자르고 다니는 우리처럼 오늘에 맞게 발을 맞춘 모습일 것입니다.

외자 유출은 우리 문화권에서 누구나 꺼려하는 일이며 더욱이 전쟁 폐허와 가난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기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지난 4월 소방본부 기행위 보고 때 국산헬기는 산악구조를 포함해 소방헬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여덟 가지 기술적 미충족 사유가 있고 군용으로 개발된 사이즈 자체도 사용하기 너무 크며 그 때문에 가격도 가장 비싸고 항공법 적용 형식승인, 감항증명도 못 받은 상태란 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문화적 기피사항인 외자 유출로 초점이 옮겨간 문제라 기관사처럼 혼잣말로 넘기고 싶었지만 이 사안은 소방대원과 도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이 혹 때를 놓친 충돌 몇 초 전 외침이 될까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산헬기 30년 운영 시 헬기 값 포함 700억 원 외자 유출이 발생할거라 들었는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로는 300억 원이 발생 아닌가 싶고, 헬기 값을 빼면 30년간 주로 부품 교체에서 발생할 약 90억 원의 유출은 100% 국산화가 안 된 동력전달장치 450여 개 부품 중 6개월 전 기준 국내 양산이 가능한 80여 개 부품 외에 나머지 80%에 달하는 370여 개 부품과 주요 부품 상당수가 외제라 들은 국산헬기 유지비에서도 발생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각설하더라도 지금 오직 우리 정서와 문화에 기인한 주장만이 초점을 유도하고 시야를 흐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소방본부는 안전, 효율성, 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국산헬기를 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꼭 국산을 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국산 강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 관계자와 도민, 국민들을 이해시키며 Go Around를 외쳐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한 가장 중요한 초점은 구매방식, 정서가 아닌 안전과 효율성에 맞춰져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우리는 실제 운용할 분들의 고려가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다 믿으며 소방본부가 문화에 매몰되어 눈치 볼 필요 없이 조종간을 잡고 적법한 방법과 양심적 판단에 기초한 결정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결정에 박수쳐 주며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우리 안전을 더욱 엄중히 지켜달라고 요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5. 6.19)

5분 자유발언 :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5선거구)

발언요지 : 소방헬기 구매관련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해 지난 5월 27일 자로 조달청에서 강원도 소방안전본부로 '헬기구매 관련 의견서 송부 및 구매방식 검토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강원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하여 강원소방에서 외자조달을 끝내 고집한다면 조달청에서는 더 이상 조달 진행을 할 수 없으니 강원도에서 알아서 하든가 아니면 지침대로 내자조달로 전환할 것을 선택하라는 최후통첩 내용이었습니다.

강원소방에서 원칙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대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면 조달청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리하고 편협한 외자조달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조달청에서 그랬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6월 1일 자로 소방본부에 전문위원실 명의의 공문으로 공문사본을 요청하였으나 6월 3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제출 거부 의사를 정식 공문으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6월 11일 강원소방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헬기구매 진행과정보고 시 조달청 공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행정 맞습니까?

강원도의회와 도의원님들을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겁니까?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도 엄중히 경위를 파악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드립니다.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2,300여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휘부에서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지만 다수의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저 하나 눈 감고 입 닫아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잘못된 문제제기와 발언을 한다면 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하고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소방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달청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항공우주산업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국민안전처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도 객관적인 여타 기종의 헬기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하면 최소한 생산현장 시찰도 다녀오고 나서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29일 국민안전처에서도 강원소방에 국가시책인 조달청의 지침대로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답니다.

따르지 않을 시-우리 강원도에서 전액 국비 반영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볼 때-저는 정말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의 소방헬기 구매에 대한 본회의 발언과 신문 기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절대로 도가 지나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230억 원이 쓰이는 문제라는 사실을 제발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발 개념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편협한 편리의 안주와 관행,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제까지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의 방만한 소방헬기 행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강원소방이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5. 6.19)

5분 자유발언 : 홍성욱 의원 (새누리당, 태백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사회적약자인 시급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관련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홍성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약자인 시급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생활정치실천연구회 모임의 김동일 회장과 회원은 6월 18일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알바 체험을 하고 1시간에 5,580원의 시급을 받으면서 과연 매일매일 시급을 받아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시급이 적정한지와 시급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 시급과 최저 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 29일 이전까지 내년도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인상안을 놓고 격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저 시급 인상과 관련한 문제점과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최저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7.1% 오른 5,580원이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 측의 주장은 최저 시급 1만 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최저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됨으로써 내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최근의 엔저 현상, 메르스 등의 예상치 못한 요인들로 인해 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최저 시급을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것이 과연 노사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급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올리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영주체들이 경제적 부담 가중을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여러 차례 언급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지상주의가 아닌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찰과 배려가 최저임금 논의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 시급 인상의 목적은 경제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권 보장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도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달에 약 117만 원의 최저 임금을 받으며, 기초생활 영위가 어려운 근로자들이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하루 벌어서 가족 전체의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월 117만 원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임금노동자 중 법정 최저 임금 미달자가 약 230만 명으로 임금노동자의 12%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급 인상은 저소득 계층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 영역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중소상인들이 최저 임금 인상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게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최저 시급과 최저 월급을 결정하는 것이 도의 권한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도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시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세

심하게 살피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은 물론 도민과 깊은 논의를 통해서 최저 임금이 노측과 사측에서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주민생활의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5. 6.19)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도의회 현안과 관련하여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1년 의정성과를 평가하는 일부 보도내용과 이에 대한 의회 지휘부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 2분을 준비했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우리 강원도의회가 전국 최고로 일은 적게 하면서 수당은 많이 받아 간다고 나왔습니다.

저 자료는 지난 6월 3일 7시에 KBS에서 방영되는 강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냉이가 먹는 강냉이가 아니고 강원도에 대해 강력하고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 프로그램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타 시도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와 주민 수, 그리고 자치단체 유형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많으면 부담이 줄어들고 우리 도처럼 인구가 적으면 늘어나는 단순한 논리로 의정비 산출을 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수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인구수로 저렇게 산출한다면 당연히 전국에서 강원도 의정비가 가장 많이 지출

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도표 1-2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조사해 본 결과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가 최하위권인 14위, 5,100만 원을 지금 의정비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조례 건수입니다.
아까 방송에 나왔던 조례 건수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에서 발의한 조례안의 숫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 최하위라는 것을 일단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38%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원도의회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발의 건수만을 가지고 조례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조례 제정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평가하는 우를 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지휘부에서는 도의회에 대한 외부 평가를 심층 분석하고 대응할 부분은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회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역 언론사에게도 우리 강원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면과 전파를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들의 복리를 대변하는 강원도 도의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방송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방송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 7. 7)

5분 자유발언 : 오세봉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 인사행정과 관련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릉 출신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사상 유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메르스 여파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직을 사분오열(四分五裂)시키는 강원도정의 인사행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사행정이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모든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즉 유능한 인재를 조직에서 육성하고 적정한 배치와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능력발전을 도모하며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개인과 조직 간의 조화를 실현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극대화시키는 활동입니다.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현재 강원도정의 인사행정은 체계가 없이 마구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형국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난맥상'입니다.

최문순 도정 2기가 이러하므로 지난 1기보다 별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고, 공개된 원탁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지사님의 가신 그룹을 통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지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도립대 총장은 전임 총장이 사퇴한 이후 적임자를 물색했지만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결론을 내렸으며 현재 6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남아 있다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었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는 소문도 있고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의 반발을 야기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강원도 인사행정의 정도(正道)입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꼼수입니까?

금년 1월에는 유능함을 인정받던 2급 이사관이 소속기관인 도청에 자리가 없어 부이사관으로 강임되어 부시장으로 내려간 일도 있습니다.

또한 도의 정책 발굴과 연구과제 수행 등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이사관을 도 산하기관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파견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는 파견기간 동안 어떠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했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7월 1일 자 국장급 인사에서 또 다른 이사관을 바로 그 산하기관으로 파견을 보낸 것입니다.

퇴직까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이사관 2명을 같은 조직으로 보내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도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강원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리더로서 솔선수범하고 노력해야 할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가 이럴진대 하위직 인사의 행태가 어떨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강원도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능력을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둔다는 최문순 도정의 모습입니까?

도민들을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경제 활성화는 도대체 언제 이룰 것이며 강원도의 경쟁력 강화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또한 조직의 안정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지사님의 신념과 목표의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인사 실패는 곧 강원도정의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게 될 것이며 소통이 없는 불신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 갈 것입니다.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재난안전실 신설 등으로 대규모의 정기인사가 단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으로 내부 조직의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인사에 왕실장이 개입한다는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믿음과 신뢰 없는 모래성을 쌓아온 잘못된 인사행정을 각성하고 성찰하여 강원도정의 올바른 내일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 7. 7)

5분 자유발언 : 신도현 의원 (새누리당, 홍천군 제2선거구)

발언요지 : 농지불법 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동시 시행촉구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촌 곳곳에 산재한 농지 불법전용 실태와 관련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과 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농지의 개발을 막고자 1973년 1월 1일부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농지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지로 인해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여 불법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우리 농촌의 대표적 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림수산부는 1988년 11월 4일 농지 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에 따라 1988년 10월 31일 이전 농지 불법전용에 대하여는 추인 또는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그 이후의 농지 불법전용에 대하여는 고발 후 벌금 등 형사 처분을 했고 형사 처분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강원도 내 960건으로 이 중 고발이 209건, 복구 완료가 738건, 조치 중이 13건이나 이는 고발 등으로 적발된 것이 대부분으로 실제 농지 불법전용 건수는 이보다 몇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88년 11월, 양성화 지침 시행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을 촉구합니다.

특별법을 시행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로 국가와 강원도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정리로 주민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시행하여 무허가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13년 7월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2014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었으나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당시 농지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 대지가 아닌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농지의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도 양성화 조치가 함께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농지의 불법전용은 양성화 제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당초 특별조치법의 도입 취지에 비춰보면 이는 결코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살기 좋은 사회는 균형 잡힌 법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허가 위법 건축물과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가 동시에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 11월 농지 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 지침 이후 30년 가까이 이에 대한 양성화 계획이 없어 고통을 받는 건 오직 힘없는 농민이며, 이를 지도·단속 관리하는 집행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제라도 강원도는 무허가 위법 건축물과 농지의 불법전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양성화 특별법 시행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전국 시도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전향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 7. 7)

5분 자유발언 : 함종국 의원 (새누리당, 횡성군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드리는 제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새누리당 소속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실시되는 다면평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국·과장급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지사님, 잘된 인사라고 보십니까?

다면평가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항간에는 다면평가가 안면평가, 여론재판으로 변질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평가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그동안의 친분, 또는 같은 부서 소속이라는 이유로 대충 찍어서 순위를 정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결국은 업무추진 능력보다는 인기 있는 직원과 소위 노른자위에 있는 부서에 치중하게 되는 이런 평가가 과연 합당하고 바람직한 것입니까?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단순히 오래된 관행으로만 여겨 간과하고 있는 소수 직렬에 대한 인사 불균형 문제입니다.

직장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승진이라 할 것인데 20년~30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해도 대부분의 경우 두세 직급 승진에 그치고 마는 소수 직렬 직원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신임 건설교통국장 인사를 위해 토목직 하위 직원들에게 어느 법에도 없는 적임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거기에다 승진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단 2명만을 콕 집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였는데 이러한 인사가 잘된 인사인지, 아니면 지사님이 인사권을 포기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인사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발탁인사의 경우 조직원들이 공감을 못 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그 폐해에 대해 누누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도정 질문의 자리가 아니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망망대해를 운항하는 강원호의 선장으로서 기관장을 비롯해 갑판장과 선원들이 신명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인사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서울 본부와 소규모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행위에서 지난 5월 13일부터 2일간 강원도 현안 해결과 서울 본부 근무자들의 격려를 위해 세종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종사무소 직원들은 기재부 담당과장에게 현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기대 이상으로 적극 협조해 주었고 기재부 방문 후에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세종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도와 시·군 직원 모두는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서 을(乙)의 입장이 되어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대부분의 외청 근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그곳에서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그야말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의 어떤 인센티브 하나 없이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직원의 격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종사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애로사항을 소상히 파악해 서로 앞다퉈 가고자 하는 근무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방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열흘 있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세월호 사고수습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1주기가 됩니다.

아직도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목숨은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하여 많은 얘기가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소방안전본부를 상대로 긴급현안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강원도 소방헬기로 구조된 인원은 자그마치 1,740명입니다.

하루 평균 7.5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 한 명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헬기에 타실 수 있겠습니까?

소방헬기 구입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외국산이든 국산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에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방헬기 구입에 대한 정쟁은 의미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은 어느 것 하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 7. 7)

5분 자유발언 : 조영기 의원 (새누리당, 양구군 선거구)

발언요지 : 행복한 강원도, 작은 학교가 답이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새누리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의 중국 연수에서 불의의 사고로 운명하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통폐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도는 전체 학교의 40%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양구에는 10개의 초등학교와 6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60명 이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면 초등학교는 4개, 중학교는 2개의 학교만 남게 됩니다.

강원도 내 초·중·고교 673개 교 가운데 270개 교가 인근 학교와 합쳐지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394개 교 가운데 195개 교, 중학교는 162개 교 가운데 60개 교, 고등학교는 117개 교 중 15개 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고성군은 16개 교 가운데 3개 학교만 남고, 횡성군은 21개 교 가운데 4개 교, 화천군은 15개 교 가운데 3개 학교만 존재하게 되는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면 도내 26개의 면 지역에는 아예 학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교육부의 교부금 배분에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수를 유지하며 교부금을 지원받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던 강원교육은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은 교원과 교육직 공무원 감축 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예비 교사들의 교단 진출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는 2016년 강원지역 초등교사 정원 249명, 중등교사 정원 50명을 감축한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답니다.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 수도 감축하고 작은 학교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반드시 공존해야 할 농산어촌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입니다.

인구가 적고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강원도에는 큰 타격이고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한 취학 아동 수로 인해 도내 상당수의 초등학교는 이미 통폐합이 이루어져 왔는데 폐교된 지역은 단순히 학교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화 현상으로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령의 어른들만 사는 집에 어린아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한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비용과 관련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농산어촌 지역 작은 학교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 많으며 최근 들어 다문화 가정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바쁜 부모들은 시간적 문제와 현실적 여건으로 학업, 생활지도, 특기적성 교육 등 전반에 대해 학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학교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슬로건처럼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는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행복하려면 우리 마을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없는 행복한 강원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면 소재지와도 4㎞나 떨어진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학년도 2개 학급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의 학생 수가 감소되었나요?

지난 '70년대의 산림녹화, 소양댐 건설 등 국가 정책을 위해 국토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화전민과 댐 수몰 주민들의 이주 정책으로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고 이어지는 정부의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인해 광산이 폐광되면서 광산촌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폭발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작금의 정부 정책은 왜 이런가요?

국토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희생된 강원도민을 위로하고 보상해 주기는커녕 인구 등가성만 강조하면서 강원도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발상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대한민국엔 수도권 시민만 국민인가요?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 철회안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습니다만 이제는 강원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항의와 대응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 7. 7)

5분 자유발언 : 이문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원주 금융회계고등학교에 신입생(2016년)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3월 특성화고등학교로 설립된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가 2016년 신입생을 받지 못할 위급한 처지에 놓인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는 구 부론고등학교가 원주지역 평준화 공동학군에서 제외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체제를 개편하여 현재 1, 2학년 각 1학급씩 총 51명의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의 금융회계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능한 전문교과 교사의 확보, 기숙사 증축, 학급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강원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와 교육 목표에 공감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관심 또한 뜨거워 작년에 이어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경쟁률이 2 대 1을 넘어섰으며, 신입생들의 성적은 중학교 내신 40% 이내로, 전국의 어느 특성화고등학교보다도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여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다양한 동아리 활동, 차별화된 외국어 교육, 기숙사 인성교육프로그램, 금융회계 분야 실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그 결실을 조금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학생들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금융회계 분야 자격증을 다수 취득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실시된 강원도 상업경진대회에서는 비즈니스영어 분야 금상 외 총 18명이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학교에 관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는 원주 시내에서 시내버스로 한 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교통이 불편하여 통학이 불가능한 부론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때문에 지역 학생 몇 명을 제외한 전교생이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의 규모는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신입생 25명을 위한 기숙사를 증축해야 할 실정입니다.

만약 기숙사 증축이 어려울 경우 타 시·군에서 입학한 학생들은 연고지가 없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내보낼 수도 없고 신입생을 받기도 어려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체제 개편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미 투자된 수십억 원의 예산과 금융회계 분야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고자 의지와 열정에 가득 찬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교육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에서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기숙사 증축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16억 원의 예산만 확보된다면 곧바로 공사를 진행시켜 금년 말 증축 공사가 완공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문제, 대졸 취업난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고졸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서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채용현황을 보면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잠시 미루고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 작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기숙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디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 예산 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21)

5분 자유발언 : 김규태 의원 (새누리당, 동해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동해· 묵호항 활성화에 관한 제언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활기찬 강원도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이 있는 도시, 해오름의 고장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강원도의 북방 해양정책의 상징인 동해·묵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자로 동해항과 묵호항을 동해·묵호항으로 통합하여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동해·묵호항이 국가관리항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무관심, 무정책으로 일관해 왔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해·묵호항은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심과 연접되어 있어 수십 년 간 고질적인 공해민원으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등 혐오시설의 상징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하역시설의 취약으로 전국 14개 국가관리항만 중 체선율이 가장 높은 항만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배후 물류시설이 없어 항만기능마저 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묵호항을 '북방교역 중심항만, 북극항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강원도의 정책 목표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강원도가 무관심한 동해·묵호항에 대하여 항만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북방물류시대를 위한 강원도 미래경제의 심장이자 가장 큰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동북 3성의 동해 출구 전략과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개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은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면서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과연 동해·묵호항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동해·묵호항의 지정학적 우위를 잘 살려 북방교역 중심항만으로 적극 개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중심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묵호항은 성장의 잠재력이 큰 중국 동북 3성 및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권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수도권과 최단거리에 있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극항로 쇄빙선 기항지 유치의 최적지라는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낸다면 동북아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앞으로 3단계 항만시설 확충 및 배후 항만 물류 부지가 적기에 조성되면 새로운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관리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해·묵호항이 일부 주민의 의견으로 개발논의가 중단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강원도의 미래인 북방교역 중심항만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항 3단계 확장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늦었지만 지금이 개발의 골든타임이며 나아가 묵호항 재개발과도 직접 연계가 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선결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해항의 항만 물류 부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항만 물류단지 조성을 지금부터라도 강원도가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설계된 광물 전용부두 중 일부를 잡화부두로 전환해야 합니다.

광물도 중요하지만 일반화물 유인도 필요하고 컨테이너 시설이 물동량 유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벌크화물의 친환경 컨테이너시설 건설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동해항 인근 주민의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연계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강릉~동해 간 동해북부선의 복선화와 국도 38호선 연장, 국도 42호선 도로확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강원도 집행부는 동해·묵호항 활성화에 대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부재와 무관심, 그리고 안이한 대처로 방치해 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여 북방루트 허브항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동해·묵호항은 동해시만의 항만이 아닙니다.

동해·묵호항은 강원도 소재 항만입니다. 200만 강원도민의 해상관문이며 나아가서 대한민국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입니다.

강원도는 동해·묵호항이 활성화되어야만 강원도의 북방 해양정책 수행도 가능하고 경제도 도약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21)

5분 자유발언 : 심영섭 의원 (무소속, 강릉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도내 메르스 발생과 관련하여

심영섭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극심한 가뭄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강릉의료원의 간호과장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강릉시 전체가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강릉의료원은 강원도 국가지정 감염병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내에 발생하는 메르스 확진자를 일반병동에 수용하여야 했으며 더 심각한 사실은 병원 밖으로 메르스균이 새어나온다는 루머까지 나돌아 강릉의료원의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급기야는 외출까지도 삼가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시는 해마다 연인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특히 올해는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엄청난 규모의 행사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확산되는 메르스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었고 전통시장이나 상가들에 심지어 길거리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강원도의 메르스 집중 치료기관이 강릉에 소재하고 있어서 강릉시는 강릉의료원을 지원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검사업무를 채취하여 하루에 두 번씩 충북 오성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물을 수송하였는가 하면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게 되어 늦은 밤에도 검사물을 운송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강릉의료원의 간호과장이 확진 판명되면서 강릉의료원을 방문했던 강릉시의 의원들과 도내 메르스 사태를 총괄 지휘하던 이지연 국장님, 간부공무원

등 대거 자가격리가 되면서 강릉시는 모든 행사를 무기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강릉시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강릉시 메르스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풀가동하면서 강릉시보건소 직원들은 매일 격리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자가 발생하면 춘천으로 하루에 두 차례씩 검사물을 운송하고 전국에서 수거한 레벨D 보호복과 장갑, N95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주느라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메르스 비상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휴일도 반납하고 메르스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감염병 예방정책을 위하여 집행부에 세 가지 현안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릉의료원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진료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액에 대한 보전금과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강릉에서 춘천으로 검사물을 수송하는 데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강릉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동해와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으로부터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역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강원도 산하 각 시·군 보건소의 기능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하여 더한층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마지막 보루인 도 산하 5개 도립의료원의 기능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얻은 소중한 교훈으로 도민 모두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각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의료공조체계를 확실히 갖추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메르스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사투를 벌인 의사와 간호사,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이들을 격려하며 함께 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21)

5분 자유발언 : 구자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지방자치 20년 회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메르스 퇴치와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부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촉발된 위기의 강원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빌려 성년이 된 지방자치제도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 주소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비록 자발적 촉진은 아니었지만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동란 중에도 시·읍·면 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추진하려는 의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군사정권의 출범으로 인한 지방자치 중단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30년의 암울한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강한 국민적 요구, 시대 변화에 따른 정치권의 장악으로 1991년에 지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95년에는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통합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 바뀐 지난 7월, 어렵게 이뤄낸 지방자치 재부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속 빈 강정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져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늘 빨간불입니다.

이로 인해 도내 기초단체장과 공직자들의 주요업무는 앵벌이 그 자체입니다.

최문순 지사님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국회로 늘 출장 중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한국 정치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쟁탈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눈높이와 행동 역시 70년대~8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채 중앙의 성장만이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전근대적 발상의 정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재정분담비율의 불균형, 수도권 규제완화,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누리과정예산 전가, 대학 구조조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이뤄낸 지방자치제도, 이제는 바로 서야 합니다.

지방의 가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반분권적 추진정책은 중단돼야 합니다.

상생과 발전의 원리인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경제, 행정시스템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 독점식 국가시스템은 중앙 중심의 단극체제로 고착화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간 불평등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여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 초래와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성년의 시기를 맞이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신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재원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진국 수준의 국가체제로 발돋움하고 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인 분권적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도민 여러분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집중시켜 중앙에 편향된 사고와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시키는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근대국가들의 민주주의 정착 기본이념의 기반이 된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과 몽테스키외의 명언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권력은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지역의 다양한 가치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권형 지방자치제도 정착은 민주주의 국가의 첫걸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21)

5분 자유발언 : 강청룡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지사·강원도교육감·강원도의회의장·강원도의회운영위원장에게 드리는 긴급 제안(강원도금고 농협과 신한은행은 예금(적금)·기금 금리(이자)를 인상하고 채무금리(이자)는 인하하라!)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의 강청룡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원도민의 혈세인 금고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은 강원도민의 혈세인 금고지기로서 곳간의 열쇠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지사님, 그런데 지금 곳간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줄줄이 새고 있는 곳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의원 여러분과 우리 지사님, 그리고 실·국장님 책상에 보충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농협과 신한은행에 금고를 맡기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강원도교육청은 2015년 6월 4일을 기준으로 농협과 신한은행의 현황을 담당부서로부터 받아 제가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의 금고현황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기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 기금 본연의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할 것은 계좌 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숫자입니다.
각 기금마다 계좌 수가 상이하다 보니, 조속히 통폐합하여 높은 금리로 변경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의 금고현황입니다.
농협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여 기금의 이율은 인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 채무입니다.
2015년 5월 27일 현재 강원도 채무는 1,900여억 원 정도입니다.
금리가 3.77%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금리입니다.
지사님, 이런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둑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용래 의원님과 신영재 의원님과 함께 농협에 채무금리를 강력히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근자에 예산과 재정지원계 담당자께서 많은 노력 끝에 농협으로부터 1.08% 인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사님 이제 실무선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지사님이 나서셔야 합니다.
금고지기가 나서서 농협과 신한은행에게 채무금리는 1.08%가 아닌 1.5%로 인하하고 예금과 기금 금리는 현행에서 0.3%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금리가 3.16%, 3.21%, 3.31% 이것도 말도 되지 않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이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금리 변동사항입니다.
2001년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의 금리 변동사항인데 2008년에는 4%~5%대의 금리가 2015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1.5%까지 인하된 사항입니다.
과연 강원도 금고가 이 변동금리의 이율을 제대로 적용받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옆에 보면 17개 시도 금고명입니다.
제가 지금 전국 17개 시도의 금고 이율 및 전국의 200여 개가 넘는 시・군・구의 금리현황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전문가와 만나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약정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이 천차만별입니다.
가산금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도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기금 중에 예산과 공기업계에서는 알펜시아의 통합기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과 재정지원계에서는 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정과 세입관리계에서는 세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구일원화를 통한 금고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실・국장님들, 통합기금은 예산과에서 관리한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그 기금의 사업은 실・국장님들의 사업입니다.
금리변동을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과에서 갖고 계신 통합기금이나 아니면 보통 통장의 이율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금고현황과 관련하여 예산과나 세정과,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에 의하면 지방사무와 관계된 자는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인채택이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개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후라도 공무원들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의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분들을 불러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한 의원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채무금리는 1.5% 인하해야 됩니다.

기금은 0.3% 인상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은 이 금리로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2015년 6월 30일 현재 채무가 무려 9,760억입니다.

하루 이자만 7,200만 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차입금은 자금 유동성이나 투자유치의 매각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금리 재조정을 통한 우리들의 주머니를 단단히 틀어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사님이 나서셔서 금고지기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21)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 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드리는 제언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행준비 중에 있는 강원화폐 발행의 전면적 재검토와 사업 중단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GRDP와 GRNI의 차이인 한 해 약 3조~4조 원의 역외유출을 막아보자는 의도에 존중과 동감을 표하지만 이를 강원화폐 발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시도에는 미심(未審)과 거부감이 듭니다.

지역화폐는 근대화 전처럼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지역 내 어디에서나 쓸 수 있으며 현재 통용되는 중앙화폐와의 환전이 쉽지 않아 은행이나 부동산에 묶이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돌 때 혹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구조는 글로벌이란 단어가 일상화되었을 정도로 복잡하고 강원화폐를 도내 어디에서나 쓸 수 있을 만큼 시장이 단순하지 않으며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환전이 쉽지 않고 금융거래 시 불편한 화폐를 굳이 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전라북도 봇짐장수가 강원도에 들러 강릉서 귤을 팔고 받은 외지사용이 불가능한 강원엽전으로 서울 가는 길 횡성서 삼계탕을 먹고 원주서 짚신을 사갔다면 돈의 역외유출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 전북 귤 도매상이 강릉서 귤을 납품하고 받은 강원화폐로 횡성서 삼계탕을 먹고 원주서 운동화를 사간다면 상당비용이 닭 유통 1위 하림이 있는 전북과 각 재료 원산지로 가고 OEM 신발 생산국과 상표 로열티 국으로 흐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단순히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민들 및 외지인들의 소비를 강제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만든다고 해서 역외유출이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세상에선 유럽서 20유로로 질레트 면도기를 사나 춘천서 강원화폐 2만 5,000원으로 동일 면도기를 사나 유사 양의 돈이 본사와 생산지, 무역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단지 지역에 남는 돈은 소매상 마진 5,000원~6,000원 정도인데 면도기 장수가 강원화폐로 도내 서점에서 5,000원~6,000원짜리 책 한 권을 사면 지역에 남는 돈은 1,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점 주인이 한 번 더 껌을 사면 모든 결제가 지역화폐와 도내 가게에서 이루어져도 지역에 남는 돈은 200원이 되고 외지품 소비가 더해질수록 40원, 8원 이런 식으로 희석됩니다.

이 과정의 모든 단계마다 지역화폐 대신 중앙통화인 원화로 결제해도 지역에 남는 돈이 똑같습니다.

역외유출 주원인이 제품소비지가 아닌 원료지, 생산지, 본사처럼 제품 출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강원감영에서 강원엽전을 유통시킨다고 도내 곳곳에 방을 붙였으면 단순한 산업구조에서 장사하던 몇 안 되는 모든 가게가 쉽게 가맹했을 것이고 도민들도 기꺼이 강원엽전을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통화로 금융기관에 판매금을 안전하게 저금하고 월말 전국 각지로 후불결제를 해 주는 오늘날의 수십만 도내 사업체들이 전체 가맹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더욱이 강원화폐를 위한 카드결제 시스템 등을 자비로 설치하고 금융관리도 따로 해야 한다면 거의 가맹을 원치 않을 것이고 도가 이를 대신 해 주려면 유통시스템 구축에만 예상되는 120억 원 외에 수백, 수천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천문학적 예산집행 후 설령 도내 모든 사업체의 절반이 가맹한다고 쳐도 나머지 비가맹한 절반으로 인해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쓰기 불편한 강원화폐를 멀리하고 늘 쓰기 편한 원화를 들고 다닐 것입니다.

또 지역화폐의 장점을 살리려면 중앙통화와의 환전이 불편해 돈이 돌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는 강원화폐를 사용처, 구매물품 제한에 환전조차 어려운 상품권처럼 느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점차 선물용으로만 쓰는 상품권만큼만 유통될 것이고 화폐보다 강원상품권 정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18개 시·군 전면실시 결정 후 지역화폐 대량유통인데 이 경우 강원도는 끊임없이 긴장하며 강원화폐 유통량만큼 도내 상품 및 서비스 일

정량의 밸런스를 맞춰가야 합니다.

이를 실패하면 강원화폐 과잉 혹은 화폐 가뭄이 생겨 인플레와 디플레가 유발되고 끝내 중앙통화와의 환율 즉, 가치유지 실패로 강원경제 전반에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화질서 혼란으로 발생될 무서운 시나리오는 시범지역 운영 후 전면실시로 결정될 리 만무하다 믿고 더 이상 언급치 않겠습니다.

역외유출 완화정책을 펴려면 되도록 지역생산 제품을 소비하도록 도민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지역기업들을 창출해 외지품을 대체할 지역제품을 늘려야 합니다.

문막 허니버터칩만 같다면 상당 부분 외지자금 유입도 이뤄집니다.

예산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공격적 지원으로 자동차 공장이 힘들면 껌 공장이라도, 우리가 안 만드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그 제품을 써 주고, 도내 시장성 있는 곳마다 대형·소형 오프라인 강원마트를 열어 강원마트상품권에 일정액을 부담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끝으로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 한 해 유통량이 3억 원 가량인데 강원화폐 1년 유지비로 예상되는 금액만 해도 10억 원 이상이라는 점과 한 권위 있는 연구원이 쓴 글 중 '세계 곳곳에서 지역화폐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화폐와 경제 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만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을 깊이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올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9. 9)

5분 자유발언 : 구자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공공의료정책 제언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며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이은 사고 소식에 따른 정부의 대처능력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이 비극이 멈춰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내에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내의 모든 지역과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발생된 손실액이 8월 말 기준 20조 92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이 사건 또한 중앙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규모와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병원은 2차 확산의 주범이었습니다.
정부와 대형 영리병원들이 만든 작품에 국민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중앙정부의 무능을 온 몸으로 수습한 곳은 과연 어디였습니까?
바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이었습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수 5.7%, 확보된 병상 수 9.5%, 국가지정 격리병원 17 곳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를 잠재웠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공병상 수 비중을 OECD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국은 100%, 캐나다는 99.1%, 호주는 69.2%, 독일은 40.4%입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은 26.3%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질병과 관련된 위기대응에 있어서 보편적 사전주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공공병원 수의 확충인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5개 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강릉의료원뿐입니다.

작은 규모와 충분치 못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자 강릉의료원은 병원 전체를 폐쇄하는 격리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원주의료원은 불완전한 음압병상 때문에 중환자실을 모두 폐쇄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52병동 전체를 격리병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도정질문을 통해 의료원의 공공성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원은 절대 경제적인 잣대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촉구합니다.

도내에 소재한 5개 의료원의 시설 점검과 함께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질 무렵 본 의원은 지역에 소재한 원주의료원을 격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인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시설과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34년이 경과된 구 병동 건물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기능 상실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 곳곳에는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기가 안 돼 악취까지 발생합니다.
입원 환자들은 구 병동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연구 용역 자료를 살펴보면 원주의료원에 대해 시민들은 접근성에서는 호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수준과 시설 환경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민간의료기관의 시설로는 예측 불가능한 또 다른 감염병 재앙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와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시대의 사명입니다.
이제 답은 강원도가 찾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9. 9)

5분 자유발언 : 최성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6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감영과 강원감영문화축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 8월 12일에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제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만들어 주신 김시성 의장님, 김동일·권석주 부의장님,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김규태 경제건설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을 마음을 다해 섬기며 의원으로서 충실히 일하고 모두에게 가까이 가며 작은 일에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강한 의회 확립에도 열정을 다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원도민의 자랑이며 긍지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내건 목표는 문화·경제·환경·평화올림픽입니다.

완벽한 시설의 경기장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과 관광콘텐츠를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상생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선아리랑과 강릉단오제, 원주의 강원감영제 등의 강원도만의 특수성과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가진 지역문화를 올림픽과 연계시켜 승화·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본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원감영과 감영문화축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감영은 현재의 직급으로는 도지사의 직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상 절대적 권력을 가졌던 조선시대 관찰사가 주재하며 정무를 보던 곳으로 조선 초기인 태조 4년 처음 설치된 후 500년 동안 유지되었으며 현재 620년의 역사를 담고 본래의 터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며, 2002년에 사적 제439호로 지정되었고 감영지 내에 있는 포정루(布政樓)와 선화당(宣化堂)은 별도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원감영 건물은 임진왜란 당시 모두 불타 버렸던 것을 인조 12년에 다시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하였고 그 후 현종 6년 선화당과 삼문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1667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관청 건물로 사용해 오다가 1950년 6·25전쟁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 담장이 허물어졌으며 관풍각이 있던 큰 연못도 메워지고 원주시와 원성군의 통합 전까지 한때 원주군청 청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강원감영은 옛 건물들이 아직 남아 있고 건물터 또한 발굴 과정에서 드러난 기단이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 감영의 건축 형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옛 관청의 위용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강원감영은 위와 같이 역사와 사료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담보로 하여 강원감영이 자리하고 있는 원주에서 강원감영을 주제로 한 문화축제를 강원감영문화재위원회의 주관으로 40여 년 동안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감영문화축제의 대표 주제로는 서울덕수궁, 경복궁 등에서 실행하는 위병식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며 조선시대에 행하던 구호를 복창하며 진행하는 수문병 교대식과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강원감영으로 부임하면 육방의 아전, 군졸, 하인 등 500여 명의 인원을 대동하고 강원도 전역을 직접 순시하며 행정의 업무를 현장에서 보던 모습을 재연하기 위해 500여 년 동안 강원감영관찰사를 지낸 600여 명의 관찰사 후손 분들과 민·관·군, 그리고 해외 외국인들이 함께 동반·참여하여 진행하는 관찰사 순력행차, 그리고 양로연잔치, 동악제례, 민생규휼잔치, 왕비간택의식 등이 있으며 유소년·청소년들과 노년층이 함께하는 전통민속놀이와 전통체험 등 50여 가지의 체험적 행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찰사 순력행차는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신 분들의 후손인,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 모든 성씨의 사람들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50여 개국의 대사관, 참사관, 각국 군 장성인 군무원들과 해외 20여 개국 외국인들을 동악제례와 순력행차에 참여시키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190개국에 홍보하는 등 민·관·군이 함께하고 있는 강원감영문화축제는 이미 강원도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으로부터 향과 축문을 내려받아 지낸 동악제례의식과 전국에서 관찰사 후손 수백 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무형적 무궁한 가치를 갖고 있는 강원감영문화축제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 번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조선시대 근거자료에 의해 진행하고, 무한대의 문화 경제성을 갖고 있는 강원감영문화축제를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축제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며 강원도의 분명한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가진 강원감영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강원감영문화축제를 강원도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문화올림픽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며, 오늘 아침 문화올림픽 관련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 100억 원 전액이 빠졌다는 보도에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9. 9)

5분 자유발언 : 최성현 의원 (새누리당, 춘천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정 전반 관련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춘천 출신 최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사를 견제·감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강원도 주요 기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기형적인 인사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인사 원칙과 도정을 이끌어 주시길 강력히 권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사님, 헌법 제1조 제2항을 물론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강원도에 적용시키면 "강원도의 주권은 도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정 인사 행태를 보면 마치 "강원도의 주권은 도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가신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만큼 도지사와 가신들의 인사 권한 남용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도의회와 공무원들의 보편적인 바람과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해 취임하실 때 도민들 앞에서 선서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기시켜 드리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 구현을 위하여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기관장 인사를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셨습니까?

도립대 총장, 여성수련원장 선임 등과 같은 일련의 인사를 볼 때 법적 절차는

그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밀실에서 가신들과 협의하여 사전에 내정해 놓고 법적 절차는 형식만 갖춰 진행한 결과로서 이미 예견된 인사 참사, 즉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더 한심한 것은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강개공 사장은 누가 되고, 인재육성재단 원장은 누가 되고, 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에는 지사 측근이 된다는 등 사실에 입각한 소문이 나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공모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공모 절차 없이 도지사가 그냥 임명하시든지요.
아니면 발표 전까지 보안이라도 철저히 유지하시든지요.
여성수련원장의 경우 적격자가 없었다고 도민을 기만하였지만 실은 사전에 내정한 인사가 선택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인사 방식은 공모에 응모한 선량한 능력자들을 우롱하고 인사 행정을 사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사권은 도민을 대신해서 도지사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도지사가 전리품처럼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열정과 능력 있는 인재들이 기용될 수 있도록 인사권을 적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행사해 주시기를 도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고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지사님!
강원도정의 인사 참사는 산하기관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원도와 강원도청에 인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최문순 도정이 도청 인사에 있어서는 평균 이하의 아마추어 도정이었습니다.
요즘 떠도는 소문에 충신은 물에 가라앉아 있고 간신만 물에 떠있다, 또 소위 도지사의 측근, 옛날로 얘기하면 환관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은 공조직인 실·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고려 말기의 환관 정치를 무색하게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각 실·국 문서에 결재를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일찌감치 두 단계 승진에 이어 레고랜드 이사 겸직을 맡는 등 조만간 국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풍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월권과 남용을 일삼는 한 사람의 측근으로

인해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는 공직자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사님의 결단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공조직은 무력화되고 비선조직이 준동하여 행정의 사유화로 그 폐해가 도민과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부디 도지사 측근인 환관들의 천국이 아닌 도청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강원도청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망사·참사가 아닌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측근 환관들의 다면평가부터 먼저 시행하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도민과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바쁘셔도 환관 정치를 중단하시고 도를 넘어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가신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둘째, 표를 의식한 '예, 예 도지사'의 가식적인 스킨십을 중단하시고 '예, 아니오.'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셋째,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MOU 도지사'라는 오명을 벗고 강원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MOU 체결만을 선별하시어 경기 활성화에 집중해 주십시오.

넷째, 가신들과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인사를 중단하시고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보편타당한 인사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9. 9)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드리는 말씀과 질문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SRF는 고체란 뜻의 영단어 Solid, 쓰레기란 뜻의 Refuse, 연료란 뜻의 Fuel의 각 첫 알파벳 줄임말입니다.
어감 완화를 위해 쓰레기를 쏙 빼고 은폐된 번역인 고형 연료로 의역됐지만 영어권 시민들은 SRF를 단어 뜻 그대로인 고형 쓰레기 연료로 이해합니다.
가정과 산업현장 등에서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를 파쇄하고 불연성인 금속류, 유리, 돌 등을 골라낸 후 가연성 쓰레기만 잘게 분쇄해 함수율, 즉 수분을 낮추고 압력을 가해 소시지 모양으로 딱딱하게 뭉치는 게 SRF제조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어차피 재활용, 소각, 매립될 쓰레기의 일부까지 활용해 연료화해 보자는 게 SRF의 의의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지열 등과 함께 SRF도 당당히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긴 하지만 이보다 가연성 쓰레기 활용 대상을 더 넓히고 함수율 조정, 분쇄 및 압축이라는 단순 제조공정을 통해 열효율을 높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 쓰레기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유해물질만 100% 통제된다면 신재생에너지란 타이틀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최고 친환경에너지로 대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SRF는 단단하게 뭉친 쓰레기이기에 태울 때 당연히 유해물질이 배출됩니다.

대책은 제조기술과 대기오염 저감장치 같은 설비를 통해 공기 중 배출될 유해물질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SRF관련 저위발열량과 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해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주범인 염소와 함께 황,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이 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에 비해 저위발열량 기준은 낮고 각 유해물질 배출 허용량은 최대치거나 배 이상일 정도로 관대하게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SRF품질검사 결과 88개 검사대상 업체 중 6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71.6%나 됐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정기 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률이 25.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SRF 관련 기술 자체가 아직 부족하거니와 관이 나서서 아무리 강력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업자도 나름대로 아무리 기술적 노력을 기울여도 유해성을 완벽히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강원도와 'C'연구원의 MOU체결로 설립된 '참하나GW'는 연구원 기술과 사업을 사업화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열병합발전소 설치로 강원도를 환경에너지의 세계적 메카가 되도록 하자는 양해각서에 입각해 강원도는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제조사에 의하면 2,000억 원 정도의 중국 자금을 유치해 강원도 전역에 10여 기의 SRF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국에서 약 100만 t의 SRF연료가 생산되고 사용됐습니다.

그해 강원도는 3% 가량인 2만 6,000t을 생산했고 10% 가량인 10만 t을 사용했는데 도 전역에서 하루 70t을 생산하고 270t을 사용한 셈입니다.

올해부터 가동된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는 하루 240t을 태웁니다.

원주시는 화훼단지 추진 때문에 530t짜리를 준비하고 있고 '참하나GW'가 추진 중인 약 90t짜리 10여 기에서 최소치로 하루 900t만 태울 것이라 쳐도 더해 보면 향후 강원도는 하루 최소 1,940t, 1년간 71만 t을 태우게 됩니다.

2015년 1분기 자료를 산술해 예상해 본 결과 인구 3%인 강원도가 올해 전국 총생산량 116만 t의 61% 가량을 태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는 하루 약 126t의 SRF를 생산했는데 하루 1,940t을 태우려면 매일 1,800t 이상을 외지서 들여와야 합니다.

원료인 쓰레기를 돈을 받고 수거하는 SRF제조 관련 업자나 이를 태워 생산되는 전기, 온수, 증기 등을 파는 발전 관련 업자인 극히 일부 소수는 노다지를 캐게 되겠지만 강원도의 젖줄인 자연환경과 강원도민 전체의 건강은 유해성 검증이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외지생산 SRF를 사다가 태울 건지, 아님 생산시설도 함께 증설해 원료인 외지 쓰레기를 업자가 돈을 받고 강원도로 대량 수거해 오게 할 것인지, 저임금일 것으로 예상되는 손에 꼽을 극히 적은 수의 새 일자리 몇 개 빼고 업자 외에 강원도와 강원도민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올해 전국 총생산량 60% 이상의 쓰레기 연료를 태우게 되는데 유해물질 통제 실패 시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 수많은 질문이 맴돌지만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춘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홍글씨를 새기자는 것은 아니지만 수백 개 SRF 관련 업체 중 왜 하필 'C'연구원입니까?

'C'연구원 발명가 겸 원장인 'M' 씨는 2004년 물을 연료화하는 사업으로 600명 이상으로부터 3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가 날려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발명가 'M' 씨로 출원한 특허 8개 중 7개나 거절당해 독자기술력의 객관적 검증도 안 됐고 핵심기술로 내세우는 특허 등록을 거절당한 연료조성촉진제 웨이스텝 재료도 특허청 자료상 폐석탄, 폐석고, 초탄토, 양돈 및 축산 분뇨와 식자재 및 농수산 폐기물 외 제오라이트, 황토 등인데, 채무 불이행으로 기업신용등급 'D'에 매출실적도 없고 2013년에 폐업까지 한 'C'연구원과 왜 2014년에 협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설마 비율을 달리해 섞으면 실제와 다를 위험성이 내포된 샘플 시연만 믿고 하신 겁니까?

두 번째로 정황상 위촉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M' 씨를 왜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셨습니까?

기술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M' 씨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던 이들이 강원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래는 잠깐 미뤄두고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드린 두 질문에 대한 수긍될 만한 답변을 기다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9. 9)

5분 자유발언 : 유정선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발언요지 : 강원도의 외자유치 정책 관련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민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각종 부동산 개발, 관광 복합 리조트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본 투자가 물밀듯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효과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비록 조건부 승인이지만 양양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이 외국인과 민간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중국, 말레이시아,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향후 2년~3년 내에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재정에 여유가 없는 강원도 지자체의 입장에서 외국자본 등 민자 유치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가뭄 속 단비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익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 투자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 한 검증과 사업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스럽게도 현재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외국인 자본 투자의 투자처를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민간 자본 투자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르는 등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역개발에 목마르다고 묻지마식 투자 유치에만 급급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강원도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춘천시의 예를 보면 2010년 '비티비 아일랜드'가 일명 고슴도치섬이라 불리는 위도에 개별 보트 정박장을 갖춘 별장형 콘도와 특급호텔, 콘도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총 투자 규모 1조 원대 사업을 시행한다며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멈춰 있고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았던 고슴도치섬은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신고 후 1억 원만 입금되면 외국기업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허술한 제도는 실질적인 투자 가능성 저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에게 언제든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은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투자한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강원도에 투자 의향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외국인 자본 투자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자 유치, 특히 외국인 자본 유치의 경우 사업 이행 능력과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평가하고 부동산과 관광업 중심의 외국인 자본 유치를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연속성과 전문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적인 외국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강원도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 지자체가 공동출자 형식으로 투자 관련 전문 평가기구를 구성·활용한다면 강원도 18개 시·군 지자체들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청정 강원도를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로, 한국관광 일번지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9. 9)

5분 자유발언 : 김용복 의원 (새누리당, 고성군 선거구)

발언요지 : 북한 포격도발 및 15호 태풍(고니) 피해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북단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교육을 책임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가뭄으로 우리 농민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추수를 앞두고 풍년이 오길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안타까운 현실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접경지역에 산다는 죄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은 북한 도발이 있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정부 및 군으로부터 통제 및 지시를 아무 불만 없이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계를 보상해 달라는 소리 한번 없었습니다.

그저 접경지역의 평화가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 하나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북한 목함지뢰 및 고사포 포격 여파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피소 및 체육관으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 종료 후 육상에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마음고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고성군은 육지와 바다가 공존하는 지역이라 우리 어업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서해 5도는 어업인들에게 수협중앙회 지원으로 위로금을 전달하고 어업인 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등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똑같은 통제를 받았던 고성군 접경지역 어업인들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조차 묻지도 않는 작금의 작태에 수산의 책임을 수년간 맡았던 저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도발, 목함지뢰 및 고사포 포격 여파로 안전을 위해 저도어장 해역의 조업을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나흘간 통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성군 어업인들은 저도어장이 통제되기 전까지, 금년도 4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84일간 입어를 해서 총 10억 3,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약 1,300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이번 나흘간의 조업 통제로 약 5,000만 원의 어업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동해안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저도어장에 부설해둔 대게망 등 5,840닥이 유실되었고 약 7억 5,900만 원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확인된 피해액일 뿐 미확인 피해까지 더하면 어망피해가 적어도 1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해안 6개 시·군의 정치망 및 양식어가의 피해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이번 저도어장의 어망 피해는 북한 도발로 인한 저도어장 조업 통제만 하지 않았다면 태풍 '고니' 내습 전에 저도어장 부설어망 전량 철망을 함에 따라서, 특히 고성의 대진과 거진 어업인들의 태풍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어장 조업 통제로 인한 고성 어업인들이 본 직접적인 피해액만 8억 원이 넘습니다.

아울러 어망 유실로 인하여 9월 5일 현재까지도 본격적으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간접 피해를 감안한다면 피해액은 최소한 15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서해 5도는 피해와 동시에 행정지원 및 각계의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왜 유독 강원도 도민들만 소외를 받는 것입니까?

동해안 6개 시·군 어업인들은 강원도민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라는 도정 구호가

내 가슴에는 꼭 와 닿습니다만 도민들은 ‘소득 2배 행복 2배’라는 용어가 무슨 말인지 의아해합니다.

집행부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사님, ‘행복 2배’를 요구합니다.

도민이 잘살 수 있는 ‘소득 2배 행복 2배’를 말로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18)

5분 자유발언 : 이문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학성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대책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강원도교육청의 무성의하고 방관적인 대처로 통학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학성초등학교 아이들과 통학의 고통을 호소하다 못해 정든 집을 떠난 400여 가구의 학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성초등학교는 현재 재학생 764명 중 90% 이상이 학교 주변이 아닌 태장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장1동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2㎞~3㎞의 원거리를 통학하게 되고, 거주지 학생 중 학원차량 통학 학생이 70%, 학부모차량 통학이 15%, 도보나 자전거통학이 15%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도로구조상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통학구간에서 차량 접촉사고 및 인사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정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원차량으로 등하교를 하면서 방과후에 실시하는 학교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관내 초등학교 중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학교 이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44년 개교 이후 진행되어 오던 건물 유지·보수마저 중단되어 교육환경은 원주 85개 학교 중 최하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기찻길이 있어 철길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 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학교를 찾아 타 학구로 이전하는 가정이 늘면서 2010년도에 1,050명이던 재학생이 해마다 급감하여 현재는 76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성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추진은 2007년 1월 태장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승인과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 후 태장동개발계획을 결정하면서 학교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2012년 9월 학성초등학교 이전추진위원회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의 면담에서 학성초등학교의 조속한 이전 추진과 등하교 안전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셔틀버스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태장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학교이전사업은 난항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과 학부모, 이전추진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끊임없이 이전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원론적인 행정절차와 재정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의 무성의하고 방관적인 업무처리에 크게 실망함은 물론 행정력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4년 7월 강원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운운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학성초등학교 이전추진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학교이전부지사업 조기착공 요구와 학교이전부지를 우선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15년도 하반기 국토부에 사업승인서를 제출하고 연내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이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학성초등학교 이전이 학생의 안전 보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학교 이전 시까지 학생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와 인력을 지원하여 학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11월에 시행되는 교육부의 투융자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성초등학교 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18)

5분 자유발언 : 권혁열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립대학 관련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유일한 공립대학이고 우리 도민의 자녀가 70% 정도 입학하는 강원도립대학이 지난 전국 전문대학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E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6학년도부터 모든 국가재정 지원사업이 제한되고 신입생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마저 받지 못하는, 강원인재 육성에 재난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도내 유일의 공립대학이 이 지경에 처했음에도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는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반성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이는 지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근 언론을 통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급과 같은 인기성 보도를 하고 있어 본 의원은 회계절차까지 무시하는 도지사의 무책임한 행보에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의견들을 똑똑히 경청하시고, 도지사를 비롯한 측근에서 완장을 차고 홍위병으로 있는 내시들까지 모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오늘을 거울삼아 미래를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도립대학이 왜 이 지경에 처했습니까?

보은과 밀실인사에 따른 잘못된 총장의 임명과 사퇴 강요,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9개월간 선장 없이 표류하도록 방치한 인사문제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발전 투자보다는 등록금 면제라는 인기영합 공약 실천에만 목맨 지사의 근시안적 정책이 그 다음일 것입니다.

이번 대학평가는 2012년, 2013년, 2014년 대학 운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기준입니다.

대학평가 기간 원년인 2012년은 지사가 원칙을 무시하고 2순위였던 당시 원병관 후보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총장으로 임명한 해입니다.

그마저도 임기를 불과 7개월 남겨놓고 아무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사퇴시킨 것이 올해입니다.

그리고 공모제로 대학에서 선출한 두 명의 후보를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임명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학평가가 시작되는 해를 원칙 없는 총장인사 문제로 허송세월하더니 평가 마무리 해에는 그 원칙 없는 원칙마저 무시하고 대학을 선장 없는 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학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에 총장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립대학 총장 인사와 관련한 측근들에 대하여 본 의원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누가 도지사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다 할지라도 문제의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도립대학은 설립연도인 1998년부터 교과부의 자구노력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이어 전문대학 특성화 우수대학 5회 선정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평점 35점 중 27점을 받아 전국 전문대학 평가에서 상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도정이 들어온 지난 3년여 동안 도립대학은 전국 132개 전문대학 평가에서 최하위그룹인 E등급 7개 대학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총장 인사로 인한 예측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립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전해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총장 인선과 관련한 인사라인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지키기 바랍니다.

원칙을 분명히 하라는 뜻은 도지사의 무원칙 인사결정에 관여한 측근들에게 이번 도립대학 사태 책임을 분명히 물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학과 폐지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보다 차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재정지원 계획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혁신은 학과 폐지와 인원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재정지원 강화 노력이 없는 경쟁력은 헛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년도 도립대학 예산은 이번 사태를 감안해 새로이 편성하기 바랍니다.

신입생 미달 등 최악의 위기상황을 전제로 장학금과 대학평가에서 미진한 NCS 교육과정 개발, 이에 수반되는 기자재 예산, 학사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등 지금까지 편성되지 않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넷째, 대학이 자체적으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대학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은 개교 이래 최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수들이 연구수당 4억 5,000만 원 전액을 반납하였고 시간강사수당 9,000만 원을 절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직수당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역사회도 대학과 상생의 길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재학생들 또한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모든 자구노력 예산이 회계처리상 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회계담당 공무원 모두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준다면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립대학은 현재 수시1차 신입생 모집 중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40% 정도 적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최문순 지사님께 당부합니다.

지금은 도립대학이 위기상황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강원도립대학과 소통하시고 책임을 따지기 전에 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18)

5분 자유발언 : 이종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춘천)

발언요지 :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철회와 관련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메르스와 남북 대처 등으로 살얼음을 걸어왔던 강원도민들에게 오랜만에 웃음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경 훼손이라는 지적 속에 조건부로 승인됐지만 설악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반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강원도민들의 진정한 웃음을 찾아 주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8월 26일 강원도 7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가 춘천시청 앞에서 그 무더위 속에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교육 재정효율화방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각 시·군 학부모단체 등도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달 7일 민병희 교육감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평등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이며 국가의 책임인데 정부는 교육적 가치를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를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서 학생 수 비율을 36%에서 5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학생 수 기준 교부금 배분,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 수 축소, 누리과정예산 떠넘기기 등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은 강원도 교육 재정의 파탄과 강원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게 명확합니다.

강원도 내 현재 673교 중 40%에 해당하는 270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농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마을의 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강원도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정치 도의를 벗어난 것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예산분담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0세~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2013년 1월 전국 시도지사간담회 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아이콘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렵고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를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8개 시·군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의 추진 중단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원주~여주 전철사업에 이은 강원도 제4대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18)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크루즈 활성화 사업 관련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원도의 환동해권 개발과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바다 위 호텔로 불리는 크루즈산업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으로서 세계의 크루즈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3%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2,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산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시장 역시 최근 5년간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횟수는 약 4배, 관광객 수는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519회의 입항으로 93만 명의 관광객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9월 11일 아시아 최대 규모 크루즈선인 퀀텀호가 부산으로 공식적으로 입항했습니다.

16만 7,000t에 달하는 이 크루즈에는 승객이 4,600명, 승무원이 1,500명으로 약 6,100명이 한꺼번에 탑승을 하는 배로서 한 번의 기항에 경제적효과는 무려 6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이 비행기 한 편당 15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 관광객 수만 비교해도 비행기가 30회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크루즈선이 관광산업에 얼마나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역시 10만 t~15만 t 규모의 대형 크루즈선을 유치하여 환동해권 크루즈관광의 허브로 도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속초시는 유라시아 및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국제관광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부산, 인천, 제주, 속초항을 크루즈 모항으로 선정하고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전용부두 5선석을 우선 완공한다는 계획하에 부산북항 10만t 1선석과 제주강정항 15만 t 2선석, 인천남항 15만 t 1선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동해권의 중심지인 속초만 2016년까지 3만 t 규모 1선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년 내에 3만 t급과 5만 t급 이하의 크루즈선은 사라집니다.
정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강원도지역 6개 항만 중 속초항이 유일하게 여객·관광 중심 항만으로서 동해안 여객수송 및 해상관광 중심 항만으로 육성·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초항에 총사업비 536억 원을 투입하여 3만 t급의 접안시설 및 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크루즈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한참 뒤떨어진 계획으로서 이러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속초항을 2017년까지 7만 t급, 2020년까지 10만 t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겠다고 하는 수정계획안이 조정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것 또한 너무 시대 흐름에 뒤쳐진 한발 늦은 계획입니다.
10만 t급 이상 확장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크루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품질 관광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구매수준이 높아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기항지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1인당 평균 1,068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크루즈는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대표적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차원에서 해수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제출해서

2020년까지 속초항을 10만 t 모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요구가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보다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산으로 기항한 퀸텀호는 최근 문을 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도 못하고 컨테이너부두에 정박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항 대교의 높이가 낮고 여객터미널 자체 수용규모를 넘어서 새 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도 컨테이너부두에 정박하여 관광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환동해 중심 크루즈육성 전략의 일환이자 세계 크루즈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속히 속초항을 10만t으로 확장하고 현재 공사 중인 여객터미널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우리에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형 호재를 활용해서 환동해를 크루즈 모항기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속초항 10만 t 접안시설 확장에 도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10. 6)

5분 자유발언 : 이문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2016년도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참석하신 방청석의 어린이 도의원님과 인솔 선생님 모든 분께 환영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제8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을 역임했으며 원주 출신 도의원으로서 원주시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원주시민의 하소연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의 교육사업으로 지원되는 2016년도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원주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 조례 제정 당시 교육경비의 보조 기준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3% 이내였으며 2009년도에 5%, 2010년도에 10%로 점차 상향되어 2015년 현재까지 10%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원주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안정적 지원 속에서 초등영어 체험교실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촌지역 학

교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목적실 신축, 대규모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와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공간의 확충 및 개선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학교의 체육지도자 및 우수 선수 육성 지원, 정부시책 사업과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원주지역의 인재육성과 친환경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는 예산 지원의 계속성과 연속성이 보장될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 지원되던 예산이 갑자기 줄어 교육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될 경우 학생들에게 끼칠 불이익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2016년도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보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원주시는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2015년도의 지방세수입액의 10%인 130억 2,500만 원보다 약 40억가량을 줄인 90억 6,10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교육경비보조금 40억 감소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배치 등 9개 사업을 폐지하고 12개 사업의 사업비를 전년대비 삭감할 계획으로 교육경비 신청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주시 계획대로 교육경비가 삭감될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 6명의 해고와 방과 후 학교운영에 따른 학부모 부담 가중,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체육경기지도자 28명의 해임도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는 원주교육의 기저와 방과 후 학교교육 운영은 물론 원주체육의 기반이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의 일방적 교육경비보조금 삭감 계획은 명륜동 소재 옛 원주여고 부지를 종합문화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교육 경비를 축소·편성하여 부지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된 것은 옛 원주여고 학교용지와 도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하자는 원주시의 제안을 강원도교육청이 거절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원주시가 강원도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옛 원주여고 부지를

원주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 원주여고 부지와 도 종축장 부지의 맞교환과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조례 규정에 의해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문화공간 확충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쓰여질 교육경비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하는 것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미래의 원주시를 이끌어나갈 인재육성을 저해하는 조치임을 명심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주시가 교육경비 삭감 없이 구 원주여고 재산을 매입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원도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10. 6)

5분 자유발언 : 최성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6선거구)

발언요지 : 다문화 가정의 현 실태와 지원 방향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도의회 의원님과 교사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 1번을 부탁드립니다.

마음 아픈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한 문제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에 어려움이 많은 농촌지역 남성들이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정착을 하여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이들이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2번을 부탁합니다.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가족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주요 정책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 여성의 문제점으로는 문화 적응에 따른 불안,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에 의한 부모 역할의 어

려움, 신분상의 불안과 사회참여 기회의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고 다문화 아동의 문제점으로는 신체적 차이에 따른 집단 따돌림, 경제적 어려움과 언어습득, 환경의 어려움에 따른 정체성 형성과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언어 및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 가정폭력과 교육 문제, 빈곤의 세습 문제,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등 다문화가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이 10년을 맞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의 정책이 지금의 현실과 맞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못해 다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결손가정이 늘어만 가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며, 결혼이주 가정의 자녀들은 다문화 어머니들의 출생국의 교육과 문화로 양육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가정 외의 곳에서 문화와 교육이 충격으로 생활되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한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환경과 행동이 어린이집으로 연관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며 이에 따돌림과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다문화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부적응과 낮은 자존감·효능감 등을 높일 수 있는 학습지도, 아동상담 및 언어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며 다문화자녀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으로 외국인과의 혼인이 감소하고 있어 신규 결혼이민자의 유입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기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집중해 왔으나 학령기 자녀 증가 등에 따른 다문화가족 내의 변화와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라 결혼이민자만이 아닌 다문화 구성원을 전체로 하는 가족 지원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실적 산정 시 전년 대비 신규이민자의 증가율과 결혼이민자의 수혜율만으로 실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산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의 방향으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을 둔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정책구성이 되어야 하며 효율적·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립능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 대책과 자녀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책 대상자별 프로그램과 결혼·언어·문화정책을 넘어 원활한 가정생활과 자녀양육, 교육, 청소년 문제 및 경제활동,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함께하는 교육을 추진하며 이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양방향성을 가지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를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하여 현장중심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의 조정, 협력 등 협의체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담당부서는 사업수행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추진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모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가정생활 속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수정·추진하며 향후 10년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책 마련을 위해 강원도만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정 환경의 차이에 따른 정책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강원도만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제안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10. 6)

5분 자유발언 : 강청룡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의회 의원에 대한 대접(예우)에 관하여

강청룡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지만 푸념 섞인 넋두리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벗고 준비해온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지난달 추석 명절 전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관한 춘천에서의 한 행사에서 볼썽사나운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지사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내빈 소개 시 강원도의회 의장을 빼놓고 소개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의장께서 본인이 직접 일어나 머쓱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가 "강원도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셨어요." 하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는 끝내 의장님을 소개치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행사장을 빠져 나왔지만 지금도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며 매우 심사(心思)가 불편합니다.

물론 단순 착오나 실수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저는 언제부터인가 '강원도민을 대변한다는 도의원으로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나 자신이 왜소해지고 초라해지는 느낌은 저만의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춘천 행사 전에 양양 비행장에서 있었던 행사에서도 의장님을 중간에 소개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최해서 그렇다고 변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무슨 망신입니까?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실·국장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회의장 연단에 나왔다 들어가실 때 비록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인사일지언정 의장님께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발언 서두에 꼭 '존경하는 의장님'이란 표현을 쓰십니다.
이는 의장님이 학식과 덕망이 높아서 예의를 갖춘다기보다는 강원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 다시 말씀드려 강원도민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장이라는 자리는 도민을 대표하는 소중하고 막중한 자리입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장, 그리고 의원들은 공적인 자리나 공무에 있어서 만큼은 도민을 대신하여 최소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배·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건 가관이 아닙니다.
어디에다 말도 못하는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지역구에 내려가면 도의원의 위치는 지역구에서 애매모호해 집니다.
좌석이 맨 끝에 마련되는가 하면 아예 좌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개 시는 제대로 소개는커녕 어떤 경우는 실수인지 착오인지 소개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기야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시 도의원들 인사나 소개를 시의원들보다 늦게 시키라는 둥 지침 아닌 지침서를 읍·면·동과 각 과에 하달하였습니다.
웃지못할 슬픈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실·국장님, 오죽했으면 제가 각종 의전에 관한 책자나 논문들을 찾아 보았겠습니까? 제가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도의원 신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자리에서 저나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목에 힘주고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민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자괴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실·국장님 여러분!
의원들이 각종 행사나 세미나, 포럼 등에 왜 참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앞에서 목에 힘이나 주고 폼 잡으려고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행사의 실효성이 있는지, 관계자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주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등 여러 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하는 실로 매우 중차대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관 상임위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각종 행사나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하여 도정 전방을 두루 살펴 강원도와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함에 있어서 각종 행사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나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에서는 홀대 아닌 홀대를 받지만 그렇다고 도 단위 행사에서는 대접을 받는 줄 아십니까?
도 단위 행사는 어떻습니까? 강원도의회 의장에 대한 예우가 이 지경인데 하물며 도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초청이나 하시지 말든지.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이 참석해도 소개치 않는가 하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자리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참석한 의원은 소개에서 빼먹고 참석치 않은 의원은 부르고, 이뿐만 아닙니다.
분명 도청 직원으로 행사 관계자 같은데 인사는 둘째라고 치고 먼 산만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대 도의회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음에도 최근까지 집으로 오는 우편물에 이름이 틀리는가 하면 도 간행물은 춘천시의원 명의로 오고, 집행부 고위 간부들이 도의원 지역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연락은커녕 일언반구 말도 없고, 행사 관련 소식은 신문, 방송으로 후에나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이왕지사 말하는 김에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민원이나 업무 등으로 직원들과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수화기나 잘 좀 막고 안 들리게 이야기하시지, 비록 자기들끼리의 대화라고 하지만 듣기 거북한 멘트가 들리지 않나, 또 의원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본청 사무실을 방문하면 목례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의원인지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할 수는 있지만 민원인이 방문해도 인사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명색이 도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인사 교류하여 시·군에 내려가신 분들이 계신데 바빠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라도 한 통쯤 있을 법하건만, 인간사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중에 어쩌다 한두 분이시지만.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실·국장님 여러분!

이거 어디 힘들어서 의원하겠습니까?

지역구에 가면 민원이나 행사에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렇다고 도에 오면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가끔 언론에서 이런저런 일로 두드려 맞기나 하고.

지사님, 지사님도 국회의원 하셨고 교육감님도 도의원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이런 도의원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춘천시의원과 강원도의원을 14년 차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지만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시절 의정활동 중에 집행부와 실로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의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10. 6)

5분 자유발언 : 곽영승 의원 (새누리당, 평창군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립대학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청 오신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잘 나가는 학원들이 학원생을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원장이 시험을 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뽑습니다.

그리고 학원생들 중 일류 대학을 가면 플래카드, 전단지 등으로 학원 광고를 합니다.

교육이 아니라 돈벌이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열등생을 우등생으로, 미완성 인격체를 완성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립대학이 정부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특성화 사업이 차단되고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최문순 지사님과 도립대 측은 무엇을 했습니까?

최 지사님은 취임하자마자 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생들에게 무상등록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래에는 무려 6개월 동안 총장을 공석으로 놔두었습니다.

어찌하여 도립대 총장 한 명 제대로 물색하지 못한 것입니까?

도립대 측은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대위를 구성했고 주민들과 동문들이 발 벗고 나섰는데도 강원도는 사과문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예산을 쥐고 있는 강원도가 무대책인데 종속변수인 도립대만의 노력으로 잘될

수 있겠습니까?

7월에 취임한 송승철 총장님은 임명권자인 지사님과 보조를 같이하고 취임 일성으로 도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사님과 총장님의 무상등록금은 서울의 학원장이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부족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우수 학생으로 만들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등록금이 공짜라고 홍보하는 것이나 학원장이 합격자 홍보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이나 무엇이 얼마나 다릅니까?

송 총장님은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수목적 국립대를 제외하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치사처럼 들립니다.

신입생 등록금 전액 무상 지급은 도립대 회생의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등록금이 공짜라고 다른 대학을 갈 학생들이 도립대로 오겠습니까?

도립대가 회생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누구나 공감하듯이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실용적으로, 실전형으로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합니다.

기업체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육기자재, 실험·실습기구, 현장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산편성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립대 졸업생 취업률은 최 지사님의 무상등록금 지급 이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5년째 무상등록금을 지급해 온 결과가 바로 최악의 등급 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최악의 정책, 인기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립대 측은 교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육연구비, 학생지도비 2억 2,500만 원을 반납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만 근본 대책은 지사님과 총장님이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무상등록금만을 고집하는 것 외에는 지금껏 단 한 건의 사과문이나 대

책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강원도립대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도립대는 900여 명의 학생 중 30%가 타 시도 출신이고 취업률은 50%에 불과합니다.
50%라고 하지만 그나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립대는 이번 정부평가에서 취업,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바로 핵심 중의 핵심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는 매년 7억 4,000만 원의 무상등록금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국가 지원 예산은 2011년 42억 원에서 2015년 10억 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무상등록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10.16)

5분 자유발언 : 김용래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교육청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사업과 교육정책이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계약직 한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그럴 듯한 교육정책을 다량 양산하고는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의 현실과는 맞지 않아 일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근심 어린 목소리를 강원도교육청에 전하고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방안에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상 조직의 건전성을 가늠할 때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가, 아니면 조직원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잘 움직이는 팀을 이루는가를 가지고 판가름하게 됩니다.

또한 민병희 교육감은 취임 시부터 권위주의의 타파와 민주적 조직문화를 강조해 오면서 하향식의 지시보다는 상향식의 소통을 통해 일선 교육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과 아래로부터 교육혁신을 표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정책과 사업은 교육감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정책기획담당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30년~40년을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몸 담아온 국·과장들이 실·과에서 수립하는 사업계획들조차 정책기획담당의 협조를 빙자한 검열을 거쳐야만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업무추진이 계속된다면 어느 부서장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

책을 입안하고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민병희 교육감이 역설하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강원교육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인사 한 명에 의하여 세워진 강원교육정책은 교육감 직선제에 따라 각종 공약사업으로 남발되고 있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그럴 듯한 타이틀의 정책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교육 현실과는 맞지 않아 오히려 이와 같은 교육정책의 남발로 인해 일선 학교의 업무과중만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의 모두를 위한 교육 제1기에는 총 47개 사업을, 제2기에는 총 95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기 공약사업과 비교해 볼 때 공약사업이 두 배 이상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다보니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이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 결국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변경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업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초 공약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타당성이나 경제성,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교육현실을 간과하고 수립된 계획들이라 어쩌면 사업계획의 변경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설립사업이라든가 동계·해양레포츠고등학교 설립사업 등은 원주기업도시 및 강원도민의 열망이 담긴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그럴 듯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 정도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야 추진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지갯빛 공허한 약속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교육연구소 설립, 군특성화고 설립, 평화교육센터 설립, 강원교육박물관 설립 등 각종 신규공약사업 역시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진정한 강원교육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하여 치밀하게 검토되고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교육감의 치적으로 삼고자

구상된 홍보용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병희 교육감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 선진화 및 정상화를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역설적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미처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각종 전시성 사업을 양산하여 오히려 교직원들의 업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한 사람을 주축으로 하여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일부 측근에 의해 전적으로 강원교육의 주요정책이 입안되다 보니 교육감 홍보용 정책은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1,000억 이상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의 5대 정책 기본방향 중의 하나로 다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행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하여 한 사람 또는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의견만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경륜이 풍부한 부서장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강원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강원도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 전시적 교육정책들을 과감하게 정비할 것을 교육감에게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10.16)

5분 자유발언 : 곽영승 의원 (새누리당, 평창군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 인사와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행부와 의회를 도민을 모시고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합니다. 미사여구죠.

저는 두 바퀴가 잘 가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도의회가 최문순 도지사의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의사당에서 몸을 못 가누고 쓰러지기까지 하니 참담합니다.

도민들과 도청 공무원, 도의원님들에게 치욕과 불명예를 주었습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지사님은 언제나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한다.'며 개선과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제 기억에는 단 한 건도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전과 44범의 사기꾼에게 속고서도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낼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지사님은 지난 도정질문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내년 6월까지인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박승우 원장은 이미 오래전 강원대병원 복귀가 결정됐고 새 원장이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의사당에서 모든 도의원과 도청 공무원들,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의회와의 약속을 내팽개쳤습니다.

도지사는 지난 8대 의회와는 의료원 경영을 혁신하겠다며 공식문서에 합의·서명까지 했습니다.

그 문서 또한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도의회를 행정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만취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으며, 약속과 서약을 이리 쉽게 어기지는 않을 겁니다.
도지사는 강원도의 지방자치에 조종을 울렸고 도의회의 견제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최 지사의 스킨십 뒤에 가려진 무능과 방향 상실, 도정의 총체적 난맥상의 실체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욕망, 욕심에 흔들립니다.
욕심대로 산다면 만인에 대해 만인이 투쟁하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충돌하는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약속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핵심원리,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의성실조차 저버린 것입니다.
누구나 초보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을 상실하셨다면 좀 과합니까?
섭섭하십니까?
그제 저녁 옆자리에 있던 한 시민은 도지사의 만취 뉴스를 보고 '범죄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 집행부는 4일 전 도립의료원장을 도지사가 언제든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사문위는 부결시켰습니다.
좌불안석의 상황에서 원장이 의료원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문화위원회는 현재 도립의료원을 '노조를 위한 의료원이지 도민을 위한 의료원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은 강고한 노조에 맞서 의료원 개혁의 칼을 들었고 의료원 노조는 여러 선을 동원해 저지했습니다.
결국 박 원장의 개혁의지는 도지사에 의해 꺾였고 매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며 도민들의 혈세를 잡아먹는 의료원의 개혁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에는 지난 6월 새로운 노조가 탄생했고 기존 노조원들의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황당 사건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7월 도청 서기관이 가던 산하기관장 중 한 명을 아웃소싱하겠다며 공모했고 8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중 두 명을 선발해 최종 심사를 하다 갑자기 없던 일로 하고 새로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심사에서 떨어진 1명이 재응모해 최종 합격했다고 합니다.

당초 이 사람을 뽑기 위해 공모한 것인데 실무진이 높은 곳의 뜻을 몰랐던 것이라고 합니다.

도지사는 도정의 핵심인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비선실세의 주도, 인기투표라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공무원들의 냉소, 의욕 상실입니다.

도지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도 사라졌고 도지사의 업무장악력 또한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참담한 도정, 무시당하는 도의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10.16)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정에 드리는 제언

안녕하십니까?

청정 강원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마흔 두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최문순 지사님,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기 전 과중한 업무로 누적된 피로와 점심시간 반주 음용으로 잠시 정신을 잃으셨던 지사님께 건강의 안녕을 여쭙고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선 전국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없던 초유의 사태인 피로와 보좌진들 전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생각되는, 업무시간 지사님의 약주 음용으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셔서 예정된 모든 도정질문이 취소됐지만 다행히 사고 전 본 의원과 함께할 수 있으셨던 질문·답변 때 저의 운영 미숙과 서투름, 그리고 반복되는 지사님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으로 시간초과가 돼 미처 말씀올리지 못한 두 가지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와 A연구원이 함께 설립한 참하나GW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의 전면 중단 촉구와 이와 관련해 위촉이 되셨던 명예도지사 두 분의 취소를 촉구드립니다.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들로 인해 사기죄로 5년 6개월간 복역하셨고, 현재 사기혐의로 수배 중이신 연구원의 기술에 의존해 강원도가 함께 추진하려는 사업이 동일한 절차를 밟을 확률이 크고, 설령 성공해서 큰 이익을 본다고 해도 그 성공이 있기까지 흘려진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자양분으로 누리는 기쁨이기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질 수 있다 생각되어 드리는 촉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위촉되신 두 분 명예도지사님들께서 평생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신 데 대해 개인적으로 저도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로서 존경의 마음을 올리지만 신앙을 가진 것과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그중 한 분이 5년 6개월 복역을 하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신앙을 앞세워 649명의 신도 및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32억 5,169만 원으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조례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촉 여건처럼 강원도 발전에 이렇다 할 기여를 하신 바 없고, 앞으로도 기여하실 확률이 극히 드물거나 없다고 추론되기 때문에 취소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취소사유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가 있는데 현재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물의가 될 확률이 크니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취소하시는 게 타 시도로부터 받고 있는 따가운 눈총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입니다.

이틀 전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고 프로는 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과정과 이유도 중요하지만 프로세계는 냉정합니다.

결과로 모든 걸 입증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게 프로세계입니다.

지사님은 프로이십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살고 계신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고 대표로 내보내진 프로선수이십니다. 과중한 업무와 도정질문 답변 준비를 병행하시느라 누적된 피로들에 대해 도민으로서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올리지만 만약 많지 않은 양이었더라도 약주 음용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피로해질 대로 피로해진 몸에 약주가 들어가면 버티지 못하는 게 상식이고 천하장사라도 쓰러졌을 것입니다.

도정질문 답변을 앞두고 약주 음용을 안 하셨으면 비록 몸은 힘드셨겠지만 버티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프로는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려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동정을 받는 게 아니라 몸 관리를 못했다고 팬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또한 4전 5기 끝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감동과 힘을 줬던 홍수환 선수처럼 강한 정신력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지켜보는 국민들로부터 쓰러져도 링 위에서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잔인한 기대를 받는 자리가 프로의 자리지만 대신 이와 바꿀 만한 사랑과 선택을 받고 두고두고 회자되는 영예를 누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단 한 명의 신하도 사형에 처한 적이 없고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께서는 아래 신분을 업신여기던 사대부 대감마님들이 엎드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는 일을 나도 똑같이 알아야 왕의 자격이 있다.'며 소규모 논을 만들고 봄마다 똥지게를 지고 날랐다 합니다.

당시 유교윤리상 천인공노할 일인 사대부 아녀자가 간음을 한 일이 있어 조정 대신 모두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들끓었는데 세종께서 이 여성을 살리려다 신하들의 노기충천으로 끝내 사형 처형을 명한 일이 있습니다.

노년 생일잔치 때 신하들이 지금까지 가장 후회되는 일 하나를 묻자 그 여인에게 처형을 명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위민·애민의 정수가 담긴 것이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짜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쌔 (중간 생략) 이랄 윙하야 어엿비너겨 새로 스물 여듧짜랄 뫵가노니'란 마음이 담긴 훈민정음입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ㅊ, ㅗ, ㅣ, ㅁ, ㅜ, ㄴ, ㅅ, ㅜ, ㄴ' 자음 네 자, 모음 세 자를 사용해 서명하실 때 궁극의 위민·애민이 그 글자 안에 녹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십시오.

앞으로는 초심을 회복해 위민·애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프로로서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정신력을 지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렇게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10.16)

5분 자유발언 : 장석삼 의원 (새누리당, 양양군 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교육청 구조개혁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새누리당 장석삼 의원입니다.

도민을 위한 5분의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김영철 부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표현으로 대변할 정도로 국가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끈기 있고 지속성 있게 실현할 때 교육적 효과는 성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잘 운영되던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강원도교육연수원 분원으로 두고 학생들의 진로활동 지원을 위한 강원진로교육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에 위치한 강원외국어교육원은 강원도교육연수원 산하의 분원으로 축소 편입이 불가피하고, 그동안 4급이 배치되던 원장자리는 없어지고 5급 체제로 축소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2009년 도내 외국어교육의 산실로 만들겠다고 전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 개원한 강원외국어교육원의 중장기목표는 무시한 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일방적인 교육행정을 주무르겠다는 의도와 다를 바 없는 처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외국어교육원은 우리 양양군민의 뜻에 따라 신설된 시설이 아니라 강원도 교육계 전체의 의견수렴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적 산물로 그동안 수많은 외국어 관련 교사들의 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며, 소외지역 학생들은 물론 외국어에 재능 있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원 신설에 따라 강원외국어교육원이 격하된다면 도내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및 노출기회 축소는 물론 가뜩이나 교육소외지역으로 전락한 양양지역의 교육 분야 소외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진로교육원을 신설하기로 했다면 사전에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어교육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4급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도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청이 없어 교육 소외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근 지역의 진로교육원 신설로 인해 양양군에 위치해 잘 운영되고 있는 외국어교육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교육정책에 역행하는 일방적 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처사입니다.

또한 축소와 더불어 내용은 더 다양해진다는데 이 또한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강원외국어교육원이 강원도교육연수원의 분원이 될 경우 외국어전문기관 정체성 상실로 인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시간과 비용 부담 증가 등 행정력 낭비, 기피부서 전락 등의 부작용과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 잘 아시죠?

어떻게 강원교육의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강원외국어교육원의 조직개편을 놓고 사전에 지역주민들은 물론 지역 교육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물론 지역의 커다란 반발을 우려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놓은 대안이 국제교육원인데 너무 졸작으로 만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이 선거에 나서면서 양양군민들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양양교육청 부활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양양교육청 부활은 고사하고 꿩 대신 닭이라는 말처럼 소규모의 양양교육지원센터만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지원 강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격하시킨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선의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을 합니다.

강원교육의 수장이신 민병희 교육감님은 지난 35년간 교육청이 없어 교육소외지역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양양군민의 진심어린 마음을 헤아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잘못된 방향과 의도에 대하여 양양군민에게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이 주민들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안일하고 후안무치한 일방적인 교육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강원외국어교육원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강원교육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형식적인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는 명분하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풍선효과의 희생양이 돼서는 절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의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원론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지혜와 기획력을 모아 강원교육의 근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똑똑한 대안을 찾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10.16)

5분 자유발언 :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5선거구)

발언요지 : 소방헬기 구매 관련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원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해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강원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한 많은 논란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다행히도 각종 언론매체에서 전국 뉴스를 타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문제의식들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산림청, 제주소방 등의 헬기 구매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강원소방본부를 특별 감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조달청이 서너 차례에 걸쳐서 국내조달을 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강원소방 자체 외자조달 입찰공시를 냈습니다.

이강일 본부장님께서는 전 세계의 우수한 다목적 헬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응찰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자조달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차와 2차에 걸친 입찰이 단독입찰로 유찰된 상황입니다.

철저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원소방에서 제시한 규격내용에 부합하는 기종이 이태리 아우구스타 AW139 모델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데 어찌 복수의 경쟁기종이 응찰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또 강원소방에서 입찰 참여조건으로 헬기에 장착될 일부 부수장비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제출 등을 사전에 요구한 것이 결국 AW139 기종을 제외한 국내외 어떤 기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처음부터 강원소방이 특정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소방본부의 헬기구매사업은 특정업체만의 단독입찰로 공정한 가격경쟁을 잃게 되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국민과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누가 과연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각계에서 강원소방의 규격내용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소방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계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원칙에 부합되는 헬기구매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제주소방과 산림청, 경찰청에서 수리온을 포함해 동급 경쟁 규격조항을 담아 정식으로 조달청에 국내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소방은 왜 국내조달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강원소방과 동일한 임무와 목적을 가진 헬기인데 말입니다.

더욱이 강원소방과 제주소방의 규격내용을 비교해 보면 제주소방이 안전장비를 비롯해서 훨씬 까다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은 정부시책에 따라 국산헬기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소방과 제주소방의 선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끝까지 아쉬운 점은 국산헬기에 대해 최소한 강원소방에서는 생산현장 시찰과 강원도 지형에 걸맞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검토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소방헬기 구매행정의 관성에 안주하려는 또 다른 행정편리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 봅니다.

국가계약법 위반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제주소방, 산림청 등의 조달청 국내조달 진행을 살펴보시고 현재 강원소방이 진행하고 있는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11. 2)

5분 자유발언 : 심영섭 의원 (무소속, 강릉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안반데기 고랭지 채소단지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는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고랭지채소 재배단지인 강릉시 왕산 안반데기에서 올해 6월 우리는 고랭지채소 파종을 위해 군장병 지원과 소방 급수차 동원은 물론이고 농림축산부장관까지 나서서 누런 황토먼지를 뒤집어쓴 채 물대기 작업에 몰두한 사실을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덧 그사이에 자란 배추들은 안반데기 산등성이와 구릉을 따라 녹색 장관을 이루었고 농가들은 출하작업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을 느껴야 할 이곳 농민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근심만이 가득합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하여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수급조절 차원에서 분산 파종하라고 하여 최악의 가뭄에 맞서 비싼 물값을 지불하면서까지 키워낸 무, 배추가 과잉생산으로 인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폭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겨울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출하물의 가격이 급락하면 평년 가격의 80%를 보상해 주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고랭지배추 5,000t을 수매·비축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책들은 생산된 물량에 따른 후속 대책인 것입니다.
농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생산원가의 절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뭄 때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구불구불한 도로에 물류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20일 강원도와 강릉시는 고랭지채소단지의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저수조 11개소와 양수장 3개소, 송・배수관 10.7㎞를 설치하는 등의 용수개발사업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강원도에서는 고랭지채소 주요 반출도로인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와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를 잇는 평창군도 15호선을 선형개선사업비로 올해 2억 원의 도비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최문순 지사님께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군도 15호선 선형개선사업은 지난 9월 공사를 착수하여 급커브 구간과 교통불편 구간에 대한 선형개선이 이루어져 대형 차량이 원활해짐에 따라 안반데기 농가들의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 명소로도 거듭나는 데 선형개선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아직 3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한 번쯤은 안반데기를 방문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셨던 분들이라면 까마득한 고지에 펼쳐진 초록바다, 풍력발전기의 거대한 바람개비 아래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풍경을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곳 안반데기 일원이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 명소로 거듭나는 데 선형개선사업이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형개선사업은 반드시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농민들을 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민이 농촌을 떠나거나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평창 군도 15호선 선형개선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11. 2)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하여 올리는 소견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 평소 가지고 있는 짧은 소견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류현진 선수의 승전보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빌보드 차트 2위 점령을 내 일처럼 기뻐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사적, 지리적 영향 때문에 다른 나라 시민들에 비해 대체로 애국심이 강합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소방본부의 소방헬기 구입이 종종 도마 위에 올라 관계된 많은 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외국이었으면 관심의 주제였을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선 구매방식에 있어 내자구매, 외자구매가 주는 어감상 내자는 국산, 외자는 외산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기실(其實) 두 구매방식 모두 국산, 외산을 입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자구매 방식에는 제약사항이 있는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내자구매는 국내 법인 등록 업체만 가능한 전자입찰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나 BMW 코리아처럼 국내 법인이 있으면 입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방본부가 고려했던 기종들의 회사인 이탈리아 회사는 국내 법인이 없고 프랑스 회사는 국내 법인이 있긴 하지만 부품만 팔 수 있게 한정시키고 본체는 본사와 직접 판매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자조달식 국내 법인이 있는 KAI 한 곳만 입찰이 가능하고 국내 법인이 없는 외사는 입찰 자체가 원천봉쇄 됩니다.

반면 외자조달은 지급 수단이 외화이기 때문에 외국회사 환차손까지 보장해 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국내외 모든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금까지 타 시도도 소방헬기 구입을 외자구매 방식으로 별 무리 없이 진행해 왔고 강원소방본부도 관례적으로 외자구매 방식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단 내자구매 시 전자입찰이 아닌 내자 국제입찰로 진행해 직접 입찰을 허용할 경우 외국업체 참가가 가능한데, 강원도의 내자·외자 구매방식 갈등을 지켜보던 조달청은 지난 7월 14일 소방본부에 내자 국제입찰 진행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이례적 결정으로 제주소방본부는 시기적으로 내자 국제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강원소방본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 늦게 받은 공문이었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모든 걸 중단하고 내자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전규격공개 10일, 입찰공고 40일, 재공고 10일 등 준비에만 두 달이 걸리는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하고 지금도 예상보다 5개월 정도 지연돼 임차 소방헬기 임대비에서 예상치 못한 막대한 손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방식 변경은 단순히 임대비 측면만이 아니라 더 좋은 장비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도민·국민의 권익과 안전성이 보장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특수구조단 대원님들의 권익에 훨씬 더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기종결정 지연 및 소방헬기 공백상태를 더 장기화시키게 됩니다.

이 같은 예상이 분명 소방본부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규격내용과 입찰참여 조건 문제를 보면,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소방헬기는 특수헬기이기 때문에 특수장비에 대한 규격을 요구하는 것과 또 그에 대한 입증을 입찰참여 시 증명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규격조건을 특정 회사 제품에 맞췄고, 입찰참여 시 이를 증명하라는 것은 특정 회사 제품을 선택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격이라는 것은 선발조건입니다.

90점을 맞아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지만 S대에서 100점을 요구하면 100점을 맞아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90점 학생이 'S대가 100점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배제하고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한 명은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S대를 다니는 두 학생이 로펌에 지원했을 때 사시 비합격자가 '정식 입사일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고 합격해 올 테니 현재 비합격 상태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박사과정 지원 때 요구한 영어점수에는 충족했지만 날짜 미확인으로 유효기간이 2개월 지난 영어성적을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로 지원 자체가 반려됐고 이듬해 새 영어성적으로 지원해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로펌 지원이나 대학원 지원처럼 입찰 시 요구 장비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입찰참여 조건에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사회가 정한 규범에선 믿음보다 증명을 요구합니다.

인증은 객관적 증명이고 구두약속은 주관적 믿음인데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인증이 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객관적 증명서가 입찰 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더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쭤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한 근거 없는 갖가지 의혹 제기는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검색하면 어느 한 곳도 깨끗한 곳 없이 양쪽 모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현 영업문화로 자행되어 온 회사 족적을 내세워 상대를 그런 시각으로 몰면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11.24)

5분 자유발언 : 남평우 의원 (새누리당, 인제군 선거구)

발언요지 : 설악산 권역 4개 시.군(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공동번영을 위하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내린 인제, 인제 출신 새누리당 남평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 자랑인 설악산의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양양군을 비롯한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등 설악산 주변 4개 시·군은 설악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인제군의 용대지구와 백담사 간의 케이블카 설치, 속초시의 모노레일사업 추진 등 설악산관광사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각 시·군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각자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있어 힘의 분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강원도 집행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양양군을 주요 추진 자치단체로 지원하고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협력에 4개 시·군이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설악산관광지구의 활성화는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외국관광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게 강원도의 청정자연환경 및 특산품을 홍보하여 국제적 관광명소로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펴보겠다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지, 주변 권역의 공동노력이 합치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설악권 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방안이 모색될 때만이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4개 시·군 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공동의 결실을 맺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생발전방안으로 나온 안들을 보면 설악권 4개 시·군의 홍보관 설치·운영 및 관광 패키지화사업 추진, 4개 시·군의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 대한 무료탑승 및 지역주민 50% 할인혜택 등 대단히 제한적인 방안만이 제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색케이블카는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관광소득을 증대시키고 발생한 수익을 연계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가치와 효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에 따른 총생산 유발효과는 932억 원으로 추정되며 강원도 내 유발효과는 576억 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효과들이 설악권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문화적 혜택과 사회복지를 증대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되어야 함은 물론 오색케이블카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제군의 백담사 케이블카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속초시의 모노레일사업, 설악동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사업 활성화 정책도 수립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대표적인 규제완화 및 설악관광정책으로 뽑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 이전에 시범운행을 실시함으로써 침체된 산업관광을 되살리고 장기적으로는 오색집단시설지구를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비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악권 4개 시·군이 설악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조해 나가야 하며 강원도 집행부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설악권 관광 활성화에 나서야 합니다.

오색케이블카야말로 설악권은 물론 강원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명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를 포함한 강원도민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12.16)

5분 자유발언 : 진기엽 의원 (새누리당, 횡성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누리과정 예산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을 위한 예산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정례회 회기 운영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통해서 누리과정을 언급하셨습니다.
일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갖은 궤변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감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로 폐회되는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저를 포함한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적 논쟁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설득과 질타, 밤을 꼬박 지새우며 해법을 제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삼자회동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끝내 아이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진보교육감으로 14개 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반대를 주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국가공약사업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등등 갖은 이유를 들어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법에 명시된 명백한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자체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권을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강원도교육청 예산 불용액은 2년 평균 643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교육청 예산의 불용액만 따져도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도의회의 마지막 권고까지 무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슈화를 통해 본인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함은 아니십니까?

법적·정치적 논쟁과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육료 29만 원,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곧 어린이집 재원생 수 감소와 보육교직원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법적 의무사항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제도도 바뀌는 등 짧은 기간에 보육환경이 크게 변해 왔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태를 진심으로 걱정해 보셨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4만 여 명의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전적 문제로 어린이집도 못 보내는 부모님들 누리과정으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9,000여 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 교육감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4만 여 명의 아이들과 그 학부모, 9,000여 명의 보육교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정치논리로만 바라보고 본인의 정치활동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당하는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께서 보편적 복지로 주장하시는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진정으로 추구하신다면 누리과정부터 시행하십시오.

최초 출발점이 평등하지 않다면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강원도 교육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우리 학부모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으시다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시행하십시오.

우리 도민들은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지방비는 교부세에 의존하며 국비 또한 세원만 달리할 뿐 우리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정치적 논쟁, 제발 그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료 29만 원에 잠 못 주무시는 학부모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밥도 중요하지만 교육감께서 주창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시급한 때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최선책을 위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12.16)

5분 자유발언 : 구자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길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유산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경제, 문화, 환경, 평화라는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올 3월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서 4대 목표 가운데 무엇보다 평화올림픽 구현을 주장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그중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남과 북이 공유한다면 세계의 이목은 집중될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대치지역인 강원도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올림픽이 열리는 날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경색 국면마다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 왔던 강원도가 평화올림픽을 통해 남과 북의 신뢰와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면 이보다 더 큰 자산과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IOC가 어젠다2020의 개혁안을 내놓기까지 고민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 흥행요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테스트이벤트와 다음 해에 올림픽이 열릴 때 선수단과 관광객,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남과 북을 왕래한다면 남북의 정치적 해빙기는 반드시 도래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안고 있는 분쟁지역으로서의 분위기를 반드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이벤트인 동시에 평화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민족통일을 위한 디딤돌 마련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경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회이미지 상승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는 디엠제트를 활용해 접경지역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극의 역사적 현장으로 각인되어 온 디엠제트가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상징,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속초 지역의 갈증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활성화의 몫은 강원도민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꿈은 꾸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모든 현실은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꿈꾸고 상상해 봅시다.
공동응원단을 구성하든 설상종목의 연습경기장으로 지정하든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면 충분합니다.
동계특위 박현창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남북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 구현 계획은 정말 가치 있는 시도입니다.
옳은 결정에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반드시 성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도의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전환과 통일을 선도함으로써 얻는 정치·경제적인 최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올림픽 실현에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도 필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뉴허라이즌스(New Horizons), 즉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평창동계올림픽 부분에 할애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폐막 후 강원도와 개최 시·군에 남겨질 유산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내 분산개최에 대한 주장은 지금 상황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도청 앞에서 삭발투쟁도 해 봤습니다.

논리적인 대안도 제시해 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린 뒤 강원도가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단 한 장 남았습니다.

평화올림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오늘로 786일 남았습니다.

또다시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최문순 지사님의 적극적인 추진 표명과 의미 있는 결단을 간곡히 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12.16)

5분 자유발언 : 김용래 의원 (새누리당, 강릉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도립공원 전면해제와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제일 강릉, 솔향의 도시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안일한 행정조치로 도립공원 규제에 묶여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은 지난 '82년과 '79년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각각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기리라는 큰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허무맹랑하게도 당초 지정 목적과는 다르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격히 재산권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일례로 경포도립공원의 경우 도립공원 지정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근진·순긋해변 등 취락지역도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여 신·증축은 물론 건축물의 대수선 행위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의 70% 정도가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고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인 도시화와 산불로 식생이 많이 파괴되어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거의 상실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더욱이 도립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인근 지역에 대한 차별 등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갈등의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18년 우리 강원도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투자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지난 2014년 도립공원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의 해제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강릉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도 관계자의 도립공원 해제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23일 강원도도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여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 시·군에 알아본 결과 자연공원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 지난 11월 초 폐지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도립공원의 지정 관리권자는 강원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폐지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문순 지사께 도립공원 관련 규제완화에 대하여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립공원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도립공원 해제권도 광역단체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부에 도립공원 해제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되어도 해제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없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도립공원 해제 의지가 없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사께서 환경부에 강원도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도립공원 해제 이후에도 낙후된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 지역 내 기반시설 투자와 민자 유치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이번 기회가 지난 30년간 차별받고 낙후된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 해제의 골든타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 해제를 위해서 도에서 큰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하여 해당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도립공원이 해제될 때까지 전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도립공원 해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12.16)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도의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당부드리며 올리는 제언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얌전했던 예년들에 비해 사춘기 소녀마냥 올해 갑자기 통통 튀며 떠올라 사업마다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땅의 전쟁, 즉 도의 공유재산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벌였던 팽팽한 견해차였던 것 같습니다.

포문은 연초 구 종축장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혁신도시 바로 앞 6만 1,674㎡의 공유재산에 평당 72만 2,000원 정도인 133억 2,451만 9,000원의 감정가액을 산정해 와 매각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며 시작된 이 불씨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었습니다.

고액의 드라마 제작비를 지원하고 부지를 저가로 임대해 촬영하기로 했던 원계획을 뒤집고 향후 활용방안과 가치가 무궁무진한 우리 미래의 땅을 어처구니없는 가격에 넘기려 하기에 강원도민, 원주시민으로서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자며 뜻을 모았던 원주권 도의원들은 개전 초반 오해와 왜곡, 매도에서 비롯된 집중 포화에도 불구하고 서로 팔짱을 끼고 최전선에서 맞섰고 끝끝내 막아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돌아보아도 참으로 잘한 일이고 당장 눈앞의 막연한 두려움에 기인한 비겁한 외면보다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우리 9대 강원도의회의 이런 힘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한류관광지는 한옥 몇 채 세운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스타가 지금 있는 곳이기에 팬들이 오지 그들이 잠시 촬영했던 장소가 관광지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대는 서울에서 온 미남·미녀의 미소와 환상에 집문서를 내주고

결혼을 기대하는 시골 처녀·총각의 순진한 순애보보다 더 측은해 보입니다.
YG나 SM처럼 떼로 팬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들이 소속되어 상시로 출입하는 기획사의 본사 이전도 아니고 평소 관리자 개념 몇 분만 상주해 있을 외주제작사의 본사 이전이기에 더더욱 매각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 지난 얘기이고 그때는 도의상 일부러 말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을 따로 찾아온 제작사 관계자가 솔직히 땅으로 이득도 보고 드라마도 열심히 찍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대놓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한 개인의 것도, 집행부의 것도, 의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155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땅의 실소유주이시고 도백과 집행부, 의회는 일정기간 땅 관리를 명받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관계자 스스로 땅 이득도 보고 싶다고 실토한 우리의 미래 땅이 주인인 우리의 실리와 이익이 아닌 개인적 친분과 사정으로 외투기업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어갈 뻔했는데 이와 관련되었던 모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공직자를 달리 이르는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시듯이 방영 중인 드라마로 인해 어느 한 촬영지도 관광지화된 곳이 없고 앞으로 생길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남이섬처럼 천혜의 환경과 다시 찾아봄직한 인프라가 없다면 단지 옛집 몇 채로 사람들이 찾고 또 찾고 하는 장소가 될 리는 만무합니다.
참 다행은 의회가 포화를 끝끝내 견디고 막아냈기에 소방서 출동사이렌 소리로 촬영에 수시로 지장을 받았을 세트장 주변에 빚을 내어 상가를 차렸다가 손해를 봤을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지 맞교환 등 내내 바람 잘날 없던 땅의 전쟁은 금번 회기 경자청 옥계지구 부지 매입으로 확전되었으나 의회는 확고한 논리로 또 한번 무고한 공급을 막아냈습니다.
매입 건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던 “설령 안 팔려도 땅은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답변에는 할 말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144억 3,0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450억 원을 투자해 개발 후 안 팔려도 땅은 남지 않는가와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4억 5,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후 안 팔려도 아파트는 어차피 우리 것 아닌가라는 말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변여건 변화, 즉 재산상 수익기대를 할 요소가 없어 안 팔리던 아파트가 리

모델링한다고 해서 팔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거의 힘들고 주변시세에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얹어 인정받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올해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번번이 부딪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단독 혹은 극소수 판단으로 이루어진 정책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나름의 뜻이 있었다 해도 개인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훨씬 정확하고 미처 개인은 생각하지 못했을 점들을 당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소수의 뜻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단순 땅 관리자로서 맡은 역할을 착각하고 맡겨준 땅 주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도의 직접 공유재산은 아니지만 출자·출연기관 소유재산과 관련해 참하나GW 사무실과 추진 중인 사업들, 알펜시아 내 시내면세점 추진 등 심사숙고해 봐야 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잉여부지 맞교환 등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강원화폐 발행 중단 및 선회처럼 단독 혹은 극소수만의 정책결정을 멈추고 모든 공직자께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보장드린 후 이제라도 다수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개인이 아닌 다수의 조율이 담긴 정책결정을 내린다면 땅의 전쟁은 땅의 제전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땅과 관련해 포성이 아닌 축제의 합창이 강원도를 가득 메우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강원도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12.16)

5분 자유발언 : 장석삼 의원 (새누리당, 양양군 선거구)

발언요지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국비 미확보 사태와 관련하여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장석삼 의원입니다.
먼저 올 2015년도를 마감하는 의정활동에 마지막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 줄기차게 달려오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그간 수고하셨지만 저는 오늘 쓴소리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일 새벽에 정부의 내년도 당초예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와 도민들이 요구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인 국비 102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머릿속은 백지상태가 되었으며 도민들과 양양군민들이 함께했던 지난 환경부의 그 어려운 승인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문순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자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자체의 단순한 수익형 사업이 아니라 영동권은 물론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선진국형 산악관광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를 실질적인 국제관광일번지로 부상시키는 규제개혁의 모범적인 롤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 정부와 국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피눈물로 일궈낸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해서 호락호락 국비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집행부의 무능력에 도민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괴감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오색케이블카사업의 국비예산 미반영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에 기재부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일사천리로 국비예산을 반영해 주리라고는 초등학생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기력한 대응자세가 다 된 밥에 재 뿌린 격이고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조건부 승인 후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속적인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기재부가 손쉽게 예산을 확정해 주겠느냐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출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를 향한 잘못된 대응전략이 작금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초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심의에 앞서 뭐라고 힌트를 주었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산림면적이 가장 넓은 우리 강원도에 있어 산악지역의 규제완화와 산악관광 활성화의 단초로서 제대로 추진하라는 암묵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설득력 있고 당위성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개발하여 기재부를 설득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백두대간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던 것을 명분으로 정부를 설득해 냈어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단순히 양양군과 강원도의 수익형 사업이 아니라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관광경기를 부양하고 특히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라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완성해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에 접목시켜 어떻게 해서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번 오색케이블카사업의 국비 미반영을 비롯해 강원도 전체의 부실한 국비확보의 책임은 전적으로 잘못된 대응전략과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집행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로 케이블카로 유명한 오스트리아는 케이블카를 연계한 사계절 체험관광과 숙박, 식당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것을 운영해 연간 110억 유로, 즉 한화로 14조 7,700억 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6%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첫 삽도 뜨기 전에 장애물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산악과 해변을 기반으로 국제관광일번지를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우리 강원도는 춘천 레고랜드, 설악권 오색케이블카, 평창・강릉・정선을 잇는 올림픽지구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이 같은 역사를 반드시 일구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뉴스에 명랑해역 988m를 잇는 해양케이블카사업을 하겠다는 발표 등 앞으로 16개 지역에서 케이블카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 국비만 3,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에 우리 도도 마냥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효과를 내기 전에 지금이라도 백두대간보호법과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관광인프라를 전제로 한 지난 국회 상임위에서 당초에 제시한 지특예산을 100억 이상 세우고 나머지는 국비로 전환하는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다시 예산전쟁에 임한다는 엄중한 각오로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예산확보와 대응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기존의 설악산오색삭도추진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반드시 도민들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1.27)

5분 자유발언 : 심영섭 의원 (무소속, 강릉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 진정한 새해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은 새로운 희망과 원대한 포부를 품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년실업, 가계부채, 저출산, 선거구 문제, 누리과정 예산,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최근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까지 모든 것이 위기 투성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의 신년사들을 찾아 읽어 보았습니다.
역시나 한결같이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의 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강릉시를 비롯한 동해·삼척 등 동해안 지역의 인구유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2005년 이후 10년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큰 기대를 안고 2007년 처음으로 신청한 후 2013년 2월, 마침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역시 위기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유치 과정, 사업의 추진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일일이 굳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변경안을 심의하시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막연하고 참담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또한 옥계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성공을 누구보다 염원하고 있습니다만 감히 여러분 앞에 성공에 대한 확신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슴 아프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지난 과오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패가 두렵다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철강으로 부흥을 이룬 이 나라가 이제는 비철금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도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확실하고 막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토대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철금속 소재, 부품 산업은 분명히 차별화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옥계지구를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려던 당초의 취지대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개발, 후분양 방식에 직접 개발하는 선제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달 29일에 SM그룹 산하 동양생명과학은 옥계면에서 금진온천관광리조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2017년이면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개최라는 절대적인 호재가 있는 만큼 새로운 다짐으로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에 전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도 함께 동반하듯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1.27)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미시령터널 법인세 재정부담 절감에 대하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최대현안 중 하나인 미시령터널의 사업재구조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자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미시터널 시행법인 측과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분을 25%에서 3% 인하한 22%로 하향 조정하여 2036년까지 재정지원금 14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시령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동서고속도로 개통 전인 2016년에는 29억 원을 보전해야 하지만 개통 후인 2017년에는 23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2036년까지 총 7,300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낸 소위 판정위원회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민간투자사업, 특히 미시령터널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와 같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사님께서는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시령터널 사업실시 협약을 보면 불변가 기준으로 법인세 160억 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물가상승률 2%를 반영한 경상 가격으로-현실가격입니다.-환산해 보면 1,820억 원을 30년간 우리 강원도에서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자회사인 미시령터널주식회사의 높은 이자로 전액 대출해 주고 적게는 6%, 많게는 65%까지 연이율로 가져와서 연120억이라는 막대한 이자로 다 회수해 갑니다.

지금 이자 지급액은 법인세 계산을 할 경우 손비처리 항목으로 인정되어서 본 사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이자지급으로 인해서 운영기간 종료 시까지 30년간 법인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10년째인데 법인세를 단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누적적자액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아서 법인세를 지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30년간 1,820억 원이라는 법인세를 같이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일들이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법인세에 대해서 세율인하를 위해서 재정지원 부담금을 줄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요금산정을 위한 현금 흐름표'에서 법인세를 아예 삭제해 버리고 만일 사후적으로 법인세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만 법인세 금액을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사업재구조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민자사업에서는 법인세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 민자사업에서 재구조화가 이루어졌고 이 중 7개 사업에서는 법인세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의 경우를 보면 현재 총 민간사업비 96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운영비 및 법인세를 합하면 1,746억 원으로 통행요금이 현재 3,300원입니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법인세를 사전에 없앨 경우에는 운영비가 686억 원으로 줄어들고 요금 또한 2,900원으로 약 12.5%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6년까지 절약되는 통행료 수입은 약 91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타 지자체의 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미시령터널의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가 내년이면 개통됩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 터널의 수요는 약 83%가 줄어든다고 용역에 나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 잃고 소를 찾으러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법인세에 대해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법인세를 제거해서 요금 인하는 물론이고 획기적인 재정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1.27)

5분 자유발언 :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발언요지 : 강원도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가 처해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강원도 역시 전국에 비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는 여덟 번째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16.9%로 전국평균 12.7%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고령인구 비율 역시 빠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지만 강원도에선 아직까지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고,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면서 12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08년 1.19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1.21명으로 고작 0.02명 올라갔을 뿐입니다.
여전히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그동안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123조 원을 투자한 정부 정책은 선택과 집중 없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실패를 거듭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실패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적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상황이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 집권적이고 전국의 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강원도의 상황에 맞는 눈높이 대책이 마련돼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저출산 대책 기금지원 공모사업과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과 고교 수업료 지원 등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실제 더 체감되는 강원도만의 특화된 정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혹시 8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전라남도입니다.

전남은 재정자립도 14.8%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고령화 실태를 보면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비교하면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위인 전남 해남군의 경우는 출산율이 2.43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0.98명이니까 비교가 되겠지요.

2위는 영암군으로 2.0명, 3위는 함평군으로 1.95명, 1위에서 3위까지 전남이 모두 석권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1위 요인을 보면 다양한 출산 친화정책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축하하고 동참하는 분위기의 결과입니다.

전국 최초로 출산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승인한 공공 산후조리원 1호점을 운영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산모들에게 원정출산의 어려움과 분만 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농어촌 지역이 많아 노인복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남은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통오지 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목욕탕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하는 등 지역의 수요에 맞는 노인 복지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상황을 장황하게 얘기한 것은 바로 강원도의 핵심 정책 즉, 정책 의제를 저출산・고령화 극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야 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전담부서의 신설입니다.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강원도만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복지 정책이자 경제정책입니다.

단순히 소모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든가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증가 등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골든타임이 지나가지 않도록 전담부서 신설과 우리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하루빨리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1.27)

5분 자유발언 : 박현창 의원 (새누리당, 평창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단 조직 보강 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만남의 도시 HAPPY700 평창군 출신 박현창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남한 전체 면적의 16.7%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아름다운 산과 강, 푸른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맑은 공기와 조용한 숲을 이루고 있어서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찾고 싶어 하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원주~강릉 간 철도 건설, 원주~여주 간 전철 연결, 양양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의 지역개발 호재와 더불어 열정적이신 최문순 지사님의 전방위적 기업유치 활동으로 국내외 민간투자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00억 원부터 6,000억 원까지 투자계획으로 25개소의 관광시설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그중 건설 중인 7개 사업을 제외하면 18개 사업은 지정절차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 관련 사업 이외에도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에너지 창출사업으로 풍력단지 설치, 태양광 개발, 소수력 발전과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대학 유치, 공장 설립 등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수많은 민간사업들이 구상되어서 어렵게, 정말 힘들게 추진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들이 까다로워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사업들이 우리 도내에 투자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원만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인 인허가 시스템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도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실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고 큰 민간투자사업, 그중에도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십 건의 인허가와 관련 부서의 협의가 절대 필요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도시계획변경, 상하수도, 문화재 지표조사 등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전문 용역회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노하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시간만 가고 되는 것은 없고 강원도에서는 사업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20일 자 건설경제신문을 보면 지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개발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인허가를 미루거나 거부해도 막을 장치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PF 이자 등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10월 21일 강원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가 주관한 기업 대표자 토론회에서 어떤 기업 대표는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정말 작은 마을기업 하나 만드는 데도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3년 소수력발전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12년 동안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작년에 최종 반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12월 29일 자 중앙지와 지방지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리 도 영월군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발표되었습니다.
각종 규제를 찾아내서 개선하고 인허가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치, 밀착 지원과 수시 전화를 통한 전담마크제를 운영, 기업 유치를 통한 현지주민 채용을 늘림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시범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지사님 직속으로 4급을 단장으로 한 4명의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토목, 건축, 환경, 산림, 농지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 파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레고랜드 건설 등 기술인력 운영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하고

활발한 추진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인허가 지원단에 보강 배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허가 지원단에서는 관광시설 분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고자 하는 작고 큰 모든 투자사업의 복합적인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강원도 행정이 어렵고 까다롭다는 불신을 허무는 행정 신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지원단에 배치하는 공무원은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듯이 인허가 지원에 타고난 소질이 있고 긍정적이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으며 차기 자체 승진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직원으로 선발해야 하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인허가를 사업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인허가 업무는 행정 최고의 서비스이며 지사님의 얼굴입니다.

인허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직원 배치로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1.27)

5분 자유발언 : 이종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춘천)

발언요지 : 2016년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이종주 의원입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 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초선의원으로 도의회에 첫발을 내딛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마음가짐,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때 가졌던 그 마음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제9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하던 2014년 7월 3일, 저는 도의회에 들어서던 첫날의 벅참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강원도 발전과 도약의 역사에 디딤돌 하나 놓을 수 있다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난 1년 7개월간 강원도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현안에 따라서는 이견도 있었고 대립도 있었지만 본 의원은 언제나 현안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연·혈연·학연·정파를 초월한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민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제9대 강원도의회가 의정활동 후반부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한중 FTA,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특히 올해는 사실상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당장 다음 주면 G-2년 테스트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조직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가 아닌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강원도, 조직위가 삼위일체가 되어 테스트이벤트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조직 간 협력은 잘되고 계십니까?

문체부가 내세운 체육분야 4대 중점과제 중 하나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과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조직 신설 의미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것인데 강원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은 당장 이번 주부터 향후 3개월간 동계올림픽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도 모자란 테스트이벤트 준비기간에 말이죠.

평창동계올림픽은 누구의 올림픽입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올림픽인가요, 아니면 강원도민의 올림픽입니까?

아니면 IOC의 올림픽인가요? 대한민국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모두의 올림픽 축제, 동계올림픽을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정부 조직이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직위는 좀 더 힘을 내주십시오.

올림픽 개최지에서 대한민국 강원도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개최지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직위는 대한민국 강원도와 IOC 사이의 조정과 중계자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IOC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오해와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개최지가 올림픽 홍보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간에 떠도는 국제겨울운동회가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직위가 앞장서서 조정하고 중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 문화올림픽으로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 문화 관광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다양한 사례 연구와 투자처를 찾아 시설 사후활용 방안을 찾는 일, 적극적·공격적 홍보를 통해 올림픽 붐이 일도록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 등 할일이 태산입니다.

강원도의회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구호가 하나된 열정입니다.

지연·혈연·학연·정파를 초월해서 단합할 때 정부도, 언론도, 여론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일도, 강원도는 하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1.27)

5분 자유발언 : 유정선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발언요지 : 강원도의 교육현안 전반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강원도의회 제252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와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붉은원숭이의 상서로운 기운을 듬뿍 받아서 우리 강원도가 더욱 발전하고 강원도민들의 행복지수가 최고 상한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의 인구 변동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도민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전체 인구는 수년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춘천·원주·강릉의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1월 7일 춘천을 비롯한 7개의 시지역 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 중학교 입학 추첨배정을 실시했고 이들 지역 9,679명, 남학생 5,085명, 여학생 4,594명이 나이스 기반 중학교 입학배정 프로그램으로 추첨 배정을 받았습니다.
원서를 접수한 희망학교를 기준으로 1지망부터 최대 6지망까지 추첨으로 배정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일은 부모로서 매우 설레고 대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쁘고 설레는 마음보다는 가슴을 졸이고 걱정을 해야만 하는 강원도의 교육현실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올림픽을 앞두고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학교 설립이 미루어지면서 강릉지역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월 강릉시 유천택지 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학부모는 유천택지 내 초등학교 설립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아이의 학교 문제로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로 아파트를 내놨다고 합니다.

유천택지에 설립되는 아파트 세대 수는 4,087세대로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전망입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은 새로운 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강북지역의 중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켜 열악한 교육여건을 해결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진행되고 있는 원주시는 물론 춘천시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는 등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인구수 증가와 전세난, 주택부족 등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계동에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구 4만 5,000명의 퇴계동과 4만 명에 달하는 석사동, 인구 9만 명 규모의 이 두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는 단 두 곳뿐입니다.

현재 석사·퇴계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추세이며 3,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최소 1만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될 전망이어서 중학교 수의 절대 부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의 추첨 결과로 춘천 석사·퇴계동에 거주하는 중학교 진학대상자의 불과 31.8%인 374명만이 주거지역 소재 중학교에 추첨되었으며, 61.7%의 725명의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는 단순히 어린 학생들의 불편만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의 교통체증, 교통비 지출 증가로 가계부담 등 등하교 시 안전문제와 학업시간 감소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보배이며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는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꿈과 희망을 품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팽창과 함께 교육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논리와 행정논리만으로는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교육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용지의 개발과 확보를 위하여 지역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의 중학교 적정규모 육성 및 합리적인 배치를 위한 연구와 인구변동 및 학생수용 여건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강원도 교육행정의 무사안일과 탁상공론에 어린 학생들이 어려움에 내몰리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강원도 학부모들은 지금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백년을 세우는 마음으로 강원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뼈를 깎는 반성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1.27)

5분 자유발언 : 최명서 의원 (새누리당, 영월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남부권 폐광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월 출신 최명서 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강원도가 좀 더 나아지고 우리 도민들께서 좀 더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날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올림픽 이후의 도 발전 전략에 대해서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구체적 발전계획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폐광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기에는 그간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먼저 앞서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의 문제는 올림픽 이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은 우리 도의 미루어진 현안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20년, 그간 우리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으로 시작해 지금도 동계올림픽입니다.
대회 유치와 대회 준비를 위해 들어간 그 많은 돈과 인력, 시간들은 차치하고라도 언제 해결될지도 모를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올림픽이 끝나고 남겨질 시설의 사후 관리, 지금 이 시간 과연 동계올림픽 비개최지 양보와 희생 위에 준비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분명하게 답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와 연계하여 2020년까지 도 전역의 교통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진흥 등 지역발전 사업에 총사업비 30조 5,294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창한 계획은 2020년까지 강원도가 일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강원도가 얻은 것이 있다면 원주~강릉 간 철도 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은 춘천~속초 간 철도 개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적 분석 때문에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강원도는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서 도로의 4차선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2차선 선형개량도 강원도이기 때문에 B/C 결과와 관계없이 필요지역을 포함시켜 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강원도는 더 이상 미래의 땅이 아니라 버려진 땅이 될 것입니다.

인구는 많지 않으면서 면적은 넓고 산간으로 형성된 지역의 특성상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현실을 극복할 새로운 전략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특히 낙후된 강원남부권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지 않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강원도는 폐광지역에 대해 폐특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은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10년 연장되는 그 첫 해에 와 있습니다.

1995년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얻어진 폐특법은 아직도 폐광지역의 정주 여건을 충분히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4.8%인 반면 강원도 평균은 22.1%, 폐광지역 4개 시·군 평균은 18.5%,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95.7%, 강원도 88.6%, 폐광지역 84.7%,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92.1%, 강원도 85%, 폐광지역 78.4%의 지표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강원랜드를 통해 거두어들인 세수 등을 가져갈 줄만 알았지 폐광지역의 SOC 확충 등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폐특법이 시행되던 초기에 강원도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던 수많은 민간투자사업들이 그 유치의 실효성을 의심받을 때 폐광지역의 공무원들은 38번 국도가 4차선이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천~삼척 간으로 이어지는 38번 국도 4차선화는 20년이 넘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지역은 고속도로를 넘어 고속철도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의 유입과 지역의 입지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입니다.

강원도가 올림픽에 매달려 다른 현안들을 방치하는 사이 지난해 강원남부권 4개 시·군과 충북 북부지역 시·군들이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 중 미착수 구간인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의 조기착공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폐광지역인 영월·정선·태백지역을 방문하실 때 어느 도로를 이용하십니까?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앙고속도로 제천 구간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폐광지역이 시작되는 강원남부 벨트의 입새에 영월은 제천과 인접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제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영월에서 제천을 거치지 않고 원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88번 국가 지원 지방도입니다.

시멘트 수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확·포장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적 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까지 공유하신 지사께서 이런 현상을 보고만 계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영월~신림IC 구간, 88번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의 조기착공을 위해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폐광지역 강원남부권의 경제회생은 이 두 가지 SOC 확충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2. 4)

5분 자유발언 : 김금분 의원 (새누리당, 춘천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로맨틱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금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입춘일을 맞아서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문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학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문학관 후보지를 공모해서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총 481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인데다가 한국의 모든 문학자산을 총괄하는 구심점이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 더불어 우리나라 문학유산의 핵심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문학관 유치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출판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파주시를 비롯해서 서울 은평구, 충북 청주, 인천 등 저마다 해당 지역이 대한민국 문학의 요람이라고 강조하며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릉시를 시작으로 춘천에서도 본격적으로 유치 준비를 하고 있고 원주는 총선 예비후보자가 공약으로 문학관 유치를 내걸었습니다.
강원도가 지니고 있는 문학적 자산은 전국 어느 지역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1930년대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인 춘천의 김유정 작가를 비롯하여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목마와 숙녀의 시인 박인환,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 등 이외에도 기라성 같은 문학인들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이렇게 문학적·인적 자원을 보더라도 유치전에서 충분히 승산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되 지금처럼 각 지자체가 각개 전투를 하듯 뛰어들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의지를 가지고 선의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문학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면 강원문학의 자존심을 걸고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제대로, 그리고 당위성을 내세워서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막강한 서포터즈가 되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문학관 유치전을 보면서 자꾸 강원도립미술관 건립 당시의 상흔이 떠오르면서 씁쓸함과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06년 도립미술관 건립계획 발표 때부터 현재까지 강원도는 미온적이었으며 어정쩡한 행정력으로 전 도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도립미술관 유치에 뛰어든 시·군은 물론 지역예술인들 간의 과잉경쟁과 불신, 갈등만 조장한 채 미술관 건립은 요원해졌습니다.

도내를 대상으로 하는 도립미술관도 이러한데 전국을 대상으로 경쟁해야 할 국립한국문학관은 어떻겠습니까?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주문합니다.

첫째, 문학관 설립이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당위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둘째, 유치전에 뛰어든 도내 시·군과 장차 신청할 시·군은 어디인지, 셋째, 타 시도의 동향은 어떠하며 유치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인지, 또한 중앙부처의 공모일정이나 평가방침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모두를 발 빠르게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치고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광역적 차원의 논리개발, 지자체 간의 이해와 양보 내지는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자체의 일이라고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어느 시·군이든 간에 이번에는 반드시 강원도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강원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력히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2. 4)

5분 자유발언 : 구자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현원섭 회장님, 조능식 회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 회장님들, 진심으로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현안들이 올 한 해는 모두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졸업시즌입니다.

"청년 여러분! 희망을 향해 함께 달려 봅시다.", 사회로 나서는 청춘들에게 예전 같으면 쉽게 건넸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불안감,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청년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헬조선', '지옥불반도'라고 부르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의 고민을 던지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청장년 일자리 정규직 209개를 비롯해 6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사님 또한 신년연설을 통해 명확한 정책과 이를 관철할 전문성을 갖추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국내·국외의 경제환경을 비추어 보면 강원도 일자리 만들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원도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도내 94.1%가 5인 이하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취업시장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도는 사활을 걸고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경쟁력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일자리 정책은 모든 지자체에서 경쟁하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또 다른 심각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문제점 해결,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해답을 강원혁신도시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원주에 소재한 강원혁신도시에는 13개 공공기관과 5,470명의 인원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동안 도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에서는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지역 출신 인재채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채용의 35%가 지역 출신 인재로 충원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여기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도내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신 강원경제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내 산업구조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업체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본 의원은 강원혁신도시를 마중물로 삼는 창조적인 경제지도의 완성과 신성장 동력에 걸맞은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칭 강원도일자리창출지원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와 시·군 산하의 일자리기관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강원혁신도시와 연계한 도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강원혁신도시의 기관별 특성에 맞게 도내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도내 일자리에 대한 모든 논의와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4명의 공직자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일자리창출지원센터로는 다양하고 다각화되고 있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파급효과는 우리 도민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원경제, 청년실업 문제해소를 위해 강원혁신도시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4시간, 365일 강원도형 취업지도를 만드는 데 몰입할 전문가집단 구성에 대한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강원도 청장년들 손에 들려있는 취업의 흙수저를 땅에 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2. 4)

5분 자유발언 : 원강수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5선거구)

발언요지 : 원주여고 부지교환과 관련하여

150만 강원도민의 이익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강원도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강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밥 한번 먹자.”, “커피 한잔 하자.” 이런 생활 속 일상의 약속은 150만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사님이 한 약속, 즉 공약과는 중요성과 책임성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주에 오셔서 원주시민들에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드림랜드에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받자마자 공약의 중요한 요소인 장소가 슬그머니 변경됩니다.

치악산 드림랜드가 아니라 원주시 혁신도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종축장 부지를 드라마세트장 업자에게 임대가 아닌 매각 방식으로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추진합니다.

사전에 설명이나 해명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원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초면 주민들이 당장 들고 일어났습니다.

약속대로 소초면에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종축장 부지 인근의 일부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자기 마을에 드라마세트장이 와야 된다.
의견이 다른 주민들이 밤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서로 플래카드를 뜯어내고 찢어내는 불상사가 이어졌습니다.
주민 간에, 지역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치유하고 봉합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공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옛 원주여고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문화센터 건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항이에요.
선거가 끝나면 공약사업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기본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어떤 돈을 끌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 잡혔습니다.
사업의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원주시민들이, 지금 저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분들이 수없이 재촉했습니다, 촉구했습니다, 사업을 이행하라고.
지사님께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일관하셨어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면 왜 지연되는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옛 원주여고 부지는 도심 속에 방치된 채 오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3년 가까이 방치되었습니다.
어른 키 만한 풀이 자라서 낮에도 들어가기가 민망합니다.
밤에는 더합니다.
그 큰 건물들이 빈 건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우범지대가 될까봐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원주시장님께서 재원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여고 부지 주인인 강원도교육청, 종축장 부지 주인인 강원도, 너희들끼리 부지를 맞교환을 하든 재원대책을 마련해 봐라.

일부에서는 제3자가 남의 땅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원주시장님의 심정을 십분 이해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한 지사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재원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34만 원주시민들이 지사님의 공약을 보고 당선시켜 드렸을 겁니다.

이제는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뒷전으로 물러나 계시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추진일정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주시장께서 제시하신 부지 맞교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심사를 맡고 계신 도의원들에게 직접 나서서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행정의 신뢰도가 회복됩니다.

34만 원주시민들이 강원도에 더 이상 우롱당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도록 애써 주십시오.

약속은 지켜야만 가치가 있고 존중받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그냥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사님이 우리 34만 원주시민들에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사님께서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주여고 문화센터 건립 문제를 잡음 없이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실추된 강원도의 행정신뢰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격정에 쌓인 우리 원주시민들을 다독거려 주시기를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2. 4)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미시령터널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시간관계상 본취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인 미시령터널에 대해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83%가 줄어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행량의 17%밖에 통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MRG를 연평균 25억 지급하는데 내후년부터는 약 265억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MRG를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찾지 않아서 못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문순 지사님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간곡히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약 30분 이상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로 다니지 않을 국민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통행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2036년까지 20년 동안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것이 5,300억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5,300억을 추가로 주어야 되는데 이대로 놔두어야 되느냐, 이게 목전에 와 있습니다.
벌써 5년 전부터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제 내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해결의 대안책을 내놓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법이 있습니다.

제46조와 제47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우리 강원도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처분이 포함됨을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이게 바로 공익처분이라고 합니다, 공익처분!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이니까.

그야말로 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민간투자법 제47조는 그 성질상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시협약에 따르면 민간투자법 제47조에서 정한 처분을 사업시설 또는 사업시행 건에 대한 몰수를 주무관청-우리 강원도를 얘기합니다.-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익처분 시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할 금액을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미리 정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서 공익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시협약도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과연 미시령터널에 곧 닥칠 재앙과 같은 그 상황이 이 법에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항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찾아야 됩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의 83%가 줄어든다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에 해당되고 효율적인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 분명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처분을 실행하고 사업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과연 지급금이 얼마냐.
지금 미시령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 965억을 투자하고 총 7,300억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연도별 표를 보면 올해 우리가 귀책사유로 해서 해결하려면 1,910억만 주면 된다는 거죠.
내년 2017년도 말에 하게 되면 1,950억만 주면 되고요.
회계법상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5,300억을 추가로 주어야 되느냐 이거죠.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에 대해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무려 2,200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도표 부탁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경상남도 마창대교는 벌써 공익적 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익률이 80%인데도 경남도지사가 공익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익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당장 테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법률과 회계, 그리고 금융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공익적 처분을 실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을 지사님께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표에서 보셨듯이 전국적으로 9개 사업체가 열심히 공익처분을 해서 많게는 5조 6,000억, 적게는 3,500억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2. 4)

5분 자유발언 : 최성현 의원 (새누리당, 춘천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누리과정에 관한 제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춘천 출신의 최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원 신분이기보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어린이들과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잘못된 교육행정을 태연하게 일삼는 교육감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 157만 강원도민을 대의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민병희 교육감의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아집 때문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도민들께 약속한 발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기시켜 드리면 “만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켜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강원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또한 모두를 위한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만 교육청의 몫이라는 법 취지를 벗어난 논리만을 앞세워 한창 인성교육을 받아야 할 영유아들을 엄동설한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모는 몰지각한 교육감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첫째는 법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둘째는 작년에는 가용재원이 1,80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950억 원밖에 안 되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셋째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지 말자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일관된 입장만 지금까지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비용은 지난해 10월에 제정된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더욱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므로 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호도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정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23일 2016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4조 원 전액을 교부했고 국회도 지난 12월 2일 여야합의를 통해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했는데도 강원도교육감은 도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1개월분도 편성하지 않아 100억 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은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패거리 정치공세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으로 시작하여 2013년 3세·4세까지 확대된 누리과정에 대하여 그동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부터 편성을 거부하여 소위 보육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 3세~5세의 영유아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위배되며 도리어 교육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으로 교육감의 책무이자 나아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십니까?

누리과정예산의 책임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그 피해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 나아가 도민 모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강원도 교육정책을 보면 사년지소계로 전락하였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그래도 최문순 지사께서는 지난 1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중 1월·2월 분 총 소요예산 110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운영비 27억 원을 도비로 우선 집행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앙정부도 책임은 있습니다.

교육감직을 왜 선출직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단을 만듭니까?

최문순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지사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만큼은 본래대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앞장서셔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의 중지를 모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관철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2018년에 교육감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전환하여 교육감의 행태를 막아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교육만이라도 분쟁이 없는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치인인 지사님의 책무임을 인식하여 저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3. 8)

5분 자유발언 : 강청룡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예산절감 방안 및 정치적 소신

안녕하십니까?

강청룡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

저는 오늘 예산절감 방안과 강원도 현안 문제인 누리과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배포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본청 등 29개 시설에 전자경비, 일명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9개 시설 모두 1년 계약 주기로 3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총 1억 4,000여 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659개 시설 중에 단 두 곳만이 계약기간 3년으로 공개경쟁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기타시설물은 1년에서 20년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수의계약방식에 의거하여 4개 업체에 22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비교 견적이라도 받아보았는지요?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행 으레적이고 관례적인 수의계약방식에서 벗어나 시설마다 관리하는 것을 통합 관리를 하든지 시설을 묶어서 계약하든지 공개경쟁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강원도 현안 문제인 누리과정에 대하여 저의 소신을 두서없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초고령·저출산의 시대입니다.

국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인적 자원, 즉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자 자산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0세에서 19세, 다시 말씀드려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는 보육이든 교육이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최소한 누리과정이나 학교 급식이 있는 현장에서의 비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사회 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무릇 정치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작금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국은 차치해 두고라도 강원도정은 어떻습니까?

지사님!

지사님이 강원도민을 편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이 지사님과 도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강원도민을 편하게 해야 함에도 강원도민이 교육감님과 교육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도 강원도민을 편하게 해야 함에도 강원도민이 의회와 의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자성하고 자중합시다.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3. 8)

5분 자유발언 : 김기철 의원 (새누리당, 정선군 제1선거구)

발언요지 : 정선 하이원리조트 및 폐광지역발전특별법 관련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시행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폐광지역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공감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1980년 4월의 사북사태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밥을 얻기 위한 처절한 절규, 피눈물의 호소를 35년이 지난 지금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폐특법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폐특법이 끝나는 2026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폐특법 시행으로 강원랜드가 들어서고 국도가 확장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면 4,424억 원을 투자한 오투리조트가 3,641억 원의 부채를 지고 투자액의 25%에 불과한 1,120억에 매각되는 등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은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고 폐특법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찾아 이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동해~제천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촉구합니다.

현재 폐광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강원랜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카지노를 찾는 고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해~제천 간 고속도로는 양양공항의 대안이 될 것이고 크루즈 여행객의 증가와 이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랜드의 이익금 대부분이 국세로 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며, 관광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국세 성격의 조세가 75%, 지방세는 23%에 불과합니다.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강원랜드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이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불공평은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4 대 6의 비율로 조정해야 하며, 폐광으로 인하여 별다른 세원이 없는 열악한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보 차원에서 관광세 신설을 특별법 속에 필히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도내 정치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앞으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확고하고 강력하고 의식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폐광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강원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폐광지역 자치단체가 개발계획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 강원도는 조정자로서 신속하게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이고 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는 주민의 결집된 큰 힘에 의해 설립된 지역기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 관련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익배분이 적어질 것을 우려한 소액주주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종전에는 강원랜드의 전무, 감사 등이 강원도가 요청한 인사로 임명되어서 강원도의 목소리가 강원랜드 경영에 적극 반영되었으나 최문순 지사님 도정 이후 별로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광기금의 도세 전환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원랜드에는 사내기업유보금, 즉 사업준비금이 무려 2조 원이나 쌓여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강원도는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자립사업에 이 돈이 쓰이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광해관리공단은 매년 600억 원~700억 원의 배당금을 강원랜드로부터 받아갑니다.

전국 폐광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강원도가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수출이 동력인 우리에게 세계 경기의 침체, 국제유가 하락, 불안한 중동 정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저성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안보 불안은 물론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복지비 폭증과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투입으로 재정 확충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여기서 특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강원도정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붕괴와 강원 FC의 방향 실종, 의료원 적자, 레고랜드의 난파, 강원도립대학의 불투명성, 농수산업의 몰락, 기업유치 실패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올림픽을 외치지만 성공올림픽은 올림픽 개최 이후가 핵심입니다.

올림픽 이후 올림픽 효과의 지속 가능성, 시설의 관리문제 등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사님!

세계 속에 강원도를 알리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홍보하시는 모습 감동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전부는 아닙니다.

올림픽 이후 새로운 강원도를 열어가는 동력이 무엇일까?

폐광지역, 강원랜드를 지렛대로 강원랜드의 사내유보금을 경제 자립의 기금화로 활용할 수 있다면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3. 8)

5분 자유발언 :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5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도 의료관광 추진 관련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가 선도산업으로 추진해 왔던 의료관광 시책이 실망스럽게 진행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느끼면서 앞으로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권역별로 신성장 선도산업을 선정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2009년에 재단법인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는 관광분야에서는 비교우위가 있지만 의료 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해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불비한 여건과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강원도만의 전략으로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키워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 면에서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휘부의 관심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2009년 의료관광을 선도산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했던 김진선 도정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를 이어받아 추진해 왔던 현 도정 또한 이 사업은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결국 100% 국비사업에 대한 관성적 추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전 행정력을 기울여도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의료관광산업이

장기간 표류되어 온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잦은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이 자주 바뀌었고, 센터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컨트롤타워 또한 부재했습니다.

도에서는 의료관광지원센터에 사무관인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1년 내외로 파견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부서 또한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에 경제정책과, 2012년 식품의약과, 2014년 경제정책과, 2015년 사회적경제과, 2016년 관광마케팅과로 바뀌었다가 마침내 올 1월에 센터재단마저 해산되었고 그 업무는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설령 의료관광산업과 관련한 여건과 상황이 좋았더라도 집행부의 그간의 추진방식이라면 사업부실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의 시작단계였던 2009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강원도 선도산업 활성화 방안, 의료관광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강원도는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산림, 물, 관광자원, 의료소재 자원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관광분야의 업체는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보고서는 보고서에 그쳤고 이를 토대로 의료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려는 실체적인 노력도,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원도 선도산업인 의료관광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헛된 기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을 노정한 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의료관광사업이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규제 프리존 차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도 전략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도 매우 부족했고 추진목표와 전략도 부재했으며, 세부 프로젝트마저 부실한 의료관광이 겉치레 화장만 하고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의료관광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각각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 시작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도 과거 의료관광사업처럼 한다면 또 다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의료관광사업과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다시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통합이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있는 타 시도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뒤쫓아 가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만의 비교우위를 찾아내 이에 ICT, 건강, 치료, 휴양 등의 가치를 더해 산업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해야만 비로소 강원도 전략산업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잘못된 전철을 되밟지 말고 심기일전해서 의료관광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성공에 열정과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3. 8)

5분 자유발언 : 최성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6선거구)

발언요지 : 원주 의료기기 산업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의료기기의 중심지 원주 출신의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원주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강력하고 절실한 지원과 강원도가 현장중심의 지원과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미용박람회에 원주 공동관을 구성하여 원주의료기기업체가 304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달성하고,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서 105건에 165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독일 전시회 현장에 다녀온 본 의원은 다국적기업들과 힘든 경쟁을 펼치며 고군분투하는 도내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을 깊게 느꼈으며, 이 자리를 빌려 찬사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수출활성화 사업과 기술지원사업, 글로벌사업의 장기적 플랜을 세우고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지역 전략사업 선정, 해외인증 평가기술개발, 유럽 공통인증 밀착지원, 의료기기 수출애로 해소 등 국내 의료기기 중심지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이 세계 판로를 개척하는 구심점 역할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바이오 미래 전략 발표와 함께 미래산업 전략이 대구와 충북에

집중될 경우 원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의료기기산업은 정부의 지원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대구와 오송의 의료기기산업과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원주에도 정부의 절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등에서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고, 이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밝은 미래를 내비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에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발전 가능한 고급인력 및 고급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 의료기기 발전 비전 2025의 최종 목표는 현재 150여 개 기업이 300개의 우량기업으로 증가하고, 수출액도 5,000억에서 1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원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의 전략산업인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지방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아주 큰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초 10억 원으로 계획된 예산이 2016년에는 5억 원으로 감소되었고, 국내 전시회 관련 예산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선택에 의한 적극적 집중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 또한 전략적 차원에 의한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봅니다.

둘째, 의료기기 전략산업을 발전시킬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송과 대구의 첨단의료단지법에 있는 각종 의료법, 의료기기,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에 대한 특례법이 강원도 지역 전략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의 승인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 전략산업인 의료기기산업과 바이오산업의 발전, 그리고 의료관광을 접목시킨 규제완화를 통한 융·복합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의 차세대

생명건강산업인 생태계조성 사업과 지역전략 사업인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 프리존 지정사업이 강원도의 환경과 전략산업의 잠재력을 인정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의료기기 시장은 10개국의 다국적 기업이 60%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의 앞서가는 기술력과 세계 1위라고 자부하는 일본의 의료 이노베이션 5개년 계획을 비교해 보며 세계의료기기 시장의 판도가 신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의료기기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을 참고하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첨단융합 의료기기를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강원도가 전략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Global Smart Healthcare)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재정자립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 강원도 바이오산업과 강원도 혁신도시로 이주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의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산업 분야의 기업유치에도 더 힘을 써야겠지만 유치 후 지역의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주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과 강원도의 현장중심의 현실정책이 조화를 이룬다면 강원도 원주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6. 3.17)

5분 자유발언 : 최성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6선거구)

발언요지 : (구)원주여고부지 활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주의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포일락(季布一諾)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손꼽으라 하면 약속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도민을 위한 정책의 약속,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시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도민에 대한 기본의 도리라 할 것입니다.

실천궁행(實踐躬行),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무한책임의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신의를 지키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원주의 34만 시민들에게 커다란 약속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원주 정지뜰 저류지 조성, 원주 드라마 단지 조성,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 원주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등의 큰 약속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영광스러운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재선의 목표를 이루신 지사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원주시민과의 약속 중에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키셨는지, 얼마나 진행해 오셨는지 34만 시민을 대표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드라마 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한 약속은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의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불신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여 원주시민을 위한 종합문화센터를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은 계획부터가 전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갈등의 분쟁만 키우는 문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주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신 지사님께서는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지를 호소하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혹시 우선은 당선이 목표이니 정책부터 발표하고자 하신 것이라면 당선 후 곧바로 공약에 대한 실천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월에 구 원주여고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기 전에 공약을 하신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무관심하게도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도 하지 못하고 원주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대안에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만 보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의 문제해결 방식에도 진정성 있는 방안이었는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강원도를 이끌어 가시는 수장께서 대안 하나 마련을 못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답답함에 지친 원주시에서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도교육청에서 사태의 해결에 무계획으로 따라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원주시와 강원도, 원주시와 도교육청, 강원도와 도교육청 간의 어색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발 빠른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간다면 아무런 갈등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된 강원도’를 외치시는 지사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심에 지역주민의 불만을 만들어 내고, 불신을 키우고, 시설의 오랜 방치 속에 범죄발생 요인을 만들어 내고, 주변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계심에 안타까운 마음만 더해갈 뿐입니다.

황폐화되어 가고 무서움이 도사리는 장소로 변해가는 지역 중심지의 모습을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감에 떨고 기다림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공약을 하셨으니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다리던 주민들께서는 믿음은 사라지고 불신만 커져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부지 맞교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원분들에게 지시를 내리셔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담당 직원분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직 내의 수장께서 직원들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만 내리신다면 직원들과의 거리감이 발생하고 믿음이 사라져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 어느 누가 충성을 다해 일을 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직원분들에게만 맡겨 두지 마시고 도의회의 의원님들과 적극 직접 소통하시어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원주시장님, 도교육감님과 자리를 함께하시어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의 교환 문제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약을 하신 지사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사님을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들께서 잘못된 선택이 아닌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시는 '따뜻한 감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6. 3.17)

5분 자유발언 :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발언요지 : 신축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증축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신설 아파트 지역에 초등학교의 증축과 관련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된 초등학교에 교실이 모자라서 학교를 증축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증축을 하려고 했더니 이 학교는 4층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시설을 분해하고 교실을 증축한 후에 다시 올리는 데 5,0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해하고 운반하고 보관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건축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지출이 되겠지요. 개교한 지 1년도 안 돼서 교실이 모자라 증축을 해야 한다니 듣는 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학교 신설 시 학급 수 판단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미취학 아동과 기존 재학생을 근거로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 발생 지수를 산출했을 텐데 결국 교육시설 기획 예측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구나 학교 근처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학생 발생률만 적용했지 인근의 주상복합건물에서 다니는 학생 수는 처음부터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학교에 다니는 주상복합 건물의 학생이 104명에 이르는데 말입니다.

이 학교는 원주시 무실동의 솔샘초등학교입니다.

2014년에 24학급으로 지어져 개교한 솔샘초등학교는 처음에는 12학급이었지만 2015년에 26학급으로 늘었고 올해는 29학급으로 벌써 교실 5개가 부족합니다.

급한 대로 과학실, 영어실 등 큰 교실을 우선 막아서 일반 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역부족입니다.
또한 각종 지원시설인 발간실이나 협의회실의 공간은 너무 작게 만들어져서 두 개를 합해도 일반 교실로 쓸 수도 없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원주지역의 최근 아파트 신축 부지에 개교한 학교 증축 현황입니다.
무실초등학교는 설립한 지 1년 만에 6개 교실을 증축했고 나머지 학교들도 2년~3년 안에 모두 교실을 증축했습니다.
서원주초등학교와 만대초등학교는 교실을 12개까지 증축을 했습니다.
이 증개축에 소요된 예산만 해도 신축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처음에 지은 것과 그 위에 다시 증축하는 것은 예산 증액도 문제지만 설계 변경 등의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증축공사에 따른 소음과 먼지 등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요즘 신축하는 초등학교는 교실은 작게 짓고 현관이나 복도는 넓게 만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학급당 법정 정원이 29명이기 때문에 교실을 작게 만든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지역의 주거 인원이 늘어서 교실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지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예산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가구 수로부터 발생되는 교육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해서 조금만 크게 지어서 빈 교실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문책이 뒤따른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작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작게 하면 뒷말 안 듣게 되고 나중에 증축에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든지 상관할 바 아니라는 논리로 담당자는 최대한 작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축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학교들에서는 개교만 하면 증축하는 일이 기정사실처럼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잘못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 설계가 잘못 되었다, 넘어온 통계자료가 미비했다고 모두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우리의 교육행정에서 교육시설을 만드는 일에 어찌 10년 앞도, 아니 1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항상 수정해야 하는 겁니까?

왜 아파트 신축 단지에 세워지는 학교는 개교 직후부터 하나같이 증축을 하는 겁니까?

중앙부처가 적용하는 기준과 달리 여전히 강원도 도시의 공동주택 학생 발생률을 0.228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하고 개선해 볼 필요는 없는 걸까요?

공동주택 학생 발생률의 오차가 커서 많은 국고가 이중으로 낭비되고 증축 시 학교마다 소음과 혼란 속에 고통 받는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재정 효율화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연례 반복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학교를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샘초등학교의 교실 증축 현장에 직접 나와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증축 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6. 3.17)

5분 자유발언 :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제5선거구)

발언요지 :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 실천지표 개발 제안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의 심각한 청년 고용과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해법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 실천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정책 제안이 꼭 반영되어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강원도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강원도의 청년 고용 및 실업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청년고용률은 33.8%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삼척 21.6%, 강릉 27.5%, 춘천 32.2%의 청년고용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강원도 청년 실업률은 12.8%로 전국 평균 9.2%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청년 실질 실업률은 46.5%로 추정하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자라는 말입니다.

청년 고용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강원도로 기업 이전을 통한 고용창출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새 청년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3포 세대, 또 이를 넘어서 5포 세대, 더 나아가서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스펙과 취업준비를 위해 온갖 열정과 노력을 바치고 있지만 기회만 되면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대신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택한 청년들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아직 작기에 청년들이 도전하기에 작은 장이지만 앞으로 시장과 사회의 전 영역에 확대되어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소중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각 시·군은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지역 차원의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각 시·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강원도와 각 시·군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강원도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 실천 지표개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고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지역주민에게 알려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원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청년 사회적경제의 현황 분석 및 혁신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생존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와 18개 시·군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6. 3.17)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레고랜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도정질문에 이어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강원도민들께 공사하는 여러 가지 업체 중 LL개발이 무슨 회사이며 이번에 LLP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 조성사업, 이대로 계획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강원도의 여러 가지 재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실체는 무엇인가?

도표 2번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LLP라는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시행사는 LLD입니다, LL개발이라고 하죠.

그런데 LLP는 이번에 강원도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해서 말썽이 된 회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토지·상가 분양 및 판매, 부동산 관리 및 시설 경매를 하는 회사고요, 실질적인 6개 회사의 총괄 실세 회장은 임헌종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관계인 최 모 씨는 그냥 지인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TP코리아는 이번에 출자한 회사고요.
테마파크 설계 및 설치 운영, 골프장, 스키장 설계 및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자료는 법인등기를 전부 다 떼어서 이 자리에 갖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자료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CS산업개발은 토목건설, 전기준설, 부동산 매매 및 분양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사는 용인에 있는 굿랜드홀딩스 회사로 부동산 임대업, 전기·정보통신, 기계설비 공사업을 하고 CS산업개발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해서 2월에 춘천에 건설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4번 자료 부탁합니다.
KMS라는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중개업, 토목건설업을 하고 있고요.
CN전자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전자통신기기 제조업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 회사입니다.
6개 회사가 전부 건설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다음 장 부탁합니다.
우리 강원도 레고랜드를 이끌어 가는 조직도입니다.
레고랜드 오상덕 대표, 그다음에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지 잘 알 겁니다.
기억을 잘 해 보세요.
다음 장 부탁합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LL개발이 레고랜드 추진 시행사입니다.
그 옆에 보면 이번에 임대주차장을 매각주차장으로 문제를 삼은 회사 LLP가 있습니다.
그 옆에 LTP코리아가 처음에 소액출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 옆에 CS, KMS, 굿랜드홀딩스, CN전자가 있는데 이 6개 회사를 총괄하는 회장이 누구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회장님이 이끌어 가는 회사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회장님은 등기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세는 빠져 있죠.
그리고 그 밑을 보면 LL개발, 강원도 레고랜드를 이끌어 가는 실세들이 회사마다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감사, 이사, 대표이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등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임헌종 회장님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분의 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강원도에서 채무보증 2,050억 원을 섰죠.
채무보증을 서면서 약 56억 원이라는 수수료를 지출했습니다.
그게 전 사장과 문제가 됐죠.
그리고 출자금 9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강원도에서 섰습니다.
이것은 발표가 안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2,050억 원에 대해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이자가 지급되고 1년에 35억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0.5%, 금리는 5.3%로 계산해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국유지를 매입해서 다시 LL개발에 매도하는 과정도 구두약속으로 다 이면합의가 된 상태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문순 지사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5월까지 레고랜드를 준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될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임대주차장 매각 전환에 대해서 지난 2월에 LL개발에서 LLP로 매각한다고 계약이 끝나 있습니다. MOU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주차장 부지는 강원도에서 103억 원에 매입해서 면적이 2만 1,100평, 분양예상 가격이 약 400억 원입니다.
시세 차익이 300억 원이나 납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그런 것은 차후에 제2탄, 3탄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김시성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4.20)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레고랜드에 대하여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 레고랜드가 벌써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레고랜드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레고랜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현안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의회와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레고랜드 사업부지 배치도입니다.
지난번에 임대주차장 문제, 2만 1,000평이죠.
그 주차장을 엘엘개발에 넘겨서 엘엘개발에서 LLP에 매각하는 이면합의가 되어있는 양해각서를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워터파크, 2만 8000평이죠.
약 560억이 됩니다.
그것도 LLP에 넘기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확인했고, 이사회에서 다 통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자료 부탁드립니다.
KIS유동화회사, 한국투자신탁 자회사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2,050억 채무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은 회사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2,050억 중에서 3월 말까지 약 63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는 5.3%로서 약 60억 원, 대출수수료는 약 50억 원 해서 수수료와 이자만 현재 110억 이상 지출이 되었고요, 매일 이자만 1,000만 원 이상, 수수료까지 따지면 하루에 2,000만 원 이상 이자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자비용과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지부진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LLP 특정인 외 6명의 임원이 개입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아직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연봉으로 약 3억에서 4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요, 과연 이들이 이 개발사업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꼭 필요한 인력인지, 아니면 통째로 레고랜드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네들끼리 급여를 65% 인상시켰습니다.

대폭 인상시켰죠.

연봉 6,000만 원에서 1억씩 나눠먹기식의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엘엘개발과 LLP, 아까 말씀드렸죠.

6개 회사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6명의 임원들이 지금 엘엘개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이고 이런 부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만 1,000평의 주차장 임대부지를 103억에 매입을 해서 400억 원 이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워터파크 부지가 560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고 천문학적인 이 사업을 LLP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또 관계 공무원께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업을 위한 회사인가, 아니면 땅 투기를 해서 먹튀하는 회사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번에 문화재보존지역 추가 재설정에 대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협의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고 쉽게 이 방법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설계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2만 평의 테마빌리지 부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약 400억 원 정도의 분양수익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 400억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50억 중에서 테마빌리지 부지 2만 평에 대한 담보로 23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추가로 230억 원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담보 확보부터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약에 레고랜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채무보증, 2,050억 외 사업 관련 투자회사의 모든 투자손실금을 우리 강원도에서 책임지고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읽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 동안 이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대경비까지 강원도에서 천문학적인 손실 보전금을 또 해 주어야 됩니다. 2,05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원도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 3월 15일 이 자리에서 레고랜드 관련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다음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김성근 강원도의원은 강원도의원인가 아니면 인천 청라지구 인천시의원인가라는 공갈협박을 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 청라지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강원도의회에 대한 협박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최문순 지사님은 이에 대한 관련자를 밝혀서, 엘엘개발의 모 팀장이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자동차 번호는 서울 43머 3316, 10만 원의 일당을 주고 알바를 고용해서 세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관련 부서에서는 이 의혹에 관한 관련 서류와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레고랜드에 대해서 명백히 모든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4.20)

5분 자유발언 : 이문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3선거구)

발언요지 : 세월호 계기교육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간곡한 바람을 민병희 교육감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랐습니다만 오늘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과 자리를 같이하신 국장님께서 들으시고 꼭 전달이 되어 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와의 잦은 대립과 갈등으로 강원교육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강원교육 발전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은 강원교육의 최고 관리자로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원도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여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강원교육의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위기로 내몰았다는 것을 강원도민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마다 시행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최우수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550억 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최하위 교육청으로 7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매년 약 500억 원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직의 기준 인원이 3,692명임에도 불구하고 75%가 넘는 6,480명을 채용하여 그들의 인건비와 복지비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강원도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120억 원 정도의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학생 약 45%까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지출하여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의 축소 및 폐지는 물론 강원교육 재정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모두가 지나친 무상 복지 정책의 추진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맞선 결과이며 그들의 협조와 지지 및 지원을 이끌어내는 교육감의 역할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강원도교육청이 민선교육감 체제를 맞이하여 강원교육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부와 대립하여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전교조가 작성한 세월호 참사 2주년 계기교육 자료에 대해 부정적 국가관,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이 있어 시도교육청에 사용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계기교육은 학교 자율 시행 사항이라며 중앙정부가 요구한 전교조 작성 자료 사용금지 권고 공문을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중앙정부의 사용금지 요구는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논평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단위학교에 공문을 시행했겠습니까?

지난 3월 25일은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이었습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감행한 주요 도발인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은 계기교육에 대한 어떤 공문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8일 강원도교육청은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계획을

유치원은 물론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교육감 서한과 함께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는 행사를 추진하고 단위학교 자율 시행 사항인 계기교육에 대해 일일이 학교급별 추념활동 예시 자료와 추모수업 관련 예시 내용을 열거하였습니다.
제1회 서해수호의 날과 세월호 2주기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좌지우지하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일선 학교는 큰 아픔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행정에 맞서는 강원도교육청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더 이상 교육부와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강원교육의 발전에 근본이 되는 현명한 교육행정의 기틀을 하루속히 재정립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울러 교육감은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강원도민과 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감이 자행하고 있는 정치적·이념적 편향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순수 교육을 전개하도록 교육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4.20)

5분 자유발언 : 최성재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6선거구)

발언요지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넘치는 강원도 경제중심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의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김영철 부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열정을 다하시는 공직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여보고자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애쓰시는 강원도경찰청 공직자분들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승하차 시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게 되면 심상치 않게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마음 아픈, 슬픈 소식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이러한 슬픈 사례를 줄여보고자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심치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관·경 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공동 프로젝트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현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세림이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 인식 및 행동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이 소홀하다고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가 2,237명으로 자료에서 보듯이 도내 부상자 수는 144명으로 규모가 비슷한 타 경찰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통학차량 특별보호 단속건수는 1,989건에 불과하며, 특정 연도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학차량의 특별보호 단속을 방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지역별 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건수를 보면 경기·부산·경남 등 3개 지역이 전체 단속건수의 85% 이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도내 단속건수는 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해서는 경찰 단속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관 간 협조와 공유를 통해서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최초로 통학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학교에서 통학버스 앞지르기 위반차량 데이터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면 해당 경찰서에서는 위반사실 검증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단속 프로젝트”를 관·경 간 공동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해외 단속 사례로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과태료 부과 사례입니다.

그림은 실제 고지서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위반차량번호, 앞지르기 위반장면, 위반장소 등의 이미지가 첨부되고 특히 위반 전 과정을 담은 동영상의 웹주소를 표기하여 단속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앞지르기 금지 단속, 단속 효율 극대화, 단속 공정성을 위해서, 도교육청은 통학버스 보호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을 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해 관·경 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심치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관·경 간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운전자 모두가 아이들은 걸어다니는 빨간색 신호등이라는 인식을 갖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며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의 교통사고 소식보다는 우리나라 어린이가 활기차고 아름답게 잘 커가고 있어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가 밝게 펼쳐지는 소식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4.20)

5분 자유발언 : 심영곤 의원 (새누리당, 삼척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삼척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심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 남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원도삼척의료원의 이전·신축사업에 대하여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으로 소외 받아온 강원 남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삼척의료원의 이전·신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의 효과는 강원 남부지역의 안정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척의료원 사업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내 중증질환 전문 치료시설의 부재입니다.

삼척의료원은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그동안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 의료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이나 암 등 중증질환 및 응급환자에 대하여 과연 그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삼척시민들은 중증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를 위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정신적·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고충을 겪어왔습니다.

둘째, 삼척시민들의 의료욕구 충족입니다.

삼척시는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가 36.1로 전국 평균 65.1, 강원도 평균 57.7보다 현저히 낮은 편으로 심각한 병상 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상 부족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신장환자의 절반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원정 투석을 받고 있는 등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이 수년 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나 요양, 병상 등 이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거점병원의 역할 및 공공의료 체계의 정상화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신축건립은 추가 병상 확충 및 신규 진료과를 개설하는 등 모든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통하여 환자의 편의 및 진료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급증하는 환자 수요를 충족시켜 공공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부지는 건축공간이 협소하여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물의 장기 사용으로 건물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비 증가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또한 그동안 시설부족 등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던 심뇌혈관센터, 재활·물리치료센터, 정신·중독센터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삼척, 동해, 태백, 정선, 울진 등을 아우르는 강원 남부권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공의료시설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입니다.

주민의 건강권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삼척의료원은 강원 남부지역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통하여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이전·신축계획안을 과감히 제시하였습니다.

강원 남부지역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삼척의료원의 이전·신축사업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4.20)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새누리당, 원주시 제2선거구)

발언요지 :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청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께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3년 강원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강원도 심벌이 효과적 메시지 전달 및 상징성에 있어 미흡하고 대표성을 창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8,000여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새 통합브랜드 개발에 착수했었습니다.
새로 개발된 심벌은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의 특성과 상징성, 미래지향적 트렌드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재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20여 년 전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 심벌을 계속 사용중에 있습니다.
1996년에 만들어진 심벌의 의미를 찾아보니 고유의 뜻이 담겨있지만 이런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제 눈에는 파랑, 초록, 노란색의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상징적 모양이 강원도의 바다와 산, 그리고 그 위를 살아가는 우리 강원도민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고 첫눈에 보았을 때도 세련되고 잘 만들어진 심벌이라 느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 느낌일지 몰라도 지난 20년간 꾸준히 홍보된 현 강원도 심벌모양 자체도 17개 시도 어느 것과 비교해도 흠 잡을 데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심벌을 두고 더 좋은 심벌을 가지고 싶었던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더 좋은 심벌이 만들어져 전문가들과 도민들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면 8,000만 원가량,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더라도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약금인 8,000여만 원에 플러스 알파로 공직자분들의 수고와 활동비 등을 감안해 1억 원 가깝게 투입되었을 예산에 대해 현재 아무런 역할도,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우리 도민분들에게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규모에서 1억이란 금액은 조족지혈(鳥足之血)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몇십만 원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백 원으로 지을 수 있는 하얀 쌀밥 한 공기를 매끼마다 쉽게 드시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북쪽의 동포들만이 아닌 바로 우리 옆 이웃에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른 곳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더라면 강원도민 전체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도민들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는 옥계지구 조성을 위해 총 278필지, 29만 9,441㎡에 달하는 부지 매입에만 174억 원이 소요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 안건이 가결되면 향후 부지조성을 위해 도비만 480억 원이 더 지출될 것이고 총 5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입니다.

부지 조성 후 확실히 분양될 투자계획이나 추진계획만 있다면 과감히 추진하고 시도해야 할 사업이고 효율적 예산 운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확실한 투자계획도, 아무런 추진계획도 없어 보이고 만약 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해 놓고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6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은 금빛처럼 땅에 고스란히 스며들 뿐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세금에는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알지 못하는 회장님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감각도 담겨있지만 장사할 때 1,000원, 2,000원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땀방울과 눈물, 자식들 잘될 생각에 한겨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지으셨을 당신들의 미소와 꿈이 담겨있습니다.

혈세란 피와 같은 세금이란 뜻입니다.

피란 생명입니다.

세금은 곧 치열한 삶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자기 돈 100원은 마트 카트에 꽂은 채 두고 올지라도 세금 100원은 물에 뛰어들어서라도 건져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땀방울과 눈물, 입김이 곧 우리에게 대리운용권을 주신 국민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파지(破紙)를 주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도민들이 계십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하게 비쳐질지 모르는 분들이지만 자기가 더 낫다고 여기는 오만불손한 자들이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을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도민이십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 몹시 덥거나 추운 날의 의미가 우리와 다를 도민분들이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600억 원이란 예산으로 이분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도와드릴 수 있는 시설이 구역별로 생길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지 잘 모르겠지만 생명돈으로 결과를 알지 못하는 도박을 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도민 한 분이라도 더 힘겨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딴지를 거는 것도,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 도민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다만 세금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도박에 걸리는 판돈처럼 위태하게 되는 경우라면 다시 한 번 더 숙고해 보시고 중단할 것은 과감히 중단하시란 충언을 올리겠습니다.

소자의 발언을 차라리 그 생명돈으로 숫자상 경제효과는 없더라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도민들의 힘겨움을 한 분이라도 더 덜어드리는 등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셔서 더 완벽하고 사랑받는 지사님이 되셨으면 하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4.27)

5분 자유발언 : 심영섭 의원 (무소속, 강릉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강원FC와 관련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축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 300만 강원도민의 대화합을 위해 큰 기대를 안고 희망차게 출발을 하였으나 2016년 시즌도 2부리그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여전히 감사합니다.

내홍에 휩싸여 있는 강원도민 프로축구단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강원FC는 2008년 강원도민주 공모 등 강원도민의 힘으로 창단한 강원도민 구단입니다.

2009년 출범 이후 최대 주주인 도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수수방관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95억 원대의 자본금을 잠식당하고 강원FC는 부채만 쌓여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13년 임은주 대표이사가 새로이 부임한 이후 구단 운영의 횡령 및 배임을 범한 이들을 처벌케 하고 어느 정도 부채를 줄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임은주 대표이사는 찬사를 받아야 마땅하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FC의 자료를 보면 임은주 전 대표이사의 재직 당시인 2014년 8월 임 전 대표이사의 친구인 윤 모 씨는 과장으로 특별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1년이 지난 2015년 8월 30일에 퇴사를 하고 바로 그다음 날 9월 1일에 한 직급 오른 차장으로 다시 채용을 하게 됩니다.
특채도 모자라서 1년도 안 된 직원이 승진을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단 홍보상품을 제작하면서 임 전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있는 업체로 일감을 몰아주기도 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은 임 전 대표이사의 지시로 상대 견적서를 허위로 첨부하였다고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에 퇴사한 한 직원의 컴퓨터에서 직원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발견되기도 하였답니다.
임 전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일부 인정을 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사찰에 대해 민감한 이 시대에 참으로 경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임 전 대표이사는 오로지 감독에게만 전권이 있는 선수 출전과 교체에 전화나 메모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였다고도 합니다.
프로스포츠에서 금기시하는 사항을 어긴 것입니다.
직원들 봉급도 주기 어렵고 선수들이 집중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은주 전 대표이사는 아직도 이사로 등재해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FC는 축구를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축구의 고장입니다.
강원FC를 통하여 초·중·고·대학 프로팀으로 이어지는 계열화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축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 18개 시·군의 300만 강원도민의 대화합을 위해 강원FC는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지중지해야 할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장이 구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구단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오명을 벗어나 여타 시민구단의 모범 사례로 새로이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구단주인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은주 전 대표이사는 현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채로 입사한 직원 역시 퇴사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단 운영에 관한 의회 차원의 지도·감독을 위해서 강원FC의 당연직 이사를 강원도의회 의원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직원이든 이사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정말로 강원FC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과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25일 강원FC는 새로이 조태룡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을 지금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그 탁월한 능력이 한편으로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무쪼록 강원FC의 구단주인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조태룡 신임 대표이사가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임 전 대표이사의 의혹 하나하나를 밝혀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4.27)

5분 자유발언 : 함종국 의원 (새누리당, 횡성군 제2선거구)

발언요지 :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새누리당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본 의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더 이상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강원도민의 힘으로 바로잡아 보자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총선은 불과 50일을 앞두고 발표된 줄긋기식 선거구 획정에 분노한 우리 도민들은 총선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며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대 총선 이후 20년간 한솥밥을 먹은 홍천과 횡성이 공중분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도민들은 무척 허탈해 했습니다.

18개 시·군의 과반이 넘고 강원도 전체 면적의 65.6%, 한 곳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또 다른 한 곳은 폐광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묶여 지역정서를 공유하는 지역과 각각 합쳐지면서 초유의 공룡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면적은 서울의 열 배가 넘고 서울 동대문 을 선거구의 948배, 자동차 이동거리 311㎞, 이동시간만 6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개 시·군을 한꺼번에 묶은 거대 선거구가 유독 강원도에만 두 곳이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의 젖줄, 허파역할을 강조하며 강원도를 각종 규제와 보전의 명분으로 묶어놓고 희생과 양보만 강요해온 강원도민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선거구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원을 버렸다는 어느 지역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도 인구 하한선의 턱걸이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만 이런 식의 인구 논리로는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대관령을 넘나드는 메머드급 선거구가 강원도에 만들어 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해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선거제도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정치적 안전성과 역사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선거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에 관한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받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는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생활문화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획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면서 현행 지역구 다수대표제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여성·다문화 등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포용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 만든 10석 모두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과연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인구는 여전히 도시로 집중되고 있고 인구 위주의 지역개발로 인한 도농 간 경제개발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그 편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구수만을 잣대로 선거구 획정을 함으로써 지역의 이익 대표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헌법 제122조와 123조에서 국가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 획정이 과연 투표가치의 평등권 훼손만을 이유로 조정돼도 이를 용인할 만큼 오늘날 과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존중하겠지만 농산어촌의 특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려는 어떤 고민도, 어떤 대안도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데 강원도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공룡선거구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여러 가지 폐단은 불을 보듯 뻔해집니다.
우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은 반드시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정서의 이질감과 소외감에서 오는 출마 후보에 대한 무관심은 투표에 대한 의욕저하를 불러오고 정치와 생활이 겉도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공룡선거구의 선거운동 당시 장독 메우기식 선거운동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울 동대문 지역구처럼 10분이면 어느 동네 모두 갈 수 있는 선거구가 있는 반면헬기를 타고 다녀야 할 지경의 선거구가 있다는 사실에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결국 공룡선거구와 소지역주의로 인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강원도의 정치력과 지역세를 약화시켜 강원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도 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공룡과도 같은 선거구 획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거구 획정 기구를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독립시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특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만 합니다.
이에 강원도민의 힘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근본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추진입니다.
더 이상 변방의 서러움을 받지 않으려면 강원도형 인구 늘리기 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단계부터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의 조속한 수립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당리당략을 잠시 접어두고 강원도의 미래를 도민 모두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후대에 떳떳한 제9대 강원도의회로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4.27)

5분 자유발언 : 김성근 의원 (새누리당, 속초시 제1선거구)

발언요지 : 레고랜드에 대하여

김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도 레고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 중에 한두 가지 만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레고랜드가 정상화돼서 우리 지역발전과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될 수 있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레고랜드로 반드시 착공과 준공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름은 반드시 짜내야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3월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5월에 반드시 레고랜드를 착공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4월 초에는 레고랜드를 8월로 연기 착공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레고랜드가 8월에 착공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8월에 착공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가운데 출자금액을 한번 봐 주세요.

221억 중에서 강원도 90억은 현물출자입니다, 토지대금이죠.

그것을 빼면 131억, 그중에서 또 대출을 해 갔습니다.
총 600억 투자한다고 시작해 놓고 지금 현금 80억밖에 없습니다.
5,011억짜리 공사, 일반 공사가 총 4,000억 정도 되는데요, 80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지금 강원도의 공사를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사가 있지만 대표적인 공사 몇 가지만 발췌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입교량, 약 900억 정도 되는데 진입로와 출발점, 도착점, 램프까지 합치면 1,000억이 넘는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센터가 약 920억 정도 되고요, 올림픽플라자 개·폐회식장이 1,226억짜리입니다.
레고랜드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계약하고 단 1억밖에 안 냈습니다.
계약을 하고 왜 1억밖에 안 냈을까, 현대에서 돈이 없어서 1억밖에 안 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강원도의 공사는 대림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굉장히 무성하다는 얘기죠.
그 의혹을 제기합니다.
페이지 4쪽을 부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현대건설에 MOA 본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죠?
그런데 현대건설에서는 법정소송으로 들어가겠다고 법무팀으로 이관해서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강력한 주장은 지금 자료에 1, 2, 3, 4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사도급 본계약을 했고요, 1,300억이라는 계약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은 88%로 했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계약파기를 하겠다, 과연 될까요?
다음 쪽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2조 1항, 5번, 6번, 7번 쭉 되어 있습니다.
상가부지 MOU를 해서 1,500에 매각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7번에는 강원도가 보증한 2,050억 대출금과 ESM, ESM은 상가부지 1만 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각해서 공사비로 확충해서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현대건설에서 하겠다고 하고 계약위반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왜 강원도에서는 자꾸 불순하게 이상한 사업체로 몰아붙이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것을 곧 소송으로 가겠다고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지방자치단체하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풀려고 아마 최문순 지사님이 현대건설 사장과 부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될 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림산업을 레고랜드 공사업체로 변경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는가 하는 굉장히 의혹이 강한 그런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 더 디테일하게 밝히려다가 본 의원이 시간을 주고 지켜보려고 오늘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강원도의회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동료 의원님께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행정조사권을 즉시 발동해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와 엘엘개발에서 주장하는 것과 또 여러 군데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반대의견들이 많습니다.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하니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주최해서 강원도와 시행사인 엘엘개발, 레고랜드 투자사 8개 회사의 대표들 몽땅 오시고, 그리고 엘엘개발 전 임원들, 그리고 관계자들 전부 다 불러서 레고랜드 정상추진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정식제안합니다.

레고랜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5.11)

5분 자유발언 :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발언요지 : 소득2배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정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입니다.

과연 소득 2배를 위해 강원도는 얼마만큼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강원도민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4위였고, 2012년 14위, 2013년 16위, 2014년 15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민의 소득 2배를 위한 전략으로 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돈이 도내에 머물고 외부자본을 끌어들여 소득을 높이는 것이 전략인데 교육·문화 등 도내 종합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춘천 레고랜드, 강릉 차이나드림시티 등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이 가시화되면 도민소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 관계자의 말이 지휘부 견해를 대변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생각을 지휘부 견해인양 포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 그런데 대규모 외자유치가 가시화되면 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런데 출산이 가시화되면 출산율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소득 2배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입니까?

교육·문화 등 종합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대기업 유치가 안 된다는 분석이 진정이라면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등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원도의 조직과 인력들은 지금 영혼 없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소득 2배를 위한 추진 전략을 서면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37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주더군요.

도정시책을 망라한 2016년 도정 주요업무계획이었습니다.

서면질의를 하면 보통 5페이지 이내로 정리된 자료를 주는 게 상식인데 이건 뭐 의원이 알아서 찾아보고 모르면 말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자료에 수록된 모든 도정시책이 완료되면 소득이 2배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료의 내용이 표현 어휘만 조금씩 다를 뿐 전임자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책이라도 전임자가 추진하면 그냥 사업이고, 후임자가 추진하면 소득이 2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소득 2배에 대한 시책은 당초부터 없었고 이를 위한 실무진의 노력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본 의원은 그저 씁쓸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중앙과 외부자본가만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떼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 되는 논리나 만들고 이래서는 소득 2배와 지역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진정 소득 2배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신다면 그 요인은 다름 아닌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의 특·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많습니다.

산과 바다, 폐광지역, 휴경지, 생태공원 등 기존의 환경만 잘 활용해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해안의 치어방류 사업, 폐광지역의 석탄 활용방안,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규모 자연공원조성 등 강원도만의 특성과 장점 등을 잘 살펴보고 바로 여기에서,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주는 달콤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강원도의 소득 2배, 행복 2배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특화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6. 8)

5분 자유발언 : 유정선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발언요지 : 도정 현안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강원도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없는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춘천시는 그동안 많은 기대를 걸었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기업·혁신도시 유치경쟁에서 실패하면서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찾는 데 모든 시민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고랜드는 춘천시민의 지역발전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춘천의 입장에서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춘천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춘천시민의 오랜 꿈과 염원이 담겨있는 소중한 사업인 것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비리 등 각종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연되어 온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문화재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의 중요성만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회 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혹제기를 비롯해 사업 시행사

선정과정에 시행착오와 사업추진 핵심 인물의 재판과정 등을 바라보는 춘천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집행부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추진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집행부 스스로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추진을 해서 얻어질 정상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사업자들에게 개발사업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믿고 맡겼지만 결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 집행부는 건실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도민의 재산을 담보로 2,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재원 대출을 보증했습니다.

심지어 엘엘개발주식회사(LLD) 고위 임원과 담당 고위 공무원, 도지사의 최측근 인물들이 추진과정에서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간에는 레고랜드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루머와 의혹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의 본질은 부지를 개발하여 본사업비를 조달하고 그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시장의 반응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 강원도는 투자금을 날리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떠안게 될 것입니다.

춘천시민의 기대와 염원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강원도가 춘천시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강원도의회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루빨리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상세히 밝히고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도민에게 알릴 것은 투명하게 알리고 제반 진행상황을 도의회에 상세하게 보고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레고랜드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춘천시민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춘천의 미래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엄정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솔직하고 지혜롭게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6. 6.17)

5분 자유발언 : 구자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제4선거구)

발언요지 : 지역대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언행으로 인해 혹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통해 송구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 문제보다는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의욕이 조금 앞섰다는 그런 점에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초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은 재단의 횡포로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원주 소재 상지대학교에 대한 문제를 주목했습니다.

1994년 김문기 전 이사장의 퇴진 이후 상지대는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입시 경쟁률 평균 8:1, 신입생 등록률 100%, 재학생 충원율 100%, 취업률 평균 78%, 한국연구재단 등재 교수 연구실적 전국 최상위권, 이 기간 동안 보여준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것과 같이 비리 사학의 오명을 벗고 중부권 명문 사학으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김문기 전 이사장이자 총장은 재단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994년 대법원에서 부정입학 비리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문기 전 이사장의 재등장과 함께 상지대는 다시 내홍(內訌)에 휩싸였습니다.

김 전 이사장 측근들은 2010년 교육부의 빗나간 예측 '상지대 정상화' 결정 이후

이사회를 장악했고, 2014년 8월에는 지역사회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과 교직원, 교수들은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와 수업 거부 등 각종 분규에 휩싸이게 됩니다.

김문기 전 이사장은 복귀 후 구 재단 복귀에 반대했던 교수들과 직원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 외에 정직, 감봉 등 징계와 재임용·재계약을 거부했으며,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도 30건이 넘는 등 최악의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비민주적 운영을 일삼은 김 총장은 복귀한 지 11개월 만에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용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단 이사진과 보직교수들을 친인척, 측근으로 임명하고 아직도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등장 이후 상지대학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장학금 등 학교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015년 실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으로, 부실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전면 취소, 지원금 환수, 학과 구조조정 갈등 등 많은 문제들을 양성시켰습니다.

올 들어 전례에 없었던 신입생 미달과 학생들의 대량 휴학 사태는 그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보판정이 예상되는 대학인증평가가 현실화될 경우에 교육부 평가에서 또다시 부실대학 판정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학, 상지대학이 폐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는 도 출신 학생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도민의 대학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착실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던 상지대학이 특정인의 사유화라는 이유로 인해서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학의 미래는 그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원주, 그리고 나아가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상지대학교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하루속히 상지대학교가 제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3 장

본회의 초청연설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9.25)

본회의 초청연설 : 인순이 홍천 해밀학교 이사장

- 경기도 포천시 출생(1957년생)
- 주요경력

· 1978년 걸그룹 '희자매'로 가수 데뷔(19장의 앨범 발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대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홍보대사 등
· 홍천 해밀학교 이사장(현)
· 수상 : 제6회 올해의 여성문학인상, 제4회 미래의 여성 지도자상 등

주 제 : 다문화사회의 인식과 정책과제의 현재와 미래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무대, 아무리 큰 무대에 서도 이렇게 긴장이 안 되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요.

사실 어제는 하루 종일 녹화를 했었습니다.

히든싱어 녹화를 했었는데 어제 아침부터 긴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 떨어지는 게 그렇게 창피는 아닌데 그래도 누군가가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해서 내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아무리 웃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씁쓸한 웃음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과 말 한 마디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누군가 나보다 노래를 잘한다는 건 썩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정말 있는 대로 표시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들어오는 관객들한테도 서약서 같은 걸 받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절대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걸.

그래서 오늘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해 하십시오.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1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발도 아프고 긴장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는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그러면서 혼자 간추려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일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있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하고 쿨쿨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데도 긴장은 되는데 도저히 머리가 제 머리 엉키듯이 머릿속이 엉켜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강의라고 할 것 없이 저의 이야기와 학교를 만들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군-전에는 포천군이었어요.-지금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라는 곳에서 아주 어린시절부터 살았습니다.
여기 춘천도 미군들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랑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게 될 거고 저에 대한 이해도가 아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정말 철없이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천이 저한테 남다르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자꾸 오고 싶은 건 그때 그 기억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울에 밤고기 잡으러도 나가 봤고요, 횃불 들고요.
그리고 거기가 한탄강 줄기잖아요, 그래서 어항 놓고도 해 보고 견지도 해 보고 아저씨들 따라 다니면서 전기 가지고 고기 잡는 것도 봤고 해머 가지고 잡는 것도 봤고요, 저도 같이 그렇게 다니고 그다음에 계곡에서 가재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 되면 김장을 담그는 데 거기서 어르신들은 귀찮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을에 볏짚 초가지붕 새로 갈 때는 볏집 나르기도 하고, 고구마 같은 것 이삭줍기도 해 보고요.
어린 시절은 그렇게 철모르고 그리고 동네대장도 해 봤어요.
또 나뭇가지에 새집 지어놓으면 그 알 가져다가 계란후라이처럼 해 먹기도 하고 제가 정말 기억에 남고 신났던 건 메뚜기 잡는 거하고 개구리 잡아 가지고…… 땅에 쫙 뻗잖아요? (장내 웃음)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제 어린 시절은 그런 걸로 다 되어서 제가 도시에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도 저를 가장 안정시켜 주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했고 많은 분들께 야단도 맞고 잘하라는 조언도 듣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흔들리지 않았던 건 그때의 고향이 저를 잡아주고 제가 학교 다닐 때-저는 사실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습니다.-그때 선생님들께서 저를 잡아주신 것, 그것이 저한테는 항상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선생님들은 저를 믿어 주시고 저를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때 그 선생님들을 지금도 만나거든요.
제가 공연 때 초대하면 노래하는 중간에 선생님들이 막 일어나세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제가 선생님이었는데요, 우리 인순이 너무 착해요."라고 벅차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지는데 말 터도 될 것 같습니다."이렇게 저는 농담도 하곤 해요.
그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해 주신 걸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슴에 갖고 있었고요.
저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갈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저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학교 보내달라고 떼를 부렸으면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교에 더 보내 주셨겠죠. 그런데 그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하고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는 저한테 "너 커서 뭐 될래?" 보통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너, 뭐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그런데 저희 엄마한테는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희망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는.
저희보다 나이가 좀 있는 혼혈선배들도 공부를 잘해도 면접에 가서는 그냥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도 알고 저희 엄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될래?”라고 엄마는 말씀 못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뭐가 되고 싶어.”라고 말을 못 했어요.

서로가 해줄 수 없는 것, 서로가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저희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너무 철이 일찍 들었어요.

여기 남자의원님들이 더 많으신데 제가 애늙은이로 남자들의 심리까지 13~14살 이때에 너무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남자를 이해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1991년도에 재즈를 배운다고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간 적이 있었어요, 동생도 거기에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묘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처음에는 묘지인 줄 몰랐어요.

너무 예쁜 모형들이 다 불쑥불쑥 위에 있는데 정말 예뻤어요, 십자가도 위에 있고.

그래서 동생한테 “저게 뭐야?” 했더니 묘지라고 하더군요.

차에서 내려서 가서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가신 분들, 2차 세계대전 때 가신 분들, 그리고 한국전쟁 때 가신 분들, 거기에 사진까지 있었어요.

너무 앳된 사진이고 나이도 18~19살 이런 나이의 젊은 청춘들의 사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나이에 우리 아버지도 한국에 오셨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었다고 그래요.

지금의 미국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직업으로 갖든 어떤 이유에서든 군대를 본인이 결정해서 가지만 그때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의무징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우리나라에 오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모임에 가서 노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11월 12일에도 다시 거기에서 노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 콜린 파월-저는 그분을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아저씨라고 부르는데-그분이 연설하시는데 제가 갔어요.

제 얘기가 두서없긴 한데 잘 정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성조기와 태극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운데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감한 나라의 아버지를 주시고, 해 돋는 나라의 어머니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얘기와 함께 “성조기와 태극기 사이에 제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그리고 워싱턴의 국립묘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있답니다. 거기에 이런 팻말이 있대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 보지도 못한 나라에 아드님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는 팻말이 있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중하는 글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미국 군인들이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 보지도 못한 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종전이 아닌 휴전인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젊은 청춘들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는 부대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많은 부대 중에서 그 부대가 가게 되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까, 윗분들은 윗분들 나름대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겠죠.

하지만 그 젊은 청춘들은 평화라는 이름 하나로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해서 목숨을 던질지도 모르는 나라에 그냥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과 그리고 ‘한국에 와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를 만났고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버지를 만났을까!’ 정말 무모한 사랑이 아니었었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엄마는 경남 진해분이시거든요.

지금은 남문동이고 그때는 웅천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해 거기에서 왜 외국인을 만나서, 그것도 흑인을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엄마는 무슨 똥배짱으로 그렇게 어려운 힘든 사랑을 시작했을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제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도망 다닐 때 꼭 사랑하는 여자와 같이 다니고 항상 여자와 같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왼쪽가슴의 심장소리를 들으면 안정이 되었대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과연 당신이 너무 불안해서 그 왼쪽 심장소리를 듣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냥 여자를 만나고 싶었을까, 남자의 어떤 해소였을까,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6학년 때쯤-그 전후는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우리나라에서 월남파병을 했어요, “맹호부대 용사들아~”우리 학교에서 맨날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뒤 얼마쯤 후에 라이따이한이 아버지를 찾으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는 와,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우리나라 군인아저씨도 가서 씨 뿌렸네.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네. 그럼 이게 뭐야? 남자들 다 똑같다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냥 아, 우리 아버지는 사랑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 엄마는 무모한 사랑을 한 것은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저도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랑도 가능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남자로서도 이해하게 되고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남의 나라에 와있는 불안한 청춘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를, 사실 지금도 그렇게 완벽한 이해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랑이 있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 때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면 잠시 생각을 잊을 수 있다고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일 첫 번째 그린 그림이, 정말 제 깊은 곳에서 그냥 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린 그림이 풀밭에 철모가 있었고 철모가 삭았어요.

그래서 구멍이 났는데 철모 구멍 난 데로 꽃이 피었어요.

그것을 우산이 씌워주고 있는 게 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철모는 우리 아버지를 포함한 전쟁에서 돌아가신 청춘들을 의미했고요, 거기의 삭은 철모 틈사이로 피어난 꽃은 우리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척박한 땅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은 꽃 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꽃으로 표현을 했고 그것에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사랑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기초도 하나 없이 그린 그림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빈듯하지만 그것은 제 마음이고 제 스스로 힐링하는, 이해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시작한 것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가 노래를 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저는 그냥 1초도 쉬지 않고 나온 얘기가 “돈 주나요?”였습니다. 돈 준다고 해서 따라 나왔어요.

저희 가족은 이모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모는 친 이모가 아니라 이북에서 학생 한 반이 소풍을 갔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반이 선생님하고 같이 피난을 온 거죠.

그래서 우연히 저희 엄마랑 만나게 되어서 엄마도 의지할 데 없고 이모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두 분이 의자매를 맺어서 같이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모셨고요, 그래서 이모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고 제가 있었고 여자 넷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어린 나이긴 하지만 제가 지켜야 했기 때문에 돈 준다는 얘기로 무작정 10대 중후반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시작했고 또 연습생으로 있었고, 1978년도에 희자매,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걸그룹, 요즘 애들한테 “나 걸그룹 출신이야.” 그러는데 그리고 군부대 위문은 항상 1순위였었고 여자 셋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저희가 군부대를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1년이면 거의 150일에서 200일은 저희가 위문공연을 다녔습니다.

각 방송국이나 그런 데에서 라디오나 TV 프로그램마다 음악이 나오는 데는 1년에 몇 번씩 위문공연을 가야 했었어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도 1년에 몇 번씩은 꼭 가야 했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서도 노래를 많이 했고 방송도 많이 해서 거기마다 공연을 가야 했기 때문에 1순위였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위문공연 거기서 봤었다, 저기서 봤었다, 나 기억나지 않느냐 그때 같이 춤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얼마 가지 못 했어요.

1980년 말까지 희자매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솔로로 나왔습니다.

'밤이면 밤마다'라는 노래도 부르고 '여기가 어디냐'라는 광주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이런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 뒤로는 혼혈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엘레나라 불리운 여인'이라는 음반에 '비닐장판 위의 딱정벌레'라는 노래도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러데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뭐지, 내가 뭐기에 여기 이 자리까지 왔지?'

지금 어린친구들이 활동하는 일선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출발하고, 그때 저는 이등 아니면 삼등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출발했던 가수들은 지금 조금 뒤에 있고, 그때 이등, 삼등이었던 저는 어린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슬럼프가 1985~1986년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을 때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벌어서 밴드를 만들고 무용팀을 모집하고 그러면서 야외공연을 주로 많이 했어요, 콘서트를.

어린 꼬마들부터 어르신들 다 계시는 야외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레퍼토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저는 종교인이다 보니까 저를 다시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 주시면 저를 큰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협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가 생기고 한 10회 정도에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다른 가수도 다 나가는 때 저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갔는데 첫 번에 완전히 앵콜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시는 분이 "이거 어떡하죠?" 하는 거예요.

사실 방송이라는 게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막 어쩔 줄 몰라 하시기에 "제가 그럼 무반주로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창부타령을 불렀어요.

“아니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제가 야외에서 콘서트를 할 때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연습했던 곡이 만화영화 주제가부터 창까지 연습을 해뒀기 때문에 그게 요즘 말로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격주로 10년 이상 열린음악회를 섰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최다 출연자입니다.
그 레퍼토리는 그때 제가 공연하면서 만들어뒀던 다양한 레퍼토리를 정말 다 쓸 수 있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데 가서는, 검찰청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열린음악회를 했는데 거기는 딱딱하니까 만화영화 주제가를 불렀어요, 세일러문부터 해서 앞으로 앞으로 이런 노래까지.
또 경상도 지역을 가면 경상도에 맞는 그런 노래를,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를 부른다든가 또 전라도 지역에 가면 남 진 선배님의 노래를 불렀고, 대학교를 가면 일단 연령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흘러간 노래,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연식이 있지만 못 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 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를 과시하기 위해서 트렌디한 노래를 춤추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는 나이가 드니까 재즈를 배워서 재즈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재즈 공부를 하고 왔는데 조피디라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노래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가사가 어떠냐?” 했더니 가사를 보내줬는데 ‘친구여’라는 거예요.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저랑 20년 차이인데 그 친구가 생각하는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또 연령이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친구들이 더 그립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다섯 번만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1위 후보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야죠, 제 목소리가 들어 있는데 목소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1위를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막 상승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주년 콘서트를 준비하는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거위의 꿈을 맨 엔딩곡으로, 콘서트에서 뛰고 놀고 웃고 하다가 의미 있는 곡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던 중에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 신곡 하이어(higher)라는 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그거 하나에다 다른 곡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이나 방청객들이 전부 나이 어린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인생의 후배들한테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고 '내가 꿈이 있기는 한 걸까,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뭘까, 난 꿈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노력하고 울고 하면서 나도 가슴 절절하게 이 노래를 받아들이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후배들한테 인생의 선배로서 꿈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자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날까지도 방송관계자는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길고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고. 그래도 저는 우겼죠.

"그냥 부르고 반응이 안 좋으면 편집을 해서 없애십시오, 저는 꼭 부르겠습니다."

하고 불렀던 이게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아버지'라는 곡을 2009년도에 내놓고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제가 카네기홀에 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 107분을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첫날은 많은 교민들과 함께 당신이 아버지이신 분들, 아니면 고국에 아버지를 두고 오신 분들, 또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눈시울을 적시면서 노래했고요.

그 이튿날은 정말 너무나 혼란했어요.

이 '아버지'란 노래를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너무나 혼란했어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심장이 귀 바로 뒤에서 쿵쿵거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르지 하고 그 중간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제가 앞에 계신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노병들, 그분들한테 "혹시 한국에 나처럼 자식을, 혹시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가슴에 가지고 있는 돌덩어리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저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비록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나름 열심히 자기 인생을 잘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런 걸로 힘들어 하신다면 내려놓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당신들은 모두 제 아버님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를, 제가 그다음에 또 뵙고 또 뵙고 하면 몇 분씩 줄어 있습니다.

그분들께 제가 정말 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 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여기도 비상구가 있습니다만 비상구를 보면 녹색으로 된 뛰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수에서 출연 요청이 왔을 때 해 본 후회와 안 해 본 후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안 해 본 후회는 죽을 때까지 후회로 남을 것 같고요.

해 봐야 잘했든 못 했든 후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객과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가슴을 열어놓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무대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곡을 본인노래를 하라고 해서 '거위의 꿈'은 제가 리바이벌한 거라 제 곡이 아니었고요, '친구여'는 반만 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식당에 가면 주인아저씨가 계신 데는 거의 80% 공짜로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마음 놓고, 남자들은 태어날 때 어떤 때, 어떤 때 이렇게 몇 번만 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정말 마음 놓고 한번 울어봤노라 하시면서 고맙다고 밥값을 안 받으셨었어요.

그때 댓글들 올라온 걸 보면 "우리 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저도 울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찜질방인데 아저씨들이 양머리 하고 울고 있어요."라든지 정말 많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곡을 내놓고 홍보한 건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았는데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저를 한 번씩 끌어주는 거예요.

조피디가 끌어주고 몇 년 지나니까 '거위의 꿈'이 그렇게 되고 또 몇 년 지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저한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교황님을 그렇게 만나뵈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홍보대사' 그러기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신자면.

노래를 부르라 소리에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손을 잡아보고 묵주까지 선물을 받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둘 벌어지면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걸, 이건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양로원을 해야 되겠어, 어르신들을 내 품에서 보내드려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12월이 되면 고아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5월, 12월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2010년도 추석 때였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다문화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면 '왜? 내가 다문화 아이들의 생각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답은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가 답이었어요.

그러고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공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가수이고 나름 이제 살만 해요. 남들 조금씩 도와줘 가면서 살만 한데 저는 다문화소리는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혼혈, 다문화, 신문에 나오면 인순이, 괄호열고 나이, 그리고 혼혈가수가 나오는 게 저는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기자들을 만나면 "피 섞인 게 뭐가 그렇게 쓸 일이냐고, 나는 모기하고도 피가 섞였다."고, 그러니까 이 혼혈가수 소리 좀 제발 빼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혼혈가수 소리가 많이 안 나와요, 정말 나이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제가 콘서트 때 핫팬츠 입고 뛰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알려주면 저 나이에 핫팬츠?
나이 생각 안 하면 인순이니까 당연히 드레스도 입고 핫팬츠도 입고 그냥 막 좋아해 주시는데 나이 생각하면 "어, 저래도 되나?" 이러실 것 아니에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발 나이도 좀 빼주고.
나이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머리 썼어요, 인터넷에 인물검색 하면 제 나이 안 나와요.
제가 빼달라고 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니까 나이를 빼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위키백과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는 나이가 나와요.
그거 안 되거든요, 저 아직 핫팬츠 몇 년 더 입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제가 정말 보통사람들이 겪을 수 없었던 일들, 여러 사람이 겪어야 될 만한 일을 저 혼자 다 겪었던 거예요.
제가 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남자들에 대한 생각까지 다, 어린나이에 애늙은이로 살았던 것, 그리고 돌아 돌아 돌아서 내가 대한민국사람이라고 제 스스로가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쩌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많을 거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사람이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 옆에서 같이 걸어준다면, 그 인생길을 같이 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강원도로 오게 된 것도 도지사님의 러브콜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탈북자에 대한 관심 그런 관심이 강원도에 참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강원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홍천군민이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홍천으로 이사 내려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20명 있습니다. 8개국 아이들이에요.

우즈벡, 러시아, 독일,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8개국 아이들이 있습니다. 20명인데도 참 글로벌하죠.

이 아이들, 물론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중도입국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들어오면 바로 "너네는 엄마가 외국인이야, 아버지가 외국인이야?" 그러면 "엄마요." 그래요.

"어딘데?" 그러면 "필리핀이에요, 베트남이에요, 중국이에요." 그러면 "그래? 나는 미국."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많이 다르게 생겨서 숨으려야 숨을 자리가 없었는데 너는 그래도 딱 대한민국사람처럼 보이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 아이가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중 한 명이 화교예요.

결혼할 때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언니, 나 이제 한국사람 돼." 이 소리가 저는 진짜 가슴에 수백 개의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여태까지 너 한국사람이었잖아."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알기 때문에.

"언니, 나는 드디어 한국남자 호적에 올라가."라는 이야기와 함께요.

그리고 보통 한국사람인 줄 알고 이야기하다가 "쟤 화교야!" 그러면 사람들이 "화교?" 그렇게 놀라면서 다시 한 번 봐요.

그런데 그게 그 친구한테는 정말 상처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겪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처음에 받는데 그런 친구들은, 말하자면 표시가 안 나는 친구들은 두 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게 상처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아이가 됐건 일본아이가 됐건 상처가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일본아이 하나가 방학 때 저희 집에서 한 2주 있었어요.

그 아이는 춤을 좋아해서 저희 댄서들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묵으면서 서울로 춤을 배우러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밥 먹고 TV앞에 둘이 앉았어요.

그때 일본의 총리가 망언을 심하게 할 때였어요.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그거 보고 있기 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저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힘들지?”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나는 양키고우홈, 그러면 정말 나는 어디로 숨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나는 너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도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하는 건 어른들한테 맡겨두자, 이건 너의 일이 아니고 어른들의 일이니까 어른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른들한테 맡겨두고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인생을 먼저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시합 하면 어디 편을 드니?”
정말 짓궂은 물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쌤, 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이거 정답이거든요.
“그러냐? 그건 나도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축구시합 하면 어디 편드냐?” 그랬더니 “저는 일본이요.”, “나는 미국인데. 어, 이런! 너랑 나랑 다르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누가 그 아이한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자신하건대 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니까, 제가 당사자니까요.
저는 부모님 세대도 아니고 저예요, 바로.
사실 부모님은 사랑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두 사람이 결정을 해서 성인이 결정을 해서 온 거고요.
아버지는 여러분들 틈에 끼면 한국사람이에요.
엄마는 베트남으로 가건 필리핀으로 가건, 가면 그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요, 미국 처음 갈 때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갔어요.
정말 너무 웃겼던 게 이미그레이션 들어갈 때 짐을 막 뒤지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서 “나는 아버지가 미국사람이고 엄마가 한국사람이다.” 라고 이랬더니 그 사람이 “쏘왓?” “그런데 뭐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하도 “너희 아버지가 미국사람이고 그러면 너 미국 가야 되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방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면 나는 미국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데 왜? 뭐가?” 이 이야기에 저 정말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미국에 가도 거기는 제 나라가 아니었고요, 한국에 있어도 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거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미국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태평양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저, 정말 너무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그걸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인정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혼자 차 치고 포 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낸 국경은 문화예요.

이게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국경은 문화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고추장, 된장을 먹고 김치를 먹고요.

구정이면 세배 드리러 가고 추석이면 차례 지냈어요.

미국에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그런 거 없어요.

이 나라에만 와야 그게 있어요. 이 나라에만 와야 진짜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숙성된 김치, 묵은지며 햇김치며 갓김치며 별별 김치를 한국에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 문화가 정체성을 도장 찍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어디에 가서도 사람들한테 지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이야기할 때 한국 얘기는 365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이야기.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아이들을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게네들 한국 사람이에요.

게네들도 김치찌개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된장 없으면 못 먹어요.

심지어 저희는 외국 갈 때 고추장까지 싸가지고 가잖아요.

남들이 냄새 난다 어쩐다 해도 그냥 어딘가에 가서 속이 편치 않으면 고추장에 밥 비벼 먹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고추장 튜브에 들은 거 몇 개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가서 밥 비벼 먹어요.
그럼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 중에 3%가 다문화 사람입니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인구를 메꾸는 사람들도 다문화입니다.
뉴스 보면 몇 년이 지나면 20명당 한 명꼴로 다문화 애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다문화 아이들을 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사람으로 받아줘서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학교 때문에 이런저런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빨리 키워 달래요.
왜냐하면 기업체들이 외국에 나가면 특히 동남아 쪽에 나가면 거기에서 태어난 현지사람 중 한국말을 배운 사람을 기용한대요.
그럼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의 문화하고 저쪽 문화하고 다른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그쪽 문화도 아는 아이가 거기 가서 일을 한다면 그것 역시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는 이러저러하니까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라든지 “우리를 따라와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쪽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30분을 자야 됩니다.” 라든지 “우리는 퇴근을 언제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서로 멀리 있는 것을 조금조금 양보해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미 팔이 안으로 굽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처럼요.
제가 미국 가서 노래 부를 때 “성조기와 태극기 사이에 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놓으면 건강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인재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학교를 만들 때 인재를 만들겠다라든지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다만 지금도 생각하는 게 이 아이들 정체성을 빨리 찾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든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바람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헤쳐 나갈 수 있는 마음의 굳은살을 나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점점 욕심이 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검정고시를 친 아이들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친 아이들은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욕심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빛나는 졸업장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지금은 물론 검정고시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자격증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빛나는 졸업장을 가지고 정말 인정받으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해밀중학교를 떳떳이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정말 졸업장을 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저희 학교 인가, 지금부터 저희는 준비할 겁니다.
저희가 또 6㎞ 떨어진 데 폐교를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학교를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후년에는 학교를 옮겨갑니다.
지금 있는 그 학교는 중도 입국자들, 중간에 들어와서 한국말은 전혀 못 하고 나이는 있는 그런 친구들을 한국말 가르치는 어학당 같은 거라든지 캠프 같은 것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학교는 이쪽으로 옮깁니다.
설계는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온 젊은 친구가 재능기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도와주기로 했고 홍천에서도 저희한테 응원을 해주셔서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안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자기 맡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10월 1일 해밀학교 후원의 밤을 서울에서 조그맣게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와 함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에 대한 어떤 비전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여기저기에서 강원도를 움직이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가서 얘기할 것이고요,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서 다문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강원도에서 이 인구들을 진정한 강원도민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서없는 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빛나는 졸업장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그런데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강의 중에 여기 앞에 의원님들 스물두 분께서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고 저한테 문자로 요청이 왔는데 아버지 노래라도 한 번 저희들한테 불러주실 수 없겠느냐고. (장내 박수)
우리 강원도의회를 내년에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카네기홀 수준으로.
여기가 카네기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곡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해밀학교이사장 김인순
아닙니다, 목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게 나을까요, 거위의 꿈을 부르는 게 나을까요?
(「두 곡 다요」하는 의원 있음)
두 곡 다 에너지가 있는 곡이라 한 마디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리학교를, 제가 성공한 것은 학교를 만들었고요, 물론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제가 군부대에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감사함을 저는 이렇게 돌리는 거죠.

사실 1~2월에는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저런 큰일들이 있는 바람에 못 다니고 있다 10월부터 다시 다닐 예정인데 제가 군인들한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는 아버지를 기억 못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세상구경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젊은 청춘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생각에 강의를 다니게 되었는데 청춘들도 곧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아버지란 노래를 한 곡 부르면 군인아저씨들이 옆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럼 저는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시원하게 문자하나 날려!” 하면 그러겠다고 하고 또 날렸다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위의 꿈’, ‘아버지’ 열창)

중간에 음악이 살짝 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너무 노래가 깊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튀는 바람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불렀습니다.

저도 오늘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18)

본회의 초청연설 : 강명도 경민대학교 북한학 교수

- 북한 평양 출생(1959년생)
- 주요경력

· 중앙사로청 과외교양지도국 외사과 지도원, 평양시당지도원 중앙위 국제부 지도원

· 북한인민무력부 보위대학 보위전문연구실, 주석궁 경리부산하 합영회사 부사장

※ 1990년 평안남도 19호 관리소에 약 1년간 수용

· 1994년 탈북

· 경민대학교 효충인성교육원 북한학교수(현)

주 제 :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강원도의 역할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또 최문순 지사님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장내 박수)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자리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국회의사당에는 여러 차례 가서 부문별 포럼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국회의사당에서 당별 포럼을 할 때는 제가 많이 참여하고 연설도 했지만 이런 의회의 자리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 앞에서 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떨거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도 양해를 바라고요, 제가 원래 말을 잘하는데 오늘 되게 떨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제목을 단 이유는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세도, 주변국이라고 하면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이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한반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면서 급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강원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원도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고 그런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이런 제목으로 해 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해서 딱 12시까지 끝내겠습니다.

20분이 남았는데요. (장내 웃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쟁까지 가지 않나, 제가 전화를 수백 통 받았습니다.

종편방송에 나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능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북한은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미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느냐,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인 '70년대, '80년대도 사실 전쟁을 하려고 무력증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군사력에 집중했지만 그래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나토(NATO)와 맞섰던 바르샤바 군사조약에 약 50개의 나라가 가맹되어 있었거든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전체가 다 가맹되어 있었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쿠바 등이 여기에 다 가맹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전쟁 이후에 냉전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전쟁이 발발했다면 나토(NATO)가 개입할 것이고 미국이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방세계가 우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군사조약 참가국이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하지 못했거든요, 김일성의 카리스마, 김정일의 카리스마가 상당히 높아서 북한주민들이 똘똘 뭉쳐 있을 때 또 수십 개 국의 나라들 이 북한을 지원해 줄 때도 전쟁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만큼, 솔직한 말씀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통치기반이 확고할까?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저렇게 안정되게 정치를 해 오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고 우상화, 신격화됐던 이유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 오면서 자기 기반을 확고히 다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신격화와 우상화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어떻게 신격화가 가능했는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김일성을 신격화할 때는 딱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항일 빨치산을 통해서 일제를 무릎 꿇게 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군 것 때문에 일본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빨치산을 조직해서 일제와 맞서 싸워서 일제를 무릎 꿇렸다, 그러니까 일본이 김일성한테 항복을 했다고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6·25전쟁입니다.

북한 고위층들은 6·25전쟁이 북한이 남침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한국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하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요람기에 있는 북한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국처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북한을 공격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물리치고 미국의 식민지, 노예화가 될 뻔 했던 북한주민들을 구원한 바로 강철의 용장 김일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말로는 한 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물리친 백전백승(百戰百勝)의 강철의 용장 이런 식으로 우상화, 신격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겪었던 사람들이든 안 겪은 사람들이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을 시키면 그것을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은 청년장군으로 일제를 물리치고 미제국주의까지 물리친 강철의 용장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우상화가 가능했고요.

그러면 김정일은 어떻게 신격화, 우상화시켰느냐, 김정일은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42년도 하바로프스크 산간 지역에 조선인 대대가 있었습니다.

소련 국동군 사령부에 조선인 대대가 있었는데 그 조선인 대대장을 바로 김일성이 했습니다.

소련이 대일전쟁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지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을 위시한 조선인 1개 대대를, 말하자면 한국의 특수부대식으로 1개 대대를 조직했는데 그 대대장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투쟁을 하다가 일본의 토벌에 상당히 시달리다 보니까 소련 하바로프스크 지역에 가서 소련 군대에 입대해서 1개 대대의 대대장을 했는데 그때 '42년도에 김정일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하면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을 하면서 백두산 정일봉, 말하자면 백두산 한 줄기의 봉우리입니다.
그 봉우리를 정일봉이라고 써놓고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을 해 놓았죠, 이곳이 김정일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최고 사령부가 정일봉에 있을 때 김정숙과 김일성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장군은 어머니의 배낭위에서 총포탄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면서, 두 살 때부터 일제에 맞서 싸웠다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하죠. 고위층들이라든가 간부들은 대체적으로 다 압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중간 계층의 간부들도 모릅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면 정일봉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나 중간 계층은 김일성이 하바로프스크에서 조선인 대대장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알 것 같습니까?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을 했던 사람들밖에 모르는데 이 빨치산을 했던 사람들은 김일성한테 절대복종을 하면서 북한의 최고위층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가 없는 것이죠, 말하지 않죠, 자기한테 잘해 주는데 말하겠습니까?
김일성이가 내세웠던 사람들 오진우, 오백룡, 최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최룡해의 아버지가 최현인데 이 사람은 인민무력부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장으로 내세워지고 인민무력부장으로 내세워주니까 김일성과 같이 조선인 대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복종을 하면서 이런 것을 오히려 조작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진우, 오백룡, 최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 또한 신격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74년도에 김일성 앞에서 후계자가 되면서 20년 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74년도에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 당 조직비서로 내세우면서 인사권을 줬기 때문에 김일성과 같이 항일 빨치산을 했던 사람들을 다 자기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김일성이 키웠던 강성산이라든가 김영순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 주위에 끌어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자기를 반대했던 남일 부총리라든가 김동규 부주석이라든가 초대 국가정치보위부장이었던 김병화, 전문섭 호위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버렸거든요.
김일성이라는 거대한 산의 그림자 밑에서 20년 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확고한 정치적 기반위에서 북한정치를 이끌어 왔다면 김정은은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김정은은 왜 자신들의 측근들, 특히 자신이 임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인민무력부장 4성 장군을 공개 총살을 했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는 있을 수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이고 김정일이 갑자기 급사하다 보니까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모든 직위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주위에 있는 최고위층 간부들, 우리와 비교하면 장차관급 이상 간부들이나 그 이상 급의 간부들은 김일성, 김정일 때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은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같이 한 번도 일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나마 장성택이라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김정은이 북한을 이끌어 왔는데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영호 총참모장을 처형하는 바람에, 사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처형한 것인데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성택이나 이영호 총참모장은 김정일한테 절대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일성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김정일이 급사했을 때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올 수 있었던 것도 장성택과 이영호라는 두 양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영호 총참모장은 약 40년 동안 야전군 지휘관이었습니다.

북한의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까지 지냈던 야전군 지휘계통에 있던 분인데 이 사람을 2011년도 7월에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공개숙청을 했습니다.

공개 총살까지는 안 했지만 조선중앙TV로 공개를 했고 노동신문에 다 공개했거든요.

그때 장성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공개 총살은 안 하고 조용히 숙청을 했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는 것을 조선중앙TV로 공개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영호 총참모장을 따르는 세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 모든 권력을 이영호에게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호에게 김정은을 맡겼던 것이죠, 내가 없더라도 김정은한테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한 게 이영호입니다.

왜? 이영호는 김정일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고 선군정치를 할 때 가장 믿고 군대에 관한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맡겼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김정일 때 정치국 상무위원을 하던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영호 총참모장이 있었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일이 있을 때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습니다.

후보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김정일, 김영남, 최용림, 이영호 이 사람들만이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만 빼면 세 사람인데 김영남 이 사람은 아무 권한도 없는-우리가 보통 얼굴마담이라고 부르는데-국가상임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다음에 최용림 총리, 그다음에 군부 수장이었던 이영호가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김정일의 모든 것을 보좌하고 군부를 장악하고 정치를 해 왔던 사람이 바로 이영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이 났을 때 이영호에게 김정은을 맡겼고 당 쪽에는 김경희와 장성택, 당에서 1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 장성택이기 때문에 맡겼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두 양대 축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2년도 7월에 이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당하고, 그 숙청을 주도했던 게 장성택이었습니다.

왜? 군부가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권을 군부가 가지고 있어서 군부가 비대하다 보니까요.

이영호보다 장성택 계급이 낮아요, 김정일이 있을 때는 그나마 장성택의 말발이 먹혔는지 모르지만 김정일이 죽으면서 정치국 상무위원인 이영호 세력이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택이 이영호를 숙청하지 않고는 자신이 군부를 장악하고 정치를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36호실에서 운영하던 모든 광물자원이나 석탄자원이나 수산자원, 금광자원 같은 것을 몽땅 군부에 이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등극한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호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영호는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이영호도 군부를 중심으로 세력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성택의 말에 꿈쩍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두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김정은과 합심해서 이영호를 숙청했습니다.

숙청을 할 때 장성택한테 호위사령부를 맡겼습니다, 이 호위사령부를 가지고 이영호를 전격 숙청하고 총살해 버렸죠.

그리고 이영호를 따르던 장군들 약 15명을 같이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장성택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장성택이 군부도 틀어쥐고, 그리고 장성택이 이영호를 치기 전에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앉혔습니다.

장성택이 이영호를 숙청하고 나서 군도 장악하고 당도 장악하고 내각도 장악했습니다, 지금 있는 박봉주 총리도 장성택 사람입니다.

당, 내각, 군부까지 다 장악하니까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장성택한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택이 제 마음대로 다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장성택이 2012년도 6월인가 7월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해외를 방문할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을 데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할 때 약 60명을 데리고 갑니다.
당 중앙위 비서들, 부총리들, 장관들 해서 60명을 이끌고 가서 후진타오에게 대통령급의 접대를 받습니다, 영빈관에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아요.
이게 김정은의 눈 밖에 났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사람이 당 중앙위 내 조직지도부와 김원홍입니다.
김원홍은 국가안전보위부장인데-지금 상당히 위험한 사람인데-김정은이 가장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민군 대장칭호를 받고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 인민무력부에 가서 근무를 했거든요.
2009년도에 대장칭호를 받고 인민무력부에 가서 근무를 할 때 멘토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원홍입니다.
2009년도 당시에 김원홍의 직위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조직부 국장이었습니다, 투스타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김정은을 김원홍에게 맡겼거든요, 김원홍에게 맡기면서 군대에 대한 모든 조직체계를 김정은에게 가르치라고 해서 같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자신이 대장칭호를 받고 군대에 들어가고 첫 정치에 입문할 때 김원홍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알았고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원홍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이 죽자마자 김원홍이 보위사령관으로 옵니다.
김원홍은 2012년도 3월에 인민무력부 보위사령관을 하다가 2012년도 7월에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됩니다.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도 장악하고 국가안전보위부도 장악한 김원홍이 상당히 막강한 세력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모든 당·정·군을 장악해서 북한을 이끌고 가는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장성택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김정은한테 계속 제기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김씨 나라가 아닌 장씨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김정은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2013년도 8월에 삼지연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8인의 멤버와, 실세들이었죠.
김양건, 김원홍, 그다음에 작전국장을 했던 변인선, 마원춘 정책국장, 국방위원회 한광상, 당 재정정무지부장, 선전부 부부장, 조직부 부장 조연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모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김원홍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성택이 도청장치에 걸립니다.

이것은 당 중앙위 부부장을 하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온 저의 선배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한다는 것을 알고 이용길과 장수길 부부장이, 이 사람들은 장성택의 오른팔과 왼팔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투스타, 한 사람은 쓰리스타였는데 군사령관까지 겸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성택에게 가서 지금 위에서 우리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장성택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위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바로 김정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장성택이 '조그만 새끼 보자보자 하니까 놀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이 도청장치에 걸린 것이죠.

그리고 장성택이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괜찮아,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고 해, 대신우리가 일도 더 잘하고 지도자를 잘 받들어 모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원홍이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조그만 새끼 보자보자 하니까 재수 없네, 놀고 있네.' 이런 것만 딱 잘라서 김정은한테 갖다 주니까 김정은이 열이 받아서 김원홍에게 당장 체포하라고 합니다.

체포하자마자 4일 만에 전격 공개 총살한 것입니다.

왜 공개 총살을 했냐면, 김일성 사위를 공개 총살하면 권위가 땅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김일성 권위도 떨어지고 김정일 권위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개 총살을 하고 체포 장면을 공개했냐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성택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주민들과 북한 고위층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미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장성택을 따르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거든요.

그냥 조용히 없애버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성택을 따르던 사람들이 '장성택 어디 있느냐, 잡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다 죽는다,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해 버린 것입니다.

빨리 죽여 버려야지 그 사람을 1년 동안 조사시키면 장성택을 따르던 장군들이나 고위층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12월 8일에 체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냥 12월 12일에, 원래 인민무력부에 군사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위부에 임시재판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재판을 하고, 변호사도 없어요, 즉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고 사형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총을 쏘는 장면만 안 보여줬지 사형됐다는 것을 전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쿠데타를 당할까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대 세력이 있었어요.
세력화됐던 거물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군부세력의 이영호-김정일이 그렇게 만들어 줬고-그다음에 당과 내각을 장악한 장성택 세력이 있었는데 이 양대 세력의 수장을 숙청하다 보니까 이 세력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없어졌죠.
장성택 한 명만 총살한 게 아니라 4촌, 6촌 친척들까지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죽일 사람들은 다 죽이고 정치범수용소에 갈 사람들은 다 정치범수용소에 보냈어요. 아예 싹 쓸어 버렸어요.
장성택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그 리고 문경덕이라고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이 있습니다.
정치국 위원은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직위에 있는 사람을, 평양시 당 책임비서이면서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있던 문경덕을 벌써 총살했지 않습니까?
또 장성택과 가장 가까웠던 백세봉이라고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이면서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백세봉을 2014년도에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장성택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숙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룡해도 숙청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에 체포되어서 한 달 동안을, 국가안전보위부의 김원홍에게 끌려가서 다리가 절도록 엄청 얻어맞고 각서 쓰고 나온 게 최룡해입니다.
그러니까 최룡해도 2인자 같지만 2인자의 운명은, 장성택도 죽이는 판에 최룡해 같은 사람은, 김일성 사위가 높겠습니까, 최현의 아들이 지위가 높겠습니까?
그 장성택을 치는 바람에 모든 2인자는 싹 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2인자라는 위치가 없어진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보여 준 것이죠.
대신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면 아까 제가 정치적 기반이 미약하다 그랬죠.
김정일처럼 이런 양대 세력을 서로 견제시키면서 정치를 해 나갔다면 지금 북한은 정치적 기반이 안정되고 아마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게 잘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더 안 좋죠.
왜? 북한이 오래 가니까요.
하지만 김정은은 자기발등을 자기가 다 찍고 있습니다.
장성택을 죽이고 이영호를 죽이고 최근에는 현영철까지 죽이면서 군부까지도 흔들립니다.
2년 동안 벌써 최고 수장을 두 명이나 죽였습니다.
하나는 차수였고 하나는 대장이었는데 2년 동안에 수장을 두 번 죽였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죽일까?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무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면 겁을 먹는 거예요.
이 친구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런 의심이 들게 되면 가차 없이 죽입니다.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김정은은 인민군 장성이나 자기가 임명했던 변인선 작전국장, 마원춘 정책국장까지 1년도 되기 전에, 자신이 임명하고 장성택을 처형하는 모의까지 가담시켰던 세 사람을 최근에 숙청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지금은 김원홍까지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원홍을 시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3년 동안 최고위층 70여 명을 총살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이고 부총리급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국가부위원장, 차관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총살했고요, 당 중앙위 내 과장, 부부장들도 엄청나게 많이 총살했습니다.
누구를 시켜서 총살했느냐면 김원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고위층 내부에서는 김원홍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답니다.
사실은 김정은에 대한 불만인데 김정은에게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원홍에게 불만이 쏠리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원홍까지 숙청하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온 정보인데 그러면 현영철은 누가 총살했느냐, 국가안전보위부가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친위대 300명을 조직했답니다.
그래서 친위대 대장은 누구냐고 그분한테 물어 봤어요.
김정은이 직접 친위대 대장이랍니다.
자기가 대장을 하고 대대처럼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만들어서 1대가 가서 현영철을 체포하라고 하면 바로 체포하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체포를 하면 조사라도 하겠는데 조사를 안 하고 바로 죽인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한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했더니 김정은이 친위대를 시켜서 체포하라고 하면 즉시 체포를 해서 그냥 죽여 버린다는 것이죠,
총살하라고 하면 총살을 하고.
이렇게 김정은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목함지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어났느냐?
우리는 이미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김정은의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수록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 남북한의 긴장 격화로 가지 않으면 이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만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항상 남북한의 긴장 고조, 이런 숙청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김정일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랬지만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더 정치적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에 남북한의 긴장을 격화시켜서 자기한테 쏠리는 불만을 무마해 버린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적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당분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서 자기네들이 얻으려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미사일발사 실험입니다.
미사일발사를 실험하고 앞으로 한두 달 후에 다시 핵실험을 하려고 이것을 김정은이 지시해서 준비를 했는데, 도발을 하라는 지시는 김정은이 내립니다.

어떤 방법이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도발을 하라고 지시하면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서해 5도 연평도처럼 포사격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지 아니면 군사분계선상에서 어떤 도발을 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지 다 조사해서 군사분계선상에서의 도발이 가능하겠다, 목함지뢰로 도발을 하겠다는 것을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죠.

그러면 김정은이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긴장은 고조됐는데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 오면 항상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고 김관진 장관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민구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고 했는데, 몰래 들어와서 목함지뢰를 묻어놓고 가서 우리 병사들이 나가다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조사하는 데만 7일~8일 걸렸습니다.

북한소행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조사해서 4일인가 5일인가 목함지뢰가 터져서 두 명의 국군병사들이 중상을 입었는데 11일인가 12일에 북한소행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을 할 수 있는 원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난처해 진 것이죠.

그렇다고 2군단 지휘부나 포진지에 대고 무차별 포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내놓은 게 바로 대북방송입니다.

이미 확성기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해서 대북방송을 튼 것인데 김정은이 사실 예상 못했던 것입니다.

도발을 해서 우리끼리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고 긴장만 잔뜩 고조시키려고 했는데 대북방송을 틀어버리니까 김정은이 환장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대북방송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냐면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전방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강원도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고성이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부대가 1군단입니다.

북한말로 1집단군이라고 하는데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철원지역, 중부전선, 동부전선, 중부전선이라면 북한의 5군단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전선이라면 개성 지역, 황해북도, 황해남도인데 황해북도 지역에 2군단이 나와 있습니다.

2집단군, 5집단군, 1집단군 해서 약 30만 명이 최전방에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방송을 해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전쟁으로 간주하거나 도발이라고 안 하고 자기네도 방송을 틀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격화, 우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가지고 북한을 이끌어 왔다면 김정은은 카리스마가 전혀 없어요.

신격화 시킬 것이 없잖아요, 신격화를 시키려고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망신만 당했거든요.

다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 신격화가 무엇이냐면 아까 김정일은 어머니의 배낭에서부터 총포탄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면서 자랐다고 했어요,

시대적 배경이 그랬으니까 이해가 가죠.

지금 김정은을 신격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교과서를 보면 3살 때 벤츠를 운전했다, 똑똑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았다, 총명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3살짜리 딸에게 승용차 운전을 시키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이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5살 때 탱크를 몰았다고 해요, 탱크 모자를 쓰고 탱크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줘요.

5살 때 탱크를 몰고 7살 때 동해바다에서 요트경기를 했답니다, 스위스 요트회사 사장과 요트경기를 했는데 이겼다고 해요.

이게 우상화입니다, 우상화를 시키려고 이런 것을 해요.

총명하다, 스위스 요트전문가와 원산 앞바다에서 요트경기를 했는데 우리 원수님이 이겼다,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5살 때 탱크를 몰았다, 이런 게 웃음거리가 되어서 다 없앴습니다.

북한이 다 없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고영희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월남자 가족보다 더 나쁘게 보는 게 재일교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물을 먹고 북한으로 와서 자본주의를 퍼뜨릴 수 있는 1호 경계 대상이 바로 재일교포들입니다.

그래서 재일교포들을 인정 안 해 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나라, 그것도 적국에서 잘 먹고 잘살다가 온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방문단을 통해 돈을 벌고 계속 여기에서 잘 먹고 잘살면서 자본주의 바람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간 사람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예요.

재일교포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김정은의 엄마가 재일교포예요.

북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몰라요.

제가 '94년도에 한국에 와서 고영희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94년도에 김정은의 엄마가 고영희라고 이미 밝힌 적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상화 작업을 하다가 그게 노출이 됐습니다.

고위층 간부들한테 고영희가 조선의 어머니라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서 보여주려고, 이름이 조선의 어머니입니다.

고영희에 대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 바람에 고영희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됐습니다.

고영희가 만수대에 있었던 무용배우가 아니었다면 고영희가 누구인지 모르죠, 그런데 간부들은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조국의 진달래라는 무용의 주인공으로 항상 나왔던 여자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 앞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공연하는 장면이 지금도 있어요.

영화 필름이 아직도 있는데, 재일교포 누구 아니냐는 소문이 벌써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상도 다 회수했습니다.

이제는 간부들한테도 안 보여줘요.

그것을 최고위층 간부들한테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층 간부가 영상을 몰래 찍어서 일본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종편방송이 다 공개했잖아요,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필름까지도 싹 회수하고 이게 어떻게 노출되었느냐, 일본에 어떻게 나갔느냐, 일본 어느 방송사가 비싸게 주고 사서 방송에 공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층 더 나아가서 고영희 아버지, 김정은 외할아버지의-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묘지가 제주도에 있고 친일파였다, 일본 군복을 만드는 공장의 감독으로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서 신문・방송을 통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외할아버지인지 증조외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친일파로 몰렸어요. 이제는 친일파까지 되어 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정은의 명분은 백두혈통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혈통의 김일성,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일본과 싸웠는데 자기 외할아버지는 김일성과 싸운 일본의 군복을 만들어서 자기 할아버지를 토벌하는 데, 이게 아이러니하거든요.

그것을 방송으로 계속 내보내요.

북한 최전방 전선에 있는 부대들이 공급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반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자원도 고갈되고 돈도 고갈되다 보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보다 더 열악해요.

또 인민무력부에 있던 이권사업의 절반을 떼서 장성택이 가져갔고 당에 돌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영철도 총살됐지만, 열악하다 보니까 최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은 강냉이밥도 배불리 못 먹습니다.

작년에 노크병사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1군단, 2군단, 5군단보다 더 최전방에 있는 민사경찰 민경부대 출신입니다. 1개 여단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DMZ 수색대입니다.

DMZ에서 근무하는 이 중사가 자기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총으로 죽이고 한국으로 넘어 왔어요.

왜 죽인지 아십니까?

부대원들이 자고 있을 때 하도 배가 고프니까 밤에 식당에 나가서 옥수수빵을 다 먹은 겁니다, 옥수수빵을 먹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진 옥수수빵을 누가 먹었는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면 바로 알죠, '이 아이가 어제 부스럭부스럭 한 것을 보니 이 사람이 먹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소대원이 있는 곳에서 끌어내서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몽둥이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열이 받아서 자기 근무 때, 북한에서는 근무시간에만 실탄을 줍니다.

실탄을 받고 근무하러 나가면서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쏴 죽이고 한국으로 귀순했는데, 최전방에 있는 민경부대 병사들까지도 옥수수밥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방송이 계속 나가게 되면 평양으로 방송이 가는 게 아니라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1군・2군・5군단의 30만 병사들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병실에 있으면 잘 안 들리지만 근무 나오면 다 들어요.

근무 일선에 나오게 되면 다 듣기 때문에 계속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백두혈통도 아니고 외할아버지는 친일파였고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 왜 젊은 사람한테, 가짜한테 속고 사느냐는 방송을 틀어요.

왜 굶으면서까지 한 사람을 위한 독재체제에 목숨을 거느냐 이런 방송을 계속하게 되면 흔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물자가 잘 공급되어도 흔들릴 판인데,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소련도 무너지고 한중 수교를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류드라마를 다 보고, 지금은 장마당 세대가 최전방에 나와 있거든요.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군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전방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을 틀면 그것을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북측에 총포탄을 쏘는 것보다 더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국방위원회 성명, 인민무력부 성명을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측근들을 믿지 못해서 총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상당히 무모한 도발을 할 수밖에 없고 체제가 안정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최근 북한 고위층들이-공개는 안됐지만-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외교관은 고위층도 아닙니다.

외교관들도 여러 명이 왔고 당 중앙위의 부부장급이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떠나서 금년도 3월에 부부장급이 한국에 들어왔고, 대성은행 부총재를 하던 사람이 들어왔고, 인민무력부 장군을 하던 사람이 들어왔고, 공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는 안 되는데 저는 다 만나봤거든요.

장군을 하다 들어온 사람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만나보지 못 했지만 당 중앙위 부부장급으로 있던 사람은 제 2년 선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CNN에 나가서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고위층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 간단히 결론을 내리면 김정은 정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고위층들 생각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지금 김원홍까지 불안하다면 어느 정도 불안한지 압니다.

그나마 믿을 사람이 김원홍입니다.

김정은이 처음 인민무력부에서 근무를 할 때 자신을 멘토링 해 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친위대를 직접 조직해서 북한 고위층들을 체포해서 총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김정은에게 충성하겠습니까?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최룡해를 보십시오.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갔습니다.

김정은이 운영하는 청봉예술단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특별 전용기를 내줘서 모스크바까지 한 번에 갔는데 최룡해는 북한 당 중앙위 비서이고 정치국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고려민항을 타고 심양에 가서 중국 민항기로 갈아타고 북경까지 갔습니다.

예술단이 격이 높습니까, 2인자, 3인자라고 하는 최룡해가 높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대접을 하나도 못 받고 중국에 있는 고위층 인사와 회담을 한 건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하기 싫어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그냥 참여만 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2일에 가서 3일에 참여만 하고 저녁에 돌아갔답니다,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녁에 바로 돌아갈 때도 심양에 가서 다시 고려항공을 타고 돌아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룡해가 그런 수모를 받고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 장군이었고 그런 고위층이라면 돌아가면서 '저 조그만 새끼 재수 없다.'라고 장성택이 한 말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총을 빼들고 누가 나서지를 못해요.

누가 총을 빼드는가 이것만 남았는데 누구도 먼저 선봉에 안 서려고 해요.

지금 고위층 내부에서 반 김정은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서민들보다 오히려 고위층에서 반 김정은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가차 없이 죽이기 때문에 내 목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번에 황병서를 보십시오.
3시간~4시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쪽잠을 자면서 우리가 주는 라면과 도시락을,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명실상부한 2인자라는 사람이 김관진 실장을 붙잡고, 김관진 실장이 두 번이나 문을 차고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는 말이 안 통하면 북한이 문을 차고 밖으로 나갔는데 김관진 실장이 너희가 사과를 안 하면 못 하겠다고 나가니까 나가지 말라고, 브리핑을 통해 나왔지 않습니까?
후에 황병서가 우리는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것을 브리핑을 통해 했는데, 2인자가 그런 처참한 회담을 하고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대로 가면 김정은 정권은 얼마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는 게, 저는 강원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라남도도 가보고 경상남도도 가봤는데,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최근 3일~4일 전에 고성을 갔다 왔습니다.
고성군청에 가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고성이 금강산관광을 할 때보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될 때는 휴게소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건어물 가게도 그렇고 속초에서부터 상당히 잘 됐는데 이게 딱 끊기니까 굉장히 한산해지고 이미 다 문 닫고 파리가 날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 강원도도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 중에서 둘로 나누어져 있는 데가 강원도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것도 있지만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는 통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강원도와 북강원도가 민간차원에서라도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강원도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내륙에 있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나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에 와서 경제가 활성화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북한이 열리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강원도라고 보거든요.
유라시아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라시아 철도가 열리면 가장 큰 수혜, 가장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게 강원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의선 철도는 개성과 신의주를 통해서 북쪽으로 들어간다면 유라시아 철도는,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을 통해서 양양, 고성, 원산, 함흥을 통해서 나진선봉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 됩니다.
이게 만일 연결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유라시아 철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유라시아 철도만 하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는 강원도도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을 잘 활용하게 되면 아마 북강원도와 남강원도가, 우리가 떼어서 북에 주자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북한에서 요청해 올 때 사실 한 두개 종목을,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 회담도 할 수 있고 남강원도와 북강원도 두 강원도가 교류협력도 할 수 있고요.
최문순 지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민간차원의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민간차원의 교류는 활성화해야 됩니다.
정부와 정부 간 회담이 안 된다고 해서 민간차원의 교류까지 다 막아놓으면 오히려, 북한사람들한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좌익이든 보수든 진보든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하면 갔다 올 사람은 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진보든 보수든 가서 무엇을 볼 것 같습니까?
갔다 오면 북한이 멋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못살 세상이라고 합니다.
왜? 철저하게 통제되고 그 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네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가라는 곳에만 가기 때문에 신은미 선생처럼 잘 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 주지만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속 북한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분처럼 잘 대해 줘요, 벤츠를 내주고 자매결연을 맺어 준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에 평양을 보면 전기가 없어서 어둡습니다, 9시면 전기를 다 끕니다.
일반 가정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밖에 전기를 안 줍니다.
지금 북한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보내게 되면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학생소년예술단도 내려오고 서커스단도 내려오고 고위층들도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게 되면 말은 안 하지만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현대자동차도 좋고 현대백화점도 좋지만 재래시장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라고 하거든요.
제가 주석궁에 있었는데 처음 여기에 와서 재래시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김일성한테 한 알, 두 알 싸서 올리던 과일이, 생선도 하나하나, 활어는 별로 안 해요, 활어는 수송이 잘 안 되어서 냉동제품으로 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닦아서 올리던, 갈치든 송어든 고등어든 명태든 이런 생선들이 재래시장에 다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석궁에서 준비해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올리던 것보다 재래시장에 있는 배가 더 커요, 사과, 포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석궁에서 특수식료를 직접 운영했는데, 여기에서 북한을 갔다 온 분들은 용성특수식료에 대해서 다 알 것입니다.
용성맥주, 용성오미자사이다, 초콜릿도 있고 그게 다 용성특수식료에서 나오는데 그 용성특수식료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다 신덕산 샘물을 쓰는데 이런 것들, 그런데 할머니가 운영하는 재래시장의 조그마한 가게에 초콜릿 종류가 더 많고 질이 더 좋아요.
일반 서민들이 먹는 게 김일성이 먹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면 북한사람들은 까무러칠 겁니다.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합니다.
제가 잘 나갈 때 북한도 잘 나갔고 물자가 풍부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당 중앙위 비서들이나 간부들이 저한테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사과, 배, 초콜릿, 사탕과자, 맥주를 달라고 옵니다.

저희가 창고를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맥주 20상자, 사과, 배, 초콜릿, 사탕과자 등 상차림 할 것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제가 해 달라는 것은 다 해 줄 거예요.

원자폭탄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저한테는 다 말해 줄 거예요. (장내 웃음)

얼마나 물자가 귀하면 당 중앙위 비서까지 저한테 와서 딸 결혼식에 필요한 것을 해 달라고, 그게 바로 '92년~'93년도 상황입니다.

지금은 더 악화됐죠.

김정은은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대북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 격차가 20 대 1입니다.

독일은 4 대 1이었습니다.

동독이 5,000불이고 서독이 2만 불일 때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하고 지원해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줬습니까?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자꾸 막지만 말고 자신감을 갖고, 저는 좌익이든 보수든 진보든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가고 북한에서도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부가 못하면 민간차원에서라도 교류협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강원도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관광, 물론 아픈 기억이 있죠.

박왕자씨 사건 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이게 연계되어서 지금 금강산관광이 단절됐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를 못 합니다, 안하는 게 아니라.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현정은 회장님을 통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여러 차례의 사과는 했는데, 우리가 통 크게, 대북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금강산관광은 빨리 재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재계해서 남북 간에 만나고 서로 오가게 되면 누가 갑니까, 고위층이 갑니까?

일반 주민들이 금강산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물론 북의 안내자들은 보위부나 당의 일꾼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호텔 봉사원들, 식당 접대원들, 마사지 하는 사람들 등 얼마나 많은 일반 사람들을 접촉해요.
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분들이 가서 자유롭게 만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가서 말하고 싶어서 난리일 겁니다.
자기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한국분들이 어떠냐고 물으면 '대단해 팁도 100불씩 줘.'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남북교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려서, 북한에도 강원도인민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청 이렇게 서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서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북한을 활용해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50분을 했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의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두 나라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본, 하나는 중국, 통일을 절대적으로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이고 그다음에 통일이 좀 늦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 가지 달라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김정은 정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게 지금 시진핑 주석의 생각입니다.
중국의 고위층들이 어린 지도자 김정은을 갖고는 안 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정권을 바꿔서 친중파로 가든 집단 지도체제로 가든 개방 개혁파들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서 남북교류도 잘 되고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바라는, 그리고 북한은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게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과 토론회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요, '아직 우리가 5,000불도 안 됐다, 최소한 1만 불 정도 될 때까지는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지금 중국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부정부패, 티베트와 우르무치의 분리주의자들, 지금 중국이 내재하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머리가 아파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안전한 뒷동산이라고 했던 북한에서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실험을 하다 보니까 더 골이 아픈 것이죠.
이것을 그냥 둬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이번에도 일본이 명분으로 세운 것이,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니까 누가 덕을 봤습니까?
일본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면서 아베가 안보법을 통과시키는 데 이것을 이용하잖아요.
이것을 가장 경계하는 게 중국인데 이번에 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은 기정 사실화됐습니다.
지금 원산에서 좌석대까지 만들어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만 발사하는 게 아니라 무력시위하는 동안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려고 지금 원산에 참관단이 앉을 수 있는 좌석까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흘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시진핑 주석의 중국정부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통해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무엇인가 있지 않았는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 이면에 저는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대북정책을 어떻게 다시 조정할 것인지, 민간차원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라시아 철도를 정부에서만 하려 하지 말고 강원도에 맡겨서, 북한도 강원도인민위원회가 와서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강원도와 한국의 강원도가 힘을 합쳐서 상생하고 서로 좋은 방향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